제416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2024년7월25일(목) 오후 2시

［국회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제한토론 실시로 7월25일 개의하여 7월30일 산회하였음］

의사일정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5)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6)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4.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6)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7)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8)

상정된 안건

o 의사진행발언 ····· 3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5) ····· 6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6) ····· 6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 7
o 의사진행발언 ····· 20
4.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 24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 26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 29
- 무제한토론 의원(한준호) ····· 128
- 무제한토론 의원(박대출) ····· 161
- 무제한토론 의원(모경종) ····· 195

- 무제한토론 의원(이상휘) ····· 210
- 무제한토론 의원(이해민) ····· 244
- 무제한토론 의원(박충권) ····· 254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 343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 344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6) ··· 344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 345
- 무제한토론 의원(이훈기) ····· 435
- 무제한토론 의원(정연욱) ····· 484
- 무제한토론 의원(전종덕) ····· 527
- 무제한토론 의원(진종오) ····· 531
- 무제한토론 의원(박선원) ····· 575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 682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6) ··· 683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7) ····· 684
- 무제한토론 의원(강승규) ····· 685
- 무제한토론 의원(조계원) ····· 739
- 무제한토론 의원(유용원) ····· 795
- 무제한토론 의원(이준석) ····· 838
- 무제한토론 의원(신성범) ····· 869
- 무제한토론 의원(한민수) ····· 905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 961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원) ····· 980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 1030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7) ····· 1030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8) ····· 1031
- 무제한토론 의원(김용태) ····· 1031
- 무제한토론 의원(추미애) ····· 1174
- 무제한토론 의원(정성국) ····· 1200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 1316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8) ····· 1317

(14시18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7월 19일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7월 24일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등 79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의사진행발언

(14시21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안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섯 번의 본회의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본회의에 참석할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이번 국회가, 이 법안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기관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 남짓한데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무려 250명 넘게 채택해 부르고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쟁점법안을 숙의하라는 과정인데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 2시간 반만에 통과시키는 등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위원장과 민주당은 증인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해라, 10분간 퇴장하라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끊고 노려본다고 퇴장시키려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정할 거면 왜 지난 대정부질문을

망치기까지 하면서 서둘렀습니까? 왜 국회 개원식조차 못 열게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정부질문 기간만은 피해 달라고 했을 때 왜 1주기라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무시하면서 강행하셨습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방송장악 4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방위 앞에 모인 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으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때 언론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22대 국회 때 재발의했습니다. 요약하면 결국 민주당은 언론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탄압하는 정당 아닙니까?

‘국회의 다수파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대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해설에 국회는 분명하게 합의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합의해 진행해 주십시오. 21대 때 폐기된 악법도 이제 그만 올리세요.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개딸과 민주당원만 존중하실 겁니까? 상대 당 의원과 회의 참석자들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의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닙니다만 국민의 편입니다.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국회의장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은 결코 어느 정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회를 함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를 누가 초래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걷어차 버리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헌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면 좋지요. 합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사도 광산 유네스코 철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한 법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대통령의 격노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부끄러운 모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언론장악을 함께 막아 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걸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땡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단호하게 채 해병 특검법과 우리 안건들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송 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그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도 송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에서 벗어나 보고자 정부 여당과 야당에게 중재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일보 전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의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변화가 없기에 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지도부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잘 돌이켜보시고 이후에라도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에 보다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5)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6)

(14시3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

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재봉 의원, 윤종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건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6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220표, 부 64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227표, 부 57표, 기권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

(14시58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5일 정부로 이송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7월 9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법무부차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심우정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7월 9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작전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보았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등 위헌성이 가중된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 법률안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20일의 숙려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채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입법청문회만을 거친 후 통과되어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 합의, 타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절차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

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내용과 입법 과정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심우정 법무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 먼저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희생하신 순직 해병님께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숙의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었습니다.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적법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장병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은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에 오류가 없고 외압에 의해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많이 부족했고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10여 명의 수사팀이 일주일가량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8명을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면 강제로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하고 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직 해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불과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리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군의 사망 사고는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어 빨리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훈 단장이 자신의 일주일짜리 수사 결론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에게는 애국심일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또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단장이 입건한 8명 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했던 하급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사단장을 봐줬다고만 주장할 뿐 일주일 수사로 하급간부들을 함부로 입건한 잘못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여에 걸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하급간부들은 지휘권이 없었고 수색만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에 분명한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이첩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해 보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이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수사가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8명을 입건해서 경찰에 기록을 넘겼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아집이자 항명입니다. 이러한 항명을 허용한다면 지휘책임자가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박정훈 단장이 넘긴 기록을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기록을 두껍게 만들어서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중에 단 한 쪽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은 이종호 씨와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이종호 씨가 대통령을 통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녹취록을 틀었지만 결국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이 허위로 거짓말한 사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판명 났으나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명활동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문진술은 왜곡될 위험이 있고 이종호 씨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만한 위치나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당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이처럼 이 사건이 축소·왜곡되었고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주진우 의원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있고, 야당이 특검을 선정한다면 그 특검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혈세 76억 원을 들여 이중 삼중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 우원식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주진우 의원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 60%가 넘는 찬성을 보내시는 법안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시 사장될 것인가, 아니면 절박한 민의를 받들어 이 산고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선 국회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금 불안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곧 채 해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4380시간 살아 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라입니까?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채 해병 순직의 원인이 임성근 그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임성근을 3성·4성 장군을 만들려고 했던 이종호와 송호종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멋쟁해병이라는 존재, 이종호 씨가 말하는 '내일 삼부 체크하삼'이 골프장의 3부가 아니라는 사실, 권력자들과 연결되는 정황들이 끝없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채 해병 순직과 외압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축소·은폐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외면하고 수색을 막으려 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마저 대대장 두 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대대장들은 순직 전날 내성천 격류에 병사들 수색 보내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막으려 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채 해병 영전을 찾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대대장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수중수색을 시키고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찬탄해 놓고 청문회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그 사람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다시금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박근혜 특검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 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채 해병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힐 때까지 여야 없이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하고 가세요.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재의요구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순직에 전 국민은 물론이고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

여와 토론, 숙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이 보장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로지 민생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쟁만을 위한 이번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본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공수처는 국방부, 경찰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전달한 국방비서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그리고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 자료 누가 만들었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구형 번갈아 가며 일곱 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가 생길 때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측근의

자리 보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측근에 대한 의리보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공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와 거리가 먼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140만 명 넘게 참여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라며 군사정권에서나 들었던 놀라운 발언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3%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 여론은 26%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측근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정부를 넘어 서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인간적 양심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이 소수만 동참해 주시더라도 희생자, 유족의 한을 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윤석열 정권의 통치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재의결에 찬성해 주시기를, 정말 국민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박균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이정헌 의원, 채현일 의원, 강선영 의원, 김건 의원, 박성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1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안건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뭐 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방청석에서 —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하라! 발의하라!」 연호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행하라!」 연호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개판……」 하는 의원 있음)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지금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야당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아니, 본회의장에서 샤우팅해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16시02분)

(16시45분)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아까 왜 표결을 마치고 우리 의원들은 대

기한 상태에서 저기로는 집회를 한다고 나가고, 저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본 적이 없었고, 첫째. 두 번째, 방청석에서 또 그렇게 함성을 하고 하는 것을 왜 허용을 하십니까?)

아니, 나가는 것은 여야 합의로 하지 않았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우리……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지 그것을 합의라고 하면……)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렇게 말이 앞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정회를 했지. 잠시 대기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님 직권으로 의사진행하면서 정회를 하면 우리가 억지로 하지만 또 정회에 따르는데 제가 저기 회의 결과 잠깐 보고 투표 결과 보고 그렇게 있는 순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막 나가고 함성이 있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아니, 잠깐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돼.

제가 여기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를 잠깐 한다고……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 제가 얘기를 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잠깐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집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허용을 하는 게 어딨습니까, 회의 중에?)

전에 하지 않았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회의 중에 집회를 하는데 중단하는 게 어딨어요, 집회를 하는데.)

(장내 소란)

누구랑 얘기? 수석들 간에 논의하셨다는 것 아니야?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까 제가 우리 배준영 수석하고 추경호 대표님 자리에 가서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규탄대회 하겠다, 그러면 정회를 한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잠시 서로 양해하는 가운데서 규탄대회 하고 오겠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은 거예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를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는?)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오케이 하자, 하셨잖아, 좀 아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슨 오케이를 해? 도대체 회의를 하면서 중간에 집회를 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전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합의가 안 됐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를 하시든지……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런데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합의한들 되겠습니까?)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얘기한 게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

자,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아니고요. 단지 회의 도중에 정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깐 항의하기 위해서 항의 집회를 하면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세요. 애기 좀 들으세요! 애기를 좀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장 부결됐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당장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잠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때 저희는 투표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 일단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게 저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았다 이것조차도 서로 논의되지 않을 정도면 너무 과한 거지요. 그리고 저는 전달 통로로 합의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바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든지 수석이든지 나와서 '합의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행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거잖아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왔을 때 의장님 나가서 제가 어필할 수가……)

내가 여기 한참 있었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밖에 있다가 잠시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직접 어떻게 항의하지는 못했고……)

그러면 수석이라도 얘기를 하든지.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면 저희 말씀도 좀 들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어야……)

아니, 합의됐다니까……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런데 민주당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하실 게 아니고 저희도 불러 갖고 그러면 합의된 게 맞느냐고 물어보셔야지요.)

아니, 합의라는 게 제가……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야당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합의됐다는 것을 저의 전달 통로를 통해서 들었다 이겁니다.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다고 배준영 수석한테 좀 전에 얘기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겠다라고.)

어떠세요?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런데 도대체 그런 걸 하면 지금 얻는 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회의를 가로막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아니, 회의진행이 잘못됐다고 의장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의장은 합의된 걸로 전달을 받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 하나하고, 저기 방청석에서 저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방청석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우리 경위들이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막았고요. 그러고 두 번인가 세 번 샤우팅을 하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입틀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장은 여기서 장내 질서를 위해서 조용히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입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칙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다 얘기를 하지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기 방청석에서 오는 사람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함성을 지르고 규탄을 하고 자기주장을 저렇게……)

아니, 그래서 의장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세 번 얘기했어요.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거기의 사후 조치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그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계도도 제대로 안 된 거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들의 안내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도중에 강민국 의원이 저한테 개판이라고 합디다. 도대체 어느 국회에서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상황이 저렇게 벌어져서……)

그것을 국회의장이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방치해 놨으면 그런 얘기 들을 만해요. 그렇지만 속기록에 있지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우리 경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보내고 나가고 있는 중에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아쉬움 아니겠어요?)

무슨 국회의장이 만들었어요!

(장내 소란)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것 진행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합의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양쪽 수석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먼저 하신다면서요. 먼저 하세요.)

(○박성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컴플레인을 하셨잖아, 컴플레인을. 의사진행 방해를 하셨잖아.)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

o 의사진행발언

(16시55분)

○의장 우원식 자, 그러면 양당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여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공방전을 펼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공방전에 있어서의 기준과 준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정치의 미래를 보여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정치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가르치면 배우세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지금.

첫출발에 있어서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첫출발입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과 여야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 예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래서 충분한 예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 오늘 배준영 수석이 인사를 하지 않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야의 협상이 이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 국회의장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잘 들으세요. 첫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들을 때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에 쟁점이 있을 때 서로 규탄대회나 성토를 할 때는 서로 양해를 해서 시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에게 찾아가서 '채 해병 특검법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15분에서 20분 정도 규

탄대회를 하겠다. 알겠지요?', 서로 그래서 양해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양해를 구했고 거기에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상징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추경호 대표가 몇 분 동안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길지 않다. 20분 안에 해결하겠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방청석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세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국힘당의 강민국 의원이 '개판이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개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저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분명한 사과를 받고, 지금 여야의……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시지요.

서로 가장 큰 문제, 이슈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몰라요? 모르면 나가세요. 왜 여기 있습니까? 기본도 모르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충분히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국민의힘에 가서 양해를 구했던 문제고 그동안의 관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진 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강민국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채 일병 특검법이 부결된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왜 인사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인사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시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박성준 수석을 상대방 수석으로 제가 존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포디움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박성준 수석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저희한테 항상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본회의 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해 버릴게'.

여러분, 그게 합의입니까? 그게 동의를 받은 겁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어떤 동의와 합의를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히 안 하시겠습니까?

○의장 우원식 좀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 들으시지요.

○배준영 의원 민주당은 그래요.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라 버리고 노려보지 말라 그러고 발언이 길면 쫓아내 버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저 쫓아내시겠습니까? 나가 버릴까요? 그게 민주당입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님, 제가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300명의 의원들한테 온전하게 인사를 받으실 수 있게 공정하게 심판을 봐 주시고 사회를 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님은 탈당한 상황이에요.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여러분들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법대로요?

(「법에 어긋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강제 배정하셨지요? 그리고 상임위 강제로 배분하실 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 상병 특검법 1년 만에 하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투표에서 지셨잖아요. 지셨지요? 여러분들, 분풀이를 그런 데로 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님들은 폭압적으로 소수당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스러운 겁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자, 조용히 좀 합시다.

○배준영 의원 민주당은 언제나 저희한테 통보만 했어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 동의한 적 없고요. 오늘까지 여섯 번째 본회의를 하지만 합의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국회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일컫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강압으로 하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일인독재 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의 지지율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 지지율은 땅으로 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그것은……

(장내 소란)

좀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정신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도 야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 나가고 22대 국회 우리 모두,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해야 될 일이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런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정말 여야의 이 강대강 갈등을 풀자고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아 가면서 중재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제가 무슨 해법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두 달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그래서 방송을 정말 국민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부분 다 수용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했어요. 여당의 반대는 그 인사권은 정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고 정부, 용산에 가서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거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함께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을 정말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정부, 지금 대통령제의 정부가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는 뒷전에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요청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오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해 나가고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존재를 잘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5선을 한 국회의 의원으로서 또 의회주의자로서 대화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저 뒤에서 샤우팅하고 그렇게 막 구호 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었는데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이 개판이다’, 지난번에는 ‘어느 당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장한테 무턱대고 ‘국회 운영이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오늘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 발언을 한 강민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한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수현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0467)

(17시10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수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수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꼭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하루속히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되어 일본 정부와 유네스코 등에 대한민국국회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불과 이틀 후인 모레 27일에 제46차 세계유산심의위원회에서 사도 광산 등재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결의안이 의결되는 즉시 정부는 관련 조치를 시급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보편적 인류애와 정의로운 역사의 관점에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되었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서 등재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자행하였던 강제징용 등의 역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때 일본 대표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한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시대에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 결의안과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되어 3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 광산의 등재 심의가 모레, 그러니까 7월 2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 및 유네스코에 대하여, 첫째 사도 광산 등재 재신청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둘째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등재 관련 유네스코 결정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의 촉구, 셋째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들의 강제노역 증언과 자료 반영 및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릴 것 촉구, 넷째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 시 유네스코에 대한 사도 광산 등재 거부 적극 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한일동맹 다 어디 갔어요? 앉아 있어야지, 한일동맹들.)

(「의장님, 서 의원 주의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7시17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

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방송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되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여기 화면에는 의안번호 5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것 하나만 올려 놓고 왜 제안설명은 4개까지 다 하지요? 이게 뭐지요?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안건을 4개면 4개를 놓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건을 하나를 올려 놓고 설명을 4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실수」 하는 의원 있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무슨 의사진행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실수를 할 것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게 중요한 법안이 올라가는 건데!)

원래는 하나만 하는 것으로, 5항만 하는 것으로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 위원 앞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그게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5항만 올렸는데 나머지 항까지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 5항을 올려진 것을 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실수고요.

우선 5항 표결하고요, 그리고 6항에 대해서 5항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5번 띄우고 5번 안건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올려 주세요. 이것 이렇게 얼렁뚱땅 가실 일은 아니지요.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시 5번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대한민국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처럼 운영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안건 상정도 안 한 것을 무슨 설명을 합니까?)

제가 5항만 상정을 했고요, 설명할 때 5·6·7·8항을 같이 설명을 한 게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김현 위원께서 나오셔서 5항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사과하시지요.)

워낙 예민하니까요. 워낙 예민하니까……

이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5항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다 설명한 것은 회의진행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장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5항·6항·7항·8항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는 건 거지요?)

예, 다 걸었어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5항만 상정하는 건데 제안설명자가 6·7·8을 그냥 설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상정도 안 된 안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5항만 상정을 했으니까 5항만 설명하시고 6항은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것 상임위에 전달했는데 왜 전달이 잘 안 돼서 이런 모양……

김현 위원, 다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과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얘기했잖아요. 뭘 사과를 몇 번씩이나 하라 그래?

(장내 소란)

자, 이제 다 돌아가세요.

얘기했어.

자, 나가세요. 나가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현 위원 나오셔서 5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과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자, 김현 위원.

(「청문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내려오고 있다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의 출석, 의결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이 있는데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형두)

(17시30분)

○의장 우원식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중에 더 긴급한, 방송장악 시도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고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입법 시도를 민주당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 부르는지, 왜 이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 여론 형성과 또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4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입법 내용들이 구미 각국 선진 문명국가의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을 믿고, 방송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국회가 이렇게 무한 대립하는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을 때 참 가슴이 벅차고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AI라고 하는 우리가 1년 전,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명의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대전환에, 이 기술적 재도약과 퀀텀 점프에 우리나라가 올라타느냐 우리가 뒤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언론들이 매일같이 왜 대한민국국회는 이렇게 중요한 AI 입법, AI 산업 지원·육성에 소홀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위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국회에서 여러 AI 포럼이

있고 또 AI 관련 산업 토론회가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1개월여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 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 지배구조에 매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만 방송 지배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방송 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내놓지 않으려 그러고 또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중립화시키려 그러고, 이렇게 선진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툰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곧 BBC, NHK 또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FCC)의 여러 준칙과 제도 또 이번 입법에서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경우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무제한토론과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또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 청문과 또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방송통신위원 야당 추천 몫 두 사람, 여당 추천 몫 한 사람을 빨리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체제를 조속히 원상복귀하고 더 이상 이런 오래되고 부질없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고 먹사니즘을 주장해서, 방송 이런 주제보다는 그래, 먹고사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또 25만 원 현금살포법을 먼저 상정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신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방송장악 4법, 이 4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을 하면서 비슷한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특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족하나마 제 경험을 들려 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시에 3년 전의 주제는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쏟아내어서 민주당 정부와 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과 또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위 조작 뉴스, 가짜뉴스라고 지목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구속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추정액의, 평가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해서 그걸 보도한 언론사 기자, 간부들은 아주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무서운 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때문에 한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지지율이 90%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한 지도부였던 분이 제가 그걸 반대하고 막아서니까 왜 국민들이 90%나 지지하는 것을 최형두 의원은 반대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문 제목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40%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법안의 정체가 드러나고 언론단체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 이것은 민주당의 실력자들, 권력자들 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부정한

기업인들’……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원의 죄상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원들을 언론의 추적보도로부터 보호하고 재갈을 물리는 법이구나,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언론재갈법이구나 하는 것을 각성을 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의원 예.

○의장 우원식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7시 32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7월 초에 시작했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진짜뉴스 재갈법에는 8월 달에 민주당이 정말 엄청나게 폭주해서 밀어붙였습니다. 8월 31일날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엔의 인권국에서, 유엔의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법안은 전례 없는 법안이고 언론을, 진짜 언론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막는 큰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알려 달라’는 친전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들어온 그 서한을 비공개로 부쳤다가 유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바람에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유엔 총회의 연설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뉴스 재갈법이 당신의 유엔 총회 연설에 큰 망신이 될까 봐, 만일 유엔 총회 앞에서 국제인권기구라든가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곳에서 혹시 비난 피켓이라도 나오면 망신당할까 봐 서둘러 민주당 지도부에게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그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신데 저랑 민주당 의원님 두 분 또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 두 분 해서 여덟 사람이 한 달 내내 거의 무제한토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 기록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시도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국회의장께서 여론을 좀 들으셨구나,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무제한, 그때그때 탄핵하고 오늘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탄핵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병에 걸렸구나, 아주 단단히 중병에 걸렸구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의 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드디어 국회의장의 귀에까지 닿았구나.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것은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서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숙의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 파동 때 4 대 4 해서 모두 8명의 언론중재법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무제한토론을 해서 결론을 보았듯이, 결국에는 안 하기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모한 법을 추진해서 우리 언론을 갈라치기 하고 편파, 왜곡, 허위주장하면서까지 공영방송의 전파를 타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그런 공영방송의 신뢰도까지 실추시키고 공영방송의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공영방송 신뢰도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악법을 진행하지 말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지금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 설치법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는 방통위원회가 5인 협의체인데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재판 결정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인이라면, 대개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재단한다면 그 또한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즉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지켜 오면서 해왔던 그런 전통과 원칙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부득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대개 그것이 해결되면 해결되었다고 각하하고 또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원인무효처럼 해서 각하를 합니다. 이것도 각하될 것이 뻔합니다, 탄핵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 원인 제공이 바로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체제는, 방통위 5인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5인 체제를 바꾸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글로벌 표준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인 체제 중에 대통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이렇게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추천 2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야당이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추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몫 1명조차도 국회에서 상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진행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방송 지배구조만 관여하는 기구처럼 보이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기능은 매우 일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입니다. 이 통신은 통신에서 우리가 매번 당하는, 아마 오늘도 몇 분 의원님들은 피싱 문자 같은 데 걸려서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 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를 막고 하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또 우리 통신환경과 통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기능도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하루도 비워 둘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 법을 밀어붙이지 않고도 민주당에서 추천만 해 주고 오늘 당장 국회에서, 그래서 그 세 분, 민주당 추천 두 분, 여당 추천 한 분 이래서 3명을 추천하면 바로 해소될 문제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을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은 채 정말 적반하장 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무슨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상세히 아시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연결된 법입니다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방문진, MBC의 지배구조를 결정하고 MBC의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과 보도기자, MBC의 편성·보도를 결정할 그 이사와 간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민주당의 관심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송문화진흥법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관계된 법들입니다.

KBS, EBS 이 공영방송 세 군데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장을 어떻게 뽑도록 할 것인가 사장을 누가 뽑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 역시도 지금 우리가 서구,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이 그나마 보장되어 있고 우리 방송학자들이나 우리 방송계에서도 참고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본다면 이 역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지배구조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가 임명합니다. 나중에 관련된 법 중에서,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그것이 이사가 한 30명가량 되니까 그런 모델로 하자 그러는데 그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연방에서 1명씩 그래서 40명가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방송 노조에서, 기술직에서 1명 또 기자직에서 1명, PD직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열댓 명 만들자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위헌적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왜 이런 구조가 정착되었느냐? 도대체 방송이 뭐길래 왜 이렇게 여야 정당이 이 방송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냐? 공정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 누가 보도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좌우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 방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무서워하고 우리 당도 무서워합니다. 민주당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당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방송 4법, 저희들이 방송장악 4법이라고 부르는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은, 그것은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1명은 여당이 추천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면 그러면 바로 그냥 추천해서 5인 체제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걱정하는 KBS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MBC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법을 찾고 걱정을 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두고 허위 조작 뉴스가 주요 지상파 방송, 언필칭 공영방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뒤덮는,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에 '아,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하고 공범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뉴스로 뒤덮는, 이런 공정 보도, 심지어 그 방송사의 보도준칙조차 무시하는 이런 허위 조작 방송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달아 벌어지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이사의 임기 만료가 돌아온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을 못 하게 하려고, 그걸 못 하게 되면…… 3년 전에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했던, 그래서 대통령선거 때 비교적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방송 보도 간부 또 방송의 이사진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하려는 이런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회를 임기가 끝났는데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이전에 임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갑니다,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민주당에서도 이 방문진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문진이 더 이상 편파·왜곡·조작 뉴스를 그렇게 아무런 게이트키핑 없이 또 보도의 균형 없이 방송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방송 보도준칙을 함께 만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원장 탄핵 위협 또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이 모든 것은 그 두 사람을 결국 방통위의 업무를 못 하게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 주었던 그 방송사 이사진, 보도 간부, 경영진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말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발상입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 진실을 아신다면 '이건 좀 무리한 것이구나. 매우 무리한 것이구나. 그게 아니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웠는데, 제가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왜 공영방송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방송법이…… 방송법의 기본구조는 공정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왜? 우리 미디어가 너무 혼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 한 두어 개, 신문 한 대여섯 개 있을 때는 그나마 지면도 적고 또 방송시간도 적어서 굉장히 방송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 뉴스가 별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뉴스, 온라인 뉴스 또 유튜브, 온갖 소셜미디어가 창궐하면서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온갖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인 진실을 택합니다. 그게 이른바 탈진실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미디어를 좀 균형 잡히게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저 사진은 아주 유명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그러니까 미디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동전 때 미군이 이라크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한 손으로는 물을 주고 다른 군인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진인데 저걸 딱 잘라서 왼쪽 사진만 쓰면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아주 잔인하게 총부리로 겨누고 있는 미군의 잔학상을 보여 주는 사진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여 주면 미군이 이라크 포로한테 자기도 아껴 마셔야 될 물을 나눠 주고 있는 휴머니즘 사진이 됩니다.

사실은 전면적 진실은 이렇게 양면에 걸쳐 있을 텐데 누가 어떤 면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왼쪽 면은 미군에 대한 반미 선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오른쪽 면은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온정주의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마 편을 아주 나누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찰스 황세자지요. 왼쪽 사진은 뭡니까? 저건 외국에서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황세자가 원래 좀 버릇이 없고 늘 저렇게 해서 영국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타블로이드에 딱 좋은 사진이지요. 그런데 사진을 이쪽으로 찍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실까요? 앞쪽에서 보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를, 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황세자가 '내가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셋째를 낳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언론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걸 앵글을 바꾸면 '역시 건방지고 버릇없는 찰스 황세자, 우리 영국의 수치다', 저쪽은 '아, 왕실의 황세자였지만 평민을 부인으로 택하고 또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또 영국의 공군 장교로 해서 직접 영국의 권위를 지킨 사람이다' 이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편향에 따라서 왕실에 반대하는 타블로이드는 왼쪽 사진을 쓸 테고 왕실을 조금 치켜세우려는 타블로이드나 온라인은 오른쪽을 쓰겠지요.

왜 그러냐? 이제 뭐 전 세계 언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디어가 옥석을 안 가려 주니까 우리 건전한 시민들이 가리자고, 이른바 깨시민들이 이제 미디어를 가려서 보자고 미디어의 주장에 농락당하지 말라고 똑같은 사안도…… 예컨대 당신들이 만일 찰스 황세자의 저런 욕하는 손가락 하나 사진을 봤다면 저 사진의 다른 앵글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의심해 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리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 의심하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 없이 정말 편안하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없이도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공정하게, 여야가 주장하는 것을 균형 잡히게 그렇게 보도해 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저런 교육 없이도…… 물론 그때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공영방송이라고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영방송은 지상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상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허가를 하고 있지요. 굉장히 귀중한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그 방송이 아까 찰스

황세자에서 저쪽 면은 안 가르치고 이쪽 면을 가르치고, 마치 어떤 검사는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욕을 하고 맨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겠지만 저쪽에 보면 그 검사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 어느 방송이 어떤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의견이 분포가 달라진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공영방송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방송법, 방송장악 4법의 주제는 전부 공영방송입니다. 민간 자본이 또 민간 언론사가 투자하거나 돈을 들여서 만든 방송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 방송사는 민영 방송사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뉴스TV 같은, 한국의 CNN 같은 또 YTN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 회사들도 엄격한 보도준칙을 지켜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영방송은 적어도 지상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지상파라는 국민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은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국민들에게 균형 잡힌 진실, 전면적 진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고 또 굉장히 복잡한 논란거리가 있으면 그 논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소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숙고하도록 해 주는 방송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영방송에게 우리 국회가 요청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우리 여당이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방송장악 4법으로서는 이것은 이런 길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중에 공영방송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경고하고 그 사례를 다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방송노조도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었다면 왜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일 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적인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이 나름대로는 정부가 주요 국가재산인 공중파를 쓰는 방송사에 대해서 일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돌연 야당이 되고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 어느 공영방송이 했던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편파적 왜곡 방송이 아쉬워서 이걸 집착하신다면 다음에 여당 되신 뒤 후회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노조입니다. 노조인데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러면 BBC에서는 노조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따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 장황한 이야기하다가, 그것 말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싶으면 그렇게 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

는 공공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가 바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다음 볼까요. 영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볼까요.

BBC……

(「최형두 의원, 내용이 좋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재밌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워밍업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정말 숙의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당론이니까 따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론이 있겠지만 제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십시오.

BBC 이사회 이게 우리 KBS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BBC 이사회, BBC 본사, 커뮤니케이션청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의 대다수는 내각 장관이 추천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보면 별로 저게 없습니다. 지금 방송장악 4법, 방송 4법을 민주당에게 부탁하고 있는, 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송 4법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꾸면 매우 위헌적이 되고 또 이게 국민들에게 나중에 큰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또 방송을 더 망가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BC,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내각 장관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결국 정부가 추천하는 몫이 크고 다음 여당도 추천하고 하지요. 그래서 BBC가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국의 커뮤니케이션청도 보시고, 독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가지고서, 독일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 뭐 일일이 해 봐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사례를 조사해 보시면 외국 사례도 지금 현행의 우리 언론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사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개 정부가 주도권을 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재산을, 이게 정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좀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KBS 같은 경우에 KBS 사장을 뽑는데 25명의 이사진을 뽑자라는 게 지금 KBS 이사, 방송 4법 중의 하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안에 보면은 국회는 5명인가 이렇게 그대로 숫자를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를 한 25명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건 민주당 법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법안 상정할 때 하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방송기술조합에서 몇 명, 기자조합에서 몇 명 또 시청자위원회도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KBS나 이런 게 방송종사자의 것이 아닙니다. KBS는 국민의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방송종사자들, 그런데 종사자들이라고 전부도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그러면 배우조합은 없고 성우조합은 없습니까? 작가조합은 또 왜 없습니까? 이것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종사자를 하려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데 또 그걸 다 반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헌적이고 그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일종의 청부 입법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 법을 우리와 미리 상의하고 했으면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좀 바꿨을 텐데, 그것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것이, 지금 영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는 예를 못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서는 독일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요. 독일이 왜 그러냐면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연방국가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독일.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PPT 보여 주십시오.

사회 각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각계 단체. 방송종사자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연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독일도 연방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아주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종사자의 뜻, 시청자위원회 다 그…… KBS 방송 시청자위원회 그분들이 전체 방송을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또 이른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영향력하에 있거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그런 KBS의 방송 지배구조 형태에 언론 종사자를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독일 구조다. 그런데 숫자만 독일처럼 많은 것이지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독일은 연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도 9개 방송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방송사는 주 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의 인사들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도 가톨릭, 독일의 신교·구교 종교 지도자 또 노사, 경총, 노총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언노련이 쪼개 가지고 PD 노조 사람들은 PD연합이라고 들여보내고 방송기자조합원은 방송기자 대표라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언노련 산하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다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독일식이냐고 한번 반문해 주십시오.

다음에 ZDF를 한번 볼까요, ZDF.

독일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방송연합, SBS처럼 부산 가면 KNN이 있고 이렇게 연합하는 게 하나 있고, 물론 SBS는 공영방송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단일기간채널, KBS처럼 이것은 ZDF입니다.

ZDF 볼까요.

ZDF는 단일방송채널인데 총 16개 주정부 협약에 의거해서 운영합니다. 주정부 대표, 우리 같으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송종사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법이 방송종사자들이 자원한 이 방송 지배구조가, 왜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는가?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되고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에서 왜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겠지만 주정부 대표, 연방정부 대표, 직능·사회 단체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송종사자만 넣으신다면 다음 선거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마 한국

노총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으실 테고 여러 사회 각계로부터 질타를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이사회에 우리 계층, 우리 집단, 우리 단체, 우리의 이해를 대변해 주지 않느냐고 비난받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막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한때 좋아했던 방송이고 또 제 친구들도 많고 지금 노조 하는 사람들도 제 후배들이고 해서 참 아낍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지금 MBC를 둘러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또 한 명밖에 안 남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물론 방통위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겨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헌법재판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권한이 중지됩니다, 업무가. 그러면 방통위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아직 임명이 안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벌써 7월 말에 임기가 돌아오고 8월 초에 임기가 돌아오는 MBC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MBC를 지키는 데, MBC 현재의 이사진, 현재의 경영진, 현재의 보도 간부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언론계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방송인 MBC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본심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셈이지요. 그러면서 늘 내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로이터저널리즘에 보면 MBC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귀당 국민의힘은 MBC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MBC를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MBC를 더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MBC가 특정 노조가 좌지우지하고 MBC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내전 같은 엄청난 야만적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방송사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실까요.

이게 항상 이야기하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중의 하나입니다. 보여 주실까요. 잘 보이시지요? 이게 로이터저널리즘 일본편입니다, 일본편. 그런데 우리 MBC는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이터저널리즘, 세계적인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국내 신뢰 1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로이터저널리즘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한 사십몇 개국을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저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의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2000명 정도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도 있고 해서 사실 50% 이상이면 전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MBC는 53%고 KBS는 51%, 그렇다고 해서 MBC가 1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저쪽 왼쪽 상단에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 도표 죽 보면 퍼블릭 오피니언 온 브랜드 트러스트(public opinion on brand tru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언론사의 브랜드 신뢰도인데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온리(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뭐라고 영어로 써 있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대상에 포함시킨 언론사에 한한 것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결과는 절대로 가장, 모스트 트러스티드(most trusted) 혹은 리스트 트러스티드(least trusted)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결과를 가지고서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한동안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로이터저널리즘과 함께 협약해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게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 표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언론, 특히 MBC가 가장 신뢰받는 방송……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표본 오차도 있고, 그러면 오차 범위 내는 그것을 우세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위 2위를 따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차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조사의 방법이 주관적 방법 때문에, 이것이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덜 신뢰받는다라고 그렇게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매년 저렇게 위에 표기를 해 놓습니다.

이게 표를 잘못 썼는데, 내가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사를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당 의원님들은 다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역사 문제에서도 진일보하려 그러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보도를 하고 한 비교적 중도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지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 조사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NHK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것 관련해서 말을 한 김에 쭉 넘어가서…… 우리 PPT 중에 저 부분 보여 주십시오.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의 정치 마케팅, 종착역은 공멸일 수도’ 그것 보여 주실래요. 동아일보 한규섭 칼럼 보여 주십시오, 좀 넘어 가서. 김대업 뒤에 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서울대 한규섭 칼럼입니다.

왜 저런 일본의 A신문이 분명히 부수나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양식적인 사람이 볼 때는 훨씬 더 신뢰할 만한데 왜 S신문보다 신뢰도가 떨어질까? 저게 한규섭 칼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뉴스가…… 뉴스도 저런 언론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향적인, 그러니까 진영의 논리에 가까워질수록 결집력이 높아집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나오는데 선명성이 강할수록……

(「안 보여요」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보이지요?

(「읽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뉴스 소비자의 극단적 양극화가 있다. MBC 선호층을 분석해 보면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54%, 보수가 12%, 두 집단 간 차이가 무려 42%에 달합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진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전체 응답자, 저게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 중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인데 갤럽 조사, 방송사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응답자, 국민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진보가 28%, 보수가 31%였습니다.

그런데 진보에서는 특히 저쪽으로, MBC에 몰두·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MBC 선호층에 진보는 약 2배 과대 대표된 반면에 보수는 3분의 1로 과소 대표됐어요. 말하자면 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MBC를 더 선호해서 보게 되고 또 좀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MBC을 덜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는 약 2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답한 정도가. 그리고 상업 지상파 방송인 SBS는 17%인 것과 비교해서 MBC는 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면 저렇게 일본의 S신문처럼 A신문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시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업방송이나 또는 개인 유튜브라든가 또 민간이 하는 민영 언론사의 경우는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독자를 상대로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종편들이 보면 많은 경우 좀 특별한 취향의 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은 한 진영의 보루가 되거나 한 진영의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라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여깁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말한 그 사례가 나옵니다. A신문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에서 부수도 많고 또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이고 그나마 이 신문을 많이 인용하고 좀 신뢰하는 반면에 S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십시오. 트러스트(trust), ‘믿는다’가 A신문 46%, S신문 48%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규섭 교수가 갤럽 조사, 갤럽의 언론신뢰도 조사를 가지고서 분석한 겁니다. 왜냐? 한쪽 편향의 독자들이 집중되거나 시청자가 집중되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국내에서 로이터저널리즘 인용하시는 분이 종종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한국 편에서 제일 앞 단락에 나오는, 저게 첫 페이지입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챌린지, 키 챌린지는 뭐냐 그러면—제가 파란 하이라이트 해 놨지요—뉴스 미디어에 대해서 전 세계, 지금 저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조사 대상으로 해 놓은 한 50개국, 약 50개국들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지요. 그 나라 가운데 한국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한 30% 안팎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 넷째 줄에 나옵니다, ‘news media score consistently badly for 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낮으냐, 매년……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주의 지수 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고 이런데 왜 이렇게 언론은 전 세계 50개 대상국 중에서 제일 하위권에 속하느냐? 신뢰하기 어렵고 공정하지 않다, 페어니스(fairness), 페어하지 않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우리가 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 특정 정당의 선호에 맞추어서 방송의 보도편성지침과 또 뉴스의 방향을 정하고 심지어는 허위 조작 뉴스까지 스크린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낼 경우에는 이게 전체 언론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소셜미디어의 창궐로 전통 레거시 미디어들이 퇴조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지역신문이 사라져서 뉴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참 우리 인구가 급감하는 것 못지않게 뉴스미디어의 신뢰도도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쓰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이 한 정파의 수족처럼 움직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꼭 민주당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 당으로서도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를 망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치 예전에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를 통했듯이 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집권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다가 역풍을 맞고 능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위신은 추락하고 언론의 신뢰도는 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영 4법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 당론을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이제부터는 KBS, MBC, SBS의 보도준칙, 사실 보도준칙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안 지킵니다, 잘. 제가 대표적으로 안 지키는 현상을 곧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실감하셨겠지마는.

이 보도준칙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다, 막스 베버가 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그것은 단순히 제도와 법 이런 것보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였다라고 했듯이 저는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페어니스(fairness)입니다, 페어니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지적했던 바로 페어니스, 한국에서는 페어니스 같은 그런 개념이 우리 언론에는 약하다. 공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칭 진보, 자기가 자칭 보수. 내가 가장 진보고 내가 가장 찐보수, 찐진보 그래 가지고……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 소신, 호모 폴리티쿠스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저널리스트는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공영방송의 이사진, 공영방송의 경영진, 공영방송의 기자들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영방송 제도가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BBC 보도준칙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이것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사실 BBC만 딱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약간 여담입니다만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제가 ‘우리 이진숙 후보자’라고 해서 죄송합니

다—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명한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 빵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성심당 빵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쓴 것 아니냐…… 그런데 한마디로 우습지요. 50만 원어치 사서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어느 분은 스시, 뭐지요? 회 도시락을 20인분을 사 가서 누가 다 드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빵 50만 원어치 사서 누가 들겠습니까. 대전MBC 사장 할 때 대전MBC에서 일하는 분들, 빌딩 관리하는 분들한테 격려하려고 아마 주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걸 집에서 사 먹은 것처럼 야당 위원들이 호통을 치길래 '개인 카드로 그 집에서 빵 좀 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샀어요. 그것은 이제 집에 가져간 것보다도 때때로는 자기 개인카드로도 많이 사서 주고 했던 겁니다. 공사가 구분이 분명했는데……

그래서 지금 드디어—저희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가는데—어제 강행 표결해 가지고 빵 조사하기 위해서, 빵하고 치킨을 실제로 누구를 상대로 사서 먹었나를 조사하러 청문회가 이제 채택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그러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우리 이런 여파가 끝나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런던 또 프랑스, 베를린 이런 데 한번 갑시다. 눈이 번쩍 뜨이지요, 다들.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기구 같은 것—미국 같으면 FCC입니다—FCC 같은 걸 한번 봅시다, 그건 워싱턴에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제대로 봐야지 지금 우리가 빵, 치킨…… 빵 몇십만 원어치, 치킨 매 주말마다…… 치킨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마 후보자 생각으로는 주변 지역을 더듬어 보니까 매 주말마다 다큐멘터리팀이 남아 있으니까 격려용으로 치킨 몇십만 원어치를 늘 주기적으로 삽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것도 후보자는 사실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다 커서 지금 같이 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검증 대상이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가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방송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조사 하러 유럽과 독일에 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습니다만 바쁜 시기에 언제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옵니다, 그냥. 조사를 해 보면 나옵니다.

BBC 보도준칙 보여 주십시오.

좀 더 앞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헷갈린다.

조금 더 앞으로 가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니.

FCC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방송에 집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 편이 방송사 이사가 되고 그 방송사 이사가 우리한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 방송사 보도본부장으로 앉혀야 그다음

선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대의 싹을 자르는 것을 FCC의 기본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FCC 폴리티컬 프로그래밍 룰(political programming rule), 그러니까 미 연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Equal Opportunities(Sometimes Called Equal Time), 똑같은 시간을 줘라. 합법적으로 퀄리파이드(qualified)된, 합법적으로 된 정당의 후보자와 정당이라면 똑같이 방송에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노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퀄 타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계적 균형입니다. 기계적 균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마 와 계실 텐데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님은 존경받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지금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시지요? 어떤 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정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위·편파·왜곡 방송문화를 진흥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끼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MBC가 뉴스 보도 또는 교양 제작물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편향적인 형태들이 과연 우리나라 발전, 우리나라의 공정한 여론 형성,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를 진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3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조작 뉴스를 아무 여과 없이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톱으로부터 쫙 내리깔았던 그 엄청난 오기, 그게 광기입니다, 광기. 어떻게 방송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시겠지만 또 온갖 변명이 있습니다. 변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퀄 타임을 지키셔야지요'. 그리고 그건 MBC 보도준칙에도 있습니다, 공정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건 전 세계 공영방송의,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민영방송이라도 보도준칙에 있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며칠 뒤에 상당히 억울하셨던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최형두 의원은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하던데 기계적 균형은 오히려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균형보다는 최소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보도의 비중을 정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선거 때 그러면 여론은 어땠습니까?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정말 각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차 범위에서 각축하고 있는 범위만큼 시간을 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스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나 기자, 특히나 공영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5000만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방송사를 운영하고 그 뉴스를 송출하고 이런 분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척 보면 100만 명이네' 이렇게 하면 그것 큰일날 사람들입니다. 선무당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BBC라든가 FCC 같은 곳에서 공정한 보도, 공정한 보도가 애매하니까 이퀄 오퍼튜니티(Equal Opportunity),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너무 모호하니까 이퀄 타임, 똑같은 시간을 배정해라. 예컨대 방송사에서 오늘 MBC의 뉴스데스크가

열두 꼭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쓴다, 그런데 꼭지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사라지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좋게 나와야지요. 윤석열 후보는 커피 타 준 사람 아닙니까, 커피 타 준 사람? 이재명 후보가 묻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론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팽팽한 선거 구도에서 한 후보에게 온갖 힘을 실어다 주려고 했던 지극정성이 다 보입니다, 그 보도 편성에는. 그래서 '그 보도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직접 편성에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셨다면 언론인 출신 이사장님은 '이 보도는 균형이 잡힌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선거를 앞둔 그 시기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주장 뉴스를 보도한, 네 꼭지를 내리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해 줬던 누구한테 커피 타 주고 봐준 것으로 각인되게끔 교묘하게 세 꼭지를 엮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우리 공영방송이 공영이 되는 것이고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와 공동체의 과제, 문제를 숙고하게 만들고 또 때때로는 분열된 여론을 정말 서로 화해로 이끌 수 있는,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기계적 균형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통위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방통위가 5명이지요? 미국 방통위 보여 주십시오, 미국 방통위 FCC.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방통위 구조 또 KBS, MBC 이런 방송사의 이른바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배구조지만 거버넌스의 구조가 보면 선진국에서 다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방통위원회 5명이지요?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도 5명입니다. 또 우리랑 비슷하게 임명합니다.

그런데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5인 중 1명, 사실 이것도 대통령이 다 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렇게 대통령이 다 임명해도 또 상원의 동의를 물론 구하지요. 상원 동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 상원도 아시겠지만 팽팽하게 지금 파티 라인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1명 차이로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다수당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원 동의를 구하는데 대통령이 구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대통령이 2명 하고, 우리가 국회에 국민의 뜻을 좀 더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도 큰 논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FCC가 강력한 룰로 방송, 공영방송만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 전체, 방송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그런 FCC의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 룰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사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미국 공영방송공사(CPB)라는 곳이 있습니다. CPB 볼까요.

뉴턴 미노우라는 1961년 초기의 FCC 의장 했던 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나친 산업화,

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엄격한 방송 라이선스 심사를 선포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상승을 위한 공영방송사 설립을 주장했지요. 공영방송사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때 유명한 린든 존슨 대통령, 다음 볼까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공영방송공사를 만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PB……

다음 넘겨 주세요. 또 다음 넘겨 주시고.

이렇게 다, 우리 KBS 이사와 비슷합니다. 이게 다 국제표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CPB는 위원장을 포함하는데 우리보다 1명이 적네요. 여기는 8명입니다. 미국 공영방송공사 이사회 이사도 대통령과 상원,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송사자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BBC입니다. 아까는 FCC입니다.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방송통신위원회고 BBC는, 세계 공영방송의 또는 공정방송의 표준으로 일컬어지는 BBC의 선거방송 제작 및 보도 준칙입니다. 먼저 저기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이 듀 임파셜리티(Due Impartiality), 그러니까 합당하게, 편들지 마라. 그러니까 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듀 프로세스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정당의 보도, 커버리지 오브 파티즈 앤드 캔디더츠(Coverage of Parties and Candidates), 후보와 정당을 보도할 때 그 커버리지에 대한 준칙 또 온라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에서의 임파셜리티, 그러니까 파셜리티가 편중되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편중, 그러니까 탈편파,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편파 금지입니다, 편파 금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페어니스 투 캔디더츠(Fairness to Candidates), 후보에 대한 공정성, 이게 코드 오브 프랙티스(Code of Practice), 딱 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영국 BBC가 아무래도 영국이라는 그런 제국을 지금까지도 여러…… 아직 그 나라도 불완전한 점이 많고 최근에 선거에서 이변도 많았지만 그러나 방송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광우병 보도로 온 나라가 그냥 혼란에 빠지고 광우병 때문에 뇌에 구멍이 숭숭 나고 모든 사람이, 그냥 가던 소가 주저앉고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 했던 십여 년 전…… 언제입니까. 2008년, 2009년 한미 FTA, 좌우간 그 시절에 광우병 방송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던, 저런 나라에 최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우병 보도가 방송에 나왔는데 광우병 이야기할 때마다 그 방송사들, 그 공영방송사들은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 읽어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윤리적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허위 뉴스다, 모두 사실확인 절차가 잘못되었고 미필적고의 같은 게 보인다. 이것을 이렇게……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공익적 관심을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아주 그러니까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입니다. 현실적 악의, 굉장히 심각한 악의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라고, 국민 권익, 국민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확인 절차 또 사실에 대한 오인, 편파성 이런 게 빚어졌지만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무죄의 취지로 나온 겁니다. 그게 보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 지난번에 언론중재법의 문제가 언론에 재갈을 물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심지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또 유엔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국회의장한테 그런 법안을 표결해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런 것도 바로 언론이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자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언론에 폭넓은 자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면피 수준으로 돼 가지고 자기가 무죄니까 그 보도가 옳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도는 당시 광우병 판결문 읽어 보면, 광우병 판결문 보면 사실확인 절차, 사실에 대한 오인·오해, 그로 인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혼란·혼선 이런 걸 모두 다 인정하고 그것이 상당히 허위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뭘 하려고 했겠느냐. 최악의, 극단의 걱정 같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공영방송이 무책임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아까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봤듯이 손가락을 원래 이렇게 했는데 옆면만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욕한 것으로 왜곡하고 한편에서는 물을 주면서 한편에서는 또 포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총을 겨누는 양면성이 있었는데 한 면만 보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도의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서 국민의 권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만큼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CC라든가 BBC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정말 기계적인 균형 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BBC 보도준칙, 다음 사진 보십시다.

BBC 보도준칙은 BBC 설립 근거 이걸 죽 해 놨지요. 그리고 다음에 BBC 공적 책무, 이게 왕실칙허장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어디 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통이지요, 전통. 훌륭한 전통.

왕실, 로열 차터 6조에 보면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이거 KBS가 해야 될 일이고 MBC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방송법을 몇 개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죽 보여 드렸듯이 방송의 거버넌스 구도가 우리가 다 선진국 보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중·지상파가 정부 재산인 만큼 지상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그런데 그 정부가 그것을 편파·왜곡 방송을 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특정 정당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공적 책무를 페어니스 독트린, 공평성 독트린이라는 철칙으로 또 엄격한 공적 책무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책임의식 위에서 또 때때로는 그걸

어길 경우에는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BBC의 공적 책무, 왕실칙허장에서, 로열 차터 6조에서 제시된, 우리 공영방송도 마땅히 따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 꿈꾸는 그런 방송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일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제안했던 4개의 법처럼 할 경우에는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방송 지배구조가 되어서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특정 정당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보도 간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파원도 자기들끼리 다 가고, 반대편 특파원들은 사장 바뀌는 즉시 다 불러들이고, 보도국 기자를 엉뚱한 데 배치하고 핍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배현진 의원 늘 보면 '야, 저렇게 우아하게 크신 분이 있나' 해서 참 늘 부럽습니다만 MBC 방송 앵커할 때 그때 당한 그 고초와 그 야만적 폭력을 견뎌 냈던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우아하신 분이 저렇게 심한 고초를 겪었나' 그래서 제가 MBC 후배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배현진 독한 사람이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오후 4시 되면 파업하는 노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MBC 뉴스데스크를 준비하는 비노조원들에게 소금을 뿌린답니다. 그러면서 퇴마의식을 한답니다, 퇴마의식.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답니다. 소금을 뿌리고 꽹과리를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그런 엄청난 야만적 폭력을 견디고 오늘 우리 국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구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불의, 그런 야만적인 폭력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겨 낼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듭니다.

(○한기호 의원 의석에서 — MBC를 해체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이 애정의 말씀으로……

저는 MBC를 더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도 아마 와 있습니다. 증인으로 오정환 전 본부장, 문호철 국장 이런 분들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MBC 시험 볼 때 또 이진숙 후보자가 시험 볼 때 또 여기 계시는 김장겸 사장,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 MBC 들어갈 때요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들어가기 무지 어려웠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

MBC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마을에 '야, 우리 동네 김은혜 MBC 입사', 지금 사시, 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시, 고시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 뽑지만 MBC 기자는 1년에 10명 뽑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문호철 그다음에 오정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노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이 노조의 권력화, 방송사가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지배구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이게 구조화된 방송의 권력화, 공영

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되는 순간 이 공정성도 무너지고 공영방송의 신뢰도 추락하고 그 내부에서는 6·25 때도 없었던 심각한 내전과 야만과 폭력이 자행됩니다.

그 야만과 폭력이 어떻게 자행됐는지를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걸 없애려고 하려면, 누가 방송사 사장이 되고 경영을 하더라도 방송의 정치 프로그램 또 방송의 교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균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시도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야, 뉴스타파에서 어제 말이야, 그 멋진 이재명한테 딱 좋고. 끝났어 윤석열, 이제. 뉴스타파 보도 몇 꼭지 깔아'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는 3월 7일 날 죽 나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대장동 범죄자들을 봐준 것처럼 하는 그런 허위·조작, 김만배·신학림, 아무 근거도 없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기자라면 팩트 체크를 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증언만으로, 말로써만 유죄 판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서는 되지만 그다음에 물증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그 시기로부터 6개월 지나서 두 사람이……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화천대유의 그 김만배가 여러 목적을 가지고서 다 조작한 흔적이 드러나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법조기자 출입할 때는 그게 1990년대 말, 2002년, 2000년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인데 그리고 97년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인데 희대의 사기꾼이 나왔습니다, 김대업이라고.

김대업 사건이 참,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김대업 사건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BC 준칙 같은 것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BBC는…… 지나갔는데 BBC 편집 가이드라인 보면 방송편집 윤리, 가치, 기준을 제시한 매우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앞에 좀 돌아가 볼까요, 앞에. 이보다 2개 앞에.

다음.

이 BBC 편집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BBC의 방송편집 윤리,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게 뭐냐? 영어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보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야, 우리가 틀려도 우리 지지율 절반이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우리 찬양 뉴스를 보내 줘' 이런 게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척 보면 100만 명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척 보면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네, 척 보니 커피 타 줬네, 이게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스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데 권력이 높아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친한 정치인이 이번에 입각하면, 내가 친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한자리하겠지' 이런 유착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한 언론인에 대한…… 언론인들도 지금 우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인도 공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인이 자발적 수족이 되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막 써 준다, ‘쪼찡’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나쁘고 그 정당, 그 정치인한테도 나쁜 겁니다.

저는 우리 후배 언론인들에게 사랑할수록 비판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비판하되 비판의 근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소홀했다. 저 정당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런 임파셜리티(impartiality)와 페어니스(fairness),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equal time equal opportunity), 왜냐하면 미운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하는 게 한 90% 진실 같은데 10%가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오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밤을 새워서 낱낱이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4일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나와서 또 말씀……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또 인사청문회 중이어서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중단하고 민주당에 넘겨주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방송 4법을 둘러싼 무제한토론에서는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함께 생각해 볼 해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해외 사례와 국내에서의 큰 실패 사례를 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BC 보도준칙을 다시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 반복, 반복인데 다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적절한 불편부당성’ 해서 정말 이게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매뉴얼이 되어서 체득이 될 만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2개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가타부타 똑같은 말인데…… 보십시오, 정확성(accuracy), 균형(balance), 맥락(context), 거리두기(distance), 공평성, 공정성, 객관성, 열린 마음, 엄격성, 진실, 자각, 투명성…… 이게 뭐 기자들한테 거의 도인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이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공정책, 정치 산업적 논쟁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특정 관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사안을 방송하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에게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BBC 뉴스입니다. 미국도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미국도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이라는 것이 엄격합니다.

페어니스 독트린 볼까요. 흥망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인데.

이 페어니스 독트린은 굉장히, 텔레비전이 너무 강력한 미디어 매체로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C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체제 건립…… 을

만들기 위해서 페어니스 독트린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9년에 만들었습니다. 참 일찍 만들었지요, 미국이 빨리 성장한 국가였기 때문에.

리포트 온……

여기 보십시오.

다음 볼까요. 공정·중립 보도 보십시다.

방송사는 공적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이슈에 관한 뉴스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방송 면허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이퀄 타임 룰(equal time rule) 그랬어요. 이때 이퀄 타임 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조금 우리 보수들한테 브리핑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언론 보면 주요 언론은 전부 민주당 편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래서 제가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일 때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보고 CNN 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웃이—그 이웃이 하버드 나온 여성분이었는데,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는데—왜 그런 신문을 보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것은 리버럴들, 데모크라시 보는 신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FOX News 이런 것 본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와 먼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것을 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레이건 때 너무 미국 언론들이 민주당 성향이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는 이런 공정성 원칙을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오히려 방송사들이 논란이 되는 이슈를 기피한다 이래 가지고 뭐 등등 했었는데…… 미 의회가 이것 안 된다, 큰일 나겠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좀 약간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발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그러면, 보시지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 저…… 우리나라에 김어준의 뭐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나라는 약간 이쪽이지요. 저 민주당…… 민주당 성향이지요. 민주당에 거의 뭐…… 에서 추앙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미국 같으면 우파에서 아주 정말, 러시 림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장합니다, 이런 그 FCC의 페어니스 독트린이 조금 채택될 때는. 그리고 FOX News가 크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뉴스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페어니스라는 게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오보의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하고 사람들은 기계적 균형 같은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지켜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치적 야합의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방송협회는 원래 정부의 독점적 지배와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1975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방송 개혁을 통해서, 오늘 방송법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협회를 의회 통제하에 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의회 통제하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론노조 통제하에 두겠다고 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랬더니 이탈리아 방송협회 3개 방송 채널, 이게 공영방송인데 나란히 정당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하나는 기독민주당-우파가 가져가고, 하나는 사회당-좌파가 가져가고, 하나는 공산당-극좌가 가지고 갔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통합과 균형 잡힌 어떤 사회 여론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았지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해서 BBC, FCC, 독일 등 사례를 다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여론 면에서 보면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한쪽에서는 개딸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이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태로 사회가 분열돼 있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독일은 공영방송 문제와 별론으로 특히 교육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위해서 그 유명한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사회교육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나치를 통한 살육과 증오 이런 것들로 점철된 역사에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처절한 반성의 의미로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의회내각제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나치 같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연정을 하고 협치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1976년에 독일 내 보수와 진보 정치, 교육 철학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주입 또는 교화하지 마라, 학생들한테 주입하거나 교화하지 마라.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학생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가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 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육 목적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하노' 이렇게 막 파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가 믿는 거라고 어느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고 어느 대통령은 아주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학생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논쟁 원칙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입 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바로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페어니스 독트린, 공정 보도의 준칙의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장을 결정할 때도 자신들이 스스로 이해관계를 꾸려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지 내가 원하는 사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걸 길러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방송의 실태입니다. 우리 공영방송과 언론……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고 합니다만 신문의 지배력이 옛날만치 않아서 지금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

다. 그리고 신문은 또 신문사들이 전부 개인회사들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입니다. 그 논조를 이렇게 써 가지고 사회적 기류를 못 타면 그 회사 부수가 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정부가 그 면허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있으니까요, 바로 지상파라는. 케이블 역시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지상파라는 국민적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방송 보도 이런 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1997년 대통령선거, 2002년 이 사건, 김대업…… 이회창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었는데 그 병역 비리 브로커가 자기였다는 게 김대업 스토리의 전말입니다.

1997년에 한 번 성공했어요, 크게. 이회창 그것 때문에 휘청거렸습니다. 거기에 DJP 연합이 탄생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그다음에 2002년 대통령선거 때 드러났지요. 그때는 저도 기자여서, 당시에 김대업 씨는 완전히 의인 취급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업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 기자들도 김대업이가 엄청난 특종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만 ‘선생님,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제히 의인, 용감한 시민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너무 과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사실 아닙니까? 넘어갈게요, 불편하시면.

그런데 이제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때 김대업 사건이, 이제 김대업 씨가 ‘여기에 직접 병역비리 관련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 테이프를 들고 검찰청에 출두합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김대업 선생님, 그 테이프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사본 아닙니까?’ ‘원본입니다. 유일무이한 원본입니다’. 그 내용에 1980년대 말 혹은 90년대 초로 추정되는 병역비리의 직접 목소리가 담겨 있고 그 테이프가 진짜 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는 사실 성문분석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애매하게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검사가 뜻밖에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원본이라고 주장했던 테이프가 보니까 2000년 싱가포르에서 만든 소니 테이프였습니다. 김대업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모든 테이프, 심지어 PET병에도 제조 연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큰 사기를 치다가, 자기가 뱉은 이것이 유일무이한 원본이고 사본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목소리들이 다 담겨 있다, 이게 진실이다 하고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BC라든가 FCC의 그런 오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보도의 원칙만 지켰다면 이런 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신문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했겠지만 그래도 방송은 신뢰도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지상파라는 공공 자산, 국민 자산을 사용하게끔 허가해 주기 때문이지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당시에 좀 다릅니다. 당시 MBC 보십시오. 똑같은 방송인데도 '편집 안 됐다' 이랬다가 저런 것들이 김대업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사기죄로 구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자체는 판단이 불가능한 테이프였습니다. 판단 불가능한 것을 우겨 가지고 이 사건을 대통령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저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했는데 그 사기꾼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특히 이 유리한 쪽에 있었던 분들이 타고 그것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방송이 이제 더 심각한 사건을 일으켰지요.

그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김만배·신학림 들어갈까요.

김만배·신학림 사건의 시작은 잘 아실 겁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죽 자신들이 모의를 하지요.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더니 당시 집권당 대통령후보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하고, 서로 좀 내통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당시 정부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 지시를 합니다. 이게 모든 가능성은 다 조사를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 조작을 해 나갔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진실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커피를 타 준 사람은, 그 조우형이라는 사람 자신이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그걸 빼요. 빼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를 떠나서 드디어 공영방송이 허위 조작 뉴스를 유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대업의 경우는 본인이 속였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 의심해 보면 알 텐데 의심할 생각도 못 했고 그런데 그건 김대업이 정말 희대의 사기를 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감식도 안 되는 테이프에 담겼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그것이 언론이 볼 때도 유력한 대선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었고, 그런 사기극에 놀아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람을 알면서도 녹취록 자체를 허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대통령선거……

보십시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짜깁기해서 내용을 보도를 하지요.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런데 김만배는 신학림 실제 인터뷰를 하면서 빨간색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절묘하게 또 MBC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위 조작 뉴스를 추가 왜곡·편집하는 단계까지 공영방송이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부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대선 3일 전에 3월 6일 뉴스타파가 먼저 띄우고 당시에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널리 알려 주십시오'라고 크게 공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도 왜 커피 타 줬냐고 단정적으로 물어보지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는 이게 유력한 대통령후보고 또 권태선 이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보도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팽팽하게 맞붙은 만큼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 또는 이 보도로 인해서 한쪽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심, 걱정 이걸 최소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BBC라든가 FCC의 보

도준칙에 정한 것이고 심지어 MBC 보도준칙에도 있습니다.

요구했다면, 이것 녹취록 전문을 받아 봤어요. 녹취록 전문도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민노총 노조가, 사실은 편집권 이렇게 다, 경영진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정부나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싫어하고 비교적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당과 그 후보자의 집권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편파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학림은 이제 돈 받고 구속됐지요. 신학림이 돈 받고 해 준 인터뷰라는 게 드러났고.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 이걸 보도했던 기자가 방통위,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지금 그 사람의 진실은 JTBC와의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급기야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JTBC와 검찰이 짜고 나를 죽인다'라고 주장하면서 JTBC 회사가 명예훼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사시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뺏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계좌 추적은 당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직 그건 안 당했대요. 그런데 만일 돈 받고 한 게 드러나면 당신 바로 구속이 될 건데 그것이 바로 김만배하고 신학림 사건인데 다행이라고. 그런 것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당신의 악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공익적 목적이라는 보도로 주요 대선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억을 펜으로 편리하게 자르고 붙이고 했던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언론인으로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언론에게 폭넓은 자유를 주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자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서 폭넓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공익을 위해서 취재하고 내가 공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성의만 있다면 당신이 오보를 해도 그 오보에서 비교적 관용적입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허위 조작 보도의 면죄부는 아닙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최고의 끝, 김만배·신학림의 돈 거래, 이런 것은 바로 여지 없이 처벌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방송사가 또 입고 있습니다.

MBC 흑역사 볼까요?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왜 MBC만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밖에 없습니까?)

조중동은 공영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중동은 이 방송법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신 우리 한준호 의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 한 의원님은 언론계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조중동도 같이 해 주셔야지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하세요. 한준호 의원님도 무제한토론 하시면 됩니다. 제 말하는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원님 보십시오.

우리가 다루는 법이 조중동법, 조중동이 민간언론사 아닙니까, 민간언론사? 그것은 오늘 방송 4법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TV조선, JTBC 이런 것하고도 크게 관계없고요, 사실은. 오늘은 지금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절차·설치 그다음에 MBC 경영진의, MBC 이사진의 구성 또 KBS 이사진의 구성 또 EBS 이사진의 구성에 관한 방송 4법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시다.

넘어가고, 오늘 불편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MBC 그다음 뒤에 넘어가고요. 오늘 내가 밤새 할 거니까 천천히 보세요.

아까 그런 뉴스로 인해서, 그런 편파·왜곡·조작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국민들도 손해를 보고 방송사도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MBC 흑역사 넘어가고 저거 봅시다. 저 갤럽 조사표 한번 보십시오, 갤럽 조사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울대학 언론학자가 이야기했고 또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국이 지금 언론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전 세계 50개국의 조사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콘셉트 라이크 트러스트 앤드 페어니스(concepts like trust and fairness)가 매우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했듯이 지금 우리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뭔 소리냐, 지금 어느 공영방송이 신뢰도 1위인데 뭔 소리냐,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의 아사히신문보다 산케이신문이 훨씬 신뢰도가 높은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반박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서울대 그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사는 시청률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론의 신뢰도라고 하면 어느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느냐? 또 신문의 신뢰도라고 하면 어느 신문을 더 사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방송을 눈 버리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시청률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신뢰도겠지요.

다음에 또 부수야말로, 유료 부수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신문의 신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어떤 거냐 하면 한 이삼천 명을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대학교 언론학자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조사의 특징은 결집된 지지자들, 시청자들, 이런 시청자들이 신뢰도를 올려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도 제일 위에 이 조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낫 이그저스티브(not exhaustive),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모스트 트러스티드(most trusted) 혹은 리스트 트러스티드(least trusted)라는 리스트(list)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딱 표시해 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이 공정성의 지표인 양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갤럽조사, 이게 올해 상반기, 올해 2/4 분기에 갤럽에서 조사한 채널에 대한 선호 집단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진보라고 답하신 분들이 MBC 선호도가 특별히 높지요, 54%.

앞에 다시 보세요.

갤럽 표 보십시오.

다음에 MBC 같은 경우에 이게 특히 진보층에서 굉장히 결집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매우 좀 낮은 편이지요.

그다음에 보실까요.

MBC는 주로 성향이 진보층이고 TV조선은 보수층이 과반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시청자가 좀 집중돼 있는 언론이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TV조선이야 종편이니까, 물론 종편도 채널에서 10번대의 유선 채널이지만 그 배치를 해 준 또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방송 면허 대상이고 매번 심의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상파랑은 그 대우가 다릅니다. 지상파는 굉장한 큰 특혜를 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의 FCC라든가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BBC, 또 선진국의 공정방송·공영방송의 사례를 보듯이 이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굉장히 공정한 보도 균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상파 방송이 특정 진영의 어떤 아성이 되고 또 특정 진영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서 아주 위태로운 일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도 나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갤럽조사에서 이 표를 2011년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에서 한국인이 즐겨 보는 주요 뉴스 채널을 좍 10년 동안 해 봤더니 한동안 막……

보십시오. 우리 방송사들이 예전에 조금 그래도 덜 이렇게 편파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소셜미디어가 조금 덜 창달되었겠지요, 2013년 같은 경우는. 그때 지상파들 웬만하면 몇십 프로씩 됐어요, 시청률이. 그래서 광고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지상파에 광고를 하나 따려고 하면 정말 무슨 다른 줄을 대야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부 뭐 10%대, 마지막 때 보면 저런데 그나마 지금 KBS가 조금 높고 전부 10%,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전반적인 미디어의 변화 탓이기도 하지만 결국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앞서 요약에서 나왔던 한국은 약 50개국의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언론의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였다고 하는 그 결론, 또 그것 때문에 주요 뉴스 채널의 시청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피해를 언론 본인도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다음 보실까요.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이게 2013년 1분기만 하더라도 지상파가 전체 텔레비전에서 시청률 차지하는 게 69%, 70% 압도적이었지요. 그때 막 종편이 생기기 시작한 뒤인데 종편은 6%, 보도채널—그것은 당시에 YTN이었지요—12%. 이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2024년 2분기는 조금 높아진 편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편인데 저렇게 추락했지요. 70%에서 40%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소셜미디어만 계속 가겠지만 저는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창궐해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고 그것이 탈진실의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알고리즘으로만 뉴스를 보게 되는 시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그 공정성의, 공영·공정성의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요지고.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마지막.

이 부분은 갤럽 조사가, 아까 MBC가 이렇게 1등 나오고 했다는 그 조사를 10년 동안 쫙 추적한 겁니다. 저기서 보시다시피 텔레비전, 특히 지상파 3사의 비중이 지금 10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공영방송을 좀 더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통합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창의성을 주고 하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BBC의 공적 책무를 정하면서 왕실칙허장 제6조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원칙,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 BBC가 불편부당성을 위해서 열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제가 전반부에 조금 쭉 봤습니다만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늘 내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거기서는 현재 2인 체제여서 막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5인 합의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개의를 4인이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자 이게 방송통신위 관련 오늘 상정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을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청문회 중인 방통위원장을 함께, 방통위원장 청문과 함께 또는 검증과 함께 민주당에서도……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명 그다음에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의회의 입김이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거의 대통령이 상원과 해서 결정하는 편인데.

하면, 지금 이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해결됩니다, 이 법안을 안 거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해결하자. 해결해서……

지금 이게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MBC, 방문진 그리고 KBS 이사회의 수를 늘려서 그리고 거기에 방송종사자를 대거 넣어서 경영의 지배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영국, 독일 어느 사례도 없습니다.

제일 유사한 사례를 독일 사례로 꼽았는데 독일은 방송종사자를 가지고 KBS 이사회를 25명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숫자만 보고 독일식이라 그랬는데 독일식은 삼사십 명 됩

니다. 그런데 독일은 연방제기 때문에 주지사 또 독일 전체의 노총, 독일 전체의 경영자 총연합, 독일의 가톨릭 교계 이렇게 해서 독일 국민들을 전부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송법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방송종사자들 혹은 시청자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그 사장을 뽑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감시하게 하자, 보도를 감시하게 하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따져 물었듯이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을 왜 5년, 4년씩 묵혀 두었을까.

민주당도 집권당 시절에는 이 법이 위헌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송은 어쨌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 특히 지상파·전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가 방송에 대한 일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이런 기조 또 공영방송에 대한 일정한 거버넌스의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 공영방송 시스템이나 영국 공영방송이나 독일의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사들의 시스템을 보면 정말로 기계적 균형이라고 할 만큼 철저한 보도 균형,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equal opportunity, equal time)’이라고 하는 철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아하고도 그리고 무려 열여섯 가지나 되는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래서 오보의 낭떠러지로부터 보호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라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론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반론을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라고 그냥 쉽게 하는데 그게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요. 합당한 균형을 해 줘야지요.

권태선 이사장은 그러면 언론, 최소한 기계적 균형은 맞지 않다, 최형두 의원이 과방위에 불러서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던데 그것은 맞지 않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 않고, 최소한 국민 여론에 맞는 수준의, 여론에 맞는 수준의 방송 보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좀 높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리고 과거 대통령선거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잘하시는데 제가 자책감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후보 때는 팽팽했습니다.

(「최형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나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그때는 그 공영방송이 그렇게 일방적인 방송을 했습니까? 더구나 녹취록을 풀 텍스트로 보지 않아서 그것이 허위 조작됐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세 꼭지를 해서 단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허위 조작 뉴스에 편파의 날개를 달아서 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제아무리 어떤 방송……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이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그 지배구조가 우리와 달리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배구조 우리 전부 그 나라들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5명인 것도 미국 FCC 구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BBC도 다 비슷합니다. KBS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지배구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송의 공영성·공정성을 지키는 윤리, 보도준칙,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 FCC는 그것을 어길 경우에 방송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BBC의 경우에 공적 책무라 그래서 왕실 로열 차터(Royal Charter) 6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 다양한 지역성, 영국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게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오늘 내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이 방통위 설치법은 그렇게 복잡하게 입법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서, 야당 몫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이랑 함께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되고.

이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그분이 국회를 사실 통과했는데 아마도 무슨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면서 다음 자리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5인 체제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훌륭한 방송통신위원후보를 추천하셔 가지고 우리 당에다가, 우리 당도 2명을 빨리해서 5인 체제를 만듭시다. 그것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 법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2인 체제라는 게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재판 가도 2인 체제를 이유로 한 탄핵은, 그것은 그냥 각하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탄핵재판을 제출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이 아닌 부분을, 뻔히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발언권 얻고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부의장 이학영 다시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의원 예.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에 김상희 부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원래 지금 귀당이 제안한 법의 법 처리를 늦추기 위해서 무슨 소리든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 떠들게 해 주는 것도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점잖게 논거를 제시해 가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민주당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21대 국회 필리버스터의, 이거 참 우스운 제도인데 필리버스터는 원래 무제한토론이면 그걸 저지하겠다는 사람이 무제한토론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도 잘라먹어요, 또. 그래서 자기들도 반대토론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협치가 또 특별하니만큼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24시간으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가 부족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진하는 법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저 당은 왜 저렇게 저걸 반대하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의힘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는 방송은 서로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지배구조를 악용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법안들 낸 것들 이것 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BBC 그다음에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얘기하는 독일식이라는 것이 숫자만 비슷하지 그 언론 종사자의 PD연합회, 기자연합회 또 무슨 기술연합회 또 시청자연합회 이렇게 방송종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노조와 관계 있는 다양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방송종사자라고 했지만 특정 방송종사자만 들어가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위헌적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법을 여당 때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방송을 장악하기 편리해서가 아니고 방송은 정부의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이 또 정부에 있고, 또 하나는 방송종사자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성우조합, 배우조합, 작가조합 뭐 이런 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방송종사자들 사이에서 차별합니까?

독일을 이야기하길래 독일의 사례를 봤더니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열몇 개의 주지사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한 이삼십 명이 되는 겁니다. 방송종사자가 들어가서 25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계, 가톨릭에서 1명 또 칼뱅교에서 1명 또 독일노총에서 1명, 독일 경총에서 1명 이렇게 해서 방송에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보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의장이 제안했듯이 정말 이 문제는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4대 4, 8 대 8 정도로 해서 무제한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쪽에서는 이 방송이 MBC 경영진이 저리 넘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피바람 나고 뭐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방송의 논조가 확 바뀌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을 없애 주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방송도 공정해지고 또 방송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래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 최하위국이 아니라 좀 높여지고 그래서 우리 지상파 방송들이 그나마 열악한 조건이지만 다시 신뢰를 얻어서 시청률을 되찾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나 또는 오늘 참고인·증인으로 나와 있는 많은 분들, 여기 김장겸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 MBC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경쟁률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청률이 20% 30% 치솟고, 광고를 못 해서 참 어떻게 방송사에 아는 사람 통해서 방송을 넣고자 했던, 광고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AC닐슨 조사 보면 시청률이 5% 6%입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 스스로 특정 진영의 보루거나 특정 진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의 비극입니다. 한쪽에서 좋아하면 다른 쪽이 싫어하고 그러면 그 방송사도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논란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 궁금하시고, 이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정말 준비한 이야기가 많은데 또 하나는, 아까 그걸 좀 해 보실래요? 아까 강준만 교수 것 한번 보여 주실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또 다른 위협이 방송사 내부에서의 심각한 도전…… 그러니까 지금 방송법을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의 의견의 힘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 누구로부터,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 의석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까, 좀 과대대표되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의 경영과 방송의 인사와 방송의 보도 태도를 좌우할지 모른다는, 지금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오늘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법안들은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온몸을 다해서 막고 싶습니다. 이것이 훗날 민주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3년 전, 2021년이 3년 전이지요. 2021년 7월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당시에 민주당에서 붙인 이름은 가짜뉴스 방지법이었습니다. 기억 못 하실 텐데 저는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저는 당시에, 제가 물론 언론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때 문체위 소속이 돼 가지고, 이 법안이 문체위 소속이어서 제가 그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과 토론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이 법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는 걸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가짜뉴스는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 더 이상 유포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엄벌에 처해야지요, 엄벌에. 일종의 당위명제 같은 겁니다, 항진명제. 가짜뉴스는 방지되어야 된다. 여론조사 95%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여기는……

아까 말한 미디어 리터러시, 그것 못 보신 분 있을 텐데 나중에 또 한번 더 시간이 지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 우리가 보도하거나 누군가 강조하는 것은 전체의 파편일 수가 있다, 다른 측면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기자로서 닦은 그 균형감각 때문에 한번 진짜로 언론중재 사건 한 해에 발생하는 수천 건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그중에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 장관—자기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또는 기업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짜뉴스 방지법은 보통, 왜 그게 언론중재법으로 됐냐 그러면 언론중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 또 정정보도, 사과 이런 걸 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도 합의제 기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불충분하다 또 언론중재가 충분히 구제를 못 해 주고……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이비 언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허위 조작 뉴스 때문에 피해 본 사

람 많습니다.

제가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도 '최 의원님 미쳤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론들 가짜뉴스 그것은 확실히 막아야 된다고, 그것 한번 네가 당해 봐라, 그것 얼마나 괴로운지. 공천 때마다 그 가짜뉴스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데 죽을 맛이다, 그런 이들은 패가망신을 시켜야 된다, 그런 기업은 정말로 문 닫게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우리 당에서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최형두는 돌았나 이렇게 저한테…… 실제로 민주당의 당 지도부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왜 국민의 95%가 찬성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법 앞에, 그 설문에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95%가 찬성한다는 말 못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90%의 찬성 여론이라고 믿고서 밀어붙였던 법이 결국 8월 말, 3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민주당 의원들은 득달같이 일어서고 강경하게 또 밖에서는 막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밤 10시인가 8시인가 여기를 올라가면서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위에서 2개월 동안 토론하면서 더 이상 이 법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이 공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엔에서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유엔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법이다.

그리고 징벌적 손배소라고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를 5배까지 하는 입법을 한 선진 문명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로 하니까, 판례 국가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민주당이 휩쓸었던 그 열풍 속에는 그게 세계 보편의 법인 양 이렇게 둔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 토론에서 그랬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미국 뉴욕,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주법에서는 심지어 이런 법을…… 연방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미국은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징벌적 손배소 5배 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법에서도 그런 법은 금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고 밀어붙여서 국제 여론이 더 들끓고 해 가지고 결국 8월 31일 날 표결을 못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청와대에서 이철희 수석이 급한 지침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유엔에서 항의서한이 들어왔다. 표결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퇴로가 없어서 그 당시에 여야 동수로, 여야 의원 2명, 저희는 저하고 전주혜 의원이 들어갔고 또 민주당에는 존경하는 의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당에서 추천한 법학전문가 또 언론학자 각각 해서 8명이 추석 때 집에도 못 가고 정말로 매일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남겨 두지 못한 게 참 천추의 한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속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참 아쉬운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9월 말에 결국에는 안 하기로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도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방지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성과로…… 이번에 이것 끝나고 나면 아마 문체위에서 또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맞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 4법이 왜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는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여당에 유리하게 되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래서 내가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분에서, 방송 4법 논의는 중단하고 4 대 4 내지 8 대 8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 지배구조를 쭉 비교해서 살펴보고 또 그중에서 정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데 언론 지배구조,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배구조를 둘러싸고서 언론노조가 크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론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느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의 저의 무제한토론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요지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라는 특징 때문에 표 쏠림,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수는 엄청난 격차로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선거제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수 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 같은 전통은 무너졌고 이건 다시 되찾기를, 우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찾아야 되고 그런 협치의 전통과 원칙은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다수당이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실린 법에서는, 이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방송사 내에서 아주 조직된,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방송의 지배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통위원도 야당 몫, 여당 몫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국민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방송사 종사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을 뽑는 데 결정,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이 다시 보도간부를 뽑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사장과 그 경영진 몇 사람의 취향과 관심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 중의 하나, 방송사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지금 임기가 다 돼서 그걸 바꿀 시점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지금 막으려고 방통위원장 탄핵도 하고 또 오늘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임기를 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방문진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사 분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당 추천 몫 새로운 사람, 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면 될 일을 그냥 지금 하는 사람들이 죽 가게 하자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한

정파가 또는 한 조직이 보도의 편성을 모두 차지해서 선거를 앞두고 또 일상적인 정책 쟁점에서 편향적으로 보도해서 누구에게 유불리하게 한다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그것이,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공영방송에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페어니스 독트린 다음에 임파셜리티 다음에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 보도준칙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저는 차라리 그런 것을 입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서구 문명을 보면 서구 문명에서 어떤 나라가 자본주의가 융성했냐 따졌더니 그것이 반드시 무슨 법이라기보다는 문화였고 때로는 윤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기자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확증편향에 빠져서 정치적 편견에 가득찬 보도로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주장 뉴스를 더 큰 날개를 달아 주느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인사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MBC의 전현직 경영진 또 전현직 노조 간부가 와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기자 할 때 같은 기자실에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후배도 있고, 지금 대부분 후배지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편이 갈려 가지고 저렇게 그냥 내전처럼 한쪽은 다른 한쪽을 상대로 저렇게 야만적인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가할까……

그중의 한 사람이 오정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 이분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

지금 MBC에는 노조가 하나 더, 제3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주류 노조 1노조가 절대적 노조고요, 지금 권력화된 노조고. 독립노조로 제3노조가 있습니다. 이 1노조에서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던 사람이 만든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새로운 경영진이 또 핍박하고 핍박해 가지고 쪼그려져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정말 절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 전 경영진들이, 우리가 이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왜 이렇게, 이 지배구조를 노조의 손에 맡겼으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내가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KBS고 MBC고 사장 바뀌고 정권 바뀌면 엄청난 피바람이 나고 숙청이 나고……

특파원하고 가족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파원 가족이 가 있으면 그것 한 3년은 보통 갑니다. 그래야 애들 교육도 하고 집도 얻고 또 자녀들도 적응하고 할 텐데 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사장 바뀌고 정권 바뀌었다고 소환. 그 특파원 발령할 때 기준이 없었습니까? 다 있기야 했었겠지요.

그리고 갑자기 보도국에서 사회부에서 잘하던 기자가 중계차로 쫓겨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집단한테 방송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맡기면 큰일 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통신위 조직법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방송 4법, 3법, 다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정하는 그 규정에 방송종사자의 이름으로 방송사 내에서 권력화된 집단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는 그나마 위임받은 사람들이어서 그 대의정치를 통해서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위임받지 않은 사적 권력에게 공영방송이라는 아주 공적인 가치와 공적인 자산을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의 간절한 호소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이것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를 표시한 사건입니다. 이 문건은 2017년 대선 승리 이후에 당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배포됐던 문건입니다.

총 9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은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 기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BC의 끔찍한 편파보도와 비교할 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업 전 분위기 조성과 조직 점검을 아마 노렸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문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 빈둥거리며 일하는 기자들에게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의 길을 가로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하여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기에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기막힌 사태도 있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보다는 앞서 나왔는데 MBC 뉴스의 간판 앵커였습니다, 9시 뉴스데스크의. 그런데 오후 4시 뉴스데스크 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장실에 앉아서 분장을 하면 이른바 마녀, 마귀를 쫓겠다며 퇴마 의식을 한다며 노조원들이 분장실로 몰려온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며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고 꽹과리를 치고 혼을 뺍니다. 이런 식의 야만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 부장의 길을 가로막고……

참 저도 고백할 일,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산하 언노련 감사도 해 봤습니다. 그때 언노련 위원장이 최문순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문사 기

자였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신문사에서 우연치 않게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라는 것이 사내 권력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주인이 없는 회사, 공영이라는 데서는 노조가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공백이 생기면, 권력이 쏠리면 온통 쏠립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당시 경영진이랑 큰 분쟁이 있어서…… 우리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사들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조 파업하면 다른 뉴스 보내 주고 영화 보내 주고 클래식 음악 틀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신문은 파업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지국에서 난리가 나고 독자가 신문을 끊고 하면 이 신문은 민영 회사, 민영 언론사가 자기 돈으로 막 비싼 종이를 사서 임금을 주고 비싼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뿌리고 해야 간신히 수지를 맞추는데 하루라도 파업을 하면 신문이 끝납니다. 그런데도 파업을 하자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게 참 분노는……

그리고 우리 경영진에게 제가 설득을 했지만 경영진 고집도 또 대단해서 도저히 타협도 안 되는데 파업을 하자는 주장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면 파업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자마자 바로 판매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국장들이 몰려왔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거의 뭐 점거할 태세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조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더, 굉장히 경영진과의 갈등이 깊어져서 정말 여러 가지 최악의 야만적인 모습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노조원이 나빠서가 아니고 또 우리 경영진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태 또 사내에서의 권력의 집중과 대립, 그게 빚은 불가피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온순하던 우리 후배들도 파업을 주장하고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치 '남한산성'의 김상헌입니까, 용감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의원님이 전에 참 비유가 멋졌는데…… '상헌의 말은 아름다우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저 후배는 노조가 파업하면, 우리 신문 파업하면, 신문 안 나오면 신문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용감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 싶어서 제가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했더니…… 제가 단식을 17일 했습니다. 단식의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에……

단식을 제대로 하면, 17일 동안 단식하면, 특히 나이 50대 이상은 단식하면 위험합니다. 단식을 갑자기 하는데, 했더니 17일 동안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삼다수 물만 먹었습니다, 저는.

너무 빠져 가지고 단식 끝나고 한 3개월 뒤에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단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친이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 선친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유,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단식을 하면 사람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처절한 단식을 해서 제가 막아 냈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드디어 권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물러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노조를 둘러싸고서 이미 노조·비노조의 갈등도 심화되어 있고……

우리 선거 때 겪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경선할 때 그 갈등이라는 게, 골육상쟁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중에 두고 두고 뭐, 경쟁하는 후보들보다 더 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이 있어도 말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참 노조라는 것이

힘이 강해지면, 특히나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력이 되고 노조위원장이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쌍방에서, 그동안 노조 사태로 핍박받던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은 내가 새로운 권력이 돼서 자기를 보복할까 봐 겁을 내고 나를 견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노조위원장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2개월 정도 그냥 휴가 가는 걸로, 병가 가는 걸로 해서 모면을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 원래 주인이 이사가 아니었는데, 사주조합 회사였는데 다시 경영진이 오너십 경영 비슷한 걸 찾아서 굉장히 정상화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선량했던 우리 친구들조차도, 후배들조차도 노조라는 이런 하나의 큰 갈등에 휘말리면 얼마나 심각한 적대적인 감정에 휘말리는지, 그런 걸 경험했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했던 그 모욕과 그 공포, 여성 앵커가 화장을 하는데 분장실에 들어와서 징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소금을 뿌렸을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견뎌 내겠습니까, 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오정환 국장,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의 수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파업하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에게 길을 가로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 출신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서 재가입을 받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오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는커녕 길 안내를 자처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며 손을 흔들어 지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학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총장이었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한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12월 7일 최승호 신임 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그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짤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습니다. 해직의 고통을 내세우던 사람이니 설마 남을 해고하겠냐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

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은 김태래 제3노조, 제3노조란 것은 제1노조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래서 제1노조의 가입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축출 대상들이지요. 독립 노조입니다.

지금 전체 얼개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민주당도 거의 다 안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방송 지배구조는 우리가 유럽의 사례, 독일의 사례 이런 다양한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행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좀 더 국민의 뜻대로 바꾸자고 한다면 정말 8 대 8이든 12 대 12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안 가더라도 미국을 안 가더라도 그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토론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방송사 종사자라고 하는 특정집단에게 방송사 지배구조를 넘겨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를 둘러싼 야만적 폭력이 결국 그 방송사를 망치고 결국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거 당시에, 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자발적 수족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토론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에 관한 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즉각 존경할 만한 방송통신위원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 당도 한 분을 추천하면 지금 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4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되고 그중에 과반으로 의결한다, 그것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정부가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2인 체제의 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 몫, 야당 몫 두 분, 야당 추천 두 분, 여당 추천 한 분을, 그러니까 야당 추천 두 분만 안 해 주시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여당 추천도 아예 그냥 상정을 안 시켜 주니 3인 체제, 4인 체제, 5인 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금방 해결합시다. 바로 5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런 4인 의결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최소한 4인 이상이 나와서 과반으로 하는 의결구조로 만들면 되는데, 그건 입법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방송종사자회라는 이름으로 PD연합회 또 무슨 무슨 기자연합회 또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그런 공영방송에서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독일은 숫자가 아마 한 삼사십 명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독일은 18개 연방주의 주지사 또 종교지도자, 교계 다음에 주요한 직능단체 뭐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되는 것이지 모자를 바꿔 쓴 언노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방송종사자, 그것도 배우조합, 배우협회, 성우협회, 작가협회 이런 사람들은 낄 자리도 안 주는 그런 방송종사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종사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더구나 일부 자기들이 만든 독립 언론사면 모르겠으되—그거야 자기들 자유지요—그러나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지상파를 쓰는 방송이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참혹한 야만적 상황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해서야 될 짓도 아니고 또 우리 언론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일이고 또 우리 한 정당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일입니다.

‘저는 전 보도국 보직부장 김 아무개입니다. 최 아무개 사장은 2017년 12월 7일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조가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이 아니지요, 오픈 숍(open shop)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영진이 노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MBC, 지금 이 문제되는 최 모 사장과 이런 당시 경영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닷새 동안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전 경영진 편이다라고 이렇게 적으로 간주된 거지요.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 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냐는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 근무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계속할 경우 망막박리가 재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 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2020년 10월 12일 바꾼 취업규칙 제26조 때문입니다.

사측의 괴롭힘으로 각종 질병을 얻게 된 비언론노조원들의 병가를 통제하기 위한 취업규칙이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회사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력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상급병원 두 곳을 찾아가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

파의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사필귀정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파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준칙을 통해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정파를 위해서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다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FCC의 기준으로, BBC의 기준으로, 영국 왕실 준칙의 칙허의 기준으로, 16가지 기준으로 그걸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방송사에서 특정 권력들이, 특정 사람들이 권력화되어서 이 방송사를 좌지우지하고 또 정권조차 좌지우지하겠다는 무모하고도 야만적인 노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여성 국장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러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했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는 너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당시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게 현실입니까?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혔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았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되는 무렵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카메라기자 선배가 신생 부스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대기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기소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고 지금 이렇게 파업과 노조와 경영진의 악순환 그래서 권력이 바뀌면 어떤 노조가 실세가 되어서 비노조원 또 다른 노조원을 핍박하고 몰아내고 대기하고 인사발령도 없이 이제 내 자리니 나가라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방송 3법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와 함께 국민의 위임을 받고

같이 입법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했듯이 8 대 8이든 해서 한번 연구를 하되……

저희들이 오늘, 제가 오늘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 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가…… 이분들은 파업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파업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파업의 자유를 누려도 책임을 집니다. 방송은 파업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4개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상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상파 봐야 됩니다. 파업하면 그냥 영화 몇 편 보내 주고 또 뭐 그냥 클래식 음악 보내 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 그런 시민단체들이 나서면서 언론독립을 지지한다고 또 성명도 뿌려 주고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은 ‘지난 경영진이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통령선거를 앞둔 날 기막힌 뉴스가 잇따라 보도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는 그것이 허위 조작 뉴스였고 그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든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관계로 구속되는 일이 납니다. 그러나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 방송사의 이사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겠다,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 역사의 과정을 모르고서 ‘아,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방송사 장악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 4법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 정부일 때도 이대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당이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모든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의 공영방송 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그것이 국민의 재산이고, 공영방송 지상파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은 정부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그 이사를 임명을 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그 당시에 민주당 여당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바꾸자고 이야기 잘 안 했던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방송법을 두고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수당이 된 뒤로 갑자기 이 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바꾸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처럼 국민들에게 표를 받거나…… 국민들에게 어떤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사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권력화되어서 심지어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그 권력에 탐닉해서 대통령선거에도 개입하고 정당의 선거에도 개입하고 보도로, 허위 조작 뉴스로, 보도지침도 없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느 방송사에서 있었던 잔혹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도 또 경영진과 노조의 큰 파업이 있었고 그때 그 앞에 있는 노조 사람들은 그때 그 경영진과의 파업에서 또 해고가 됐습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 끊어서……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강준만 교수 책 좀 저거 해 주실래요, 우리 보좌진.

강준만 교수가 얼마 전에 책을 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전북대 교수로서, 언론학자로서 우리 사회 비평, 인물 비평에 굉장한 분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법 지배구조를 논의하더라도 이 방송사 내부의 권력을 둘러싼 이런 야만적인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인격을 아신다면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느냐, 그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엣것 볼까요, 다음 것.

제가 제일 가슴에 울렸던 말은……

이게 선악 이분법이 되고 사내에서 노조 권력을 둘러싼 것이 경영권을 좌우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과정 전에 파업을 하면서…… 원래 시작은, MBC가 시청률 30% 40%까지 올라갔던 그 위대한 시대에서 몰락하게 된 것은 김재철 사장의…… 제가 아는, 제가 언론계 시작을…… 장악한 뒤로 본 사건은 김재철 사장의 취임과 이를 저지하는 파업 농성으로 시작됐지요. 시작되었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악순환으로 되고 그게 점점 더 야만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역사를 이제 단절시켜야겠다. 더 이상…… 방송사가 무슨 정권 바뀌고 사장 바뀌면 무슨 내전을 치른 듯이 서로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흑역사가 되풀이되고, 뭐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사람을 내몰고 이런 사태는 정말 지성인의 집단인 언론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이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 아마 언론사의 내전과 같은, 상황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그 방송사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상파를 통해서, 공익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가 고양해야 될 어떤 가치, 문화 이걸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지상파가 우리 공익의 재산인 만큼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공영방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BBC, BBC의 보도준칙은 사실 의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국 왕실 칙허랍니다, 이게. 로열 차터입니다. BBC를 그때 만들어서…… 그때 왕실 칙허장, 로열 차터 6조가 이렇습니다,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의 제공, 모든 연령의 국민을 위한 학습 지원,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영국 전역의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 우리가 KBS, MBC, EBS에 바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 3법, 다른 3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 경영진을 뽑는 이사진에 이른바 방송사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일부 노조 권력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하면 지금 MBC에서 2017년 이후에 있었던 이런 잔혹사가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뉴스데스크 앵커가 겪은 사연입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 모 사장 체체가 시작되었던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놔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여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고 당시에 찾아보기 힘들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 왔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또다시 다른 점령군이 들어가서 야만적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강준만 교수의 글을 사실 내가 인용하지 않았는데, 너무 끔찍한 말이어서…… 괴물과 싸우겠다며 더 큰 괴물이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괴물과 싸우겠다며 더 큰 괴물이 되는 이 비극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때도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인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때는 여당이니까 당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하지 않아 놓고 지금은 야당이니까 바꾸자 그러냐, 그렇게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당시에 이런 법을 바꾸자고 제안도 안 했습니다. 왜? 공영방송은 지상파라는 국가재산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재산을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상파 재산이라는 것이 국가의 소유니까. 그래서 FCC라든가 BBC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의 공영방송에서 보면 정부가 많은 부분을 임명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머지 세 법에서 제기한 것처럼 방송사 종사자들, 일부 종사자들입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그것 누구겠습니까? 지금 MBC에서 보듯이 제1노조 권력입니다. 그 노조 권력 몰아내기 위해서 또 피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사태 우리가 막을 겁니다. 이것은 또 괴물을 잡겠다고 또 괴물을 키우고……

저는 이 사연을 읽어 주는 이유는 이분들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오늘 국회에서 제가 읽어 드리고 그 6년 동안의 눈물과 핏물과 같은 그런 수모와 모욕과 또 어려움을 제가 대한민국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그 분을 좀 푸시고 이제 원한 같은 걸 버리자, 우리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자, 누구도 공영방송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자, BBC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FCC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지금 방문진이 임기가 다 됐는데 그 임기를 무리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도 국민들이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빨리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저는 여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마치 3년 전에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그 극심한 열풍, 정말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국회가 4 대 4로 여야가 구성을 해서 9월 한 달 동안 토론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유엔의 비판까지 받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을 받는 그런 비극,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 총회장 앞에서 피켓시위에 맞닥뜨리지 않은 그런 다행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 방송 4법 중에 방통위 설치법은 바로 민주당 추천, 야당 추천 몫 두 분과 또 우리 당 추천 몫 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5인 체제를 발족시키자. 그러면 5인 체제 중에서, 5명이 다 나와서 회의하게 해야지요. 그러나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4인으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이 없어도 지금 현재 3명만 더 보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몇 차례 요청해 온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발단에서 약간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당사자의 사퇴로 금방 7개월 만에 후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그냥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3법의 경우는 KBS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MBC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EBS 이사진을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법안은 제가 아까—늦게 오신 분은 못 보셨겠지만—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이런 사례를 쭉 보아 왔듯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 선배들이 제헌국회 때 돈이 없어서 전차비 지원이 안 되느냐, 밥은 어떻게 먹느냐라고 걱정하면서 제헌 속기록에 놔 놓은 뒤로 우리 대한민국국회 선배·동료 의원들이 때때로 치열하게 싸우고 했지만 법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만들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민주당이 이 법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모르고 섣불리 윤석열 정부를 모든 것을 악마화하면서 방송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여기 갑자기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의 사람들, 또 다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이런 한 노조에서 잔혹한 야만적 폭력을 저지른 괴물집단화 돼 가는 이런 집단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것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또다시

허위 조작 뉴스로 판치게 하는 길이고 또다시 어떤 정당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결국 그 방송사의 시청률도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 비극 또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참혹한 잔혹사를 이번에는 더 크게 되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는 앞으로 정말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다음에, 참 특파원들 내가 갔을 때는 대충 영어도 할 줄 알고 국제부 기자도 거치고 해서 당연히 갑니다. 특파원은 보통 3년 근무를 해 줘야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적응도 하고 인맥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지요.

그런데 참 특파원들에 대해서도 비노조원이었다고 잔혹한 보복이 자행됩니다. 이분은, 전 런던 특파원이었던 분이 쓴 겁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사측의 조치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 통보, 특히 본인이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LA, 방콕 등은 지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의 지국 폐쇄 결정은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원죄가 있으니 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지국을 폐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 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보니 계약 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본사는 협상을 통해 잔여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잔여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했고 그 협상은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 기준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임대료 협상,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에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회사로 출근했더니 보도본부 부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 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최 모 사장이 만들었던 부역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보셨다는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장면보다 훨씬 잔혹한 방식으로, 악화된 방식으로 재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인가 하는 그것은 뒤에 '미디어오늘' 같은 데 나왔는데 일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위적으로 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가감 없는 진짜 생생한 뉴스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 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고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비슷

한 시기에는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급 재부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입니다.

40여 일 방치 끝에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한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임 특파원과 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 뉴스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때마침 진행된 명예퇴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함께 동기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급 강등, 부당 전보 같은 부조리한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부당 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 경기 지역 행정정보와 미담사례를 취재하는 건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됐고, 뉴스투데이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주말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자꾸 바뀐 관리자들도 할당된 아이템만 채워 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소심한 저항, 그것도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게 이제 거대 제1노조로부터 배척된 사람들로 구성된 소수 노조, 제3노조입니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언론노조를 견제하고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힘을 키우고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MBC 노조가 없었다면 특파원, 사원들이 그때보다 더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병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던 방송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입니다. 이 방송통신위 설치법의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MBC, KBS, EBS의 이사진의 구성 이게 이전 국회에서 그냥 대충 권력 장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외 사례를 죽 연구해 보니 BBC 또 미국의 공영방송 FCC 또 독일의 방송국 이렇게 보면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의 선배 국회의원들이 때때로 여기에서 격렬하게 몸싸움도 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도 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도 절대적 다수당이었던 지난 21대 국회, 더구나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이 법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당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에서 또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FCC, 정확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의 FCC랑 똑같은 체제입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회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숫자가 부족해서 혹시…… 가 봐야, 거수해 봐야 11 대 7이어서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수가 필요하면 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주당, 다음 하실 분 정해졌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의원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지금 과방위 방통위원장 청문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방통위,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그만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필리버스터 보시지 말고 방통위 생방송 보시다가 우리 과방위, '야, 이것 과방위 여당 간사가 뛰어가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빨리 가라' 그러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지루하지만 사실 눈물겨운 기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소수당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대의정치로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방송통신위 설치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입법도 필요 없이, 민주당 의원님이 냈던 법안에도 보면 방송통신위의 구조는 그대로 갑니다. 5명은 그대로 갑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를 만들 때, 앞선 선배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미국의 FCC를,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모델로 만들었고 그 구성 방식이 비슷해서 숫자도 5명입니다. 5명이고, 그 구성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에서도 대통령 2명,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가 2 대 3으로 나누고 국회 3명분에는 야당을 2명으로 하는 이런 구조로 해 놨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2인 체제로 자꾸 하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2인 체제가 당장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은 탄핵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냥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훌륭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해서 5인 방송위원회로 복귀하면 이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의 요건인 4인 이상의 방통위원으로 하고 과반의 의결로 한다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방법을 두고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인 체제라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의원님으로서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의결까지 했는데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 줘서 결국 사퇴하게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 취임에 따른 이해상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고, 결

국에는 당사자가 사임함으로써 민주당이 새롭게 추천할 수 있는 여력이 벌써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해서 야당 몫, 민주당 몫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도 요청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선 선배들,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또 20대 국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 유럽의 선진 사례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방송 지배구조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하기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송사 지배구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나머지 방송 3법을 보면 방송종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자라는 것인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 행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언론노조 같은 곳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바입니다. KBS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KBS 이사진을 늘리자. 거기에 방송종사자를 끼워 달라. 방송이니까 방송사의 주인이 방송종사자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MBC 역시도 지상파라는 국민 재산을 이용하면서 독점적인, 과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방송사 지배구조를 맡기자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방식을 바꾸자고 한다면 새로운 위임 방식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여야 동수로 한번 해 보자, 국회의장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송종사자들에게 맡겼더니 또 방송종사자들끼리 방송사 내에서 거대한 권력이 되어서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도, 허위 조작 뉴스에 날개를 달아 주는, 편승을 하는 그런 권력들이 방송사 내부에서 저지르는 이런 참혹한 폭력,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그분들의 실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방송사 내부에서도 이런 야만적 폭력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이 허위 조작 뉴스의 온상이 되고…… 우리 국민의 방송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공영방송의 목적이고 이것이 BBC가 영국 왕실 때부터 지켜 왔던 전통이고 이것이 미국 FCC가 강조하고 있는 페어니스 독트린입니다. 그것만 강조되면 더 이상 방송사에서 이런 잔혹사도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방송 지배구조를 방송종사자로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행의 제도를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좀 더 합당한 방식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지금처럼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의 여러 고깔을 쓴 언노련,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이 권력을 넘겨주면 정말

큰일 난다, 방송사에서도 내전보다 더 잔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뉴스는 더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절대로 특정 진영의 온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특정한 진영의 전초기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FCC,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어니스 독트린이 주장했던 바고 BBC가 영국 왕실로부터 받아서 만들었던 원칙이고 독일이 그런 연방의 방송통신 제도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했던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법을 제안하고 하셨지만 이 법이 그냥 다수결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공영방송을 크게 파괴시키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더 해치고 결국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고 결국 그 피해를 정치권도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우리 언론의 국제적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를 제가 9시 반, KBS 9시 뉴스가 끝나면 제가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더 왜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 방송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법은 결국 페어니스 독트린이다. 공정성, 공정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선진 문명국가의 공영방송 제도에 없는 지배구조를 담은 일부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의 경영진과 방송의 보도 간부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방송의 논조와 방송의 분량과 방송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면 지난 2020년 3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있었던, 그보다 훨씬 참혹한 허위 조작 뉴스가 지상파를 타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을 크게 분열시킬 것이고 또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국민을 더 절망에 빠뜨릴 것이고 우리 정치에 더 큰 신뢰의 추락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방송사 내부에서도 엄청난 폭력을 초래해서 정말 방송사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라고 이런 점을 제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정치부장이 쓴 수기입니다.

2017년 MBC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다가 최 모 사장이 오자마자 보직 해임됐던 이분 이름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우리 대표 이름이랑 똑같네요, 옛날에. 김기현 전 MBC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만든 사내기구가 바로 정상화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진술을 강요해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힘을 잃고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하니까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 언론노조가 만든 사내기구가 기자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사내 폭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못 하게 됐지만 그동안 사내의 홍위병 같은 조직 아니었겠습니까? 한동안 정말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펴낸 2017년 MBC 잔혹사 중에서 무소불위의 정상화위원회 편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상화위원회는 정치부를 제1 목표로 삼았던 듯합니다.

제게는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 리

포트는 어떻게 제작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조사는 결국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후보, 사실상 미래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견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러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MBC 토론회에 와서 MBC가 심하게 망가졌다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를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MBC 언론노조 민실위와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이른바 대선보도감시단을 구성해 일곱 차례나 모니터와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치부원 중 절반 이상은 언론노조 조합원이거나 비노조원이었습니다. 저와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은 이런 환경과 수많은 공격·감시 속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세운 명목은 뭐든지 결국 저의 전임 정치부장이기도 한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조사라는 것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물 한잔 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마지막이 아니고.

2017년 저와 함께 대선 현장을 지켰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지금 7년째 취재 부서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이상의 큰 선거가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한 후배가 사석에서 한 말을 전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우리 보도가 딱 봐도 100만 배 공정했네요.

진짜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2017년 MBC 대선 보도와 2022년 대선 보도를 한번 비교해 봐서 이분의 말이 진실인지를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기를 읽으니까 지루하지요. PPT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까부터 앉아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계셨습니까?

(「내가 다 참고 듣고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큰 영광을 느낍니다. 야당 의원님이 불편하셨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주셔서 제가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보신 의원님들이 많아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의 변화, 온라인 미디어의 창궐, 1인 미디어의 창궐 때문에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또 빅테크의 알고리즘은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를 골라 주고 선택적인 알고리즘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 각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보고서 균형 있게 사고하고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은 다른 면들도 의심해 보게 해서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이지요. 전면적 진실과 왜곡이라는 겁니다.

중간 사진이 전면적 진실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이라크군 포로를 잡았습니다. 오른쪽 군인은—왼쪽 군인이지요, 의석에서 보시면—혹시 이 포로가 갑자기 돌변할지 몰라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다른 쪽 미군은 이 미군에게 아마 사막이어서 굉장히 마실 물이 귀했을 텐데 그 물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끊어서 왼쪽을 꺾으면 잔인한 미군입니다. 오른쪽만 보면 휴머니즘이 넘치는 미군입니다. 진실은 사실은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까닭은 때때로 미디어는 그 선정성, 특히 선정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까지 띠면 더 위험해지지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입장제약성, 존재구속성 그게 또 지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미디어 보도에서도 잘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왼쪽 사진은 찰스 왕세자지요. 뭐지요, 이게? 욕입니다, 욕. 그래서 이쪽, 왕세자를 주로 비방하는 타블로이드 같은 데서는 '버릇없는 찰스,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욕질' 이게 제목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정면에서 봤더니 손가락을 3개를 펴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상한 아빠, 찰스'입니다. 찰스는 평민 부인을 맞아들였고 또 공군인가요, 공군으로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왕실로 부끄럽지 않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왕실 찬양 미디어에서 쓸 만한 사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일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많은 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확증편향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아주, 뭐랄까요 한편으로 치면 너무 열렬한 지지자들이 때때로는 우리 정치인들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믿는 지식에 왜 당신이 따라 주지 않냐고. 아마도 많은 문자를 받아 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모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가 없습

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한 진영의 보루가 되고 한 진영의 선전도구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 진영의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공동체 위기를 함께 논의하게 하고 또 정치적인 뉴스에서는 공평하게 보도해서 불편부당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 공영방송은 바로 그것은 국민 재산을 쓰기 때문에, 국민 재산을. 지상파는,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은 지금 딱 세 군데지요, KBS, MBC, EBS. 아, SBS가 있습니다. SBS는 민방이지요. 상당히 비싼 방송 사용료를 받으면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경영에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방송주파수 사용료 내야 될 테고. KBS, MBC, EBS 역시도 국가의 재산인 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시청률이 높습니다, 지상파는. 종편보다 높고 보도채널보다 높고 케이블TV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지상파가,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제가 무제한토론하는 모든 이유는 이 공영방송, 지상파 공영방송을 어떻게 공정한 방송으로, 그래서 한 진영의 신뢰를 받고 다른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는, 대척점이 아니라 양 진영에게 합리적인 의견을 모셔 갈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선거에서도 합리적인 정책을 내는 정당을 지지하게 하고 그 후보를 지지하게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공영방송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첫 번째 제가 무제한토론 반대토론 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 추천 두 분과 우리 당 추천 한 분 또 대통령 임명 두 사람, 다섯 사람으로 방통위를 정수 가동만 하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처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철저한 준칙으로 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지금 상당히 우리 방송의 신뢰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특정 진영의 보루가 되고 그 특정 진영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방송은 봐라 우리가 신뢰도 1위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편향성을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범이라 보이는 BBC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저 방송 3법 개정안 중에서 참고했다고 민노총 언론련이,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독일의 진짜 실사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갖고 있는 방통위에서의 규칙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서로 고민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공유하고 이것을 함께 극복할 지혜를 찾고 정치에서 저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편향된 정보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사는 치명적 오보라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대다수는 내각 장관,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지금 이 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방송종사자, 어떤 일부 방송종사자들이 사장을 뽑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에 볼까요. 보십시오.

모두, 지금 우리 KBS는 몇 명인가요? 아무튼 숫자도 지금 BBC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어떤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은 최소한으로 하고 한 20명 정도를 그냥 방송종사자한테 줘, 그것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트랩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우리가 잘못 쓰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큰 권력에게 공영방송이라는 국가재산을 잘못 넘겨주는 길입니다.

다음 볼까요.

오히려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KBS 구조랑 나중에 차이가 있다면 BBC에게 배울 게 있다면 조금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음 누를게요.

독일……

다음, 다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 방송노조에서, 언론노조에서 지금 새롭게 만든 민주당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송 3법은 독일식이다 이런 희한한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식이 왜 독일식이냐 하니까 저기는 지금…… 저런 독일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속하는 그 구조가 한 이삼십 명 됩니다. 한 40명인가 될 거예요.

독일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랑 다르지만 SBS 같은, 말하자면 서울에 SBS가 있고 부산에는 KNN이 있고 이런 식의, JBS가 있고 TJB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비슷한 지역방송연합이 있고, 물론 공영방송입니다. 우리 민영 시스템이랑은 다릅니다. 다음에 KBS, KBS창원, KBS부산 이렇게 되는 지역 단일 기관 채널이 있습니다.

도표 보실까요.

그래서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총 9개 방송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지역방송사는 주정부 대표와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언론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라는 게 전체 시청자가 아니고 어느어느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입니다. 그것 누가 어떻게 위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성향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보고 시청자위원회를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의 기구일 뿐입니다.

다음에 PD 대표, 기자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만일 방송종사자로 구성하려고 했으면 왜…… 작가조합, 배우조합, 성우조합 이런 사람들은 방송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벌써 평등권 침해입니다. 방송종사자면…… 방송종사자라도 다 넣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민노총 언론노조 사람들만 여러 고깔을 입혀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십 명이 있지만 주정부 대표, 우리 같으면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는 겁니다. 방송종사자들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게 KBS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면 총 16개 있는데 역시도 주정부 대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게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의회가 아니지만 주정부 대표도 그 주에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합당한 위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연방정부 대표 그리고 직능·사회 단체, 예컨대 독일 천주교연합, 독일 기독교연합 이런 대표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 해소도 중요하니까요.

다음에 독일 노조 총연합, 독일 경영자 총연합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 공영방송은 독일의 번영과 독일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봉사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원리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데 우리도 해 봤지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라면 위임받은 사람끼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8 대 8로 하든 4 대 4로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위임받지 않은 사람한테 몽땅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한테, 민주당 의원님과 저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소수당 의원님들한테 맡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독일처럼 한다는데요, 독일이 어째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발의된, 상정된 방송 지배구조랑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우리는 이사회 규모를 확대를 하는데 지금 KBS는 11명이고 현재 MBC, EBS는 9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명으로, 그러니까 독일식이라는 게 독일이 한 스물몇 명 돼요. 그래서 독일식이라는 모양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사추천 단체가 있습니다. 국회 5명, 국회는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미디어학회가 어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자문하고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이것 누가 위임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회에서 파견을 하는 건데 국회는 5명뿐이고 방송종사자가 16명, 3배 많습니다. 대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 합당한 권한과 합당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독일의 ZDF 보십시오. 여기에 주정부 16개, 왜냐하면 주정부가 16개니까 주정부 대표 16명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연방정부 대표도 들어가고 직능이렇게 되어야지요. 방송종사자라고 정체, 누구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합당하게 반영한다는 아무 기준도…… 그 사람들은 그냥 모니터하는 곳입니다. 그건 여론조사보다 더 나쁜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차라리 샘플링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누가 그 사람들 선출했습니까?

국회가 이사를 파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출받아서 그것을 위임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정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분야를 제일 잘 알겠다 싶은 사람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더러 국민의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당 편이다 보니까 보내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스스로 자제해야겠지요. 좀 더 자격 있는 사람들로 하려고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세상에,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가 지금 KBS 11명, MBC·EBS 9명인데 이걸 전부 21명으로 만들면서 국회는 5명으로 그 비중을, 30% 아닙니까? 30% 미만, 25%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고 나머지 75%, 70%를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이라고 함은 위임받은 정체가 불명한……

누구로부터 어떻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우리 국회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여야 정당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을 뽑아서 파견해서 위임하는 것이 국민의 위임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런데 직능 대표성 보면 이렇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각 2명씩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탤런트연합회, 성우연합회, 작가연합회. 방송 혼자 만듭니까? 왜 이 사람들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조차도 직종 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자체도 위헌적인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성우조합이나 배우조합이나 탤런트조합에서 위헌소송 내면 위헌입니다, 이것은. 차별, 대표성도 없고.

그래서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길래 제가 독일을 특별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부 대표, 정부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버넌스화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이건 넘어갑시다. 지역미디어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갑시다. 일본 언론 신뢰도 넘어가고.

일본도 공영방송 NHK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신뢰받는 기구입니다. 일본 NHK가 높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이 경영위원회도 주로 내각 장관이 추천해서 양원 동의를 얻은 뒤에 총리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 전파를 쓰는, 지상파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다, NHK도. 그러나 NHK 12인 경영위원회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영위원회. 아마 KBS가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하면 토론해 볼만하겠지요.

재계, 보십시오. 지금 NHK 경영위원회 구성 봅시다. 경제계, 학자, 법조인,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 PD연합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계, 왜냐하면 맞춤형 AI의 시대에 정말 새로운 방송의 주체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교양을 주고 공평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과학자도 들어와야겠지요, 다음에 또 경제를 키우는 경제단체가 들어와야겠지요, 또 문화계도 들어와야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계와 각계를 대표하는 지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이사추천단체,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이런 거랑 질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입법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앞선 21대 국회, 20대 국회 또 방통위법을 만든 국회의 선배들이 나름대로 다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이런 법을 제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글로

벌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국가가 국가의 공공재인 전파, 지상파를 국민 통합과 또 국가의 화합과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지식공동체를 키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특정 정파의 진영이 되고 특정 진영의 교두보가 되고 선전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옳소!)

그런데 언제 할 겁니까? 언제 속개합니까?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저희 10시에 속개합니다.)

제가 간사 사보임을 했으니까 안 가도 되지요?

(○최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지금 대단한 최민희 위원장한테 '옳소'를 들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방송 3법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창……

보십시오.

국회 5명, 방송·미디어 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임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국가, 국제 표준도 아니고 지금 NHK에서 보고 BBC에서 보듯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고를 하자.

만일 지금의 KBS, MBC, EBS의 이사회 규모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규모를 확대하되 누구를 대표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 보자. 그러나 그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직종 대표성 고려 단체,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합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의석수대로 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연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21명이면 14 대 7로 하면 됩니까?)

그런 걸 연구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중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개헌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우리도 방송 지배구조 이런 데서 벗어나서 AI 이런 것 좀 집중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요즘 언론한테 매일 비판받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는 AI가 실종되었다. 그래서 빨리 이 논의를 정례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 지배구조가 잘못되어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는 본질은 이겁니다. 어느 방송사가 상대 정당의 진영이 되어서 선거 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게 보니까 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었고, 왜냐하면 우리 방송 지배구조가 지금 독일이라든가 다음에 영국이라든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방통위원회는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는 왜 우리가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MBC 경영진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갖고 와야겠다. 새로운 임기가 끝났지만 그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겁을 내고 걱정하고. 이걸 끊어 버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 방법이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공정방송의 아버지라고 읽히는—진짜 아버지입니다—BBC 다음에 FCC 이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FCC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연방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방송의 선정성 또 방송이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길지 모른다는 걱정 이런 게 있어서 미국연방방송위원회는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FCC 위원장은 이런 중립성의 원칙인 방송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FCC의 정치보도 준칙입니다. 정치보도 준칙, 정치 프로그램, 정치와 관련된 뉴스 보도나 또는 무슨 교양 제작물이 되겠지요. 여기 보도준칙을 보면 제가 노란 줄 그어 놓은, 저게 하이라이트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퀄 오퍼튜니티입니다, 똑같은 기회. 때때로 이퀄 타임이라고 불린답니다. 다른 말로 이퀄 타임. 똑같은 기회를 줘라. 합당하게 나선 후보 또 합당하게 구성된 정당, 그에 걸맞은 정도의 방송 노출을 해 주라는 겁니다, 방송사라면 자기 편향에 맞게끔.

그리고 이퀄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똑같이 주라는 겁니다. 보도편성을 해 보면 방송보도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방통위원회 여기 5명, 우리처럼 똑같이 5명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이네요. 이번에 또 여성위원장이 좋은 여성위원장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도 여성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시카 로젠워셀입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5명, 우리나라처럼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5인 중 1명을 골라 임명한다.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왜 미국이 이런, 미국도 공영방송공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나친 산업화와 선정성이 미국 방송을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없으면 방송은 선정성, 막장 뭐 이런 걸로 그냥 시청률 높이는 데 급급할 겁니다. 그렇게 되

면 국민들은 도덕적 타락 또는 극단적인 분열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FCC 의장을 역임했던 뉴턴 N. 미노우라는 분이 생각을 해서 공영방송의 설립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민권 대장정을 낳았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당 대통령의 한 사람인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이 공영방송이 탄생을 합니다. 위대한 민권 진전의 시대, 그 때 미국 공영방송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

다음이요.

공영방송공사 이게 이제 8명입니다. 우리는 9명인데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미국공영방송공사 우리 KBS 구성과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사회 8명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장과 최고경영자는 내부 추천을 거쳐 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국회에 좀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상파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것은 합당하게 위임받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적 여론 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의회와 상의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앞선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에 있는 여러 선배들이 그에 맞춰서 합당하게 이 방송 4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21대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이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연 바꾼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시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청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바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이라든가 외국에 사례 없는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때때로 내부에서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BBC, BBC도 마찬가지입니다. BBC가 왜 오늘날 공영방송, 공정 보도의 이런 모델이 되었느냐? 여기에 상세하게 선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사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지 않는 거지요. 많이 어깁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듀 임파셜리티(due impartiality), 불편부당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불편부당하기 위한 16가지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후보에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에게 공정하게 하는 준칙이 또 상세하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는 우리 공영방송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이것을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그래야 권력이 바뀌고 하면 경영진이 바뀌고 편집 간부도 바뀌고 인사발령도 없이 자리를 강탈당하고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급거 귀국하게 되고. 방송기자, 훈련받은 취재기자가 맞지 않은 야외 근무를 강요당하고 모욕을 받고 이런 사태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BBC 선거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

다음 볼까요.

BBC 보도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의회 전에 입헌군주제 국가니까 왕실 칙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열 차터라고 해서. BBC의 설립 근거도 여기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제된, 여기서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 방송통신, 방송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공동체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공적 책무, 역시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 제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수업을 해 갖고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 그 분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최고 수준의 창의성과 고품질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의 다양성을, 그리고 영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이것 우리나라 KBS가 그대로 써도 될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편집 가이드라인이 매우 촘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집 가이드라인 안 지키지요. 어떻게 대선을 이틀 앞둔 날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프로그램을 4개씩 그냥 허위 조작 뉴스를 내리 보도를 합니까? 보도준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킵니다. ‘척 보니 100만 명이네’라는 그런 뛰어난 예지자를 지닌 사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장이 편집 간부를 임명하고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BBC의 방송 편집 윤리·가치·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 보십시오. 우리 방송사들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김대업 보도 당시를 보면요, 김대업의 말을 무슨 반박하거나 검증할 방법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업이 자기 테이프에 모든 게 다 담겼다는데? 그런데 결국 테이프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연도의 것이 드러남으로써 사기죄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리고 테이프 내용은 음질 분석이 불가능한 엉터리였습니다, 그게 이제 병역비리의 뭐라고 해 놓고도.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것 오보에, 이런 어떤 균형 잡히고 섬세한 정확한 접근은 방송사가 치명적 오보의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나친 확증편향을 가지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겨냥하거나 또는 그 후보를 띄우는 것을 할 경우에, 더구나 공영방송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BBC 편집 가이드라인은 불편부당성, 이게 듀 임파셜리티입니다. 다음에 적절한 비중, 이것도 이제

시간,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너티입니다, 적절한 시간.

그리고 이게 '저 놈 저게 누구 편드는구나'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쟁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선을 위하는 경우에서는 편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당도 조져야지요, 못 하면. 여당을 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요.

그래서 BBC에 보면 불편부당성 12개 하위 요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방송사를 둘러싸고서 한쪽에서는 '지금 경영진, 지금 이 사진을 절대로 그만두게 해서는 안 돼'라고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라고 겁을 내고. 이런 사태를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은 이사회 구조를 저렇게 왜곡……

지금 우리 이사회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바꾸어서 어느 방송종사자라는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사람들한테 통째로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5명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16명을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국회보다 3배가 훨씬 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아까 어느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면 여야가 방송위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야가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 왜 거기서는 다수당이라 하지 않고 여야로 했을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준칙을 엄밀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방송장악법이라 부르고 언론장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집착과 미련을 끌어내려면 불편부당하게 방송하도록,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쓰기 때문에.

이런 뉴스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언부언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인들이, 보도의 주요 간부들이 편성을 하면서 이 12개 하위 요소를 앞에 놔두고 다 외운다면, 읽는다면 적어도 미망해서, 그래서 결정적인 오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결정적인 오보냐. 결국 대선 때 이틀 전에 그렇게 확신을 갖고서 세 꼭지, 네 꼭지나 머리뉴스부터 보도했던 기사가 허위 조작 뉴스에 놀아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 방송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대선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껏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김만배·신학림은 허위 조작 뉴스였지요?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을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대장동은 허위 조작 뉴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도 우리 공영방송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정확한 방송을 해 줬으면……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끝나고 우리 의원님이랑 만나서 나랑 밤새 한번 술 마시면서 토론합시다.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여당으로서 이것을 장악해야겠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산, 국민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관리할 선량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때도 2명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요?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때도 2명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의원님, 저랑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보니까 느끼는 게 '이런 오해 때문에 지금 한쪽은 좀 악마화하고 이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안태준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보여 줬듯이 약간 겁이 나서 총부리도 겨누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물을 나눠 줄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논의하시면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명색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당 몫, 야당 몫 또 이렇게 해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공동체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4개의 다른 법에서 보면 이것은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 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를…… 그 이사 수가 지금 KBS는 11명, MBC·EBS가 9명인데 이것을 모두 21명으로 늘리자. 또 21명 중에서 국회가, 우리가 합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국회가 파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간과해서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방송종사자가 16명입니다. 국회가 파견할 사람 5명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제안한 사람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내가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모델이냐, 영국에도 못 봤고 못 봤는데' 그랬더니 독일 모델이라고 그래서 독일 모델을 찾아봤더니 방송종사자로써 20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주지사, 다음에 종교계, 재계, 노동계 이렇게 대표성으로 해서 거의 그 사람들도 국민을 대표

할 만한, 각계 각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하더라. 그래서 숫자가 스물몇 명이라고 똑같은 스물몇 명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페어니스 독트린 이것 넘어갑시다. 페어니스 독트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페어니스 독트린 지금도 미국 FCC의 홈페이지에 가면 FCC 룰이 나옵니다,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이게 1949년인가요, 49년인가 제정된 겁니다. 사실 제정됐는데, 미국도 2차 대전을 끝내고—이게 한국전 직전입니다—미국이 서서히 2차 대전의 공포에서, 폐허에서 벗어나면서 새롭게 되어 갈 시점에 텔레비전도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런 시기에 방송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다음요.

그런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데 이 원칙을 레이건 행정부 때 조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 가 보시면 사실은 미국 언론이, 특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대부분 미국 사람들도 민주당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설을 냅니다. 이것은 오랜, 민영 언론사니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CNN 보면…… 그래서 뭡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신문사를 전부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기는데 문제는 그런 페어니스 독트린을 없앴더니 미국에서 우파 방송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꽤 유명한……

다음 볼까요.

숀 해니티, 러시 림보는 저도 특파원 할 때 많이 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우파의, 말하자면 ‘미국의 우파 김어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것은 김어준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서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뉴스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사회 갈등, 그래서 페어니스 독트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시요, 다음.

그런데 의회도 방기하고 이렇게 의회가 적당히 나눠 먹어서 생긴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방송협회가 있었는데 정부의 독점적 지배를 받아 오다가 1975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탈리아 국회가 방송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잘 봐야 되지요. 그랬더니 지금 공영방송 3개 채널이 정치적 야합에 따라서 유력 정당의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번은 기독민주당-우파, 2번은 사회당-좌파, 3번은 공화당-좌파.

아니, 그러니까 민영 방송사가 자기 돈으로 전파를 사서 또는 자기 돈으로 케이블로 방송을 해서 자기의 신념은 지키되 팩트 체크를 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건 뭐 언론의 자유이고 또 민영기업의 자유일 텐데 공영방송이 지금 완전히 각종 정당의 진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도 정당이 하나씩 차지하면 그나마 이탈리아 식이라도 될 텐데 이건 잘못하면 정당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읽어 드렸던 그 잔혹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송사의 특정 노조 권력이 이 방송을 장악해서 선거를 지배

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악용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라는 것 들어 보셨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참 치열한 이념적 갈등에 휘둘렸지 않습니까? 나치, 나치라는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낳았던 최악의 경우였지요. 나치가 이스라엘 유대인(Jewish)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도 얼마나 큰 폭력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독일 민주주의가 지금 의회협치주의로 가고 다당제로 가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송계에서도 말하자면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준하는 공정보도준칙을 만들자. 그것이 비록 BBC, FCC, 특히 BBC의 방송보도준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독일이 다시 전후에 이런 피폐를 겪고 일어났을 때는, 독일 내에도 지금도 선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76년에 독일 내 보수와 진보의 정치·교육·철학자들이 국민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서로 적대하지 않고 분열·갈등케 하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게 하는 원칙을 만드는 게 그게 보이텔스바흐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엉뚱한 제삼자,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끼어들어서 우리 선거와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폐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우리 공영방송에서 상당히 결여돼 있는 공정보도준칙을 BBC의 룰에 따라서, FCC의 룰에 따라서 확실히 지키도록 국회가 같이 감시하자. 그러면 어느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 우리가 또 한 차례 상당히 불리한 보도에 직면하겠네,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지겠네, 이런 유불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방송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이텔스바흐 원칙 같은 것 잘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니까 좀 길게 하려고 막 약간 관련 없는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균형이 중요하겠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생각할 때, 신문은 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오보 한번 내고 나면요 독자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송은 약간 습관적인 것도 있고 또 방송은 틀면 나오는 것이어서 파업을 해도 다음 또 틀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뭐 훨씬 영향력도 크고 굉장히…… 그래서 공영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김대업 사건, 두 번이나 우리 국민이 놀아났는데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쟁의 항상 제일 초점이 MBC가 됩니다. MBC가 되면 MBC를 우리가 부당하게 핍박한다, 국민의힘이 MBC를 부당하게 핍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MBC를 우리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MBC를 우리가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MBC는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데.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가깝지요. 그

건 뭐 절대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논쟁의 핵심은 우리 주장이 틀렸다, 국민의힘 주장이 틀렸다, MBC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이렇게 가장 신뢰받는 방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한규섭 교수입니다. 컬럼비아대학에서인가 공부를 하고 이분이 동아일보 칼럼에 쓴 건데 요즘 동아일보도 상당히 중립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칼럼도 보면 한글로 된 문건 중에서는 이게 비교적 제일 잘 정리해 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칼럼에 보면 MBC가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갤럽조사에서 실제로도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가장 신뢰도 높은 조사를 왜 문제 삼느냐라고 MBC 노조도 이야기하고 또 언노련도 이야기하고 또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주장의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을 절대로, 임기는 그냥 연장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갤럽조사를 나중에 표를, 원본을 보여 드릴게요. 보면 MBC는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선택했습니다. 54%입니다. 그런데 저 갤럽조사, 갤럽조사는 샘플링이 아마 3000명인가 2000명인가 그랬는데 그 조사 전체 응답자 중에는 진보·보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특별히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훨씬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한규섭 교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데 보수 쪽에 보는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MBC를 보는 사람들의 진보·보수 응답자의 격차가 한 40%가량 됩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격차가 커지면 집중성이 생겨서 신뢰도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절대적으로 많이 읽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청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시청률. AC닐슨의 닐슨시청률 조사를 보면 나옵니다. 시청률이 더 공정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걸 눈 버려 가면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 신뢰하지 않으면 그 뉴스 채널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문의 유가 부수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논조를 믿지 않는 신문을 돈 주고 사서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한 시장지표는 시청률과 유가 구독 부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갤럽에서 선호하는 샘플링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라는 것은, 그 샘플링이 특성상 보니까 저 교수의 분석이 어쨌든 한 진영이 집중돼 있는 곳이 선호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지상파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기 때문에, 뭐 그게 오차범위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1등, 2등으로 나눌 수 있는 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KBS도 50% 넘고 다 50% 넘는데 유독 그걸 가지고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다 이야기하는 것도 통계를 잘 모르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섬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이것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요즘 민노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돼 있습니다.

오로지 이 브랜드, 이 신문사, 이 방송사들이, 포함된 방송·신문사들만 조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 써 놨어요. 저 빨간 줄 친 것 보십시오, ‘It should not be treated as a list of the most or least trusted brands as it is not exhaustive’, 이그조스티브(exhaustive)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퍼펙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브랜드가 가장 신뢰받는다 또는 가장 적게 신뢰받는, 불신받는다라고 취급되어서는 슈드 낫(should not), 우리 성문종합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역시 하버드 출신답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웃음)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명한 기자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누구랑 연애했다고 마음대로 쓰는 그 언론입니다, 저 언론이. 그래서 일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 S자를 이야기하면 썩 그렇게, 부수도 한 200~300만, 보면 한 대여섯 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을 보십시오. A신문은 신뢰한다가 46%밖에 안 됩니다. S신문은 48%입니다. 믿겠습니까? 물론 오차범위 내니까 둘 다 어금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S신문이 훨씬 더 신뢰받는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모든 나라에도 이렇게 써 놨습니다. ‘It should not be treated’, 절대로 가장 신뢰받는 신문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MBC는 매번 가장 신뢰받는 언론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한번 한국어로도 이렇게, 오마이뉴스가 로이터저널리즘의 사람이랑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런 지표를 가장 신뢰받는다 이런 언론 지표로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매번 표시해 놨다. 왜 그렇게 그걸 자꾸 한국 내에서는 논란으로 삼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아까 방송이 한 진영이 되고 방송사 간부가, 노조 간부가 장악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편 쓰고 노조에 참여하는 사람 철저히 배제하고 심지어 비노조 앵커에게는—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례입니다만—방송 준비하는 분장실에 들어와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소금을 뿌리고 징을 치고 겁을 주고 그러는 신문, 그러던 것들 때문에 우리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그런 내부적인, 그런 폭력집단, 그런 야만적 폭력을 예사롭게 행사하는 사람이 권

력을 쥐고 있는, 권력을 쥐면서 언론의 논조와 대선 보도에도 개입하고 좌우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한 결과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챌린지는 언론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저게 지난 2023년인데 그때는 28%였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더 로우이스트(the lowest)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언론 신뢰가 가장 낮은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넷째 줄을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뉴스 미디어들이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점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 왜곡 방송이 공영방송에서 중요한 기류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저널리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 오래된 이야기지요. 이게 이회창 때 다 넘어가기도 했는데, 자발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 그것 어떻게 한 사람의 주장에, 더구나 사기꾼같이 생긴 저 사람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나라고 생각해도 이게 유력한 대선주자에 관한 검증보도라는 이런 어떤 명분 때문에, 또 그러면 검증보도해야지요. 명분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 절대 진실의 뜻이 담긴 테이프이자 유일무이한 원본이고 절대로 복제되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1980년대, 1990년대 병풍비리 사건 때 그 관계자와 직접 녹취한 테이프라고 들고 들어갔다가 그 테이프가 2000년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소니 테이프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 사기죄로 구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말이 전부 함정이 된 거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법조기자 때.

김대업 씨, 나는 김대업 씨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자들도 뭐 기사 한 줄 더 얻기도 하고 그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의인 분위기, 어느 특정 정당에서 저분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시대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 가지고 기자들도 기사도 좀 넣고 해야 되고 상당히 의인으로 대우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유일무이한 복제’…… 그게 텔레비전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스스로가 진술의 신뢰성이 무너졌고 알고 보니까 그 테이프는 아까 MBC, KBS에서도 나왔지만 판독이 불가능한 테이프였어요. 그런 걸로 사기 치다가 간단한 팩트 체크에 그냥 잡혀서 감옥 갔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BBC 보도준칙에서 공정 보도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 저는 저것이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해 봐야지요.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그만한 취재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연속방송 쭉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게 누가 봐도 역력합니다. 역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도 그런 방송기자로서는 유혹을 느낄 겁니다. '이야, 이것 엄청나네. 딱 떨어지네. 끝났네, 이것'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BBC의, 아까 이야기했던 페어니스 독트린과 그 룰에 따른다면 거리를 두고 똑같이 생각하고 반론보도를 대 주고 절대로 어느 편에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원칙만 따랐더라도 거리를 뒀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다음 볼까요?

MBC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녹취록, 이 녹취록이 삭제됐는데 이 녹취록을, 풀 녹취록을 못 봤다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증하려고 해봤는데 저 때,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냅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학림과 김만배가 나중에 돈거래까지 하면서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한 허위 조작 뉴스였는데 이 허위 조작 뉴스를 공영방송이 걸러 주지 못했습니다. 왜? 스스로가 그렇게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이 방송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쫓아내고 좌천시키고 핍박하고. 그래서 한동안 자기들이 이전의 노조 파업 당시에, 불법 파업 당시에 파업으로 해고당한 시절에 겪었던 고초가 있었지요. 그 고초의 천배, 만배로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라는 아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그 책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이런 공영방송의 냉혹한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런 큰 오보의 수렁에,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영방송일수록 공정성·공평성을 지킬 수 있는 엄밀한 준칙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할 때 꼭 필요한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이것을 일부 방송종사자들한테 우리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산, 국민의 공공재, 지상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맡기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수기를 통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지순 교수가 한번 뽑았습니다. 외국에도 노조가 있겠지요. 그런데 외국의 노조, 외국 공영방송사의 노조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BBC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BBC는 KBS 노조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MBC 노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권익, 자기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합니다.

BBC의 단체교섭, 박지순 교수가 책임 집필한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관한 논문 제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80페이지의 BBC의 단체교섭. BBC의 이른바 승인된 노동조합이 방송종사자, 그중에서도 저널리즘 분야의 기자, PD의 방송의 자유 및 독립성을 위하여 회사 측과 교섭하고

작성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이게 산별노조인데—BECTU의 규약에서 보았듯이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만 교섭권을 행사한다. 이 점은 BBC와 승인노조 간의 교섭을 위한 준비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섭 준비문서도 제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교섭 범위가 정해지고 교섭기구가 결정된다. 이 준비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섹션2 프린서플2.3에 의하면 편집권, 편성권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정책에 관한 이슈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BBC에서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섹션2의 프린서플2.4는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작, 송신, 인쇄 또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 또는 중점에 관한 경영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이란 개별 고용계약에서 정한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회사의 직원지침 그리고 BBC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노동조합에 한하여 철저히 고용계약상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사항에 국한하여 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의 독립성에 관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노조가 너무 많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관한 논문, 고려대학교 박지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입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또 써서, 182페이지에 보면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방송보도의 독립성은 방송종사자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독립성 사이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임무로 보고 있다.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 노동 문제로 접근한 사례도 없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 민주당이 21대 국회, 앞서 모든 국회에서 지켜 왔던 입법의, 방송법 내용,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한 만큼 이렇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하려고 했던 그 합당한 이유가 지속돼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내놓은 방송법 4법의 핵심은 현재 KBS 지배구조, 그러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이사 수를 확 늘립니다, KBS 11명이었는데 21명으로, MBC·EBS 9명인데 21명으로. 21명인데 여기서 국회가 보내는 사람은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런데 이게요……

자, 그러면 직종 대표성을 고려했다는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기자, 기술인, 엔지니어, PD 이게 진짜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좌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과도 철저히 배제되지요. 아까 BBC를 통해서 우리는 BBC가 공정방송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듀 임파셜리티를 강조하고 다음에 이퀄 타임, 이퀄 오퍼튜니티 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여섯 가지 준칙, 거리를 둬라, 균형을 둬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철저한 것에 덧붙여서 방송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BBC를 따라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BBC랑 완전히 거꾸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MBC 편파보도 사례를 말하면 말도 안 되고 참 이게…… 그래서 편파라고 한 것은 왜 편파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BBC라든가 또 FCC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건 MBC 보도준칙에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MBC 보도준칙도 BBC 보도준칙을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엄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정말 이건 제가 이틀째 사흘째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를 위해서 아껴야겠는데 그것 안 읽어도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아까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김장겸 사장 또 이런 분들이 당했던 고초 또 MBC의 많은 사람들이 당한 생생한 육성 이걸 들었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또 되풀이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더 큰 괴물이 되고 괴수가 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방송사 지배구조를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당했던 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엄청난 숙청과 배제 또 핍박, 야만적 폭력, 폭언을 행사했던 그 경영진들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곧…… 사법부, 재판을 빨리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대법관후보자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법원에서 중시해야 될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있는데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도 보면 결국에는 강준만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런데 그게 니체의 말입니까,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 그 공소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경영자, 이 피고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불법파업 관련해서 해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이래 가지고 죽 해고되어서 몇 년간 복직을 못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복직하자마자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가 요체입니다. 요체고 그 상세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MBC 노조는, MBC는…… 우리 노동법에 오픈 숍이 있고 유니온 숍이 있고 클로즈드 숍이 있지요. 그런데 유니온 숍은 그냥 입사하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게 유니온 숍 제도고 오픈 숍은 자기가 가입을 해서 가는 거고 또 클로즈드 숍은 조합원만이 취직하는 이게 클로즈드 숍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수 노조체제고 오픈 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MBC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김재철 파업 투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적이 됩니다, 그 노조로부터는. 그래 가지고 1노조가, 그게 1노조지요. 그래서 1노조가 되었고 1노조로부터 핍박당하고 거기에 방송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배신자, 부역자 이런 소리 들어 가면서 모멸당하고 가족들까지도 괴롭힘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유산도 당하고 암도 걸렸습니다. 이용마 기자, 참 저도 기자님 보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용마 기자도 큰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도 안 되고. 암에 걸린 사람이 1노조 아닌, 그 핍박 때문에 다른 쪽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죽을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유산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텐데 그 피고인들이 행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이 속한 1노조 사람들, 김재철 출근 저지 불법파업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때 김재철 출근 저지 불법파업 투쟁 때는 오늘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노조원이 돼 가지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변했냐 그러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 뒤로 다시 세계적인, 우리나라 언론에서 참 보기 힘든 특종 기자였습니다.

특히 중동전 때 아라파트, PLO 의장이었던 아라파트를 단독 인터뷰하고 다음에 카다피, 카다피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뭐 BBC라든가 CNN 같은 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당시에 MBC의 기자가 취재를 했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같이 봤는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취재력도 비상하고 해 가지고 보통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 접근하기 힘든 취재원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국제부 기자였고 한동안 MBC의 대표기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언론홍보본부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노조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홍보본부장이 되니까 경영진 아닙니까. 경영진이니까 노조의 파업에 더 이상 가담은 못 하고 노조의 과도한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고 또 MBC의 사외 대표자가 되니까 노조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래서 사무총장님께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그것 막을라고 MBC 노조 출신들이 와 가지고 청문회장 밖에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사당 안 바로 청문회장 밖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시위하고, 그런 야만적인 불법을, 명백한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왜 이진숙 후보자는, 한때 김재철 파업 투쟁 당시에는 노조원으로서 노보도 돌리고, 하여튼 정의로운 기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부가 되어서 MBC에서 MBC라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다음에 사측이 됐는데 그 사측이 된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선악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핍박하고 심지어 간부들도 핍박하고……

MBC의 대표적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중동전 특종 기자였고 그런 기자를 기자협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내가 한 증언을 들었는데 그 당시 기자협회총회에서 ‘그게 말이 돼? 우리 대표 기자를’ 그런데 노조가 주동이 된 기자협회가 제명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 MBC 첫 불법파업 때 해고됐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초를 겪었고 다음에 해고를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래서 다시 권력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서는 더 큰 보복과 인사 횡포를 합니다. 아까 그것이 수기에서 죽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인, 2017년 이후에 아까 MBC 노조 내부의 MBC 회사의 잔혹사, 잔혹사의 주범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들, 그 파업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1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했던 사람들을 부역자,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영화도 찍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인사 보복을 가하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 인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취재센터 내의 보직 부장 이상 간부와 취재기자는 모두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로만 인사발령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아까처럼 막 갑자기 경제부장 자리에 앉더니 '인사발령도 났는데 이제부터는 내 자리야' 하고 차지하는, 마치 홍위병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제3노조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에게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거나—일을 안 주는 거지요—형식적으로 취재센터 내의 사회부, 기상팀 등에 발령하고도 연합뉴스 검색, 날씨 단신 작성 등의 임무를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취재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취재센터 외의 부서, 특히 뉴스콘텐츠센터, 뉴스콘텐츠편집부 내지 뉴스데이터팀, MPS준비센터, 뉴스아카이브팀, 뉴스시스템팀 내지 뉴스영상관리팀, 뉴스데스크편집부, 생방송뉴스팀 등에 배치하여 영상 편집 업무나 뉴스 영상의 색인 작업,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중계차 연결 업무 등 기존에 취재기자가 아닌 카메라 기자나 파견직, 계약직, 중계 PD 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런 핍박과 배제와 모욕과 이런 결과 취재센터 소속 취재기자의 노조별 비율은 2017년 12월 1일 기준, 이건 뭐냐 하면 김장겸 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총 127명 중에 1노조원 66명,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때는 1노조원들도, 당시 김재철 파업 투쟁했던 사람들도 그냥 다 썼습니다, 그대로. 3노조원 24명, 1노조원에서 핍박받거나 배제됐던 사람들이지요. 비노조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집국, 보도국이.

그런데 점령군처럼, 최 모 사장 등이 점령한 뒤에 불과 한 달 뒤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106명 중에, 이 중에는 누가 있냐면, 2017년 12월 29일 귀임 명령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 소속이었던 해외 특파원 12명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106명인데 그중에 1노조원 102명, 싹쓸이한 거지요, 다. 그러니까 편집국, 보도국에는 1노조원만 있는 겁니다. 3노조원 2명, 비노조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1년 뒤, 완전히 점령해서 피의 숙청 작업과 보복과 이게 끝난 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111명 중—보도국 소속 취재기자입니다—1노조원 109명, 3노조원 1명, 비노조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31일 드디어 총 105명을 모두 1노조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위 기간 중 취재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들도 형식적으로만 취재센터로 발령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취재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세한 인사 배치표가 다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서 제1노조 소속 취재기자들에게만 취재센터 내 보직 부장으로 임명하거나 취재 업무를 부여하는 인사상 특혜를 주고 제3노조 소속과 비노조원 취재기자는 취재 업무가 아닌 업무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노조가 보도국을 점령하고 MBC를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보도국뿐 아닙니다. 2017년 7월경에 904명이던 제1노조원 수는 2018년 12월경 1240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비보도국 다 포함한 것이지요. 반면 2017년 7월경 100명이던 제3노조원 수가 2019년 4월 말에는 30명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2017년 파업 당시 제3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제3노조 소

속 근로자 박 모 씨 등 30명에게는 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31번 기재와 같은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MBC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준엄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한 회사의 내부 이야기를 또 공소장까지 이야기해서 재판 상황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대로 21명으로 전부 늘립니다, MBC, KBS, EBS의 이사진 수를.

그런데 국회에서 파견한,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임명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16명을 전부 방송종사자로 한다는 그 모순된,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방송종사자 중에 절대권력이 이 1노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방송지배구조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권력의 고깔을 준다면 절대반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이 법하고 나머지 3개 법, 이 3개 입법의 핵심이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 법에. 국회 5명, 국민의 위임을 받은 180석 가까운 민주당과 108석인 국민의힘이 합쳐서 5명이랍니다, 21명 중에. 그리고 방송·미디어학회는 국회 전체보다 많은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는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그래서 국회 5명, 방송종사자 16명.

아니, 국민의 공영방송이 방송종사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정치인들이 뭐한다고 이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해서 우리 선배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해외 사례를 모아서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그 책임과 또 권한에 맞게끔 이렇게 해 놓았던 설계를 우리가 잠시 잊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주장에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의,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방송·미디어학회는 누구냐?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특정 성별로 2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EBS는 이것 따르게 돼 있고 시청자위원회 4명 그리고 남녀 2명씩, 직종 대표성 고려 단체 6명 이게 제일 많은 것 중 하나지요.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PD연합회 각각 2명,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방송종사자가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방송종사자들끼리라도 고르게 나누어야지, 배우조합은 왜 없습니까? 성우조합은 없습니까? 작가조합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방송종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의심은 이렇게 방송 직종 대표성에는

결국에는 이건 언론노조 출신들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것도 누가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선정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자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AC닐슨 조사 같은, 시청률 조사 같은 걸 해서, 6만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시청 시간대를 분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는데 이 시청자위원회는 주로 언어 문제가 너무 막장이었다, 너무 언어 수위가 안 좋았다 이런 걸 하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건 방송사가 참고하는 정도이지 그분들이 방송사 이사진을 정하고 방송사 이사진이 되어서 방송사의 경영에 간섭하고 방송사의 경영을 좌우하고 방송사의 주요 사장과 보도 간부를 임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망했던지 이분들도, 민노총 방송노조 쪽도 독일식 모델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모습 보여드렸지만 독일도 한 스물몇 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별 대표, 즉 주지사 같은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대표와 다음에 뭐 노총·경총 그다음에 종교계 대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방송종사자, 그런 분들은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계종 같으면 조계종의 대표성이 있는 거고 천주교는 천주교의 대표성이 있고 다 그 전체 대표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경총은 경총의 대표성이 있고 노총은 노총의 대표……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고 합당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의 구조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방통위 선정, 방송·미디어학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국회가 토론을 할 때 참……

방송·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언론중재법, 3년 전에 제가 민주당과 협상할 때 우리 당 2명, 민주당 2명 했을 때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각각 방송법을 전문하는 전문가 학자와 또 방송 관련 소송하는 법조인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지 이분들에게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줘서 6명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게 합당하게 부여한 권능과 책임을 우리가 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BBC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노조로부터의 독립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송 내부에서는 특히 공영방송은, 모든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방송은 노조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언론사에 있을 때. 그건 뭐 신문사였습니다. 신문사고 지금도 굉장히 건실한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라는 것이 참 그 기제가, 그리고 노조가 권력이 될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상당히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인 없는 회사들은 노조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 어느 한 기구에서 노조 할 때 거기서 맺어진 그 인맥이, 이제 제1노조의 인맥이 출세의 사다리가 되듯이 그 노조 하면서 맺어진 인맥이 그 방송사의 보도 간부 그리고 주요 기술직 간부의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적절한 통제와 또 감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에서는 그 점을 매우 엄격하게 생각을 해

야 합니다.

(「최형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청문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힘드신데 그만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무제한 순번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제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에 반대하고 그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방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화내시면 안 됩니다.

(「화내는 것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힘드실까 봐……」 하는 의원 있음)

재미가 없어요? 다시……

(「한 다섯 번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반복해서」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잘 살펴보시면 합당한 권한 위임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좀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1대 국회에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았고 이런 법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여당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다 이유가 있고 그것 내가 쭉 지금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유럽과 미국과 일본 이런 데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상파라고 하는 국가적인 공공재를 쓰고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것은 그 국가의 책임, 정부의 관리 책임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내각이 그 주요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임명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우리도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책임이 특별히 많습니다. 다수당이 아니라 여당이라는 것에 책임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의 비율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고 한데 이제 그리 되면 우리가 여러 많은 논의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논의 차원에서 좀 길게 여야 동수로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읽어 드렸던 방송사에서 이루어진 그 잔인한, 내전보다 더 심각한 그런 야만, 야만의 시대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MBC의 전 경영진들, 불법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파업에 가담했던 조합원들이 파업 때 그걸로 해서 철저히 보도국 취재 요직을 독점하고 이런 방식의 것들은, 노조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또 야만적인 언어 폭력과 그런 걸 행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유혹이 생기게 되냐 하면 방송의 보도 편성의 시간, 9시 뉴스의 머리 뉴스는

뭐로 할 것이냐, 그리고 9시 뉴스의 매 꼭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권력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권력은 이런 보도 편성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 편성에 따라서 힘이 나옵니다.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지도부,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고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한테 칼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의정치를 실현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국민들에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중대해질 정도로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허위 조작 뉴스에 속지 않고 국민들이 분열의 선동에 속지 않고 정말 새로운 AI와 문명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일반 교육으로서 공영방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 그것은 제일 중요하게는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 그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그 준칙은 BBC, FCC 이런 데 다 잘 정리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방송을 정말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방송준칙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운영을 꾀하자 이게 제 요지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차별·야만의 시대의 이름 없는 기자들, 그러니까 한 공영방송에서 특정한 노조권력들이 모든 보도국을 점령하고 다음에 다른 국 기자를 핍박하고 배제하고 그런 야만의 현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재미있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들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의 주최측 추산 100만, 200만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게는 적폐의 행위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가 청부 보도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2년 1월 26일 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유,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이것 사내 폭력 아닙니까? 이게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중지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정상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도했던 어느 기사의 한 단락이 떠오릅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제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강압과 모멸감은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부장이었던 사람이, 이게 MBC 내부 제1노조의 야만적 폭력 사태…… 법원에서 전부 지금 원고들이 승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읽는 이 피해 사례는 당시 경제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7년 전까지 기자였습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MBC라는 회사의 기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심지어 가족이 아플 때도 일이 우선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생 직업은 한 가지였고 그래도 할 줄 아는 일도 이것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고과 최우수평가도 여러 차례 받았고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적도 없었습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치·경제·사회부 등 주요 부서에서도 일했고 앵커로도 활약했습니다. 주요 부서 보직 부장도 했고 특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큰 오판을 했나 봅니다.

2012년 파업에 불참해서 MBC의 실세인 언론노조의 눈 밖에 나더니 급기야 2017년 파업에도 불참했다가 마이크를 영영 빼앗겼습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또 파업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철저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이후 난생처음 스포츠 관련 사업부서에 배치돼 석 달 동안 아무런 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뉴스데이터라는 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자료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망신 주기였습니다. 당신처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중계 PD로 4년 가까이 수해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웠고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뉴스 PD는 뉴스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도국 내에 속해 있는 부서니까 부당 전보는 아니라는 꼼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활기차게 관리자로서 일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외부 취재원을 만나기도 창피

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경력 단절과 그동안 겪은 수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원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말을 빗대자면 여러분은 양심 나간 사람들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5년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아낌없이 즐기지 않았습니까?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추진하던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이 철저히 공영방송을 유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지금의 법안은 개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 단체들에게 이사선임권을 주는 법안을 개혁 법안이라고 합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군요. 자기 입에 들어간 사탕은 맛있게 다 빨고 남의 입에 들어간 사탕은 불량식품이라고 내뱉으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법 개정 취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적어도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처지가 아닐 겁니다. 그 근거는 이 편지가 아니라 책으로서도 부족할 겁니다. 차라리 다음에 다시 집권하면 그때 개정하면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참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속 보이고 편파적인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아예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민영화 법안은 어떨까요? 말로만 번지르르한 공영방송보다 민영방송이 오히려 시청자와 국민의 견제, 시장의 견제를 의식해 지금처럼 막가지는 않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채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지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MBC에서 일한 내부자로서 실토하건대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겁니다. 진정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민영화해야 합니다. 이건 아십니까? MBC는 원래 군부가 민간에게서 빼앗은 것이고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얻어 낸 돈이 그 자본금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분은 아마, 수기인데 이것은 자리에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필리버스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경력 단절의 피해와 현 상황.

그러니까 지금 노조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언론종사자들로 방송지배구조를 맡기면 이런 비극은 백배, 천배로 확대될 겁니다.

전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이었던 분의 실화입니다.

특파원 강제소환.

아내는 어느 정도 예감했던 것 같다. 최승호가 사장으로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을 예고하는 TV조선 보도를 봤기 때문일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할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고2를 앞두고 있었지만 귀국하면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들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큰아들은 한국의 학교로 진학하면 수시 입시의 길이 모두 막혀 버리는 상황이었다. 중국 내 한국학교 편입을 위해 한 학년을 낮춘 터라

더 이상 학년을 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이 더 지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황 설명을 들을 때 큰아들은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다.

저도 특파원을 해 봐서 아는데 특파원 보통 3년 임기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적응도 하고 학교에서 생활도 하고 또 취재원도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어 있고 최소한의 안정성인데 특파원까지도 12명 전원을 강제 소환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갔던 이 가족들이 흘렸을 눈물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후 귀국할 때까지 큰아들은 물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듯 보였던 아내와 둘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았다. 1년이 넘는 중국생활 내내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가족들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지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픈 와중에도 귀국 준비를 멈출 수 없던 아내는 몇 개의 침을 정수리에 꽂은 채 외부활동을 해야 했다. 중국 의사는 침을 놓으면서 이렇게라도 화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 소환 통보 후 또 본사 복귀 후 나는 회사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받았지만 아빠의 직장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불편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큰아들은 예상대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1년 동안 점심을 굶으면서 큰아들은 야위어갔다. 둘째도 중학교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들이 동급생이 된 상황을 불편해했다. 중학교 시절까지 최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자신감도 잃었다.

화가 누적되면 폭발하는 법이다. 낮에는 회사에서 1노조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수험생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결국 몸이 반응했다. 2018년 7월 망막이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다. 전례 없는 무더위 속에 4주를 엎드려 지내느라 허리와 목에도 이상이 생겼다. 둘러보니 병든 건 나뿐이 아니었다. 그림자 취급도 모자라 기자 명함을 뗀 업무를 강요당한 동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치료를 위한 휴직이 반려돼 병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

해가 바뀌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최승호는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까?’ 최승호가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었다면서 기회가 될 때 자신을 사내식당으로 불러 달라는 부탁을 했다. 최승호의 뺨을 한 대 때리기 위해서란다. 최승호 사장 시절 강제 소환된 특파원들, 부당해고된 기자들, 부당인사로 몸과 마음이 병든 기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에 임신 중 유산했던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기자로 입사했습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대거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수원지국으로 쫓겨난 겁니다.

제1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에 또 한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됐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 발령 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돼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로 구성된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함께 참여했으나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 자막 등을 담당하는 AD 업무였습니다. 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기간 중 채용된 파업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회사에 개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십여 명의 임원들이 한 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1차에 참여하라는—이게 뉴스 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이라고 합니다—통보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그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기자를 수원지국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는 통보 메일을 보내다니…… 이런 치졸한 행태를 저는 담담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부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

또 부당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 메일을 보내면 '나도 편집기술을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해라'라는 간헐적인 답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두 차례 면담도 본부장실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의 골자는 너희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을 다양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비전클래스가 1차뿐 아니라 2차, 3차 예고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MBC 1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은 모두 보도국 기자 업무가 아닌 곳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 비전클래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몸이 안 좋다는 말도 하고 기자로도 영상편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티어 보려고 했던 저는 MBC의 실상의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급하게 저를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냈습니다. 아마도 방송기자에게 다른 직무로 쫓아내기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임신 중절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공정방송 같은 온갖 정의로운 말만 하던 MBC 제1노조가 회사 내의 구성원을 탄압했다는 오명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저는 통일외교팀에서도 굴욕적인 시선을 참아 내야 했습니다. 1노조 조합원들은 제가 보도국에 오게 된 이유를 모르는지 일부 여기자들은 제가 들으라는 듯이 '재는 왜 보도국에 앉아 있어'라고 비난했고 당연히 보도국 내에서 대화는커녕 점심·휴식 시간 모두 왕따가 되어 혼자서 견뎌 내야 했습니다.

구성원이 다수라는 무기를 당연히 여기는 제1노조에 지배당한 MBC, 다수인 제1노조원이 아니라고 저는 방송기자라는 직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참 이게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지성인의 집단이 지성인의 직장이어야 될 공영방송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뿐 아니라 며칠 이어지는 또 방문진법을 전하는 이때도 정말 참담했던 MBC 내부에 또 KBS 내부에, KBS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사내에 진미위라는 야만적인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MBC에서, 지금 이 수기로 읽어 보거나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읽어 보면 한마디로 완전한 차별, 배제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의 가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지상파를 통해서 BBC라든가 독일의 ZDF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이 했듯이 국민들을 어떤 극단적인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속한 문제와 과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디지털 시대 온라인 매체, 1인 매체의 홍수 속에서 허위 조작 뉴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정말 샘물처럼 맑은 물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교양을 제작해서, 방송국마다 교양제작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의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기에서 보듯이 또 재판 기록에서 보듯이 이 방송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은 우리 국회가 대신해서 여당·야당 몫으로 해서 이 방송사의 공영방송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사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참혹한 야만적인 언행과 폭행과 이로 인한 피해 참상 그리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방송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공영방송의 지배를 노조의 또 다른 고깔들에게 또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진 중에 국회가 파견한 것은 고작 5명, 국민들의 위임을 받고서 우리 국가의 재산인,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우리 공동체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위임을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법을 바꿔서 국회의 위임 비율은 21명 중 5명으로 낮추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16명의 이사를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들은 이미 우리 국회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철저히 통제하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자란 또 다른 권력이 악마와 싸운다는 핑계로 더 큰 악마가 되어서 동료 기자를 괴롭히고 유산을 시키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 야만적인 실태는, 심지어 국회 앞에서는 100m 앞에서도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국회 청문회장 바로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청문회 후보자를 겁박하고 증인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서 국회사무총장에게 긴급하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고 그리고 채증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시기의 21대 국회에, 앞선 국회에서 우리 선배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외국의 사례도 공부하고 해서 국민에 위임받은 우리의 권리를, 책임을, 권한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여당·야당·정부·국회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위임하려고 만든 법제를 지금 완전히 뒤집고 국회의 비중은 5로 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송종사자들에게 16명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사람들, 그렇게 지금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겁이 없는 겁니다. 큰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5명, 나머지 16명.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합당하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그런 괴물의 놀이터가 되고 겁도 없이, 그것 전부 심각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와서 함부로 고함 지르고 겁박하는 것 다 채증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방송노조 사람들을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서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님이 긴급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시위·겁박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우리가 5명밖에 안 받고 16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안달이 나서 드디어 국회 내에까지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청문회 후보자를 겁박하고 저주하고 시위하고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사태가 방치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쑥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취재랍시고 기자회견이랍시고 겁박할 겁니다. 뒤통수에 '아직도 살아 있네. 너 죽어 볼래?'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신 있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수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다수를 겁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다수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수……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언론노조가 매일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마음 약한 의원님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이거 뭐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드디어는 이제 청문회장 앞에, 상임위원장 앞에 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을 겁박하고 또 후보자를 겁박하고 증인·참고인을 겁박하는 사태가 있겠지만 이런 사태가 방치되면 민주당에 적개심을 가진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내대표께도 요구, 준엄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우리 국회……

우원식 의장님!

○의장 우원식 예.

○최형두 의원 진정으로 존경받으려면 이때 정말 강력한 국회의 권위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후보자 또 그 후보자를 위해서 증언하러 온 증인·참고인에 대한 폭력이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겁박으로 이어졌지만 어느 날 그것이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향하고 급기야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 내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국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평화롭게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 하라는 국회의장의 중대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지금 내일 당장 우리 원내대표도 하겠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증인·참고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측 증인·참고인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청문회장에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고 또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증인·참고인도 우리 당에서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부른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부른 사람인데, 아마 민주당이 부른 까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마 다른 적폐를 캐묻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아마 그 현장에 있던 MBC 노조, 언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과거의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김재철 전 사장이었습니다. MBC에서 괴물이 괴물을 낳는 첫 번째 큰 사태, 2012년 파업에 연루된 그런 이유겠지요. 그때 서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 있네. 너 아직도 살아 있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즉각 진상조사를 하시고 지금 우리도 채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그 가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서 국회 내에서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청문회장 밖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화들짝 놀라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후보자는 뒤에 앉아 있는데 바로 후보자가 있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만큼 한 2~3m가 문입니다. 문 바깥에서 MBC 노조, 그런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후보자의 검증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그런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에게 호소하고 민주당이 그걸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좌파 폭력은 허용하면 우파 폭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왼쪽

폭력은 덜 아프고 오른쪽 폭력은, 오른쪽 폭력은…… 내가 말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위험한 사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태이니까 의장님께서는 사무총장님과 함께 질서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 이게 한 번 뚫리면 술술 뚫립니다. 국회의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배현진 의원님도 테러를 당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부산에서 그런 테러를 당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도 테러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저주와 함께 겁박하고 퍼붓는 그 세력들이 이 방송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숫자는 5명으로 줄이고 언론노조의 또다른 고깔을 쓴 사람들이 점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보다도 많은 6명을 차지하고 또 시청자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이라고 함은 국민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파견한 5명 이상의…… 무슨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 위임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게 독일식 제도라고 합니다. 내가 보여 드렸지만 독일도 스물몇 명이나 되는 방송 이사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18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 연방주의 대표 다음에 각계 대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문화계 그 대표로 이루어진 것이지 노동조합원들이 오늘 국회에 와서 청문후보자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국회의원들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사태를 저는 너무 무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상임위원장 앞에서 민주당 한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사람들을, 언론노련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때는 방문진 이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는 그나마 구호는 안 외쳤습니다. 아, 그래도 국회의사당에서 구호 외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정도의 경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구호를 외쳐서 청문회를 준비하던 우리도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 위원끼리 '위원님이 나가서 좀 해 보이소' 이러길래 내가, 제가 간사가 돼 가지고 잘못하면 봉변당할지 모르겠다 싶었지만 안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장한테 가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랬더니 위원장은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개시가 되기 전이고 청문회장 밖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권 밖이다' 그래서 급히 우리 원내수석을 통해서 상황의 긴급성을 알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오는데 심한 모멸과 저주와 겁박을 받으면서 간신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이거 한번 봐주면요, 지난번 2017년에 그 의원님이 사과하는 것으로 아마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도 안 됩니다. 엄중한 징계를 내리고 그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사당에서 백색 테러든 적색 테러든 흑색 테러든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와서, 2017년은 구호는 안 지른 채 눈빛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압박하는 정도로 시위에 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겁도 없이 들어와서 후보자, 증인·참고인을 겁박하고 청문회장 바로 바깥에서 후보자 보라고 큰소리로 겁박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의장님, 메모하세요, 메모」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다 채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의장님, 이 안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의장님이 져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에서 의장님 협박한 것도 다 메모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메모하십시다. 메모하시고, 그게 무슨……

(「아니, 본인들이 가서 의장님을 협박하고 에둘러 싸고 있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것 똑같이 조사합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태는 제가…… 지금은 내가 위협감을 느꼈지만 이게 곧 김의원님 또 한 의원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기본 주제에 맞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주제에 맞습니다.

(「이게 무슨 주제에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오셨던 분 중에 내가 확인한 바로는 언노련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노련 위원장이 이 방송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노조가 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 문제도…… 의원님,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괜찮습니다. 두십시오, 저도 좀 쉬게.

(「네 번 반복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얼추 다 돼 가니까. 듣기 어려워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듣기 어려우시면 집에 가서 쉬십시오.

자,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 의원님……

(「국회의원만 대표가 아니에요. 노조를 괴물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노조관 때문에……」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의원님, 의원님이 내 필리버스터 내용 전체를 들었다면, 뭔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괴물을……

(「네 번 반복하셨어요, 네 번!」 하는 의원 있음)

(「조용해요, 좀!」 하는 의원 있음)

그게 강준만 교수 이야기입니다.

(「아니, 강준만 교수가 얘기했다는 걸…… 왜 강준만 교수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MBC 내부의 노조가,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힘도 없고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 내가 하여튼 강조했던 까닭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우리가 정당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괴물이라고 하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좀 나가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노동조합 일반을 괴물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자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드린 까닭이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저도 언노련 감사였습니다. 또 우리 이진숙 후보자도 MBC 노조원이었습니다. 저도 노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까닭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이 와서 청문회장을 방해하고 겁박하고, 증인에 대해서 겁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국회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걱정한 것이고, 그게 주제와 관련이 없지 않은 것이 지금 그중에 나온 주도적인 인물이 언노련 위원장이었습니다. 언노련 위원장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이 방송 4법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 공공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국리민복에 맞게끔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국회의원, 21대 국회나 20대 국회에서 모두가 했던 그런 것들을, 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21대는 안 고쳤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국회 내에서, 의사당 내에서 심각한 폭력적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호를 하고 후보자와 증인과 참고인과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겁박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사당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주동자가, 주동자 중의 한 사람이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원들에게도 요청하고 있고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심각하겠다, 우리 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폭력을 보고서 이 방송사 내에서, 왜 방송사…… 요즘 어느 기업에서, 우리 정당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받습니까? 이 방송사라는 지식인 집단, 지성인 집단에서 이런 구조, 이런 어떤 악순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라는 이런 니체의 말이 있는데 강준만 교수가 MBC 노조 사태의 악순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제가 노

조를 왜 악마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노조원이고 우리 노조원도 제 유권자인데.

(「언론노조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언론노조가 오늘……

(장내 소란)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제가 의원님……

(「일반화해서 얘기하시니까……」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원님. 내가 사실은 딱히 지금 더 이야기해 봐야 관심도 없을 텐데, 내가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십시오.

(「한 얘기 다섯 번째인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 말을 들어 보세요. 물었으면 답해……

(「다른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언노련도 좀 정상…… 저도 언노련 감사 출신입니다, 최문순 위원장 시절의. 저도 압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우리 언노련이…… 하여튼 큰 업적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고 한데 지금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것 아닌가라는 강준만 교수의 그런 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사태가 달라졌다.

더욱이 그럴수록, 더구나 언론인들 아닙니까? 언론인들이면 말과 글로써, 공정한 보도로써 비판하면 비판해야지 그것을 지금 단체 시위로 또 구호로 또 저주의 말로, 폭언으로 겁박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태는 국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의 신변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중대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과방위 잘돼 가고 있습니까? 내가 과방위 간사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할 말 없으면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다」 하는 의원 있음)

(「준비된 것 없으시면 이제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했던 것 계속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이게 24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새로운 것 좀 해 주시지」 하는 의원 있음)

새로운 이야기해 드릴까요?

(「많이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계속할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참으십시오. 다수당이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다수결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까닭은 소수당도 그 법안을 저지시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정한,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쪼개 가지고 나 끝나면 또 민주당 의원님 하시고 우리 당 하고 나면 민주당 또 하십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 그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저항권 그것도 반쪼가리 내버린 건데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송구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혹시…… 제가 그래서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지 말자, 우리가 방송사를 둘러싸고서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의장님이 제안한 건 그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4법을 좀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방문진 이사 그걸 좀 중단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진이라는 것은 이미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런데 본질이 뭐냐 하니까…… 내가 그래서 느낀 느낌이 방문진 이사장, MBC 이사진의 구조라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대충돌 지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MBC가 지난 대선 때나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보도가 우리한테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BC는…… 사실은 새롭게 또 MBC가 이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이,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민주당에서 임명한 분들이 다수인 구조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서로가 이런 공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것 지난번 했던 것처럼 거꾸로 우리한테 하면 굉장히 선거 때 불리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그냥 MBC 이사진은 그대로 유지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테고 또 한쪽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또 놔두면 더 큰 흉기가 되지 않겠나, 이것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배구조의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혀 해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고 국민들을 어떻게든 대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중파라고 하는, 지상파라고 하는 국민 재산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 국리민복을 위해 쓰여야 될 재산을 맡기고 방치하는 것이다, 이게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왜 BBC나 NHK나 또 영국, 독일의 방송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없느냐? 그게 보니까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는 우리랑 비슷해서, 현행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배구조가 아니고 그 나라의 방송사에는 아주 엄격한 공정보도준칙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 굉장히 금과옥조로 여기고 그걸 하나의 윤리적으로, 실천강령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는 공정하자'라는 구두선이 아니라 16개의 기준 또 매우 세밀한 기준,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방송시간을,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시기 또 지방선거 시기에 여러분, 한번 어느 공영방송의 방송 편성한 것을,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가시면요 방송 편성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저는 부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불러서 권태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출석을 하셨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사장

님, 방송문화진흥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이랬더니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문화를 진흥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편파·왜곡 방송문화를 진흥합니까, 아니면 공정방송 문화를 진흥합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게 방문진입니다. 지금 현재 9명인데 이걸 25명으로 만들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의 요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래요.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장님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아무 여과 없이 대선 전날 3일씩 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사실 밤새 준비할 수 있는 MBC 방송 사례를 낱낱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루하시고 또 싫어하실까 봐 내가 이건 다음 주에 아껴 두고 그냥……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런 공정방송 문화를 창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방적인 보도편성지침은 좀 지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은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그 사장이, 그것 사장에게 따져 물어야지요. 사장님, 왜 국회에 갔더니 국회의원이 그런 질의를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방문진을 통해서 MBC라는 공영방송이 공영에 맞게끔 지상파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5명밖에 안 하고 16명을 MBC 방송노조 관계된 사람들이 쭉 와 있으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지배구조의 문제보다는……

마침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또 과거에 회자가 됐어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는 우리 MBC가 1등입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보다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편은 딱 두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되는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상세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상세히 보셨답니다. '그것 보시면 거기의 제일 첫 단락에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우리가 조사한 글로벌 약 50개국 중에서 최하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언론이 직면한 도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MBC는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국 언론이 낮은 이유는 바로 신뢰도의 이유인데 신뢰도의 이유는 그게 페어니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BBC의 공정성의 준칙이 있고 다음에 미국의 FCC의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크게 답변을 못 하시고 '그래도 우리 MBC가 로이터저널리즘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 그 조사 위에 이것 가장 신뢰받는다, 가장 신뢰 못 받는다라고 절대로 인용하지 말라라는 영문 표시는 안 읽어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더 신뢰하는 언론사는 시청률로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그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랑 국회에서 했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최형두 의원은 기계적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언론에게 맞지 않다. 기계적 균형은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레이건이 했던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정당지지율을 보면 우리 당 잘 못하지만, 그리고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당 다른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앞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당을 비중 있게 더 취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MBC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선거 때는 완전히 원 사이드(one side)하게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박살 내 놨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는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비등비등했습니다.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면 방문진 이사장은 MBC 경영을 함에 있어서 MBC가 공정방송, 더구나 방송문화진흥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방송문화를 공정한 방송문화로 해서 국민의 방송, 한때 사랑받던 방송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방송문화진흥재단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방송문화재단이 민주당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국민의 힘에게도 부당하게 핍박하지 않고 공정하게 잘못한 것은 비판해야지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윤석열이니까 봐줬지, 화끈하게 봐줬어’, ‘이재명이가 나쁜 놈이야, 공산주의자야’,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녹취 인터뷰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겁을 내는 겁니다. ‘이것 큰일 났다. 이게 만일 말이야 다른 정당이 좌지우지하는 이사회에 넘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보겠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그때 미련도 생기고 이쪽에서는 ‘이것 놔두면 더 큰일 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또 겁을 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서로 방지하자, 이번에는.

그리고 2012년 노조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2012년 노조파업의 후폭풍으로 해고되고 겪은 고초 때문에 2017년에 다시 권력을 되찾아 들어와서 2012년 파업과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했던 그 가혹한 폭력과 야만적인 언행을, 이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었다’는 그 표현을 낳았는데 그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의 요지입니다. 요지여서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지금 현재 국회에 오늘 자로 상정된 이 법안,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바로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이 법에 대해서만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과거에 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미국 FCC라든가 또는 선진 방송국과 선진국의 방송제도를 연구해서 5명으로 하고 대통령이 2명, 다음에 야당이 2명, 1명 하는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자꾸 2인 체제가 되어서, 이건 문제가 있지요. 2인 체제가, 5명으로 구성돼야 될 체제에 왜 2인 체제를 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보시기에 ‘야, 이것 2인 체제로……’, 거기에는 아마 그때 만든 방송법 구조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쯤 되면 당연히 그때 출석할 걸로 생각하고 출석정족수라는 걸 별도로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2명 이상만 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으로 이제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 중의, 5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의……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2명으로 되었으니 2명만 갖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탄핵 사유도 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법안의 요지는……

제가 오늘 청문회를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 검증 청문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통위원장 지금 과방위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제 사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위원을 상대로 이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이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수 변경 같은 경우로 해 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틀을 하자고 해서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것이 원래 첫날에 크게 터지는 건데 첫날 잘 못 한다고 둘째 날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참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3일째 차수 변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통위 관계자 한 명이 쓰러져서 지금 119에 실려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왜 신경을 쓰고 있냐 하면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혹시 청문회가 너무 민감해져서, 지금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후보자라든가 증인도 그렇고 또 여야 간에 격앙된 말이 서로서로 오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미 뭐 청문 연장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오늘 새벽에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과방위원들이 하기로 돼 있어서 과방위가 계속 진행되면 제가 이왕 필리버스터 나섰기 때문에 제가 밤을 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빨리 과방위가 정리되거나 아니면 제가 빨리 무슨 한 명이라도 정족수가 필요해서 올라가는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부득이 제가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할까요?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민주당은 누구 차례입니까? 와 계십니까?

(「한준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한 의원님 어떡하지요? 제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의원님 미리 얼마쯤 하실 건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몇 분 쯤 하실 겁니까?

(○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일찍 끝나셨으면 제가 지금쯤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좀 알아야 될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로 과방위가 몇 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당번을 과방위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의 청문회가 제가 이미 나와 버려서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님이 저를 이어서 얼마를 해 주겠다는 게 계산이 서면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지난번에 우리가 첫날 필리버스터 때, 그때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원님이 그때 한 3시간 할 줄 알았더니 30분을 안 하고 끝나는 바람에……

(「박주민 의원」 하는 의원 있음)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박식하시고 해서 한 6시간 되겠다, 오늘 엄청난 강의를 들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딱 각오하고 있는데 30분도 안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갑자기 박준태 의원이 나오셨나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시간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얼마쯤 하실 건지 알려 주시면 제가 맞춰서 내려가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자료를 들어 보임)

아이고, 길게 하시겠네요, 오늘요?

○의장 우원식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마세요.

○최형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무슨 협의까지 해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최형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들 심각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지만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상임위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치고 또 한 의원님을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하고 방송사에서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방송사 노조가, 방송노조가 지금 방송 3법, 특히 방송 3법 중의 '3법',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하는, 이사진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과 지금 민주당에게 사실상 이걸 압박하고 있는 분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미 MBC에서 2012년 파업, 2017년 파업을 거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내부의 야만적 폭력 또 이런 갈등, 일어난 피해,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또 다른 분도 암에 걸리고 유산도 하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 엄청난 큰 참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은가, 아예 이제 방송사를 접수하려고 하는가 이런 겁이 덜컥 났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외국의 공영방송은 노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걸 봤습니다. 이게 저 혼자의 주관이 아니라 '외국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의 지위'라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분이 썼던 글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방송노조가 이렇게 심각하게 개입하고 심지어 청문회, 국회에까지 와서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겁박하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방송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우리 방송의 신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렸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청률 저하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BBC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가 상당히 관여를 하고 또 여러 대표, 지방의 대표 같은 것도 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지 우리처럼 국회의 몫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알 수 없는 방송종사자가 16명이나 되는 이런 비대칭인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런 방송사에서는 방송의 지배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방송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 그리고 듀 임파셜리티 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이퀄 오

퍼튜니티, 이퀄 타임이라고 하는 아주 기계적이다시피 정교하게 된 그런 공정성 준칙에 의해서 방송의 준칙이, 보도가 이루어지더라. 그를 통해서 BB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필요가 없이 정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고 있더라,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더라……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유럽도 그렇고 다 뭐 굉장한 사회적 갈등과 선거에서도 예상치 못한 격변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더더욱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BBC는 이미 그런 방송준칙을 통해서 그런 방송의, 공영방송의 균형잡힌 보도 또 국민을 위한 보도 또 영국을 알리는 보도 이런이런 보도를 통해서 잘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BBC는 그러면 노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노조가 여기에 지지하고 노조가 강력하게 원하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BBC는, BBC 노조는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되었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이게 아마 오래 전에 된 그런 모양입니다. MBC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방송 내부의 경영진과 프로그램 제작종사자의 갈등과 대립이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방송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사와 노동조합은 실제로 종사자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사장 등 경영진의 인사에도 상당한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선진국의 공영방송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우리 방송질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각 주요국의 공영방송에서 방송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종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조직이나 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노동조합이나 사업자의 근로자 대표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 도입 가능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송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의장님의 제안대로 국회가 양당이 동수로 한번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방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BECTU, NUJ 그리고 AEEU가 있습니다.

BECTU는 영국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노동조합으로 방송·영화·디지털 미디어 독립제작사 등을 아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합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 노조랑 똑같은 것이지요.

또 NUJ(National Union of Journalist)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적용 범위로 하는 언론인 노동조합으로 1907년에 설립되었고 지금 3만 80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규모는 BECTU도 크지만 저널리즘 종사자를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BBC와 같은 방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등 또 다른 것은 엔지니어 등을 하는 조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1971년에 노사관계법이 노동조합 승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1999년 고용관계법 개정 시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 승인 제도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국 노동법은 또 체제가 그렇고요.

BBC의 단체교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BBC의 이른바 승인된 노동조합이 방송종사자 그중에서 저널리즘 분야의 기자, PD의 방송 자유 및 독립성을 위하여 회사 측과 교섭하고 작성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BECTU의 규약에서 보았듯이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만 교섭권을 행사합니다. 이 점은 BBC와 노조 간의 교섭을 위한 준비 문서에서도, ‘prologue to procedure agreement’라는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섭 준비 문서도 제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교섭 범위가 정해지고 교섭기구가 결정됩니다.

이 준비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2에 2.2 이런 게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편집권, 편성권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 정책에 관한 이슈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2의 또 2조 4항은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작·송신·인쇄 또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 등에 또는 중점에 관한 경영적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섹션2, 2조 2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과 근로조건이란 개별 고용계약에서 정한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회사의 직원지침 그리고 BBC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영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노동조합에 한하여 철저히 고용계약상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상황에 국한하여 교섭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의 독립성에 관하여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인 기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노조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방송 편성 및 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7월25일 24시 경과)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처럼 노사협상이 방송의 독립성 문제를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12시 좀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한 의원님, 12시 좀 넘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야지, 한 의원님이 한 4시간 해 주실 거지요?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도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BBC의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방송보도의 독립성은 방송종사자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

의 독립성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즉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 노동 문제로 접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편성에 관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에 가서 의견이 대립 시 해결 방법 등은 주로 팩트 중심의 편집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종사자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노조 파업의 상당한 부분은 공정 보도, 왜곡 방송, 어느 정권에 부역하는 방송이라는 주제로 노조 파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BBC 같은 경우 BBC의 독립성은 엄격한 공정한 방송보도준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국 왕실에서부터 칙으로 나와 있고 영국 의회가 확립한 공정한 지배구조로 돼 있지만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영국 사례를 상세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야 의원 동수로 한번 영국에 가서 실제 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BBC의 독립성,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도 편성이나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파업 등과 노동 문제로 접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뉴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편성에 관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면 그 해결 방법도 주로 팩트 중심의 편집 정책, 이미 정해져 있는 팩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사자 개인의 정치적 소신 같은 개인적 의견으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독일의 노사관계 기본구조와 공영방송, ZDF의 역할도 있지만 한준호 의원도 너무 심야에 하면 힘드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 단하에서 — 잠깐만, 조금만 더 하세요.)

왜?

(○박정훈 의원 단하에서 — 과방위를 하루를 연장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유례도 없고, 자료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하루를 더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국무총리도 이틀 하는 판에 방통위원장을 사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몇 시까지 합니까, 상임위를? 계속하나요?

(○박정훈 의원 단하에서 — 상임위 금방 끝났어요, 지금.)

끝났습니까?

(○박정훈 의원 단하에서 — 내일 다시 하기로 했어요. 하루 연장을 했어요. 의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대.)

글쎄, 내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청래 위원장님 오셨는데 이게 사실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실력과 정책과……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차수 변경이 안 돼, 이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어제는 그냥 계속하잖아요. 차수 변경하려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예.)

(○박정훈 의원 단하에서 — 아니, 내일 또 하기로 했어요.)

내일 또 한다는데?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셔, 이제.)

내가?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예.)

아니고 우리 상임위?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한준호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걸 내렸네요.

내일 우리 과방위 그것도 무효네요. 그렇지요? 차수 변경이 안 되니까.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이제 그만하세요.)

어느 쪽이 차수 변경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하여튼 안 돼. 이틀간 하기로 했으니까 끝내야 돼.)

끝냈지요?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 법사위원장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차수 변경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도 보통 정부위원, 국무위원 하루로 하고 총리만 이틀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흘째 한다는 것인데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 또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 드디어 체력 검증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되니까. 이제 끝냈으니까 그만하시고, 한준호 의원 또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차수 변경했다는 걸로 저는……)

○의장 우원식 아니,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 할지 말지를 정해서 하면 되지 지금 무슨 협의해서 하나요?

○최형두 의원 제가 이왕 말이 나왔고 또 법사위원장께서 우리 과방위는 이틀로 끝났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제가 또 우리 한준호 의원이 너무 심야 시간에……

○의장 우원식 아니, 지금 과방위는 차수 변경해서 1시까지 할 거예요.
○최형두 의원 해요?
○의장 우원식 차수 변경해서 1시까지 할 거예요.
(○신성범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지금 필리버스터 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최형두 의원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제가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지금 차수 변경 때문에 다시 상임위에 복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의장님이 유권해석해 주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과방위가 차수 변경이 됐는지,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의장 우원식 차수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차수 변경돼서 하고 있다고요.)
○최형두 의원 하고 있는데 왜 내려오셨어요?
(○배준영 의원 단하에서 — 우리는 그냥 나왔는데, 의장님이 차수 변경을 허락을……)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그냥 끝내도 돼.)
그냥 1시에 끝내면 됩니까?
(○정청래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냥 지금 끝내고 가시라고, 한준호 의원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한준호 의원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한준호 의원이 몇 시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은 차수 변경이든 뭐든 과방위 사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증할 방안을 확실히……
○의장 우원식 그런데 그 폭력 사태가,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제는 없었다는데?
○최형두 의원 제가 채증한 게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아니, 그러니까 그제 한 것은 있는데……
○최형두 의원 오늘 오후에……
○의장 우원식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란 말이에요.
○최형두 의원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의장 우원식 없었다는데?
○최형두 의원 국회방송에 나와 있어요.
○의장 우원식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제는 있었는데 어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최형두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한준호)

(00시08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의원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자리인 것은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법안인 방송 4법 중에서도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자,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MBC 언론노조, 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 말씀 하시는데 복수노조는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복수노조를 만들 때 그 당시 MBC의 3노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로세로연구소를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세의 전 기자가 이 3노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며 당시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다는 건 이미 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당시 MBC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였던 이진숙, 김재철 그리고 이제 의원이 되신 김장겸 이런 분들이 다시 이 현실 2024년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제가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불과 6년 차 아나운서였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미디어 악법 강행이었습니다. 이걸로 2008년 11월에 종편이 출범을 했고 제대로 언론장악을 한 것이, 종편 출범이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가장 큰 그들의 업적일 것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2008년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김은희 체포,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정직과 감봉.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에 정연주 사장 체포, 양승동·김현석·성재호·이상협·이준화·이도영·복진선 정직 및 감봉, 현상윤·최용수·이강택·김용진·용태영·최경영·강남욱·이승호·고우종·박종원·하석필·이상필·정일서·국은주·박종성·황보영근 부당 전보.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했던 우장균·정유신·권석재·현덕수·노종면·조승호 해고, 이춘근·김보슬·조능희·송일준 또 정직과 감봉.

KBS 보도를 비판했던 황보영근은 정직.

YTN 배석규 사장 신임투표 추진에 박진수·임장혁 정직, 박희천·김용수 감봉.

본인들이 한 짓거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름들을 들어 보십시오.

고한석·전준형·이만수·김재형·이대건·이상은·권영희·송태엽·김정현·유투권·이경아 부당 전보.

YTN 쌍용차 사태 돌발영상 제작 PD 대기발령 임장혁, MBC 앵커 교체 항의 제작 거부 김연국·이성주·최혁재 감봉.

KBS본부장 신임투표 추진에 김덕재 감봉, 김인규 사장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

로 김진우 다시 감봉.

MBC 39일 파업 이근행·정대균 해고, 신용우·연보흠·이상엽·이세훈·나준영·서점용·이정상·이학준·정희찬·박민상·강윤석·손종근·황성철·남두용·신동식·이해승·류재은·이희연·안준식·양효경·오준혁·김범재·김종우·박용국·오행운·이동희·이채훈·한준호·김병헌·김영기·김창식·김현수·박재정·박찬민·손무성·신현극·심병철·윤행석·이순용·이용환·이재우·지성근·최상석·최우식·홍유선·황진호·손정모 50명 정직 및 감봉, 김빛나 부당 전보.

29일 파업에 엄경철·이내규·성재호·김경래 정직, 김현석·김영한·박종성·이용우·국은주 부당 전보.

이 자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장악을 했던 실체입니다. 어디서 언론장악 이야기를 꺼내며 공영방송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다른 분의 이야기에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오늘 들었던 BBC 트러스트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영국 여왕 칙령으로 발의가 됐던 2007년 트러스트 제도는 잘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20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오늘 앞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트러스트 제도는 좋은 제도를 이야기하시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트러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이야기하자면 해외 사례라고 들었던 트러스트 제도가 지금 현재 2017년에 그 좋은 제도라고 불렸던 그 내용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ZDF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회 방식을 썼던 독일이 정치적 후견제도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ZDF 방식이 도입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한국 내에서 이를 준용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방송 3법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방송 3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2008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지배구조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그나마 좀 개선을 해 보자라고 논의를 한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2020년,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고 상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가 박성중 간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이것에 맞서 가지고 박성중 의원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측이 먼저 나서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하고 법안 수가 거의 비슷했을 정도로 같이 발의를 하다가 본인들이 구글 측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입장이 변화됩니다.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방위에 있는 방송소위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2010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경찰들에 쫓겨 가지고 다닐 당시 집에 들어가니까 집은 아이들 흔적만 남아 있고 아이들은 지쳐 쓰러져 있고 방문을 열어 보니까 아내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젖 물리면서 있습니다. 집을 일주일째 못 들어가고 겨우 옷을 좀 갈아입으러 들어갔었는데, 아내는 유선염에 걸려서 아이 젖 물리다가 혼자서 울고 있었던 것을 겨우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 때 저희 노조원들, 파업에 동참했던 MBC 동지들 몇 개월씩 대출받아서 살았습니다. 왜 MBC가 파업을 하겠습니까? 공영방송사들은 단 한 번도 임금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 올려 달라는 파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을 해 달라는 게 딱 하나의 파업의 이유입니다. 92년 파업이 그랬고 2008년 파업이 그랬고 2012년 파업이 그랬습니다.

하도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읽어 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200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 아나운서지요, 요즘은 공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총 43명 입사를 했고요 그중에 아나운서는 2명이었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미디어법 파업, 미디어법 강행을 통해서 종편을 출범시키고 언론환경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벌어질 때 저희가 이걸 통칭해서 ‘미디어 악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 파업 때문에 국회 앞에서 저희가 마이크 들고 싸웠습니다.

2008년에 6년 차 아나운서인 제게 부담을 좀 지우겠다라는 선배들의 말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한 2008년도 파업이 일차적으로 2010년경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로 단 하루도 아나운서국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광고 영업, 국회 대관, 사업부, 제 동료들이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 고향 선배이기도 한 이용마 선배는 개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해고 직후에 암이 걸리고 복막염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2018년 MBC 정상화 선언이 되던 시기에 비쩍 마른 몸과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서 겨우 사원증 목에 걸고 회사 입구 한번 들어가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용마 선배 떠나기 이틀 전에 병원에 들어갔었는데요.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5인실인지 6인실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꽤 많은 환자분들이 누워 있는 병실 창가 끝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복수가 차서 배는 임산부처럼 불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용마 애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서울대를 안 갔을 텐데, 용마 애가 언론에 관심이 없었으면 MBC를 안 들어갔을 텐데, 노조를 할 때 내가 좀 발 벗고 나서서 말렸어야 될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쌍둥이 남겨 놓고 이렇게 내일모레 세상을 떠날 것을……

저는 그때 선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구나. 해고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시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자리 물려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바깥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언론장악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제 밑에 쌓여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언론장악백서에 써 있는 내용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몇 분 안 되지만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과연 본인들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저지를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왜 이게 문제냐 하면요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김홍일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이상인이 있고 실무자 과장이 나와요. 셋이 앉아 있습

니다. 과장이 매각은 이러저러해서 돼야 됩니다라고 수 페이지에 걸쳐서 읽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고, 김홍일 위원장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는 거지요. 이게 현재 2인 체제의 문제점입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진숙 체제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해야 되지요, 8월 12일이면 교체 시기니까. 본인은 정작 제척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 사유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의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문진 교체, 방문진 교체를 통한 사장 교체, 이게 2010년에 한 번 시도됐던 일이고 실제 그렇게 사장이 해고됐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엄기영 사장이 못 하겠다고 뛰어나갔지요.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MBC 사장을 뽑아도 MBC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의결을 하면 사장이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내에 공영방송 사장 구조로 뽑은 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가 개정을 한 겁니다, 겪어 봤기 때문에.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방송통신위원회 왜 유지합니까? 2008년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용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언론장악백서 첫 번째 내용에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웃겨요. '2010 MBC 정상화 전략' 보고서입니다.

정상화 전략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임원들로 임원들을 교체하고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한 PD와 기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이를 시행한 게 이진숙입니다.

이진숙은 이 내용에도 잘 나오겠지만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MBC 사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 PC에 심는 것을 방조했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언론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보험금을 노렸다는 식의 기사가 나갈 때 그 관련된 보도를 냈던 보도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최필립이라고 하는 정수장학회, 즉 MBC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육영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이곳의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대화가 최필립의 꺼지지 않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흘러 나갔어요.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이진숙은 MBC 민영화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을 보내서 2인 체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의 권 이사장을 자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2인 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을 잘라 내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을 잘라 내고 최민희 현재 과방위원장, 당시 저희 민주당의 몫으로, 국회 몫으로 추천을 했지만 법제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7개월을 끌었습니다.

7개월을 끌고 당신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안 된다? 법제처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석을 했나요? 그냥 정부가 임명을 하기 싫어서 버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임명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최형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임받은 권력. 위임받은 권력대로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바꾼다,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대로 해야지요. 현재 EBS·MBC 6 대 3 구조,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6을 가져가면 됩니다. 7 대 4 구조의 KBS, 과반 의석인 저희 민주당이 7을 가져가면 됩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독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학습 겸 과연 언론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면서 제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낙하산 사장 투하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BBC 트러스트 제도는,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영과 관리 감독을 두 개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됐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상 고민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결국 보수정당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로 이 권한들을 다 합해 놨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영 미디어 장악의 본질이 바로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주도하고 실제 이루어 냈던 언론장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 분석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이 공영 미디어들에 대해서 인적 장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인적 장악은 사장 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 통제 부활, 비판 프로그램, 비판적인 언론인 축출, 정권 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 위기 조장, 이런 조작적 프로그래밍을 일상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현·확장된 인터넷 공론장의 탄압, 축소 보도를 추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론 지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의 구조적 우위를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인위적인 방송구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방송 관련법 개악을 강행했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기존 여론 시장의 강자들에게 종편 TV를 경영하게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언론장악이 완성된 겁니다, 2008년.

공영방송에 들이대고 있는 잣대를 종편에 조금만 돌려서 들이대 보면 과연 종편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기삿거리가 되겠습니까?

디올백이 파우치로 변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그쪽으로 솟아 있는 종점 변경된 고속도로 문제, 단 한 번이라도 다뤘습니까? 그렇게 의혹이 많은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긴급현안질의 국감장에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언론은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MBC가 순치가 안 되니까 답답하겠지요.

방법은 딱 하나지요. 방문진 이사 교체, 사장 교체, 민영화. 이게 숨기고 있는 본의입니다.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해직하고 정직시키고 감봉하고…… 이미 많이 해 봐서 잘 알 겁니다.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해 봐서 안다고. 해 봤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에 올라가서 언론노조 위원장, MBC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해고당하고 보복당하고 감봉당하고 삶을 뺏기고 직업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김재철·이진숙을 보면, 김장겸을 보면 화가 나고 소리를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진숙·김재철…… 지금도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눈앞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서른여섯에 시작했던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파업을 언론 정상화, MBC 정상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나이가 마흔여섯이 됐습니다. 아나운서를 해 보고자 들어갔던 MBC에서 10년의 젊은 시절이 날아갔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수두룩한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동료가 죽고 누군가는 아들이 죽고 누군가는 선배가 죽고 누군가는 후배가 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순간인데 저항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고치자고 방송 4법을 발의한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같은 사람을 앉히겠다, 김홍일을 앉혔다, 이동관을 앉혔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시 장악을 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왜 청와대를 옮겼을까? 왜 그곳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들릴까?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을 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간 예타가 진행됐던 곳이 용역사가 단 하루 가 가지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니까 KBS는 파우치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약해서 받았다고 하고, 술은 받았다 하는데 어디에 폐기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MBC를 비롯해. 입을 닫게 하고 싶겠지요. 이게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가 했던 행동들이 기록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MBC를 장악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보고서 내에는 인사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출연자를 통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KBS, YTN 가니까 극우 성향을 띤 유튜버들께서 MC로 들어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KBS 경영진 또는 간부들이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출연진 또는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선대인과 황교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을 정지당했다. 황교익은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녹화까지 했지만

2017년 1월 16일 방송 출연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지지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KBS는 사실상의 대선 정국에 돌입한 현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출연을 잠정 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대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선거보도 세부 준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시기였다.

편성권 침해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MBC PD수첩 불방 사례입니다. MB 무릎 기도 파문,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한진중공업 사태, 미군 고엽제 파문, 4대강 공사 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기도 파문,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KBS 개그콘서트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는 몇 번 나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풍자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도 진행자 최양락과 배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서 MB님과 함께 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라는 풍자 코너를 진행했습니다.

이 코너에서 2014년 4월 1일 비리로 인해 퇴진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습니다. MBC는 5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 MBC 사장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을 전달해 방송강령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당시 연출을 맡았던 안혜란 PD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고 안 PD의 재심 청구에도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안 PD, 징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안 PD 승소, 2심은 사측의 항고 기각, 대법원이 2015년 5월 11일 2심 결과를 확정해서 징계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숱합니다. 인사 보복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MBC 사측은 7명, 임채유·이근행·한학수·허태정·이정식 PD, 김수진·김민욱 기자 이분들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을 냈습니다.

5명은 이미 부당전보로 현업에서 배제가 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근행 PD는 제가 노조를 할 때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서 파업을 이끌다가 해고됐지요.

MBC 경영진이 2012년 12월 24일 부당해고를 했던 이근행·정대균 2인을 해직 무효 방식이 아닌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 둘은 노조 전임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업에서는 배제를 당했습니다.

한학수 PD, 2012년 파업 직후에 부당전보, 대기발령, 신천교육대—저희가 신천동에 위치한 MBC아카데미에 보내서 빵 만드는 것,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보내놔 가지고 신천교육대 이렇게 불렀습니다—여기에 보내서 2014년 신사옥 개발센터에 가서 현업에 이미 배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스케이트장 관리를 했다라거나 저 같이 광고영업을 하러 돌아다닌다거나. 이게 사실 사람을 자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나가게 되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MBC에서는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드릴 것은 이 장의 2부입니다. 언론장악 일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나 또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언론계 성향조사 문건을 2008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 1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광고주나 산하 단체장에 대해서 광범위한 성향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승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KBS 장악은 다음과 같은 과정 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2008년 1월 4일 한나라당의 강성만 부대변인이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등 KBS 정연주 사장 신년사를 두고 원색적 비난을 하고 사퇴를 종용합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을 받거나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합니다.

2008년 4월에 KBS 노조 수신료 인상 실패, 적자 누적 이것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 사퇴를 주장합니다. 이것 요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2008년 5월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합니다. KBS 전 간부를 내세워서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에서 자의적인 소송 취하로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긴급체포하고 서울중앙지법 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얻어냅니다. 대법원은 2012년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감사원도 여기에 동원이 됩니다.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KBS를 장악하기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 5월에 보수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MBC 정상화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KBS 적자 누적을 방만 경영, 인사 특채, 광우병 문제, 편파 방송을 주장하면서 KBS 특별감사를 청구하고요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 청구를 수용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김금수 KBS 이사장, 정연주 사장 사퇴를 압박하고 김금수 KBS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게 2010년에는 MBC에서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KBS 사장, MBC 사장을 일단 빨리 쫓아내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 어딘가 가서 조인트 까이고 왔다, 똑바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MBC의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 2008까지만 해도 MBC 구성원들은 방문진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KBS2를 KBS가 가져갈 때 여기의 재원을 가지고 방문진을 만들었는데 MBC 자체가 워낙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잘 돌아갔는데 방문진이 특별히 나설 이유도 없었겠지만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지 사장을 자르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방문진법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도 사장을 자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장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는 주식회사니까 우리 주주들이 의결을 하면 자를 수 있어'라는 것으로 압박을 해 왔지요. 2008년, 2010년은 MBC 장악을 하기 위한 꼼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기간이었습니다.

독일 ZDF 방식하고 BBC 이야기를 아까 한참 이야기에 녹여서 많이 하시고 MBC 구성원들이 제3노조에 관련돼 있던 분들에 대한 부당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내기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헷갈려하실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 성별, 나이별을 감안해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복수의 사장을 추천하게 되면 21명의 확장된 이사회에서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사장을 뽑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 중에 단 5명만이 국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송에서 일하는 인력들, 기자협회, 기술인협회, 방송협회, 이분들이 100% 노조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민주노총과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 현업에 있는 분들이 기자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방송인들이 방송협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일반 현업에 있는 기술인들이 기술협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노조가 이사를 장악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잘못은 적어도 기록으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계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정된 미디어학회입니다. 여기가 정치 편향적입니까? 공중파에 있는 방송인력들이 정치 편향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방송법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의지가 없었다, 너희가 법안을 내지 않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안은 21대에 제출이 됐고요, 논의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 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소위 열지 않고 전화 받지 않고 도망 다녔던 것 아닙니까.

독일의 ZDF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 드리자면 공영방송위원회 설치가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시작이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직접적인 형태에서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전환이 되었다, 또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시민사회가 독일에서도 중심을 이루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의 규범적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ZDF 방식의 다원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란한 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꾸 흐리시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방송위원회 구성을 한번 봅시다.

방송위원회, 경영위원회, 독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송사장 선출권 그리고 프로그램 불만처리업무 이것을 방송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이게 ZDF의 최고 감독기구입니다.

여기에는 노조연맹·공공서비스노조 각 1인, 독일공무원연맹 1인, 연방신문발행인협회 2인, 독일기자협회 1인,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언론노조분과 1인, 환경보호단체·자연보호연맹 각 1인, 그 밖의 16인도 교육, 학술, 예술, 문화, 영화, 산업, 프리랜서, 하다못해 어린이 보호, 청소년 분야까지 방송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경영위원회는 방송사장의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표 5인, 연방정부 대표 1인, 방송위원회 선출 위원 8인 이렇게 14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진 구성을 21명,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렇게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방송 관련된 단체들이 있으면 수를 더 확대를 하면 되지요. 왜 그런 논의는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만 거듭하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도망갑니까?

이제는 한 명도 앉아 계시지 않나요?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시는군요.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으로 분배하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국회도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6 대 3 구조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위임받은 대로 의석수대로 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 논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의석수대로 하자고 하면 도망갈 것 아닙니까, 또.

정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이 이미 36년을 넘었어요.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 가지고 IPTV가 나옵니다. 요즘 직수율이라고 해서 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나오면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통합방송법 얘기를 2009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IPTV법이 별도로 생겼어요.

OTT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저희가 논의하자고 들어가니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논의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두게 되면, 우리는 이미 2008년부터 한번 겪어 봤던 일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국정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했고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삶을 잃었는지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KBS 장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첫 관문이 KBS 인적 장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어서 MBC가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 홍보기관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서 엄기영 사장을 회유하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그때 엄기영과 지금의 엄기영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검찰이 MBC의 비판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를 체포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 증언에 따르면 2시간 동안 심의를 할 때 1시간 반은 MBC를 심의하고 나머지 30분을 다른 방송사를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벌점으로 쌓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각 사들을 재승인 관련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방문진 이사 교체를 하고 나면요 사장 교체를 할 시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안들을 가지고 압박을 해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소송에 걸리고 있지요.

그래서 엄기영 사장은 PD수첩에 대한 청와대 고발과 검찰 수사 등 MBC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야기한 비판 여론과 MB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동요를 하다가 2010년 2월 자신이 추진한 뉴MBC 플랜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이것을 스스로 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방문진은 다수 이사가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방문진은 2010년 2월 16일 그 이후로 김재철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MBC의 흑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으로 불릴 만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MBC 노조도 김재철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2010년 3월 1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3월 8일 19개 지역 MBC와 자회사, 인천시 자회사를 인선할 때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도 맞고 깨진 뒤 MBC 내 좌파 80%를 척결했고 김재철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서 권력기관의 인선 개입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 배치시키고 인사 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 불공정 보도를 강행을 했습니다.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함께 구성을 했던 공정방송협의회, 이게 MBC에서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노사가 함께 구성을 한 공정방송협의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곡·편파 보도에 항의를 했고 또 노사협약에 기초해 인사 전횡의 중단, 특히 정치 편향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승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당장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기존 노사협약에 기초한 공정방송협의회와 노사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보도와 인사 양면에 전횡을 계속했습니다.

노조는 그대로 해서 MBC의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깨닫고 4월 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39일간 장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에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 YTN, 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매우 동일했습니다.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 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시행, 2010년 파업 실패 이후에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드라마, 오락을 앞세워서 방송을 하게 되고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 편파·왜곡 보도 등을 일삼는 기형적인 방송사로 변하게 됐습니다.

YTN 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도 똑같습니다.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던 2008년,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인물을 YTN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YTN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했고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40초 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원충연 메모, BH하명으로 표기된 당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고 또 임원진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10월 6일에 노조 지부장 6명에 대한 해고가 있었고 돌발영상팀장 6명을 정직에 처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YTN 총파업 하루 전인 3월 22일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 언론인 6명, 그중 4명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노조의 거센 저항 때문에 YTN이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됐다 판단이 되니까 8월 3일 구본홍에서 배석규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으로 바뀝니다.

2009년 9월에는 총리실 민간사찰팀이 YTN 내부 동향 문건에 배 직무대행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사장 임명해서 힘을 실어 줘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 문건의 기록대로 이 사람은 10월 9일에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됐습니다.

배석규 사장이 취임 직후에 노조로부터 92.8%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했지만 사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YTN 논조의 친정부 편향과 노조 탄압을 끝까지 강행을 했고 이후에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장기 방치, 박원순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영상 무력화, 공금횡령 의혹 등 파문이 계속해서 일었습니다.

2012년 170일 파업이 있었던 때입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이렇게 4개 공영미디어 노조하고 국민일보 노조, 5개 언론사가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동시다발 장기연대파업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4개 공영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건이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쟁취.

당시 2012년 5개 언론사 총파업 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 MBC 노조의 파업 180일을 더하면 전체 724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SBS 그리고 부산일보를 더해서 이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 포함해서 총 452명에 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 방송 4법, 즉 방송 3법을 재발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착잡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부터 김홍일까지 이어지는 이 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3주간 치열하게 전문가들 포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KBS 현재 보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좀 착잡한 기분이 들어서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힘을 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오늘 최고위 후보자들 토론회랑 다 마치고 대기를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올라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기도 하고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지쳐 있는 시간대인데 또 이 내용이 재미도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전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니까 쫓겨나고 징계받고 또 쫓겨나고 또 징계받고 이랬던 역사의 반복이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편파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편파보도 이게 사실 데스킹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선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과 관련이 없이 데스크에만 올라가면 기사감들이 기사가 안 되고 제목이 바뀌고 때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권력과 언론이 유착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편파보도한 것을 KBS 중심으로만 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 신년대담회에서 그때 영상이 문제가 됐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디올백이 갑자기 파우치로 둔갑을 합니다, 작은 파우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24년 6월 7일 수요일에 KBS에서 보도한 겁니다.

‘산유국의 꿈’이라는 열 꼭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9에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했지요.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시추 성공률 20%, 2035년

상업 생산 기대, 남은 단계는?', '동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경제적 효과는?', '석유 매장 가능성, 영일만을 가다', '그동안 탐사 과정은?', '석유·가스 매장 포항 앞바다 지질학적 특성은?', '이번엔 성공할까? 대한민국 유전 개발 도전 반세기', '7광구 개발은 왜 지연? 내년 6월 이후 협정 종료될 수도', '성공 가능성은? 왜 오늘 발표했나? 산업부장관에게 듣는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면요, 제가 한국거래소 출신입니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문과 공시인데 제가 만일 진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순간에 베팅을 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야,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석유 나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 큰 기업들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해외에 유전 시추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넋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국내에 석유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매장돼 있다는 것을……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때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SBS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관련된 뉴스들을 싣습니다. TV조선도 행정 시스템 마비를 톱으로 올렸을 때 KBS는 'APEC에서 한일·한미일 정상회동, 한중회담도 열릴까?' 이런 기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리포트도 KBS 메인뉴스 때는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메인뉴스예요,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윤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여…… 따뜻한 사회되기를'.

MBC가 채 상병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푸틴과 김정은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MBC가 뉴스데스크 톱뉴스에 여덟 꼭지를 할애해 가지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집중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을 때 KBS는 뉴스 9에 톱뉴스부터 북러 협력, 대북 이슈 이 여섯 꼭지를 할애해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내용은 일곱 번째에 가서야 리포트로만 다룹니다, 간략하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다루고 있었던 2024년 5월 30일 보도입니다. KBS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리포트로 모두 오물풍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리포트 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룹니다. 채 상병,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보도에 당시 KBS는 '북한 오물풍선 대거 날려, 전국 260곳 발견',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불발시켰지요. 시사기획 창 이것을 보고 있으면 딱 2008년, 2010년이 떠오릅니다.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윤비어천가 논란에 내부에서 슬프다는 비판까지 받았지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KBS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사장을 교체하면 회사의 기조가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 기사가 바뀝니다. 고발사주,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종점 변경 고속도로…… 보통 과일을 사면 상한 부분도 있지요.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으면, 과일 자체가 완전히 썩어서 물러지면 이것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도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상해서 일부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과연 공정한 방송,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부가 원하고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방송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처럼 틀기만 하면 나오는 공중파에서 디올백, 고속도로 종점 변경, 채 해병 특검 수사 의혹, 윤 정부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야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유튜브는 전기통신법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지요. 방송사는 또 통제가 돼요. 또 공중파에서 나오면 일부의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에 입을 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MBC가 아직까지 틀어막아지지를 않습니다.

방송사, 공중파, MBC 장악할 힘이 없으시다고요? 국회는 힘이 있습니까, 법안 발의하는 대로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불편한 방송사 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입니다. 그 언론 정책은 이명박 정권 때 그 일을 했던 언론 기술자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역사에서, 기록에서 언론장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장악을 했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갖다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이동관을 들여놨을 때 '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구나', 언론장악 기술자 최정점에 서 있던 이동관을 데려다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수순들은 KBS 사장을 자르고 방문진 이사를 자르고 MBC 사장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KBS는 수신료 가지고 압박하면서 말 듣게 만들고 MBC는 민영화시켜 가지고 말 듣게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진숙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MBC기자협회에서 최초로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 시절에 잘했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점에 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지요. 세월호 그 참사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부모들에게, 유족들에게 1인당 보험금이 얼마다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계산을 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요. 팽목항 가 보신 분들, 그 현장 멀리서 배가 가라앉는 장면, 부모들이 오열하는 장면들 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를 냈던 장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철 씨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제가 요새 날짜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 증인으로 온다고 모자를 눌러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누가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MBC 동기이자 지금 MBC언론노조 집행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찬 기자였는데 정말 뭘 보듯 경기하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철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젊어서 인생의 1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저 인간이 무슨 증언을 하겠다고 여기를 나타났나 싶어 가지고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저희한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핍박받았던 후배들한테 빈정거리는 말투로 조롱을 하고 들어갔어요. 후배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던 사람들, MBC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 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권력에 빌붙어서 뭐 한자리해 먹고자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진숙 씨,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려던 사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앉혀 놔도 그 검증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진숙 씨는 앉히기도 전에 그 부적격성이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치인 아닙니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가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아 놓으면 욕에 가깝습니다. 참사에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저희가 이런 이진숙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틀을 내내 앉아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진짜 답답하네요.

답변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자기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자료 안 내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럴 때에 과방위에 있지 못한 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 직접 얼굴 마주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고 싶답니다. 탄핵을 해도 버틸 거예요, 훈장 달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하겠다고 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 가서 공천 달라고 하면 공천 주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가도 피해를 입힐 사람입니다.

제가 MBC 직원들 남자 중에 가장 먼저 육아휴직이라는 걸 썼는데 한 2년 정도 파업하고 공영방송 한번 지켜보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잘 챙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 유선염 걸려서 젖 물리고 있는 아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자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웠던 게 당시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했던 구성원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더니 2010년에 있었던 국정원 보고서를 보고 ‘야, 이것을 진짜 후배들에게 실행을 했단 말이지’, PC에다가 트로이컷이라고 하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을 하고 ‘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부서에 보내고 결국 모아 가지고 교육대 같은 데 보내서 하루 종일 먼산 바라보게 만들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면 먹고살 길 그래도 터 주겠다고 빵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MBC에서 벌어질 일들은 방문진 개편 이후에 먼저 현재의 사장을 압박하고 조직개편을 강요를 할 겁니다. 신기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무슨 책 보고 하시는 건지 고스란히 하고 계세요.

여기에도 3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개편은 내부를 통제하고 제작과 편성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편을 빌미로—이거 보니까 개편 시기에 조직개편을 하겠네요—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판적인 팀을 해체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 통제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제작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했다. 이는 2012년 파업 후 이어진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의 한 방편이었다. MBC는 파업 투쟁이 있던 2012년 PD수첩, 남극의 눈물 등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분리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을 만들었다. 시사 PD와 기자들을 시사제작국으로 배치했다. 기자와 같은 업무에 투입된 PD들은 업무 방식이 서로 달라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약화됐다.

시사교양국 소속 PD들이 두 개의 국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분리되어서 위계적 통제에 대한 내부적 견제력 역시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교양제작국마저 폐지되면서 비판적 PD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경영진들의 조직 장악은 더욱 쉬워졌다.

비판적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비판적 성향이 무뎌졌다. 특히 민감한 정치 현안은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인 시사·탐사 프로그램인 PD수첩도 신뢰가 떨어졌다.

KBS 조직개편도 시사·탐사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이 됐다. 2010년 KBS는 저널리즘 기능을 통합하겠다면서 추적 60분을 보도본부로 옮겼다. PD들이 제작하는 탐사·고발·시사 프로그램을 기자들이 소속된 보도본부로 이관한 것이다. 사회고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아이템은 애초 기획 단계에 통제되기 일쑤였다.

제작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TV제작본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V제작본부는 PD들 중심이고 보도본부는 기자들 중심이다. 정치권력에게 KBS·MBC의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비판의 칼날은 정권을 향할 수 있으므로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PD들은 기자들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높다. 제작 아이템과 방향에 대해 위계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조직적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 애초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만들어 간 것이다.

종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야가 항상 이 방송 문제로 다툴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종편입니다. 종편 출범 이후에 운동장이 한 9 대 1쯤으로 기운 것 같아요. 편파방송을 죽어라고 해도 방송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 때 TV조선 이런 데들 심의 내용들 국감에서 가끔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MBN은 자본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폐국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나마 방송사 함부로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놨어요. 조건부 승인을 하니까 이게 마치 그때 있었던 잘못들이 다 사라진 것마냥 이제는 어디에서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종편을 대면 방송 심의가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 종편이 태어났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2008년 12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 중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을 담은 것으로 비교적 논란은 적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겸영금지 조항, 이 조항은 일간신문하고 뉴스통신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아마 보도전문채널 교차 소유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겸영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 자본의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겸영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디어 진영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 읽어 보니까, 이것을 나경원 의원이 하셨군요.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지요.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준 겁니다.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언론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데들은 순치시키고 자기들의 스피커를 키우는 일. 종편은 누가 봐도 보수의 스피커입니다.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MBC를 잡아 보고 MBC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민영화를 시키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당시 발의했던 모두 7개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더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이 4개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 평가를 받으며 미디어 악법, 언론장악법으로 통칭됐다.

당시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나경원 의원 발의안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신문법의 주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신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론 독점,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등이 불거졌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편·보도PP의 소유 허용, 신문·통신의 지상파·종편 PP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의 종편·보도PP와 위성방송의 소유 허용,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중재법,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 IPTV에 적용을 해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자라는 내용을 한나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피해자의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조치 통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미 다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몇 분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당시 박병석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를 시키면서 통과가 안 됐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들 많이 하셨는데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는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그냥 단 한 줄,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고 끝납니다. 당신들 그렇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으면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라. 똑같은 보도량과 똑같은 위치에 보도를 해라 이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이 온라인상에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청구권을 행사하자. 지금도 '노무현' 치면 '논두렁 시계'가 떠돌아다닙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으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는 청구권을 행사하자.

세 번째는 말씀드리지만 언론사의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언론자유가 보장된 것이지. 헌법 21조 1항에 담고 있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고. 이것을 언론자유라고 포장을 하면서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자유가 훼손된다라고 해 가지고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조 4항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인에 피해를 입히면 배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증액 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조항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아까 얘기를 언뜻 제가 들어서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처음 이 논의를 했던 17대 국회에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들이 법상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너무 이르다, 좀 더 무르익었을 때 이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징벌적 손배가 담겨 있는 게 법률이 한 20개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면 몇 년 싸워서 이겨 봐야 삼백 오백 이렇게 나온답니다. 변호사비 댈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법원도 억울함을 알면서 증액배상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증액배상을 못 한답니다. 실제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입증책임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후속적인 조치 아닙니까, 가짜뉴스로 판명되면?

그래서 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휘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는 국민들이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받고 구제되고 언론사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뽑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원래 필리버스터를 1번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는 사실 한 7시 대, 한 8시 대 정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국민분들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단 30분을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 측에서 몇 시간씩 하면서 시간을 끄실 테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분들에게 왜 언론장악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지금 이들이 현란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2008년에 있었던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 드리고 싶었고 실제 그 언론장악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10년간 버텼던 정말 증언자로서의 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뒤에 하는 것을 아셨는지 앞에서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자정을 넘어서야 들어오니 들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자료들을 좀 읽곤 합니다.

요즘 TV 보는 사람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TV 보지 않는다는 게 뭘 안 본다는 겁니까? 뉴스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대부분의 방송들은 재송신이나 IPTV나 또는 OTT를 통해서 보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실은 방송사의 경영구조가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직수율 자체가 10%였던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직접수신을 하는, 안테나를 꽂아서 직접 수신하는 것은 채 몇 %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즉 직접수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전에 2014년도 기준으로 방송사들이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4.8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이게 공중파 3사 기준이에요. 태양의 후예가 나왔던 2016년도인가요, 이게 사전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7.6억까지 뛰었습니다. 지금은 회당 10억 가까이 돼요. 4.8억인 당시에도 방송사가 황금시간대에 틀어서 광고를 완판해도 3.8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다 PPL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워낙 나빠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겨우 한 번 방송합니다. IP를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판매도 할 수 없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뉴스인데 뉴스의 힘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상파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TV를 안 본다는 게. TV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법은 공영방송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을 만들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방송사가 자유롭게 방송을 준비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다만 우리 국민을 현격하게 해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니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권의 후견제도, 9명 11명 뽑는 이사진들을 정치인들이 뽑아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막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보통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원회나 방문진이나 KBS 이사로 보내는 사람들이 대개 본인들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서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로 이사진들을 구성을 해 놓으니까 그 이사진들이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사진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장이 나오니까 방송이 편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나 모두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후견제도를 좀 없애 보자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100% 또 똑같이 6 대 3 할 것을 5 대 4 하면 그게 바뀝니까? 도돌이표 하듯이 똑같이 하지 말자, 2024년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한 해외 모델이 뭐냐? 지금 오늘 NHK도 얘기하시고 BBC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BBC 제도는 폐지됐어요, 2017년에. 지금 현재 BBC 제도는 말씀하시는 그 좋은 BBC 제도가 아닙니다. NHK도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성공했다는 모델이 독일식 모델인데 이 독일식 모델 자체가 다원주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담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독일은 연방제이고 연방제에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각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담아 오느냐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개선법과 좀 다를 뿐입니다. 다원주의 거버넌스란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독일식 방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디 시민사회단체가 달리고 노조가 달리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어 드렸듯이 독일의 ZDF 방식도 마찬가지, 이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이 떨어지면 약간 이런 증상이 오나 봅니다. 약간 어지럽네요.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직은.

뒤에 있네요. 다른 자료였습니다.

방송평의회라고 우리말로는 아마 해석이 되나 보지요? 여기에 담고 있는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노동계—독일 노조연맹 사무노조 공무원노조 전국농민연맹, 여성계—여성노동자연대, 환경단체—로빈후드 환경연합 자연보호협회 환경보호 시민연대, 순수미술협회, 음악평의회 이런 데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장하신 바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한국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게 지난 21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과정이에요. 다양한 계층에서 모여서 과연 여기에 어떤 다양성을 담아내야 되고 어떤 다양한 개체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논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선정을 한 학계, 방송학회·미디어학회, 각 언론에서 일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들, 방송·기술·기자, 이분들이 왜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이분들은 민노총이 아니에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방송사에 입사하면 다 민노총이 됩니까?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좌파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왜곡하지 마시고 여기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단체나 또는 다양성의 집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양성의 집단을 제안해야지요.

그리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추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100명 공모로 뽑는 겁니다. 요즘 네이버 좋아하는 얘기지요,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 만들면 되지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나이별·연령별·지역별 다양하게 담으면 됩니다, 100명을.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정치인 100%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이사진들을 단 5명만 담아내서 회석을 시키고 그도 안 되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들 PT 받고, MBC가 지난번 그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박성제 사장 재임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이미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MBC가 50인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니까 남들이 다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박성제 사장이 떨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안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덜 정치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거부하는 거지요?

아울러서 방송통신위원회 5인 구성도 이것을 반대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아니, 이명박 때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5명으로. 다 구성을 마쳐서 그래도 생색이라도 좀 내려고 다 5명 갖춘 다음에 방망이라도 두드리는 시늉이라도 했지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그 당시에 아마 방통위원으로 계셨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겠지요. 하지만 방망이 두드려서 할 것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YTN 매각 당시에 2인 체제에서 어떻게 의결했습니까? 과장이 와서

줄줄줄줄 YTN 매각 사유에 대해서 읽고, 그 매각 사유에 대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줄줄줄줄 읽고, 그러고 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견 없으니까 땅땅땅 방망이 쳐서 매각이 결정이 된 겁니다. 국가의 자산 그렇게 함부로 매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YTN 어떻게 됐어요? 극우 성향의 MC들이 들어오지요. 편파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각을 해서? KBS 순치시켜 가지고 편파방송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썼던 방식, 수신료로 압박해서 사장을 잘라 내고, 사장을 통해 조직을 순치시키고, 편파방송 유도하고, 정부 비판 못 하게 하고, 유리한 방송 내도록 하고. 이게 보수진영에서 정권을 장악하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반박을 하실 때는 꼭 좀 저 언론장악백서를 한 번 좀 읽고 나와서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셨던 것들이 날짜 다 기록돼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자라고 여러 단체에서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하나 들고 있는 것……

제법 두꺼운 문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어떻게 왜곡·편파 보도가 일어났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문서 두께가요 총 567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도, 2012년 대선 보도,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보도, 세월호 참사 보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보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사건 보도,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업 보도, 사드 배치 보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기타 왜곡 보도 포함해서 앞에 안내하는 것을 빼고 총 560여 페이지로 왜곡·편파 보도 백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강 종합계획 확정에 힘을 실어 줬던 동아·중앙 이 2개의 보도들, 조중동은 '대운하 포기는 MB의 결단이다' 이렇게 추켜세웠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아주 묘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6월 30일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단. '야,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하지 않아 주신대. 이런 결단을 했어'라고 보도를 냅니다. 조선일보는 1면에다가 '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 내에 추진 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운하 의혹이 있었겠지요, 그러기에. 그런데 대운하 의혹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환경이 아닙니다—'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런데 16개 보 중 11개 보 위치와 비슷하고 대운하의 관문과 성격도 지적이 나왔다'. 결국 4대강이 대운하 계획을 교묘하게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조중동에선 힘 실어 가지고 '대운하를 대통령께서 안 하신대'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것을 '결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 놓지요.

슬픈 보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대강 가지고 하려면 진짜 정신도 없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요즘 윤석열 정권을 보고 있으면 딱 2014년 4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일련의 한 2~3년 과정을 다시 다른 형태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각종 의혹들이 밝혀지면 거짓말로 해명을 하고 거짓을 파헤치면 덮기에 급급하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정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 주고, 이태원 참사도 그랬는데 채 해병 죽음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적어도 고속도로 내려는 IC 쪽에 본인 형의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논란이 되니까 백지화는 했습니다, 백지화는. 그런데 제가 2022년 10월 국감 때 양평군에 있는 병산리 쪽에 이상하게 지가 상승을 노리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번까지 찍어 가면서 지도 띄워 놓고 열심히 원희룡 전 장관한테 설명을 했더니 상대 측에 있던 국민의힘 위원님들 상당히 부산하더니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것은 선산이다. 그리고 선산 관리를 위해서 일부 형질을 변경했다'. 정말 선산이고 일부 형질을 선산 관리를 위해서 했습니까?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터지고 난 다음에 밝혀진 것은 그 위에 300m 위에서 진짜 선산이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대통령실의 그 거짓 해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건데. 이후에는 그런 거짓 해명조차 없어요. 이게 2014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잘 감싸 줬던 게 종편들인데, 제가 그래서 언론장악의 최대 치적은 이명박 정권에서 종편의 탄생이다. 종편들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정부 탓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그런 보도들을 냅니다.

TV조선과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 '이번 세월호 사건 대처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지적하기보다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질타는 빠진 채 10년도 더 된 전 정권의 책임을 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의 출연자 진성호 씨는 유병언 일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해진해운에 면허를 넘긴 것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이라면서 DJ 시절의 해수부장관 이름 대고 다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목소리 높여 주장을 했습니다. 또 91년 해수부의 면허를 받고 4년 동안 배를 확보 못 했다는데도 면허 연장을 해 줬다며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해수부 관료들이 민간단체에 가서 일을 해서 집단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심해졌다라는 말을 받으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하자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공기업 하나는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A의 직언직설 여기서도 주장이 좀 비슷하네요. 출연자로 나온 양욱 씨가 사고 후 대처 과정을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지휘가 제대로 됐는지, 그 구조를 개혁하고 잘못을 지적해 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대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전부터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것이다. 2년 3년 전부터 해경의 해난구조 부분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고가 딱 난 거다. 역시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된 문제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잘 하려고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종편들 잘 만드셨어요. 정부는 비판해도 계속해서 정부를 감싸 준 건 또 TV조선입니다.

대통령은 유족을 만나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나 신해식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간 모습을 보면서 '아주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간 거고 유가족들의 항의 및 물론 격려도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자체만 해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를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선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 욕을 먹다가 마지막에 박수를 받았다. 대단한 정신, 이게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이 2주가 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단 한 줄도, 여기는 방송이니까 한마디도 없었겠지요.

TV조선 또 다른 프로그램 신통방통에서는 박 대통령 사과가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수습을 독려하는 것, 이것은 사과 이상의 행동이다'.

자식 죽어 간 부모들 앞에서 사과 한마디 않고 가서 '관계자들, 너희들 왜 잘못했어'라고 질책한 게 사과보다도 훨씬 훌륭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 이후에 5월이 됐어요, 5월 19일. 박근혜의 사과와 눈물의 진정성을 종편들이 앞다퉈서 부각을 합니다. 장악됐던 MBC는 박 대통령 담화를 부각하고 가족들의 반응은 무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 그간 대통령에 대한 책임 회피 비난을 염두에 둔 듯 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등 기존의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같은 대책 발표 속에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 등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아니라 청해진해운과 선원들, 해경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머문 것 이런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담화에 대한 지상파 3사의 보도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대통령 띄우기, 정부 무비판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를 한번 수치를 보니까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게 KBS는 첫 번째 보도·두 번째 보도, 여야 반응은 네 번째 보도를 했고요, 유가족 반응은 세 번째 보도를 했습니다. 완전히 장악됐다고 봤던 MBC는 담화문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한 것을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 보도에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유가족들의 반응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반응도 다섯 번째 보도 끝에 가서 잠깐 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대통령의 중동 방문, 개각 전망, 해경 해체, 이게 나머지 보도였습니다. SBS도 똑같습니다. 가관이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고는 당시 박 대통령의 눈물 장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눈물 흘렸다 이거지요. SBS가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이게 네 번째 기사 제목인 것 같아요. '눈물'을 제목으로 강조를 하고 "영웅 호명 때 '눈물', 4·16 '안전의 날'" 앵커 멘트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 가던 박근혜 목소리가 후반부로 가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구하려다 생명을 바친 세월호의 의인 10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던 도중에 눈물을 또 흘렸다라고

부각을 했습니다.

MBC 윤지윤 기자라고 ‘눈물의 사과, 안전의 날 제안’, 네 번째 보도입니다. 그리고 앵커는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이름을 거명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것 예전 땡전뉴스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KBS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 해경 해체’, 담화 발언을 두 번 녹취 인용을 했고 그중 한 장면이 의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TV조선 톱보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월호 영웅’ 눈물”.

그런데 이 보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보도 형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이렇게 언론장악은 일종의 기술과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은 그때 안 하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 지금 저희가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언론 개혁은 총 4개의 과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온라인상도 역시 마찬가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스탠드라고 해서 포털에서 뉴스를 줄 세웁니다.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안 타겠습니까? 뉴스를 줄 세우고 거기서 보도 경쟁을 일으켜요. 예전 국회에 출입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국회 출입기자 수가 일이백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 10배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속보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포털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 보고 거기다가 댓글 달라는 게 포털의 공정화법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왜 포털이 무슨 자격으로 뉴스를 선별하며 줄 세웁니까? 언론이 점점 포털에 종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과 방법이 아주 유사하게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MBC를 나오면서 제 후배들이 만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는 이제 방송 놓은 지 10년 지나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자신도 없고 너희들 방송 열심히 하고 나는 나가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도 적어도 지난 10년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저는 진짜 일을 잘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가 좀 아프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져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그랬어요. 미디어를 좀 진흥을 하고 다시는 언론장악과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동관을 데려오는 모습을 딱 보고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당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동관, 이진숙, 김재철, 김장겸 또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이 작업을, 현업을 하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상휘 의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분들은 어떤 책임도, 어떤 사과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방송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서 정치후견 제도를 반드시 덜어 내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이사들을 집어넣고 그 숫자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공영방송을 손안에 넣고 사장을 바꾸고 민영화를 하네 마네, 뉴스가 좋

네 마네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갑니까?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저는 실무적으로는 2008년부터 봐 왔습니다.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안했지만. 제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이……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방통위법 일부개정안,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2인 체제 만들 때 순서가 있었지요. 임기가 남아 있는 한상혁을 내친다, 국회 측, 야당이 제안하는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없이 육칠 개월 그냥 들고 있었지요. 임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고 방통위 이사도 마찬가지고.

제안해라, 말은 쉽지요. 저는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빨리 8월 12일에 있는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8월 말에 있는 KBS 이사를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장악이 된 것 같겠지만 기분만 좋으실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방송을 장악해서 결국 그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 설명을 드렸던 박근혜 씨,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눈물이 왜 악어의 눈물이냐 하면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총탄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울지 않던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보수 측에서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월호 참사가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본인이 그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고 판단을 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별명이 얼음공주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또 종편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따요. 창의적이에요, 굉장히. 얼음공주의 눈물, 달기똥 눈물, 비루, 진정성. 기가 막힙니다. 조중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얼음공주의 눈물.

해경의 구조에 대해서 당시 세월호 때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일자들을 나열해서 보면 4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MBC·KBS 메인 뉴스의 기사 제목들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KBS 뉴스 9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학생 20명 살린 용감한 승객들’, ‘침몰 순간에도 학생 먼저 구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초기가 4월 17일이고 18일 이어지는 그때 세월호 승객이었던 김홍경 씨 인터뷰가 KBS하고 MBC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분이 사고 당시 아이들 수십 명을 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용인데 당시 상황의 뉴스 가치로 봤을 때 어떤 뉴스 가치가 메인 뉴스 제일 첫 꼭지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뒤로 미루고 그 내용을 다뤘다는 명분은 쌓고 싶고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뉴스 중에서 국민들이 혹할 내용들은 위로 올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많이 드시던데 보여 주고 싶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언론의 힘이기도 합니다.

MBC 같은 경우에 이때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저도 팽목항을 가 보기는 했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당시 MBC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MBC 기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그 시절에 기사들이 쓰여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이런 MBC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런 기사 쓰는 MBC를? 당시 이런 보도가 나갈 때 본부장이 이진숙입니다.

이런 세월호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당시 동아나 조선, 문화일보가 앞다퉈서 찾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인데 '믿었던 대통령 지지율마저 무능으로 급락하다 보니 마음이 급했다. 진도 앞바다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이고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 출구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시기상조이고 예의에 맞지 않았다. 기껏 출구전략을 내놓은 이유라는 것도 지역경제 우려'.

문화일보는 사고 열흘째인 25일이 돼서 사설에 '세월호 참사, 경제 충격도 고심할 때다'라고 강조를 하더니 급기야 머리기사에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이 멈췄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이후에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사회 전반의 죄책감이 일종의 집단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사실상 올스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민간소비가 급감하고 5월 나들이철의 관광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경제도 마비 상황에 빠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특히 부제에다가 '희생자 가족엔 미안하지만 애도 분위기 가라앉기를'…… 이게 언론사들이 지나고 나면 반성을 안 하니까 큰 문제예요. 애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이런 애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시도들도 여러 번 있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현상들이 경제를 좀먹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이다라고 들면서 경제 살리기로 출구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모든 비판들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 선동으로 호도를 하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동아 문화, '세월호 참사에 무능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반정부 투쟁, 정치 선동으로 몰고 갔다. 이 신문들은 어린 희생, 국가 재난을 불순한 세력의 선동 도구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많이 듣는 내용 아닙니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도리어 또 다른 선동이라고 말할 만하다. 세월호 추모 인파들은 정부의 우왕좌왕했던 초기 대응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0일 자 "유족들 시위에 끼어든 한 외부 인사, '여러분처럼 조용한 건 처음, 안타깝다'", 이게 제목입니다. '시위꾼들이 유족들 농성장에 나타나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 8일 밤 세월호 유가족들은 KBS 보도 행태와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으면서 KBS 측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농성장에 합류해 소신 발언을 이어 간 것이다. 유족들도 문제 삼지 않은 일에 대해 조선일보만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날 조선일보 1면 팔면봉에 '세월호 가족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 정치 선동꾼들 또 찬조 출연, 평소엔 뭐 하고 지내는지 정말 궁금'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동아일보도 ‘누가 왜 세월호를 정치 선동에 악용하는가’라는 기사에서—사설입니다—‘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세월호를 반정부 불쏘시개 삼는 사람들’이라는 사설에서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대통령 퇴진 요구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게 힘든 것보다 옛날 기사를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자꾸 기시감이 들어요, 요즘 상황과 빗대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언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상황들을 타개를 못 하고 사실 아주 자주,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 아주 자주 당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종편 탄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YTN 매각을 통한 YTN 장악, KBS 사장 교체를 통한 KBS 장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MBC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잘 먹히고……

특히 문체위 내에서는 조중동에 대해서,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지금 조선일보 신문지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 싸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폐기되고. 지원금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 문제도 지금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읽다 보면 기시감이 들어요, 자꾸. 지금 주어하고 날짜만 바꾸면 얼추 그냥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송 4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어 가면서 막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하려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은 국회의 법안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 게임 이론에서 보는 치킨게임입니다. 서로 물러나지 않고 하고 있지요. 그러고는 저희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아니, 이미 게임이 치킨게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물러나면 죽는 것 아닙니까? 협치를 하자고 했으면 적어도 이 게임을 시작하면 안 돼요. 치킨게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시작하면 죽거나 겁을 먹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게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협치가 되는 건데 본인들이 협치를 할 생각이 없이 게임에 참여를 해 놓고 야당에게만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게, 이게 협치를 주장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결국 치킨게임이 시작되면 겁을 먹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언론 보도를 막을 수가 없게 되지요. 적어도 한 곳에서라도 튀어나오고 그것이 일종의 문제가 돼서 사안이 커지고 밝혀지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악착같이 막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 4법에 담겨 있는 법 중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되거나 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진행하려던 것이 진행이 안 되겠지요. 진짜 방송 4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방안을 좀 제시해 보겠다, 시간을 달라 하면 저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통위법 통과시키시고요 방송법 내에서 사장의 임기 보장, 이 두 가지만 먼저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BC를 장악할 능력도 없어’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MBC 사장 임기 지켜 주고, 뭐 여러분께서 바꿔 놓은 KBS 사장도

임기가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 5인 체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편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논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전에 논의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그건 해외 사례 보니까 이렇더라,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더라 이런 논의를 제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장이 순수하려면 일단 방통위법 통과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 걸 게 아니라. 나머지 방송 3법 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에서 즉시 시행을 포함해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 안은 별도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하지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방송 4법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방통위 2인 체제 고수를 해서 방문진과 MBC 사장을 빠르게 교체하겠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다시 반복되지만 선출된 우리,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표현하시던데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요. 저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장만 그대로 놓고 보면?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대로 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108석 비율 정도만 가져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야당 6, 여당 3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1 구조니까. 그 정도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근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방통위법 일단 통과시켜서 근거를 명확히 하자,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즉시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사장 건드리지 않겠다는 걸 담보하겠다, 위임된 권한들로 그 비율에 맞게 그러면 6대 3을 의석수대로 하자 이런 제안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장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BBC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하시던데 제가 밖에서 듣다가 '야, 저걸 저렇게 섞어 쓸 수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들었던 2007년의 BBC 제도하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일종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로 경영과 관리 감독을 분리해 놓았던 것을 경영과 관리 감독을 통합해 놓은,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영국 내 비판이 있는 그 제도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 제도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국 BBC 제도로 돌아가면 지금에 있는 우리 제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예전의 영국 BBC 트러스트 제도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막 두 가지를 섞어 쓰면서 마치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주장 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려면 명제부터 제대로 깔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어딘가 들으시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구성을 명문화합시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바꿉시다. 이 정도 들고 나오시면 그때는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고밖에 지금 읽히지가 않아요. 방송 4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

하자, 없애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위임되지 않은 권력들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뒷말 맞지도 않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제도를 MBC, KBS, EBS에 각각 적용하다 보니까 법은 하나인데 3법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법인데 이 하나의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10년간 논의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왜 그것을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까? 진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민간기구의 이름을 빌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서로 다 아는 뻔한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보도들을 좀 읽어 드리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한 분 주장 이야기를 좀 길게 들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셔 가지고 귀에 박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질렀던 일을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MBC, KBS, YTN의 부당징계자 명단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읽어 드렸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6페이지 정도 걸쳐서 부당징계 명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당징계자들의 징계 사유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이게 방송사의, 그러니까 공중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흑역사는 실제 2008년부터 설계가 돼 들어와서 2012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2012년 명단을 보면 170일 파업 뒤에 해고, 강제휴직—강제휴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정직, 감봉, 부당전보가 MBC에서 194명, KBS 95일 파업해서 11명, YTN이 연대 파업했다고 정직 4명, KBS 기자협회의 공정방송 요구로 제작을 거부한 담당자들 정직과 감봉을 당했고요. MBC PD수첩 작가는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정재홍, 장형운, 이화정, 이소영, 임효주, 이김보라 작가들은 다 해고당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아이템은 검열되고 비판됐습니다. 거기에 담당했던 김혜성, 김지경 두 사람은 정직을 당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부당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하는 걸 거부했어요. 거부했던 강연섭 정직당했습니다. 이상호 기자 해고됐고요. MBC 보도를 비판했다고 이용주 정직당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했다고 정직을 1명이 당했습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낙하산 MC 반대하는 걸로 부당 전보를 당했습니다. 너 딴 데 가서 방송해. 방송도 아니지요, 다른 데로 내쳐졌으니까.

이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에서 저지른 만행의 결과들입니다. 사람들 이름 기록만 가지고도 30분 이상을 읊어도 모자란 이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주변인들,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법안 반대하겠다라는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 적어도 이런 법 반대를 할 때는 이진숙 같은 사람은 데려오면 안 되지요.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진숙 데려오면서 방송 4법이 뭐 하다 뭐 하다 하면서 반대를 합니까?

그나마 김홍일, 참 지나고 나니까 구관이 명관 되네요. 어디서들 그렇게 사람들을 골라 오세요?

(「힘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29개 정도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사 임명, 뭐 KBS 이사, 사장 임명 제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인사 같은 것 하는 줄 아는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미국의 케이스를 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BBC가 경영과 관리 감독을 왜 분리를 했겠습니까? 왜 독일은 각 공영방송마다 방송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치인들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외 사례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수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제때 해체를 못 해서 그게 저희의 천추의 한으로 남는데 그러면 적어도 법으로 보완을 해서, 없앨 때까지는 법으로 보완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전법인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겠지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해도. 김행보다는 멘탈은 확실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행 때는 적어도 중간에 도망이라도 갔는데.

그런데 임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뷰를 보고 예전의 자료를 보니까 방문진 이사 감행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은 제척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을 해야 되는데 제척도 또 방통위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척사유가 있는데 제척을 하질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그게 불법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 것 올려서 제척을 하겠어요? '제가 방통위원장은 됐는데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제 제척을 좀 의결합시다', 본인이 방망이 휘두르고 제척해요? 1인 체제가 됩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진숙 같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거나 그와 동시에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방통위법은 통과를 시켜야지요. 여기에다 필리버스터를 겁니까? 개중에는 당이 시키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굳이 여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왜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예전 자료들을 조금 더 읊으면서……

제 다음 분이 누구시지요?

(「박대출」 하는 의원 있음)

오셨어요? 와 계세요? 끊어 드리면 바로 올라오시겠네요. 그러면 저도 새벽 기차를 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언론노동자 출신입니다. 제가 MBC에 면접을 볼 때 '왜 MBC를 지원하셨습니까?'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거래소에 있을 때 마지막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황방송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예전에 '식사 좀 하시지요. 뭐 좀 하시지요' 이런 기자들 접대하는 것이 워낙 홍보실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하면 그때 MBC 기자들만 유일하게 거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카드 나오고 저희도 저희 돈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뭘 잘못하나 했는데 '저희는 회사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면접을 보는데 1000여 명 정도 시험 봐서 마지막 3명이 올라가고 1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사장의 그 질문에 제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남에게 빚지지 않는 기자들이 있는 방송사에서 일하면 적어도 보도를 할 때, 취재를 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MBC 지원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합격을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적어도 정권의 눈치, 재력의 눈치 이런 것 보지 않는 언론사에 가서 떳떳하게 방송하고 취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방송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이 됐는데 갑자기 ‘준호야, 갑자기 이상한 조중동의 방송을 허용을 해 주고 거기서 보도채널 만들어서 주구장창 보도를 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든대’, ‘비록 6년 차기는 했는데 설마 예전같이 땡전뉴스 같은 것 만들까? MBC가 설마 장악이 되겠어?’ 그 생각은 채 1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장악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제가 기시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데려오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하나같이 그때 인물들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또 똑같습니다. 돈줄 죄고 협박하고 쫓아내고 바꿔서 조직원들 바꾸고 보내고 갈아 치우고 그러고 나면 보도가 바뀌고 비판은 사라지고. 이런 것을 묵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번 방송 4법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 4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나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나 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 달라, 비판을 할 때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 달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듣다가 들어오시고 이제 박대출 의원님 들어오시니까 또 동료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방송 4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필리버스터 정도 들어오시려면 이 법안에, 방통위법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은 여러분께서 먼저 제안하셔야 됩니다.

(「졸려요」 하는 의원 있음)

피곤하시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독일의 ZDF 방식입니다. 이 ZDF 방식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어떻게 그대로 베낍니까? 국가가 다른데, 사회 구성원이 다르고 국가 운영하는 체계가 다른데. 다원주의의 함의와 영국 BBC 그리고 독일의 ZDF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다른 짓 할 거다, 이건 이미 MBC에서 50인의 사추위를 구성해 가지고 사장을 뽑아 봤더니 여러분께서 걱정하던 박성제 사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던 사례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치후견제를 좀 없애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나이, 연령, 성별, 지역까지 다 안배해 가지고 100명을 구성을 해 보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장을 2배수 이상 추천을 해 보자 했더니 여기에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 안 된다고 하고 21명 이사진을 구성을 하자, 그중의 5명만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는 노조하고 손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방송 구성원들이 노조원입니까? 직장을 다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21년간 직장생활 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조가, 그 노조를 노조로 잡기 위해서 복수노조제를 채택을 한 게 이명박 정권 아닙니까, 2011년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거신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던 최 의원님의 논리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영국 BBC 사례도 너무 왜곡되게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할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장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 하셨는데. 마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법이 걸려 있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지 않거나 그 사람이 가서 2인 체제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추천해 봐야 임명하지도 않을 야당 몫 추천이나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정말 사장 바꾸실 생각이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그 법만 따로 떼서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진숙을 통해서 MBC 장악하려는데 자꾸 시간, 너희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저는 얼마 전 전주에 내려갔다가 이용마 선배의 지인들을 만났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많이 컸더라고요. 이용마 선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우장을 지냈었는데, 사우장을 지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애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넓은 광장에서 막 뛰어놉니다, 아빠도 찾고.

MBC가 장악돼 있던 10년 동안 제가 불러 드린 이 명단 내의 해고됐던 사람들, 그중에서 병에 걸리고 또 돌아가신 분,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오늘 청문회에 들어와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오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적어도 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영방송 지키겠다고 싸우다가 해고돼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백수로 살아가다가 마지막까지 인터뷰와 집회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기록을 남겨 주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자신의 아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공영방송의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아직 들어오시려면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 줘야 되는데」 하는 의원 있음)

(「밖에서 다 듣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 필리버스터 끊고 방통위법 같이 처리하시지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정족수 맞춰서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 전체적인 방송 4법에 필리버스터를 거시는 그 명분과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들어 보면 적어도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은 통과를 시켜 놓고 나서 나머지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돼요.

방통위 2인 체제 이것 불법성은 아까 발언하시면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장악당하지 않아 보신 분들이, 언론장악이 어떤 건지 겪어 보지 않으시고 이 안에서 방망이 두드려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도. 한 의원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 많이 당했다며」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이라서 제가 말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 방송장악의 일환이에요.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방송 4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이미 사회적 논의와 1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4법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했었던 공영방송의 장악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법안입니다. 방송장악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이동관, 김홍일 같은 사람 내려보내거나 여러분이 불편한 보도, 윤석열·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보도 장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송 4법을 막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새벽까지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가겠지요. 이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이 펼치는 여러 가지 반론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끌기지요. 어차피 원래 이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장을 하시는 바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소위 위원장, 간사께서 어떻게 도망 다니시고 소위를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가 법을 이미 발의를 한 상태였고 이미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회피를 하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대출)

(03시01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우주항공산업 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 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

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공정과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영방송이 충성을 다하는 그들만의 방송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 4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거기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에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제4조 1항, 제13조 1항·2항을 위반하였다. 즉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의 견해가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2인의 출석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내용에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명시해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5인 체제가 다 충족되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입니다. 최적의 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5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법성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 이를 더 보충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5인 체제가 아닌 2~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해서 질의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위원장 및 일부 상임위원들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후 최근 신규 상임위원 임명 등을 통해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에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이 임명되지 않아 상임위원 3인만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3인의 상임위원 중 2인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통위규칙 제3조 1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바 결국 위원장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 및 방통위규칙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에 있어 의결정족수의 산정기준인 재적의원 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적의원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위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7구합17953 판결).

또 그리고 방통위는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관으로 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회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법 제73조제1항의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적의원은 법정의원정수가 아니라 의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자격 상실, 제명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의원 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재적의원은 현재의 실제 의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1. 판례 및 국회법 해설서에는 재적의원 수 산정 시 궐위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2. 위원회 회의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점. 3. 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시 공석인 경우까지 산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회의

의결정족수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니라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위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회의 의결정족수의 판단기준인 재적위원 수는 법정위원 수가 아닌 임기 만료로 인해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실제 위원 수, 즉 공석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재적위원 수라는 것은 원래의 정원이 아니라 현재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 검토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에서 사실관계 관련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2017년 3월 26일과 2017년 4월 7일에 각 임기가 만료되어 궐위 중이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귀 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 3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귀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 방통위법은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이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귀 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궐위 중인 위원 역시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만일 귀 위원회에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임위원 3인의 출석 및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말합니다. 정족수에는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사정족수와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인 의결정족수 등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재적위원이라 함은 그 문언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카합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재적위원의 판단의 기준 시점이 최초 위원회 구성 시인지 결의 시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위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의 당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법제처 역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방통위법상 다른 특별 규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귀 위원회의 최초 구성 당시 기준이 아닌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적위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이유로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제3조제2항에서 의결 등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항의 규정이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방통위법 제14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원 중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모순된다는 점.

의결정족수 등 정족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바 만일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 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전원일치에 따른 심의 의결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위원 퇴직·임명 절차 지연 등으로 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재직 중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귀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위원 중 1인이 궐위된 경우 4인의 위원으로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궐위 등의 사유로 심의 의결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심의 의결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반드시 5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 제111조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삼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귀 위원회의 의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권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3인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 출석 및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모두 의사정족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1항,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3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이외의 상임위원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3인 내지 2인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같이 그 이외의 상임위원회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궐위 중인 위원 역시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 3인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찬성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법률자문 검토 결과만 하더라도 3인 체제로도 가능하다, 반드시 5인 체제만으로도 운영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비슷한 내용의 법률자문 2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서 2인 체제와 관련해서 법률자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첫째,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회의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의 경우 재적의 문언적 의미 및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등의 해석례 등을 고려할 때 공석인 상임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적위원에 공석인 상임위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상임위원이 2인만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소집 절차에 다른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하는 의견을 법률자문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아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에 2인만 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즉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한준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률자문 검토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제1항의 의미 및 문제의 소재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4조제1항은 그 제목을 ‘위원회의 구성 등’이라고 하면서 귀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 조항에 더하여 제7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 5인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있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위원장의 단독 소집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이 있는 경우라면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일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여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회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라면 회의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볼 다른 실정법적 근거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할 때 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2인의

경우에도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여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적위원이 동법 제4조의 위원회 정수인 5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석을 제외한 실제 활동 중인 위원의 수를 의미하는 건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된다면 위원회 정수의 과반수인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심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적위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재적의 의미는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국회법 등에서 사용되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 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적의 의미에 근거하여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11년 10월 27일 안건번호 11-0480 법령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상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임명되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상임위원 정수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회의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법 제5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의 구성 방식 등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절차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만 있다고 하여 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10월 20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의 내용, 법률 검토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검토의견 요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질의의 선행, 재적 5인으로 구성될 것이 법률상 예정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5인의 재적이 충원된 상태라야 해당 행정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법률상 예정된 5인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성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이유.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수에서 사망·사직·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법이 정한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위원의 결원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목적(제1조), 위원회의 소속 내지 격(제3조), 위원의 정수(제4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절차(제5조·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제7조·제8조)에 더하여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 방통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결론.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중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적위원의 수는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재적 과반수의 합의로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 이루어진 법률자문에서도 5인 체제가 아니어도 2인에서 4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인 체제가 적법하느냐 위법하느냐의 문제에 또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방통위·방심위 의결 안건 중에서 위원 정원 미달 상태로 의결된 안건 목록을 본 의원은 방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받아 본, 저에게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에서 2022년 4월까지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원 5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 목록, 개수 및 해당 기간 의결된 전체 안건 대비 비중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7년 해당 기간 의결된 안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문화방송 등 7개사, 2017년 5월 23일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 2017년 5월 29일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7년 6월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모두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결된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안건들은 모두 3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5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방통위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에서 4인 체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데는 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2인 체제는 5인 체제에 비해서 보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22일 대통령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재추천 요청드립니다'라고 재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지난 7월 1일, 역시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즉 안형환 2023년 3월 30일, 김효재·김현 2023년 8월 23일 자—따라서 상임위원의 국회 추천을 의뢰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 공문에도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탄핵이 남발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야만의 국회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런 방통위의 무력화를 통해서 방송장악의 추억을 이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을 보면 의사정족수를 5분의 4 이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정족수 5분의 4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입법·행정·사법 우리 대한민국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의사정족수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보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역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은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의 의결정족수 유형은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일반의결정족수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리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의결정족수 이외에 헌법 및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그것은 헌법 개정안의 의결, 의원의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의원 자격 상실의 결정,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 의결,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 의결, 위원회에 회부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2.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의장·부의장의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의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계엄의 해제 요구.

4.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의 재의결, 번안동의의 의결.

5.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를 요하는 것,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대통령당선자 결정, 국회의장·부의장 결선투표,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 전원위원회 안건 의결 등입니다.

이처럼 의사정족수든 의결정족수든 5분의 4를 명시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안건은 한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보다는 의결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은 법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이 방통위 설치법안은 의사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입니다. 의사정족수가 의결정족수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요건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소위는 몰라도 정부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전체회의에서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결이 헌법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 헌법정신이라는 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수결이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께서도 어제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그 다수결이라고 함은 다수의 지배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이 방통위 설치법안은 소수가 좌지우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즉 소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반헌법정신을 담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

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부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 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몽니 자유법입니다. 진영 대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입니다.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방송장악법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반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소수가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의 80%, 즉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 위원회 사례로 보아도 전무하며 회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방통위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이를 과반수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4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 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위원 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 위원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공정위, 인권위,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특위 또한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합니다.

5분의 4, 80%라는 숫자를 국회법에 적용시킨다면 의사정족수는 240명이 됩니다. 민주당 혼자 본회의도 못 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개의정족수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 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3명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는 아까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 5명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1명이 국외 출장이나 병가 등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위원이 1명이라도 이해충돌 등으로 제척 또는 기피할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은 회의 개의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한다면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 권익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현안의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나 보도·종편 PP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그런 일들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무허가 불법 방송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중단됩니다. 통신 분야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각종 시정조치도 적시에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법안에 대하여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법사위에서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방송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송장악 문건 누가 시행했습니까? 방송장악을 만

들고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방송장악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주장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적었던 그 문건의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그 10m가 넘은 담겨진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0일 문재인 대선후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이 망가졌다',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방송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부터 적폐청산이 방송언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월 11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50명을 발표합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뉴스타파에 출연해서 홍준표 후보를 대선 전에 낙마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도덕성 등에 결점이 있어서 보다 일찍 언론이 앞장서서 검증했더라면 홍준표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양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에 서울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퇴임식 한 지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8월 8일 MBC본부, 카메라 기자 이념성향 분석표 문건을 공개합니다. 보수세력 청산용임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 김장겸 사장 등 고발, 사측의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이사의 KBS 이사직 사퇴촉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에 대한 장악이 추진됩니다.

9월 13일 언론노조 KBS본부, 김경민 이사 제자를 찾아가 인터뷰 빌미로 압박을 합니다.

9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 한양대 캠퍼스 앞 김경민 이사 사퇴촉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역시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17일 언론노조 MBC본부, 김원배 이사의 교회를 찾아가 사퇴요구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9월 19일 강규형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 장악입니다.

9월 20일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노조의 입장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날 대전MBC 노조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를 위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 청구입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이사 KBS 이사직 사퇴,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현 정부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김경민 이사가 또 사퇴한 데 대한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의 정황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측의 불법 시위가 벌어집니다. 언론노조에 유리한 여론조성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0월 16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신동호 아나운서본부장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영업방해행위로 고소합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이때 검사·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갖고 26일에는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안이 의결되는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6일에 방통위는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1월 7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3일 뒤

영장은 기각됩니다.

11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장 KBS 국정감사 발언,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고 정의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주축이 됩니다. 정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정의 보도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 그룹에서 특정 세력들이 인정하는 정의 보도, 그 반대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정의 보도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자신들만의 정의일 뿐입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보도인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방송장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 보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방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가결을 합니다.

11월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 자진 사임합니다. 사장 해임에 따른 부사장 사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1월 16일 방통위,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23일 KBS 사측과 노조 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평가 및 불신임 인사 조치 건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사 내부가 친노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 24일 감사원,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방통위로 송부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의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킵니다. MBC의 친노조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자강 과시'라는 보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일부 언론,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을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킵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야당은 깎아 내리기 바쁜 언론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12월 20일 뉴스타운,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보도합니다. 보도 통제나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26일 KTV 정책홈쇼핑 '이니 특별전' 자막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에 쓰임으로써 방송 탄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

게 됩니다.

12월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처리, 전 정권 추천인사 해임 및 공영방송 장악. MBC 뉴스데스크,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 보도,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기밀 문건 공개' 보도.

12월 28일 KBS 뉴스 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 삭제되고 다음 날 변경 보도된 보도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언젠가는 돌아간다', 해직 8년 쌍용차 해고자들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박(朴)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4일에는 방통위의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이 이루어집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의 해임안이 처리됩니다.

1월 8일 방통위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임명 처리가 되고 MBC 뉴스, '단일 팀이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라는 보도, 남북교류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1월 9일 KBS 뉴스 9, '북 예술단 공연, 체제 선전 빼고 민족·통일 부각'이 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1월 11일 KBS 여권 측 인사,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1월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 세탁 정황도' 보도. 공영방송의 보수세력 약화 도모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1월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입니다.

19일 방문진 MBC정상화위원회 출범이 됩니다. 파업 불참 청산용 위원회인 것입니다.

22일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의결됩니다. 현 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MBC 뉴스데스크, '사법부 블래리스트 존재한다. 원세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23일 문 대통령 KBS 고대영 사장 해임, KBS 이인호 이사장 자진 사퇴.

24일 MBC 뉴스데스크, '다스 부사장, 다스는 MB 것…… 통화 내용 입수', MB 관련 뉴스 보도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공영방송이 MB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과 다름없는 보도를 합니다.

2월 7일 KBS 뉴스 9, '북, 김여정 파견 깜짝 통보…… 백두혈통 첫 서울 방문'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온다…… 백두혈통 첫 방문' 보도. SBS 뉴스타임, JTBC 뉴스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7일, '북한 2·8 건군절, 평양 겨냥하나? 속뜻은 선당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MBC 보궐이사에 현 정부 인사 배치되고, 이 또한 공영방송 장악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 해. 대화 가능’, 천안함 유족보다도 북한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듯한 그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2월 24일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정책 발표에 노조 대표 발언, KBS공영노조는 제외됩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KBS공영노조 발언은 일체 차단되는 것입니다.

2월 26일 KBS 이사회, 양승동 KBS PD 신임 사장, MB 정부 당시 파면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신임 사장후보로 선정됩니다.

3월 1일 삼일절 집회 관련해서 언론은 세월호 조형물 방화를 집중 보도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짤막 보도, 한 줄 보도에 그칩니다.

3월 5일 KBS 보도국 3명 정치부장, 스포츠국장, 영상취재부장 인사를 단행합니다. MBC에서는 특파원 12명 본사 귀사 조치를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3월 5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 취임합니다.

4월 24일 KBS 이사회,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외부 강연, 금품 수수로 중징계 이력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KBS 과거청산 기구를 이끌 핵심 인력이요.

5월 1일 MBC에 대대적인 직급 조정이 단행됩니다. 기존의 승진제도를 연공제도로 개편합니다. 이제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5월 10일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취재 권고사항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심위는 보도지침을 배포한 당일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합니다.

5월 21일 KBS 1라디오가 개편됩니다. 이제 KBS 1라디오는 친문 언론노조 일색으로 현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5월 23일 KBS 이사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설립안이 상정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행사용입니다.

6월 5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범합니다. 정치 보복에 혈안된 불법 인민위원회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6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을 겁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을 출범시킵니다.

7월 13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보도국 전 간부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안을 의결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적인 보복이 행사되기 시작하

는 것입니다.

7월 26일 KBS공영노조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직원의 개인 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 KBS는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KBS공영노조를 형사 고소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방문진 차기 이사 9명, 감사 1명을 선임합니다.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유리한 선임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9월 6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기자를 징계한다고 통보합니다. 진미위라는 불법 기구로 징계를 통보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9월 7일 KBS 이사회, 김상근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지속해 온 인물을 선출함으로써 그 이사장 체제가 보호하는 그런 속에서 양승동 사장의 방송장악은 속도를 냅니다.

9월 13일 경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추진단의 관계자를 소환합니다.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지시 관련해서 진미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월 17일 법원,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이런 일들이 방송장악 문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방송장악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방송장악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주장만으로 이뤄지는 방송장악과는 달리 이것은 실체가 있고 실행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장악 피해자의 목소리,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 목소리를 담은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최형두 의원이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의 차별 토크콘서트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읽었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읽은 만큼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보복극,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그 학살극의 실태에 피해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 그를 통해서 이 잔혹한 보복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마이크를 빼앗기고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당하고 부당 전보당하고 강제 전직당한 그 선량한 기자들, 선량한 방송사 직원들의 그 피를 토하는 절규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온갖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임신하다가 유산을 당하고 암 환자가 속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라는 그곳이 흉기로 전락해 버린 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방송장악이라고 외쳐 대면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 당시에 MBC 3노조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탄압을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3년 동안은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있었던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의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영상센터라는 곳에 40명에서 50명을 몰아넣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소고기 등급으로, 여기에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 이후에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뉴스데이터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데이터팀은 그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에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노조만 배치하고 취재센터에서도 저희들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장악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것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성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본부장 밑에 인사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있고 법무부장이 노무부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노사협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노동자의 대표가 와서 민노총에서 이제 교섭대표 노조니까 전원을 노조 측 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측인 위원들도 다 언론노조원들이라는 거지요. 본부장이 언론노조, 말이 됩니까? 본부장인데, 임원인데 어떻게 노조원을 합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열리면 다 노조원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편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위원장이 본부장, 편성본부장이 노조원입니다.

이근행 위원장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위원장이, 본부장이 노조원으로 편성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머지 노조 측 위원들은 다 언론노조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고.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방송장악이 가능한 일이 보수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좌파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그 차이가 없는 것이냐, 본질은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외형은 정권의 임명이라는 외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방송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같으나 내용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송장악이라는 일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고 실행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과 단순한 주장, 확인되지 않는 확대 해석, 왜곡 해석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두 차이에 대해서 스스로의 양심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임기 2년 2개월 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일색입니다.

제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에 대통령실 침묵. 불편한 기류 반영’ ‘김건희 방문조사 공방 격화. 김 여사가 검사 불렀나? 여당에서도 비판’ ‘검찰총장 패싱 내로남불. 원칙 없다 발언에 부글부글’ ‘추미애, 김건희 수사팀 충견처럼 꼬리 내려. 영부인의 수사 농단’ ‘휴대폰도 반납 당한 검사들. 황제조사 커지는 논란’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 용산과 직거래 비판’ ‘총장 저격한 대통령실. 이것이 공정과 상식’ ‘김 여사 검찰 조사 정권 몰락의 전조. 조사했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한 달 만에 143명 동의.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권한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여당의 황당 궤변’.

임기 2년 2개월 차 그 시기에 MBC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도한 내용은 칭송과 옹호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일색인 것과는 정반대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그 제목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민통합이 제일 어려워. 국가적 어려움 극복에 마음 모았으면’ ‘기업 세금 깎아 주겠다. 경제활력 촉진’ ‘문, 신산업 투자 구미형 일자리. 경제활력 새로운 돌파구 제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4%. 9개월 만에 최고치’ ‘문 대통령 추경 일축. 수출 규제 대응에 힘 모아야’ ‘김정숙 여사, 결식아동은 무료 파스타 집에 격려 편지’ ‘문 대통령, 지금껏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 우위 극복. 우리는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 투 톱 외교 관점에서 봐 달라’ ‘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안타깝고 송구’ ‘김정숙 여사, 아동시설 합창단 초청 격려. 희망은 힘이 세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 ‘기업인부터 다독인다. 문, 30대 그룹 총수 초청’ ‘문 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 포용국가의 한 축’ ‘청와대, 김정은·트럼프 만남 직후 문 대통령 손잡고 고마움 표시’ ‘문케어로 의료비 2조 원 경감. 보장률 70%’ ‘문, 북·미 적대관계 종식. 사실상의 종전선언’ ‘문, 행동으로 적대 종식.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 ‘1년 전 판문점 강의한 문, 트럼프의 질문 예언이 되다’ ‘끝까지 한 발 뒤에서. 문 스타일 중재외교’ ‘문 대통령 따뜻이 배웅. 남 지도자도 비중 있게’ ‘문 대통령, 노영민 페이스북 시작, 많이 응원해 달라’ ‘각본 없는 드라마 판 깔고 조연 자처한 문’.

이후에 올해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조국 99.9% 찬성률로 대표 재선출’ ‘검찰독재 말로 보여 주겠다’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폭력 고발 검토. 직원 멍들고 부상’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윤 정권 3년 아니라 석 달, 3일도 길어’.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다릅니다.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MBC의 보도가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1주년에는 그 1주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과제와 미완의 숙제 같은 정도를 부제로 다루는 것들이 통상적인 보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장악된 공영방송에 의해서 처참히 깨져 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MBC는 이런 제목을 답니다. ‘국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의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제목으로 뽑아 줍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취임 1년 제목이 이겁니다. ‘취임 1년 윤 대통령, 사라진 기자회견’, 그리고 부속 기사 이어집니다. ‘지난 1년은 퇴행과 폭주, 시민사회단체들 비판 잇따라’,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장악된 공영방송을 보

고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영의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MBC의 이런 보도에 제가 정리한 바 있지만 이 정리한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그 구성원은 비언론노조원,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아닌 언론노조원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MBC 3노조 위원장이 분석한 노영방송 MBC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없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단독 보도.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1월 3일 단독 기사라며 법원 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그런 문건이나 불이익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에 이어서 리설주까지 칭송.

3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리설주에 대해 보도하면서 단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가벼운 미소를 띤 채 여유를 잃지 않았다, 외교 무대에서 맹활약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에는 침묵만 합니다. 4월 2일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들을 다녔고 심지어 여자 인턴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지만 MBC는 모른 체했다.

드루킹 사건 보도 언론노조가 제동.

드루킹 옥중 서신을 단독 보도하는 등 취재기자들이 의욕을 보였으나 4월 23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불분명한 정황이 나열됐다고 이를 비판하는 민실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뒤 드루킹 관련 리포트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최승호 사장 출연 영화 홍보.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이 이창동 사장의 영화 버닝에 잠깐 출연했다. MBC 뉴스투데이는 이 영화를 4월과 5월에 16차례나 보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후보 스캔들 보도 외면.

5월 29일 경기지사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한 여배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폭로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침묵하다 6월 6일 남경필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묶어 상호비방전 형식으로 처음 보도했다.

야당 대변인 실언은 대서특필.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이른바 인천 비하 발언을 하자 뉴스데스크는 6월 8일 정태옥 대변인 사퇴 기사를 보도했다. 단신기사 길이가 무려 42초나 되었다. 6월 9일과 10일에도 선거유세 리포트에서 발언 파문을 자세히 다루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의 부작용 보도 안 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반대 측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 주장했다. 당일 뉴스데스크는 단신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

북한산 석탄 반입 보도 회피.

미국의 소리 방송이 7월 17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2017년 10월 인천과 포항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 관련 리포트는 한 번씩 하고 넘어간 KBS,

SBS와는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7월 20일과 31일 북한 관련 리포트에 반 문장씩 끼워 넣은 게 전부였다.

4대강 수문 열고도 녹조 창궐하자 외면.

무더위가 심해지자 전국의 강과 저수지마다 녹조가 짙게 끼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방한 4대강 보 하류의 강바닥이 사막처럼 변하고 물에는 여전히 짙은 녹조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7월에 4대강 보를 여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녹조가 창궐하는 8월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특활비 보도 청와대는 눈감아.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KBS는 7월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MBC는 침묵했다. 그런 MBC가 8월에만 세 차례나 단독 리포트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을 비판했다.

김정은 미화하고 평양 시민 자율적.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9월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특유의 솔직하고 담백한 화법',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마음' 등 지나치게 북한 김정은을 미화했다. 한복으로 깔맞춤하고 똑같은 붉은 꽃술을 흔드는 평양 시민들을 보고 지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율적 느낌이 엿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9월 21일에는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설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해 핵을 내려놓고 경제에 전념하고 싶다는 희망이라고 단정했다.

좌파 집회는 보도하고 우파 집회는 보도 않고.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한산해 보이는 현장 화면과는 달리 1000명이 참가했다고 단신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KBS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았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공격.

12월 14일 SBS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 쫓겨났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수사관의 주장을 특종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다음날 이 사건을 리포트 2개로 나눠 보도했다. 그런데 내용 대부분이 청와대와 우윤근 대사의 해명이었다. 이후 MBC는 비위 의혹이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공격했다.

홍준표 유튜브에는 막말, 유시민 팟캐스트에는 관심.

뉴스데스크는 2018년 12월 18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재은 앵커는 검증하지 않은 음모론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름 뒤인 2019년 1월 2일 뉴스데스크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소개했다. 이재은 앵커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은 2019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하도 많아서 숨이 벅차고 이것을 제가 들고 있으면서 또 읽어야 될지, 이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TV조선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방송 4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 4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특히 앞부분에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철 사장……」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그 얘기는 다시 광우병 보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얘기지요. 광우병 보도, 천안함 보도, 세월호 보도, 사드 보도, 탄핵 보도, 그 5대 보도와 관련해서 숱한 왜곡·선동 보도들, 그 숱한 가짜뉴스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바뀐다고 언론노조원들 그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 기자들이, 그 PD들이 그 사장의 코드에 맞춰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이 뉴스 보도 편성과 관련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KBS 보세요, KBS」 하는 의원 있음)

KBS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박민 사장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죽 폭로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KBS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 KBS에 있었던 그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낱낱이 실태를 폭로한 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요.

2019년 9월 2일, 2019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조국 사태를 입시제도 문제라는 대통령과 KBS 보도.

조국 씨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가 동남아 순방길에 조국 후보자 논란을 넘어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정쟁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 자신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조국 씨의 비리, 불공정과 반칙 그리고 그의 위선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도 이것을 입시제도와 청문회 정쟁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뉴스도 보지 않고 여론도 듣지 않는단 말인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지천을 울리고 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그런데 공영방송의 KBS 뉴스 9은 비판은커녕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를 동시에 비호하고 나섰다. 9월 1일 KBS 뉴스 9은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정하지 못한 입시제도를 바로잡겠다는 거지, 당시 제도에 따라 딸을 진학시킨 조 후보자가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문제는 수시입시라는 제도에 있지 조국 후보자에 잘못이 없다라고 KBS가 단정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니까 즉시 화답하는 식으로 조국 씨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뉴스이고 이게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KBS는 검증 보도를 한다면서 조국 씨 관련 보도를 이어 갔다. 그런데 조국 씨에 대한 새 의혹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언론사가 특종 보도한 내용을 마치

조국 씨의 대변인마냥 사실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8월 30일 조국 씨의 딸이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국 씨의 딸이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얻은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닙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9월 1일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처남 지분율이 미미하고 5촌 조카는 주식이 없어 운용사를 조 후보자 일가 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조국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업체도 조 후보자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KBS는 조국 검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국 변명 뉴스를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조국 방송인 것 같다. 그러니 누가 KBS를 믿고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부산집회에서 서울 구청장 가운데 특정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면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자 KBS 뉴스 9은 '나경원 지역주의 조장 발언, 정치권 비판 확산'이라며 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즉 집권세력에 불리한 것은 덮거나 숨기고 유리한 것은 확대 보도하는 것이 정녕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문 정권의 독선과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불어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2019년 9월 2일, KBS 공영노동조합.

KBS 중계, 조국 3시간, 야당은 30분, 이게 공정한가?

9월 2일,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민간인 신분인 조 씨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무려 11시간에 걸친 이른바 조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에서 급히 주선해서 만든 회견이라고 한다. 민주당 출입기자 300여 명이 참여한 이 간담회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씨의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된 행사였다.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획된 쇼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어쩌랴, 그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추가 폭로와 언론의 취재로 조 씨가 전날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딸이 영어를 잘해서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됐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딸의 고등학교 영어성적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딸이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려고 문의까지 했지만 학교 측은 장학금 반납은 안 된다고 조국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학 측은 그런 규정은 없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 외에도 조 씨 딸의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총장 측은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거짓이 기자간담회에서도 뻔뻔스럽게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심은 더 끓어오르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규정에도 전례도 없는 장관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전 방송사가 생중계로 방송한 것이다. KBS 1TV의 경우에 정규 방송을 끊고 조 씨의 기자간담회를 무려 2시간 40분 동안 중계방송한 것으로 편성표에 나타났다. 그 다음날인 9월 3일,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짓 주장 등에 반론을 제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BS는 역시 이 행사를

1TV를 통해 단 28분 정도 중계하는 데 그쳤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당인 야당의 기자회견 중계는 30분도 안 되어서 끊어 버리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변명은 무려 3시간 가까이 생중계한 것이다.

KBS의 이런 노골적인 정권, 여당 편들기는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 KBS 뉴스는 반일 보도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영상도 보도했다. 또 건국 71주년 되는 8·15 행사에 수십만 명이 몰려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지만 단 3000여 명이 모였다고 조작방송을 했다가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등이 치러진다면 어떤 불공정 보도로 선거에 개입할지 뻔해 보인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KBS는 노골적으로 정권 홍보와 조국 후보자 지키기를 당장 멈춰라. KBS 양승동 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KBS 보도 책임자들도 모두 사퇴하라.

2019년 9월 4일 KBS 공영노동조합.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2개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례들에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KBS의 이사의 구조를,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 MBC 방문진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 거버넌스 문제는 앞서서 최형두 의원이 자세히 외국의 선례들을 설명하면서 많은 심층적인 분석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에 대해서 바로 네가 한 것이, 너희들이 한 것이 방송장악이다라고만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 있었던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방송장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왜곡·선동 보도를 남발하게 된다면 그 왜곡·선동 보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방송장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던 시절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공영방송의 노조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가치가 사실 보도보다 가치 보도가 더 중요하고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 그 노조위원장이 자기 회사의 현직 사장이 답변대에 앉아 있는데 국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사퇴하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일을 감행했을 때 그것의 분노에 앞서서 그것을 허용하고 보고 있는 저희들이 부끄럽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장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탄핵, 열세 번째인가요, 열네 번째인가요? 특검법 몇 번인가요? 제가 수치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 숱한 법안들, 제가 앞서 인사말씀에서 드렸다시피 그 필리버스터를 뚫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그 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안들이 가져온, 폐기되거나 혹은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당초 저희들 한 법안마다, 한 법안당 6명의 우리 발언자가, 토론자가 예정돼 있었고 또 첫 번째 필리버스터 한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하면 시간이 꽤, 앞서서 또 민주당 아까 한준호 의원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은 한 3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후에 제 발언을 마무리 짓고 다음 분에게 넘길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얘기한 것들, 제가 인용한 것들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내용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한 그런 일들이, 흑역사가 자행됐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SNS에 올렸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 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형두 의원이 자세하게 소개했던 이름 없는 기자들의 그 호소·절규에 대해서 우리 국회 기록에 남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 10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MBC 잔혹사,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형수 욕설 외면하고 XX만 반복… MBC 정상화 시급하다' 'MBC 오정환이 고발한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MBC·KBS 블랙리스트 엄중 처리할 것이라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방송의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방송의 잔혹사가 시작된 사실을 잊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며 공포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MBC는 선두에 섰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아방궁이 되었습니다. 그들 편에 서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무차별 보복이 자행됐습니다. 조명창고로 쫓겨 가고 해고되고 암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유산당하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모으면 책 한 권은 족히 나올 것입니다.

5년 내내 문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에는 눈감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혼잣말에는 때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던 방송은 실종됐습니다. 공정성 잃고 정파성 띠면 죽은 방송입니다. 언론의 가면을 쓴 정치가 됩니다. 정치 아닌 방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송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진짜 방송정상화를 두고 언론탄압 운운하는데……

상식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사 기자를 탄압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두 잣대로 보도한 주역들이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방조하고 부채질한 세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빼앗긴 방송에도 봄은 옵니다. 핍박을 참고 견딘 양심 기자들이 펜과 마이크를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꽃길을 꿈꾸는 해고 기자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남고 ‘동지’는 떠나야 합니다.

많은 글을 올렸지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모경종)

(05시58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모경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제한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를 나눠서 각자의 어떤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단 두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어느 당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적어도 반대토론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찬성토론을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그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이야기만 하시고, 본인 당의 이야기만 하시고 찬성 측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나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새벽 내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새벽 내내 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분들께, 특히 우리 국민분들께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 방송 4법, 그중의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그리고 찬성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초선 의원으로서 먼저 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공영방송이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전파가 낭비되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로서 국민들에게

독립성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공영방송의 가치는,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로도 모자라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진숙이라는, 누가 봐도 부적격인 후보자를 내세우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열 분이라도 잡고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께 여쭤보십시오. 국민들께서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89년생, 만 서른네 살, 우리 나이 서른여섯 살 인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동관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방송, 우리가 보는 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 이것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방송 매체의 팩트 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언론을 하나둘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TF 출범 이후 이틀 만에 KBS 그리고 MBC 그리고 JTBC 콕 집어서 전반적인 보도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방송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방송의 존폐까지 운운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이라면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일종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등을 모셔 놓고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장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저 멀리 저 나무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사단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래 부하는 또는 그 조직, 그 집단은 단순히 '우리 사단장님이 시야가 안 보이시는구나'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치워라'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

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BBC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NHK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산케이신문에 대해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얼마나 짜깁기가 돼서 반대토론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해외 사례를 찾기보다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못했다 이것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 과연 대한민국의 방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합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합의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찾기 이전에 방통위에서 합의정신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김홍일 그리고 이동관 그리고 잠깐 시도되었던 김행,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는 중립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려고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입맛대로,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고 굳이 합의제 행정기구를 왜 운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닐 겁니다. 법에 능통하신 대통령과 법에 능통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싶으시고 더더욱이나 이진숙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앞에도 적어 놓으신 언론에 대해서 방송장악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장악법 거부한다라고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붙여 놓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방송장악 저희도 거부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리버스터 시작되어서 반대토론·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언론장악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된 사명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인다'. 그런 명목을 내걸었습니다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2시가 넘어서 벌써 6시가 지나고 있는데—이제 어제가 되었지요—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어제 있었던 재의결에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고 아주 실낱같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총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다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반대 표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3표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효표 된 것까지 합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견 표출이 조금이나마, 정말 실낱같이 조금이나마 보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그리고 비교섭단체이지만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의 당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표로 이 배지를 달고 계십니까? 이 배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 준 것도 아니고 각 당의 어떤 특정 인사가 달아 준 것도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께서는 각 지역구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 수 있게 4년 동안 권한을 빌려주신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전국에 계신 각 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 배지를 달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용산에 계신 그 누군가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배우자도 아니고 어떤 당의 대표도 아니고 바로 국민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방송 4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의 중립성 그리고 언론의 장악을 막기 위하고, 방송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서 이진숙 같은 부적격이 너무나도 명확한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규정, 그 조항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라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최민희 현 의원, 현 과방위원장님께서 추천되었을 때 왜 그토록 그분을 피하셨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방으로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합의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 안에서 합의제의 정신에 따라서, 더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의제들이 결정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지금 여당, 국민의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도 다섯 분 중에 벌써 세 분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을 지명 또는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형적으로 구성하고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장도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탄핵 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생겼으니 탄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산해 봅시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6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에 다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에 방통위는 2인 위원 체제로 회의를 소집하여서 의결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2인 위원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고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2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이상인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행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됩니까?

5인 중에 4인 이상이라는 개정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여러 반대토론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께서도 방통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양문석 의원님께서 방통위 5명 중에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때는 왜 지금처럼 양문석 의원님께서, 그때도 지금처럼 격렬하게 갑론을박하셨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각자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의 정말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인의 명예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본인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없애거나 또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비아냥대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각자 할 말을 다 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제—이제 벌써 어제가 됐습니다—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드시고 마이크를 잡고 많은 이야기들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합의하고 협의하자, 소통하고 함께하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얼마 전 존경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을 타깃으로 '거울을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하셨던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300명 모두가 거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에게 떳떳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방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바쁜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고 회피하는 걸 넘어서서 도마뱀마냥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외침은 온데간데없이 출장수사, 그걸 수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대한민국 어느 검찰이, 어느 검사가 본인의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또는 아직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00명이 모두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 선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그 거울에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의힘 한 분이 더 느셨네요.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님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힘들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단순히 여당·야당의 논의를 넘어서서 방통위가 중립적으로, 방송장악이 되지 않고 언론장악이 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항이 바뀌거나 수정되어야 되거나,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주도했고 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입법 폭주’라는 피켓을 빈자리에 걸어 두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엇이 폭주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무엇이 입법입니까? 입법이란 300명의 국회의원 각각의 헌법기관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치밀하게 분석하여서 정말 필요로 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입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입법은 무엇입니까? 그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못 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저로서는 저를 지지해 주셨거나 지지하지 않으셨어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곳 국회에서 당당하게 선서를 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고 입법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호 법안이 무엇인지 기억은 하십니까? 각자 22대에서의 1호 법안에 대해서 상상하시고 계획하신 바 없으십니까? 그것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세요? 민생을 위한다라고 말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본인께서 가슴속에서 끓어 나와서 진짜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법안이 1호 법안 아니십니까? 그 법안 언제 통과시키실 겁니까? 언제 논의하실 겁니까?

심지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렸어도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습니다. 일합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을 받으실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개개인의 사정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는 누군가의 공천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합시다. 각자 가슴에 끓는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그 1호 법안 통과시킵시다.

저는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는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흔히 말하는 별을 달고 장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장교들은 병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 포병, 정보 등등등 별을 다는 순간 그 병과 마크를 뗍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각자가 어떤 병과로 시작했든 간에 책임 있는 자리, 흔히 말하는 별을 다는 자리까지 가면 그

병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그 병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통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 규모와 그 위상은 다를지언정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건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셨건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되셨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300명의 의원은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방통위에 관한 법이지요. 그리고 차수 변경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 과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문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후보자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MBC 민영화 공작, 세월호 참사 왜곡 폄훼 보도 이것들이 지탄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용차 부정사용,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여태껏 이런 부적격자를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이의 종합판이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사과 요구에 아쉬움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고 청문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사과문 낭독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폄훼, SNS 극우 댓글 공감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나'라는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비아냥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국 답하지 않았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그 손가락 운동을 박지원 의원은 혓바닥 운동 조심하라고 표현했어요.)

감사합니다.

적대적인 노조관은 어떠한가. '언론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다.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이진숙 씨를 내정했음을 또렷이 보여 주었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후보자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권 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사이 삼류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인사에게 노조 혐오, 극우 옹호, 국민분열을 마음껏 조장하여 선동과 변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청문회라는 허울을 두르고 허위사실과 억지만을 떠들어 댈 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SBS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MBC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추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노영방송이지요? SBS를 노영방송이라고 하나요? SBS는 이사를 추천해요.)

맞습니다. SBS에 대해서 우리 양문석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벌써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최형두 의원님께서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조라고 하면 너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알러지 반응이 아니고요 아주 무식한 분인 거지요. 알면서 사기 치거나 모르면 다물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양문석 의원님이 알면서 사기 치거나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최형두 의원은 한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국힘당 가서 저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위임받은 권력이, 어디 국민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권력을 위임받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을 잠시 4년 동안 빌려 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단순히 국민께서 빌려 주신 권한 위에 있을 뿐입니다. 아니, 권한과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벌써 당번도 다 정하셨다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법안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이실 거라면 백여덟 분…… 아니다, 이번에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결 통과되는 것 보니까 백여덟 분은 안 되실지언정 백네 분 또는 백세 분이라도 이 자리를 꽉꽉 메워서 국민께 의지를 보여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국민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게 해 드립시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정말 공정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과방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를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분이 진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공공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청문회 태도, 태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걸어온 그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한준호 의원님께서 MBC 김재철 사장 시절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받은 온갖 수모와 온갖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준호 의원님은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저 정도라면 그 인생의 굴곡진 부분이 얼마나 심하게 굴곡져 있는지 잠시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회에서 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기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진숙의 기자회 제명 사유.

MBC기자회는 총파업 50일을 맞아 2012년 3월 19일 오후 긴급 기자총회를 개최. 찬성 115표, 반대 6표로 이진숙 홍보국장과 문철호 전 보도국장에 대한 제명 건을 가결.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기자가 제명된 것은 처음.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자회 요구 왜곡 및 공격.

기자들 대부분과 보직간부들까지 김재철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부 구성원의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수시로 발행한 회사 특보를 통해 징계 예고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을 확산했다. MBC기자회가 결의한 제작거부의 대표성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정치적 의도와 배후가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했다. 나중에 국민참여로 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은 사측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노동조합이 그렇게 급작스레 파업을 할 줄 몰랐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2012년 1월 10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앵커에서 보직 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

써 파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고 하며 MBC의 공정성 위기가 심각했음을 인정했다.

두 번째, 해고·징계의 논리 생산.

기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위해 나선 후배 기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기 위한 갖가지 억지 논리를 생산해 유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

2012년 2월 29일 회사 특보를 통해 기자회의 보도국장·보도본부장 불신임 투표는 보도본부 전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성호 기자회장의 해고로 이어짐. 기자회는 데스크 이하 평기자들의 총의를 모아 불신임 108, 신임 9, 기권 8표로 사측에 의사를 전달했고 여기에 간부와 고참 사원들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공격은 궤변, 기자총회 공고 직후 노조에서 사내 게시판에 기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글을 실은 점을 지적하며 노조가 기자회의 보도책임자 불신임 투표에 개입했고 파업으로 이끈 기획 파업이라고 공격함. 이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

이진숙의 기자회 제명 사유 세 번째, 김재철 사장 비리 옹호.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김재철 사장의 비리 행위를 결백하다고 앞장서서 옹호, 김재철 사장의 부도덕성에 눈감고 합리적 의심과 상식을 저버린 채 결사적으로 옹호.

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무용가 J씨에 대한 각종 지원 몰아주기, J씨 오빠 채용 문제, J씨와 아파트 3채 공동구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회사 특보를 김재철 개인의 해명 창구로 쓰면서 방어하기에 급급, 회사의 공적 창구를 사유화. 그래서 회사의 홍보 책임자가 아니라 김재철 사장 개인 비서가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다. 잠깐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점이 이진숙이라는 분은 MBC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시는 어느 한 분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법인카드를 성심당 그리고 무슨 고급 호텔 이런 데서 써놓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다 그 나물에 그 밥, 도긴개긴.

원래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앞에 반대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다 보니 그 법인카드, 치킨을 쓰는 것은 직원들에게 사 주는 것이고 등등등.

그런데 본인이 성심당에서 빵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답변하시고…… 법인카드에 그런 내역이 찍혀 있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본인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노조 사찰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파업 당시 사측은 노조파업 중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IT 보안 강화 방안을 명분으로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사내 전체에 배포했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사원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함.

사측은 트로이컷을 통해 당시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과 첨부문건 등 수백 개의 파일을 MBC 서버에 저장되게 한 후 이를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노조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반발하자 9월 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했다.

당시 처벌받은 실무 책임자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임원회의 이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 조속히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숙 본부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다.

대법원은 경영진도 노조 측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방조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다.

각자 쓰는 컴퓨터에, 이게 말이 좋아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지, 이름이 좋아 트로이컷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있지 조금 옛날 표현대로 치면 바이러스 아닙니까? 해킹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공영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중심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이야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이진숙 씨를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 이진숙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추천한, 내세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운영위원이 쓴 글의 일부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진출하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신 분에 따르면 '참 고마운 지적입니다'라고 쓰셨네요.

이진숙 후보자님,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나중에 보시면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이고 당신께서 마지막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케이블TV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흔히 말하는 공중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중파 방송밖에 못 봤습니다. 지방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종의 사투리 억양을 크게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공영방송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MBC, KBS, EBS 등 그 공중파 방송은요 산골짜기에 들어올 수 없었던 케이블방송, 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은 보는 만화영화를 못 보고 다른 친구들은 보는 예능 프로그램 못 보며 자란 저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였습니다. KBS나 MBC에서 나오는 많은 방송들은 그저 산골 소년이었던 저에게 수많은 이 시대의 정보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능 프로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라, 다큐멘터리보다는 뉴스를 많이 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송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방송을 나중에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제 아이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겁납니다. 제가 열심히 봤던 KBS 9시 뉴스처럼, MBC 뉴스데스크처럼 그런 방송을 그때 그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불리는 많은 언론들과 유튜브를 통한 새로 등장한 언론들 그런 저널리즘이 열심히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나 KBS 이런 공중파 방송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정성, 진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지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세 분의 의원님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랑 똑같은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입법폭주다라고 목 놓아 외치시기 전에 방송이 중립적으로 운영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이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논리는 단순히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제안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법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와중에 로텐더 홀에서도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당이 출동해서 그런 토론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현재 시간 07시 04분.

부끄럽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도 안 보시지요. 이러니 저 방청석에 기자도 안 계시지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는 그런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단 방송 4법,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시고 있는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쟁 그만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최전방이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이 국회에서 무조건 물러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설 때 맞서 주십시오. 단 어거지가 아니라 논리 대 논리로서 서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한 분 한 분이 그 뒤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품격 있는 토론과 대화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989년생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초선 중에 가장 어린 의원이고 전체 30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젊다라는 이 나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젊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젊다는 건 초선이든 존경하는 재선·3선·다선 의원님들이건 계속해서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날섬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젊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을, 특히 국회의원을 자동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구식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튜닝하고요 끊임없이 가꾸면 그 자동차는 오히려 도로에서 온갖 관심과 수많은 찬사를 받을 겁니다.

정치인은, 특히 이곳 국회에서의 정치는 한순간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방금 나온 최신식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각자를 튜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아 계신 우리 두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는 끊임없이 튜닝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처럼 이미 생겨 있는 도로인데 도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내비게이션 말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장착합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또는 그분의 배우자의 의중을 반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장악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한다. 아까 다른,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조중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TV조선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건 그쪽 당에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편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언론과 방송은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특정한 권력에 대해서 장악되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미스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미스터트롯’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뉴스들은 얼마큼이나 중립을 잘 지키고 얼마큼이나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또래 세대들은 TV 안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OTT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접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뉴스를 보기 귀찮아하고 뉴스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저는 예전에 뉴스를 볼 때마다 희망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쳤고 싸우는 모습 중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가는 인생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의 이야기만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MBC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모든 방송이, 모든 방송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분 안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날이 밝았습니다. 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와서 무슨 책을 읽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께서 각자 정말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온갖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제 눈에 보이는 이 많은 피켓들이 제 마음을 많이 아리게 합니다. 이곳은 피켓으로 말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은 각자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따라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서구병에서, 검단에서 온 34살 청년 모경종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합시다. 단순히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억지 부리고 떼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024년 이후의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위한 그런 정치의 기틀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두 다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실 텐데 선배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떳떳한 정치를 같이 해 주십시오. 각자의 논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를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돈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정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됐다면 지금 이곳에서 무제한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여기 계신 300개의 헌법기관이 생각하신 민생법안, 각자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진짜 민생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용기를 보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실낱같은 희망을 봤습니다. 채 상병 특검 재의결, 백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적어도 세 분은 재의결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8명이 되는 그날을 꿈꿔 봅니다.

현재 시간 07시 19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시게 될 국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 할 수 있게 모든 300개의 헌법기관 국회의원에 계속된 질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반드시 찬성시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모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상휘)

(07시20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상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시 남구 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인데요, 오늘 처음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이 민의의 정당인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앞으로 국민 앞에 서야 될 그 무대는 어떠한 곳일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희망을 안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물음이, 본질적인 물음이, 그 물음 자체에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음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물음 자체에 스스로 답도 하지 못했고 그 물음을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제가 생각을 해 봤지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목적이 뭔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느냐, 나는 그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국을 해야 된다, 민족을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크고 원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아주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36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항만하역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이 됐고 정식 직원이 된 후에 1년 만에 그 회사의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 발령 1년 후에 그 회사의 소위 그룹 비서실이라는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 많다 또는 많이 부끄럽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

니다.

상당히 많은 차별과 상당히 많은 질시를 받아 왔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 오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TV를 통해서 제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제 얘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청소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항만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다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생활에 사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꿈도 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가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직도 그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지 못한 채, 그 여유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할 때 세 번째 출마를 하면서 제가 가진 정치의 목표, 비로소야 여의도 언저리에서 20여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비로소야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나같이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여자 직원들의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왜 제 책상이 여자 직원의 휴게실에 있냐라고 물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책상을 여기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는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그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룹 비서실의 그 사람들 틈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휴게실에 들어오면 저는 일을 하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이러한 억울함을 없애는 그러한 일에 몰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원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원고보다는 올라와서 제가 본능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가 겪어 왔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순히 출세를 하고 싶어서 또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등원이라서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삼사 일 정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 하면 그 유명한 제가 속한 과방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그저께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등원하다 보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크 앞에서 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용기도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지금 혓바늘도 돋고요, 그래서 발음도 많이 엉키고 그렇습니다. 혹시 전달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 단상에서 제안설명이라든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또 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첫 자리가 무제한토론이라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사회는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된 사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 용어로 오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존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이 우리에게 체득이 됐고 그것이 일종의 행동의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에 수용해야 될 마지막 이 사회의 테두리 밖에 있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타이르고 충고를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회가 법을 다루기 전에,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송의 장악이다 방송의 장악이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선 해 봤습니다.

두 달여 동안 국회를 경험하면서 억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가슴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대변하기 전에 국회는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렇게 원초적이며 원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참 힘들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문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끌어 나가야 될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는 온데간데가 없고 정파적 이익과 정파적 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법을 따지고 모든 것이 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곤란할 때 가장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전체를 지배를 할 때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3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권을 보장받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이기 전에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같은 초선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초선들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할 때, 나는 정치를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반문할 때 '그래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합의가 없었습니다. 법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원시적인 힘의 논리만 두 달 동안 똑똑하게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여의 기간 동안 저는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부응하고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종의 순간입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숙의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지면 그때서야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안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런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 4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방송 4법이 무엇이기에 국회 안에서 저렇게 날밤을 새우고 싸우느냐, 국민들은 먹고살기 고달파서 죽겠고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왜 저렇게 난리냐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글쎄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민주당은 무엇인데 이게 그리 급해서 이렇게 또 밀어붙이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등원하자마자…… 아니, 등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 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 4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 왔던 합의 정신을 되찾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방송과 관련한, 방송을 흔히 언론의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은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그 법체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본질, 그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떠어떠한 것이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왜 이렇게, 언론이란 범주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 정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여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문석 의원님, 이것 어떤 그림이라고 보이십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세요?)

아니, 앞에 보이시니까.

강아지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눈밭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의제설정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술적인 그러한 얘기보다도 쉽게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 그림을 띄웠습니다.

대부분 눈밭을 뛰는 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저 강아지가 눈밭을 뛰는 그림을 보면 ‘아, 눈이 와서 저 강아지가 굉장히 기뻐서, 좋아서 뛰어다니는구나’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체득된 정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어느 사람도 강아지와 대화를 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와, 동물과 대화를 해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녔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녔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득되지 않은 정보, 명확하지 않은 정보,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저 강아지가 눈밭을 좋아서, 즐거워서 뛸 것이다라고 예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지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송장악 4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따라 많은 것을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것은 그 본질적 기능이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미디어와 방송이라는 기능과 언론이라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그림 하나가 언론의 중요성을 대단히 일깨우는 그러한 예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분들이, 동료 의원께서 저것을 설명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계되는…… 어느 면에서 볼 것인가, 오른쪽에서 볼 것인가 왼쪽에서 볼 것인가 이것은 많이 다릅니다.

저 강아지 그림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저런 메시지가, 강아지와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도 않으면서, 저 강아지의 마음은 정말 모르면서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더라 이런 일방적 정보, 체득되지 않은 정보로,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 여론을 만드는 일은 정

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취재의 기능으로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저 눈밭을 뛰는 강아지는 그냥 뛰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시려워서 뛰는 것도 아니고.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방송장악 4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왼쪽 아니면 방송 4법이라고 하세요.)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시간을 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상휘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넣지 마시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4법도 어느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이상휘 의원님이 자꾸 방송장악 4법이라고 하시니까 장악이라는 아주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비객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방송장악 4법이 왜 장악이냐에 대해서는, 장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장악인지 아닌지는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일대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님하고는 십수 년간 일대일 경쟁을 해 왔지요. 조만간 다시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따로이 만나서 이야기할 계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장악 아니라니까 왜 자꾸 장악이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론으로 장악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의 형성, 보시다시피 개인적 친분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는, 물론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다 다르듯이 관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반의 입장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마치 저 개는 좋아서 뛰는 것이다, 저 강아지는 기분이 좋아서, 눈을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예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보는 편한 관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여론입니다.

좀 재미난 얘기를 보태서 이야기하자면요, 어느 집에 옛날에 사랑방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사이인데 손님으로 왔지요. 열흘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손님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방 앞에서 집주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가라 해서 가랑비구나. 그랬더니 사랑방 방문을 열고 그 손님이 나옵니다.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알지요, 메시지가. 그래서 그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있으라 있으라 해서 이슬비구나. 그래서 가랑비와 이슬비 유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종의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보니까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치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갑자기 세종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언뜻 나는데, 참 그러한 좋은 점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울러서 듭니다.

세종은 누구나 다 공인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종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세종이 추진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상당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600년이 지난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이 백성들에 대한 고충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만들고 이야기해 왔던 것이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진행돼 왔었던 법이 하나 있었지요, 답험손실법이라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종의 백성들의 경작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세종이 재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 했지요. 대충 한 결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을 썼는데 한 결은 지금으로 따지면 25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현미 30두, 잡곡 30두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답험손실법이라는 게. 여기에 직접 관리가 나가서 경작에 대한 수량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가렴주구라는 것이 생깁니다. 관청과 결탁을 해서, 내려가는 관리와 결탁을 해서 경작물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또 거기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지요.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더 굶주려지고 농사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배를 채워 주는 그런 가렴주구의 형태에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아마 18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세종은 여기에 단안을 내립니다.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공법이라는 제도에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만……

(「국힘당……」 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피로하시겠습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힘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좋은 새벽에……

(「저한테 말 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요’ 자 붙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는 의원 있음)

(「나 말 안 놨어요. 국민의힘이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양문석 의원님……

(「자제시켜 주시지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학영 조용히 해 주시고, 조용히들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아침부터 조용하십시다.

이상휘 의원님 계속해 주세요.

○이상휘 의원 안 그래도 잠이 꾸벅꾸벅 오던데, 고맙습니다.

참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일어났는데 발음이 많이 꼬이기는 꼬이네요.

그래서 한 번씩 고함을 쳐 주시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세종 이야기 이어 갈게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가구수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선시대에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록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의 18만 가구니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여론조사를 했지요. 그때가 1400년도였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지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서구가 1700년대부터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국 팔도 곳곳에 관리들을 보내서 이 답험손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평균에 대한 수확량을 거두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어떠한 미디어의 힘도 구하지 않고 일일이 걸어서, 말을 타고 마을 곳곳을 돌고 고을 곳곳을 돌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겠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조차, 그 자체는 굉장히 무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은 그러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곤란함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토론 횟수가 아마 1900회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아주 현명한 군주고 머리가 뛰어난 군주이기도 했지만 무엇을, 여론을 어떻게 흡수시켜서 그 정의로운 여론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미 6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종이 토론을 하는 방법은 일종의 조선시대 경연을 활용했습니다. 이 경연이라는 것은 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회의하는 회의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종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연장을 토론장으로 활용을 했고 재위 기간 동안 1900회가 넘을 정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장악 4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는 세종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방송과 언론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이러한 얘기들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종은 토론하는 데에서 원칙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 보면—실록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요—항상 반대론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토론의 제목과 모든 토론의 과정에 악마적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세워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이지요. 세종을 거쳐서 다른 임금, 세 사람의 임금을 모셨던, 나중에 판서까지 된 사람입니다. 정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세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실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위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종의 얘기에 반대를 많이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몸이 굉장히 불편했고 걷기도 힘들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장애적 요인을 갖고서도 나랏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차수를 넘어서 인사청문을 했습니다마는 세종은 이미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이 그 발판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론을 듣고 천거를 하고 간택을 하고, 평의와 간택과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이 좋지 않으면 간택을 하지 않는 그 과정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고 투철한 국가관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참 허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은 세종이 북방 6진을 개척할 때도 일일이 간섭을 다 합니다. 물론 북방 6진을 개척할 때 세종은 미리 결론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려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작정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지요. 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여기에 북방 6진 개척에 대해서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수없는 토론을 부칩니다. 수없는 여론을 듣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겨울에 말을 타고 가면 대동강 강물은 얼것인가 얼지 않을 것인가, 말이 몇 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갈 것인가, 겨울이 되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은 한 사람이 먹는 군사의 식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일일이 따집니다. 일일이 따져서 세종이 지겨울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따졌습니다. 결국 그러한 허조의 노력으로 인하여 북방 6진 여진족을 토벌하게 되는 그런 대첩을 이루게 되기도 하지요. 일종의 악마적 역할을 하는 허조가 없었더라면 세종은 오늘날의 성군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도 충분히 그렇게 좀 허조의 역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잠이 올 뻔 했는데……

(「졸린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휘 의원이 허조 역할을 해서 김건희한테도 그렇게 조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하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이크 주시면 같이 토론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신데 그렇게 상투적으로 부르시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또 국회인데……

(「이상휘 의원님에 대해서 깍듯이 의원님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제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시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의원 있음)

중간중간에 그렇게 추임새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그래서 세종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밤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끼어드시고, 고맙습니다.

(「끼어드는 게 아니고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에 있어서 허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세종 원칙이 또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따라하려 그래도 참 못 따라갑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 따라가는데 3소 5의 7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 잔은 적고 다섯 잔은 적당하고 일곱 잔은 많다, 소위 술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토론을 할 때 꼭 술을 마셨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술을 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3소 5의 7과, 이것도 세종실록에 나온 얘기인데요. 세 잔은 적고 다섯 잔은 적당하고 일곱 잔은 많다. 그런데 세종이 토론할 때 몇 잔을 마셨냐면 꼭 여섯 잔을 마십니다. 여섯 순배를 돌고 난 다음에 토론을 시킵니다, 이야기를 해 보라.

그 여섯 잔의 의미가 뭘까요? 석 잔 먹으면 취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다섯 잔은 적당하니까 그것도 취하지 않고 일곱 잔을 마시면 취해 버리니까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5의를 넘어선 여섯 잔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3소 5의 7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론을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섯 순배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토론을 했던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서 세종은 정말 대단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낸,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 낸 정책이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합금과도 같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 순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결합된 합금 형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들 이런 것들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에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토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참 훌륭한 성군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3소 5의 7과는 개인적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날 가만히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서 잘 못 먹습니다.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따르게 되면 몇 잔이 나오냐 하면 여덟 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나눠 마신다라고 대작을 한다고 보면 네 잔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소에서 약간 넘어서고 5의에서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하지 않으니까 한 병을 더 시킵니다. 두 병이 되지요. 그러면 두 사람씩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보면 한 사람당 여덟 잔이 되는 겁니다, 열여섯 잔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과지요. 일곱 잔을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술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쩌면 소주 회사가 이런 걸 알고 마케팅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여론장치가,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여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방송과 관련해서 갑론을박하고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통위를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립니다.

(「방통위를 그렇게 운영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대통령께 그렇게 조언을 하세요, 이상휘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상휘 의원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잘 하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600년의 과정에서 미디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백성들의 민의를 수집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향통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향통이 뭐냐 하면 조그만 항아리를 만들어서 각 고을마다 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임금에게 건의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그 향통에다가 종이에 써서

넣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관리들이 그 향통을 걷어서 서울로 가져 올라갑니다. 그러한 어떤 장치들로 성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향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의 억울함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것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언론은 매우 자유로웠던 모양이다. 고을 원님을 눈앞에 둔 채 직접 비판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을 정도니 말이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월운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라 하여 월운(月雲)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해석은 훗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고 그 시원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언론리(言論里)가 된다—한자도 똑같습니다. 언론리가 음운변화를 거쳐 어룬, 어루니와 같은 우리말 발음으로 오랫동안 불리다가 한자 표기가 필요해 비슷한 발음을 좇아 월운을 취한 것이다.

일제가 1913년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면서 행정 편의에 맞춰 저네들 마음대로 지명을 바꾸는 와중에도 분명 언론리로 표기하였던 것을 광복 후 엉뚱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부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안창리 일대에는 전설이 깃든 유명한 바위들이 있다. 천상에서 산신을 만나러 내려온 선녀들이 바위 밑 맑은 물에서 목욕을 즐겼다는 선녀바위, 그런 선녀들을 훔쳐보며 짓궂은 장난을 치던 중이 있어 이에 진노한 산신이 그 중을 거꾸로 매달아 두었더니 바위로 변했다는 중다래미 바위, 어느 선비가 틀어 앉아 고을 원님에게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는 욕바위가 있다.

이 중에 바로 욕바위 때문에 언론이라는 얘기가 생긴 겁니다, 욕바위 때문에. 이 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욕바위의 내력 때문에 마을 이름이 언론리가 되었다, 우리가 언론, 언론 그러는 것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성질 불같은 훈장이 있었다. 그즈음 원주 목사로 부임한 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일어났고 훈장 역시 분노를 품었다. 그렇다고 일개 훈장 따위가 목사를 찾아가 따따부따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저렇게 끓는 부아를 달래가며 지내던 중에 갑자기 목사가 새 직책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선비는 그냥 곱게 보내지 않겠다는 심사로 목사가 거쳐 가는 고갯길 옆 높은 곳에 자리한 바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목사 행렬이 나타났고 목사가 바위 아래에 이르자 벼르고 별렀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괴이한 욕지거리를 들은 목사가 수행원들을 시켜 바위 위 훈장을 붙잡아 내리도록 하였으나 훈장이 자기가 타고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 올리자 누구도 그 바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별수 없게 된 목사는 그 욕을 다 들으며 한양으로 떠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속 시원해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에 묘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임 목사가 1년 중 날을 정해서 하소연할 사람들을

그 바위에 오르도록 하고 자신은 그 바위 밑에 돗자리 깔고 앉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바위 위에 오른 사람들은 불만 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였고 목사는 그 내용을 챙겼다. 때로는 욕을 해 대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바위 아래에서 누가 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목사였기에 그저 올곧게 듣기만 했을 뿐이다. 또 그것으로 인한 뒤끝 작렬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비판을 감내한 아름다운 지혜가 보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행해지던 '욕바위 소통'은 그 소통을 보고 사람들은 '언론'이라 불렀다. 바위는 욕이요, 마을 이름은 언론리가 된 것이다. 어쩌다 성질이 불같은 훈장 한 사람이 행한 것으로 욕바위니 언론리니 하는 이름이 생길 리는 만무다. 그러나 소통행위를 부임하는 목사마다 관례처럼 따랐기에 사람들의 인식에 널리 심어지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의 유래고 언론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란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그러한 어떤 사실적 규명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고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방송법·방송장악법·방송법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욕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단순히 한자어의 풀이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욕바위를 통해서 고을 원님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밑에서 겸허하게 사람들의 욕을 들어 가면서 그것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푸념도 없었다는 사실, 과연 60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가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월운동,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 봐야 될 곳이 아닌가.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뉴스페이퍼가 생기고, 신문이 생기고 전파가 발달하면서 공공재인 방송이 생기고 미디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더라 정보, 속칭 지라시 정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머·지라시·가짜뉴스 이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유통 과정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떠한 현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항상 평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와 소위 이야기하는 지라시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정말 파악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하는 그 카더라라는 것은 흔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사 때문에 그 정보의 욕구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의 카더라 정보, 1970년대 카더라 정보는 사실상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혹자들은 그 민주화운동 당시에 모든 미디어와 언론들이 통제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카더라 정보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화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이냐,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현대과학 물질문명이 발달되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복사기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카더라 정보와 유언비어와 또는 정확한 정보와 그런 전달적 기능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복사기라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암실에서, 지하실에서 인쇄기를 밀고 그렇게 했었겠지요. 복사기가 대량 복사가 가능하니까 이것이 훨씬 확산되기에 용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민주화 시대가 들어오고 이 카더라 정보는 굉장히 활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에 나섭니다. 기술 경쟁에 나서고 제품 경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정보, 지라시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980년대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보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경찰이나 정보기관이나 등등에서 취합되던 카더라 정보와 유언비어의 취합은 새로운 양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로 접어들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시중에서 돌아가는 카더라에 대한 얘기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업의 오너들, 경영진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을 둘러싼 이 지라시 정보 모임은 대단히 융성한 활성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로 가까이 오면서 기업들은 역시 제품에 대한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정책에서 이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오너들의 소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취합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위 언론 취합팀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동향, 시중의 동향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회장님의 또는 사장님의 시중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무의미해지기 시작하지요. 왜?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소통 창구 그리고 취합 창구가 너무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취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유언비어와 지라시에 전문적으로 팀을 가지고 활동한 기업과 그 기업이 만들어 내고 생산해 낸 보도자료의 반영 비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더라, 결국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들은 정보 욕구를 채웠고 그러한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계시켜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 기능을 했는지 부정적 기능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워낙에 밝혀지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것을 검증 없이, 여과장치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정례화되고 그것이 사실화되는 그런 현상이 어쩌면 그때 당시의 사실과,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론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열띤 취재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 환경이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서 1인 개인 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의 창구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런 시장의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보 경쟁은 그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SNS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속보 경쟁은 거대 언론사들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미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미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정보의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걸러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통제를 수반하는 겁니다. 통제의 또 다른 말은 억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즉 법을 통해서 또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이,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주셔야 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해 내는 과다한 정보들,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얘기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수반하는 그러한 구조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수면으로 들어가는, 질식사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다한 경쟁이, 과다한 가짜뉴스가 생기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린 그것을 그냥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바라볼 뿐에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잘못되면, 미디어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곡된 여론과 왜곡된 민심이 정말 참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만들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

면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자어로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민심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민심을 통해서 입법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을까, 차라리 세종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600년 전처럼 답험손실법에 대한 병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을의 관리들을 직접 발로 걸어서 내보내는 그런 원시적인 형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어디 가서 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심을 이야기하겠지요.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왜곡되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민심이 무엇일까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 민심이고 왼쪽에서 보면 왼쪽 민심입니다. 이 간극에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민심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를 왜 하느냐는 제 스스로의 물음에, 제 스스로의 질문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가슴을 대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 시장과 이러한 미디어 시장에서 어느 민심이 정의로우며 어느 민심이 순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오로지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 미디어 시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의 고유권한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론사들 간, 방송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왜곡된 언론사가 아니냐, 방송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제설정 기능, 흔히 학자들은 어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언론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본질은, 현실의 본질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전주시, 옛날에 전주성 서문 30리 밖에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마을에 홀아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라는 사람이지요. 조 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조 씨, 최 씨의 부인 조 씨가 낳았던 딸이 콩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가 배 씨입니다. 최 씨에게 재혼을 하러 들어온 것이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여 년 동안 내려온 이 콩쥐팥쥐 얘기의 어젠다 세팅을 봅니다. 의제설정 기능을 봅니다. 콩쥐는 너무나 불쌍하고 착한 그런 소녀입니다. 팥쥐는 악독한 계모의 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도 그러한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작가가 의도한 의제설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배 씨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려 봤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과부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딸 손을 잡고 낯선 마을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알 수가 있겠는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외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얼마든지 사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나쁘며 팥쥐 엄마는 죽어도 싸다, 그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작가의 어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식과 관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재혼한 사람들은 계모라는 악독한 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붓딸이다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계모가 저질렀던 일이란다'라고 해서 우리는 돌팔매를 던집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디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그런 관점을 먼저 깨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콩쥐가 못된 소녀일 수도 있고 팥쥐가 착한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마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팥쥐의 그 심정은 굉장히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도 되는 곳인가? 저 콩쥐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새로 생긴 우리 아버지 최 씨는 혹여 또 우리 모녀를 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위기감과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콩쥐팥쥐를 들으면서 어젠다 세팅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송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인한 그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흥부와 놀부도 그렇지요. 놀부는 늘 악독한 사람입니다. 흥부는 늘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의제설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놀부가 착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흥부가 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놀부가 일궈 놓은 재산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놀부에게 이루어진 부는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그런 노력의 결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흥부는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착하기만 할까,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 놓고 왜 저렇게 무능력할까. 그러면 흥부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이 미디어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위해서 미디어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젠다 세팅에, 그 의제설정 기능에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중립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부는 어쩌면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고 입지전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흥부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능력의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 그런 다양한 객관성이 특별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인해서, 특별한 어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특별한 정파적이고 이익적이고 카르텔적인 그런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책무고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감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가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뽀빠이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뽀빠이도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많이 먹어 봤어요. 그런데 키는 안 크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결국 시금치가 뽀빠이로 인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획

득했겠지요. 결국 그 뽀빠이의 영향이고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뽀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뽀빠이 이야기할 때 늘 정의의 사도, 늘 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한 남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뽀빠이 같은 힘센 남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그를 쫓아다니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냥하고 아름다우며 지고지순한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지요. 뽀빠이는 늘 올리브를 구출하고 위기에서 구해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디어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리터러시 관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뽀빠이는 왜 저렇게 마초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이 무력이고 모든 것이 힘으로만 해결하느냐라는 어떤 의심도 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올리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올리브는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의 양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뽀빠이에게만 의존하느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띄워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시간대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쩌면 저희 집사람도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 강아지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눈밭에 뛰는 강아지가 즐거워서 뛸 것이라고 우리는 예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 우리가 쳐 놓은 그 올가미에 우리가 스스로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디어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 화석처럼 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콩쥐팥쥐를 말씀드렸고 흥부와 놀부를 이야기했고 뽀빠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치지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학문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사학자 맥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과 권력은 쌍둥이와 같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뱉은 말은 그것이 악의적인 표현으로 했다면 충분히 사상을 입힐 수가 있다, 그 사상을 입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권력의 횡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또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교류를 통해서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철학과 좋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또 정치가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홍보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것을 꼬집어 보면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PI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president identity)라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지요. 그것이 이미지의 화석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체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미지는 화석화가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가 더욱더 발달될 것임이 자명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따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적 현상에서 어젠다 세팅 현상에서도 거기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방송장악 4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과 진지하게 그 현상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팬덤 현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20년 가까이 학교와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팬덤 현상은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팬덤을 가져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한 번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팬덤 현상이 다양한 미디어 시대가 낳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정보의 취합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 미디어의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의를 찾고 순수를 찾고 사실을 찾고 팩트를 체크하는 일이 굉장히 진부한 생산활동이라고 미디어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덤 현상이 생깁니다.

정치학자들은요 지금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인지 아십니까? 팬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의 기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미디어 시대가 다양해지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시민들의 행동, 생각의 양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발달도 기인한 바이지만 그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경제, 홍보의 경제로 말미암은 그러한 부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학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시민의 양태는 벌컨과 홀리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 단계지요. 호빗, 벌컨, 홀리건 이렇게 양태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대사회가 발달되고 산업사회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홍보가 치열해지면서 정보가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걸러 내고 검증해 내고 만들어 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미디어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정의로움과 정보에 대한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과 단초 제공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수용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나홀로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고 현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정보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디어의 다양성과 그에 대한 병폐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최소한 2004년 이후부터 그러한 현상이 팽배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바라보며 무작정 무한한 사랑을 보내는 그런 현상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팬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팬덤 현상은 그냥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박수와 무작정 사랑해,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병폐가 어떠한 진실과 어떠한 사실에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훌리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면 그것에 반하는 형태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광분하는 관중들이 자기편에 대한 경기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판정이 문제가 있을 때 폭력적 양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지요. 그것을 민주시민의 양태로, 훌리건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 훌리건 현상은 지금, 오늘, 어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홀로족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양태가 생겨났는데 이걸 개선해 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권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러한 훌리건 현상 자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정치인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훌리건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과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길들여지고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해 내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현대사회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부정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팬덤입니다.

그 팬덤 현상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바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폭력적 형태로 그것을 방어해 냅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이 팬덤 현상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팬덤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 팬덤은 우리가 과감하게 온몸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러한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며 얼마나 발전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팬덤과 그러한 편집증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며 정말 국민들의 그 가슴을 대변할 수 있는 규칙이 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표적 행위에 대한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정의로워야 되며 지도자는 적어도 존경받을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진리이며……

(「이상휘 잘한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봤던가요?

(「이상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왜 이리 안 갑니까?

그래서 지금 22대가 개원되고 이 필리버스터가 벌써 두 번째인데 딱딱한 법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얼마든지 이 법의, 소위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문제점, 우리가 주장하는 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더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구구절절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팬덤이 지금 드러난 현실적 지도자를 만들고 지금에 나타나는 그 지도자에게, 그 한정된 숫자의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99.99%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투표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은 지금이다.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또 그렇게 선출되는 권력들이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해진 혼란스러워진 미디어시장을 통했었다는 그 부당성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훌리건 현상은 팬덤으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법에 대한 처리와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면해 있는 우리 정치 현실과 생활 현실에 만들어진 문화적 괴리감, 저기 훌리건화 현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저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 시장에 대한 왜곡 등 다양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9시네요.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이 처리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수단을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 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게 괴벨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 3노조가 주최를 하는 차별 토크콘서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방적인 주장에 귀 기울이는 행태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MBC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MBC를 굉장히 참 사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드라마왕국이었고 예능왕국이었습니다.

과방위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MBC 출신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MBC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잘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이, 나아지는 방법이 칼을 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MBC에 대한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국회 본회의장, 청문회장까지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MBC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장인데 전부 MBC만 보인다. 방송은 없고 노조만 보인다. MBC는 없고 노조만 보인다.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고 3노조가 있습니다. 노영방송이라고 비판하니까 참 나무랍디다. 노영방송이 왜 노영방송이냐고 반문해 보라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노영방송이라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일면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9.7%인가요, 전체 다가 노조원입니다. 민주노총이고요. 아마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노영방송이냐? 물론 국장급들이라든가 보직자 간부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 부분은 좀 내려놓고 경영에 임하기 때문에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인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노영방송이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 가면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면서도 본다면 본질적으로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 영향권에 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노조, 2노조, 3노조까지 있는 그런 MBC가 어쩌면요 노동조합 간의 헤게모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바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59년의 MBC는 민간 최초의 상업방송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MBC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역사적 검증과 그 길에서 탄탄하게 걸어온 방송사입니다. 그 방송사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형태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법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MBC를 이야기하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송사의 행태입니다. 거기에 무참히 MBC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방송이 아니라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이 없다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영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널리즘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상업방송이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분이 나눠지고 본인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무슨 공영방송으로 할 것 뭐 있냐, 민간에 자본 팔고 민간방송하면 깨끗한데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물론 법도 바꿔야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MBC의 공영방송 체제는 군사정부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분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군사정권이 만들어 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있으면 거기서 과감하게 떨쳐나야지요.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깨알 같은 법조문과 논리를 갖다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느냐?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즉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노영이다 아니다라고 설왕설래하는 이 방송이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간단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본질적인 물음에 참담할 뿐입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백마고지의 전투와도 같은 그런 행태가 MBC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MBC고 공격받는 사람도 MBC고 질문하는 사람도 MBC였습니다. 방송의,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방송이, 정의로워야 될 방송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토크 콘서트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장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속칭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청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펜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언론사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느꼈고 참담함도 느꼈습니다. 어느 기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기사를 쓰다가 어느 이름 모를 허름한 창고에 가서 누가 불러 주지도 않은 채 허름하게 갇혀 있던 게 몇 달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책에 그들의 편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 봐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필리를 시작하면서 제 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룹 비서실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 봤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룹 비서실에 발령받은 제 책상은 여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30년 전의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질렀는지 누가 먼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십 통의 편지에는 그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다양성,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이것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지켜야 될 저널리즘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불변의 진실은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일입니다. 백마고지와 같은 형태로 미래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직까지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독립에서부터 떨쳐 내야 될 독립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정파로부터의 독립과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정치권이 손 놓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세종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 낸 여론을 수렴하는 그것과도 같이 민심을 전달하고 민심을 듣고 여론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과 권리와 소임을 가진 우리 정치인들이 그것을 즐기는 사이 미디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커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커녕 또 하나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이 만들어진, 지어낸 얘기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텔이 없었고 정파적 이익이 없었고 계파적 이익이 없었다면 MBC가, 그 잘나갔던, 그 훌륭했던 방송사가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낱낱이 난도질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참 동경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형편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이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사 기자가 됐을 때 참 좋았습니다.

정식 기자가 언제 됐냐 하면 2012년도에 됐습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기자가 참 되고 싶었습니다. 신문사는 언제 들어갔느냐, 200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시켜 준다고 들어갔는데 기자를 안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한 줄 못 썼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것도 인터넷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취재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즐거웠습니다. 비록 나의 시각이기는 하나 내가 세상의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저널리즘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생활을 개혁하고 제도를 이야기하고 규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철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해 낼 수 있는 시민과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기자가 되지 못하니까 공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에서 오늘날의 언론 현실, 그 방송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 또 한 번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과방위 출석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제 9시에 과방위 출석에 응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왔다가 몸에, 가슴에 스텐트를 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증인 출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지요. 그래서 결국 과방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께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12조의 조항을 봤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이유 없이 증언에 불참하거나 또는 그런 방해를 했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법률의 12조에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합당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했고 거기에 불출석에 대한 사인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반발하려 해도 의미가 좀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사법 처리되고 안 되고든 그 사람이 사는 궤적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잣대로, 병원에 간 사실이 명약관화하고 진단서를 첨부했고 여기에 사인까지 했고.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짐작건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표를 쓸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짐작이지요.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지요. 또 탄핵을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그 가치와 신념과 그 철학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일반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일 안 한다고 많이들 나무라십니다. 비판도 많이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요 탄핵 대상에 오르내린 사람만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을 탄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16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 대상에 오르게 되면 17명입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직사회의 경험을 해 보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여파는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의 몫은 우리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행정부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한 몸 불태워 이야기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16명, 17명이 아니라 무려 16명, 17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탄핵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적 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야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민주적 기본질서는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하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일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에서 관료들, 고위 관료들까지 그 하는 일의 하나하나는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잣대로 탄핵의 반열에 착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질서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고에 대한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분립의 문제입니다. 이미 삼권분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권력은 이미 행정권력의 그 위치를, 그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법권력의 횡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을 견제와 균형의 시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법권력 또한 입법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검찰들이 또는 사법부가 입법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많은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청문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치고 숙의를 거치고 간택의 과정을 거쳤던 세종의 허조가 만들었던 인사청문회의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청문회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직접 경험한 청문회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간택과 평의와 관료를 뽑는 그 절차적 과정을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원시적이었다. 600년 전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원초적인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잣대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와 합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수를 바꿔서 3일로 갔습니다. 물론 국민의 공복을 뽑는 일에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범죄적 혐의를 따지는 그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강요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몽니에 불과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과 조선시대는 발품을 팔아서까지 그러한 제도를, 왕의 절대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우리 선열들의, 우리 조상들의 가치 있는 청문회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장내 소란)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이상휘 의원이 좀 졸릴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동료의식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민의의 전당 본당에서 사적인 얘기 하는 것은 참 안됐습니다만……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양문석 의원도 언론학자십니다. 언론학자시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많이 무장된 분이고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요.

어디 가세요?

이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샤우팅이라는 말을 참 새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샤우팅 잘합니다. 샤우팅을 좀 해야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힘을 받고 또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샤우팅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참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소금물로 목도 좀 챙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또 해소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정치가 제로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정치는 포지티브 게임이다. 일종의 영향력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양문석 의원님하고는 참 친합니다. 관계를 가진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성이시지요. 국회를 떠나서 가끔씩 보면 정말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제가 나이가 두 살 정도 많은데 뭐 그냥 대듭니다. 어떤 때는 참 위압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가 적대적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마 앞에서 샤우팅하고 간 건 내가 혹시 졸릴까 봐 그러한 뜻에서 저한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올라와서 입안에 혓바늘도 많이 돋았고 그래서 말이 자꾸 엉키고 발음도 시원치 않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TV에서 또는 방송에서 평론을 할 때 그리고 그냥 비판적 시각에서 비판할 때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비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보면 다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두 달 됐는데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아닌 때는 절대 국회의원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국민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숙명처럼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차피 들고 왔으니까 몇 군데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와는 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얘기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셔야 되겠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들어 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라’라는 제목인데요 김성민 차장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려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가 송고분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 내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돼 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런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오늘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는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가 한 통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로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대기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인데,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되었던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의 파업 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왔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미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나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비롯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한두 개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요. 부장급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복받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생방송뉴스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뉴스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뉴스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서포트해 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태프들을 아우르면서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일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하는, 맡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편집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 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 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각시의 중계차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시며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다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군 복무 2년 2개월보다 더 긴 2년 3개월간의 1차 방송, 1차 생방송뉴스팀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는 날씨 중계에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나온 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 제작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 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경력 기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쯤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 네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는 식의 경멸적인 언사와 태도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타사 선후배·동료 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형이 여기에 왜 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 줘서 한 말들이지만 일일이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뉴스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라이프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 시기를 합해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직 후 2년 8개월 정도 취재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언론노조와는 대척점에 있는 MBC 3노조의 주관 행사입니다. 거기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겪어 온 얘기들을 담담하게 풀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서 '아, 소외됐었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게 어땠는데?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래도 일은 하지 않았냐. 그래, 월급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돈이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고를 이기는 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제 MBC 소속의 모 참고인이 과방위에 출석했는데 어느 분이 질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월급 얼마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내면에는 당신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불만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저의에는 우리는 천민이었습니다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면당했기 때문에 천민이란 표현을 썼겠지요. 그것을 이제 되받아친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왜 천민이냐,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지요. 이상휘가 이상휘가 아니면 이상휘가 아닙니다. 기자가 펜대를 꺾고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하면 기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잣대와 보편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경제적 잣대로 그들의 설움과 그들의 고통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상업적 형태를 가진 MBC지만, 근로의 계약을 하고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면당하면 대한민국의 진실도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당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본질은 월급과 그들의 생활고와 그들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꺾였고 그들의 영혼이 꺾였고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꺾였고 펜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넓게 퍼뜨려진, 넓게 펼쳐진 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어 있고 그늘져 있고 모서리져 있는 그 사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각을 보고 그 사각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사각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법에 대한 처리 이 부분에 대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대우와 처우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유산을 경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들의 지성으로 유지한 대한민국 사회, 그들의 지성으로 지켜낸다는 대한민국 사회 그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각지대에 있고 왜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수가 없는 전체는 없습니다. 소수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소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과방위 청문회가 11시부터 열리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문회인데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고를 하나도 안 읽었네요.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마는 서두가 몇 시간째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사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했어요. 프로파간다(propaganda)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묘한 선동으로 권력 잡은 나치 괴벨스, 언론사부터 통폐합했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

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많이 읽어 보기도 하는데 참고삼아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역사상 최고의 프로파간다—프로파간다는 아시지요?—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히틀러가 1차 대전 패배의 굴욕으로부터 독일을 구해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줄 구세주라며 교묘하게 선전했다. 히틀러 무오류설 신화를 만들어 낸 괴벨스는 나치 체제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가 없었더라면 나치즘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남을 속이려는 자는 우선 자신에 대한 거짓말부터 하는 법, 괴벨스는 다리를 절었다. 아마도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렸던지 혹은 선천적 내반족 증상—이게 뭐냐면요 다리가 안으로 굽는 증상입니다—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1차 대전 때 부상 당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나치는 흔히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히틀러의 많은 수하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리안족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허약한 모습이었다.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TV와 SNS 시대라면 괴벨스의 왜소한 모습이 약점이었을 테지만 대중 연설과 라디오 시대였기에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큰 보탬이 되었다.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괴벨스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일기에 히틀러를 정치 천재라고 칭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다. 운명의 징조인가? 아돌프 히틀러여,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내용을 일기에 쓸 정도면 진정 히틀러에게 매료되었던 것 같다.

1924년 혹은 1925년 나치당에 가입한 그는 당 기관지 '공격'을 창간하고 바이마르 체제를 그야말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포스터 제작, 슬로건과 이미지 창안, 가두행진 조직 등 정열적으로 프로파간다 활동을 수행했다. 그는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폭력 투쟁도 불사했다. 나치당은 1930년대를 경과하면서 세를 크게 불려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괴벨스는 6000회에 이르는 집회를 조직하고 수백만 부의 소책자와 포스터를 뿌려대는 동시에 군화, 경찰봉,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쇳조각으로 무장한 시위꾼들을 동원하여 정적들을 힘으로 눌렀다.

한 달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나치는 드디어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다. 후일 히틀러는 괴벨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일 그가 없었다면 베를린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괴벨스는 집회에서 히틀러가 연설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여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했는데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힘 있는 바리톤 목소리로 군중을 좌지우지했다. 감정적이지만 내용이 뒤죽박죽인 히틀러의 연설은 듣는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경험으로 남지만 논리정연하면서도 강력한 괴벨스의 연설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당대의 평이었다.

1933년 그는 프로파간다 담당 장관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 부서의 인원을 1000명 넘게 늘리면서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의 목표는 국민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러 언론사를 통합하여 독일뉴스국으로 만들고 법을 바꾸어 기자들이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괴벨스는 언론 관련 콘퍼런스를 자주 개최하여 특정 사안마다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지 지시했다.

분명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는 라디오였다. 싼 가격으로 국민라디오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나치가 원하는 내용을 무차별 주입했다. 또 영화에도 관심이 커서 자신이 통제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933~1945년 동안 1361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악랄한

반유대인 인종주의 작품인 '유대인 쥐스'가 가장 대표작이다. 사실 괴벨스는 자신의 스토리 안에 이데올로기를 은근히 숨겨 전파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히틀러의 취향에 맞추어 노골적인 선전 영화도 만들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체제를 선전하는 좋은 프로파간다 기회였다. 이때 히틀러와 친분이 있는 레니 리펜슈탈이 감독하여 유명한 선전 영화를 제작했다.

괴벨스의 이게 너무 많아서요 저도 읽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괴벨스의 어록만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대중을 지배한다. 대중을 지배하는 자는 국가를 지배한다', '물고기가 물을 원하듯 베를린은 센세이션을 원한다', '우리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가 되어 끌려 나가기 전까지도 말이다', '우리는 최고의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니면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19세기에 신문이 한 역할을 20세기에서는 라디오가 한다', '대중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다. 멍청하고, 욕심 많고, 잘 잊어 먹는다'.

참 이게, 괴벨스가 남긴 명언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묘하게 낯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길거리 투쟁, 권력 쟁취의 지름길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잡은 권력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것과 교차해서 또는 그런 공감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만 뭔가 모르게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대안이 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 4법 중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법인가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

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영국의 BBC와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해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권을,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법부터 바꾸자는데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느 누구도 여기의 주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공영에 대한, 공영에 대한 성격은 정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오롯이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라는 그 오만함으로 지배구조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자면 절대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절대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영위해 왔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도입돼 왔던 그러한 법체계와 그러한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또 다른 위법적 체계로서 법질서의 체계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저 이상휘 국회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그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폄하되었으며 민생이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명확한 절대악이 될 수 있었겠지요.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충돌은 있었지요. 헤게모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KBS·EBS를 바라볼 때 이러한 지배구조로 경영을 영위했고 운영해 왔고 정의로운 객관적인 공정한 뉴스와 상황을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법이 왜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악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법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7 대 4의 구조, 6 대 3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중된 시각으로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렵습니다만,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방송의 지배구조가, 이사회 구조가 KBS는 7 대 4. 여당이 7이고 야당이 4이고, EBS와 MBC는 여당이 6이고 야당이 3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그 주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출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에 대한 7 대 4와 6 대 3의 구도는 적어도 그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가치를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라는 그 발로일 것입니다. 그 4와 3은 그 7과 6을 최소한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구도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방송을, 공영을, 국가적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적어도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구조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공영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객관성과 공정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감히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문회 또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해민)

(10시1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해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의원 이상휘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입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조국의 앞날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말씀, 어쩌면 그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과 똑같은지 감동을 받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제 앞에 여당 의원님들—감사합니다—좀 계시고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어 혹은 이 조직에 꽤나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후 시청하실 분들은 그 인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라는 곳을 그다지 가깝지 않은 곳으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떠드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개인의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는데요.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여기가 중요합니다—대통령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3사는 KBS, EBS 그리고 MBC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쥐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구입니다.

(「옳소」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논하는 이 법안은 바로 그 구성이 최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이 법안을 이렇게 깊게 논의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구가 있어서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찬성의견을 말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나 그 이유를 찾아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이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고, 독특한 점은 정권을 누가 잡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9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기보다는 점점 공영방송의 목적성, 그것이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야 공히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행이 생겨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위원을 교체하고 각 방송사의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사장을 해임을 하고 친정부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하고 친정부 간부인사로 교체를 하고 정권을 옹호하는 편파방송으로 단행이 이어지는 방송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창립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 12명으로 열한 번 바뀌었고, KBS 사장은 총 19명으로 열여덟 번 바뀌었고,

이 중 대통령이 바뀌고 8개월 이내에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일곱 번이나 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비교할 숫자가 있어야겠지요. 영국은 동 기간 총리가 열두 번 바뀌었지만 총리가 바뀌고 8개월 이내에 BBC 사장이 교체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일본 역시 총리가 스물다섯 번 교체됐지만 NHK 회장이 교체된 사례는 단 두 건이고 그조차도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된 이런 관행은 돌이켜 보면 2008년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C……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 대 8의 구도를 6 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적인 양당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 대 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16년이 흘렀고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이 고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관행을 만들어 낸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고리를 끊어 내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함께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도 방송장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실 방송장악법이 아니라 방송장악 방지법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읽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당이 야당이 될 때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여당 측에서 주최한 방송 4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안을 되살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증치료만 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종사자나 대표성이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방통위의 권한이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확대돼서 민주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여 보자는 이 법안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법안이 여야를 떠나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가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을 탓하지 말고 그전에 정치적으로 취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어 놓고 십수 년간이나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해 왔던 과오를 사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영방송이 정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함께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결자해지하려는 의지는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법안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효재, 김홍일, 이상인이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EBS 탄압하고 마지막 남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탄압을 시도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진짜 사상 초유입니다—2인 방통위 체제로 실질적인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저희 당에도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번 법안 찬성토론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장식 의원님 생각을 하면 이번 정권의 방송탄압이 조국혁신당에는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방문진 선임계획 회의 열어 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예를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극우적인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그 불법적인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정말 신기한 국정운영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국정농단·시민과의 연대, 세 위원회 통해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품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약속입니다.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통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의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겨우 방통위원장 뭐 하러 3일씩이나 인사청문회 하냐 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지요.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을 할 건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이유는 야당이 여러 날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방통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직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고, 그런데 이틀 동안 진행을 해 보니까 준법정신이 전혀 없는 범법자 그리고 전문성도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인간적인 기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조차 그 아픔에 공감 못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께 다시 한번 나라가 지켜 주지 못함을, 그 책임에 대한 사과 못 함을 제가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사실 여당에서도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분들 다 제쳐 두고 가장 현저하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그 뜻이 뭘까, 도대체 왜 훌륭한 사람들 다 냅두고 이런 사람을 내세웠을까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정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정권이 관심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그것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동지들을 배신한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염석진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당시에 친일파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 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읊어 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최창봉 전 사장의 보도 탄압에 맞서서 MBC 구성원들이 파업했던 시기에 서울 시내 거리에서 '그래도 공정방송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힌 언론 노보를 나눠 준 사람, 1994년 독자적인 인간 정신의 고양을 바란다며 무조건적인 명예 탐이나 권력욕은 쉬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본인의 일기에 적은 사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2년 노조 사찰 프로그램을 사내에 깔고 직원들을 사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계획서에 노골적으로 노조탄압을 명시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내 중요 보직 시절부터 대전MBC 사장 시절 내내 법인카드를 골프장, 단란주점, 노래방, 빵집, 마트에서 알뜰히도 사용한 사람.

국민들은 같은 사람이냐며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 거냐며 묻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친일파의 논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방송 민주화 특보를 나눠 주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의 품에 안겨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가 믿는 정권이, 그 힘이 오래오래 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거야라는 친일파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5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지금 정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저는 지금도 권해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의 목적성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해 칼춤을 출 사람이기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면면을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히 검증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이 계속되는 지금 그럼에도 공영방송 정상화의 꿈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부당한 인사의 임명 철회 및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통위원장후보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이진숙 후보자든 누구든 공영방송의 마지막 맥을 끊으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논평을 냈습니다. 그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널리즘, 저는 저널리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강연을 했더라고요. 저널리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곡된 저널리즘은 국가를 좀먹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방송법 개정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언론장악 기술자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수순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됐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합니다. 정권 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방송사를 장악하기 때문에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개편하고 저항적·비판적 사내 구성원을 노조라는 이름하에 탄압하고 축출합니다. 아마 아이스링크로 축출된 MBC PD 그분들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 땡윤뉴스가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아까 이상휘 의원님께서 제3노조의 아픔, 그들의 진짜 아픔 위해서 하는 말 됐고 서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 제1노조, 제2노조에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쟁으로 나눌 것이, 갈라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국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건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지요. 불법행위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혐의 하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그 첫 번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퇴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돕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무려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해촉도 사실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지적이 나온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 하나를 잡아 내서 해촉안을 재가했고 그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제가 류희림 위원장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숨을 쉬던데, 가족·측근 이용해서 청부민원 넣고 오히려 청부민원 넣어서 그것을 공익제보한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청부민원 빌미 삼아서 편파 심의하고 방송사 중징계 마구마구 남발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워싱턴 D.C.에 있는 구글오피스에 가서 책상 탁 치면서 협박을 했더니 구글 간부가 본인에게 약속하더라라고 한국에 와서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구글코리아의 항의 방문을 받은 분이지요. 낯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또 심의권한이 없는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복인사를 단행한 사람입니다.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보복인사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도 윤 대통령은 놀랍게도 류희림 위원장을 최근 며칠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6기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

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KBS에 경영악화와 내부 혼란을 초래시켜서 김의철 사장을 해임시키고—두 번째 단계입니다—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직위자와 뉴스,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윤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MBC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거면 맥락, 콘텍스트를 앞뒤로 붙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MBC 얘기 왜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탄압을 할 곳이 MBC이기 때문입니다.

MBC 길들이기와 보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압박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주 잘 알지는 못했었고 국민 여러분은 더욱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언론단체가 있습니다. 급조된 보수언론단체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가 MBC에 대해서 실시되었고 감사원은 MBC가 감사를 방해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를 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무단 해임했던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방송장악을 하는 단계가 이전 보수정권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이어서 방통위는 MBC를 겨냥한 방문진 감사에 돌입을 했고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억지 탄압이었는지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명한, 유명한 날이지요. 6월 2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도주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으로 방문진—즉 MBC의 최대 주주지요—,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극비리에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요?

KBS의 경우에 현재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MBC는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아직 못 해낸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아마 청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이 강행될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후에는 MBC도 2단계로 금세 넘어갈 것입니다. 사장이 바뀌고 MBC가 망가지고 그 망가진 MBC 뉴스와 망가진 MBC 프로그램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지작거렸던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밀실 민영화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걸 미리 한번 진행을,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 비해서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더 작을 것 같은 YTN, 방송장악 기획 단계부터 사영화로 바로 내몰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졸속으로 매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YTN,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 낸 언론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지금 정권의 친위대로 다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MBC를 제외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세 번째 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TV 틀면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EBS도 나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든 야든 방송장악 여기에 희생이 되고 있는 여러 PD, 프로그램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아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갈라치기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방송의 선진화 이루려면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국민이 바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관행, 이걸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권력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 호도해 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아까 전에 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셨지만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보수정권마다 시도된 공영방송 언론장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요구는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에 나섰었고 2016년 7월 달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거치면서 제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권분립—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국회의 입법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내밀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방송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제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여야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지요, 7월 17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 여시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깊은 고심과 숙고가 담긴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안 제시하지 않고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자존심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으로 불완전한 2인 방통위 구성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강행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전 대전MBC 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조직본부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 2022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으로 변모한,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한 말 많고 탈 많은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내세워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숙 씨는 법인카드 유흥지점 사적 유용, 트로이컷, 불법 직원 사찰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할수록 부적절한 인사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릇 인사라 함은 어떤 자리의 역할을 가장 잘 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마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채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인사라는 것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방송사업자와 구분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이사 선임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토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사회 이사 선임을 위한 추천권자를 국회 교섭단체, 학회, 전문가, 구성원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시청자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장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방송장악 방지법이지요. 공영방송이 보다 더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공익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송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 독립성, 객관성, 좋은 말 다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보장돼야 합니다. 현재 올라온 방송 4법이 그러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은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모두 공히 정쟁에 사용되는 단어들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 보시고 ‘아, 이 부분이 공영방송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해외 예제 가지고 와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사례 많이 나왔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문장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져와서 방송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을 반대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 논리를 들어 보고 싶었는데 해외 사례 그것 말고는 사실 그다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신 케이스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페어니스(fairness)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요. 앞과 뒤가 맞으려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반대토론하시는 분들 그 앞과 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여당도 야당도, 어느 한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쟁 떠나서 방통위가, 내가, 내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방송의 그 뒤에, 뒤에, 뒤에, 뒤에 그 시작점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독립성을,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해민 의원 훌륭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충권)

(11시01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박충권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섰을 때 기대했던 첫 모습이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언론장악 방송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는 초심자로서 너무나도 착잡하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제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40002번입니다. 정식 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가 소위 유배지로 불리는 과방위에 지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까지 총 20년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반이 넘는 시간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AI와 최첨단기술이 국가 생존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패권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은 방송법과 같은 정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4법은 과방위에서 지난달 18일에 민주당에 단독 강행처리되어 기어코 어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이틀간 자정을 넘겨서 릴레이로 강행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신공격과 마타도어, 편파 진행이 난무하는 난타전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까지 지명되기 전부터 한 달도 안 돼서 탄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언론장악을 위함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위원으로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 특히 공영방송이 왜 중요하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정된 한준호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작년 3월을 마지막으로……

(「추천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이 아니라도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자, 좀 조용히 하시고 토론을 들읍시다.

○박충권 의원 의견을 조용히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경험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과학기술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초선 의원인,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제가 보고 배우고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들어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배웁시다. 방송법을 배웁시다. 제가 오늘……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발언 안 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그래요. 토론을 좀 들읍시다.

○박충권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여러 논문들 중에 양측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다 같이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도 이 내용들을 들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작년 3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거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자자, 소리지르지 말고 더 들으세요.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합니다. 퇴거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이렇게들 소리를 지르세요.

(「저쪽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박충권 의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반론하시면 되잖아요, 나오셔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마다 반론하면……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박충권 의원이 귀가 너무 밝아서 그래요.)

양문석 의원, 조금 자제해 주세요.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도 못 합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리 지르지 마시라 이거예요.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살살 좀 이야기하세요, 양문석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여기도 좀 그만하시고.

(「기본은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도 그만하시고.

토론하세요.

○박충권 의원 제가 지금 한 2주째 감기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양문석 선배님께서 힘내라고 파이팅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러한 방송법에 대한 오늘 자 사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설입니다.

4박 5일 국회 본회의,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가 다시 여야의 소모적인 극한 대치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나섰고 이에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법안별 필리버스터를 하루마다 1건씩 표결로 중단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4박 5일간 쉬는 시간 없이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권이 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말에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막혀 무산됐었다. 법안 중 방송통신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법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사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아직 임명도 안 된 이진숙 방통

위원장후보에 대한 탄핵도 야권발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장 공석으로 현재 유일한 방통위원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급이 아닌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인지 논란이건만 그럼에도 탄핵을 강행한다면 방통위는 식물위원회를 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둘러싼 공방으로, 공정보도를 내세우지만 기실 방송 환경을 제 편에 유리하도록 꾸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2분기는 6분기 만에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을 팽개친 채 국회가 파행 코미디를 이어갈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틀째 이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사퇴 압박으로 일관했다. 방통위를 사람이 없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에도 신경전을 거듭했다. 낙마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민주당의 집단 공세와 질의는 치졸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억나지 않느냐'는 식의 질의는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이었다.

후보자가 양손에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한 걸 문제 삼은 것도 황당했다. 민주당 이훈기 위원이 '후보자가 MBC 본부장 재직 시절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 사찰과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하자 후보자는 종이 자료를 직접 들어 보여 주며 반박했다. 엉뚱하게도 최민희 위원장은 '피켓 투쟁을 하는 거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후보자가 의도한 조롱이라는 주장이었다. 코믹하게 자료를 들어 위원들이 불쾌했고 자신도 놀랐다며 격분했다. 어느 지점이 코믹하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분이 나빴다니 나쁜 줄 알 수밖에 없는 억지춘향 격 지적은 입법부의 전횡으로 비칠 뿐이다.

이미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피켓을 사용하면서 설명한 장면들이 다 증거로 있는데도 민주당의 우격다짐은 계속됐습니다.

희한한 논리는 계속됐다.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피켓을 든 선례가 있느냐는 물음만 수차례 반복했다.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사과하세요'로 이어진 고압적인 말투였다. 항의하는 여당 위원들에게는 '고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후보자가 '자료를 들고 오는 게 위법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미 방통위원장 두 사람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 탓에 사임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판판이 무력화한 것이다. 퇴계 이황이 재림해도 탄핵 대상이 될 거라는 풍자가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MBC 하나 지킨다고 IT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2명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소추 전 자진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이것도 오늘자입니다.

방송장악 위해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나선 거야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당론을 모으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탄핵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억지가 아닌가.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또는 8월 초 임명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1인 체제로는 방통위가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방통위법은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의도는 어떻게든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는 MBC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기만료가 오는 8월 말인데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민주당 의도대로 오는 26일쯤 본회의에서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지도부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후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방통위 업무를 잠시 지연시킬 수 있지만 실익이 없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은 국회에서 힘자랑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매진하라는 요구다. 이를 외면하면 돌아오는 건 민심 이반일 수밖에 없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25%, 국민의힘에 10% 이상 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횡포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제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께 질의할 때 세 가지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모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입니다. 사이버렉카들, 소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협박과 횡포를 일삼는 자들, 이들을 처리해서 제2, 제3의 쯔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그리고 틱톡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필터링된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SNS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회적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관련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인가요 부산지검 앞에서 50대 유튜버가 상대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방심위가 시정조치 요구했고 삭제조치 요구했는데 10시간 넘게 삭제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요. 이런 문제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방통위, 방심위,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의 역할과 왜 공영방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특정 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견제 도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법으로 규제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첫째로 공영방송은 특정 집단에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문제는 단순히 한 정당을 편향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MBC KBS, 공영방송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방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야, 언론장악 내로남불, 문 정부 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야'는 야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 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청산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습니다.

더퍼블릭에 나온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3년 8월 8일 자 신문입니다. '이런 게 언론장악, MBC 제3노조가 밝힌 문 정권 시절 공영방송 장악의 실체'. MBC입니다, MBC.

제3노조는 이어 문서의 내용은 실제로 이행됐다. 2017년 9월 4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적·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그렇게 됐다.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학자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같은 날 충북지역 35개 시민단체들이 MBC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고 9월 6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전북 시민단체들, 9월 7일 부산의 57개 단체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의 원주지부들, 9월 8일 민노총 전남본부가 MBC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야당 측 이사들 괴롭히기도 본격화됐다. 야당이면 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

2017년 9월 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사퇴했는데 그날 경향신문은 학계 후배들의 간곡한 설득이 유 이사가 사퇴를 고민하게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말을 보도했다며 간곡한 설득이 아니라 유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제3노조는 10월 18일 목원대 총장이었던 김원배 방문진 이사도 사퇴했다.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다.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게 방문진의 여야 비율을 바꾸더니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의선 전 방문진 이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사실인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언론독립, 방송독립을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찾아내 문책해야 합니다. 문건 자체는 민주당 전문위원이었던 안 모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 전문위원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공작 총책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정권과 국가기관, 특정 이념단체들이 공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짓밟

는 정치 제거 재난이었다며 지난 일이라고 방관하면 독초의 뿌리처럼 언젠가는 재발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의를 세워 민주주의를 해하려는 기도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앤드마이크 2022년 7월 4일 자 신문입니다. '문 정부 적폐청산 리스트야말로 역대급 블랙리스트'.

언론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더구나 정치적 좌우 진영을 구분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준 언론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면에서 심각한 위헌 행위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공영미디어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의해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영미디어에서 일어난 역대급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일 것이다. 필자는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가 미디어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리스트야말로 역대급 블랙리스트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미디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들을 공개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미디어에서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한쪽 집단은 이익을 다른 한쪽 집단은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박탈당하고 고유 방송 업무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영미디어인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2018년 6월 해고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연합뉴스에서 외부 세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조성부 사장과 이병로 부사장에게 왜 이창섭을 안 자르느냐며 압력을 넣었고 노조에서 징계 대상을 정리해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역대급 블랙리스트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의 다른 이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추진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8월 14일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적폐청산 기구들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공영미디어계에서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YTN 미래발전위원회 등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공영미디어 적폐청산

기구들의 위법 사실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다.

KBS 진미위, 그러니까 진실과미래위원회입니다. KBS 진미위의 교훈, 거버넌스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은 KBS 진미위 사태를 살펴보면 동 시기에 설치되었던 적폐청산 기구들의 문제점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설치된 KBS 진미위는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받는다는 독소조항이 있고 KBS 진미위는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는 등 사내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다. 후배 기자가 선배 기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상황이어서 마치 인민위원회 같은 기능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

KBS 진미위 징계 건의를 통해 전 정권—전 정권이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시절의 보직간부 17명이 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S 진미위 의결 안건이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22건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KBS 진미위 징계 건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KBS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은 2018년 5월 30일 제910차 KBS 정기이사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안건을 제출해서 논의했고 이어 6월 5일 제911차 KBS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당시 의사록을 살펴보면 KBS 진미위 운영규정 의결을 위한 표결에서 11명의 이사 중 다수이사 7명만 찬성했고 소수이사 4명—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입니다—중에서 1명은 불출석했고 3명은 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집단 퇴장했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전홍구 KBS 감사는 KBS 진미위 운영규정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다수결에 의해 의결되었지만 소수이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2018년 9월부터 KBS 이사로 활동한 필자는 KBS 진미위 사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그해 9월 28일 제918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진미위 운영실적 및 현안보고 안건을 발의하여 보고받으면서 KBS 진미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KBS 사규에는 2년으로 돼 있는 징계시효를 KBS 진미위는 10년으로 확대했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은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수이사,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 진미위 조사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후 양승동 사장은 KBS 진미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2019년 6월 19일 제941차 KBS 임시이사회에서 진미위 활동 결과보고 안건을 제출했다.

통상 KBS 이사회에서 집행부의 보고 안건은 전체 이사들의 합의로 청취접수하는 것

이 관례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소수이사들은 KBS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고안건의 청취접수를 반대했다.

KBS 진미위와 관련하여 KBS 공영노동조합이 서울남부지법에 KBS 진미위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어 KBS 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양 사장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KBS 진미위와 관련된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들인 안건 제출자인 양승동 사장, 운영 규정을 의결해 준 7명의 다수 이사들, 업무를 총괄한 위원장 등 모두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된 이후에도 적폐청산을 강행한 점에 주목한다.

정상적인 공영미디어 거버넌스라면 견제와 균형에 의거하여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는 정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거버넌스 주요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적폐청산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따라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버넌스 행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불법행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는 신속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이번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사건은 추진 과정에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비교적 쉽게 진상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은 대부분 1년 안팎이었다. 이러한 활동기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수시로 공표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 그리고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백서를 발간하여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노동법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공직자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KBS노조, KBS직원연대, MBC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등에 종사하는 자유 언론인들이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대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하며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불법행위자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약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약 먹을 시간 되어 가지고.

(「뭐든 먹고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 많아요.

○박충권 의원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13일 자 기사입니다.

‘문 정부 들어 사장들 바뀌자, TV 시사 프로 편향성 심해져’.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공개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TV 시사 프로의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진행자·출연자의 발언, 자료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PD수첩’과 KBS ‘추적 60분’, ‘시사기획 창’의 주장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논쟁적 사안과 관련해 주장이 강하면서 특정 방향으로 의견이 집중된 경우를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간주했다. 연구진은 TV 시사 프로그램 12개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을 얼마나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TV 시사 프로는 독선적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는 주장 강도뿐만 아니라 한쪽의 이해 당사자 편만 드는 경향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TV 시사 프로의 편향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현 정부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에서 높은 편향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년 말과 작년 초 MBC와 KBS의 수장이 각각 교체된 이후에 TV 시사 프로들은 적폐청산 계열 내용을 잇따라 방송했다. KBS ‘오늘밤 김제동’ ‘저널리즘 토크쇼J’,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이 신설됐고 KBS ‘추적 60분’에서는 ‘삼성공화국 1편, 이건희 차명계좌 이대로 묻히나’, ‘사법부의 민낯-판사 블랙리스트’,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한반도 평화 기획 1부, 북미정상회담 첩보작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등이 편성됐다.

MBC ‘PD수첩’에서도 ‘국정원과 가짜 보수, 불법 정치공작’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 판사 블랙리스트’ ‘MB 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 ‘양승태의 부당거래, 대법원 사법농단’ 등의 비슷한 기획이 잇따랐다. MBC ‘스트레이트’도 작년 2월 첫 방송 이후 6개월여 동안 MB 자원개발 관련……

기사가 하나 빠졌네요.

뉴데일리 신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방중으로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 정부 문서 나와. KBS 뉴스엔 안 보여’, 2023년 7월 28일 자 신문입니다.

편파방송에 따른 여론 악화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은 KBS가 여전히 여권은 깎아내리고 야권은 두둔하는 민주당 봐주기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직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대학생 등 40여 명의 모니터링 조사단을 통해 매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이렇게 돼 있지요—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지난 20일 KBS 뉴스 9은 이 사실을 누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드 전자파 인체에 무해 결론 났는데 국민에게 숨겨’.

공언련은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 문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늦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공언련은 해석했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한 공언련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공언련은 이 문서에는 또 사드 관련 3불 합의—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를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표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그동안 3불 합의가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고 밝혀 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 협의의 결과라고 답변한 것이 대표 사례라고 거론한 공언련은 안보주권과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감춰 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KBS는 이를 단 한 문장도 다루지 않은 반면 SBS와 TV조선 등 타 방송사들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며 KBS 보도의 편파성을 거듭 지적했다.

‘KBS 뉴스서 전교조·김어준 비판 찾아보기 힘들어’.

공언련은 KBS 뉴스 9의 또 다른 편파보도 사례도 언급했다. 공언련은 지난 20일과 21일 뉴스 9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를 다루면서도 그 원인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정책 때문이라는 진단은 쏙 뺀 반쪽짜리 보도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뉴스 9은 지난 20일 ‘학교에서 숨진 교사, 커지는 진상규명 요구’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왜 사망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다음 날에는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 교권침해 호소’, ‘피멍 드는 교사들 울분’이라는 제목으로 교권침해 사례와 교사들이 겪는 고통을 2개의 리포트로 전하면서 교육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은 소홀히 한 결과 이러한 교권침해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교계의 또 다른 진단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공언련은 또 이날 뉴스 9은 방송인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 중 해당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갑질 민원의 당사자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을 지목했다가 허위사실로 드러나 고발당했는데도 이 역시 다루지 않았다며 전교조나 김어준 같은 친민주당 세력에게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게 KBS 편파보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국힘 소수의견은 부각하고 민주당 내 쓴소리는 외면’.

이날 7월 셋째 주 방영된 4대 공영방송 뉴스·시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 공언련은 KBS 뉴스 9 외에도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평소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부각시켰다며 지난 18일 방영된 수해 관련 리포트를 소개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복구 지원을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걸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고 비판한 내용을 거론했다. 하지만 민주당 관련 이슈를 전한 리포트에선 당내에서 불거진 자성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이 의원들의 반발로 25일 만에 겨우 조건부 결의됐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라는 단서를 붙여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이러한 민주당의 분위기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MBC는 이준석 전 대표나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등 국민의힘 내 갈등 뉴스는 연일 키우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가급적 눈을 감는 편향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파성 지적받은 방송이 국회 토론회 불공정 지적'.

공언련에 따르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17일 집중호우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을 비난하면서 이해찬 총리가 2006년 사임한 이유는 삼일절에 골프를 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 브리핑에서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홍 시장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2006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삼일절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2주 뒤에 사임했다며 '삼일절에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것 때문에 사임했다, 사임. 이렇게 당당하셔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당시 이해찬 총리가 골프를 친 3월 1일은 단순한 삼일절이 아니라 철도 파업 첫날이었고 영남제분 회장이 종일 동행하는 등 동반 라운딩한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및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라 로비 의혹이 제기됐으며 2005년에도 비 피해가 속출하던 날 골프를 친 전력과 함께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결국 사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신 변호사는 삼일절에 골프를 친 것만으로 사임했다는 단편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홍 시장은 왜 집중호우 때 골프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고 공언련은 지적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20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 행태를 지적한 지난주 공언련의 국회 토론회가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디어톡 코너에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개최한 후쿠시마 괴담 토론회에 대해 보수 성향 인사들만 모인 토론회에 공정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좌파 인

사들의 주장만 충실히 보도하면서 IAEA 보고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원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다루지 않아서 편파 왜곡 방송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며 그동안 수없이 불공정한 패널 섭외와 편파 왜곡 방송을 해 온 공영방송이 시민단체의 오프라인 토론회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이라고 비판했다.

‘문 정부 때 외교차관 나와 윤 우크라 방문 맹폭’.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함으로써 반정부적 여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종건 전 외교부1차관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한 기대 효과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폭우 피해로 전쟁터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차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날 국회의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질타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공언련은 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을 충실히 보도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나토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미호강의 강바닥이 퇴적물로 높아져 준설이 꼭 필요했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준설하지 못한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음에도 지난 20일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만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이날 진행자 김종배는 유족과의 인터뷰에서 총체적 부실이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모든 게 밝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지자체의 초동 대처 미흡과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미비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수 언론은 2021년 9월 충청북도가 미호강의 지류 15곳에서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준설 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해친다고 반발해서 사업을 멈춘 것도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며 이날 방송은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와 제방 보강 덕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는 전문가의 주장 등은 외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만 부각시킨 편파 방송이었다고 평가했다.

‘DJ·노무현 때 통일부장관 불러서 윤 대북정책 비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며 2주 연속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통일부장관들을 불러 경색된 남북관계를 분석해 보는 내용을 방송했다. 지난 12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섭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를 진단한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20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출연시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도록 판을 깔아 줬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어차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기들 갈 길 간다고 했다. 자기들의 행사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은 심해지고 국민의 삶은 더 척박해졌다. 김영호 장관후보자 지명은 통일부의 존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외눈박이처럼 왜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를 말씀하시는지 등 인터뷰 내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이 전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갈 길 가는 것이라며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며 공영방송 KBS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들만 연달아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퍼붓게 한 것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패널 섭외라고 비판했다.

펜앤드마이크 2023년 3월 2일 자, '출연 패널은 좌파로 가득하고, 낮술 폭언으로 드러낸 YTN의 민낯'.

YTN에서 낮술 폭언 사태가 빚어졌다. 2일 YTN 방송노조에 따르면 임종열 상무가 술에 취한 채 진행자에게 진행이 보수 쪽으로 편향적이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언론계 낮술이 아직까지 유행한다는 사실이 해괴한 일이지만 보수적이라는 말이라는 말을 사용해 진행자를 압박하는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YTN은 좌파 방송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것인가.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이재윤 진행자는 2일 개인 성명에서 YTN 라디오 상무라는 자가 진행자에게 대낮에 술 먹고 고성으로 진행이 보수 쪽에 편향적이다라는 망발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재윤 진행자가 밝힌 YTN 방송 수준은 충격적이다. 그는 성명에서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나오는 이슈로 넘쳤다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나치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식이라며 한창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했다.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반복됐다라고 고백했다. 이 정도면 중병이다. YTN의 민낯을 보여 준 셈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2일 성명에서 '낮술 폭언 YTN 임종열 상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임종열 상무의 발언은 방송편성 개입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 모든 부조리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장균 YTN 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폭언 피해 당사자인 이재윤 씨 성명 전문과 국민의힘 특위 성명 전문.

YTN 정상화는 우장균 사퇴로 시작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동형은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를 대선 기간 내내 진행했다. YTN의 '뉴있저' 못지않은 편파성으로 늘 문제가 됐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 편들기 방송을 하면서 편파방송 YTN의 대표 상품이 됐다. 대선이 끝나자 급하게 나에게 진행자 교체 제안을 해 왔다. 많이 늦었지만 공정성 시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 생각했고 YTN이 또 다시 언론사로서 치명적인 편파성 논란에 빠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

라디오 진행은 쉽지 않았다.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나오는 이슈로 넘쳤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자 기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나치다 싶었다. 이재명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지라시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식이다.

한창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했다. 비슷한 상황은 여러 번 반복됐다. 진행자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여권 또는 여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여권에 불편한 질문을 했고 야권 또는 야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했다.

균형을 잡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YTN이 보여 준 편파적인 보도 행태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양쪽 모두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오해가 이어졌다. 그래도 꾸준히 균형 잡는 노력을 해 나가면 점차 공영방송 YTN의 이미지를 되찾아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YTN은 이미 편파·좌파 방송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뿐이었다. YTN 라디오 상무라는 자가 진행자에게 대낮에 술을 먹고 고성으로 '진행이 보수 쪽에 편향적이다'라는 망발을 했다.

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균형을 찾으려는 그간의 노력이 사내에 확산하기는커녕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편파방송 지적에 눈감아 온 자가 갑자기 나를 편향적이라며 행패를 부리니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온다. 술기운에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쏟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YTN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그 편파성으로 보면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선전·선동 조직이라 부를 만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언론의 기본 자세는 잊은 지 오래고 이를 숨기려조차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장균이 답하라. 음주 폭언에 대한 YTN 라디오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진행자가 당신과 같은 편파적, 정파적 편향성을 갖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아무 때나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왕놀음을 하는 중인가. 대놓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출연자를 감싸던 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들어와 편파성을 들먹이는 적반하장은 당신이 뒷배라서인가?

언론의 사명과 회사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그 자리에 눌러앉아 노심초사 자리보전에 머리 굴릴 생각은 말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릴 때이다. 자신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물러나는 게 답이 아닌가. 그것이 YTN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다.

YTN이 달라졌다고 백날 말해 봐야 믿어 줄 사람은 없다. 말이 아니라 보도 행태로 판단할 것이며 우장균이 버티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이 안 된다. 이미 조직에 쌓아 놓은 해악이 산더미여서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것 외에는 편파방송의 딱지를 떼어 낼 길이 없다.

우장균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YTN을 공정한 언론사로 볼 사람은 없다. 이제 스스로 내려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염치조차 없는가.

해설위원실 이재윤.

중앙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신문.

문 정부 방통위 자문·소송 계약, 이재명 변호 LKB가 1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유력 야권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급성장한 곳이다. 비슷한 시기 방통위 소속 수임액이 가장 많았던 곳도 LKB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방통위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420건의 법률자문 중 31%에 달하는 131건의 법률자문을 LKB가 맡았다. 자문료는 건당 10만 원으로 1310만 원이었다. 여러 법인에 중복 자문한 것을 고려하면 141차례의 자문 중 131번 참여한 꼴이어서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례의 93%에 LKB가 참여한 셈이다.

자문 내용은 주로 당시 야권이던 현 여권이 반발하던 MBC 대주주인 방문진 임원 해임 권한, KBS 이사 해임, 조선방송 주식 거래 법률자문 관련 등의 내용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사안에 다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권한 건과 KBS 이사 해임권은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문을 받은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 방통위 소송대리 계약 금액도 LKB가 2억 166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12건인 법무법인 충정에 이어 LKB가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LKB가 담당한 소송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KBS 강규형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 심의록 정보 공개 소송 등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LKB는 주로 친문 핵심 인사를 변호하는 로펌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LKB는 정치권에서 야권의 구원투수로 불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LKB는 유력 야권 인사의 재판을 맡으며 입지를 다졌다.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맡아 무죄로 이끈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이 대표는 당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도 대부분 LKB가 수임해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LKB 내부에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야권이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LKB는 최근에는 여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KBS를 위해 나섰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과 관련해 앞서 접촉한 대형 로펌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하자 KBS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LKB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LKB는 2020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 때도 KBS 측 변호를 맡았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오보를 낸 KBS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LKB를 선임했던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LKB는 좌파의 김앤장이라며 야권과 LKB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특정 진영과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공기관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방통위와 로펌의 방송장악 카르텔이라며 공공기관 일감이 특정 회사에 몰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이라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장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지난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로 3일째 진행하고 있지요—거의 이틀 동안 참고인 질의 중에서 대부분의 이슈가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에 관한 인사청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와 그리고 비언론노조원들 간의 어떤 대립·갈등·보복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정말 인사청문회 자리가 그간에 있어 왔던 방송장악 사건들과 그리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의 성토장이 된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과방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MBC 언론노조 청문회가 돼 버렸다라는 얘기들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뉴스 기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KBS 차기 보도국장 성재호 ‘언론은 원래 편향적’… ‘편향보도 ing’ 선언 논란.”

최근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한 반발로 수신료 폐지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차기 보도국장으로 지명된 KBS 기자가 언론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편향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KBS 새 통합뉴스룸 국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4일 KBS 기자협회와 일문일답을 진행한 성재호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 취재주간은 KBS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편향되지 않은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편향성을 측정해 감시하는 기관들조차 한 언론을 놓고 서로 상이한 편향성 측정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사를 읽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성 주간은 그래서 우리 뉴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문제 제기에만 집착해 정부나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이뤄 낸 성과를 놓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성 주간의 답변 내용이 본지 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KBS 내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으로 불난 집에 차기 보도국장 지명자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성 주간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5일 배포한 성명에서 편향성 논란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넘긴 성 주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KBS 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으로 KBS가 존망의 대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보도국장의 충격적이고 허탈하고 절망적인 인터뷰가

공개됐다고 개탄했다.

KBS 노조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뉴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성 지명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놓고 지금까지 해 온 편향 뉴스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KBS 노조는 보도국장 지명자가 정치적 편향 뉴스를 하겠다고 한 정견 발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성 지명자는 무엇 때문에 보도국장이 되려고 하나? 국민을 위해서? KBS 구성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정의를 위해서?'라고 거듭 물었다.

이 발표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KBS 구성원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한 KBS 노조는 많은 국민이 편향적 뉴스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보도국장이 되려는 자가 편향 뉴스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KBS를 망하게 하는 악재를 제거하지 않고 더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KBS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재원의 약 20%밖에 가용할 수 없어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우리 KBS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고 밥줄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태라며 KBS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지적한 KBS 노조는 대국민 사죄 후 사장·이사진 총사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KBS 대개혁 약속 등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보도국장 지명자가 민심을 역행하고 반개혁적인 발언을 했다고 개탄했다.

KBS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의철 전 사장 등 기존 경영진에 더해 이번에는 보도국장 지명자까지 편파방송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KBS 노동자들을 더욱 절망하고 울부짖게 만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성 주간을 겨냥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 KBS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3대에 걸쳐 보도국장을 세습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내기 골프 오보로 KBS에 내부 총질 손실이 일어났을 때 보도본부 사회부장을 했던 자가 보도국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KBS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통합뉴스룸 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오는 17일까지 모바일로 진행한다. 통합뉴스룸 소속 직원들이 과반 투표, 과반 찬성을 하면 국장에 임명되는 수순이다.

1997년 KBS에 입사한 성 지명자는 사회부장, 뉴스전문위원 등을 거쳐서 현재 통합뉴스룸국 취재1주간으로 일하고 있다. 제4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으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퇴진 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FNTODAY 2023년 5월 19일 자 신문, '민노총 소속 KBS 보도국장 편향성 논란, KBS 내분 점입가경'

민노총 산하 KBS언론노조 노조위원장 출신의 성재호 KBS 보도국장이 편향성 시비로 도마위에 올랐다. 성 국장은 최근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라서 민노총 간첩단 뉴스를 다룰

수 없는 것인가?'라는 KBS방송인연합회의 성명에 불만을 품고 연합회의 정철웅 회장을 두 차례 불러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연합에 따르면 성 국장은 이 과정에서 'KBS방송인연합회가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방송인연합회를 고려해야 되냐'며 노골적으로 KBS방송인연합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KBS방송인연합회의 성명을 방송인연합회장의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면서 KBS방송인연합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18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성재호 KBS 통합뉴스룸 국장의 갑질과 폭언 논란은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성 국장은 얼마 전 성명서를 통해 민노총 간첩단 보도 누락을 비판한 KBS방송인연합회장에게 명예훼손성의 비판이고 이런 비판이 직장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폭압적인 경고를 했다. 방송인연합회장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저널리즘에 관심이 없다는 인격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이지만 KBS는 중요한 내용을 누락 혹은 축소 보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또 국민들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인 성 국장을 비롯한 보도국 수뇌부 대부분이 민노총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KBS 통합뉴스룸의 보도국장 자리는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도맡아 오고 있다.

성재호 국장은 KBS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17년 고대영 전 사장을 퇴진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KBS 보도국장이 매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KBS의 편향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성 국장은 방송사가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 편향적인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재호 국장의 과거 발언과 행동들이 어땠나'라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지가 과거 자료를 서치(search)해 본 결과 성재호 국장은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고대영 전 사장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폐 고대영 사장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이런……' 중략입니다. '언제까지 보고 참아야 합니까?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시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합시다. 박근혜 낙하산을 싹쓸이하지 않으면 KBS 정상화는 되지 않습니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특히 당시 KBS본부 노조위원장이었던 성 국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측이 고대영 사장에게 200만 원을 주고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대영 사장을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성 국장과 KBS언론노조원들은 '고대영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직원들 다 파업하는데 무슨 수로 평창올림픽 KBS가 방송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사태를 해결하실 겁니까?'라면서 차를 막았다. 차를 막아 놓은 상태에서 KBS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장시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문제는 1시간 30분가량 차를 가로막는 바람에 차 안에 타고 있던 고대영 사장과 일행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대영 전 사장은 KBS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으나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로 해임 무효화가 되었다. 결국 당시 고대영 사장으로 향했던 KBS언론노조원들의 사퇴하라라는 압력이 결국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KBS 보도국 국장이 매번 특정 노조의 전유물이 되면서 KBS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노조가 KBS를 비롯한 모든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방송사와 언론사들을 마치 자신들의 지사처럼 활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노총 간부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치부를 드러내는 비판적인 뉴스를 전하는 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언론연합회는 성재호 국장에 대하여 '당신이 2017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게 했던 말을 돌려준다. 아무도 당신을 국장으로 생각하지 않아'라고 전했다.

2023년 6월 9일 조선일보, 'KBS 이사 4명 민노총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 편파 심해'.

김종민 이사는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 비롯해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3대 세습이라는 거지요—며 민노총 출신을 앉히라고 국민들이 수신료를 주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하필 주진우 라이브라는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하는 주진우에게 연간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주고 있나라고도 했다.

이은수 이사는 대통령 방미 기간 KBS라디오 출연진을 보면 첫날에는 민주당 및 진보성향 의원 16명이 대거 출연해 방미를 폄훼하는 방송을 했는데, 보수 색깔 출연자는 단 1명이 출연해 16 대 1이었다며 월드컵에도 16 대 1은 없다. 과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하에서도 6 대 4, 5 대 5, 못해도 7 대 3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최근 민노총 사건 보도 사라진 KBS.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KBS는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KBS 9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KBS방송인연합회)는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8일에는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 KBS 앵커가 9시 뉴스에서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가 옷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해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 멘트 화면을 바꿔치기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소위 생태탕 보도의 진원지도 KBS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철학자 김용옥과 배우 유아인이 진행하는 '도올아인 오방간다'—KBS 1TV에서 했지요—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주장이 전파를 탔다.

각종 미디어가 넘쳐 나는 가운데 공영방송이 정보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특정 진영의 시각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래 이사는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했는데 이런 뜻이 확인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3명이 분리징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가 머뭇거리다가 최근 5년간 KBS의 불공정성, 무능 경영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국민이 판단한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가 갖는 특별부담금 성격, 공영방송의 역할, 효율적 징수의 필요성 주장 역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2023년 5월 12일 자 조선일보 기사, MBC 3노조 '직원 42%가 간부, 민노총 노조가 승진 독식'.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서 MBC 직원의 42%가 간부이고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인사들이 승진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성명서에서 과거 정상적인 경영 시절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부장 이상 간부급 승진 인사가 언제부터인가 무원칙하게 오락가락하더니 올해에는 아예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며 MBC 안에 국장과 부장 등 간부급 직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취해진 조치라고 한다고 했다.

제3노조는 2017년 민노총 노조 경영진이 들어선 뒤로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기준은 붕괴했다. 2018년 5월 최승호 경영진은 7단계의 직급을 4단계로 조정한 후 근속연수에 의한 직급조정이라는 희대의 시대 역행적 조치로 무려 624명을 승진시켰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체 조직의 42%로 늘어나게 되었다며 과거 28% 정도였던 간부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전체 47%였던 사원급은 22%로 쪼그라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일할 사람을 줄이고 관리자만 양산하는 전 사원의 간부화 혹은 초 간부 인플레로 이어졌다며 더 큰 문제는 간헐적으로 단행된 승진 인사에서 오로지 민노총 노조원 중심으로만 승진했다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제3노조는 2019년 정기인사의 경우 직원 내 민노총 노조원과 비노조원 비율이 76 대 24였지만 승진자 비율은 민노총 노조원이 무려 96%를 차지했다며 2021년에도 민노총 노조원 승진자가 95%에 달했다. 심지어 차장에서 국장으로 무려 3단계를 단기간 초스피드로 뛰어넘는 열혈 노조원도 숱하게 많았다고 했다.

제3노조는 회사 직원이 오로지 민노총 노조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잇따른 승진 인사에서 민노총 노조원만 승진시키거나 초고속 승진마저 허용했다는 것은 그동안 인사정책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 주는 증거라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최근 회사 경영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실적이 급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C에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안 되는 회사 측 인사 상당수가 민노총 계열인 제1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3노조는 2021년 기준 MBC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제1노조원으로 표기된 MBC 작성 문건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FM투데이 2023년 4월 13일 자 기사, '미디어오늘, 알고 보니 민노총 언론노조가 최대 주주?'.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임을 자처하면서 조중동 등 보수 매체를 주로 비판하던 미디어오늘의 최대 주주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DART 시스템이지요—미디어오늘의 최대 주주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며—43.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요 주주는 대원산업개발, 신진건설,

이화건영 등 건설 관련 회사들이었다. 세 건설사 각각 10.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건설사의 지분을 합치면 31%가 넘는다. 또한 MBC 노동조합 역시 미디어오늘의 지분을 8.77%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서 스스로를 언론노조라고 부르면서 민노총의 좌파 어젠다를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는다.

결국 미디어오늘 법인의 지배구조는 좌파 언론노조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자본이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양새였다.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자본의 언론 침투를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한 매체가 알고 보니 자신들의 최대 주주는 좌파언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미디어오늘이 공정한 미디어 비평을 한다면서 왜 그리 좌파 성향의 어젠다를 중점적으로 다뤄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대목이다.

이번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규형 KBS 전 이사님의 집단 린치 관련된 뉴스기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펜 기사 2017년 9월 22일 자, ‘KBS 언론노조, 강규형 이사 집단 린치 전치 2주 진단’.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 강규형 KBS 이사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2분 KBS 본관 5층 승강기에서 내린 강 이사의 출입을 방해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약 70여 명의 노조원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 이사의 동선을 막고 고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노조원들은 강 이사와 KBS 시큐리티 직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고통을 호소하던 강 이사는 결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노조는 폭행을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며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력성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또 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학교와 사무실에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버젓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아니라 폭력집단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며 폭력을 부추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폭력단체라는 말이냐며 그대들이 언론인이 맞냐, 정말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 공영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노조는 폭행을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파업 중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의 폭력성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하고 있다. 이사들의 퇴진을 위해 학교와 사무실에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버젓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폭력집단 같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8일 사장실 점거 시도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KBS 시큐

리티 직원들 네다섯 명을 다수의 위력으로 계단으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시큐리티 직원들은 무방비로 계단에서 구를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곽중수 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얼굴과 이마, 눈, 목, 어깨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측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사람이 다쳤다고 외쳤지만 노조원들이 곽중수 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폭력행위는 지난 20일 수요일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상황은 강규형 이사가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동하던 KBS 본관 5층 복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본관 5층에서 성재호 본부장 등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이사회 회의 장소로 도보 이동하려는 강 이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상황은 이날 밤 언론노조 KBS본부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라이브 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 화면에는 성재호 본부장이 업무방해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의 얼굴과 손을 내려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폭력행위로 해당 시큐리티 직원은 얼굴과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KBS 이사의 정기이사회 참석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특히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돕고 있던 시큐리티 직원에게 찰과상을 입힌 것은 명백하게 폭력행위이다. 형법상 범죄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며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폭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같은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라이브 동영상까지 올렸다. 폭력을 부추기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폭력단체란 말인가. 그대들이 언론인이 맞단 말인가. 정말 부끄럽다.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은 당장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시큐리티 직원에 사죄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라. 시큐리티 직원들은 소중한 KBS 가족임을 잊지 말라.

사측에도 촉구한다. 회사는 폭력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채증된 영상 등에 근거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파업에 폭행까지, 사측이 이런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공영방송 KBS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온 국민이 KBS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KBS공영노동조합.

2023년 6월 12일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강규형 전 이사, ‘방송장악이 뭔지는 현 KBS 경영진이 잘 알 것’”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읽어 드리는 것은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수많은 언론노조 출신 증인·참고인들과 그리고 비언론노조 출신 증인·참고인분들께서 오셔서 서로가 입었던 보복피해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MBC 인사청문회였겠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많은 증인·참고인들이 나오셨지만 그간 입었던

피해들, 그간 당했던 불공정과 불합리함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KBS 이사에서 강제 해임됐다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벌여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는 9일 현 KBS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장악인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김의철 KBS 사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전날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이 된 저 때문이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의 방송장악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 사장이나 현재 KBS 주요 경영진은 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민노총의 기간방송으로 만드는 주역을 했던 인물들 아니냐면서 김 사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각종 선동적인 내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저를 포함한 KBS 이사들을 몰아내는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야당 추천 KBS 이사였던 강 교수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 강 이사만 찍어 올린 표적 해임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승인했다. 이후 강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3년 8개월 만인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2년 5월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문 대통령의 인사조치에 맞서 제기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KBS에서는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앞장서서 강 교수를 포함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을 몰아내는 퇴진 운동을 거세게 벌였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KBS 사장을 바꾸고 싶은데 KBS 이사회에서 당시 여당 추천 이사 숫자가 적었어요. 저를 포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이사 2명만 쫓아내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 노조가 나섰던 것이지요’.

당시 KBS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강 교수를 포함해 일부 이사들의 직장인 학교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 교수의 학교에 비방 벽보를 붙이고 학교 정문에 확성기를 틀고 집회를 벌이는 등 집단 린치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 강 교수 집 근처에 노조원들이 숨어 있다가 가족들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강 교수는 그때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보도국장석에 앉아서 현재 KBS의 편향 왜곡에 항의하는 사람을 불러서 겁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KBS 이사 교체의 본질은 결국 방송장악이었으며 결국 김 사장 등을 포함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선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강 이사와 함께 퇴진 요구에 시달렸던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언론노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그 탓에 해임무효 소송을 벌이지도 못했다. 강 교수만 혼자 해임되는 길을 택한 뒤 소송을 벌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강 교수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는 강 이사 등을 몰아내고 KBS 이사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고대영 당시

사장 등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교체했다. KBS판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도 만들어졌다.

2018년 6월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 벌어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를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어 10개월간 활동한 진미위는 2019년 4월까지 총 22건의 KBS 내 보도 공정성·독립성 사례를 조사하고 이 중 5건을 근거로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강 교수는 진미위는 직원들의 과거 정권 시절 행적을 파악해 인적 청산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김 사장도 당시 4명이었던 진미위 위원 중 1명으로 활동한 만큼 정부가 마음먹고 방송을 장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정필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 등 진미위 위원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KBS나 MBC 모두 문재인 정부 이후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 국민한테 수신료를 달라고 할 수 있나, 수신료는 공정방송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 역시 KBS 이사 시절 수신료 문제를 깊이 고민했었다. 강 교수는 수신료를 받는 것은 이제 옛날 방식이다, 일본과 영국도 수신료를 없애거나 낮추고 있다라고 했다. 강 교수는 미국 공영방송 PBS와 NPR은 마침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맥아더재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들은 수신료 없이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과 달리 수신료를 준조세처럼 받고 있는데 이는 KBS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진영을 앞세운 방송을 하는 KBS가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느냐, KBS는 결코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KBS는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51%에 이르는 등 불필요한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의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부담해 주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했다. 또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이제 OTT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의 선택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일 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강규형 또 이겼다. 대통령 이어 KBS 2노조에도 승소’.

4년 전 자신의 KBS 이사회 출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2노조) 조합원 7명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4-1 민사부는 지난달 26일 강 교수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6명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이유로 피소된 2노조 조합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강 교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상해 피해는 불인정.

재판부는 본부노조 임원인 피고 성 모, 오 모 씨 등은 2017년 9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KBS 이사였던 원고가 그 무렵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기획했다며 이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 조 모 씨와 강 모 씨, 임 모 씨, 이 모 씨 등은 승강기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승강기에 탑승하려는 원고 앞을 막아서는 행동으로 원고의 이사회 출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들의 집단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이 사건 집단행동을 기획·지시·감독한 본부노조 임원들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집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도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씨 역시 당시 강 교수 주위를 둘러싸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으로 강 교수가 이사회에 출석하려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의 집단행동으로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원고가 피고들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규형, ‘내가 퇴출된 후 여와 언론노조가 KBS 주도권 잡아’.

이 같은 판결에 강 교수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 성 모, 이 모 씨 등이 집단린치한 건이 형사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악명 높은 박 모 씨로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추가 조사도 없이 기소유예됐다며 반면 민사에서는 언론노조, 즉 본부노조·2노조원들을 상대로 2심에서 부분 승소했다. 이 건도 4년 이상 끌었다는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강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언론노조 해임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써 가며 저를 쫓아냈던 이유는 KBS 이사진 가운데 저만 나가면 이사진 구도를 바꿔 여권과 언론노조가 KBS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KBS 이사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주로 언론노조와 소송전이 붙어 도합 30건가량 송사가 진행됐는데, 이 중 20건은 정리됐고 10건 정도 자잘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당시 여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수차례 지적했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강규형 KBS 전 이사가 외로운 싸움에서 또 승리했다며 강 교수의 연이은 소송 승소를 페이스북 게시글로 축하했다.

박 의원은 강 교수의 민사소송 일부 승소는……

(「강규형 교수는 제 친구인데요…… 이제 충분히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거의 다 했습니다.

강 교수님께서 그날 하실 말씀 다 못 하고 가셨어요. 쫓겨나셨습니다.

(「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방위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리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뒤로 나가시면서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보좌진한테.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무효, 취소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가 강 전 이사의 KBS 이사회 참석을 방해한 KBS본부노조 조합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한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상대로 상고심까지 재판을 끌어갔지만 패소한 데 대해서도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 명예실추… 강규형 해임 건의'.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했으며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KBS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2노조와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회부됐다.

이에 2017년 12월 27일 청문회를 연 방통위는 강 교수의 KBS 이사직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튿날 문 대통령은 방통위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올라온 강 교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강 교수의 KBS 이사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8개월 넘게 남겨두고 해임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2노조 측이 자신에게 폭행·협박죄 등을 뒤집어씌웠고 방통위가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많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 '이사 적격' 상실 아냐… 해임처분 부당, 원고승소 판결.

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부당집행 액수가 여타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시위자에게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동이 없었으며 원고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이런 사유 등으로 KBS의 명예 실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도 지난 9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며 강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교수님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왜 나를 타깃으로 삼았느냐, 왜 나를 해임시킬 타깃으로 삼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수가 제일 만만해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 보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 뉴데일리 기사 내용입니다.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커피 관련 언급을 할 테니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인터뷰 일주일 전쯤 조 씨에게 전화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해당 인터뷰와 관련하여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14일 이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 오랜만에 연락한 것이라고 한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뷰 이전에 오랫동안 김 씨와 연락한 적 없다고 밝힌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고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고 김 씨에게 전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난 10일 김 씨를 소환해 9월 14일 오전 11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의 과거 번호가 기재된 부고를 보고 전화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씨 전화번호가 바뀌기 직전인 14일 아침 신 전 위원장에게 연락이 왔고 다음날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전에는 연락한 적 없다는 신 전 위원장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수사팀은 14일 이전 신 전 위원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김 씨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 일주일 전 김 씨가 조 씨에게 윤석열이 커피를 타 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한 것이 근거다. 수사팀은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여 김 씨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JTBC 보도에 주요 취재원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조우형 씨의 사촌형이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이철수 씨다. 수사팀은 이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허위 보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압수수색영장에 2021년 12월 21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최 모 씨가 브로커 이 씨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김 의원과 최 씨와 만남에서 윤석열 후보 개인이 조우형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쟁점으로 포인트를 잡아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과 최 씨, 이 씨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몸통 타깃을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씨가 이로부터 두 달 뒤 언론사의 취재원으로 직접 등장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에 취재원으로 등장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8일 JTBC 봉지욱 기자와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첫 조사를 마친 조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애가 완전히 거의 뭐 패닉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두 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며 조 씨가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만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전관을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잘됐다'며

조 씨의 말을 전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1일 봉 기자가 보도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봉 기자와 인터뷰한 다음날인 지난해 3월 1일, 허 기자의 보도에서는 최재경 녹취의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해당 녹취에 나오는 인물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 김 의원의 보좌관인 최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이철수 씨는 제보자로서 만난 것이고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와 관련해 알려 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이철수 씨를 제보자로서 만났다. 제보받은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소위 허위 보도와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허재현 기자를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고 저와 허 기자는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지난 8일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두 사람 모두 구속됐지요. 이렇게 기획되고 허위 녹취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대선 바로 이틀을 앞두고 MBC가 메인 뉴스에서 네 꼭지를 할애해서 이 뉴스 기사를 검증 없이, 팩트 검증 없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그 네 꼭지 중에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반영한 뉴스 기사는 한 꼭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대선 바로 전날이지요—그 전날에 PD수첩은 추가 검증 없이 또 이 허위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바로 하루 앞두고. MBC뿐만이 아니었지요. SBS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이 뉴스 기사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징계를 받았고요 SBS만 징계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SBS는 이 녹취록 보도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SBS의 경영진과 뉴스데스크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는 사실 자체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간접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JTBC와 KBS는 이 허위 녹취록 보도를 한 점에 대해서 나중에 그래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와 신학림 씨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영방송의 실체입니다.

당시 뉴스타파 기사 원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2022년 03월 6일 자에 뉴스타파가 이것을 보도했고 그 뒤에 3월 7일 날 대선을 이틀 앞두고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모두 이 내용을 사실 검증 없이, 팩트 체크 없이 보도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지인과 나눈 1시간 12분 분량의 대화 음성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이 대화 녹음파일에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온 과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주장이 들어 있다.

김만배 씨는 당시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5일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으나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실명도 공개되기 전이었다.

대화 당사자인 신 전 위원장은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만배 씨와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오랜만에 만났다.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대화 이후 김만배가 한 얘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의혹들이 언론, 정치권 등에서 퍼져 나갔다. 김만배에게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들어 보려고 했으나 구속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나에게 털어 놓은 증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라도 공개를 결심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는 신 전 위원장과 만났을 때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써 가며 설명했다고 한다. 김 씨가 작성한 노트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박영수 전 특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와 기업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박영수에게 사건을 청탁했고 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녹음파일 중의 일부 내용이지요.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다.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 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여부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김만배 씨는 음성파일에서 자신이 조우형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음성파일 내용입니다.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응. 조우형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 해 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했는데, 내가 솔직히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

에 가서 ‘00 검사야, 내 동생이니까 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 주는지 알지.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00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 줘.’”

“아, 조우형한테?”

“응. 박영수 변호사를……”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검찰의 혈관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이어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누가? 박00 검사가?”

“아니,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00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거야?”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응.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 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시키고 이랬지.”

이렇게 기획됐던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형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대선 TV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타 줬는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이미 여러 개 나와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 내용도 그중 하나다. JTBC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화장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참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 가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예.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은 2개월 전에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 모 검사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조우형 씨와 박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박영수 변호사 측은 후배인 윤석열 검사에게 조우형 씨 관련 사건을 청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서면답변을 보내 왔다.

‘조우형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시 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영수 변호사 측 언론 담당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캠프 측은 보도 직전까지 아무런 답을 해 오지 않았다.

‘성남시에 3700억 선배당 때문에 법조인들 투자 포기. 이재명은 난놈이야’.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김만배 씨는 애초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18개 만든 뒤 이를 자신과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 주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 해서. 그런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법조인도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700억 원 우선 배당받아 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갖게 된 거지. 원래 천화동인은 다 팔 계획이었는데……’, 김만배 음성 파일입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김만배 음성파일 또.

“그리고 공사에—성남의뜰이지요—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했어.”

“돈을 또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3700억 원 배당과는 별도야?”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 자산운용사 화천대유가 내는 거지.”

“성남의뜰 운영비까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법적으로 걔네들이—성남시지요—그렇게 만들었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업에 관여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해 놨네.”

“그렇지,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 놓은 거네.”

“해 놓은 거지. 이재명이 난놈이야.”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했다.

김만배의 음성 파일입니다.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계속 부대조건이 붙는 거야?”

“응, 내가 욕을 많이 했지. 0 같은 새끼, 00놈,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녹취록 파일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게 뉴스타파 기사 원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획이 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이것을 일부 타락한 기자들이 허위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조작해서 그것을 보도하고 그것을 보도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가 달려들어서 대선 이틀 앞두고 대서특필하고 보도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해 가는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2023년 10월 5일 자 데일리한국 신문입니다.

‘여당의 박성중,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뉴스 475만 명에 발송’, 대선 전날에 뉴스타파 가짜뉴스 기사를 475만 명에게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을 야기한 기사를—아까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가짜뉴스 기사를—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대표는 본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의 기사가 담겼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가 편집된 것으로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낸 5번의 공식 문자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 줬다는 내용 등은 짜깁기된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본투표 전날인 3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2270만 759건을 발송했다. 뉴스타파의 기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는 475만 1051건 발송됐다. 이는 네 번째 많이 발송된 것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한 같은 날 오전 10시 마지막 문자 467만 4827건보다 많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문자메시지 5회 발송비용 7억 1700만 원을 보전받았다. 문자메시지 1건당 단문—45자지요—약 10원이고 장문 1000자는 약 30원으로 보면 해당 기사가 담긴 문자메시지에만 최소 47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힘쓰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했다면서 대장동 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으니 가짜뉴스를 살포하고도 돈 한 푼 안 들어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관계 당국은 공작 정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연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 선관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이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린 것뿐이었다며 당시 허위 인터뷰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만큼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함께 인터뷰 보도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4년 4월 22일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선 전날에 475만 명에게 가짜뉴스 기사 링크가 달린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됐다고 했지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선을 바로 앞두고 살포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 원이 들었고 선

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 모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짜깁기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 허위 인터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며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실제 보도하자 이 대표는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 가짜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가 윤석열 커피가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가짜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완전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8대 대선 때 100건, 19대 대선 126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대선 때는 431건이 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600여 개 아이디로 여기저기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다. 최근 국내 포털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수 조작은 해외 IP 단 두 곳에서 약 2000만 건의 클릭이 나왔다고 한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짜뉴스 선거 조작은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온라인상에서 댓글팀이 운영되고 여론을 조장하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을 통해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야합한 일당들이 댓글조작사건을 일으켰고 그것이 적발되었지만 이외에도 북한의 사이버부대가 우리나라를 24시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해킹 공격을 당한 횟수는 하루 평균 162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가 북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와 이런 활동들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24시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활동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법원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단 2개의 IP를 통해서 수많은 댓글과 여론조작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북한에게 넘어가서 북한 사이버부대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포털들은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 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4500만 원은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KBS·YTN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금액인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 원,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우리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진행된다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과징금 부과로 방심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안형준 MBC 대표이사가 방심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안 대표이사는 명백한 표적 심의로 내용도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대선 중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일 방심위에 긴급심의 민원을 신청했다. 국제 마피아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가 대선 기간 이 대표 측근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야당과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이 표적수사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김만배와 신학림 씨는 구속됐고 그리고 가짜뉴스임이 다 드러났고 이것이 정말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이 대선 전날 팩트 체크도 없이 일제히 보도하고 이런 것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권력의 감시기구로서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방심위의 역할이 맞는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야당 의원의 '이대생 성상납'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도 뒤에 민주당 로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띄웠고, 일기예보를 전하면서도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1번 숫자를 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태극기와 일장기 양국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라는 오보를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두고서도 방송 화면에 불필요한 죽은 물고기,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을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시키는 방송을 하고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잘못된 행태들, 편향된 행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로 대선판 뒤흔든 언론사가 CP, 네이버 이대로 괜찮나'.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자 2명이 구속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3일 전 공개된 기사에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배임증재·수재 등으로 영어(囹圄)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된 내용입니다.

이제 화살은 두 사람의 허위 주장을 대선 직전 퍼뜨린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향하고 있다. 2022년 3월 6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기사를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보도한 곳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였다.

뉴스타파는 이 기사에서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 파일이 발췌와 편집을 거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고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데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녹취파일 원본에는 박땡땡 검사가 수사를 봐줬다는 김 씨의 발언이 담겨 있으나 뉴스타파가 공개한 기사에는 '박땡땡이 얽어 넣지 않고 그냥'이라는 대목이 누락된 채 '봐줬지'라는 말만 나와 결과적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주장을 했고, 두 사람의 대화 녹취파일을 입수한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터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뷰 보도하며 뉴스타파 전문위원 부각 안 해'.

김 씨가 가짜뉴스 전파의 매개로 활용한 신 전 위원장의 정체도 수상하다. 당시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와 지인의 대화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마치 제삼자로부터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지인의 직함을 신학림 전 위원장으로 통일했고 네이버에 송고한 기사 바이라인에서 신 전 위원장의 이름을 제외했다. 따라서 해당 기사를 네이버로만 접한 독자들은 녹취록 속 김만배의 지인이 뉴스타파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상시계약을 맺고 기자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19년에만 총 8000만 원을 취재 용역비로 받은 신 전 위원장은 '족벌사학과 세습, 사학은 왜 정계로 진출했나', '민국100년 특별기획 족벌사학과 세습, 일본 제국대학 출신의 부역자들', '일제와 독재에 부역한 사람들' 등 다수의 기사를 뉴스타파에 기고했다. 바이라인은 신학림 기자였다. 신 전 위원장 본인도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문료 받고 하는 그런 용역직이 아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시계약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 했던 김 씨가 마땅한 언론사를 물색하던 중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났고, 사실상 뉴스타파를 보도 창구로 이용하고자 신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과 관련된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나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와 상시계약을 맺은 기자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하고 이를 입맛에 맞게 가공한 뒤 대선 직전 제보를 받은 형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좌파세력이 사실상 대선 여론공작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한 매체와 이를 악용한 공당 역시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대 대선 하루 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뉴스타파 기사를 475만 1051건 발송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 짜깁기를 통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반복되는 선거공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여권의 한 중진 의원도 대권을 잡기 위해 민주당과 친민주당 인사, 친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최악의 언론공작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스피커 노릇을 한 뉴스타파는 물론 이를 전 국민에게 전파한 포털사이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여권 인사의 지적처럼 20대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네이버의 역할이 컸다.

2012년 설립된 뉴스타파는 2018년 네이버·카카오와 최고 등급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제휴사—CP지요—가 됐고 콘텐츠 제휴사는 포털로부터 상당한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를 가리킨다. 검색 결과만 노출되는 검색 제휴사보다 등급이 높아 뉴스검색 알고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바뀐 현재의 뉴스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할 시 콘텐츠 제휴사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이 설정됐다는 게 뉴스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콘텐츠 제휴는 말 그대로 포털에 기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으로 검색만 되는 게 아니라 포털 홈페이지에도 등재돼 뉴스 확산성이 대폭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 포털사는 콘텐츠 제휴의 진입장벽을 높여 뉴스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매체와만 최상위 제휴를 맺고 있다. 비영리·비당파·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표방하는 뉴스타파는 6년 전 평가 대상 매체 중 유일하게 합격해 콘텐츠 제휴사가 됐다.

언론보도를 보면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을 채우지 못해—월 50건입니다—탈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했다는 게 해당 보도의 골자다.

당시 네이버에 73개 매체, 카카오에 74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는데 합격한 언론사는 뉴스타파뿐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포털이 뉴스타파를 합격시키기 위해 제휴 요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포털은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뉴스타파 해약 사유 충분, 포털은 요지부동’.

포털 입점 과정도 의심스럽지만 가짜뉴스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언론사가 여전히 콘텐츠 제휴사로 남아 있는 것도 미스터리다. 포털 제평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87곳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타사 기자가 쓴 분석 내용을 표절, 자체 기사가 아닌 것을 자체 기사로 제출, 추천 검색어 남용, 동일 기사 반복 전송 등의 행위가 적발된 매체들이 제평위로부터 해약 통보를 받았다.

대선 직전 유력 후보를 가격하는 가짜뉴스를 올린 행위는 거론된 사례보다 더 큰 해지 사유라는 게 언론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콘텐츠 약관 제18조에 따르면 제공자, 즉 언론사 정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뉴스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과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뉴스타파의 기사가 논란을 빚자 여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뉴스타파를 포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포털과 제평위는 요지부동이었다. 좌편향된 제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기존 입점 언론사의 기득권만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해 5월 22일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침묵을 지켜 오던 네이버는 지난해 말 제평위 재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으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 제평위 재구성은커녕 포털 입점 및 퇴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대선공작을 위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게재한 뉴스타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콘텐츠 제휴사가 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네이버 측에 공개 간담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언론계 절대 갑으로 군림하고 있는 네이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인터넷신문계 원로는 뉴스타파는 가짜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뉴스를 위해 뭉쳤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거대 야당 측과 야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는 전 언론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마땅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포털 역시 좌파언론의 진지를 구축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던 박성중 전 의원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퇴출당한 언론사들의 사유를 보면 이번 뉴스타파 국기문란 행위의 새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라며 네이버는 대가성 기사, 어뷰징 행위 등으로 87개 언론사를 퇴출하더니 뉴스타파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나, 네이버는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와 정해진 약관대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계약 해지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잠깐 쉬고 하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가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9월 10일, 뉴데일리 기사.

“문재인 검찰, ‘윤(尹)이 수사 무마’ 허위 알고도 침묵… 가짜뉴스 방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관련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방치해 가짜뉴스 확산의 계기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파악했음에도 지난 대선 직전까지 침묵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결국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만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신 전 위원장은 그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도록 해 줬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으로 프레임 바

꾸기에 나섰다. 그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과의 만남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라는 글을 썼다.

이틀 뒤인 10월 18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수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1월 19일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말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우형 씨는 닷새 뒤인 11월 24일 검찰에 ‘나는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 모 검사를 만났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남 씨는 조우형 씨와의 대질신문에서 직접 조 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윤석열 커피 내용이 허위임을 이때 이미 파악한 셈이다.

그러나 JTBC는 2022년 2월 21일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 줬다는 남욱 씨의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나흘 뒤 이 대표는 이를 근거로 TV 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공격했다.

JTBC 보도 이후 검찰은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김 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JTBC는 지난 6일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인용한 MBC와 KBS도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정작 뉴스타파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억대의 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허위 인터뷰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서 지난 대선에서 보도된 윤석열 검사 커피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이 사전에 철저히 기획·날조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JTBC,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깊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 검찰이 증인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학영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또 어린 소년·소녀들도 와 계시는데, 미래 세대들, 국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라고 이렇게 1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 24시간 내내 하기 때문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감사합니다.

학생들 오셔서 지루하실 테니까 말씀하시는 국회의원 오실 때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라는 좀 발음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 오셨는데 필리버스터, 처음 듣는 말이지요?

필리버스터란 어떤 제도냐 하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을 반대하는

정당에서 무제한토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에서 방송법을 올렸고 국민의힘당에서 방송법에 대해서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반대하는 당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해서 어제부터, 오늘 오후 5시가 되면 아마 24시간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하고 24시간이 지나면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에서 이것을 중단하자는 의결안을 올려서 그것을 표결해서 통과되면 중단을 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무제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라는 국회의 한 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려운 필리버스터라는 말 하나를—우리말로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데—공부하고 가시면 그나마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있다 방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박충권 의원 예.

(「자기소개 좀 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그리고 경력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의 어떤 법안 상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봐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잘 모르시겠지요—이게 무슨 대학교냐 하면 김정은은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교인데 대학교는 1963년에 설립이 됐어요. 대학교가 1963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김일성 시대에 김일성이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ICBM을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대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대학교는 대학교의 모든 학부들을 합치면 ICBM이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ICBM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 대학교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만들어진 미사일들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김일성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 1963년부터 미사일 하나, ICBM 하나 만들겠다고 대학교까지 만드는 그런 나라가, 그런 체제가 북한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대학교를 만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6·25를 통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지요. 한데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 국군의 희생과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졌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았

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김일성이 이게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면 결국 김일성이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판 통일이지요. 그쪽에서 공산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핵을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1961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시켜요.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사건이지요. 그걸 보고 나서 김일성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이거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의 기반 기술이 ICBM인 거지요. 이게 무기화되면 ICBM이 되는 것인데 그것과 핵을 보유하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때 대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대학교를 나왔던 이유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말 어떻게 봤냐면 거의 김 씨 일가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정의이고 선인 나라는 북한뿐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군사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대학교라고 인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저도 당시에 세뇌됐으니까. 아주 어릴 적,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부모님 하시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세뇌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세뇌된 상태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교를 갔던 거지요.

그러나 저는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또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보면서 '아, 이 체제가 정말 잘못됐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북한의 주민들을 못살게 만들고 정말 지구상 가장 불쌍한 주민들로 만드는 것이 북한 정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제가 2009년에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1년 만에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으로—저는 공학도입니다—석사와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올 때 뭐 가져온 게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스물세 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또 박사후 연구원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 우리가 그만큼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우리의 선대세대들이 만들어 낸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일전 한 푼 가지지 못한 저를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신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고 또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격돌하면서 더 좋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생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념도 없이 협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 가는 그런 과정이 국회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너무 국회의원들이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비교해 볼게요.

조선노동당,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 국가라고 보통 하지요. 그런데 이 당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의 당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견제할 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더라도 다른 당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간다, 그런 것이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떠나가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의원 그러면 이어서 필리버스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방통위원장 하신 분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또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기준점을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인사혁신처가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인사혁신처가 진행하는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는 것은 처분 자체도 위법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위원장은 법이 방통위원에 대해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23년 7월 말까지였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소장에 적시된 '미치겠네'라는 표현을 가리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라며 검찰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유포됐다며 재판에 앞서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편향된 언론관 드러내…… 방송 공정성·중립성 훼손.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글이 공개되자 한 위원장은 헌법적 가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한 위원장이 몸담은 방통위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마당에 무슨 방통위의 독립성을 운운하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가 언론계에서 터져 나왔다.

KBS방송인연합회는 24일 배포한 성명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가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위법성·위헌성의 우려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으나 이는 자신이 한 행동과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한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말하며 당혹스러운 심기를 드러낸 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은 양00 방통위 국장이 집계 결과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밝힌 KBS방송인연합회는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은 불구속기소, 양00 국장과 차00 과장, 심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심사위원 2명은 불구속기소돼 모두 6명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됐는데 한 위원장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자기 밑에 있는 국장과 과장이 구속기소됐는데도, 아랫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본인만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냐며 부하 직원이 왜 구속됐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 자신의 말처럼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지키고 중립적으로 운용했다면 자신의 부하 직원들은 구속이 안 됐을 것이라며 단정한 KBS방송인연합회는 방통위원장은 심판이라며 심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승인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특정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작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한 위원장 자신이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고 입으로는 떠벌리고 정작 자유를 없애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사람이 자유니 독립이니 위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꾸짖은 KBS방송인연합회는 한 위원장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경기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KBS방송인연합회는 한 위원장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됐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KBS방송인연합회는 방통위법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한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침해해 방통위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 역시 직위를 해제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 KBS방송인연합회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성실의 의무,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일반적 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KBS방송인연합회는 이 같은 면직 및 직위해제의 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한 위원장이 엄격하게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말한 것은 이해 불가라며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명날 것이라며 마치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한 KBS방송인연합회는 재허가 심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만으로도 면직감이라며 한 위원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률검토 받았다고 속여서 TV조선 재허가 기간 단축.

MBC 노동조합도—제3노조입니다—비판의 소리를 냈다. MBC 노조는 같은 날 배포한 성명에서 좌파일색 미디어판 보호가 표현의 자유냐며 한 위원장은 지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꾸짖었다.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며 방송의 자유를 운운했는데, 정작 그는 종편 재허가 심사 지원에 나선 방통위 부하 간부들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애기해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점수 조작에 나서도록 본인의 의향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TV조선에 대한 사실상 악의를 보이고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속여 TV조선의 재허가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행적을 되짚은 MBC 노조는 이러한 발언과 업무 처리는 매일 보도를 하는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성에 재갈을 물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석했다.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라도 방통위 부하 간부들에게 극단적인 감정 표출을 감행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편향된 언론관이 입증된 이상, 방송사들이 그의 횡포와 지배아래 단 1초라도 위축된 보도를 하도록 방치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포털에서 좌파언론이 득세하게 된 것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뉴스 유통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언론사를 줄 세우고 뉴스의 성향과 방향성을 주물럭거렸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 네이버와 CP 제휴를 한 언론사들은 좌파언론 일색이었다며 그 결과 우파 담론을 펴면 극우라고 집단매도당하는 현상이 인터넷에서 반복됐는데 이를 방치한 한 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편향성을 몰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언론사도 아닌 포털에 무소불위의 언론사 길들이기용 제평위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뉴스를 좌편향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통위가 의도된 방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진 MBC 노조는 한 위원장의 부인이 지역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여성민우회가 제평위 심사단체에 추가된 것도 우연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MBC 노조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이 파업 불참가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이들이 5년째 보도국 취재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졌으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시 MBC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방통위 감사를 지시해야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넋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한 위원장에게 있어 방송의 자유는 민주노총 기자들에게만 보장해야 하는 허울 좋은 억압의 도구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MBC 노조는 우리는 단 1초도 한 위원장의 일그러진 위헌적 방송 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 당장 그를 해임하고 MBC의 파업 불참가자 모두를 뉴스데스크 제작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사설 2023년 6월 29일 자, ‘KBS엔 봐주기 조작, 비판 종편엔 감점 조작, 한상혁의 방송농단’.

KBS가 2017년 상위 직급 감축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2020년 다시 재허가를 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다. 반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도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 처분을 내렸다. 정권 응원단 방송엔 특혜 조작을 하고 비판적 방송엔 감점 조작을 했다.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방송농단을 벌인 것이다.

KBS는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 임직원 중 상위 4개 직급자 비율이 60%에 달한다. 이를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도 그해 말 상급자 감축과 직급별 정원 조정을 KBS 재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KBS는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이런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수신료를 받고 있다. 방만 경영 시정은 재허가 조건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지만 KBS는 재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방통위에서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를 1년 앞둔 2019년 말에야 직급 정원을 조정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이었다. 상위 2개 직급 정원을 줄이는 대신 그 위에 옥상옥 직급 3개를 신설했다. 그 결과 상위 직급 전체 정원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도리어 55명 더 늘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20년 KBS가 조건을 이행했다며 재허가를 내 줬다. 이때는 상위 직급 감축이란 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KBS 1인당 평균임금은 1억 29만 원,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50.6%에 달했다. 보직 없는 억대 연봉자도 30% 그대로다.

지난 정권 동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였다. 조국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반대 시위는 맨 뒤로 미뤘다. 정부 편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파 패널 없이 좌파 패널만 80여 회 출연시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편들고 피해자엔 2차 가해를 했다. 한상혁 방통위의 KBS 봐주기 조작은 이런 편향보도의 대가였을 것이다.

더퍼블릭 2023년 6월 28일 기사, “한상혁 ‘방송농단’, 언론재단 ‘신문농단’ 논란… 여(與) ‘문 정권 언론장악 철저한 수사 필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28일 '방송농단에 이어 신문농단까지 저지른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2021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열독률과 사회적 책무 점수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표를 기초로 해서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 광고지표는 3500여 정부 광고주에게 배포되고 각 신문사와 광고단가는 이를 기반으로 협의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그런데 언론재단이 2021년 취합한 정부 광고 집행 참고자료를 보면, 열독률 조사에선 1위인 조선일보가 6위였던 한겨레와 순위가 뒤바뀌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고, 조선일보는 2022년에도 열독률 조사결과와는 상반되게 광고지표에서는 한참 아래 순위를 받았는데 사회적 책무 점수라는 배점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자 트루스가디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21년 사회적 책무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열독률 조사를 변형해 정부 광고단가를 책정했다. 그 결과 정부 광고단가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종이신문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3.735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앙일보 2.4519%, 동아일보 1.951%, 매일경제 0.976%, 농민신문 0.7248%, 한겨레신문 0.626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열독률 조사 변형 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고단가 순위가 바뀌어서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언론재단이 공개한 1면 5단 광고단가 시뮬레이션 결과 한겨레가 333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조선일보 3229만 원, 중앙일보 3229만 원, 동아일보 3195만 원, 농민신문 3160만 원, 한국일보 3128만 원 순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22년 언론재단이 조사한 열독률에선 1위를 기록했지만 광고지표에서는 15위에 그쳤다고 한다.

김예령 대변인은 다른 것을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미디어를 통한 광고효과, 광고라는 것은 대중에게 얼마나 잘 노출되는지가 척도가 아닌가라며 공정하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책무 점수라는 항목을 끼워 넣었으니 정부가 신문사들을 줄 세우고 길들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열독률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거둘 수 없다,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해 열독률 조사 항목과 기준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지표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2021년 기준 정부는 1조 100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돈줄을 움켜쥐고 광고지표까지 조작해 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문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압박하는 반민주적 신문농단 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권력에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해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해 가며 굴복시키려 했던 방송농단 사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판박이, 데칼코마니라며 방송농단에 이어 신문농단까지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장악해 그저 권력의 하수인, 친정권 기관지로 전락시켜 마음대로 움직이며 언론 전체를 퇴화시키

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방송성적 조작, 신문통계 조작 사건은 모두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틀인 언론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이며 언론인들의 자유의지를 짓밟는 행위라며 언론재단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6월 28일 자 기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TV조선 점수 조작하고 재허가 조건 어긴 KBS엔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 TV조선 점수 조작 방통위 전 국장 파면·과장 해임하라,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 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 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 등을 거쳐서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두 직급 이상 상위직급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통위의 계약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 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부터 2020년, 총 4억 원이 건네졌다. 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 6급 직원 일부의 승진심사 때 교육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임명 방통위원장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자 뉴데일리 신문입니다. ‘연일 이동관 흠집내기…… MBC, 하루 평균 4.8건 맹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임명된 방통위원장후보자입니다. 취임 3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동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하루 평균 4.8건씩 쏟아 내 방송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지명된 당일부터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방송사들하고 다르게, KBS, SBS 이런 다른 방송사들은 한두 꼭지 정도를 지명 당일에만 보도한 것과 달리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 마녀사냥식 보도를 정말 하루에 몇 건씩 연일, 임명되기 직전까지 보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8월 셋째 주 4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총 24건, 하루 평균 4.8건씩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수없이 보도했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재탕 삼탕하

거나 확인되지 않은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을 재방송하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한 공언련은 특히 14일에는 단독으로 이동관, MB에 MBC 경영진 교체·개혁 직접 보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단독 기사 'MBC 비판 여론 조성에 조중동 협조 요청, 보수단체 유도' 등 무려 6건을 톱 블록으로 배치하고 15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MBC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3건의 리포트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서슬이 퍼렇던 2017년 적폐청산 광풍 속에서도 관련 조사조차 받은 일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을 뿐이라며 전형적인 편파 보도 사례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KBS는 역시 지난주 이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MBC와 비슷한 취지로 하루 평균 2.4건씩 총 12건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 인증 마크 개설도 '외교부 동원' 몰아가.

공언련은 MBC……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4일과 16일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개설 건과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을 보도하면서 사안을 편파적으로 다루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개설에 외교력 동원? 당연한 업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해외 교류를 대비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면서 공식 계정임을 입증하는 표식을 받기 위해 외교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이 따지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위터 본사로부터 실버 마크 인증을 받는 것은 트위터가 이미 질 바이든 여사 계정에 실버 마크를 부여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데도 뉴스데스크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외교부를 동원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와 관련해 공언련은 MBC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이희호 여사의 미국과 중국 방문 이후 16년 만의 일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대비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하나고 상담교사, 학폭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톱 아이템 리포트에서 전 하나고 상담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해는 없었다며 학생들끼리 사과하고 끝났다는 이동관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보도를 냈다.

상담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된 후 이 후보자 측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학생의 입장도 함께 반영해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반발하자 뉴스데스크는 다음 날 MBC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12일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보도하지 말아 달라라는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를 단독보도한 것이지요, 그 성명서를 묵살하고.

해임 다음 날 남영진 불러서 변명 마당 깔아 줘.

그러나 사실 MBC는 피해자로 알려진 B씨의 입장문이 타 언론에 보도되기 나흘 전인 지난 6월 7일에 이미 이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다. B씨의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지난 6월 11일에도 침묵을 지키던 MBC는 6월 12일 뉴데일리가 단독으로 '이동관 아들과 화해. 학폭 아니다. 당사자 입장문 뭉갰다. MBC 보도 정치 논란'이라는 기사로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날 오후 피해자로 지목된 B학생이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다. 저를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일방적 주장? 1학년 때 합의했다 말하는 게 일방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B학생이 이 후보자의 아들과 화해한 것은 맞다고 밝혀 피해학생 중 누구도 이미 화해했던 제자는 없었다던 자신들의 보도를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16일에는 하나고 상담교사의 증언을 통해 화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가 다음 날에는 '화해가 있었던 것은 맞겠지만'이라고 하루 사이에 상담교사의 말이 바뀐 내용을 보도해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게 했다며 피해 당사자의 증언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상담교사의 증언만 취사 선택한 불공정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 다음 날 출연시켜 해임 처분에 대한 불만 등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두고 군사독재, 검찰독재, 군사작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남 이사장은 방통위가 연달아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한 것을 가리켜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라고 단정하면서 현 정권이 국민을 위한 보물이자 역사적 산물을 없애려 하는 것은 국민이나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방만경영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해임된 당사자를 해임 다음 날 바로 출연시켜서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 역시 속전속결로 군사작전하는 것처럼 해임이 의결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남 전 이사장이나 김의철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공영방송을 그렇게 운영해도 될까요라고 말하며 남 전 이사장의 비판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 16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는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방송을 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이 모 교수는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서 단지 합법적인 강점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유감 정도를 표명한 정도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한 번도 일본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고 말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SBS의 팩트체크팀이 전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지금까지 일왕과 총리가 53차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했고 그중에서 호소가와 총리, 오부치 총리, 고이즈미 총리 등은 분명한 사과와 사죄를 했으며 특히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통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런데도 주진우 라이브는 특정 교수를 출연시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한 적은 없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일·반민족 기득권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다시 돌아오려는 구체적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단정한 뒤 그래서 한국 헌정구조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 건국절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기까지,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5일간 수많은 정말 마타도어식 뉴스 기사들이 MBC와 여러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것이 YTN에서 서현역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진을 10초 이상 표출시켜서 정말 사이코패스가 연상되게 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박충권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MBC에 총 몇 꼭지가 나왔는지 한번 세 보겠습니다. 아까 횟수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8꼭지, 16꼭지, 22꼭지, 26꼭지나 보도했습니다, 8월 17일까지 5일간.

2023년 9월 1일 기사입니다. '여당 KBS·MBC·YTN 이동관 의혹 보도, 전임 한상혁의 11배… 카르텔 편파보도'.

KBS MBC YTN, 공영방송 3사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 보도가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비교했을 때 11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취임해서 지난 2023년 5월까지 방통위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취임을 했지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의 의혹 반대 보도 건수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KBS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5건을 보도했는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건을 보도했고, MBC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 1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31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YTN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1건을 보도했지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16건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21대 국회지요—KBS MBC YTN, 공영방송 3사는 이 위원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개월 앞두고 총 67건의 의혹 검증 보도를 방송했다. 의혹 검증 보도는 후보자 지명 발표 등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제외한 뉴스를 집계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때는 공영방송 3사가 총 6건의 의혹 검증 보도를 했다. 이 위원장의 의혹 보도량이 한 전 위원장보다 11배가량 많았다는 것이다.

두 위원장 모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통적으로 언론장악 논란, 임명 반대 움직임, 탈세 의혹 등을 검증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전과 비공개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이 위원장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이 거론됐다.

청문회 직전 3개월 기간에 MBC는 한 전 위원장의 의혹을 검증하는 뉴스를 전혀 다루지 않았던 반면 이 위원장의 뉴스는 31건 보도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 내용은.

박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이 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당시 법률과 별개로 제도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학폭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를 했다.

MBC는 학폭 관련 보도에서 화해를 했다는 당사자의 입장문을 숨긴 채 전교조 출신 교사의 발언만—아까 앞서서 나왔던 하나고 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전교조 출신 교사가 되겠습니다—일방적으로 보도했고, YTN도 자녀가 전학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없이 수용한 이동관 후보를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로 호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YTN은 이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3일에 걸쳐 두 번이나 ‘단독’을 붙여 보도했으며 MBC는 이 후보가 두 달 동안 침묵한다는 내용을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보도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공영방송 3사가 알맹이 없는 맹탕 기사를 재탕 삼탕하며 특종인 양 건수 늘리기로 이동관 후보를 맹목적으로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YTN은 분당 흉기 난동 보도 배경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10초간 게재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공영방송 3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이 MBC 변호사와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를 역임해 방통위 설치법상 부적격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당시 한 후보자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명반대 성명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된 언론장악, 논문표절, 재산 및 탈세 의혹도 대부분 묵인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책무 위반이며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2조를 각각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전했으며 제12조 2항에서는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민노총과 민주당의 공격수로 직접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친민주당 세력과 담합한 공영 3사의 언론 카르텔 공격을 멈추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 출범을 수용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방송 4법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편향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있어 왔던 사건들에 대해

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OTT를 비롯한 신규 미디어들이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문들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노동조합의 오정환 위원장께서 하신 발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에서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신 내용입니다. 언론노조의 MBC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다라고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한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이 방문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정했었다.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

1. 국회의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7명(여당이 4명이고 야당이 3명이 되는, 비교섭단체 추천 1명).

2.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3명.

3.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

4.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2명.

5. MBC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2명.

6.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명씩 총 3명.

7.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뽑아도 방문진 이사들 가운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이 MBC 사장 선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즉 25명 중 17명을 충분히, 21명 중이겠지요. 21명 중 17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것만으로도—25명이네요. 25명 중에 17명이지요—불안했던 모양이다. 국회에서 8명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만약 우파 정당들이 총선에서 압승해 비교섭단체마저 우파가 우세할 경우 국회에서 우파 인사 5명을 추천할 수도 있다.

4번에 해당하는 한국방송협회에는 KBS, MBC뿐만 아니라 SBS와 지역민방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볼 때 자칫 우파 인사를 1명 추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압승을 거둔다면 4명 중 3명 이상을 우파 인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 25명 중 9명을 우파 인사들이 차지하게 돼 편향성이 지나친 좌파 인사가 MBC 사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된다. 17명이, 3분의 2 이상인 17명이 돼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9명의 우파 인사가 차지하게 되면 16명이 돼서 가능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그 작은 가능성마저 없애고 싶었던 것 같다.

민주당은 먼저 법률개정안 수정을 통해서 방문진 이사추천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바꿨다.

1.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2.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3. 방문진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4. 한국방송협회의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5. MBC 종사자 대표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6.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7.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을 삭제했습니다.

먼저 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을 두 배로 늘린 것은 대한민국의 학계의 좌편향 또는 조직화된 소수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2017년 MBC·KBS 경영진을 힘으로 쫓아낼 때 한국의 3대 언론학회라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자 472명이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들은 MBC 앞에서 언론노조 지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향후 한국 방송학계의 이념적 편향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의 성향도 편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 강규형 KBS 전 이사님을 해임할 때지요, 그때도 그랬고 그전에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방송장악 문건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추진해 간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당시 9월 4일에 MBC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그다음 날 9월 5일에 이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그 언론학회들이 이사들을 추천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초 발의안에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방문진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꿔 숫자를 늘렸다. 아직 방문진 정관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는 MBC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C는 박성제 사장 때인 2020년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해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노사 4 대 3으로 구성했는데 의결의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MBC에서는 시청자위원회도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그 시청자위원들이 방문진 이사 4명을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방문진 이사 21명 가운데 무려 6명을 추천한다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언론노조와 구성원들이 대부분 겹쳐서 초록동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3개 단체 회장들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SBS 기자인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을 맡았던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다. 전임 방송기자연합회장들이 안형준 현 MBC 사장과 성재호 현 KBS 보도국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조직의 성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

을 것이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교육문화국장을 지냈고,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우리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친언론노조, 친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한 말입니다. 최지원 PD연합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 이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직들이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허울만 남게 만들었다. 방문진법 제9조제5항을 신설해 사장 선임 투표가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사장으로 뽑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로 MBC 사장을 뽑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당초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은 특별다수제를 통해서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선전했고 정필모 의원의 방문진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했었다.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를 슬쩍 다수결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일단 좌파진영의 방문진 이사 3분의 1을 확보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3분의 2 선이 무너지면 다수결로 MBC 사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이다.

두 번째,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 전락.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8일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정책발표회 때 허태정 후보는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후보도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사장 지원 직전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C 경영권이 계속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있으면 추정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방송사 MBC가 좌파 인사들의 독무대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과 신장식이 극심한 편파 보도로 비난을 받다가 작년 말 결국 하차했는데 MBC가 이 가운데 신장식을 즉시 영입했다.

그리고 신장식은 MBC에 와서 끔찍한 편파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지난 3월 6일에서 10일 사이 강제동원 배상안과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패널 15명을 출연시키는 동안 찬성하는 패널은 단 한 명도 출연시키지 않았다.

MBC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안이 발효되면 그 뒤로는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가 표명돼도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MBC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3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공정성 의문.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국민주권을 신장하는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MBC가 최근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문진은 지난 2월 시민 15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시켰다. 시민평가단이 방문진의 1차 면접을 통과한 사장후보 3명 중 2명을 고르도록 한 것이다.

회사 안팎에서는 박성제 당시 사장이 유력한 경쟁자들을 1차 면접 때 탈락시켜 자신이 선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정책발표회 때 '나는 들러리'라고 말했고 안형준 후보는 발표문마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는 등 준비 부실을 드러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이 1인 2표씩 투표한 결과 뜻밖에 박성제 사장이 탈락했다. 박성제 사장은 탈락한 뒤 SNS에 '처음 도입된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평가단이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던 언론노조 MBC본부는 한동안 침묵했고 오마이뉴스는 MBC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MBC 사장 선발이 다시 실시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4,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MBC와 KBS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공정보도를 하고 싶은데 외부 정당들이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괴리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내부적 편파성을 오히려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최철호님의 발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결론은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한 법 개선 사항을 배제했다.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쳐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 시급하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한정됐다, 방송 4법에 대한 평가지요.

두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숫자의 부적절성, 과다 비용, 이사 수 확대에 따라서 직접인건비 현행 대비 2배 이상 소요—인건비가 2배 이상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지원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 비용 2배 이상 추가 소요. 국회, 언론학회, 학계, 시민사회단체,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현행 대비 2배 이상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과거 이들 단체의 주장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 21명으로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 불가능.

방통위는 지금 5인 체제지요, 기존의 9인 체제의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심층 토의가 불가능하다. 모든 회의는 집중도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수는 5명에서 11명입니다.

획일적 이사 확대에 따른 불합리성, KBS와 MBC, EBS는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인원은 4300여 명입니다. MBC는 매출액이 8600억입니다. 인원은 1700여 명입니다. EBS는 매출액이 3500억입니다. 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KBS는 매출이나 인력이 타사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졸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1인 공영방송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성 근거가 부재하고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3명, 여당 2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K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합니다. MBC 시청자위원 선정,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EBS 시청자위원 선정은 친언론노조 사장 임명입니다. 소계 친민주당이 7명이 되는 거고 친국민의힘 성향이 2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합계를 따지면.

방송전문단체 6명, 세 번째로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이지요. 기자연합회가 있고 PD

연합회가 있고 기술인연합회가 있는데 이 3개 연합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단체는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 시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들입니다. 기자·PD연합회는 정필모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단체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계를 합계하게 되면 친민주당 내지 언론노조 측 이사진이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2명입니다.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가 6명, 규모나 대표성을 감안해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정보학회를 보면 학회의 집행부와 주요 구성원은 민주당 추천 공공기관 책임자·이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공영방송 진행자나 주요 출연자로 편파 방송을 진행하고 언론노조 행사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학회를 봅니다. 친민주당 학회장 등이 민주당 발주 연구용역사업 수행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학회입니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6명 중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가 4명이 되고 중립—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으니까, 언론학회는—이 2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계를 보면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이사진이 17명이 되고 국민의힘 성향이 2명이 되고 중립 성향이 2명이 됩니다. 이렇게 21명이 구성이 되는데 친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 구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 명문화 부적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을 보겠습니다.

특정 단체 지정해서 추천 인원을 할당하고 방송기자, 이것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되는 거지요. 기존 방송법과 정관……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 표의 기재와 같다.

방송 3법안의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였습니다.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언론계와 방송계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로 선발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요.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지요.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제정하여 공표하는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사제재인데 이를 확대하여 편성규약 내용을 위반 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을 방송의 어떤 현실적 측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의 연혁입니다.

이 법안은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안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대는 논의되지 않았지요, 초반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기조는 2021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에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기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방송유관자들을 이사 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입니다. 그전까지 10여 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가 추천한 이사의 인원 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배경에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현재의 방송환경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환경의 현재를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방송정상화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 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의 방송종사자 단체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제목의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또다시 발의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어들여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다.

특히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 PD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또는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 단체에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대놓고 비례대표로 추천한 적도 있다. 명백한 정언유착이었다. 더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발의한 주역이었다.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두세 차례 시청자위원을 배출했다.

주목할 점은 PD협회장, 기자협회장, PD협회 라디오 부회장 등 위에서 언급한 친민노총 노조 세력이 시청자위원을 선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 이사는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돼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해서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은 공영방송 권력을 영원히 장악하려

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민노총 노조 세력이 기반한 전 사장들의 무능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가뜩이나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신뢰가 무너져 회복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강행으로 KBS의 근간이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민노총 노조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하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KBS 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여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특별다수제를 즉각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소위 국민추천위, 정필모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사 21명이 대부분 친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로 채워지고 직능단체로 분류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세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로 비판받아 온 사실상 연대 조직인데 이들이 이사추천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계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 인사, 협회 등 현업 단체가 관여해서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추천인도 친민노총이나 친민주당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하자 검수완박과 함께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박홍근 법안’을 되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대표성을 갖는 여야의 추천 이사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 야당 이사 한두 명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면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KBS 지배구조의 분권형 비전을 위한 NHK와 BBC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NHK 이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대표성을 구현했습니다. 지역대표 이사 비율, 12명 이사 비율을 본다면 이사가 전체 12명인데 전원이 지역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이사는 전체의 6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동 그러니까 도쿄에 4명, 관서 오사카에 3명, 후쿠오카에 1명, 나고야에 1명, 후쿠시마에 1명, 니가타에 1명, 홋카이도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이사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은행장, 교수, 기업대표, 언론 평론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 선출 방식은 상하원의 추천과 동의로, 동의가 되면 총리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역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은 전국 각 지방이 공정하게 대표되는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BBC 이사회는 어떻게 지역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이사 숫자는 14명이고 이사 중 4명이 지역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지역 이사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거주자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웨일스 지역 대학 스테판 교수가 현재 하고 있는데 웨일스 지역 대학 신방과 교수로서 웨일스 의회의 자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사는 모리슨 전 BBC 스코틀랜드 PD라고 합니다. 에든버러대학 자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선출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사 선출 방식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고 심사단을 통과하면 하원에서 검증하여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사 임기는 4년이라고 합니다.

KBS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KBS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내 정치세력과 결탁한 노영방송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보복 기구를 통해서 전 사장 때의 간부들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내고 거의 100%의 특정 노조 출신의 보직자를 앉혀 놓았습니다.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초대형 산불 때 친민주당·친문재인,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고 재난방송의 골든타임을 놓친 강원 산불 보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리 의혹을 방송한 '시사기획 창' 재방을 불방시켰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의 김의철은 KBS 사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보궐선거 전 KBS 취재진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생태탕을 먹었다는 의심스러운 증언을 그대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관련 투기 의혹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직 아나운서가 뉴스를 조작해서 방송한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실세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해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한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KBS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불공정 편파 방송 보도 참사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를 배출할 시청자위원회도 민주당이고 민주당 옹호세력에 장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업단체도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에 장악되었

습니다.

현 KBS 경영진과 본부 노조는 거의 같은 부분에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해서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 자리는 묻지마 득템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두세 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그동안 사회적 활동 등을 평가해 볼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이고 전투적인 좌파 투쟁단체 일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KBS가 시청자위원회를 특정 정치세력의 문화전쟁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혹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세요.

○박충권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작동원리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혼돈과 불신의 인터넷 미디어 시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주류 언론들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론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과 함께 유튜브와 SNS들이 기성 언론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가입자를 가진 광팬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개미떼 인터넷 언론사들도 그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가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허구성 기사, 정제되지 않은 표현, 편파성을 넘어 아예 정파성을 표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적 통신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용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진입장벽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언론사 간판을 걸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들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매체들 간에 더 많은 이용자 끌어들이기 경쟁으로 갈수록 선정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낚시성 제목은 이미 일반화되었고 뉴스 가치와 거리가 먼 루머성 의혹 보도들도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사회 뉴스들도 선정적으로 작성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면서 기존 언론 매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성 언론들도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뉴스화하는 지라시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TV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세상을 알려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사를 작성하려면 현장에 가지 말고 책상에서 인터넷을 뒤져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많은 정치적 인터넷 매체들이 정파성을 상업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다수의 수용자를 확보할 수 없는 인터넷 매체들은 정치적 충성심이 강한 소수의 독자를 포획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매체들은 강력한 정치적 동질감으로 뭉쳐진 구성원들 간의 자기 확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악성 진화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정치적 확증 편향에 빠진 군중들은 진영 논리에, 집단 광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거 없는 괴담들이 뉴스 혹은 정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온라인 공간에서 대량 유포되고 추종 세력들은 이를 퍼나르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처럼 재밋거리나 용돈 벌이이거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향유하는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동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짜뉴스는 그 수준을 넘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정 정파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공, 청담동 카페, 친일파 괴담까지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가짜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공세라고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확산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성 가짜뉴스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라면 연예나 스포츠처럼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정치 관련 가짜뉴스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정파성이 강한 가짜뉴스는 상업적으로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성 언론,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파적 미디어 시스템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MBC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과 관련된 가짜뉴스인지 오보인지 모를 뉴스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고 보도된 가짜뉴스들은 친야권 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이를 다시 기성 매체들이 받아 후속 뉴스로 재생산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정파성에 의해 정보를 왜곡 인지하는 집단 난독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딸과 같은 맹목적 추종 집단을 형성하고 그것은 가짜뉴스가 지배 여론으로 확대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는 사실상 매우 밀접한 동반자인 셈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성행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성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 예속화된 언론 시스템이 가짜뉴스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압도하는 과학적 가짜뉴스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지난 십여 년간 특정 정치세력들이 확산시켜 정치적 재미를 봤던 괴담들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들은 정권을 크게 흔들거나 결국 무너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금도 야당과 좌파진영에서는 천안함 격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집요하게 생산,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실증적 증거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을 촉발시켰던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들만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과학적 주장들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천안함 격침이나 세월호 침몰 역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들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역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IAEA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퍼뜨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방류하지도 않은 일본 바닷물과 생선을 갖고 '차라리 똥물을 마시겠다'와 같은 선동적 발언은 가짜뉴스로 포장되어 인터넷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가짜뉴스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혹은 가공의 사실들을 진짜 언론사의 뉴스처럼 위장해서 확산시키는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 내용을 언론사라는 권위를 도용해서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사실이나 근거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역설적으로 과학적인 주장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가짜뉴스들도 시청자들에게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어준이 만들었다는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침몰 원인 분석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과학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가짜뉴스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설명 메커니즘의 차이도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실증적 근거와 엄격한 해석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주장도 단정적이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짜뉴스는 미리 정해진 명제를 정해 놓고 부합하는 주장들을 더해 가면서 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는 명료하고 확신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IAEA가 일본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확신에 차 보이지만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수는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고 몇 년 걸려야 우리 수역에 돌아온다는 과학적 주장은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수학처럼 명징의 학문이 아닌 한 어떤 과학자도 절대 진리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도그마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상업 언론들에게 과학적 진실은 결코 좋은 뉴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가짜뉴스는 아주 좋은 보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가짜뉴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4세기 과학혁명은 중세의 종교적 도그마를 깨고 근대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과학적 진실들은 정치적·종교적 도그마에 의해 탄압받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폭력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가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는 사회는 결코 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블루오션이 된 신념산업'.

매스미디어는 진실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나 책무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표현하려는 내용보다 표현하는 방법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텍스트 미디어에서 영상 미디어 시대로 변화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전달·표현수단인 전달 방법을 더 중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B급 콘텐츠나 가짜뉴스는 이러한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도, 사사로운 것이어도 설사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주목받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급증하고 있는 미디어 경쟁체제에서 일단 주목받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미디어 생존 공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터뜨렸던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가 슈퍼챗 잭팟을 터뜨린 것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TBS에서 쫓겨난 김어준이 개설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가 방송 개시 일주일 만에 111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날 9350만 원의 슈퍼챗 수입을 올리는 신기록을 세웠고 1월 두 번째에는 1억 4100만 8845원을 벌어들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성이 강한 오락이나 예능 유튜브가 아닌 정파성이 강한 가짜뉴스 유튜브가 세계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과 편파적 내용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데이터 통계 사이트 플레이 보드가 발표한 2022년도 우리나라 슈퍼챗 상위 10개의 유튜브 중에 7개가 시사·정치 채널이라고 합니다. '시사타파', '열린공감TV', '더탐사', '가로세로연구소'처럼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강한 정치 성향과 강도 높은 표현 수위를 자랑하는 채널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 유튜브가, 그것도 정파성이 강한 매체들이 이렇게 각광받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뿐일 듯 싶습니다. 이는 결국 군중심리에 기반한 한국의 팬덤정치의 위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팬덤정치라기보다 지지하는 정파나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중정치라는 말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팬덤정치와 함께 맹목적으로 지지자들을 타깃으로 동반 성장한 비즈니스가 바로 정치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신념산업인 것입니다. 이 신념 유튜버들에게 정치적 진실과 올바른 정보, 합리적 판단 같

은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정 정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립서비스해서 슈퍼챗 같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들에게 대중들의 정치적 충성심은 새로운 형태의 수용자 상품인 셈입니다.

가짜뉴스와 정치집단의 악성 진화.

현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극렬 지지집단은 개딸들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행보를 보면 이들은 단순한 지지집단이 아니라 사실상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들의 막가파식 공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 감성에 기반하는 정치적 추종집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극렬 지지집단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열광적인 컬트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조용필의 오빠부대에서부터 BTS의 아미에 이르기까지 인기 연예인들의 팬클럽들이 대표적입니다. 컬트집단의 핵심 원리는 한마디로 무조건입니다. 소속집단 구성원들이 추앙하는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선악이나 논리적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땡빠라고 불리는 몰가치화된 팬덤집단이 정치 영역에 진입한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노사모입니다. 노사모는 오랜 기간 한국 선거판을 주도해 왔던 향우회, 동문회, 전우회 같은 준봉집단들을 단번에 압도해 버렸습니다. 강한 외적 배타성과 내적 응집력이 결합된 개방형 폐쇄집단으로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팬덤 정치는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함께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재결집하면서 악성 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빠라는 비판을 조롱이라도 하듯 붙인 문파라는 이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폐쇄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념적 동지성을 가지고 있던 노사모와 달리 문빠는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추종하는 새로운 형태의 준봉집단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니, 쑤기 하는 낯 뜨거운 호칭들과 문 라이즈 데이(Moon Rise Day), 월광소나타와 같은 탄신 축하잔치도 벌였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어디 감히 같은 왕조시대에서나 들었을 듯한 표현들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집단 히스테리는 '내가 조국이다'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개딸, 양아들 같은 한 단계 더 진화한 괴물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념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도 서슴지 않는 극단적 결속력을 가진 집단인 것입니다. 특히 그런 행동에 대한 외부 비판이 커질수록 집단 병리 현상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지펠의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보면 개딸은 타인 집단을 나쁜 집단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강도 높은 폐쇄집단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문제는 그 배경에 정파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사회를 정치적으로 파편화시키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면서 갈라진 사람들을 극단적 병리집단으로 재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확증편향 현상은 특정 개인이나 개별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주원인이지만 파편 집단화를 견제하고 사회적 통합 역할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최근 언론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심각한 정치적 예속성의 질곡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심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이 정치적 예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일부 방송과 인터넷 언론들이 대놓고 편파 경쟁을 벌인 것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게 정치적 독립이란 이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독립, 보도 공정성 같은 주장들은 공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지상파 방송 3사의 개표방송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닐슨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으로 MBC가 10.4%로 가장 높았고 KBS1 채널과 SBS가 각각 5.2%와 4.8%였습니다. 개표방송 시청률에서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 왔던 KBS 시청률이 MBC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표방송 시청률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라는 경쟁 상황을 수치화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것이니 방송사 간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편파성이 개입될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개표방송 시청률은 각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성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MBC가 개표방송 시청률 1위를 한 것도 MBC에 대한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이 MBC 개표방송을 많이 봤다라는 합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MBC는 지속적인 편파·왜곡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대표적인 친야권 성향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MBC 개표방송 시청률 1위는 시청자들의 기존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선별해서 접촉하는 전형적인 선택적 노출의 결과인 것입니다. 더구나 야당 압승을 예고하는 출구조사 결과와 시종일관 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개표진행 상황은 선택적 노출을 더 부추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시청자들의 미디어 노출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송의 시청률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생존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거방송 프로그램들이 그렇지만 개표방송의 본질은 신속·정확하게 개표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주고 결과가 지닌 의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 정보 제공 프로그램까지 정파성에 의해 시청률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편향성이 한국 언론 매체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패권정치.

원래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 싸움입니다.

OK목장의 결투 같은 폼 나는 결투극이 아니라 뒤에서 총 쏴도 되는 황야의 무법자 같은 마카로니웨스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존, 상생 같은 거룩한 구호들이 끼어들 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과 폭언이 사실상 중요

한 정치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막싸움판이 되어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온라인 기반의 극렬 지지층들이 혼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인터넷이 정치를, 응원단까지 운동장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 정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상적 전자민주주의의 전망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대신 무솔리니나 나치 독일식의 대중동원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은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집단의식을 강화하고 결속 의지를 다지는 동종교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들은 극단적 의견이 주도하면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집단들은 극단적 군중심리를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아베, 푸틴 같은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막말과 욕설,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됐던 후보들이 거의 다 어렵지 않게 당선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극단적 집단분화 현상은 이른바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매체 지각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진영을 벗어나는 매체를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즉 중립적 보도는 반대 진영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왜곡 지각하면서 정치적 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은 가짜뉴스를 매개로 팬덤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정치, 사회적 파편 집단화에 의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중정치의 기본 자원이 됩니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데 기성 언론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방송들이 정제되지 않은 유튜브 포맷의 시사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객관성 같은 전통적인 뉴스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사들이 진행하는 편파 시사 프로그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 폐지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교통전문 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을 떠나 인터넷에서나 가능한 정제되지 않은 막말 선동 가짜뉴스를 라디오 방송에 옮겨 놓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 언론의 가치가 배제된 온라인 매체나 방송 프로그램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원칙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정치인까지 가세해 반민주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 충돌과 갈등을 조정·합의해 주는 매개체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패권의 자산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대중들은 스마트 미디어로 무장한 스마트 몹(smart mob)이 아니라 정상에서 일탈한 스마트 훌리건(smart hooligan)일 뿐입니다. 이들은 양념이 아니라 건강에 매우 해로운 불량색소일 뿐입니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이유는 당파성에 충실한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가 가장 좋은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투철한 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진영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짜뉴스를 팔아먹는 일종의 정치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실제로 김어준을 비롯한 좌익의 셀럽들은 가짜뉴스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부를 동시에 획득하였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에게……

○의장 우원식 박충권 의원님, 잠깐만요.

저 뒤 방청석에요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전국에서 선출돼서 온 어린이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7개 학교 60명의 어린이 국회의원과 그리고 27개 지도교사, 학부모분들이 오셨거든요.

크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시 진행하시지요.

○박충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 4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상징하는 이 본회의장에 관람하러 오셨는데 뭔가 극한의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같아 사실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서 여와 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입니다. 스물세 살까지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단 김정은국방종합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1963년에 김일성이……

(「토론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토론에 집중해 주시지요.

○박충권 의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짧게 얘기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꿈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습, 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키워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편한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필리버스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에게 가짜뉴스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도 자신들의 비리와 위선을 공격하고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 보도라고 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숙주가 바로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영논리에 매몰돼서 합리적 판단 능력이 거세된 극단적 지지층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국 정치문화에서 진짜뉴스가 들어설 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은 상대 진영의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심각한 집단 난독증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토론회를 보다 보면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쏟아 내는 정치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난독증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 언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도리어 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좌파정권과 결탁해 충성스러운 정치도구가 되어 버린 공영방송의 몰락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증 난독증에 걸려 가짜뉴스의 숙주가 된 공영방송이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작동 원리와 패권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속성과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쓰지만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유언비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이라는 의미지만 의도적으로 퍼트린 허위사실이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강하게 통제했던 제5공화국 초기에는 유언비어를 정권이 감추고 있던 사실을 폭로하는 긍정적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언비어가 곧 가짜뉴스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언비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은밀히 전파되었지만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로 위장해서 공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언비어는 근거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상업적·정치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하고 클릭 수를 끌어모아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완전한 허위사실로 확인된 대통령 청담동 술판을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절제한 언론 유사 행위들이 창궐하면서 언론 지형은 더욱 급속하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매체들과 기성 언론이 상호 공생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초 노엘레 노이만이 제기했던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다수의 여론몰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침묵의 나선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성·누적성·편재성을 가진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여론으로 인식되게 되면 사람들은 고립의 공포 때문에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 여론의 지배력은 더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존 로크나 토머스 제퍼슨이 주창했던 자유주의 언론관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토론과 숙의라는 이상적 발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단적 여론의 힘으로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비판과 근거의 수용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메이어슨의 주장처럼 동질집단 구성원들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자료 밀어넣기와 접근 신속성 원칙이 지배하게 됩니다. 다양성보다 획일적 집단행동이 지배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자기 확신 공간, 즉 개방형 폐쇄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획일화, 침묵의 나선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이제 시민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이 상상했던 사려 깊은 시민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약한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라인골드가 말했던 영리한 군중이 아니라 그냥 우중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왜곡된 언론지형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집단들에 의해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들이 확산시키는 선정적인 가짜뉴스와 이를 재생산시켜서 기정사실화하는 언론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국 사회를 위험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 때문입니다.

첫째, 가짜뉴스는 확산되면서 내용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보다 적은 단어, 적은 사실로 단순화되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70% 이상의 가짜뉴스들이 다섯 번, 여섯 번의 전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인명구조에 대한 구조작업의 어려움 같은 내용은 없어지고 정부가 구조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몇 개의 이례적이고 주의를 끄는 단절적 용어들만 선택적으로 지각되면서 첨예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절적 용어들은 주로 숫자, 시간, 동작, 크기, 상징 같은 것들입니다. 청담동 술판 가짜뉴스의 경우 술판을 벌일 수 있는 정황적 내용보다 '동백아가씨' 같은 선정적 용어들만 기억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습관, 관심, 감정과 특정 사건들과 연계되는 동화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기대, 동기부여, 편견, 관심 등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가짜뉴스들을 보면 세월호 침몰과 연계시켜 모든 잘못은 국가에 있다는 식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같은 가짜뉴스의 속성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르면 주변 경로의 인지적 수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지된 정보가 중심 경로의 판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동기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정보에 대하여 정보처리 동기가 미약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과 냉소주의, 정치 과정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정보처리 동기가 약하고 수많은 매체들이 난립하면서 정보과잉 상태가 발생하고 정보 신뢰도도 약화되어 정보처리 능력도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들은 주변적 단서들을 가지고 인지적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주변적 판단 과정은 가짜뉴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참여를 회피하게 만들고 소수의 극단적 지지 기반을 가진 정치세력이 패권을 쥐게 되는 참주 정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짜뉴스의 수직적 카르텔.

가짜뉴스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6년 여름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이 거짓 언론사 이름을 붙인 가짜 기사들을 인터넷과 SNS에 퍼트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린 기사들의 클릭 수에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사업자들이 통장에 돈을 꽂아 주는 것을 보고 아예 전문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기원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 확산시킨 가짜뉴스들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조직적 정보 조작입니다.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와 2018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퍼트린 가짜뉴스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가짜뉴스를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이 만들어 올린 것 같은 흥미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가짜뉴스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흥밋거리나 영리 목적의 가짜뉴스들은 주로 개인이나 군소 인터넷 매체들이 직접 만들어 확산시킵니다. 반면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들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트롤링 업체 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가짜뉴스 규제보다 기성 매체들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걸러 내기 위한 팩트 체크 시스템에 신뢰받는 기존 언론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매체, 특히 KBS와 MBC처럼 공영방송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구축해 놓은 정권 친위 방송체제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 내내 정권을 비호하고 반대 세력을 비하하는 편파·왜곡 방송에 열을 올렸고, 선거 때는 노골적인 가짜뉴스들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방일 순방 중에 있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일장기 경례 같은 가짜뉴스들은 지난 정권과 유착된 편파적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주체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내 소란)

같은 얘기 아닙니다. 들어 보시지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읽은 것은 여기 아래에 다 내려놨습니다.

무엇이 창피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똑같은 것을 세 번씩이나 그렇게 줄줄줄 읽으면……」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제가 읽은 책들은 다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무제한토론은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의원이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좀 들으시지요.

○박충권 의원 이렇게 정말 공영방송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법안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앉아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더 창피합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왜 2016년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방송법마저 부정하고 새로운 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알지도 못하…… 제가 다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당시에 2016년에 발의했던 법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그런 사장의 방송 구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안을 더 이상 상정도 안 했지요, 당시에는.

(「잘못 알고……」 하는 의원 있음)

'잘못 알고'가 뭡니까? 다 팩트가 있습니다.

(「세 번 얘기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세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뉴스에 관해서?

(「창피한 줄 알아!」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피하신 겁니다.

가짜뉴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거면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올린 방송 4법,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조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당 몫, 7 대 6으로, 여당 7 야당 6으로 갔던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게? 이사진 구성이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이공계 출신이고. 그러시는 분은 공부를 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방송법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공계 나온 의원이 한둘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알고 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도 이공계 나왔는데, 나도 이공계인데 똑바로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저희 과방위에도 이공계 출신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인데 과학기술을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으로 정쟁을 일삼고 과학기술 관련된……

(「그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먼저 해 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얘기할 만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장내 소란)

(「과학기술 예산 다 잘라 놓고 뭔 말이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많이 들었어, 그것도」 하는 의원 있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발언만 하세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우원식 토론 주제에서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고 또 토론하시면 토론하는 내용을 좀 들으십시오.

그냥 진행하세요.

(「의장 말 좀 잘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발 잘 들어 주세요, 의장님 말씀 좀」 하는 의원 있음)

○박충권 의원 그러시는 분께서 좀 약하게, 낮게 말씀해 주셔도 다 들려요.

(「대꾸하지 마시고 그냥 할 말 하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할 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들으라면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려오세요. 우리 진보당 의원님 하게」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얘기하세요. 법 3개나 남았습니다, 법이.

(「의원 좀 하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이 3개나 남았습니다. 시간 충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법 4개 올려 두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가짜뉴스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언론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들으십시오.

(「채널A, TV조선 이런 것 보세요. 그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구나 지난 정권은 집권 내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이를 법으로 봉쇄하려 많은 애를 썼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 규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공격하는 모든 매체들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징벌적 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 지금도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해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가짜뉴스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돈 남 말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육성해 놓은 수많은 좌파 인터넷 매체들과 유튜버들에게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좌파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직적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알고 얘기해야지, 규칙을. 모르는데 뭘 듣습니까? 좌파가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좀 조용히 하소」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수직적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챗봇과 딥페이크로 진화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기계적으로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지요. 데이터를 추출·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의 작동원리는 판단 근거가 되는 요인들과 각각의 요인들에게 부여된 가중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거르고 배열하는 기준을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중립성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창궐했던 가짜뉴스 숙주라고 비판받았던 구글과 페이스북도 알고리즘을 핑계로 댔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알고리즘 판단 요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포털사들 역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화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근원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진화가 빨라지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비례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가짜뉴스 양식은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챗봇을 활용해 만든 가짜뉴스와 동영상을 이용한 딥페이크 뉴스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가짜뉴스가 내러티브, 즉 허구를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면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사실처럼 영상을 조작한 것입니다. 즉 챗봇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위력은 진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되어 진위가 판단된 이후에는 사실상 규제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삼 주 만에 승패가 결정되는 선거 기간에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의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사십 프로에 달하는 정치 무관심층과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미결정자들에게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관심도나 관여도가 낮은 이들은 투표 결정 과정에서 비본질적 요인들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인지적 노력 의지나 판단 능력이 낮아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챗봇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들은 자극적 용어나 영상 클립처럼 주변적 단서에 의존하는 주변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기대했던 사려 깊은 시민 대신 집단정서와 맹목적 충성심으로 무장된 우중을 양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들도 언젠가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설사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 폐해가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막바지에 터져 나온 '윤석열 검사 커피' 조작·가짜뉴스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면 진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영상 조작으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거는 총칼만 쓰지 않을 뿐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전쟁입니다. 전투 혹은 전쟁터라고 번역되는 캠페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용한 모든 매체들이 선거캠페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래전부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정보는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의 중심에 위치해 왔습니다. 그 허위정보가 챗GPT를 이용해 허구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와 AI로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2023년 말에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완전히 적발·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조기에 적발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기업들이 2024년 선거 인공지능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확인되면 해당 동영상에 붉은색 라벨을 부착해서 참여한 플랫폼들이 공유하게 한 것이 부족하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알고리즘과 가짜뉴스 메커니즘.

가짜뉴스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위력을 떨친 가짜뉴스들의 숙주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은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과는 무관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확산 메커니즘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고 방어한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압박과 여론에 밀려 일부 시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플랫폼들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소극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인터넷 포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 역시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방패를 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온라인 뉴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네이버 알고리즘 작동원리는 고사하고 알고리즘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역시 구체적인 알고리즘 구조나 내용은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주요 작동요소들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안내페이지에도 20여 개 구성요소만 소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변수들을 포함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인공지능 스스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 가중치 부여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알고리즘이 생성한 결과물이 완벽하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발표한 인기도 순위에서 2019년까지 각각 2위, 4위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새로운 알고리즘 요소 추가 이후 2023년 5월에는 6위와 14위로 추락했습니다. TV조선은 11위, 채널A와 MBN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1위를 기록한 MBC를 비롯한 KBS·JTBC·YTN 같은 방송사들이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결국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아니,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뉴스운영 원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과 추천 클러스터링 관련 원칙으로 뉴스 품질, 다수 사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기사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 추천 기준은 다수 언론사나 사용자가 관심 있는 뉴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웹페이지 간의 링크 정도를 보여 주는 페이지랭크를 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스 클러스터링에는 물결표 대신 사회 관심 주제의 기사 묶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운영기준에 의하면 언론사 간에 다루는 주제나 내용에 있어 중복성이 높으면 상호작용 효과로 인기도가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메커니즘입니다. 특정 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매체들이 유사한 뉴스로 가공해서 확대 재생산하면 노출 빈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네이버뉴스 알고리즘은 이들을 동일 주제의 뉴스로 클러스터링해서 같은 성향의 이용자들에게 추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뉴스에 반복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그것은 다시 뉴스 인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생명은 비밀에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수학적 계산 결과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와 권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의 위력은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 즉 블랙박스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목적을 내재하고 있어도 알 수 없다는 근본적 위험성에서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역시 예외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가짜뉴스의 확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논란이 되어 왔던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제평위는 미디어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기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뉴스 접근 창구를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의 게이트 키핑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아마존·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과 달리 우리나라 포털사업자들은 뉴스를 축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처음부터 뉴스를 축으로 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기성 언론사들이 인터넷 포털을 2차 창구로 인식해 자발적으로 편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국내 뉴스시장을 독점하는 거대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론 독점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뉴스 상품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정치적·사회적 권력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미디어산업의 정치경제학적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포털은 기성 언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 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털 또한 언론 매체들이 부여받고 있는 공익적 책무와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수탁 원리가 적용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적 전송 수단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의 편의 필요 그리고 이익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털사업자들은 자신들은 언론사들이 제공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뉴스 상품의 정치·사회적 속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휴 언론사를 선별한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도 특정 매체의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평위는 위원 추천에서부터 심한 정치 편향성 문제 때문에 비판받아 왔습니다. 제휴 언론 매체의 분포 역시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단체의 기관지나 특정 정치 성향 매체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반대 진영의 언론들은 많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댓글과 실검 경쟁으로 트래픽 양을 늘려 광고 수익을 늘려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적 평가에 기반했던 뉴스의 신뢰도와 가치를 이용 횟수나 인기도 같은 수치로 외부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포털이 정치적 팬덤 집단을 이용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마치 19세기 후반 퓰리처와 허스트 간에 벌어졌던 황색 저널리즘 경쟁을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상업주의 경쟁의 희생양은 결국 진실입니다. 무엇보다 실검 서비스 부활은 점점 과열되고 있는 팬덤 집단 간 정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벌이에 매몰되어 공적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포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여론 형성에 책임이 없는 중립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강변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정치상업주의 언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제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정치.

최근에 야당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영구히 장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한 후에……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난 회기에 실패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확산되는 거짓정보, 즉 가짜뉴스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불리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정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거짓이나 속임수 같은 절대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용되는 상대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라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평가가 다른 경우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법 취지와 달리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힘들다는 문제 때문에 징벌적 보상이라는……

(「뭔 소리야, 가짜뉴스는 거짓말이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무슨 상관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맞아요.

간접적 규제방식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내용의 진실성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표현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받기 마련이다.

이처럼 객관화될 수 없는 상태에서 강한 내용 규제는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음란, 외설, 허위사실, 과장 같은 추상적 기준들은 실질적 효과보다 모든 의사소통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위축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는 그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손실, 즉 이익형량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 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정설이다.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제기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부나 이익집단들의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들을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의적이고 선별적 규제는 규제의 순응성을 담보하기도 힘들지만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들의 자기 규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재앙적 상황이지만 반민주적 정치집단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언론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미 현재 야당은 5·18 관련법이나 위헌 판결이 난 대북전단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해 온 바 있다. 근거 없이 특정 사안이나 인물을 비하하는 가짜뉴스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사소통 행위를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언론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적 판단과 결정은 궁극적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선호하는 차선을 선택하거나 최악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행위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표현된 의견 중에는 불합리하고 극단적이고 심지어 거짓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 선택과 판단은 국가권력 같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얼핏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느리게 정착되어 온 것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위는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2년 3월 10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바로 앞두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퍼트리고 모든 언론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퍼 날랐던 윤석열 검사 커피 인터뷰가 김만배와 신학림에 의해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물론 보도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녹음된 내용을 선거 3일 전에 공개했다는 것부터가 어딘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지 못했다면 이 희대의 사기극은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제2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엄청난 가짜뉴스는 누구도 알 수 없게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창궐한 가짜뉴스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의도성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이다. 원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처럼 위장해서 SNS를 통해 유포하는 일종의 재밋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주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신념산업의 조직적 생산물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아주 효과적인 정치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처음 그 위력을 보여 준 것은 2016년 미국 대선과 2018년 영국 브렉시트 투표에서다.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첨예한 국가들에서 더욱 위력적일 수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카르텔이다. 정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기성 언론들이 연계되어서 공명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편향적 언론 시스템이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뉴스들을 검증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도리어 확대 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밝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한 훨씬 이후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처벌 기준도 매우 낮아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조차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조작 사건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뉴스타파가 터트리고 이를 당시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친정권 매체들이 사실 검증은 고사하고 도리어 확대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또한 이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지지자들의 폭발적 노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정부는 신문법의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법적 제재 조치, 심지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성 언론매체들은 모르겠지만 진입, 퇴출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선거처럼 정치 과정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들은 선거 결과가 처벌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아 정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가짜뉴스, 특히 정치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효율성은 확산되기 전에 얼마나 조기에 규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2018년 선거기간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단일 판사의 판단에 의해 긴급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 우원식 박충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고요.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 4법은 방송종사자들의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습이 재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 체제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분산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혁신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규제되는 공영방송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는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러 공영방송이 존재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의해 운영되면 지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원식 박충권 의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충권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수고하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17시38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김준혁 의원, 김현정 의원, 전진숙 의원, 강경숙 의원, 차규근 의원, 이준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39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조금 전에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우영 의원을 대신해서 임광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7시5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조금 전 명패수를 187매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 보니 명패수가 186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18시05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정회가 안 되나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6)

(18시06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정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18시15분)

○의장 우원식 먼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난 4월에 서초을에서 당선된 신동욱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언론계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법조계에서 또 저희 방송계에서 또 정부 출신, 많은 분들 안면 있는 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의장님께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고민이 본회의장에 올라갈 때 의장님께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저는 사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 좋은 법안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서게 된 것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저희가 개회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조금 전 183인의 민주당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굴에 상당히 기쁜 표정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그동안 대한민국국회가 밟아 왔던 족적이 걸려 있는 사진을 늘 보면서 지나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 왔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들어지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또 많은 정치적 파동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한걸음 한걸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었던 데는 정치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비난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결국은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정치의,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 현실 그리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언론환경, 양극단으로 갈라진 방송환경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참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입니다. 그 이후에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이 되고 또 서울올림픽, 86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방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던 매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BC와 KBS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전에도 우리에게는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었지요. TBC, 지금 50대 혹은 40대 중후반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시는 당시 TBC의 봉두완 앵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이라는 말로 유명한 봉두완 앵커가 계셨습니다.

얼마 전 봉두완 전 앵커께서 써낸 회고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보, 당신 암살당할 뻔한 거 알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언론은 기개를 가지고 언론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를 겪으면서 방송국이 급속히 비대화되기 시작했고 권력화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봉두완 앵커가 TBC가 KBS로 통폐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은 KBS와 MBC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아주 극도의 황금알을 낳는 과점 체제로 재편이 됩니다. 그 과점 체제하에서 MBC와 KBS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많은 분들, 저희가 언론계에 들어올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언론인들, MBC의 엄기영 앵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석희 앵커도 있었고 KBS의 박성범 앵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언론 방송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MBC는 저희 시절의 신화였습니다. 방송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는 한때 시청률이 50%를 넘는 기적적인, 뉴스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방송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언론계에 투신한, 정치권에 투신한 많은 MBC 출신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권력에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볼 만한 방송은 MBC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절에 MBC가 이루어 낸 성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눈부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MBC, KBS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의 출발점은 90년대 초에 SBS가 생기면서 방송이 3국 체제로 재편되면서 2 공영, 1 민영 방송으로 재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이 신문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때 2000년을 전후해서 지금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방송국들을 선별 노조로 재편을 하면서 3개 방송국 노동조합이 사실상 민주노총하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SBS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SBS도 90년대에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2000년 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땠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야당이 말씀하시는 방송장악의 시도를 사실은 그때도 이미 겪었습니다. SBS는 대주주가 바뀔 뻔한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20년쯤 전의 일이지만, 옛날 일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접어들어 오면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방송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광우병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PD수첩이 냈던 광우병 보도.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MBC를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국민적 쟁점으로 올라섰을 때, 미국 광우병에 걸린 소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언론이 취한 태도, 그 태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PD수첩의 진행자가 미국에서 찍어 왔다는 침을 흘리는 미국산 소, 농장에서 갑자기

주저앉는 소 이런 것들을 보여 주며 ‘어떻게 이런 쇠고기를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여론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방송의 권력화가, 저는 그 방송의 진위를 지금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권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방송이 처음으로 가장 강렬하게 겪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거의 레임덕 상태로까지 빠지는 짜릿한 경험, 그것은 아마 그 이후로도 제 생각으로는 방송에 종사하셨던,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에게는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되고 수사받으셨던 동료 언론인께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 말씀은 어떤 특정 진영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구속되고 수사받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동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동 때문에 많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차라리 미국산 소를 먹느니 나는 독약을 마시겠다’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말까지 우리 사회에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급속히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그 당시에 그 방송을 주도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저도 방송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부정한 권력이 힘들어 하는구나, 부정한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송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방송만이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분들이 입수했다며 틀어 준 그 영상은 출처 불명의 영상인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깁기해서 광우병 소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뇌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병에 걸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수사권을 동원해 가지고 언론인을 탄압했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이미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재정 의원님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 공영방송이 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그 보도에 의해서 구속됐던 그 언론인들의 참담한……)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보도의……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그게 바로 지금 그 의식이 위험하다는……)

(「반대토론 따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보도를, 저도 제작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도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보도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랐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아무런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고 다만 그냥 그 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보도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언론 옥죄기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학영 부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MBC라는 방송의 경영진이 ‘아, 우리가 드디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MBC가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과연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면 탄핵을 얘기하고 권력의 붕괴를 얘기하는 집단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방송국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저는 감히 광우병 사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력이 그때부터 언론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의 문제, MBC의 문제, KBS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한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권력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권력이 방송국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요.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때 MBC의 강력한 힘이 저는 보여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권력을,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지게 된 많은 방송권력들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명박 시절의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는 사실은 종편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법을 둘러싼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매우 부실하고 매우 즉흥적이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것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사장을 누가 뽑느냐, 사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법안 하나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그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청문회장 앞에 나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알려진 분들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이진숙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립니까? 우리 사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이 그렇다면 우파진영도 와서 똑같은 식으로 물리적 대응을, 물리적 대항을, 찬성 시위를 하고 싶었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국회 청문회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회 청문회장까지 와서 그런 행패를 부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심경으로 저는 쳐다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구나.

그토록 얘기하는 방통위원 2인 추천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 함께 그려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진숙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이진숙을 잘 압니다. MBC 출신의 한 의원님이—선배 기자이시지요—과방위 이진숙 청문회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기자 이진숙에 대해서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숙은 한국 방송을 망친 한국의 괴벨스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실로 숨어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던 그 이진숙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저도 잘 아는 선배 언론인입니다—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진숙 기자는요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방송저널리즘의 여성 기자의 신화입니다. 저희가 입사했을 때 방송기자란 무엇인가를 질문받았을 때 이진숙은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보기 힘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진숙 기자는 종군기자로 유명합니다. 이라크전에 두 번 갔지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종군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터에 취재를 나가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입국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첫 번째, 비자가 나오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야, 뭐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쯤 가서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비행기 지나갈 때 마이크 한번 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종군 취재입니다,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기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회사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철수 지시를 내렸는데 몰래 다시 바그다드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진숙 기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전쟁 전야에 바그다드에 있는데 요르단 암만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우리 기자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우리 기자가 다치면 회사에서 국장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기자 죽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대개 회사에서는 '야, 너무 위험하

게 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으려고 했는데 국경을 넘을 때 눈물이 나오더군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에요. 지켜봐야 할 게 있는데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요르단 암만으로 넘어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정말 기자정신의 절정 아닙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있을 때 '천만 서울시민이 남아 있는데 부산으로 가서 취재해라. 우리 군 주력부대를 따라서 대전으로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남아 있는데 제가 끝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지 취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자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진숙은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요르단 암만으로 넘어왔어요. 현장과 1000㎞ 떨어진 곳이지요. 1000㎞, 서울에서 일본의 거리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외신 기자들이 도쿄에서 취재를 합니다. 홍콩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장으로 날아오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용기를 타고 군과 함께 움직이지요.

이진숙 기자는 군과 함께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미군의 군용기를 타고 따라다니는 그런 종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자가 미군의 군용기를 탈 수 없습니다. 혼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외신을 검색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는 '요르단 암만에서 MBC 기자 이진숙입니다'. 아시지요, 마이크 들고? '요르단 암만에서 MBC 이진숙입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건 죽어도 싫다. 내가 왜 이 호텔방에서 전쟁 기사를 써야 하나?'. 그래서 철수할 당시에 어렵게 받아 두었던 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다시 이라크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때 기자였던 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시간 내내 기자 이진숙의 종군 취재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은 그런 기자입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SBS의. MBC와 저희 사무실이 같은 빌딩,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는데 이진숙 기자가 MBC의 소위 얘기하는 1진 기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1진, 2진, 3진, MBC는 보통 3명의 기자를 둡니다. 1진, 2진, 3진 이렇게 3명의 기자를 둡니다. 대개 조금 수월한 일은 2진이 하고 현장을 막 돌아다녀야 되거나 약간 위험한 곳을 가거나 지진 현장을 가거나 산사태 현장을 가거나 수해 현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3진 기자를 보냅니다. 그게 언론계의 보통의 관행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서울은 거의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대개 워싱턴에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서울이 새벽 6시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 늘 이진숙 기자를 만납니다. 주차장을 나갈 때 이진숙 기자가 들어옵니다. '아니, 이 선배, 이 시간에 웬일로 들어오십니까?' '아니, 지금 서울에 아침 라디오 방송 해야 돼'. 매일같이 저녁 6시에 특파원의 그 안락한 밤을 포기하고 '서울에 아침 방송 해야 돼'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방송이요? 사무실 나가지 않아도 합니다, 집에서.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화상

전화도 있고 집에서 방송해도 음질 좋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기자는 꼭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녁 6시에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런 기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사흘 동안에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이진숙 기자와 친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요 현장에서 만난 건 워싱턴에서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해 준 것 없습니다. 제가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모양이에요. 대전MBC 사장 시절 그리고 서울MBC 홍보국장 시절 법인카드를 샅샅이 뒤져서 이 카드는 어디서 쓴 것이냐, 누구와 쓴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속된 말로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쓰는 것과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원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MBC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공영방송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MBC는 민간기업입니다. MBC가 MBC의 영업을 위해서, MBC의 홍보를 위해서 그 내부의 사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MBC 감사팀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언론사에 계셨다면 법인카드를 다 써 보셨을 겁니다. 저도 법인카드 많이 썼습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벗어난 법인카드를 쓰면 회사 회계팀에서, 재무팀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저는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분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 한국 방송의 미래,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따져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많이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저도 잘 모릅니다만 청문회법에 국무위원후보자는 사흘 동안 청문회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사흘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법인카드 얼마 쓴 것, 그것 때문에 이진숙의 부적격을 주장하실 생각입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의 강규형 이사는 김밥 몇 줄 사 먹고 이런 걸로도 해임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부인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회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MBC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법인카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샅샅이 뒤져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사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소위 적폐로 몰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많은 MBC 간부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샅샅이 뒤져서, 몇 년치 법

인카드 다 뒤져서 이거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다 소명해라. MBC 정상화위원회입니까? 거기서 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왜 우리 국회에서 지금 와서 따져야 할까요? 이미 2017년도에 MBC 감사팀에서 샅샅이 뒤진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 와서 증언한 전 MBC 보도국장, 문호철 국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그 당시에 한탄을 하면서 내가 누구랑 밥 먹었는지 몇 년치 것을 다 영수증을 가져와서 소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쯤 되면 한 달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삼백만 원 정도 법인카드를 썼겠지요? 그런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집 앞에서 쓴 것은 누구랑 쓴 거냐, 이거 다 소명하라고 그러면 소명할 수 있습니까?

정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할 때 거기에 맞는 것 정확히 해서 내지요. 왜? 감사를 받으니까, 국가 돈이니까, 나랏돈이니까, 국민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그러나 MBC라는 기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행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달 그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산하지요. 그러면 그때 잘못 쓴 게 있었다면 MBC 감사팀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저도 방송국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 많이 썼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를 쓸 때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외부 손님 만나는데 조금 금액이 큰 것 있습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허락받아 씁니다. 그거 함부로 쓰면 징계받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뒀단 말입니까? 그러면 MBC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MBC 경영진은 법인카드 한번 다 보자 그러면 감사팀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예산이 몇천만 원이 허투루 쓰여졌다면 그거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에 따져 물어 주시라는 겁니다. 기껏 법인카드 10만 원 20만 원 쓴 것 누구랑 썼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흘 동안 그 수많은 증인·참고인 불러 놓고 국회의원 20명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아귀처럼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부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여러분이 오늘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드릴게요.

(「이진숙 방탄토론 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이 오늘 통과시킨 이 방송법,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내 소란)

물 마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방송 4법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저의 토론은……

(「법인카드 얘기 장황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시간은 장황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청문회 하는 위원들한테 아귀가 뭡니까, 아귀가!」 하는 의원 있음)

이해합니다.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좋은 방통위원장 임명하기를 원하시면 정말로 이진숙 청문회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잘 한번 따져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시간을 끌까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편하셨던 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사장도 잘 뽑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제는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 거버넌스의 재정립,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법안의 큰 대강의 요지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지요. 2017년에도 이미 법안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오늘 법안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맞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시킨 건 방통위 설치법이고!」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통과시키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이지요. 방송법에 따라서 KBS 이사진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왜 21명으로 늘려야 할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사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립적·자율적 운영, 참 많이 들어 본 얘기 같습니다, 독립적·자율적 운영. 방송 독립 또는 자율적 운영, MBC·KBS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송 독립을 하게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일까요? 지금 방송법을 보면 11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7명은 여당이 임명을 하고 4명은 야당이 임명을 합니다. 7대 4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대 4는 조금 너무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분쟁의 불씨가 되어 온 것이 바로 이 7대 4기 때문에 이 7 대 4는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

문진은 9명이지요. 6 대 3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이사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등 21명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직 국회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여야 성향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백번 다시 봐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택된 국회에서 뽑는 숫자를 5명으로 해 놓고 도무지 어떤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도 모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뽑고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뽑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이 지명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방송국 다녀 보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야의 엄격한 균형에 맞춰서 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제론하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만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 다녀 보신 분들은요 이 세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아마 이것을 동의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은요 방송기자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PD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방송 내부자가 사장 선임에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게 만든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는 것을.

그러면 '너희도 그 협회에 너희 지지하는 사람들 당선시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MBC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간부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95%의 직원이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언론노조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입하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진영으로 편파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로 언론사·방송국 사장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나 이 법은요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기 위한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나올 때 저도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방송의 맏형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정서적 함양과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단코 저희 편을 들어 주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방송국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제오늘 이루어진 MBC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법안의 처리,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한 사건들의 우연한 일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로 상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마주하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요? 진일보된 전향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중재안을 내셨을까라는 데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재안 간단하지요. 다 중단하고 우리 한번 잘 상의해 보자, 잘 논의해 보자. 좋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 중재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뭔가 대단히 급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MBC 경영진의 교체 임박에 따른 정치일정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은 21대 때도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발의해서 논의를 했던 법입니다. 상당 기간 서로가 미적미적거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부인하지는 않지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처리하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요?' 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저는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방송 4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4일 만에, 나흘 만에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존 방송 3법이 법안 발의 220일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속도다'.

나흘 만에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일이 나흘 만에 과연 이렇게 밀어붙여서 전쟁하듯 속도전으로 해도 되는 법안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회의록 잠시 보겠습니다.

한 부분 제가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사위.

그날 이 안건이 의결된 날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 여러 말이 오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자 유상범 위원이 ‘위원장님,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위원들 다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송석준 위원이 ‘아니, 그 충분히라는 말을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는 위원도 계시는데……’

22대 국회가 열려서 처음 온 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오늘 참석한 위원이고 첫 회의입니다’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도 있고 ‘있습니다’라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 제71조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정치권에 들어서자마자 다수결, 표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은 표현입니다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고자 하시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재준 의원, 정말 저희 당에서 정치해 보겠다고 청운의 뜻을 품고 국회의원이 처음된 국회의원입니다. 30대 초반쯤 됐나요? 제가 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연배의 청년 정치인인데.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재준 위원이.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국회에서 방송법을 토론한다고 해서, 표결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법, 방송법 개정안의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 한 켠에는, 특히 초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 누구나 마음속에 좋았던 과거가 있고 아팠던 과거도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반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 4법이 어제, 오늘, 내일 국회에 잇따라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법사위의 그 현장을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길고 장황하지만 그날을 제가 대신 구현을 해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인 것 전혀 없습니다. 이 법사위 회의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220일을 숙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방송 4법을 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여야 되는지, 정말로 사인으로 돌아가서 국회 앞 소주집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유행가 가사 같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멀어졌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하기 위한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이런 법은요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190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190석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윤석열 정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국가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던 공영방송,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고 권력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것 더더욱 아니고요. 국민의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등원한 20대·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이 ‘위원장님, 저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그냥 탱크로 밀고 지나갑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 노무현 대통령 ‘이의 있습니다’ 외친 장면, 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가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진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힘이 있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참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서 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님이 새벽 3시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본인이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당했던 고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직장에 취직해서 안락하게 월급 받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 이 젊은 친구가 그런 고초를 겪었구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대적 진영에 의해서 가해진 일방적인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들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져야 돼', '나는 가질 거야', '내가 190석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대한민국의 언론사는, 특히 사주가 없는 공영방송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후배들이 그 고통의 사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준호 의원이 당한 고초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익숙지도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밖에 있을 때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소리지르지 않았습니다. 큰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한준호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쪽을 바라보면서 '언론장악 때문에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치셔서 제가 '이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겠다고 뉴스를 하겠다고 기사를 쓰겠다고 '언론은 사회의 공기야', '언론은 우리 사회의 목탁과도 같은 것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언론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임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저로서는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준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장악'이라는 표현을 어제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장악의 뿌리는, 권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뿌리는 매우 깊고 강합니다. 이렇게 사장 선임 절차 바꾼다고 해서 그 뿌리가 파지지 않습니다. 정치 후견주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SBS를 다녔습니다. SBS는 민영 상업방송을 지향하는 온건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그 회사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SBS도 1991년도에 창사해서 2017년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회사를 뺏길 뻔한,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겪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출발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건 보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말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김어준 씨가 저희 방송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김어준 씨가 지금은 훨씬 유명해지셨지만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꼼수'라고 해서 김어준, 주진우—우리 주진우 아니고요 기자 주진우—이런 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유명세를 떨치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는 SBS에서 김어준 씨를 위한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듭니다. 텔레비전에서요. 라디오 아닙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김어준 씨 방송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중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BS에서 김어준 씨를 텔레비전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포터로 한 코미디언을, 한 개그맨을 기용을 해서 국민의힘 우파 정치인들을 스토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괴롭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큰일 났구나', 제가 지금도 사실은 김어준 씨 SBS 등장을 누가 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진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노동조합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김어준 씨가 SBS에서 방송 진행을 할 수가 있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돌아온 답은 '뭐, 인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진우 씨는 또 다른 방송, 누구는 다른 방송,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의 지상파 방송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상파 방송국의 소위 방송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시 제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KBS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BS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6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9시간 동안 방송을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잘 아시지요? 1시간 40분입니다.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뉴스브런치,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후 4시부터 5시 홍사훈의 경제쇼, 오후 5시부터 7시 주진우 라이브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거 등장을 시킵니다.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KBS는 국민의 시청료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아닙니까? 김제동 씨가 등장합니다. 밤 11시 매우 시청률이 높은 시사 프로그램대예요. '김제동은 왜 KBS에서 방송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얼마든지 많지요. KBS는 그런 편향적인 방송인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드디어 김제동 씨가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최욱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매불쇼 재미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미있습니다, 매불쇼. 최욱의 매불쇼라는 것 있습니다, 유튜브에. 엄청 재미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사정없이 까거든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우리가 공영방송에 시청료 냅니까? 재미있는 방송 만들라고 KBS에 시청료 냅니까? 제가 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는 KBS를 비롯한 SBS까지 3개의 지상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영성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완전 공영방송이고 MBC는 따지고 보면 준공영방송이고 SBS는 상업민영방송이지만 어느 정도 공영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고도 많이 줍니다, 거기는.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영방송 왜 공영방송입니까? KBS는 시청료 받아 가지 않습니까? 국가 전파를 사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채널에 다 나오는 게 지상파 방송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그래서 지상파 방송을 손에 넣고 싶어합니다, 어느 권력이나. 권력이 바뀌어도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KBS 이사 수가 21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정권이 그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사작전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이것이 이미 그런 의도를 마음속에 짙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MBC 사장 바뀔 때가 됐잖아요. 그것 중단시키겠다는 것 아닌가요? 계속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어제 통과된 방통위법 '2명으로 그동안 어떻게 방통위를 운영할 수가 있지? 이 정부 정말 이상한 정부네', 5명 중에 3명을 빼고 2명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5명 중에 4명이 들어와야 회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어제 법의 요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책임을 저희 탓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이동관, 또 누굽니까? 김홍일, 이진숙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방통위원장후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TV조선 다닐 때 적어도 그때 방통위원장님들 저희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겨울에 그전에 제가 TV조선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저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왜요?' 그랬더니, 저는 종편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SBS에서 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곧 망할 거야. 문 닫을 거야', '그래요? 설마 방송국 문을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옮겼어요. 갔더니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손발을 다 묶어 놨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메인뉴스 앵커였습니다, 6년 동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실수하면 자르라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TV조선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족쇄 속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방심위가 신동욱 앵커의 멘트를 문제 삼아서 법정 제재 주잖아요, 경고? 그러면 앵커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저는 노동조합이 탄압을 당하고 노동조합원들이 고초를 겪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언론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요, '입틀막'.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안타까우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보도입니다. 제가 새벽 6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도본부장으로서.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답니다', '뭔데?', '뭐 날리면 어쩌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사 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새벽 6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간 우리 취재기자들이 'MBC가 신이 났습니다. 한 건 잡았다고 지금 새벽에 인터넷으로 냈습니다, 벌써' 그래서 내가 '기다려 봐. 들어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기사를 바로 내니? 원문 가져오라 그래. 들어 봐야지' 그리고 제가 홀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자들이 '아니, MBC에서 지금 다 나갔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다른 데서 내면 그냥 냅니다. 못 견딥니다. 소위 얘기하는 물 먹는 것 못 견딥니다. 그건 진영도 없습니다. '기사 내야지. 기사 내야지요', 벌떼처럼 저한테 와서 '왜 기사를 못 내게 하십니까?', '아니, 기사 낼 때 내더라도 들어는 보고 내야지. 이 사람들아, 소문만 듣고 어떻게 내니?', '지금 MBC가 난리가 났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겪은 그날의 상황입니다. 그날 새벽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이든'이 맞는지 '날리면'이 맞는지 논란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TV조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언론의 책무에서부터 더 자유롭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TV조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징계받으면 돼요. 그러나 MBC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본인들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왜? 국민들로부터 시청료 받아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약간 옆길로 샜는데, 저는 6년 동안 이를테면 그런 식의 실수를 하나 하면 앵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단 1건의 방송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2020년 겨울에 저희가 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까짓것 내가 실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 징계 받은 것도 없고 방심위 제재 받은 건수도 현저히 줄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슬 퍼렇던 시절입니다.

꼭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 잊으신 것 같지만 불과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장악, 방송장악 하시니까 방송장악이 뭔지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방통위를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회사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발 원 스트라이크 아웃만 좀 빼 주면 안 되겠니? 이것 너무하는 거잖아. 어떻게 메인뉴스 앵커를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가 있어. 그것만 좀 빼 줘라', 안 된답니다. '알았어, 그러면'. 기억도 생생하지요. 그날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조건이 좀 달리기는 했지만 승인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점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점수가 달라지니?', 점수라는 것은 계량화된 것 아닙니까? 그 밤 사이에 누구를 면접을 해서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량화된 점수에 착오가 생겨서 점수가 달라졌으면 모를까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점수가 바뀝니까? 그것도 몇십 점이 날아갑니까?

그래서 간신히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았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조건, 한 번만 법정 제재 받으면 앵커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조건 하나도 못 뺐습니다. 3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대단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쫓겨 다니거나 체포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 매체가 당한 그 고초는 지금 정부가, 지금 특정 언론사가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고초보다 훨씬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MBC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의 보도의 사례들을 보면 언론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언론탄압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 표정을 제가 숨길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고 그렇게 가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껏 나온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 몇 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눠 먹기 아닌가요, 그것? 특정 이념을 가질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을 교묘하게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끼리 우리 2표, 너희 몇 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 아닙니까?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MBC의 지분은 70%를 방문진, 소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정수장학회라는 데서 가지고 있지요. 정수장학회는 오래된 과거에 MBC가 생길 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다른 분이 가지고, 그 당시에 김지태라는 사업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장학회에서 인수를 한 것, 하여튼 여러, 뺏어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0%는 배당을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70%가 MBC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MBC는 한 60년 됐지요. 적어도 SBS가 출범하기 전인 1991년까지는 완벽한 과점체제에서 KBS와 대한민국 방송시장을 양분했습니다. SBS가 생기니까 4 대 4 대 2 또는 3.5 대 3.5 대 3 이렇게쯤 됐겠지요. 그러다가 95년도에 YTN이 생겼습니다. 지역 민방들이 줄지어 생깁니다. 불편했겠지요, MBC가. 우리 것을 나눠 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변화는 기술의 발전과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였습니다. 대단히 무슨 권력자가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방송을 허가하고 YTN을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SNS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KBS·MBC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시대는. 그래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방송국이 생깁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인터넷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송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나 MBC·KBS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끝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사태 같은, 권력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이 생깁니다. 종합편성채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탄생은 첫 번째, 공룡이 된 지상파들이 자초한 새로운 방송 매체의 출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수 종편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보수 종편도 아니지요. JTBC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보수 종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MBN은 이미 있던 채널이었습니다. JTBC는 그렇지요. TV조선, 채널A는 보수 종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런 구도를 가지고 방송을 국민의힘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진보 언론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튼 뭐 김어준, 주진우, 김제동 이런 분들이 대거 보도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해서 여론시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기자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MBC 적폐청산 문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언론환경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권언 유착으로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이용해 자유당, 바른정당 등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에 대치하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현실 인식입니다.

MBC는 지난 2월에 새로 선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 KBS는 2015년 11월에 취임한 고대영 사장 체제는 보수 야당과 긴밀한 결속을 통해 마치 새로운 진보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하는 작전에 돌입한다. ‘적반하장 전략’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입니다. ‘작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감독기구인 KBS이사회는 기존의 우리 당과 자유당 추천 이사 4 대 7, 3 대 6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MBC와 KBS 두 사장을 적극 보호하고 감싸 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 문장 잘 좀 들어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문건이 지금 없겠지요.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건이? 그러나 사실 지금 하시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과방위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장 앞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와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고함을 치고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여의도 곳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여의도만 있었겠습니까?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강규형 KBS 이사의 경우는 그분이 대학교수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상 거의 인격말살에 가까운 모욕을 당하고, 그 당시 화면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비유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삼가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님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지금도 겪고 계시지요. 지금도 과방위에서 김장겸 의원의 어떻고어떻고 이런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김장겸 의원께 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역사가 판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그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성글어도 결코 진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방송사에서 있었던 이 불행한 일들의 반복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기에는 이미 고착화된 기득권의 구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끊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하실 수도 있고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의 고리, 정치적 후견주의의 뿌리는 지상파 3사가 언론노조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매우 가까운 노동조합……

(「물도 천천히 드시고 쉬어 가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조시는 분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얘기 이렇게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이것이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헌법에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는 임금을 올려 달라고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파업을 한 것이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한 적이 없을까,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만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는 고백 같은 것일까. 그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탄생했을 때만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것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BC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 사장이 내년 9월까지인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진 이사진은 임기가 다 끝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데, 임기 끝난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방송법 통과와 바터(barter)해서 다 중단시키고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중단시켜 놓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 기간 동안 MBC 사장은 지금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중단시키면 이게 3개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6개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6개월 걸릴 걸요? 지금 이런 국면이라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MBC 이사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부조화지요?

어쨌든 현행 체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대 3 또는 9 대 6으로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지만 공영방송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언론관이라든지 정부의 방송지침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시청료 받고 본인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독립입니까? 그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바뀐 지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이사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학교까지 쫓아가서 꽹과리 쳐서 이사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자고요? 이사 바꾸지 말자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방송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은 벌었으니까 그때 논의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MBC 이사 선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권과 국회가 한마음으로 군사작전을 하듯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정말 너무 초현실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MBC 이사분들, 지금 이사분들 자리 보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 방통위원장 올라오면 탄핵시키고 올라오면 탄핵시키고 새로운 방통위원 지명하지 않아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방해하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예전에 나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하지요. '내가 왜, 나는 공정방송 하자고 외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어야 했어'.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절차, 지금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를 한데 섞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대로 둬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192석 얻어서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집권했는데 임기 다 된 MBC 이사도 못 바꿉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192석 얻었다고 하실 것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MBC 이사 몇 명 바꾸는 게 뭐라고 그것까지 못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MBC에 올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대선이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만 세지 않습니다. 5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5년도 길다'. 5년 단임제 해 가지고 나라가 매번 5년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5년도 길다 그러시면 이제는 앞으로 보수정권 탄생시키면 막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꾸겠다는 말씀을 그렇게들 하시는 건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MBC가 꼭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목을 매십니까?

MBC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BBC, NHK는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민영방송이고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기득권 방송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MBC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받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MBC의 언론자유, MBC가 원하는 언론자유, 민주당만 원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지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무리한 법안 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파리올림픽 열려서 온 국민이 나는 MBC 볼까, KBS 볼까, SBS 볼까 그러는데 '나는 MBC 꼴도 보기 싫어. SBS 볼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MBC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이 MBC를, 절반으로 나뉘어서 절반은 적대시하고 또 절반은 너무나 우리 편이라고 환호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진숙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증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언론 동지였고 밤새 취재 현장을 누볐던

분들이고 또 어떨 때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경쟁했던 그런 사이에 있던 분들입니다. 제가 그럴진대 같은 MBC에 있었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같은 회사에서 1년 차이로 한솥밥을 먹었던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MBC 지하로 함께 숨어들었던 언론 동지를 괴벨스라고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내가 더 많이 당했다, 내가 더 많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MBC 직원들을 보면서 MBC를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이게 뭡니까? 이 법안이 뭐라고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21명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좀 나아집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 좀 더 민주당 편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다음은? 그다음은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MBC 선후배들끼리 5년마다 편 나눠서 싸우고 욕설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만드실 겁니까?

어제 증언대에 나왔던 MBC 문호철 전 보도국장,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MBC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증언 중에 MBC 사장이 바뀌고 2017년도—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김장겸 사장이 물러나고 최승호 사장으로 사장이 바뀌었는데 당시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문호철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보도국장석으로 몰려와서 '오늘 저녁 편집회의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문호철 국장이 '아니, 나는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도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와서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다음 날 보도국장에서 물러났다는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운동하면서 겨울밤 찬 거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내가 이것 하러 들어왔나, 자괴감 들 수 있습니다. 증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역사를, 시기별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 수많은 증인들을 다 불러서 대한민국 언론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민주당은 도대체 MBC를 사랑하는 정당입니까?

80년대에 입사하신 분들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 입사하신 분들까지 40년 텀을 둔 MBC의 선후배를 그 좁은 청문회장에 불러 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게 만든 민주당,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불러서 '당신, 방통위원장 할 자격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인카드 문제 얘기했으니까 법인카드 따지시고 과거 홍보국장 시절에 호텔에 가서 밥 먹은 것, MBC 돈으로 왜 이렇게 비싼 밥 먹었냐고 따지십시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좁은 청문회장에 나이 육십 넘은 MBC의 전직, 전현직 간부들이 주르륵 나와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MBC의 문호철 전 국장과 박성제 전 사장은 입사 동기입니다. 시절이 달라졌지요. 그는 노동조합의 편에 섰고 여기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쪽에 섰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보수정권의 사장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노조의 편에 섰고 문호철 국장은 ‘아니야, 이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기사를 썼습니다.

둘 다 할 말이 있겠지요.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MBC에 안 들어가기를 얼마나 잘한 거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MBC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대한민국 방송의 자산입니까. 저는 MBC를 보면서 방송기자의 꿈을 키웠고 앵커 정동영을 보면서 앵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엄기영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1992년도에 제가 SBS에 입사할 때 MBC 시험을 보려 그랬더니 MBC가 공채를 안 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SBS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MBC를 가고 싶었습니다. MBC는 대한민국 방송의 전설이었고 대한민국 방송 민주화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섰던 많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이게 도대체 MBC의 책임입니까,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까, 정치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4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 국민들 눈에는 엄청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이 엄청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방송 4법 뭡니까,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MBC 사장 뽑을 때 MBC사장추천위원회 몇 명 더 넣고 또 국민추천위원이라고 해서 100명인가 모아서 뽑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MBC 이사회 이사님들 2년 정도 월급 더 받으시고, 그렇게 나가면 윤석열 정부 다 끝나 가지요. 그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M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우리 회기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있으면 민주당, 저한테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디어오늘 기자라는 분하고 제가 한 30분가량 설전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다 아시지요?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모태로 하고 있는 소위 미디어비평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저는 사실 미디어오늘로부터 너무 많은 고초를 겪어서…… 그렇게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더군요. ‘방송법 이것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MBC 이사진 개편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대답을 얻고 싶어서 저에게 30분 동안 말을 계속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쓰고 싶은 워딩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이사 개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는 ‘잠시

멈추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30분 동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디어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 한 줄, 신동욱이 MBC 이사 개편을 찬성하든 반성하든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명을 달고 있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하고 얘기하자’.

약간 그래서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올까 좀 쫄아서 며칠 동안 미디어오늘 봤는데 다행히 저에 대해서 나쁘게 쓴 건 없어서 그래도 대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그냥 신문 줄줄 읽고 내려가도 되겠지만 정말 며칠 동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자리에 온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왜 언론인이 되었던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공격하는 그분들도 방어하는 저희들도 몹시 마음이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처로운 것은 그 좁은 공간에서 선후배가 하루 종일 다닥다닥 앉아서,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은 선후배끼리 하루종일 앉아서 위원장에게 조롱받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인신 모독당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말깨나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글깨나 쓴다는 그런 언론인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었고 한때는 언론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명박·박근혜의 역사만 있습니까? 문재인의 역사만 있습니까? 방송 통폐합에 맞서서 평생의 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언론장악을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쟁취한 민주화입니까? 언론자유의 역사는 민주화 역사와 정확히 궤적을 같이 합니다.

저는 90년대에 언론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요. 소위 민주화 정부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언론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민주화 운동을 평생 하면서 감옥을 갔다 오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민주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면서도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론자유는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쌓아 온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의 상처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분의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법안을 본회의로 합의 없이 상정하고 저희는 그것을 막겠다고 이렇게 몇 시간씩, 이 귀한 시간에 몇 시간씩 상대방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감싸가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만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과연 22대 대한민국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

한 대한민국국회가 그렇게 절박하게 해야 될 일일까.

물론 절박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에 있다가 국회로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당 내에서도 너무 늦습니다. 기업에 계셨던 분들 알겠지만 회의 한 번 하면 뭐 몇백억 투자 이런 것 바로바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끼리 회의를 해도 한 명만 '그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모입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이게 뭐지?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국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타협하는 곳입니다. 내가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조금은 감추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다 꺼내면 상대방은 '그래, 그럼 나 죽여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같은 당 안에서도 그런데, 의석수가 좀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쟁점 법안, 그것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끼리의 문제라면 백번 양보해서 '오케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냥 참을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정권 찾으면 그때 우리가 우리 일을 할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셨잖아요. M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KBS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단언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17년 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상 하는 얘기가 블랙리스트가 어떻고, 우리가 그때 언론장악이 어떻고, 언론장악 문건이 어떻고. 그것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론인들, 예술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지원할 사람만 지원하고 배제하고 이념으로 갈라치기하고…… 나쁜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 더 낫습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보고서 한 대목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론적폐 청산을 당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세 번째,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언론사 구성원이라는 건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물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사들 따라다니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가족들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진 다 바꿔서 사장 바꾸고, 고대영 바꾸고 김장겸 바꾸고. 그 두 분 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언론 자유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 저도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반복하면서 무슨 사람 죽인 정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회에서 합당한 얘기인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 정확히 지금 이번 방송법에서 명기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누가 할 것인지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송사 구성원,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민단체, 언론·방송 관련 학계, 시청자위원회. 사실은 다 그런 거지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본인들의 우호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늘상 이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보수진영에서 ‘아니, 사실 거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실제로는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한 법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도대체 진보진영 쪽 사람이라는 무슨 증표가 있냐’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둔 문서에도 사실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송사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방송사 종사자. 기자, PD 아닙니까?

두 번째,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장,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장의 경영비리, 예산 운용상의 문제, 공금 사적 유용. 나오잖아요, 법인카드.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문건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보고 이거 보고서 써 내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30분 안에 제가 써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장 바꿀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문건입니다. 이게 무슨 문건이냐고 그러시겠지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KBS, MBC 정상화 문건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 뭐 다르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KBS, MBC 정상화 어떻게 시킬 건데요? 빨리 이사 바꿔서 사장 바꾸고 빨리 방문진 이사 바꿔서 사장 바꿔야지 정상화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을 너희가 만들었네 우리가 만들었네, 블랙리스트가 있네 없네…… 블랙리스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린 저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아닙니까? 30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고 15년을 앵커를 했는데 제가 말실수 한 번 하면 그것을 법정 제재 때려 가지고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족쇄를 달아 놓고 방송하게 만든 것, 그것은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방송인들이 잘렸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어준이 차지한 자리, 주진우가 차지한 자리, 김제동이 차지한 자리, 누군가는 잘렸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지 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르신 거예요. 그분들을 무슨 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면 그건 너무나 형식논리적인 얘기고요.

제가 지난 정부 동안에 정말 억울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김어준 씨.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김어준을 자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청취율이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취율 1등이면 공영방송이 포르노배우도 데려다 써도 되고 청취율 1등이면 공영방송이 뭐 그것보다 더한 사람 데려와서 방송시키면 됩니까? KBS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TBS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로남불도 어떻게 이런 내로남불이 있지?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아 가지고 정말 TBS를 망가뜨린 분이에요. TBS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 정부의 언론탄압 때문에 망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말 조심해서 방송했습니다. ‘당신 할 말 다 했잖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수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KBS의 보도와 TV조선의 보도는 다릅니다. KBS의 보도

처럼 TV조선 보도에 그런 족쇄를 걸면, 그런 방식이면 MBC의 보도에는 더한 족쇄를 걸어야지요. 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KBS,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족쇄는요 어느 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족쇄는 여야가 합의한 방식에 족쇄를 걸어야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석이면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110석은 뭡니까? 저를 뽑아 준 분들은 뭘까요?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에 박수 쳐 주고 손들고 그러라고 저를 제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이 참 아는 게 많지요. 그런데 좋은 언론인은요 아는 게 많으면서 제일 적게 쓰는 언론인이 좋은 언론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 게으른 언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분들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상하네, 저분은 기사를 늘 쓰지도 않고……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절제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덕입니다.

주먹 센 놈이 막 때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언론은 힘이 셉니다. KBS 무지하게 셉니다. MBC, 제가 생각하는 한 KBS보다 훨씬 더 셉니다. 왜 훨씬 더 세냐고요? 주먹을 막 휘두르거든요. 복싱 배운 사람들 사람 안 때립니다. 왜? 맞으면 죽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MBC는 주먹을 너무 휘두릅니다. 너무 힘이 세요. 언론이 힘센 것 물론 언론사 종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 들어가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MBC한테 좀 밉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다 잘 보이고 싶고 MBC 기자 전화 오면 '아이고, 김 기자님', 그것은 MBC 보도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MBC가 무섭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섭지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조직의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 무서움에 공포를 더하게 만드는 법안을 여러분들은 발의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MBC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서신 겁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그래서 MBC가 들으면 몹시 기분 나쁘겠지만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힘세면 좋지요. 조선일보 힘세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MBC는 자칫 잘못하면요 괴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공원에서 공원을 탈출한 괴수가 공원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괴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성제 MBC 사장 제가 가슴 아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문재인 정부 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무슨 서초동 집회를 가서 기사를 썼는데 1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보니 몇 명이더라'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그것만 하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보도국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보도 책임자가 다른 방송국에 나가서 '딱 보니까 몇 명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현장을 누볐던 기자지만 보도 듣도 못한 얘기예요. 어떻게 기자가 딱 보면 몇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광화문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태극기 집회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이 꽉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역에 내려서 TV조선까지 가는 데 보통 때 10분 정도 거리인데 30분이 걸립니다,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딱 보면 100만이야. 그러면 제가 '사람 많이 왔데'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부에 가 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오늘 100만 명이야. 기사 오늘 100만 명의 태극기 부대가 모였다고 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요 정말 광화문에 있는 언론사들은 딱 보면 50만, 딱 보면 100만,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맨날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과연 박성제라는 분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정말 잘 훈련받는 언론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언론사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제대로 훈련받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선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구성원이 용납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MBC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막 써요. 왜? 힘이 세니까. 나는 좀 틀려도 괜찮아.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방송했습니다, 6년 동안.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차이가 있지요. MBC는 정권 바뀌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니까. 셉니다, MBC.

그래서 저는 그 센 MBC에 철갑옷을 입혀 주는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토의 없이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이 '저 여기 와서 한마디도 못 했는데요' 그랬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마치겠습니다'라고 우격다짐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님이 이걸 막 상정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저녁도 못 먹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로 하기 싫은 저의 옛날 얘기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괴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힘센 언론사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적절한 사회적 통제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괴수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통제하는 울타리, 이것을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MBC가 올바른 국민의 방송으로 똑바로 설 수 있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할 수 있게, 내가 힘이 세지만 이걸 잘못 휘두르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국회의,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왜 국회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론윤리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라 부끄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법인카드 동네에서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당신, 언론사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고 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라는 질문에 다 대답하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환경은 우리가 품위를 생각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얘기하고 하기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이, 그 언론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각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금 감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MBC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힘세신 분들이 조금 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힘세시잖아요. MBC 힘세시잖아요. 그 힘센 민주당이 그 힘센 MBC에 또 하나의 힘을, 불패의 무기를 안겨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MBC의 앞으로 사장이 결정되면요 영원히 이 MB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서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MBC만 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언론사가 적절히 마사지하고 언론사가 적절히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왜곡하고 이런 기사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찍은 화면을 바로 올리는 세상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것을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래서 MBC가 영원히 민주당과 손잡고 가면 민주당 좋아지겠습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좋아지든 나빠지든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지요.

MBC 좋아집니까? MBC 좋아지겠습니까? 여기 MBC 다니셨던 분 계시잖아요. MBC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MBC를 안 다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MBC 구성원들이 애타게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을 원하는 것이라면 뭐 구성원들이 원하니까…… 그 구성원들이라는 게 다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그 구성원들 원하는 대로 가면 MBC 좋아질까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었던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가 올해 7월 15일 날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여러 분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MBC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별로였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분이 있어서 이분도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 다 못 보고 들어와서. 강명일 전 도쿄 특파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참 후배신 것 같아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요. 잠시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MBC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 고통스러운 경력 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 같은 우리 사회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PD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4개월 반이요—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인사를 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회사가 설마 이렇게 혹독한 일을 기획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현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매우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8명의 기자들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 편집자들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 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의 상당수가 기자는 하지 않던 방송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 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 박용찬 전 시사제작국장과 같은 분들이 있었던 조명 창고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받은 사무실은 보도국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용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한 인간으로서 한 기자로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그 이전에 MBC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걸핏하면 아이스링크 발령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속상하셨겠지요. 기자가 기사 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케팅 부서로 가고 아이스링크로 가고 속상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됐는지를 제가 따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파원이요? 가는 분들에게 특혜 받아서 특파원까지 가서 무려 4년 5개월이나 있다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파원을 한번 가는 것이 기자로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기자의 꽃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소홀히 해 왔던 가족들에게 다소간의 위로와 보답을 하는 보직이기도 합니다, 특파원을 가는 것은.

아마 강명일 기자도 그 큰 뜻을 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특파원으로 일하는 것도 보람 있지만 기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그 시절에는 더 그랬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외국이라도 한번 가서 조금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강명일 기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에서 그만두고 미국에서 취직을 했다는 친구도 있고 거의 모든 지국의 기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언론사 생활을 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특파원을 갔다 소환당하는 것이 그저 잠시 외국 갔다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도

인격 살인에 가깝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몇 개월 동안 외국어 배우고, 준비하고, 집 얻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주재원 가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 가면 어떻습니까? 외국 애들하고 섞여서 굉장히 적응 못 해 가지고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많고 1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조금 살 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당시 MBC에서 뭐 그냥 밥 먹듯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명일 기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문호철 기자, MBC 보도국장인데 사장 바뀐 날 바로 지휘봉을 뺏겼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책상도 없는 곳에서 떠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해에 만났습니다. '뭐 하니, 요즘' 새벽에 중계차 타고, 혹시 중계차 뭔지 아십니까? 여기 중계차들 와 있잖아요.

그 일이 무슨 대단한 험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회사에서 보도국장을 했다는 건요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보도국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기여를 한 것으로 따지면 그 못지않은 기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계차를 태워서 광화문으로 날씨 중계하는 차에 타요. 그런데 중계차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무지하게 춥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뭐지? 제가 당한 일이 아니고 제가 전해 들은 얘기여서……

그런데 88명의 기자들이 펜을 뺏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아투위도 있었고 언론 통폐합도 있었고 뭐 별별 사건이 많았습니다, 언론사에. 그러나 이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언론 학살 현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 정도야 뭐 정권 바뀌면 당연히 한 100명쯤 날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정권 바뀌면 언론사 기자 한 100명쯤 보직 날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요 영구히 그렇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MBC·KBS, 시청료 받고 국민 세금 많이 넣어 주고 국민의 방송 만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방송이 삽니다. 그것 아니면 이 회사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기관방송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하나를 민주당 기관방송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뭐 유튜브 하나도 50만 60만씩, 김어준 씨는 몇백만 명씩 보잖아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그것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MBC에서 굉장히 저한테 항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사장추천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MBC가 민주당 기관방송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 확신은 못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MBC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과 관계없는 방송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겁니다. 우리 MBC는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에 하나 저희 이 필리버스터가 실패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그때 막을 방법이 없지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런데……

(「막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숫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MBC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히는 겁니다. 그것은 MBC의 잘못이 아니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의 멀쩡한 방송국 하나를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것 통과시켜 달라고 시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 있고 양식 있는 MBC의 많은 구성원들이 영원히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동의할까요? 몇 %나 동의할까요?

제발 MBC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K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E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92석 그 알량한 다수의 의석 가지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렇게 망가뜨리면 앞으로 역사가 어떤 평가를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그래도 30년 방송밥 먹은 제 경험으로, 저는 대단히 무슨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도 없고 열심히 방송하고 또 좀 운이 좋아서 방송사에서 오래 앵커생활 하고 방송사 고위직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당하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면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해고가 돼 봤습니까, 어디 아이스링크에 가서 얼음 정리를 해 봤겠습니까, 조명창고에 가서 한 달을 버텨 봤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30년 동안 나는 언론인 주제여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그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잘리지 않고 기자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성장했고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먹고살 만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한 대한민국 방송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너의 과거가 무슨 방송 출신이잖아, 어디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결정이, 내일 이 결정이, 어제 한 이 결정이, 이것은 방통위원장을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시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방송에 커다란 족쇄를 채우고 여러분들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시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남겨 둔, 그렇게 하고 남겨 둔 KBS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남겨진 MBC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첫 번째 법안이 KBS 출신의 정필모 전 의원님이 만드신 법안이라고 들었

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서 일부 숫자가 조정되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그 법안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9일에 국회 법사위 방송 3법 공청회에서 있었던 당시 방통위 의견이라고 적시된 부분을 몇 가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니까 작년이지요.

‘방통위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 법안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건 필요 없고요. ‘방송이 방송기자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사 PD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학자의 것인가? 지금 법안 21명 가운데 방송기자, PD, 학자, 기술인 이런 분들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렇다면 76%인데요. 4분의 3이 방송사 종사자거나 방송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BBC나 NHK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방송기자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BBC는 12명인데 12명 가운데 4명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나 이렇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니까 전원이 기업 경영자거나……’, 이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이 기업경영자거나 회계 전문가거나 법률가입니다. 방송기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방송사를 운영하는 집행부는 방송사 기자나 PD들이 있습니다. NHK 역시 이사가 12명인데 NHK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8명의 지역대표에게 할당이 되고 나머지 네 분은 직역,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을 봤더니 역시 기자 출신이 없습니다. 없고 모두 다 경영이나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듯이 일본의 NHK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을 뽑는 권한은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원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대표라는 분들도 언론종사자가 아니고 학자거나 법률가거나 또는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전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방송기자가 방송 PD가 방송기술자가 내가 방송국의 주인을 결정하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은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일견

기자가 사장 뽑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지? PD가 사장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기술자, 방송기술인이 사장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MBC 기자가 우리 사장을 내가 뽑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멉니다. BBC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21명의 이사추천 권한을 가지신 분들 죽 열거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구성이잖아. 국회에서 5명, 학계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클럽 2명, 기술인 2명, PD 2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국민이 뽑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냥 그들끼리의 나눠 먹기 야합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가진 사장선임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십시오. 물론 영국의 BBC는 약간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경영진과 현업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영은 당연히 경영자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자가 PD가, 또 시청자위원회는 뭡니까? 아니, 시청자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도대체 이 명단을 가지고 오신 분의 아이디어의 근원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송을 아시는 분이라면, 민주당의 192명 중에 방송국 다녀 보신 분, 제가 얼추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게 국민 대표라고 해서 MBC를 대단히 개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 대표 아닙니다. 직원 대표입니다. 그리고 관계자 대표입니다. 그 주변의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는 학계, 시청자위원, 그분들이 무슨 직원 수 3500명인 KBS의 사장을 뽑습니까?

KBS 1년 매출 1조 5000억 원, MBC 1년 매출 9000억 원, 우리끼리 나눠 먹겠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민영방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공영방송이 무슨 대한민국 여론의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듣기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MBC 뉴스에서 뭐 하나 해서 속된 말로 조질까 봐 기자들한테 잘하지요. 총선·대선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자꾸 플레이를 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무슨 선거 이틀 앞두고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막 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 친구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 편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장을 내 편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한 이런 분들이 뽑는 사장이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3시간 이상 지금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사장을 뽑는 게 이게 국민의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공영방송, 정말 왜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김제동이나 김어준이가 나와서 낄낄대고 시청률에나 목매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후견인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받고 이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

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내신 법안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방송국에 들어와서 먹고살고 아이 키우고 한 가정을 꾸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저도 인생에 모든 것이 순탄했다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방송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상업 민영방송 SBS가 생기고 줄지어 지역 민방이 생기고 YTN이 생기고 연합뉴스TV가 생기고 종편 4사가 생기는 그 폭발적인 성장세 속에 저의 몸을 잘 의탁해서 좋은 자리 많이 가고 큰돈 벌지는 못했지만 먹고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라도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으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분들만 많이 계시고 민주당이 안 계셔서 몇 분에게 제 이 호소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적어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노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무슨 탄압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힘들었고 그들이 만든 언론장악 문건이 어떤 것이 있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내가 잘렸고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래야지 지금 이 허접한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밑자락을 깔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방송사를 다니면서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고초를 겪고 해고되시고 심지어는 가족의 불행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방송이 적어도 21명의, 지금 민주당 법안에 담겨 있는 이 21명의, 도무지 도대체 왜 이 2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센 공영방송을 괴물로 만들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명이 서로서로에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 갈라져 있어서, 너무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올바로 잡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더 할 말도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MBC, KBS, YTN 같은 공영방송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것만 읽어도 한 5시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읽은 것 몇 개 없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는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언론은 굉장히 예민한 거지요. 우리 사회의 공기기도 하지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흉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언론을 시스템을 똑바로 만들어 주지 못하면 그 흉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무서운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힘을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120%를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저는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썩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많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네가 겪어 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라는 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 겪어 본 일만 얘기합니까. 내가 보수정권 체제에서 탄압받았으니까 공영방송은 영원히 진보정권의 것이어야 해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내가 진보정권에서 탄압받았으니까 공영방송은 영원히 보수정권의 것이야 이런 논리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자고, 중단하고 MBC 이사 바꾸는 것 중단하자고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너무 구차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MBC 이사, 지금 있는 이사 그냥 갑시다 그런 말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방송의 한 역사를 이루었던 MBC라는 방송의 미래를 얘기한다면, 우리 온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청료를 내고 있는 KBS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MBC 이사진 바꾸는 거 몇 달 기껏 늦춰 보겠다고 방통위원장을 3명씩 탄핵을 하고, 2명 탄핵을 하고 또 기어이 방통위부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사표를 내게 만듭니까?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는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서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오케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난 찬성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 제가 생각하건대 30%의 국민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세상은, 방송사의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건대. 미국의 방송국들이, 물론 민주당 성향의 방송국도 있고 공화당 성향의 방송국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방송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을 먹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BBC 공영입니다, BBC는. 직원 수도 엄청 많지요. 그런데 BBC는, 물론 영국이 의회내각주의로 수시로 정권이 바뀌고 또 왕정국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은요 이제는 상업주의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국을 독립시켜 주자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의지 속에, 이 법안의 어디에 그것이 구현돼 있습니까? 방송기자 2명, 방송·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학회 6명 이렇게

뽑으면 KBS가 공정해질까요? MBC가 공정해질까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공정해지실 겁니다. 아름답지요.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공정해지실 겁니다. 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히 앞으로 정권이 어디로 가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C는 망가집니다. KBS는 망가집니다. KBS 구성원들이 원치도 않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왜 국회가 붙입니까? 왜 민주당이 붙입니까? MBC 구성원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사장 뽑는 것, 물론 언론노조 조합원이 95% 니까 여론조사하면 좋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만 줄 수는 없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입에 쓴 약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방송밥 먹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국이 참 많습니다. KBS, MBC, EBS, TBS, 또 한때는 YTN도 스스로가 공영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좋습니까? 공영방송이 절대 선입니까? 민영방송은 절대 악입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심어 준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업적 유혹에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더 낫습니까, 지금? 상업적 유혹에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들이 민영방송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낫습니까?

TBS가 김어준 방송을 왜 끊지 못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것이 김어준 씨가 협찬을 많이 받아와서, 청취율이 1등이어서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운영 기준이 협찬받아 오는 겁니까? 그러면 왜 어제 이진숙 청문회에서 협찬받기 위해서 법인카드 좀 쓴 것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까? 협찬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조금이라도 더 잘난 체하려면 정치권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상업주의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덩치 키워서 아무나 겁박하고 때리려는 욕심 버리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겸허하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 말씀 중에 필요 이상으로 현재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의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적 설정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좋은 점도 있지요. KBS, MBC 좋은 점 있습니다. 직원들은 특히 좋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회도 주인 없는 회사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인 없는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순간 큰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주인이지요.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 줬지요. 그러나 아침에 몇 시에 나오냐고 누구도 야단치지 않는 게 국회 아닙니까? 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쯤 나갈까? 11시쯤 나갈까?’ 그러다 어쩌다 당직을 맡아서 아침 8시부터 계속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뽑아 준 국민을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초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공영방송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셉니다. 그 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 또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개별 방송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이 필리버스터 언제 끝나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 기자·언론인 동지들,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법안이 하도 허접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슨 법안이, 적어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뭐를 씹어 먹을 건더기가 있어야지 제가 비판을 하지요. 그 사장 뽑는 기구 21명, 달랑 21명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넣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위한 우리의 그림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국회 속기록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재준 위원의 발언,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것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시고자 하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던 날의 풍경입니다. 법사위의 풍경입니다.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합니다.

저는 정말 우재준 위원이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는 항변에 아니, 차라리 ‘아니, 위원장! 내가 아무리 초선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다고 만든 이 법안에 이제 막 초선 국회의원이 된 우리 청년 정치인이 단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절규하는데 그것을 끊고 그냥 땅땅땅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재준 위원이든 모경종 위원님이든 달리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숫자 적은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나?’ ‘내가 왜 정치

를 하게 되었을까?', 나는 미력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국회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이신지 20대 후반이신지 모르겠는데.

(「중반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반입니까, 30대 중반?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운의 뜻을 품고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딪힌 현실이 이렇습니다. 뭐 여야가 별 이견 없는 법안을 그냥 빨리 땅땅땅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갑니다'라는 말에 선배 정치인이라는 분이 '반대하는 분 없지요?', 땅땅땅. 이게 무슨 초등학교, 봉숭아학당입니까?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모욕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린이 정치의 날이라 그러는데 위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도대체 국민들이 이것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을 막을 수 없게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힘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싸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힘으로라도 밟고 지나가겠다고 그러면 밟혀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방송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가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우리를 즐겁게 해 준 방송이잖아요. KBS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의 품격을 함양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안겨 준 그런 좋은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 우리가 적어도 공영방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21대·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 법안을 지켜본 법사위의 우재준 의원도 한마디도 못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막 통과시켜도 됩니까,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양이 충분해서, 이것 이것은 독소조항이고 이것은 바꿉시다 어쩌고 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냥 사장 이렇게 뽑자는 거잖아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무척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나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사장추천위원 21명으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도 양보를 하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물러서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요.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 21대 국회에서 220일 동안 서로 밀고 당겼고, 그 당시에 정권 잡은 민주당도 '야, 이것은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가 거의 포기했던 법안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달라지셨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달라지실 수도 있지요, 사람이. 그러나 너무 이렇게 달라지시면 곤란하잖아요. 조금만 달라지셔야지 저희가 대화를 하지요. 180도 돌아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이것은 이 법안을 가지고, 이 법안을 고리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MBC 이사진들을, 지금 이사진들을 유지시켜서 MBC 사장이 바뀌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목표 그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방송국에 30년 다녔고 대학교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면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지요. 지금 어제오늘 사흘 동안 방통위원장 청문회 하는데 벼락같이 이 법안 올려서, 그러면 '우리는 부적격 방통위원장 막고 이런 좋은 법안 만들어서 방통위 와해시켜서 MBC 이사진 유지시켜서 MBC 사장 바뀌는 것 막았어' 국민들이 박수치실 분도 있겠지요. '잘했습니다' 박수치실 수도 있지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MBC를 우리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MBC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C는 KBS·MBC라는 두 개의 극도의 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자산을 많이 쌓았지요.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MBC는. 우리 언론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MBC는. 그리고 저희처럼 뒤늦게, 제가 SBS 출신입니다. 뒤늦게 방송사를 꾸린 곳에 MBC는 교과서였습니다. '방송 저널리즘은 저렇게 하는 것이야'라는 교과서와 같은 곳입니다. 저 역시 주니어 기자 시절에 MBC에 대한 열등감을 마음 한구석에 늘 안고 살았다는 것 고백합니다. MBC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C의 이진숙 기자, 같이 일했던 선배 의원이 '한국의 괴벨스'라고 표현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이진숙 기자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분이 2015년, 16년께에 MBC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괴벨스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기자 이진숙과 이진숙을 괴벨스라고 표현한 한 해 선배이신 그 기자 출신 의원님의 인식이 너무나 다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과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안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진숙 기자는 한국 방송계에 적어도 이름을 남긴 기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름을 남겼는데 그다음에 괴벨스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법인카드 좀 더 많이 쓰고 그랬다고 괴벨스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 방송사에서 기자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진숙이라는 그 이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적이 되었으니까. 노조원까지 동원해서 이진숙 청문회에 고함을 질러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렸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진숙 기자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것까지 색칠하려 들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군기자를 내세웁니다만, 어디 기자 어디 전쟁 다녀왔다 그러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이진숙 기자처럼 치열하게 취재현장을 누빈 기자는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만 없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누빈 기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하는 MBC 출신의 이진숙 기자의 과거를 그것도 MBC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가 그렇게 색칠을 하면 MBC 좀 나아집니까?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기자를 MBC의 상징처럼 내세우던 그 MBC는 뭡니까?

이런 자기모순, 이런 자가당착 그런 것이 고스란히 단 한 줄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MBC·KBS의 거버넌스를 바꾸겠다고 만든 이 법안이라는 것이 기껏 MBC 당사자들이 그동안 그들이 쌓아 왔던 수많은 MBC의 자산들을 앞으로도 영구히 나눠 먹겠다는 그런 법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법안에 민주당이 배를 띄우고 노를 젓고 MBC를 장미꽃 가득한 이상향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돼 있다고 그럽니다. 달콤할 겁니다, 아마. 기자도 2명 추천하고 PD도 2명 추천하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한 껏 생색내고 또 우리 편, 네 편 해서 싸우고, 21명이 MBC 사장을 뽑으면 제대로 뽑히겠습니까? 사장 선출하는 기구에 21명이 가서 뽑는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21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의 정당성을 누가 확보합니까? 누가 설명합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뽑힐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어느 단체에서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기자협회에서 2명 뽑고 PD협회에서 2명 뽑으면 아나운서협회에서 '우리도 한 명 뽑아야지', 작가협회에서 '우리도 한 명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가 뽑았는데?', 한 명 한 명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정당성의 문제를 물었을 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질러 놓으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MBC가 합니까? KBS가 합니까? 못 합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 일본 NHK는 12명입니다, 12명. 그 12명은 지금처럼 직역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지역대표들입니다. 공영방송은요 서울 사람들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부산 사람도 보고 광주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 쪽에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후보를 지역대표들이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는 12명입니다. 12명이면 어떻게 뽑지요, 6 대 6이면 항상 부결되는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13명을 해 놓으면 걸핏하면 수로 밀어붙이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12명이 타협할 때까지 끝까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외치냐 하면 여러분들은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법만큼은요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어제 저희 필리버스터 한 방통위법 통과됐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 제가 봤습니다. 한 건 한 거지요? 한 건 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뭐가 남습니까? 공영방송에 뭐가 남습니까? 이 법을 밀어붙이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과…… 밀어붙이는 것 좋습니다, 숫자 좋으니까. 여러분들, 의원총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이 법안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한번 하십시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늉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1대 때 200일 이상 표류시켰던 법안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22대 때 그냥 다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우리가 야당이니까, MBC 이사회 바꿔야 될 때가 됐으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무슨 절차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합니까? 아침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점심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저녁 되면 졸리면 자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거랑?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뭔가 바꿔야겠지요. 뭔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얕은 꾀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숫자의 열세로 저희가 어쩌면 별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만큼은 제가 이 대한민국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망가진 모습들 4년 뒤에 또 보실 겁니까? 그 좁은 법사위, 과방위 회의장에 평생을 함께해 온 같은 회사의 동지들이—언론인은 동지지요—서로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수십 명을 닭장에 몰아넣듯이 몰아넣고 그 수치감을 주고……

저는 이진숙 후보가 당한 그 수치감은 수치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공인으로서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 참고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 저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냥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정말 기사 하나를 가지고 울고 웃었던 또 어떨 때는 싸웠던, 밤잠 못 자고 함께 취재 현장을 누볐던,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말씀드린 그 선배 의원의 말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46명의 MBC 기자들이 지하 1층 식당으로 숨어들어서 MBC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었던, MBC의 방송민주화를 지키겠다며 단식농성을 했던 그 동지들에게 괴벨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그 아수라장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흘씩이나 그것을 끌고 가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미래입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언젠가 MBC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지금 취재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동지들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시키는, 삿대질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몰인간적 풍경을 또 만드실 겁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망치시면 똑같은 장면 반드시 다시 목격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삿대질을 할지 모르겠지요. 똑같은 장면 반드시 목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방송국에서 밥을 먹고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그분들 그렇게 몰아넣고 서로에게 싸움 붙이고…… 최소한 적어도 한 직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고 한 직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 있다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장난감입니까? 언

론인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입니까? 증인이 죄인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과방위 회의장을 보면서 사흘씩이나 불러내서 '잘했어.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본때 보여 줬어'라고 오늘 저녁 축배를 드실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언론종사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표피적인 현상만 본다면 '아이고, 이진숙 위원장 답변 잘하네', 진영에 따라서 '문호철 국장, 답변 아주 시원하게 했어', '아이고, 박성제, 말 잘하더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이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둘은 MBC 입사 동기입니다. 지금 둘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시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호철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박성제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편파방송의 주역인 박성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면 '참 순진한 사람이네'라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해 MBC 사장 뽑을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국민 대표 1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하여튼 해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서 사추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박성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았니.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 MBC가 달라졌습니까? MBC가 바뀌었습니까?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은 MBC를 영원히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MBC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진영으로부터 신뢰도 1위라는 명성은 얻겠지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민주노총이 미디어오늘 만들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기사를 양산하는 것 이해합니다. 민주당도 원하시면 누구 시켜서 방송국 하나 만드십시오, 민영방송.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공영방송에 탐을 냅니까?

김어준 방송 130만 명이 보고 클립 하나 올리면 200만 회, 300만 회 나옵니다. 그런 분 한 10명 키우시면 되잖아요. 왜 MBC에 욕심을 가지십니까? 왜 KBS에 욕심을 가집니까? KBS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시청료를 걷는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NHK, BBC, 브라질, 네덜란드, 미국도 조그마한 방송 이 정도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공영방송은 NHK, BBC 정도일 겁니다. 독일에 방송이 있지만 그쪽은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평의회 방식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내신 법안하고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지역 대표, 영국은 경영 부문과 방송

부문이 완전히 분리된 이사회 구조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저도 그 부분의 해외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문서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하겠다는 이 사장추천위원회 출처는 뭡니까, 도대체? 제가 짐작 가는 것이 있지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심증은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직원 대표, 학계 대표, 시청자 대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사장을 뽑더라도 그 본질은 노동조합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분들을 사장추천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방송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그것 아니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방송국 문화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게 뭘 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달콤한 당의정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쓴 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망가졌잖아'. 그 얘기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이렇게 가는 순간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휘청거립니다. 지금도 스스로 가진 힘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휘청거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갑옷을 한 번 더 입혀 놓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겠지요. 이제는 어느 쪽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지요.

방송국에 정치의 눈치를 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도의 정치문화, 지금 같은 구도의 언론환경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가끔씩은 민주당 눈치도 보고 가끔씩은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 공영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빠지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사장님을 뽑으시면. 그럴 필요 없지요. 이제 한쪽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공격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청률이 유지될까요? 지금의 영향력이 유지될까요? 지금의 신뢰도가 유지될까요?

MBC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뢰도 1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환경이 좋아지면, 아주 언론환경이 MBC에 적대적으로 변하면 MBC가 항상 신뢰도 1위로 올라섭니다.

지금 MBC 경영진들 또는 친MBC 성향의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김어준은 시청률 1등, MBC는 신뢰도 1등.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신뢰도 1위로 MBC가 복귀하는 때는 항상 언론환경이 또는 정권이 MBC에게 가장 적대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정권이 항상 MBC에 가장 적대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MBC가 신뢰도 1위로 복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MBC가 항상 신뢰도 1위로 복귀합니다, MBC 뉴스가. 그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니까 이 정권에 비판적인 분들이 그것을 신뢰도라고 표현하는 조사에 응해서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신뢰도 1

위입니다.

그런데 민영 상업방송이나 또는 종편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 1위라고 말씀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약간 편향된 방송을 해서 ‘우리가 신뢰도 1위의 방송으로 올라섰어’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MBC가, KBS가, EBS가, TBS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사청문회가 끝나셔서 이제 다들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의 발언의 맥락을 못 들으셔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정 방송을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법안의 문제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이 법안을 왜 지금 통과시켜서는 안 되느냐, 안 된다라는 제 나름의 경험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히—사흘 하셨으니까—검증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쭤본 것 아니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일해 왔다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똑같이 고통을 받았던 직장 동료들을 거의 닭장과 다름없는 국회 회의실에 수십 명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는 그분들의 증언과 이진숙 위원장의 자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인과 참고인들의 인격을 그렇게 깡그리 말살시켜도 되는 자격을 누가 국회에 줬는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수십 년 MBC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안고 자랑스럽게 언론인 생활을 해온 분들입니다. 물론 진영에 따라서 더 자랑스러운 분이 있고 덜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자리에 불러 놓고, 물론 국회 청문회 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증언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얼마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도한 현장은 한 직업인으로서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직 언론인으로서 제가 말했던 수많은 전제가 있습니다만 다 빼고 그 부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수십 명 불러 모아서 서로 싸움 시켜서 좋으셨습니까? 혼잣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죽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선출자로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몰인간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오랫동안 계셔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장면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많이 하십시오. 해야지요.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번에 본 느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생경스러운 장면이어서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는 풍경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통위 무력화됐지요. 이 상태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MBC 이사진들 새로 뽑으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성공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에, 왜 이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복잡한 시기에 이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을 추진할까라는 궁금증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또는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 서로 피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화급하게, 너무나 다급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MBC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맞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KBS, MBC, EBS에 거버넌스가 갖춰질 것인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내부 직원들을 사장추천위에 저렇게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지금 방송사들이, 특히 언론노조에 가입된 방송사들이 끊임없이,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국장·본부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사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측에 압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만 뽑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간부진들로 다 구성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MBC가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방송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데…… 이것이 상식입니다. 방송의 편파성을 막아야지요.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내부적 편파성을 더더욱 보장하자는 법안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21명의 이사진을 뽑는데 국회가 5명을 뽑고 언론 학회가 6명을 뽑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을 뽑고 방송PD연합회가 2명을 뽑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공영방송이 가지고 온 많은 자산과 그들의 기득권을 내부자들이

그냥 나눠 가지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고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많은 비판할 지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은 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을 어떻게 뽑겠다, 사장을 민주당 성향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사장을 뽑겠다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시간 가까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화장실 잠시, 화장실 좀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의장님께서도 잠시 다녀오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의장이 자리 지키는 건 맞는데요 왜 어제는 대기시켰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대기하라면 그냥 좀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 뭘.

(「의장님도 같이해야지요. 의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보니까 여기 대기하는 사람 몇 사람 없더만.

어깨들 한번 펴세요.

(「의장님, 2교대 하려니까, 맞교대 하려니까 힘들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견딜 만합니다.

○신동욱 의원 잠시 화장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과방위 인청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오랜 언론계 생활을 하다가 국회로 와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넋두리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국회에 와서 정말 좋은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처음으로 닥친 이 장면은 필리버스터로 이 국회 본회의 단상에 처음 서게 되어서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만 또 어쩌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EBS,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법이니까 KBS가 되겠지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 큰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요. 여든 야든 또 방송국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우리 모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이렇게 화급하게, 뭔가 군사작전 하듯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때를 맞추어, MBC 이사진 개편의 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MBC든 KBS든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영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납득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저는 제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언론계 생활을 오래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비록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겼다 졌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 이겼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방송은 이미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BS·MBC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가 나타나고 또 그렇지만, KBS·MBC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그 힘을 그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쓰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담긴 단 한 줄의 개정안 21명,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KBS나 MBC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KBS나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을 지금까지 만들어 준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을 위임받아서 KBS·MBC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또 본인들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물론 국회 몫의 5명이 있습니다만 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종사자들, 여러 방송종사자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자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다양하게, 아름답게 안배된 조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본 사람들은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쪽 진영의 사람들이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MBC가, KBS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고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킨 그 이유대로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뽑힐 경우에 그 방송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정 진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이미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BC·KBS에게 물어보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 방식대로 하자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견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방송국에 오래 근무해 본 제가 보건대 이런 방식으로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가져가게 되면 특정 진영의 지도부가 계속 뽑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으로 이 회사의 경영진이 꾸려진 회사다라는 낙인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영국 BBC나 일본의 NHK 같은 곳은 이렇게 내부자들, 내부 직원들 대표를 가지고 사장을 뽑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역사적 전통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 NHK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역대표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방송 현업 종사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송 사장을 사추위 이사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 법률가들 또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그것도 물론 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영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앞으로 한다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님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지요? 작년에 MBC 사장 뽑아 봤더니 우리가 뽑고 싶었던 박성제 사장은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MBC가 박성제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MBC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까? MBC의 편향성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그것이 편향성이 아니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또는 국민의 상당수가 MBC가 편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향된 것입니다. 그 편향성이 박성제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달라졌습니까? 그 본질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MBC의 사장을 뽑는다고 해서 MBC의 편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방송사의 넘버원, 넘버투 전부 MBC, 친MBC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민주당이 좋습니까? MBC 좋습니까? KBS 더 좋아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업방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방송은 자기 쪽에 주목하는 오디언스(audience)를 많이 가지고 거기에 나름 기반을 두고 방송국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종편이 보수종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명을 못 들으셨을 텐데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 사람들이 겪은 고초만 얘기해서 우리 편의 독자들은 그 부분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이번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 한때는 다 함께 같은 직장에서 최고의 방송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MBC·KBS의 성장을 다 함께 눈으로 지켜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왜 통과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통과 못 시킨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해합니다. 생각이 달랐겠지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생각이 달라지셨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법을 바꾸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서 새로운 국회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와 논의의 시간을 거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잘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밑바탕 위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21대 때 여러분들이 다수당일 때도,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법안을 지금 그대로 들고 나와서 야당이 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이사회의 임기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중단시키고 다시 하자.

그런데 MBC 이사진을 중단시키는 것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MBC 이사회는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임기가 다 되지 않은 MBC·KBS 사장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수모와 인격적 살인을 당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는지 다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도 어떻게 보면 기다린 겁니다.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 바꾸려고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못 바꾼 겁니다. 못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팩트는 정확하게 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그것을 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KBS·MBC 이사를 바꾼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까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

하면 그건 아니지요.

강규형 이사 어제 나와서도 증언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법인카드로 뭘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 인격적인 수모를 겪어야 할 만큼의 일들인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그것은 정권이 바꾼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본질을 비껴간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이 국장이든 본부장 바꿔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는데 너희는 만들자, 안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MBC를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으로 징계하고 그 MBC 보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MBC를 압박한다? 그 방송장악의 강도라는 것을 그리고 과연 MBC가 장악될 수 있는 방송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조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V조선으로 갔을 때, TV조선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TV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TV조선의 문을 닫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TV조선에서 '아, 방송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지금의 방심위도 방송 심의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당시에 민언련과 방송심의위원회는 거의 한몸이 되어서 저희 TV조선을 모니터하고 압박했습니다. 그 TV조선에서 제가 6년 동안 앵커를 하고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법정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법정 제재를 왜 안 받게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앵커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조건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TV조선 재허가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조심하고 조심하고 했으니까 별문제 없겠거니 하면서 차분히 저희 회사에서 마련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날 저희 취재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무난히 잘 통과할 만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점수가 대폭 깎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량적인 점수가 그렇게 깎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재판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유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압박, 실질적으로 방송국 문을 닫겠다는 압박 이런 것들은 전 정권도 전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하는 얘기는 남 탓 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MBC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파업한 시절의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론할 수 있지요, 그 파업이 왜 일어난 것인가.

MBC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파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지요. 어제 한준호 의원 얘기를 제가 듣자면 ‘MBC는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임금 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깟 돈 몇 푼 올려 달라고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공정방송을 외치느라 파업했습니다’, 즉 ‘우리의 파업은 늘 다른 의도의 파업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공정방송이지요. 그런데 왜 그 공정방송은 항상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MBC 노조가 공정방송을 외칩니까? 그것은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MBC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KBS도 마찬가지지요—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MBC·KBS의 사장이 끌려 나가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MBC·KBS는 내부에서부터 그 개혁의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소위 적폐청산 KBS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적폐청산을 해야 하고, 적폐청산이라는 건 별것 없습니다. 그동안 MBC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분들 쓸어 내고 그 자리에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가 가겠다. 그냥 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달아서 국민들은 정말로 적폐를 청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그냥 어떤 진영에 가까운 분들이냐, 노동조합에 얼마나 가까운 분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느냐, 이 차이 외에는 적어도 저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MBC가 요구하는 것이 방송정상화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친민주당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방송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일반 민영 상업방송이라면 그 부분은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이것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공영방송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씩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기형적인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회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실 것이고 저쪽은 ‘그렇게 바꿔야지’. 그런데 그걸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꿔야지,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도움되게 바꿔야지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정치적 후견주의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적 후견을 받더라도 여야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의 견제라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영원히 회사의 방송 경영권을 넘겨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MBC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세상에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자민당 방송이 있습니까, 일본에? 일본에 자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민당 방송을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방송이 특정 정당이 자기네들 편에 유리한 경영진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내 가지고 B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매우 규모가 작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송국들이 상업성에 기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처음부터 크게 자리 잡을 여지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조차도 그렇게 권력이 무리하게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진 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원을 저의 언론사 경험으로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PD수첩이 미국에 가서 많은 화면을 구해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한 PD수첩의 방송이었습니다, 제 30년 동안의 방송 경험상. 나중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소위 짜깁기 편집이라는 것……

(「다른 얘기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다른 것으로 쓰러지는 소와 침 흘리는 소를 교차 편집해서……

방송국에 다녀 보신 분들은 그 편집의 기술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광우병은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방송 프로그램이 준 파급력은 사실 MB 정권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레임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MBC는 그 이후로 권력을 우리의 힘으로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근거 없는 괴담들이 많이 돌았지요, 뇌송송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독약을 먹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이 어떻게 흔들렸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PD수첩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긴 정치적 격동 속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몰아넣는 큰 도화선이 됐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영방송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적어도 MBC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MBC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양과 MBC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퍼졌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침을 흘리고 죽었습니까?

(「10년이나 지난 얘기를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때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공영방송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영방송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서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게 만들거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나치게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 줘야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에 힘을 자꾸 몰아 줘서, 192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더 큰 민주당,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후견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30년을 월급 받고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도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 방송국에 입사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방송국에서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록 저는 공영방송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그런 공영방송의 그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MBC, KBS, EBS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방송 자산 아닙니까. 이런 방송들이 늘 정권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를 가게 되면 공영방송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지금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정말 먹구름을 드리우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MBC, KBS, EBS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 회수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대한 곳으로 만들어서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정치적 후견을 많이 받고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방송계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TBS의 김어준 사태입니다. 김어준 씨가 매우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재밌게 방송하지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방송을 TBS에서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할 방송은 아닙니다. TBS가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던 방송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아침에 라디오 들으면 기분 좋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는 SBS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SBS는 지금까지 91년 창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이 있었지만 온건 보수주의,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민영 상업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지요. 그래서 정권이 늘 바뀐다는 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궤도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거지요, 상업방송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SBS가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하는 대형 시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SBS는 공영방송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소위 나꼼수 멤버들, 김어준·주진우 이런 분들 그리고 진보적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소위 지상파 방송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SBS는 상업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똑같은 행태를 KBS나 MBC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진행자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편향된 진행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그런데 기억하시잖아요. KBS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김제동 씨를 영입을 하지요. 김제동 씨 방송 잘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시청률 나옵니다. 그런데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11시대 시사 프로그램, 어떨 때는 메인 뉴스보다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는 프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김제동 씨를 진행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란 끝에,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었지요. 김어준 씨도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KBS는 출연료를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 KBS 출연들 해 보셔서 알겠지만 KBS는 국가에서 주는 재원으로 하는 공익방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연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방송계에 돌던 얘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주고 김제동 씨를 2017년도에 KBS 시사 프로그램으로 영입을 합니다. 라디오에는 주진우 씨가 들어왔지요.

제가 누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가 수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역시 저쪽 성향의 색깔이 더 강한 최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욱 씨가 하는 유튜브 혹시 들어 보신 분 있나요? 정말 유튜브에서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KBS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최욱 씨가 최근에는 MBC로 갔지요, 또. KBS에서 잘리고 MBC로 갔지요.

MBC,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와 있는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 와서 방송을 했지요. 그분들 방송 재밌습니다. 특히나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일방적으로 까고 낄낄대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시청률 올라갑니다. 돈도 법니다.

그런데 KBS·MBC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저는……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영진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유의 진행자를 KBS·MBC가 레귤러 프로의 진행자로 쓰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태극기부대 뭐 이런 분들 진행자로 쓰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KBS·MBC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방송국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압니다. 우리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국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국민들 중의 많은 분들도 ‘아니, 왜 김제동이는 KBS에서 방송하면 안 돼?’ 오락 프로에서 하면 되지요. 시사 프로그램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기 절제는 할 수 있는 방송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다가 아니지요. 전 방송사에 포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재미있는, 무서운 것은 재미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전통 시사 진행자를 데려다 썼다 그러면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지요, 우리 같은 사람 쓰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분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면서 이중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합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공영방송인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진행자를 데려다 써야지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영국의 BBC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의 PBS가 FOX NEWS처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 씨 데려다가 재미 많이 봤습니다. 돈벌이도 좀 했다지요. 출연료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출연료보다 몇십 배를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공영방송이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출연료를 얼마를 주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교통방송의 경영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그런 공영방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송장악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말게,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이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재미 좋은 것이지만 이렇

게 하면 안 돼라고 말려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치고 그 방송에 출연해서 같이 맞장구치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뭘 얻습니까? 선거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또 그런 소위, 저는 언론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송인들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내뱉는 출처 불명의 뉴스들, 누구 카더라라는 얘기들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 조작하고 언론 조작하고.

이런 것들 재미 들리면요 그것 마약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원하는 분만 듣기 때문에 저는 그것 뭐 자유로운 언론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정치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KBS MBC,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가 매우 강하게 포함된 불순한 법안을 가지고 KBS 사장을 바꾸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특히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공영방송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 고민스럽지만 반대편에서 이게 이래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듣는 척이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MBC 이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MBC의 미래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이 뭐 종신제입니까? 천년 합니까? 만년을 합니까? 기껏 해야 이번 임기 끝나면 끝나시는 거고, 여러분들 작전 성공해 가지고 몇 달 더 버티면 몇 달 더 버티시는 거고 그게 다인데. 그것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192석 대단하지요. 192석까지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막고 싶지만 숫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과방위 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다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MBC·KBS 사장 내쫓을 때, MBC·KBS 이사장들 내쫓을 때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당시 영상 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힘세신 민주당 의원님들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가진 경험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최대한 이것을 통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고 이런 것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MBC 기자들이 당하고 있는 일종의 권력으로부터의 압박,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후배 기자들이 지나가면 앞에서 침을 뱉고 뭐 이런 것들,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같으면 그 회사 못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못 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를 좀 잘못 봐 가지고 한직으로 좌천됐을 때의 기분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돌렸을 때의 그 기분, 저는 못지않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스케이트장 얘기하시잖아요, MBC 인사. 솔직히 그게 어떤 형태의 인사였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기자가 펜을 뺏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PD가 연출을 못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같은 방송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 제가 경중을 굳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더 크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100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1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중을 굳이 무게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8명의 MBC 기자들이 펜을 뺏겼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MBC의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022년 7월 25일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거라도 우리가 하나 해 주고 이 역사의 질곡을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나는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22대 때 그냥 만들어진 법안이니까 '우리 당의 당론은 이것 통과시키는 것이야' 해서 우르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세시니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5년도에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치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은 공정한 기준을 갖고 권력을 감시하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상호 존중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언론 개혁을 주도할 경우에 그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저는 정치부 기자 시절에 첫, 제가 맡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계 복귀해서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치부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아픈 핍박을 받았는지, 군부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었는지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기껏 한 것이 뭐 KBS 사장 바꾸고 좀 그랬는데 KBS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던 분들, KBS 선후배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친 것은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요. 공영방송은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견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미국의 정당들이 PBS를 자기 수중에 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들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힘을 쓰려고 하고 그 필요 없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정치권력과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대관 업무를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네가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병이 너무 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보면 저분들이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만의 오디언스를 향해서 자기만의 뉴스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지지자들이 조사하면 신뢰도 1위도 되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이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방송법을 논의할 때,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의석수가 커서 그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에게 이 법안이 넘어가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매우 어둡게 느껴집니다, 지금.

힘으로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좋아질까요, 정말로? 몇 분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우리 사회의 지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성공한 분들. 조직의 리더도 계시고 방송사, 언론사의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도 계시고, 고위 외교관도 계시고, 변호사, 판사도 계시고, 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내가 생각하는 조직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데에 대한, 굳이 방송국을 다녀 보시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국회에서 5명, 정당에서 21명의 이사를 뽑았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둘러싼 이전투구,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로의 비토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렇게 양극화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21명의 이사를 뽑아서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정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21명이 얼핏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숫자지요. 많이 뽑아서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그래서 사장 뽑으면 되겠지. 참 아름다운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명 내외니까.

더 많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그만큼 반영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한 5000명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만 한 200명씩 또는 직역별로 한 100명씩.

한 5000명쯤 되면 그게 국민들의 뜻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10명에서 20명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 공영방송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버넌스로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회사 이사회 10명에서 20명 됐다고 더 좋아집니까?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싸우다가 날 샙니다, 이사회가 20명 되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보도도 2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 정치권력과 관계없는 회사에서도 그런데 이게 아침저녁으로 싸움이 나는 공영방송 시장에서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아요? 저는 사장 뽑는 데 1년 걸려도 못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그 회사는 뭐가 될까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지금 콘텐츠 시장에 전 세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KBS가 끝없이 적자를 내면 시청료 올려 달라 그러겠지요? 국민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그러겠지요.

공영방송이 망가지면 그 부담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위임받은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이 망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면 100% 망가집니다.

방송기자협회 2명, '아, 방송기자들이 참가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방송기자를 해 봤는데 방송기자협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매우 편향된 분들이 많습니다. PD연합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학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같으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뽑겠지요.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눈앞이 캄캄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송국을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100%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MBC·KBS가 사장 한 명 뽑는 것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난리가 나는데 사장 한 명 뽑겠다고 21명을 뽑는 그 과정부터 21명이 뽑히는 과정까지 언론학회, 방송유관단체 5명, 6명……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이 MBC 사장을 뽑겠다는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그 자리에 넣을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장후보자들의 로비가 집중되겠습니까. 21명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나 과도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KBS·MBC 사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로 결국은 뽑히겠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 지난한 과정,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할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이 감당하시겠지요, 시청료든 세금이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지금 5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왜? 복잡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영국은 어떻게 하고…… 시간이 기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상식입니다, 이것은.

21명이 모여서 사장 뽑는데 그 사장을 뽑는 위임된 권력의 실체를 알 수 없는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그걸 주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결국은 이거 안 되니까 법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 100%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기자가 한 200명, PD가 한 300명, 행정직원 한 200명, 나머지는 비정규직들이지요. 작가, 아나운서 또 계약직 PD, 기술직 이런 분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부닥치는 문제, 방송국 내의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가장 관심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저는 방송국에 다니면서 제가 관리자로 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제 마음대로 개선해 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조직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의 힘도 있고 기자협회의 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잘 가집니다. 많이 가집니다, 방송국에서.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뭘 깎자 그러면 그분들부터 먼저 깎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월급을 깎더라도 이분들 것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먹히지를 않아요. 집단이기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히 폼 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밑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작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애들 좀 이번 달에 한 20만 원만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을 찾아가면 잘 안 먹힙니다. 회사 경영진한테는 잘 안 먹힙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함된 세 직역도 정말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에 기자, PD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은 공영방송 의사결정에 아무런 참여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임금체계의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해 가지고 무슨 누구에게 떡 나눠 주듯이 국회 5명, 어디 6명 툭툭 던져 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 방송종사자들, 방송국의 주인인 분들이 직접 뽑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지만 방송국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아무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가 5명을…… 국회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이렇게 아무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닷새씩, 365일에 닷새면 얼마입니까? 닷새씩 시간을, 해결되지도 않을 이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5명 주고 무슨 방송 유관단체,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준다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진짜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방송국 다녀 보신 분들 시청자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사장이 툭툭 임명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냥 시청자위원은 그냥 툭툭 임명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4명이 들어온다?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안은 KBS에서 부사장하시다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오신 정필모 의원이라는 분이 만든 안입니다. 물론 숫자가 바뀌었지요, 비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30년 이상 좋았든 나빴든 회사생활을 하고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내놓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악해서 제가 정말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 안이 다른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숫자가 일부 조정된 것은 압니다만 KBS가 이렇게 해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수성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장 못 뽑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벌어질 온갖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민주당이 감당하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할까요? 못 합니다.

이게 민심에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 민주당의 192석은 폭풍우 위의 가랑잎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막 휘두르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으로 선거가 영원히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민심의 폭풍우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물살 속으로 여러분들이 헤엄쳐 들어가서 그것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쓰시고 싶은 힘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저희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정부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좋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피해를 첫 번째는 국민이 보지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힘센 언론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보 내도 나 어떻게 못할 거야', 그게 힘센 언론사들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바

이든-날리면’ 보도, MBC가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워싱턴에서 새벽에 대통령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전언이, 보고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보도본부장 시절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들어 봤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MBC가 이미 인터넷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 기자들이요 무슨 뭐 알아서 ‘대통령이 실수였으니까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자들은 남이 썼다고 그러면 눈에 불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써야지, 무슨 소리야’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 봐라. 내가 무슨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그 정도 사안이면 녹취가 들어오면 그것 보고 해야지. 들어 봐야지’. 그런데 그 녹취가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들어 봐도 녹취의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논란으로 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사실. 모든 언론이 다 썼지요. 그 기사를 그렇게 퍼뜨린 첫 번째는 MBC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MBC가 본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날리면으로 들었어’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다면 그것은 MBC의 책임이지요. MBC의 책임입니다. MBC가, 나중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MBC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유튜버라든지. 유튜버도 요즘은 상당히 언론사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하는 유튜버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유튜버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민영 상업방송, 속보 경쟁에 매우 민감한 민영 상업방송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저는 기자의 생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MBC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보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MBC라면 그런 방송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의 무슨 뭐 하나 잘라 넣는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도 책임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 그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KBS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확인됐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기자로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맞다 틀리다, ‘바이든이다. 날리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MBC가 그 첫 보도를 강행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보도를 강행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보도가 미국에서 날아왔을 때 저에게 동시에 같이 전해진 전언은 지금 MBC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보도라면 녹취를 한번 들어는 보고 보도하자, 우리가 무슨 이게 대단한 특종보도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보도를 몇 시간 미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보도를…… 뭐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제가 붙잡고 있다가 늦게 방송을 냈다라고 저를 공격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무슨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는 명확한 보도의 시점을 늦추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지금 변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정말 늦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일본의 NHK 같은 데는 절대로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망 몇 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종자라고 씁니다. 거의 홍수가 나서 매몰된 현장에 10명이 빠져 있어서…… 우리도 요즘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지요, 우리 국내 방송들도.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의 보도 태도를 보면요 10명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도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되면 1명 사망, 9명 실종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반론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확인도 되지 않은 찌라시를 보고 숫자를 함부로 막 쓰는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 나라의 공영방송을 돌립니다. 물론 속보가 빠른 CNN이나 우리로 치면 YTN 같은 것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블 보도전문채널을 보시지만 ‘아니야, 나는 좀 늦더라도 정확한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BBC나 NHK를 틉니다. 상업방송 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방송 패턴입니다. 방송 시청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그런 공영방송을 가질 만한 저력과 힘과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정치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무성의하게 꾸려진 것으로 느껴지는 이 방송법 개정안 거두어들이시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될까 하는 진정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22대 국회에는 다양한 방송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뱉은 말에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말로써 업을 쌓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분을 제가 싫어하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가슴속에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국회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분들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격의 없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같은 직종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야 될 이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서먹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가진 직장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했건 또는 어

떤 일을 당했든 또 저는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있든,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이 주시는 세비를 받고 정책비를 받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정치자금을 모금을 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고 위임을 받은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날 선 표현으로 공격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많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그렇지만 저는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국은 약간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으로 옮겨가서는 워낙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발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KBS가 잘해 주기를 평생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가 못 하니까. 내가 못 하는 것, 내가 공영방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것들을 정말 KBS가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MBC, MBC는 저 또래의 방송기자들에게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MBC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열차의 레일처럼 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든.

그래서 저 MBC를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던 해에 MBC가 공채를 안 해 가지고 매우 아쉽게도 제가 MBC 시험을 못 봐서 SBS를 갔는데 MBC 아주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 많았잖아요.

물론 MBC가 그렇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 방송기술의 발전 또는 미디어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영역,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한 유일한 방송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얻어진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MBC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방송입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물론 MBC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았지만, 정말 좋은 기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보도라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땡전뉴스도 하고 다 하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MBC는 과거에 너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MBC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오늘 과방위 청문회를 TV로 보면서 '아, 내가 MBC를 갔으면 저기 안에 서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서로가 한때는 정말 등을 두들겨 주던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고 한때는 사선을 넘어선 언론 동지였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기사 한 줄을 놓고 목 높여 싸웠던 정말 좋은 언론인이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MBC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언론인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방위에 다녀오셨던 청문위원 한 분이 표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과방위 청문회장 한 켠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서로를,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서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송기자 또는 방송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큰소리로 '그렇게 한 언론사의 역사와도 다름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 놓고 수모를 주면 기분 좋으십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심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적어도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같은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저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MBC의 가장 책임…… 물론 방송사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서서 토론해 볼 용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눈부시게 컸습니다. 언론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저는 문체위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 있었는데 왜 과방위를 가지 않고 문체위로 가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의 이 아름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21명이 어떻게 사장을 뽑습니까? 21명까지 뽑는 것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그 한 명 한 명의 우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노력들을 각 정파와 각 방송사와 각 단체가 책임지면서 그 21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표결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진 공백이 생기는 그동안에 방송국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만든 좋은 콘텐츠들, 우리 방송국들의 콘텐츠 만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 좋은 콘텐츠들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방송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싸우고 왜 저 사람 뽑았느냐, 누가 뽑았느냐, 왜 뽑았느냐, 어떡할 거냐. 그래서 21명 뽑아지겠습니까?

국회, 뽑아질 수 있을 겁니다. 3명, 2명 정도야 뽑겠지요. 그리고 방송학회 등등 6명 그거 누가 뽑을 겁니까? 방송학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단체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주실 겁니까?

시청자위원, 이것은 좀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이 지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수월하긴 한데 시청자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시청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시청자위원은 그냥 지명직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방송사 사장을 결정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을 결정하는 자격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줍니까? 방송기자들 기자협회에도 다 가입돼 있는데. 방송기자연합회가 몇 개사나 가입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MBC, KBS, SBS 다 가입돼 있습니다.

(7월26일 24시 경과)

그 외에 수많은 종편 채널도 가입돼 있고 저희 TV조선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채널A, 가입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입 안 시켜 줍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런 것 할 때 딴소리 낼 것 같아서 가입 안 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PD연합회, 제가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분들이 PD연합회 회장을 쭉 해 왔는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방송기술인연합회 누가 뽑을 겁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제가 경험한 방송국 문화로는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시겠다고요? 못 합니다.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요. 억지로 하고 몸싸움하고 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꽹과리 두드리고 여긴 된다 저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상임위를 선택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사이에 방송국의 모든 의사결정 올 스톱, 방송국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없는데. 사장 뽑힐 때까지 그 아래 인사는 다 기다려야지요. 6개월, 8개월 지나가면 해외에서 중요한 투자 제의 들어왔는데 그것 하실 겁니까? 못 하잖아요, 새 사장 뽑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끌고 갈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큰 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키워 줘야 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기껏 선거 앞두고 이틀 전에 '이것 좀 틀어 줘', 녹취록 하나 던져 주고 '이것 보도 좀 해 줘' 이런 부탁하려고 공영방송을 이 지경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 뇌피셜은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어붙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면 큰일 난 거지요.

'방송법이 어떻게 되든 우리 방송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유라도 압시다.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20일 동안 묵혀 놨던 법안을 단 한 번 회의 열어서……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재준 의원, 대체토론 그렇게 한번 하게 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발언 기회 한번 주지도 않고 정청래 위원장님 그냥 땅땅땅 두드리신 것 제가 조금 전에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찌라시를 보고 온 게 아니고요,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6시간, 5시간가량 토론하면서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분한 일도 많지요. 눈물 나는 일도 많지요. 안타까운 일도 많지요. 그러나 국회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논의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 드려야 되고 저렇게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드려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과거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일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당했기 때문에, 누가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것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당했는데 한번 해야지.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공정하게, 정말 편견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고 공정성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공정성이 무엇인가 이견들이 많지요. 공정성이 뭐지요? 공정성은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나 언론학 교과서에서도 사실은 이 공정성을 견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이 공정성을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념 지향성을 가진 매체는 상당 부분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공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책임. ‘시청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책무지요. 그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이념으로서의, 스피커로서의 그 집단의 영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매우 힘센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들 얻고 싶지만 그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KBS에서 있었던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KBS가…… MBC는 시청료 없는 회사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KBS는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KBS지요. MBC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공영방송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 같은데 MBC는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서 MBC 직원들이 주인이다, MBC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MBC의 주인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그런 MBC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이 방송법안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0명, 11명 있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 이게 뭐 어때서. 겉으로 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분들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KBS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KBS 사장 뽑는 걸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KBS를 똑바로 세우고 MBC를 똑바로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사장을 또 어떻게 흔들 것인지, 이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민주당이 힘을 보여 주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주신 것을 오독해서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지난한 사회적 숙의와 정말 지난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는 어렵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생겨날 사회적 폐해와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잖아,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 그런데 따져 보면 저희가 무슨 충분한 시간을 받았습니까? 21대 때, 그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오래 끌었지만,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다 봤는데 대충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고 몇 번 이렇게 넘기고 거의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6월 25일, 며칠 전이지요, 한 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 방송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마 법사위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편의상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장님!’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모든 위원들 다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아니, 그걸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정청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오늘 처음 참석한 위원이고 첫 회의입니다’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왕좌왕.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 71조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국회가 처음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고자 하시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으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한 단어도 더하고 빼지 않고 이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동료 위원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도 못 하고,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온 저희당 최연소 의원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잠시 초선 의원으로 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지 저 같은 초선을 위해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중요한 법안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도, 대체토론 한 번 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땅땅땅 두드린 것, 이렇게 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지난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차례 개원식을 하려다가 연기했고 대정부질문도 하다가 못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봤자 정확히 한 달입니다.

이렇게 급하십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다 한 얘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법안만 내서 시간 끌고 있다가, 더구나 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시절에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지 미적거리면서 그냥 넘겨서 21대 국회를 지나와서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새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뭔가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것처럼이라도 협의하겠다, 타협하겠다라는 제스처라도 한 번쯤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뭐라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22대 국회에는 저처럼 언론계에 오래 몸담으면서 정말 내가 좋아했던 MBC와 KBS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물론 그 걱정의 방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방송국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 우원식 양쪽이 다 토론 안 들을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양쪽 다 조용하세요.

토론을 계속하세요.

○신동욱 의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장 우원식 나도 잘 듣고 있어요.

○신동욱 의원 제 느낌으로는 발언을 방해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대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나 아직은 바깥에서 보고 온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지금 5시간째 제가 목을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의사당 안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괜찮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의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해 주셔서.

(장내 소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아서 조금 저도 덕분에 잠시 쉬었다가, 말씀하실 때 저도 조금 쉬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법안이 얼마나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몹시 하고 싶어 하셨지요. 여러 가지 방송인으로서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결국은 못 하고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핵심은 과거 정권의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었습니다. 적폐, 참 그 적폐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나는 적폐일까?’ 방송국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그 적폐라는 낙인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맥락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가 그렇게 임의로 적폐라는 표현을 써서 낙인을 찍는 것,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어느 쪽이 되었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8월 8일 이효성 방통위 신임 위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언론노조가 나섭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그저께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렸

습니다만 여기 화면에 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틀 수 있는, 정말 문명사회에서 보기 힘든 폭력적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분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폭력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리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폭력입니다. 일부 KBS 이사는 사표를 내지 않으니까 갖은 수단으로 사표를 받아 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노조원들이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까지 쫓아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너무 옛날 얘기 왜 하냐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누가 더 강도 높은 린치를 당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 다음에 나오실 토론자, 민주당 토론자가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당했던 일 포함해서.

그러나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이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옛날 일로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아, 참 그런 시절도 있었어. 선후배가 싸우고 쳐다보지도 않고 침 뱉고 책상 앞에까지 가서 꽹과리 치고 스케이트장 보내고 조명창고 보내고.

제가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국,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제가 두서없이 주섬주섬 주워 삼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그런 야만적인 일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할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0시 30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시간 더 하셔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신동욱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 왔지요. 산업화·민주화,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택에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유로운 세상은 갑자기 얻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하자. 그래, 우리가 더 세니까 한번 보자.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 방송법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분 안 되시지만 제 앞에서 제 발언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고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옳다는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방송국에 종사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진 처지에서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권력이 바뀌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년, 7년 동안 변방에서 기자가 펜을 뺏기고 PD가 연출봉을 뺏기고,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법과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회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장 중요한 덕목, 기회의 공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국회에서 7시간 가까이 연설하고 있는 것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이 연단 위에서 제가 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그 기회를 주신 것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 국민들에게 제 의사와 견해를 얘기하는 것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다른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방송법 문제만은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22대 국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동안 애써 힘들여서 쌓아 온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사라집니다.

항상 얘기하는 MBC 신뢰도 1위, 그 신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신뢰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으로부터만 박수받는 신뢰도, 특정 이념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매체라면 기뻐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1등이야. 심지어는 신뢰하지 않는 매체 1위도 특정 지향성을 가진 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훈장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대쪽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MBC가 요즘 신뢰도 1위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신뢰도 1위가 무슨 신뢰도입니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진영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양산해서 얻어 낸 진영에서 박수받는 신뢰도 1위, 그것 자랑하는 MBC 참 딱하게 생각합니다.

MBC와 KBS를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C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매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때는 9시 뉴스 하면 전 국민의 절반이 MBC로 채널을 돌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그 뉴스가 100%, 얼마나 공정한 뉴스만 했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BC가 해 온 역할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민주화 역사에서 MBC가 차지하는 비중, 상징성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MBC 신뢰도 1위라는 것이 과연 그 역사성에 걸맞은 1위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MBC를 다녔던 MBC 사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국민들로 사랑받는 MBC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MBC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도와줍시다. 우리는, 국회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도와주라고 우리 뽑아 주고 월급 주고 보좌관 붙여 주고 정치자금 걷을 수 있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아무런 토론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이런 졸속 법안을 아직 개원식도 하지 않은, 개원식도 하지 못한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필리버스터나 몇 시간 했어'라고 이렇게 끝나고 지나갈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조금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성의 있게 들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에 몸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 큰 배에 장착된 사내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내방송이 정부방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형태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은 특정 지역인들의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그 방송종사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끝나면 나갈 것이고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주인 없는 회사, 국민의 회사지요.

민영기업은 오너가 마음대로 합니다. 정해진 법적인 절차만 지킨다면 오너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영기업입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은 국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망하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본인들이 잘하면 흥하고 못하면 망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생리이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에서 공적 책무를 부여한 미디어의 핵심은 공영방송입니다. 물론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밑천이 떨어져서 글 하나 읽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 방송계에 종사하지 않으셨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더라도, 그러나 방송은 우리 정치인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무서워서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가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도 방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KBS 출신은 아니지만 KBS가 정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언론계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잘되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배가 휘청이고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사장을 끌어내리고 이사를 바꾸고 싸우고 이런 것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이 가진 정치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우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제도 막 베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국왕을 정점에 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치권력이 양당제로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겪여야 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역시 다양하다. 영국은 2017년 법 개정에 의해서 BBC 트러스터를 해체하고 BBC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이 담당하고 경영 책임은 BBC 이사회가 갖는 이원

구조로 개편했다.

특히 ‘2017년 출범한 BBC 이사회’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들어 볼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출범한 BBC 이사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제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져 공영방송의 경영적 측면을 크게 보강하였다.

여기에서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독하면 우리도 내부 구성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BBC는 요즘 최근 들어서 경영적 효율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는 언론보도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천 명씩 한꺼번에 직원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부 구성원을 사장 선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BBC에 대한 감시·규제는 오프콤이 전체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외부 감독·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에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BBC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BBC도 결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런 정치적 맥락을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영국의 BBC처럼 몇백 명씩 해고하고 이런 사태 반드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유연성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파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도 지금은 그동안 독과점 시대에 얻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사가 어려워지면 건물 하나 팔고 또 더 어려워지면 지방에 토지 하나 팔고 이렇게 해서 몇 년씩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되면 더 좋겠지요. 저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손 내밀고 제대로 콘텐츠 못 만들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들어 가면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바뀌면 사장 몰아내느라, 국장 바꾸느라 직원들끼리 싸우고 콘텐츠 품질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될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권,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기구들이 운영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는, 사장 뽑는 이사 몇 명 바꾸는 것 이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신데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는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버넌스를 바꾼다는 표현을 쓰시려면 사장 뽑는 이사 숫자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환경적 요인들이 다 고려된 그런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지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 특히 역사적 배경 중에서 정치적 환경 또는 정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BS·MBC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없이 도대체 왜 21명이라는 출처 불명의 숫자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제가 읽었군요.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제도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 논문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으로 겪어 온 것입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1년 또는 2년은 싸우고 새 경영진이 들어서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새 대선 다가오고, 이런 공영방송이 세계적인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방송계 최대 화두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드라마 시장, 다큐멘터리 시장, 심지어는 시사보도 시장까지 싸그리 훑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MBC가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제일 재미있게 만드는 회사, 드라마왕국이라고 했지요. 지금 MBC가 드라마왕국이라는 표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MBC가 저렇게 망가지는 동안 세계 변화를 읽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MBC는 결코 드라마왕국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능력 있는 PD 한두 명만 있으면 드라마왕국이 될 수 있었던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수천억, 수조 원씩을 투자해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을 독식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장추천위원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일주일, 1년 52주 중에 52분의 1이라는 시간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꼼짝달싹도 못 하고 이걸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구성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제도를 잘 갖추면 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이지요.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량적·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는 공정방송, 방송독립 쟁취, 낙하산 사장 반대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는 항상 그런 것이지요.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공생해 온 것이 사실이고 여러 차례 민주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금 자조적으로 표현하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것은, 과거에는 집권한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은 집권하지 못한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과거에 정부 여당이 했던 식의 것을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맥락, 우리 정치 환경의 복잡한 맥락,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하시는 거면 제대로 좀 하십시다. 이것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방송국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방송국에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내가 국장 될 거야. 사장도 될 수 있어’, 아주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연목구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해 왔다.

얼마나 뼈아픈 대목입니까? 탈정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정치를 앞세워서 탈정치화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탈정치화를 정치를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명백한 논리적 오류입니까? 단순한 문맥으로는 매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거의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명칭으로 포장해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시도·의도가 보인다.

물론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은 저희 보수진영의 분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행간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진보진영에서 쓴 논문을 제가 읽더라도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 참고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이 문구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는 항상 방송독립을 외칩니다. 노동조합이 특히 심합니다. 공정방송 쟁취, 저도 언론노조 출신이니까 잘 알지요. 왜? 공정방송 쟁취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송국의 절대반지입니다. 어떤 방송국의 논리도 공정방송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반지입니다. 그 절대반지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은, 지상파 3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절대반지를 꺼내지요. '공정방송 하자는데 공정방송해야지.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지', 절대반지 꺼냅니다. 항상 제 30년 방송역사에 그렇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수진영에서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지요. '왜 공정방송은 진보진영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수를 뺏겼지?', 저도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반지를 가진 반대쪽에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공정방송 하기 싫은 사람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신, 공정방송 하기 싫은 거야?', 제가 무슨 얘기 하면 '공정방송 하자는 데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 직원들이 언론노조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는 가장 유일한 고리는 바로 그 절대반지입니다. 그 절대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국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합니다. 언론노조를 선택합니다.

언론노조 선택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대반지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게 참 큰 문제라는 거지요. 공정방송……

그래서 공영방송 보수정권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공정방송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꼭 무슨 고백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또한 아마, 누가 이 법안의 최초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인지 제가 모릅니

다마는 아마 이 법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다 또는 방송국이 권력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당 9명, 야당 6명 또는 여당 7명, 야당 4명 너무 불공평하잖아. 왜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방송국 사장을 5 대 5도 아니고 6 대 4도 아니고 왜 7 대 3으로 결정을 해야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 도대체 공정방송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혹시 나중에 저희 쪽 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만 바꾸면 사장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이사를 다 바꾸지 않고 일부 이사만 바꾸더라도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방위였으면 이거 좀 자세히 연구했을 텐데 갑자기 저보고 필리버스터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갑자기 들여다보느라고, 제가 있었던 회사 같으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KBS·MBC의 사장 선임 절차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제 상식으로 그 제도를 다시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노조가 공정방송이라는 절대반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항상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노조가 어떤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공정방송 쟁취라는 절대적 명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은 매우 아름다운 투쟁으로 포장되어서, 매우 아름다운 방송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포장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방송민주화, 참 좋은 말이지요. 참 아름다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방송이 민주화되지 않았습니까? 허구적인 표현입니다. 공정방송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국이 민주화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그냥 아주 단순한 지나친 정치적 후견주의의 부작용일 뿐이지, 방송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방송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온 많은 우리 선배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완벽한 민주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어느 나라에 완벽한 민주화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우리 방송의 역사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간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방송민주화가 후퇴했다가 다시 또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방송자유화 지수가 좀 떨어졌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좀 올라갑니다. 그것은 역시 절대반지를 가진 쪽이 가지는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요. 제가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방송사에서의 많은 일들은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방송사의 사장만 어떤 방식으로 뽑으면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합리적인 안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마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설명은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어도 제 상식에서, 제 경험에서 미루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21명 안 이것이 가지는 실익이 무엇일까, 한국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부족하다면 공부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경험칙의 한계일 수는 있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다른 매체와 훨씬 더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것 그만하고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사위 대체토론도 허용 안 하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토론해 보자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회의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방기한 것 같은 죄책감이 앞으로 제 정치인생에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적어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풀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일부에 조금은 제 감정이 적혀져서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오늘 저의 얘기는 어떤 학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연구한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실제 방송국에서 겪어 보니까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을 오너가 있는 개인 민영방송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SBS 같은 회사에 MBC나 KBS 같은 거버넌스를 도입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SBS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SBS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MBC·KBS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미 SBS도 공영방송은 아닙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

들, 이를테면 노조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 경영권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언론사의 편집권에 관여할 수 있는가? 노조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또는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사장 중간평가제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진영에서 보면 사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침식을 해서 지금은 사실상 SBS도, 체제는 개인이 주식을 가진 상장된 민간회사입니다만 사실은 보도의 부문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상당한 영향력, 물론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풍향계에 보도의 방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노동조합을 통한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인사권에 대한 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BS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보도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영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상파 3사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보도 편집권의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사도, 제가 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사보다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지상파 3사가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적어도 6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상파 3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이미 진보진영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 사장까지 이런 방식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노동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방송국이라는 이유로 세계와 콘텐츠 경쟁을 해야 되는 민간기업이 제작본부장, 제작국장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인지까지 인사동의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의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방송국들이…… 너무 업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재미없으실 텐데, 많은 방송국들이 분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이고 그런 노력들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SBS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누가 도대체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방송이 하나 생겼잖아요. 김어준 혼자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개그맨을 리포터로 써서 우리 당, 그러니까 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을 거의 스토킹하는 수준으로 쫓아다니면서 마구 괴롭히는 가학 저널리즘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게 왜 가학 저널리즘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했던, 2017년도에 SBS에서 했던 방송 오래 버티지 못 했습니다. SBS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라면 S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의 방송들이 탈정치화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탈정치화는 민주당이 더 크게 주장하는 목소리고 민주당이 방송민주화, 공정방송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장시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탈권력화는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최소한의 경험칙, 제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거기에 사장 추천을 위해서 이사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의 면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경솔함을 탓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귀결이 되면 제가 적절한 기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걱정은 아무리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대반지로 내세우는 탈정치화,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 공정방송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너무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김준혁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토론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예, 오늘은 제 필리버스터니까 제가 하던 말씀……

(○김준혁 의원 의석에서 — TV조선 출신하고 운동권 출신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형 의원님이 뭔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저를 TV조선 출신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제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는 TV조선 출신’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토론을, 그것은 하나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그것도 편견이에요. 똑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민주당 김준형 의원이…… 김준형 의원님 맞으시지요?

(○김준혁 의원 의석에서 — 김준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준혁 의원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7시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한테 TV조선 출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감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제가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자료 하나도 읽지 않고 돌아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준혁 의원님과 저하고 토론해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왕에 이런 법안을 내셨으니까…… 이 법안 통과되고 나면 토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토론 좀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토론이라도 했으니까 억울해도 수에 밀리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저희는 ‘너희는 뭐 했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장시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충정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적을 달리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 요즘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론회에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다수결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표 많이 얻은 쪽이 손 들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이기는 겁니다. 다수결이 원칙입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수결 좋지요. 다수결 하면 편하지요. 우리가 그런 거면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 다수가 가진 힘을 다 인정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로는 민주당이 지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의석수와 전체 표결에서 얻은 표 수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쟁점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국회법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또한 존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수당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는 다수결이 절대반지인 곳이 아니고 국회는 양보와 타협이 더 절대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치명적 약점의 근저에는 다수결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이런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그렇고 유럽의 정치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철학적 얘기까지 하려고 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진보정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약자 보호라는 구호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약자는 보호해야지요. 저희가 약합니다.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수당이 저희에게 던져 주는 빵 쪼가리나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얘기는, 저는 지금 국회 다수결에 대한 흠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대단히 듣기 불편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 시간을 길게 쓰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흠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흠결이 뭔가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요약정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사 출신이라」 하는 의원 있음)

이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숫자를 늘리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를테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21명이라는 것을 뽑았을 때 현실적으로 21명이라는 이사회가 그 사장을 뽑기 위한 매우 어려운 과정들,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우리 현대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2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이미 21명은 그냥 나눠 먹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 주는 제도지 그렇다고 해서, 21명이 사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그 사장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그래도 다양해지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다양해진다고요? 다양한데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수인 것보다는 다수가 훨씬 민주적……」 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오늘 한 열 번쯤 얘기한 것 같아서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21명 중에 5명은 국회에서 뽑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은,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헷갈립니다. 방송학회 이런 학회 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은 방송기자협회에서 뽑습니다. 또 2명은 PD연합회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은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뽑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맥락에 더 나쁜 조합이라는 이유를 제가 해외 사례와 모든 것을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5명을 뺀 나머지는 다 내부자들입니다, 방송 내부자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방송 내부자들이 방송사 사장을 뽑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민간기업일 때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공영방송의 주인은요 공영방송의 직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은 정말로 저는 많은 국민들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정치권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영방송의 주인을,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공영방송 직원들이 뽑는 게 너무 잘,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선출권을 어느 정도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공영방송 직원들이 국회 몫 5석을 빼놓고는 우리가 사장을 뽑겠다고 나서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M 방송, MBC는 간부급까지 전원, 거의 대부분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똑바로 제가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5%가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그 구조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래서 MBC가 MBC 직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MBC 직원들이 우리가 뽑고 싶은 사장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만들어진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본의 NHK는 12명의 보드가 있는데 그 12명의 보드는 지역 대표로 구성이 됩니다. NHK가 지역 대표로 구성된 보드에서 NHK 사장을 뽑는다는 것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서 1명, 오사카 지역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역 대표들이 뽑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굉장히 지방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NHK가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그 지역 대표성을 두는 것 그것은 일본 정치권의 판단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에 치중된 내부 이사회 보드는 내부인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BC 경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든지 사회적 감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내부인들로 구성된 보드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으면 그냥 그 내부인들이 내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갑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내부인들이 대부분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쪽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현장 전문가지요, 현장 전문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어떻다라는 것을 떠나서……

현장 전문가가 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는 현장 전문가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PD한테 사장 뽑으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소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야의 의원 수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권력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당 몫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 이 문제를 이제는 그만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원 0명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다녀오면서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통위원 0명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장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8시간이니까 한 번……

○의장 우원식 나 한 번도 안 갔는데……

○신동욱 의원 의장님도 다녀오십시오. 저 물을 마셨더니 자꾸……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한 얘기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한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 정치진영의 방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정말로 이런 법들은 처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영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기가 갈수록 더 어렵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가능하다면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공영방송을 앞으로 오래도록 보고 즐겨야 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논의가 이런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 좀 더 건전한 토론의 자리였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밀려온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유감이 꼭 민주당에 대한 유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의 끈을 놓아 버린다면 그 공영방송은

우리가 손에서 놓아 버린 풍선처럼 저 하늘로 올라가서 뻥 터질 수도 있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반대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신동욱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훈기)

(02시00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1명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 법을 알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을 해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3대에 걸쳐서 76년간 지역언론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심이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에 종사해 왔지만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기치를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최초로 들었고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익적 민영방송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파에 맞는 분은 요직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의실이나 외직으로 밀려나서 4년간을 버팁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정파성이 낳은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사장 추천은 21명의 추천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추천인이, 방송사 종사자들이 추천을 독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명 중에 방송종사자는 6명뿐입니다. 방송기자협회 2명, PD연합회 2명, 기술인연합회 2명.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3개 협회가 방송종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냐, 물론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운서협회도 있고 미술인협회도 있고 방송사에는 수없이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협회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사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협회가 기자, PD, 기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협회에서 2명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이 시청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은 시청자위원을 뽑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추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분야별 시청자위원을 뽑습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은 대표성을 갖고 국민 대표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있는 게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여기서 4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권에서 했던 추천 몫은 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체는 방송 관련 학회들입니다. 여기서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학자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종사자 대부분이 사장 뽑는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1명 중에 종사자는 6명일 뿐이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뽑을 수 있게, 아주 민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장을 뽑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00명의 국민추천단을 구성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장후보를 면접을 하고 의견을 주고 걸러 냅니다. 여기서 3명을 뽑아서, 이 3명을 아까 구성한 21명이 최종 뽑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역사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이 일방적이고 종사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 지금의 방송 3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3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두 곳이 있습니다, KBS·MBC.

KBS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온 후 KBS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고 어려운 사업장을 다 찾아갔습니다. KBS, MBC, TBS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BS, YTN 다 방문을 해서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KBS를 방문해서 KBS 노조와 기자협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의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들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내가 기자인데, 내가 PD인데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버팀목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권이 KBS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상파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3법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 극단에 있는 MBC,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정권에 장악당해 있는 사이에 MBC는 그나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직 해병 특검법, MBC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지켜 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과방위에서. 3일간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나 기쁘고 보람됩니다. 일하는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저도 언론인 출신이라 과방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상임위가 몇 번 안 열렸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과방위는 여섯 번, 일곱 번 열렸습니다. 그것도 전체회의를 하면 밤 11시, 12시가 다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이나 했습니다. 3일 청문회가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오늘도 질의를 못 하고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지만 못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질의할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간의 청문회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문회 첫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게 책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책 제목은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 1991년에 이진숙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 시절에 많은 기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그 책에는 경찰 기자 시절 이진숙 기자의 얘기, 걸프전 참전 종군기자의 얘기, 걸프전에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본 따뜻한 시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 출입기자 시절에 어떤 사건으로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진숙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돌봐 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 결국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소수국가에 대한 애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진숙 기자를 기자 지망생이나 또 많은 기자들이 존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3년이 지난 이진숙 기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 이 책을 이제 폐기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143건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했더니 A4 용지로 1장밖에 안 됐습니다. 답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은 자연인 시절의 얘기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가정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청문회 중에 많은 분들이 장관급,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이기에 5·18, 12·12, 5·16 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문회가 법카, 업무추진비 청문회 같다고.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게 업무추진비 자료였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체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청문회가 하루 늘어난 것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하루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공영방송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하면서 또 하나,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문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민주노총 청문회, MBC 청문회, 이런 식의 분위기로 자꾸 갔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언론노조 출신이지만 언론노조는 그렇게 힘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정파적이고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3일간의 청문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를 후보 위주로 하려고 하는 데 집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마치 MBC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 내야 할 방통위원장후보가 오히려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로서. 저는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답변할 때마다 MBC 뉴스, 리포트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오보, 이진숙 후보가 MBC 방송본부장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국장, 데스크는 사회부장보다 전국부장이 책임이 더 큰 라인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MBC에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안 냈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초를 백으로, 천으로 나눠도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에 다들 마음을 어느 정도 놓았을 겁니다.

저는 세월호 오보는 세계적인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이진숙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 한번 하셨냐’, ‘세월호 분향소에 한번 갔나’, 안 가셨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학생들의 영정을 보면 안 우는 사람이 없다. 겉으로는 안 울어도 속으로는 다 울고 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그렇게 죽어 갔는데, 그 오보로 죽어 간 애들도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사과 한번 안 하고 방송의 공정성이 어떻고 지금 이 뉴스가 어떻고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자격이 있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저는 평생 사죄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SNS에 올린 글 중에 ‘MBC를 응징해야 한다’, 자기가 30년 몸담았던 회사지요. ‘응징해야 한다. 그 방법은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1974년 10월 24일,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박정희 독재정권은 12월 달부터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 정점이 74년 12월 26일입니다. 하단 5단에 백지 광고가 나갔습니다. 광고 없이 백지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시민들이 동아일보에 조각 광고를 했습니다, 수만 개의 광고를 해서 동아일보를 살리겠다고.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가장 정론지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진숙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했던 광고탄압을 통해서 방송을 탄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송사가 iTV입니다. 그 시절에 iTV 대주주는 경총 회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민영방송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민영방송, 자본가가 있는 방송에서는 암만 발버둥쳐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나름 iTV 시절에 좋은 프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여러 사람을 모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적 민영방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유구조 개편. 소유구조를 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민영방송이지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소유구조를 가진 게 MBC입니다. MBC를 어느 분들은 상업방송으로 착각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적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그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지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공영방송입니다. 일각에서는 노영방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엄격히 소유구조상 공영방송이고, 그런 소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민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소유구조 개편,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전인데 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장 공모 추천제, 본부장 임명동의제 이런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개혁이었습니다. 이 3대의 기치를 내걸고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을 벌이면서 대주주와 충돌했습니다.

2004년 10월, 11월부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인 사측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4년 12월 1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집행부 회의를 끝내고 8시쯤 나가는데 봉고차가 저희 방송사로 들어왔습니다.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젊은이들이 내렸습니다. 물어봤더니 길을 잘못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봉고차가 한 대 더 들어와요. 또 들어오더니

봉고차가 한 100대가 들어왔어요. 용역 300명이 들어와서 방송사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사를 빼앗기고, 그해 12월에 재허가가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허가는 요식행위였습니다. 재허가 기간이 되면 서류 어느 정도 내면 재허가를 주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주주하고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재허가가 취소돼도 좋으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엄격한 재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재허가심사위원장이 지금 돌아가신 성유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유보 선생님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재허가가 취소되면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 조건부 재허가라도 받아야 한다'.

저는 저희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총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저런 대주주하고는 방송을 해 봐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재허가가 취소가 되고 집단 실업자가 돼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신껏 하십시오'.

결국 2004년 12월 말에 iTV 재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재허가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는 실질 재허가가 됐습니다. 요식행위이던 재허가에서 한 방송사를 취소시켰고 그해에 재허가에서 SBS는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SBS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SBS를 만들 때 조건이었던 사회 환원 약속을 안 지켰고, 그 재허가 과정에서 2004년에 SBS는 10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방송사 재허가가 실질적인 재허가가 된 것입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이 TV조선 재허가 얘기했는데, 그 재허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위원회가 엄청난 칼을 쥐게 됐습니다, 실질 재허가를 하면서.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 권한이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하겠지만 안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하여튼 저와 저희 조합원들의 희생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청난 권한을 쥐어 준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고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애국가가 끝나고 iTV는 정파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집단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퇴직금의 20%를 모아서 몇십억을 모았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조합원 중에 80명이 월 80만 원을 받으면서 상근을 했습니다. 새 방송 모델을 만드는 기획 일을 하고, 일부는 대외협력을 하고, 일부는 협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차장 일도 하고 주유 일도 하고 급식 배달도 하고……

특히 기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iTV가 MLB 야구중계를 했는데 캐스터들은 케이블TV에 가서 야구중계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월급을 받으면 매달 조합에 그 돈을 냈습니다, 얼마씩. 그렇게 2년 반 동안 고생을 해서 OBS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처럼.

그렇지만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소유구조 개편이 완

전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유구조가 공적이지 않으면 방송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중요하고, 그 공영방송이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해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기 전부터 방송 3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분이 또 공동발의를 해서 민주당 당론까지 오고,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어느 법안보다 우선 법안으로 생각해 주셔서 언론인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자·PD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민주노총이나, 특히 언론노조 얘기하지만 언론노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너네는 왜 이렇게 용기도 없이 조용히 있냐’ 이런 따가운 질타도 받고…… 양쪽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비빌 언덕, 버팀목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방송 3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MBC는 8월 12일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교체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교체되면 그 이사들이 사장을 뽑기 때문에 사장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BC를 지키는 것보다 공영방송,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서두른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MBC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이 암울할 것 같습니다.

디올백?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의 보도 못 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MBC가 좀 하고. MBC가 뉴스뿐이 아니고 스트레이트나 시사 프로에서도 좀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 채 해병 건도 그렇고 고비고비마다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아니 하루 전까지도 모든 언론들은 우리 경제가 기초가 탄탄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IMF가 왔고 국가부도 사태가 났고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졌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여파는 오래오래 갔습니다. 언론이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 하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MBC가 그 역할을,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MBC나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정권에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회복 못 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MBC를 지켜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 더 든든한 버팀목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방송 3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그런 틀이 마련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말고 방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옛날에 출입 기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한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조직이 붕괴 직전이고 일도 안 하고……

물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이, 뭐 2명이고 오늘은 0명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무처도 붕괴 직전입니다. 여러 번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일곱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2인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게 계속 지적되자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 마저 도망갔습니다. 저는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이상인 부위원장이나 2인 체제의 방통위원회는 자신들이 탄핵을 하면 사퇴를 하는 게 방통위가 돌아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는 오늘로서 깨졌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탄핵이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퇴하는 게 방통위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 도망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는 못 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민주당 과반 위원들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완전히 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 기능은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심위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습니다, 검열하는 기구로 전락해서. 그래서 지금 MBC는 법정 제재에 걸린 게 30건입니다, 올해. 그동안은 1년에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건일 때도 있고 뭐 두세 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늘렸습니다.

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그 시나리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 제재를 계속해서 벌점이 쌓이면 재허가를 취소시키고 재허가를 취소시킨 다음에 회사를 없앤 다음에 다시 민영화한다’ 이게 그 국정원의 플랜이에요, 2010년의. 지금 그 플랜을 14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에 제재를 저렇게 해서 벌점이 많이 쌓이게, 지금 MBC 사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BC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벌점받은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다 취하하면…… 올해 12월이 MBC 재허가입니다. 바로 MBC는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기준점이 650점입니다, 650점.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는 재허가를 받을 때 670점, 80점, 60점, 이 정도 수준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MBC를 재허가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고 그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그 이사들이, 사장 뽑는 건 쉽습니다, 하루면 뽑습니다. 뽑고 그 사장이 소송을 취하해 주고

벌점을 받고 연말 재허가에서 목줄을 쥐는 겁니다,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의 플랜대로 가면 민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켜 내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 정권을 홍보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MBC는 너무너무 싫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MBC라는 방송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장악하지 못하면 없애 버려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언뜻 듭니다, 하시는 걸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방통위원들을, 방통위원장을 무리한 분들을 내리꽂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방송 3법을 적용하면 이사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사의 구성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아까 신동욱 의원께서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하냐고 그랬는데 한국기자협회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기자협회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는 방송과 통신,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합뉴스나 뉴시스 그런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통신 그리고 방송사를 포괄하는데 저는 이쪽 방송사에서는 방송기자협회가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방송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KBS MBC SBS OBS, 전국의 모든 민영방송, 지역 MBC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D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대한민국의 모든 PD들이 속해 있는 PD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기술인연합회도 가장 큰 직능단체고 KBS 같은 데는 조직이 워낙 커서 KBS 한 5000명 되는데 기술인이 3000명 이상 됩니다. 기술인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1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원, 종사자는 6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 분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고민의 산물이지 이게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어디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MBC 사장을 뽑을 때 지금 사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다른 분이 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인 2표제로 그리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평가단을 구성했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분이 사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누가 사장이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어느 정권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고 깊이 있게 관여한 분들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가 이전에 MBC 사장 선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민주당에 유리한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먼저 이 법을 못 만든 것은 솔직히 반성하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반성을 보여 주려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KBS 관련이 있고 또 MBC 관련돼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인데 이것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인을 뽑고 그 3인 중에서 사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시청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공정한 방송법입니다.

물론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사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이 방송법에 편성규약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론의 특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에 MBC가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 반대 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아까 신동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사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가지고 파업하는 방송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2004년에 파업할 때 그런 근로조건 가지고 파업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파업했을 때 검사한테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로조건이라고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을 텐데 왜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고 그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하여간에 방송사는 파업을 공정방송이나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고, 2012년 파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법까지 가서 방송사의 공정방송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동안은 방송사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 파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파업을.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임금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는. 프로그램을 지켜 내야 되고 뉴스를 지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업을 했고 2012년 파업에 대해서, MBC 170일 파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사에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엊그제 청문회장에서도 계속 MBC의 그 파업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인 이진숙 후보조차도. 그래서 아니,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MBC 분들도 참고인으로 많이 출석을 하셨는데 분열적인 모습, MBC가 마치 갈등이 많은 조직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청문회 할 때. 본질보다 자꾸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짜니까.

(「대법원 판결이 몇 년도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2012년 파업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한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몇 년 안 되고 그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잘 해 줬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특성을 거의 다

인정을 해 줬어요. 언론노동자들이 왜 이런 파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공정방송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언론노조나 민주노총과의 어떤 프레임을 짜서 갈등구조를 만드는데 이진숙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전MBC 사장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94%였고 옹호하는 사람이 6%였대요. 그런데도 일대일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MBC도 이쪽 노조원들이 89%고 저쪽이 10%인데 일대일처럼 얘기를 하시고 마치 갈등구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소수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의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그것을 저는 그렇게 매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3법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가장 핵심은 소유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방송사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방송 관련돼서는 기존의 방송법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방송사에는 사실 편성규약을 제가 좀 더 강화해서는 안 넣었지만 다 편성규약도 있고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장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 운영규정도 있고 그것을 이런 일방적인 정권에서는 사측에서 안 지켜서 그렇지만 그것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추가로 편성규약 같은 것…… 제가 KBS 갔을 때 KBS 분들이 말하는 게 ‘편성규약이라도 강제해 줬으면 좋겠다. 사측에서 모든 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편성규약이라도 강제해서 종사자들,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버팀목 속에서 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방송법에는 그런 편성규약을 강제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줄여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의 NHK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해서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 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규제기관이 지정한 전문가 5명, 직원 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 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우리는 증원을 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해서 추천 권한 단계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성규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편성규약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 편성규약 의무를 추가, 그러니까 편성규약이 만들기만 하지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고 이번 방송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편성규약을 강제하는 건,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편성규약의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간단하고 취지가 그런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탄압 사례 이런 걸 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구백……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이 잘 안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웃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하시지요.

○이훈기 의원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정권 시절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대표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의 기자, PD, 동아방송의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언론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이때 113명의 언론인들이 강제해직됐고 지금도 동아투위, 돌아가신 존경하는 송건호 선생님이나 또 성유보 선생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이부영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동아투위의 주역입니다.

이런 자유언론실천에 박정희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탄압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동아일보에 광고를 안 주고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각서를 받고, 그래서 12월 26일에는 백지광고, 광고가 없는 백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뜻있는 시민들이 동아일보에 힘을 모아 줘서 아주 조그마한 1단의 조각 광고들이 동아일보에 수없이 수없이 실립니다, 조각 광고가. 그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가 자유언론실천 주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 우리 언론은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땀으로 민주화가 되고 성장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이런 50년의 피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장악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전락하고 이제 마지막 공영방송 MBC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지켜서 다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언론을 지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정신을 이것을 통해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50년 전에,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는 50년 되는 해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장악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전략 및 추진방향' 이런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 따라서 MBC를 단계별로 장악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이것은 일부 시행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성공은 못 했지만 일부가 시행이 되다가 여러 상황상 중단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이 국정원의 문건에 따라 신 MBC 민영화, MBC 장악 시나리오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송통신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이 두 법이 합해서 방송 4법인데 이것을 함께 통과를 시켜야지 언론, 특히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방위에서는 전체회의를 하면서 지금은 나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2인 체제에서 YTN의 매각을 결정한 YTN 민영화는 무효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5인 합의체에서 2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의 지금 대주주가 된 유진의 회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그래 가지고 제척대상으로 그날 회의의 의결에 참여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남으면 회의를 할 수 없고 의결을 할 수 없는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같이 의사결정, 2명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YTN 매각 의사결정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YTN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정부가 검열과 언론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몽드지는 작년 12월 4일 날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민 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 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가 이루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장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인터내셔널판에 1면 '한국 정부가 언론검열에 대한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경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 국영매체인 미국의소리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그냥 놓겠다. 사장 누구도 마음대로 지명 안 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한다. 언론 이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게 우선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요. 전혀 방송에 문외한인 분이 KBS 사장으로 올라와서 KBS가 많은 변화가 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구성원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고 모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졌고 뉴스 시청률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으로 변경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겨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발언, 다아시는 거고. 그리고 2022년 9월 더탐사 보도에 대한 고소 그리고 2023년 2월 천공의 관저 개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그리고 2023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담당 기자의 자택과 국회 압수수색 그리고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 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가해자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것에 대해 YTN이 기술적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며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YTN이 인사청문회 기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YTN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탄압을 받았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제로 대주주 변경을 당했습니다. 이게 YTN 민영화지요.

그리고 2023년 9월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의혹을 인용보도한 TBS,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직전 KBS는 11월 10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광장 이윤정·김태욱 앵커 그리고 뉴스 12, 뉴스라인 W, 남북의 창, KBS 2TV 뉴스타임, 뉴스 6 진행자들도 대거 하차하고 교체시켰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던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인 이재석 앵커를 하차시키고 기존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에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석 당시 뉴스 9 앵커가 단식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인터뷰를 한 것 등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KBS 뉴스 9 메인 뉴스를 약 4년 동안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가 갑작스럽게 전화해 하차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날 KBS 뉴스 9 새 앵커가 된 박장범 앵커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예정에도 없던 사과 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박민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KBS가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를 12월 1일 자로 경인취재센터 소속으로 발령냈습니다.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 5조 원 ISD의 실체 연속 보도로 완성도 높은 탐사 보도문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제18회 오늘의 여기자상을 받은 기자였습니다.

같은 날 KBS 뉴스 9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당시 앵커로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연욱 기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이정현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을 때 KBS의 침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자협회보에 게재했다가 이틀 만에 제주총국으로 부당 전보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인 이경호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2019년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엄경철 기자와 역시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박민 사장 취임 직전까지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성재호 기자, 전임 사장 시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응했던 오성일 전 수신료 국장이 수원인재개발원으로 발령났습니다.

2023년 11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진행자는 11월 13일 방송 당일 아침 방송국으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KBS 최강시사, 최경영 기자에 이어 후임 진행자인 김기화 기자가 하차하고 특집 생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라디오 통합 유튜브 수입 1위를 기록했던 평일 낮 4시 홍사훈의 경제쇼, 홍사훈 기자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전 며칠부터 취임식 날에 이루어진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결과는 주요 보직 장악을 넘어 뉴스의 변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KBS 9시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을 찬양하는 기사 분량이 늘어나고 마치 1980년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집권 당시의 땡전뉴스가 2023년부터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무리수 중 하나인 YTN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백 YTN 새 사장은 취임 이틀 만인 2024년 4월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인 체제 방통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방통위조차 낙찰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 유관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이해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4년 11월 29일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류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강행한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기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미달 기업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언론사 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토대로 언론사 탄압, 방송장악을 실행했습니다. 정부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편성 등 모든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대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를 MBC 노영방송 잔재를 청산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세부적인 수행 계획을 통해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드는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등장하는 정권과 국정원의 전략은 실제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2010년 3월 초부터 월말까지는 MBC 내부의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영방송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보직자를 좌파로 규정, 방송 출연자, 연예인 등 역시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작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었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2010년 연말까지의 수행 계획으로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계획, 보수 매체를 통한 노조 밥그릇 지키기 비판 여론 조성 등 법적 조치와 여론 형성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좌편향 간부진과 기자, PD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든다는 국정원 전략에 따라 당시 MBC는 망가졌습니다.

3단계는 2011년 이후 전략적으로 최종적으로 MBC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론은 자유와 자존심을 잃어 갔고 수많은 기자가 해직됐습니다. 해직당한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언론탄압 상황에 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제 기자 해직, 이상호 기자 해직, 박성호 기자 해직, 최승호 PD 해직, 이근행 PD 해직.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와 아나운서에게는 아이스링크장 관리 업무를 맡기고 복합기 1대 있는 사무실에 유배를 보내는 참담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MBC 조합원 770명에게 최하위 업적 평가를 준 뒤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에게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게 했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시켜 효 사상 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문건에서 목표한 시간보다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이 미디어 환경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사에서 교양제작국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공영방송을 만들 수 없는 공영방송 방송사를 식물화시킨 것입니다.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의 마지막 단계,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2009년 8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꾸려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우룡 사장,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MBC 민영화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 문건에 쓰인 대로 김재철 사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계속해서 MBC 민영화를 언급하고 2012년 10월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매각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MBC 민영화 추진에 쐐기를 박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경영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보도, 방송,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조직도 망가지며 민영화의 최종 단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의 전략과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방송장악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시키고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사업자를 인수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본사에 대한 법정제재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지금까지

벌써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정부, 친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줬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시나리오대로 이미 MBC 민영화를 위한 국정원 작전의 1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심의 칼잡이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퇴임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언제든 심의하여 법정제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심의, 표적심의로 MBC에 법정제재가 쌓이면 결국 이것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 벌점으로 축적됩니다. 주의에 벌점 1점, 경고에 벌점 2점, 관계자 징계에 벌점 4점,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제재에 벌점 10점, 5000만 원 초과 과징금 제재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재허가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4년 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34점만 빠져도 MBC는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법정제재 몇 건으로 MBC는 재허가 거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존폐를 가르는 일이기에 무분별한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위원회의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알려진 가처분 15건의 소송에서 현재 모든 방송사의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낙하산 경영진이 내려온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세팅해 놓은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의 가처분 소송 취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KBS의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박민 사장으로 바뀐 뒤 그러했습니다. KBS의 사장이 바뀌자마자 특정 보도를 열거하며 경영진이 사죄하고 갑자기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는 경영진이 무분별한 방심위 법정제재에 가처분 소송을 취하면 결국 14년 전 국정원의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부당한 법정제재를 고스란히 벌점으로 받은 MBC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미달로 방통위가 재허가 거부할 것입니다. MBC가 폐업하고 자산매각 후 신규사업자 인수 추진의 국정원 민영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앞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표적심사를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이사회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심위 왜곡 보도 제재 축소,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사업자 인수 추진, 이를 통한 민영화, 이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 2010년 국정원 문건에서부터 죽지 않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을 끊어야 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국민이 14년 전 국정원 문건의 유령을 만나야 합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 4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방송 4법 추진이 공영방송을 방송답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3명의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기술자 역할, YTN 민영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쫓아내고 온갖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도망가듯 사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런동관'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송에는 전혀 문외한인 김홍일, 대통령의 검찰 선배, 평생 방송통신 분야에는 발길도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탄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 기습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비밀 작전, 기습 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처리하는 방통위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국회가 탄핵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도망갔습니다. 사표 내고 대통령은 바로 재가하고 '런홍일'입니다. 혼자 남은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는 1인 체제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강행—탄핵안 발의—줄행랑, 반복되는 코미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고 정권의 나팔수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방통위를 장악하든 안 하든,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가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권이 아닌 국민이 하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조직이 창설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인 체제의 문제점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다 알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2인 체제 아래서 기피 신청을 무력화하는 방통위의 셀프 각하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심의 의결로 YTN을 불법적으로 민영화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피 신청에 대한 연속적인 셀프 각하가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YTN 민영화 승인을 심의 의결하려는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 최대주주가 되려는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 특수관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중요한 공영방송 YTN 민영화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YTN노조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동관은 YTN 뉴스 보도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7일 YTN 매각을 승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 YTN 매각전에 대한 보류 의결이 있었고 그 직전에 2건의 위헌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조가 제기한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 하나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이상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방통위법 제14조 3항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당한 위원은 자신은 제척된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동관 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이동관 위원장도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제척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이동관과 이상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제척되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각하시켰습니다.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기피 신청권 남용이 아니라 방통위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렇게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해 버리고 이상인은 그 후 김홍일 후임 위원장과 같이 역시 둘이서 밀실에서 처리하듯 YTN을 민영화시켜 버렸습니다.

방통위법 제14조는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제척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 직권이든 당사자 신청이든 제척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방통위법 위반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매우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고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YTN 매각 승인 의결 역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성립 불가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적위원이 2명인데 기피 신청은 재적위원 2명 중 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1명은 반드시 당사자로 제척됩니다. 그러면 1명만 남게 되고 이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방통위는 회의체고 합의제기 때문에 1인 의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를 알면서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를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상 하자도 큽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동관 위원장은 YTN 노조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매각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셀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그리고 5월 이들이 YTN 민영화 승인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5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기들이 직접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기피 신청 각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YTN 매각 승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023년 11월 29일에 의결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의 각하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 같은 불법적인 각하 의결에 근거하여 기피 신청을 회피한 이상인 위원이 참여한 YTN 매각에 대한 보류 의결 그리고 올해 2월 승인 의결 모두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벌어진 YTN 민영화 의결은 불법적인 언론 파괴이며 방통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 임원 선임도 기피 신청 셀프 각하, 방통위의 기습적인 MBC 장악 시도와 MBC의 이상인 기피 신청, 6월 김홍일·이상인 2인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비밀작전 하듯이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3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그 핵심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기어코 장악해서 MBC를 정권에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MBC는 방통위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하기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전의 방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려 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탈 털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런 자료를 방통위에 편파적으로 보내 줘서 강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라는 게 MBC가 임원 성과급 주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문서를 제대로 관리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권력

기관이 동원돼서 한 개인을 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바로 집행정지 인용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임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이런 억지 사유로 해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 의결인데 이게 방통위법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권태선 이사장이 다 이기고 다시 방문진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사이에 윤석열 정권은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해 놨는데 짐 싸서 방 빼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억지 해임을 주도한 게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MBC를 정권 편향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MBC를 노골적으로 공격해 온 이상인, 방문진 선임에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그 기피 신청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MBC의 기피 신청을 또다시 셀프 각하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MBC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냐? 이상인 부위원장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또다시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참여해 스스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 불법적, 무도한 태도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돼서 방통위를 무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해 의결한 지금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황당한 셀프 각하의 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료 요구하고 비공개 회의 속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보니 그 사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임위 질의에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기피 신청권 남용은 셀프 각하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받아 보니 판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말한 판례는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 사건으로 징계 피혐의자가 여러 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공통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남발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기피 신청 남용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기피 신청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혀 엉뚱한 판례를 끌고 와서 셀프 각하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비공개됐던 속기록을 보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 남용이라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기피 신청 남용으로 셀프 각하할 게 아니라 5인 체제 방통위가 될 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YTN 민영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지적해 보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방송 자유를 위해 핵심적인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최악의 위원장인데 이번에 연임을 시켰습니다. 연임 과정의 황당함은 추후 말씀드리고 우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전 임기 동안 얼마나 황당하게 방심위를 망가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후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을 전후로 해서 분석해 보니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에 법정제재 전체 건수는 14건, 취임 후에는 6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중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한 것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사실이 틀렸거나 광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류희림 취임 후에는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줄징계가 내려지고, 67건 중 47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징계한 것입니다. 방송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에 류희림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한 것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항과 객관성 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이용해서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류 위원장 취임하기 전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한 경우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에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때린 경우가 무려 42건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표적심의, 과잉 규제를 한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유독 MBC를 겨냥해 심의와 제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체 방송 중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제재 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에 1년 동안 보도·교양 부문에서 방심위가 총 52건을 법정제재했고 그 중 8건이 MBC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MBC 단독 보도가 있고 난 후 2024년이 되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올해는 5개월 만에 법정제재 2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3건이 MBC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법정제재 중 MBC 비중이 15%에서 45%로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MBC를 표적심의하고 무더기 징계, 법정제재를 때리는 겁니까?

MBC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 제재가 얼마나 무리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제동 걸리는 방심위의 무리한 법정제재.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얼마나 무리한지 MBC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재 13건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총 13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2건은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정지됐고 11건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13건이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가 문제가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방심위가 무리하게 MBC에 대한 표적심의, 과잉 제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한 표적심의와 무더기 법정제재는 방심위와 더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커집니다. MBC에 대한 법정제재는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모두 합하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2024년 현재까지 30건으로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본 의원이 MBC에 대한 표적심의를 지적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 취임 후 오히려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발언 근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방심위조차 어떤 자료에 근거해 발언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위원이 정확한 수치를 재차 확인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황당한 처사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심의와 징계를 해 놓고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작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류희림 위원장 자신의 동생, 가족, 지인들이 방심위에 대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류희림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40여 명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160건이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됐습니다. 하나같이 다 같은 내용,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한 것이라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피하지 않고 직접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자신의 가족, 지인, 즉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이면 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심의 의결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류희림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게시판에 직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기 직장의 상사에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밖에 알린 것도 아니고 내부 게시판에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속실장이 찾아와서 징계 운운하며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속실장은 징계권자가 아닙니다. 인사권자도 아닙니다. 부속실은 위원장 직속 조직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류희림 위원장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 김유진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공식 석상에서 결국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회피하지 않냐는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는 답변 안 하고 그 직원이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회의 속기록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때까지도 몰랐다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때 김유진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게 그 글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제기인 줄 알았다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설명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는 생떼를 쓸까요? 그건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을 중징계해서 입을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인데 회피하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징계를 주도한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열린 여덟 차례의 회의 중에서 일곱 차례의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직접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의 중징계를 주도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체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방심위는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때리는 것일까요? 이것도 결국 방송 4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급 심의는 정확히 말하면 신속 심의인데 긴급히 심의 의결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 권한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려 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언론사의 입틀막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류희림이 방심위원장에 취임한 2023년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로 진행한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그리고 31건 중 75%인 23건에 이르는 대부분의 신속 심의가 MBC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MBC는 신속 심의 안건 23건 중 10건에서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MBC에 대한 표적 심의의 증거입니다.

지금 MBC는 엄청난 징계 폭탄을 맞아서 벌점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MBC에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벌점 효력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점이 적용되면 연말 재허가·재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멀쩡한 방송사, 지금 시청률, 신뢰도가 제일 잘나가는 방송사, 지상파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방송사가 MBC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막무가내 민원 사주, 표적 심의, 셀프 징계 의결로 망해 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께 약속한 민주당의 언론 분야 총선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등을 위해 언론인과 언론단체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며 언론자유지수를 2020년 47위에서 1년 만에 15단계 급락한 6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세부 내용은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불법 개입 시 엄중 처벌, 이사·임원·집행기관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정치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중 처벌입니다.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 법제화, 편성위원회의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기능 등의 명문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MBC 재허가를 볼모로 잡기 위해 긴급 심의, 제재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MBC 장악 시나리오입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심위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법제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의 정치활동 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등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심의 신청 사유의 명확화 및 피해자 특정 기능 시 심의 개시로 개선, 자의적 심의 차단 위해 주요 심의 규정은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직접 규정, 법률상 제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내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방심위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 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 대상의 법정 명문화 추진,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부문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심의 신청 허용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되는 방송 4법에 민주당이 언론 분야 총선 공약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지난 3월 27일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언론계 출신이자 민주당 언론 분야 영입 인재로 이 과제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제안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은 혼돈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성장률, 정책, 청년실업, 양극화, 부동산 위기, 저출산 등 출구 없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남북은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무력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급속한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의 양안 갈등 등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후보들의 삶과 철학, 안목과 능력을 검증하고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야의 대립이나 각 정당 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중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품질이 이렇게 저하된 것은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과도한 정파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언론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론사, 언론인들의 각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올바른 정책적 대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언론 미디어의 위기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고 힘을 모으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에 재갈을 물리면서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미디어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언론 미디어의 무너진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10대 과제에 동의하는 제 정당은 총선이 끝나고 즉시 실행해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동안 꾸준히 입법 과정을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방송규제기구의 개혁입니다. 그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과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등의 추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정치 심의와 보복 심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대신 언론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언론 자율규제기구가 공정성 심의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그 방안으로 방송 3법 재추진,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보도 전문채널 YTN을 공적 지배구조 언론사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제작·편성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면동의제 추진 등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 살리기입니다.

지역방송지원 특별법 지원을 기금 조성 법률에 신설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지역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피해 구제입니다.

학계, 언론 현업 단체, 언론 시민단체들과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여섯째,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입니다.

공익 추구를 전제로 한 언론 지원제도의 확대, 공정한 광고시장 경쟁,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한 저널리즘 강화 추진입니다.

일곱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입니다.

포털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포털의 공적 책임 강화 등입니다.

여덟째, 글로벌OTT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성장 지원입니다.

글로벌 OTT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홉째, 미디어개혁위원회 국회 설치입니다.

위원회에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부여하며 나아가 미디어법 제정 논의 등의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 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입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등의 추진입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 내고 언론자유를 지켜 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11명의 KBS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K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KBS 사장 추천 방식 도입입니다.

K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K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KBS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K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KBS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9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MBC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MBC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MBC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MBC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MBC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MBC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MBC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BC 사장의 3년 임기 보장을 통해 MBC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다음은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BS 사장 임명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을 E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EBS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EBS 이사 수의 확대입니다.

EBS의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는 다른 공영방송과 같이 국회 교섭단체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E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E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E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던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EBS 사장 임기 보장입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 임기를 보장하여 EBS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EBS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현황.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대표는 전국 8개 권역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규제기관이 지명한 전문가 5명, 직원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추천 권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방송편성규약.

덧붙여 저는 방송법에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상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고 있는 방송 4법을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의결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도 어제 사임했습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영방송의 의미와 외국 공영방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장악당하거나 탄압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공성을 지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 및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방송과는 구분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독립성, 다양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중립성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공영방송 초기에는 주파수라는 제한적인 방송의 공공재 사용, 미디어의 상업주의 견제,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이라는 역할이 컸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공공가치론을 중시하여 공적 효율, 글로벌 시민성, 창의성, 도덕성, 혁신성, 다양성,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방송학회 주관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공동심포지엄 발제문을 보면 지상파, 중앙 및 지역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45개 언론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영방송 관련 키워드로 수신료, 청와대,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여당과 야당, 방송법, 민주주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중립성, 국민이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이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가 쇠퇴하고 OTT 서비스 등 경쟁 플랫폼이 확산하며 방송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디지털 수익 비중이 증가하며, 특히 젊은 층은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층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여 공적 담론을 생성·유통·조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여전하며, 특히 넘쳐나는 미디어와 정보 가운데에서 공정 보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시청률 경쟁에 치우친 상업 방송이 하지 못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철학 부재와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방송 관련 법률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공영방송과 공익방송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주요 재원이 수신료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공공의 이익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방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를 갖춘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재원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책임을 자임한 방송사업자인지, 역사적 관행에 따라 특정 사업자를 그냥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

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의 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조차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9조에서는 공영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EBS의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각각 KBS·EBS 및 MBC에 대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KBS·EBS 및 MBC에 대해 지분 소유 제한, 상호 겸영 제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KBS, MBC, EBS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공영방송.

독일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제2장에서 공영방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공영방송의 의무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함으로써 자유로운 의견형성 과정의 매개체 및 요소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9개의 지역 공영방송과 제1공영방송 그리고 제2공영방송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방송위원회·운영위원회 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공영방송법이나 주간방송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총 6개의 공공서비스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BBC를 포함 3개 방송은 공적 소유의 공영방송 형태이며, 3개 방송은 민간 소유의 민영방송 형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 목표는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것이며 재원의 75.4%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송사업자들을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FT는 자본금 및 지분

전체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 내의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역할 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환에 따라 방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도 국가의 문화와 시민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와 제도 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미디어 간 융복합되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텔레비전과 신문으로만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과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다양한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뉴스클립을 소비하면 할수록 알고리즘으로 인해 소비되는 뉴스가 극단화되고 확증편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우리 사회를 반영하듯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다루며 책임질 수 있는 보도를 해내는 사회적 공기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 방송·신문·언론이라는 영역에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독립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중립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 세력들은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과거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은 법과 제도 그리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던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2002년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전년도 각국의 언론자유기록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70위에서 40위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임에도 여전히 언론자유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역대 최고인 31위까지 끌어올렸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6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당시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평가 대상 175개국 가운데 지난해 47위였던 한국이 기자와 블로거를 체포하고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해 22단계 떨어진 69위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2008년 YTN 기자 대량 해고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보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고 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에 나섰던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통제는 외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고소했지만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0위였던 순위를 40위 초반까지 끌어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62위로 추락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60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고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대폭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MBC 첫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9월 29일 MBC 사장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11월 9일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조치가 헌법 수호의 일환이라고 강변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시청 거부, 광고 끊기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공영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왜 이리 소위 보수를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특히 방송을 장악해서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정권과 권력층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고 공영방송이 정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방송 4법은 한동안 2인 체제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 4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방

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6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11명의 KBS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K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K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KBS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K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KBS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K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KBS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9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MBC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MBC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MBC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MBC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MBC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MBC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MBC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BC 사장의 3년 임기 보장을 통해 MBC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BS 사장 임명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을 E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EBS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EBS 이사 수의 확대입니다.

EBS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EBS 이사는 다른 공영방송과 같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독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E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E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E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EBS 사장 임기 보장입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 임기를 보장하여 EBS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EBS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 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 규제기관이 지명한 전문가 5명, 직원 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독일 공영방송인 ZDF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 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추천권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저는 방송의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두 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회의 부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 4법을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는다고 위증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의결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의 하이라이트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판명된 2010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바탕으로 한 MBC 장악 시도입니다.

'MBC 정상화 전략'이라고 쓰고 'MBC 장악 문건'이라고 읽는 이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소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그동안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표적심의를 일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방송장악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외신이 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정부가 검열과 언론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국민과 언론인이 철저히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먼저 작년 12월 4일 프랑스 르몽드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 검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박민 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 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가 이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인터내셔널판 1면에 '한국 정부가 언론검열에 대한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경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그냥 놓겠다'면서 '사장 누구 마음대로 지명 안 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시킨다든가 그런 것 안 한다. 언론 이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기만한 건지 아니면 실제 생각이 달라졌는지 대통령에 취임하자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겨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 비속어 발언을 자막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 TF, 시의원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고발하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9월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추적하다가 한동훈장관으로부터 스토킹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2023년 2월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을 주장한 부승찬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2023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담당 기자의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습니다.

2023년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것에 대해 YTN이 기술적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며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YTN이 인사청문회 기간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YTN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탄압을 받았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제로 대주주 변경을 당했습니다.

2023년 9월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내용을 인용 보도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습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직전 KBS는 11월 10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광장 이윤정·김태욱 앵커 그리고 뉴스12, 뉴스라인 W, 남북의 창, KBS 2TV 뉴스타임·뉴스 6 진행자들도 대거 하차시키고 교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던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인 이재석 앵커를 하차시키고 기존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에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석 당시 뉴스 9 앵커가 단식 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인 유채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회장 인터뷰를 한 것 등이 불공정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KBS 9 메인 뉴스를 약 4년 동안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 하차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날 KBS 9시 뉴스의 새 앵커가 된 박장범 앵커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예정에도 없던 사과 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박민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KBS가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를 12월 1일 자로 경인취재센터 소속으로 발령 냈습니다.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 5조 원 ISD의 실체 연속 보도로 완성도 높은 탐사보도물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제18회 오늘의 여기자상을 받은 기자였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뉴스 9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당시 앵커로서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 냈습니다. 정연욱 기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이정현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을 때 KBS의 침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자협회보에 게재했다가 이틀 만에 제주총국으로 부당 전보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인 이경호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2019년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엄경철 기자와 역시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박민 사장 취임 직전까지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성재호 기자, 전임 사장 시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응했던 오성일 전 수신료국장이 수원 인재개발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2023년 11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 진행자에게 11월 13일 방송 당일 아침 방송국으로 오지 말라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KBS 최강시사는 최경영 기자에 이어 후임 진행자인 김기화 기자가 하차하고 특집 생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라디오 통합 유튜브 수입 1위를 기록했던 평일 낮 4시 홍사훈의 경제쇼 홍사훈 기자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습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전 며칠부터 취임식 날에 이루어진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결과는 주요 보직 장악을 넘어 뉴스의 변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KBS 9시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기사 분량이 늘어나고 1980년대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집권 당시의 땡전뉴스가 2023년부터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무리수 중 하나인 YTN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백 YTN 사장은 취임 이틀 만인 2024년 4월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인 체제 방통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재추진했습니다.

방통위조차 낙찰자인 유진ENT가 방송 유관 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이해도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11월 29일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가 다시금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했습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언론사 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토대로 언론사 탄압, 방송장악을 실행했습니다. 정부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편성 등 모든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서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대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통해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드는 세부계획에 대해 추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등장하는 정권과 국정원의 전략은 실제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2010년 3월 초부터 월말까지는 MBC 내부의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영방송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보직자를 좌파로 규정, 방송 출연자, 연예인 등 역시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작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편파 방송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2010년 연말까지의 수행 계획으로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 보수 매체를 통한 노조 밥그릇 지키기 비판 여론 조성 등 법적 조치와 여론 형성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좌 편향 간부진과 기자, PD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든다는 국정원 전략에 따라 당시 MBC는 망가졌습니다.

3단계는 2011년 이후 전략적으로, 최종적으로 MBC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언론은 자유와 자존심을 잃어 갔고 수많은 기자가 해직됐습니다. 해직당한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언론탄압 상황에 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제 기자 해직, 이상호 기자 해직, 박성호 기자 해직, 최승호 PD 해직, 이근행 PD 해직,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던 PD와 아나운서에게는 아이스링크장 관리 업무를 맡기고 복합기 한 대 있는 사무실에 유배를 보내는 참담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MBC 조합원 770명에게 최하위 업적 평가를 준 뒤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에게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게 했고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시켜 효 사상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문건에서 목표한 시간보다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이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사에서 교양제작국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만들 수 없는 공영방송, 방송사를 식물화시킨 겁니다.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의 마지막 단계, 민영화가 추진됐습니다.

2009년 8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꾸려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우룡 이사장,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MBC 민영화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 문건에 쓰인 대로 김재철 사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계속해 MBC 민영화를 언급하고 2012년 10월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매각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MBC 민영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경영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보도·방송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조직도 망가지며 민영화의 최종 단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의 전략과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방송장악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안,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 2안, 자산 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 유상증자의 방법 그리고 방통심의위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추진. 즉 방심위 왜곡 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류희림 방송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본사에 대한 법정 제재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이었던 것이 2024년, 아직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 정부, 친 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주었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시나리오대로 이미 MBC 민영화를 위한 국정원 작전의 1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심의 칼잡이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퇴임 하루 만에 기습작전처럼 류희림을 연임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언제든 심의하여 법정제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심의, 표적 심의로 MBC의 법정제재가 쌓이면 결국 이것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 벌점으로 축적됩니다. 주의에 벌점 1점, 경고에 벌점 2점, 관계자 징계에 벌점 4점,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에 벌점 10점, 5000만 원 초과 과징금 제재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재허가 기준점수가 650점인데, 4년 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34점만 빠져도 MBC는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법정제재 몇 건으로도 MBC는 재허가 거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존폐를 가르는 일이기에 무분별한 방심위와 선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알려진 가처분 15건의 소송에서 현재 모든 방송사의 법정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낙하산 경영진이 내려오면 류희림 위원장이 세팅해 놓은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의 가처분소송 취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KBS의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박민 사장으로 바뀐 뒤 그랬습니다. KBS의 사장이 바뀌자마자 특정 보도를 열거하며 경영진이 사죄하고 갑자기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는 경영진이 무분별한 방심위 법정제재에 가처분소송을 취하하면 결국 14년 전 국정원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부당한 법정제재를 고스란히 벌점으로 받는 MBC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달로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할 것입니다. MBC가 폐업하고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의 국정원 민영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앞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표적 심사를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이사회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왜곡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이 같은 민영화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국정원 문건에서부터 죽지 않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 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다시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끊어야 합니다. 2024년, 왜 우리 국민이 14년 전 국정원 문건의 유령을 만나야 합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 4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방송 4법 추진이 공영방송을 방송답게, 우리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이훈기 의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저는 3일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원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 하는 청문회이지만 무려 3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이틀 하려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협조 미비로 하루가 늘어났고 이진숙 후보자는 모든 답변을 거의 회피했습니다. 모든 자료도 안 냈고 유일하게 낸 자료가 업무추진비 자료였는데, 그래서 청문회가 카드 청문회처럼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세계적인 오보의 책임자가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 많은 방송사의 독립성을 지켜 주고 방송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그런 세계적인 오보를 내고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소 방문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세월호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 사는 게 맞고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진숙 후보가 MBC는 응징의 대상이고 응징을 광고를 주지 않아서 응징해야 된다고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동아일보를 광고로 탄압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때 박정희 독재정권은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고 탄압을 했고 1974년 12월 26일 신문에는 광고가 없는 백지 신문이 나갔습니다. 이후에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조각 광고를 몰아줬고 국민의 힘으로 동아투위 분들이 우리나라 언론독립을 위해 상징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딱 동아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50년간 언론인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던 우리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다시 5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두 곳 있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건강성은 담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고 방송 3법, 방통위법을 비롯한 방송 4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훈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정연욱)

(06시31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정연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훈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저희로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의 냉철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아주 자기 편만 보게 됩니다. 사람일진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한 인식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고 정치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송법을 보는 입장은, 방송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입니다. 신문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방송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 이념, 색깔 좀 강합니다. 다만 방송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상당히 공정 그다음에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심의라는 규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규제 기관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장악 4법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할 수 있었던 세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3법을 언제든 통과시키듯이 이 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생각하지 않아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 법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렇게 거의 초스피드입니다. 뭐 제대로 된 심의…… 스스로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8월 12일 날 MBC 이사진의 임기가 끝납니다. 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한다 합니다.

자,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지난 정부에서 과연 KBS·MBC 이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임기 채웠습니까? 중간에 다 교체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차마, 많은 자료도 있고 동영상까지 준비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을 바꿨겠습니까? 이사를 중간에 축출했습니다. 임기를 안 지켰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은,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8월 12일 임기 전에 이 얘기는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에이, 거짓말. 뭘 안 건드려, 다 건드렸구먼」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은 그냥 편하게 하시고……

(「뭘 안 건드려, 건드렸지」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장내 소란)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방통위법에 나오는 방통위원 구조의 2인 체제를 5인 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2인 체제가 원천적 위법이라고 합니다.

2인 체제, 물론 좋지는 않지요. 그런데 2인 체제가 근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언급이 빠졌습니다.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랍니다. 2인 체제를 불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인 체제가 시작된 것은 기본적으로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 합니다.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왜 인정 못 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다 확인된 겁니다.

그런 것은 따로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저는 제 얘기를 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 버리면 모든 사람이 헷갈립니다.

2인 체제 누가 좋아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부분에서 얘기된 것이고.

또 탄핵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남발된 사례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송 관련해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으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런 것을 예감한듯이 방통위원회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대안으로 묶여서 법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도 이렇게 탄핵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직무

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굳이 탄핵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을 왜 발의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탄핵 사유를 얘기할 때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 있어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시절 일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는 것은 의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탄핵을 내는 부분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안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내는 모든 법안 처리나 법사위나 과방위나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걸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정치적 효능감이 극대화될 때 그것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은 핵심 지지층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겠지요. 과연 이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서 상당한 헌법적 가치와 법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방송의 근간이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MBC,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영방송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노영방송이 아니니까 민주노총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지난해 9월이라고 여기서 MBC 기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록에 나오는 겁니다. 2003년 9월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 노조 결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언론노조와 회사가—이때는 MBC입니다—전체 보직자 가운데 언론노조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했습니다. 보직팀장, 부국장 113명 가운데 97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고요. 국장 23명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과 국장 23명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면 보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 133명의 보직자 가운데 120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2%가 되는 보직자가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영방송이 아니고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는 보직 부장이—MBC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은 언론노조가 아니고—MBC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한두 달 뒤에 보직 해임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제3노조지요, 언론노조가 아닌. 들어간다는 것에서 사장실에서 실망했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MBC를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집단 간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방송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한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부분은 정권을 이렇게 집권하는 세력들이 방송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MBC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2008년도 광우병 사태는 그때 당시 PD수첩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우병 의심 소라고 했던 주저앉는 소는 실제로 동물학대 영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법원의 판결이 나고 MBC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명박 정부 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의 검언유착이라고 불렸던 사건입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그때는 아마 좌천됐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었지요. 뭐 해서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검언유착이라고 포장이 돼서 MBC에서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2년 10개월 지나서 아무 근거 없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강요 미수는 상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사실상 당시 여권과 언론이 유착된 사건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MBC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 벌어졌던 김만배·신학림 보도는 그 관련 보도를 했던 몇몇 방송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MBC는 사과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걸 냉정하게 어떤 식으로 보도 내용을 평가해야 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청문회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여야,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는 관점이 법인카드를 주로 파고든 분도 있고 MBC의 개선 방안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보는 분도 있고 충분히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월호 부분은, 이것은 MBC 노조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가 터졌던 당일입니다. 오전 11시 1분 7초에 종편 MBN이지요, 자막으로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보도하고 이어 MBC도 11시 1분 26초에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는 자막 보도를 내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널리 퍼졌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의 출처에 대해서 MBN 기자는 단원고 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말하는 걸 듣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세월호특조위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는 이 MBN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단원고에 현지 취재 중인 기자에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은 회사에 있던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됐고 박 모 기자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자막 문구를 작성해서 직접 그래픽실로 가져가서 방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그래픽실에는 보도국 주간뉴스부 양 모 기자가 자막을 확인하고 있었고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윤 모 기자가 PD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원 구조 오보는 생방송 리포트로도 방송이 됐는데 오전 11시 33분경에 서울MBC 오 모 기자가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이 325명이었고 이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정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가 올라옵니다, 11시 36분경에. 목포 MBC의 양 모 기자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이곳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MBC 염 모 기자는 조금 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은 모두 구조됐다고 밝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서로 엇갈린 겁니다, 지역국하고 중앙하고.

그래서 MBC 노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사 내 취재의 중추였던 시경캡, 아마 사건 담당의 모든 건 언론사 경험이 조금만 있으면 시경캡이 하는 거지요. 시경캡이 팩트를 확인했다고 한 이상 서울MBC의 간부들은 이를 아예 무시하면서까지 목포MBC의 보도를 직접 인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포MBC 기자는 협력사이지 본사 기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사 기자의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경캡 기자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어느 누구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포MBC의 보고를 무시했다면서 서울MBC의 전국부장—이게 보도 데스크 사회부장이 아니라 전국부장이랍니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이 관련된 모든 기자들, 모두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최승호 MBC 사장이 들어와서 정상화위원회라는 조사기구를 신설했고 이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된 민노총 기자 15명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MBC 전국부장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노조가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보도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이었다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의 지휘체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속보처리가, 그 긴박한 초 단위로 움직이는 속보체계가 본부장까지 보고를 거쳐서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웬만한 방송시스템이나 신문사를 경험해도, 저도 언론사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보 처리의 긴박함을 압니다. 회사로 표현을 하면 웬만한 부장 선 아니면 시경캡 선에서 전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보도본부장이면 총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사건이 터지면 회사 대표나 사장이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평기자들이 일선에 뛰었던 그런 부분의 책임까지 오롯이 져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는 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팩트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법안 내용 자체는 크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된, 제가 볼 때 핵심은 MBC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3법안 이 핵심은 현재 이사 수를 전체—대개 비슷합니다, KBS나 MBC나 교육방송 모두 다—이사 수를,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21명 정도로 크게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야 안배를 하는 그 인원은 대폭 줄고 방송 유관집단들이 추천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는 셈입니다.

방송은 그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매체입니다. 그게 없으면 방송은 거의 고삐 풀린 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감수하고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방송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계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기자회나 PD연합회, 방송기술연합회 모두 방송 기술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공영방송이냐 하는 건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만 공영방송 자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더욱이 민방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방송 유관기관, 기자와 PD, 기술 근무자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는,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형태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내놓는 법안의 핵심은 전부 다 자기들만의 집단입니다. 시청자위원회, 다 같은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영국의 BBC나 NHK나 쭉 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쭉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앞서 얘기했던 신동욱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어디에서도 방송 현업 유관 종사자들만으로 이사회를 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구도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이 짜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공영방송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언급했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감독의 대상인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지배구조를…… 사장을 결정해야 되는 이사회가 오히려 자기들이 사장을 인선한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또 민영도 아니고 더더욱이 공영입니다. 공영이기 때문에 더 국민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대개 몇몇은 다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오거나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하필 방송기자, PD, 기술직들만 들어오냐, 다른 영역도 충분히 있지 않냐. 작가연합, 배우연합, 방송을 만드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이유로 배제하냐. 편의상 이렇게 간다?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한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인데 이사회 외에 그러면 결국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국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철저하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

2인 체제 문제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전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 자체가 이게 위법성이다. 이렇게 한 것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운영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명확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국회가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무대행을 이렇게 내보내 버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의결정족수를 못 채운 위원장직무대행 1인 체제입니다, 위원장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소추돼서 만약 직무가 정지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만에 하나 그대로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이게 꼭 방송만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통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시 시간이 급한 것도 많고요. 연말에 또 재허가 내는 여러 가지 급한 사안도 많고. 이런 중차대한 기관이 이런 여야 간의 신경전,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는 것은 좀 문제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되는 것은 관련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란 법률 자체는, 법안 자체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해석이나 추측은 삼가야 되는 겁니다. 법 집행,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해석이나 추정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위원장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뭔가 새로운 법 해석의 영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률 교과서에 실릴 날도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대 정부를 다 비교해 보면 정권과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부분들이 갖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의 긴장과 그리고 약간의 갈등, 뭔가 정권과 야당과의 관계 그게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긴장이 붙을 수도 있고 정권과 유착된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문건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의 공방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연찬회입니다. 아마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의원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 들어갈 때 입법 사항이나 다뤄야 될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8월 말에 보통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이런 문건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 문건은 공식적인 겁니다. 과정방통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과제 및 쟁점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분야를 얘기합니다.

먼저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 설명합니다. 현재 언론환경은 이명박 근혜 정권에서 길들여지고 권언유착으로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이용해서 자유당, 바른정당 등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와 대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MBC는 새로 선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 KBS 고대영 사장 체제는 보수 야당과 긴밀한 결속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진보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감독기구인 KBS 이사회는 기존의 우리 당과 자유당 추천 이사 4 대 7, 3 대 6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MBC와 KBS 두 사장을 적극 보호하고 감싸 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의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수시 발언, 성명, 기자회견 등에 즉각 대응을 하고 최고위 등 지도부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지요, 유관 상임위 과방위에 기자회견 및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정부는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행된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권언유착 사례 등 언론 적폐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 선전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다면 증언대회도 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단체관람을 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국회 상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상영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언론 적폐 그다음에 언론 적폐 청산을 당 적폐청산위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현재 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자유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하여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식의 역공을 통해서 현 사장 체제를 합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이 전개됩니다.

아마 이런 건 익히 많은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수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여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이사들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건 여러 케이스들이 아마 있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민주당과 상당수 언노조 세력들이 상당히 교감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이 전국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방송사와 그 담당 이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범국민적 언론 적폐 청산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돌마고 불금파티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기존의 사측의, 사장의 비리·불법 의혹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신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2017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8월 달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11월경이라고 보입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통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조건부 재허가나 이런 조금 중간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당시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발언 등이 인용이 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했을 경우 부정 비리 등을 부각시켜서 이사직에서 퇴출시키라 이런 주문입니다. 최근 제작 거부에 돌입한 MBC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사장 책임 방기 등에 대한 방문진의 감독 책임 관련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마 그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영주 이사장인데 그때 아마 기소 건으로 돼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즉시 퇴진, 약간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투쟁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의 집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전에 명지대 강규형 교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제로 집행이 됐으니까 아마 상당수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기보다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방송정책이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 100% 깔끔했는지 한번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부와 방송사, 노조가 어떤 형태로든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다

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다 지난 과정에서 MBC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방송 진행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과 특히 공영방송의 관계를 푸는 문제들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때는 안 좋았고 우리 때는 좋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냉정히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자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문건입니다.

총 아홉 단계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기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BC의 끔찍한 편파보도와—이건 물론 오정환 보도본부장 본인의 진술입니다—비교할 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업 전 분위기 조성과 조직 점검을 노렸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문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서 빈둥거리면서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부장에게 길을 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조합원들의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에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의 으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 출신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 재가입을 받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요구하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하기는커녕 길안내를 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면서 손을 흔들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겁니다. 언론노조들은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고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문진 이사 중의 한 명인 대학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총장이었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하는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12월 7일 최승호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최승호는 그 직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잘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습니다. 해직의 고통을 내세우던 사람이니 설마 남을 해고하겠냐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행동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 보도국의 전 보직 부장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분의 글입니다.

김 모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였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했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분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2017년 12월 8월 보직해임됐습니다. 내가 잘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한 워딩이 행동과 달랐다는 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닷새 동안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 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전보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느냐는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언론사도 비슷합니다. 국 간 인사는 완전히 생활 터전을 바꾸는 것이고, 180도로 이것을 상당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약간의 좌천성 인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에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근무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50대 중반 나이에 밤샘근무를 계속할 경우 망막박리 재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2020년 10월 12일 바꾼 취업규칙 제26조 때문입니다. 사측의 괴롭힘으로 각종 질병을 얻게 된 저는, 비언론노조원들의 병가를 통제하기 위한 취업규칙으로 생각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회사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력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상급병원 두 곳을 찾아가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와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필귀정의 그날은 다가옵니다.

당시 제3노조 여성 국장이 했던 글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차피 파업 중이기 때문에 파업하러 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일당백의 정신으로 메운다고 합니다.

지난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서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습니다. 경제부 기자는 기사를 쓰면 차장이나 부장 데스크가 그것을 점검하고 오류나 정제할 것, 바로잡을 것 하고 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소속이 경제부니까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이니 비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공식적 인사 발령이나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당사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이 필자에게는 당신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대개 보면 그날 메인 뉴스데스크의 여러 가지 첫 보도부터 리포트를 정리하는 게 큐시트입니다. 그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이 필자의 리포트가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하고 있으니까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기사를 안 쓴 기자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제부가 아닌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업을 철회했던 모양입니다.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또 이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부장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그날—12월인 모양입니다—갑자기 바뀐 앵커가 출연을 해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서 취재해서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이 보도국에서 그날로 쫓겨나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회사 근처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인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에 문자 한 통이 날아 왔습니다. 카메라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대기하라는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파업을 하고 철회를 하면 제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발령을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자는 정치부로 가고 경제부로 가고 사회부로 가고,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충분히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은 그냥 대기발령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언론사는 당연한 거고 어느 회사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온갖, 심지어 폭로도 있을 것이고 고소 고발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던 이 모 부장의 글입니다. 2017년 12월 8일이 금요일이라고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서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네요—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습니다. 긴 시간 뉴스를 통해서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놔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특파원 포함해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방송 진행을 한 3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 진행에서 메인 뉴스는 어느 집에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가정의 옛날…… 그것을 해야 계속 먹거리를 만들고 하지만 그런 형태로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얘기가 옛날에 회자됐듯이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 진행이 멈춘다, 그것은 진짜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이런 급박한 사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8일간이나 메인 뉴스가 방송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과연 그게 정상적인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버젓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이 필자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가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가 됐고 이후 6여 년간 스포츠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여 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이 필자의 얘기입니다—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 왔고,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방송이 갖는 매체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어느 나라 국가든 민방과 다르게 또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특성상 공정이나 균형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 기계적 균형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겁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문 제작을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선거철이 되면 주요 대선후보가 여야 일대일 대결로 가면 심지어 글자 수까지 맞췄습니다. 저희가 500자를 쓰면, 여당의 A후보에게 500자를 쓰면 야당의 B후보는 또 500자를 맞춥니다. 그게 아주 무미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은 큰 차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구도는 같겠지만 더더욱이 이런 부분의 균형이나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 방송의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더더욱이 공영방송이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더더욱이 방송통신심의회가 있고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감사팀도 있고 내부에서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안팎으로 다 여러 가지 감시를 하고 지켜보고, 위반 수위가 높으면 법정 제재까지 가는 여러 가지 제재 수위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재허가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과연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종종 나왔지만 특파원 전원 소환도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얘기는

했지만 특파원 소환이라는 부분, 특파원도 보통 한 3년, 아주 특이한 경우는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대개 3년 정도 해서 현지 적응하고 취재하는 패턴들이, 물론 가족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류 안정을 위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환한다는 것은, 소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두고…… 최악의 경우 소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가 걸렸거나 그럴 경우에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소환 사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간 사람을 갑자기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일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회사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특파원 전원 소환이 당시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내 권력이 교체된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회사 측의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특파원 전원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필자가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LA, 방콕 등은 지국 자체를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에 지국 자체를 폐쇄해 버리는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이 필자는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노동조합을 설립한 원죄가 있으니—이건 필자의 생각입니다—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지국까지 폐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다 보니 계약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무실 임대료가 당연히 자기가 있을 기간 3년이면 3년까지 충분히 계약을 잡고 임대료를 미리 계산을 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리면 모든 걸, 그 돈을 날려야 되는 건데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복귀하면,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인사권자는…… 그러면 모든 지국을 폐쇄하는 데는 다 비슷한 사례겠지요.

협상을 통해서 잔여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엉키는 거겠지요. 귀국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법률 문제 아주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페이도 많이 줘야 되고요.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잔여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되고 협상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라 하니까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국 교육청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임대료 협상 그리고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에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마 외국에 체류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이러한 자녀들 학교 문제 처리하는 문제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급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회사로 출근했더니 2018년 3월 보도본부부 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 과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직급은 올리는 건 있는데 직급 강등은 엄청난 결격사유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규는 회사 차원에서 만들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니 따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배경 설명이 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계급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자,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대개 언론사 직제가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거꾸로 내려간다? 거의 잘 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분은 40여 일 동안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여 일 동안 방치가 된 이후에 새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이라고 합니다.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이분은 런던특파원이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폄하하고 직분을 낮춰 볼 일은 아니지만 나름 20년 가까이 경력관리를 했고 그 업무에 특화된 분이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은 하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또 그런 것은 전임 특파원들과 전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이런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인사조치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뉴스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압박이, 직급 강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또 기자들의, 저도 그 생활을 해 봐서 느끼지만 약간의 굴욕적인 삶이나 대접을 받으면 상당히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이 같이 진행이 됐고 같이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필자의 동기가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있을 때마다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는 해야 되고 보통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다음 인사고과를 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부서배치를 하거나 원하는 인사를 반영을 하거나 그런 게 인사고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2021년 부당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라고 합니다. 경기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하는 건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서 방송이 됐고 뉴스데스크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메인 방송이라는 거지요. 대개 9시에 했던 것 같은데 메인 뉴스에는 전혀 이 방송제작물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혹 주말 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땜질을 했다는 거겠지요. 정기적으로 어떤 취재를 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넣고 아니면 빼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돼서 정권이 바뀐다면 이렇게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부서로 복귀는 했지만 복귀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2년 대선 때 MBC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도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 사례라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국장을 지낸 허 모 씨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독살을 당한 분이지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들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200만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겐 적폐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2017년 이후에 과거 보도의 문제를 들추어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보도본부 지시를 받고 이 필자가 청부 보도를 했다고 물어 왔습니다. 위에서 이런 것을 취재하라고 청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당신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2022년 1월 26일 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후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 이때 상황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때 북한의 김정남 취재가 실제로 보도가 됐을 경우엔 국정원의 여러 가지, 북한의 김정은 정도를 취재하려면 국정원 정도의 취재망이 없이는 솔직히 힘들겠지요.

추론은 가능합니다.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것을 업고 김정남 보도를 통해서 뭘 노렸느

냐라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문재인 후보가 2017년 집권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대선이 그만큼 긴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 취재가 이뤄지고 만에 하나 이게 보도를 했다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2012년 대선은 아주 정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5년 전의 사건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거를 어디까지 올라가서 조사해야 될지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사가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진행하겠다는 신호였지요. 불 보듯 결과는 뻔하다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날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 필자가 가처분신청을 내서 정상화위원회가 내리는 결정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16일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필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과정이지요—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 모 씨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당시 받았던 강압과 모멸감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으로서도……

특히 대선 때 보도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력을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단체장 선거하고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해하고 사소한 것도 커 보이고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년 전까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조사해야 된다. 저는 조사 내용에 대한 적법성이라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적시됐다는 것만 알려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여러 가지들……

앞으로 이런 여러 취재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기자들은 약간의 좀…… 김정남 취재가 저도 이 관련된, 꼭 김정남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본 적도 있지만 상당히 민감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넘기지만 옛날에 김정일의 조카 이한영이 내려왔을 때 이한영은 분당의 집에서 독침으로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취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닥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취재도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김정남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때 이게 선거와 관련되고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걸릴 때는 이런 불이익을, 자기 신변의 위험보다도 이런 사후의

불이익을 더 염두에 두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언론보도가 어떻게 위축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경위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정이 나서 신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전근대사회에서 겪었던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나 권위주의 정권 때 벌어졌던, 이름을 굳이 다 안 떠올려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을 겁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어떤 의문사까지 벌어지고, 그게 후진적인 여러 외국에서도 종종 벌어졌던, 의문의 불상사가 생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압박이나 꼭 어떤 신체적으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더라도 심지어 폭언으로도 상당히 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겁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까지 신체적인 위해를 겪는 경우까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저런 과거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 물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을 했다는 모 차장의 편지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이분은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서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상태에서 2012년 12월—이른바 김장겸 사장에서 최승호 사장 체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대거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 필자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수원지국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제1노조원—언론노조지요—이 아니라는 이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취재를 하는 기자가 '이런 것 생겼습니다' 그냥 전화로 알리기만 하는 그런 업무는 기자가 아니라는 거겠지요.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 또 한 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이 났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서 발령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되어서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로 구성된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함께 참여했으나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컴퓨터 그래픽입니다—자막 등을 담당하는 AD 업무—PD 보조 업무지요—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기간 중 채용된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면서 채용절차의 공

정성과 회사에 개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10여 명의 임원들이 한 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이분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한 달 뒤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1차—뉴스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이지요—에 참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그 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지국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렸습니다. 기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합뉴스를 보다가 사건 보고도 하고 좀 기자에 준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고 통보했다. 기자를 포기하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치졸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했던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부 담당자들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부당 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 메일을 계속 보내자 '나도 편집기술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해라'라는 간헐적인 답장이 왔습니다.

면담의 골자는 이렇게 해서 종종 본부장을 억지로 찾아서 만났더니만 이런 비전클래스가 2차, 3차도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MBC 1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은 보도국 기자 업무가 아닌 곳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전클래스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필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몸이 안 좋다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 업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찾았던 산부인과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는 저는 MBC의 실상에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급하게 필자를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 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방송기자에게 다른 직무로 쫓아내기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임신중단이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을 겁니다. 공정방송 등 온갖 정의로운 말만 하던 MBC 1노조가 회사 내 구성원을 탄압했다는 오명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임신중단으로 옮기게 되는 배경을 나머지 1노조 조합원들이 알 수는 없었겠지요. 파업에 전혀 불참했던 멤버들이 보도국을 다 나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도국에 오게 됐으니까 일부 여기자들은 이 필자 들으라는 듯이 '쟤는 왜 보도국에 앉아 있어'라고 비난했고 당연히 보도국 내에서는 대화는커녕 점점 점심·휴식 시간 모두 왕따가 되어 혼자서 견뎌 내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중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MBC 한 170일간 파업을 하던 기간에 급히 경력기자들을 채용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력기자들과 기존의 언론노조 1노조 기자들 간의 트러블이,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들었고요. 경력기자가 파업의 빈틈을 메꾸니까, 파업 자체를 하면 보도를 못 하게 돼 뉴스를 못 만들어야 되는데 경력기자들이 와서 빨리 적응을 해서 뉴스 제작에 투입되면 파업 기자들은 파업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견원지간으로 발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노조 1노조가 전권을 쥐면서 최승호 사장 체제로 바뀌고, 바뀌면서 다시 이런 식의 핍박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때 상당수 경력기자들이 다시 이 회사를 떠나야 됐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뉴욕 특파원을 지냈던 이 모 부장의 글입니다. 지금 안형준 사장 치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MBC지부가 2017년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후임 사장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MBC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단행했었다고 합니다. 보복정치는 특파원들도 예외가 없었고 당시 MBC 새 경영진은 특파원들을 적폐로 몰아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전원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욕 특파원이었던 본인도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본사로 끌려들어 왔다고 합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파원 소환과 해외지사 폐쇄는 사규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했지만 언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뒤 MBC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부임 뒤 불과 10여 일 만에 강제소환을 결정했습니다. 3년 임기를 보장받고 뉴욕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가족들을 동반해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자인데 이로 인해서 부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조기 소환됐습니다. 한 절반쯤 근무하다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소환됐던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유를 통보받지도 못했고 국제부장의 전화 통보와 인사발령, 사내 인터넷 게시물로 조기 소환 명령을 확인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거의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 소환 통보를 받는 이런,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이 필자의 자녀들도 진학이나 학업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때 함께 소환된 도쿄 특파원은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조기 소환이 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부당 전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조기 소환을 당한 뒤 필자는 보도본부 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지만 소속 부서 발령을 아예 받지를 못하고 한 달 넘게 아무런 임무나 역할도 없이 그냥 방치됐습니다. 방송센터 8층 사무실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서 퇴근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후 임시로 만든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역시 특정 업무나 역할 없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이듬해 4월 6일 새로 소집된 뉴스데이터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뉴스데이터팀에서 할당받은 업무는 디지털화된 과거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파견직원들이 하던 단순 자료입력 업무로 취재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기자직종의

임무와는 전혀 무관한 단순작업이었습니다.

2017년 파업으로 MBC가 김장겸 사장 체제가 물러나고 언론노조로 장악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씻을 수 없는 불이익과 수모, 불명예,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MBC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와 인사조치보다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한 건 다름 아닌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손도 쓰지 못한 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평소 진보성향의 언론학 교수인 강준만 교수는 아마 자신의 저서 'MBC의 흑역사'에서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과 정의, 공영 이런 약간의 화려한 네이밍으로 모든 게 정리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면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여러 부류의 피해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꼭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에서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필자는 작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MBC 고위 경영진, 지금까지 MBC의 고위 경영진들은 이런 진술을 얼마까지 인정할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피해 사례나 굴욕적인 모멸감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편을 갈라서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이나 인간의 입에 담아서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는 여기 여야가 필요없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공감대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일이 제가 언급한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히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이런 게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적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를 하고 뭐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

사례라서 그 부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 호소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 이런 민간 기업에서까지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더더욱이 제가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지, 지난 정부에서 고위 경영진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자주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과방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분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 기억에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제가 왜 모두에 2000년 전의 시저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적어도 방송을 하겠다면 방송은 그 자체가 갖는 엄청난 영향력, 매체의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아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게 방송통신심의회를 거쳐서 받는 부분은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법정 제재,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송, 오보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에 따라서 이건 오보의 성격을 넘어서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싶으면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방송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좌우, 전후를 모두 망라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방송기자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방송 경영진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시저가 200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은 정치적인 여러 색깔을 보는 것이겠지만, 특히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MBC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면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봤고 아닌 것은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송법을 논하기 전에, 제도 이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방송장악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를 장악하기 위해서, 왜 장악을 했느냐, 진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법에 적시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제도로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공정한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다른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게 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상의 미비점이 뭔지, 제도상의 허점이 뭔지도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MBC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 최근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몇 가지 벌어졌던 날씨 소개할 때 기호 1번을 크게 썼던 부분,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서로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은 절대 오해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고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MBC가 과연 공정하냐는 질문에 과연 공정하다고, 균형이 잡혔다고 얘

기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MBC 사장을 결정하는 방문진 이사가 바뀌는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 방송법이 충분한 숙의도 없이 입법 드라이브가 걸리고, 동시에 제가 볼 때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력화하면 탄핵 조치가 또 벌어지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와 결합돼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시기에 방문진 이사 선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장 인선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서 지금의 MBC 체제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며칠 전에 벌어졌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졌던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의, 노조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러 가지 지금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지금 대치를 하면서도 선진화법이라는 게 의식이 돼서 신체 접촉이나 심지어 항상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특정 세력이 와서 거의 조롱과 폭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게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나온다는 건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자꾸 용인이 되고, 또 용인은 특정 세력에 용인이 되는 거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도 제동이 걸리거나 제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형평성은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대할 때 방송 프로그램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어 버린다는 게 지적이라면 왜 유독 MBC만 이런 지적에 시달리는 건지 표적이 되는 건지, 더 그런 부분에서 MBC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더더욱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추천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결격 사유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추천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공문이 두 차례 이미 전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추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추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방치하면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이 없으면, 야당 몫이나 여당 몫 추천이 없게 돼 버리면 2인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인 체제 자체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합의제

정신에 위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아까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삼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이렇게 법안으로 보여 주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이렇게, 행정과 입법은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지요.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BS MBC EBS, 공영방송이라고 명명돼 있는 곳에 전부 사장 인선을 결정하는 이사회, 이사회 인원 구성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서 21명 정도로 크게 늘린다는 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민주적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방송 거버넌스, 방송 지배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결국 공영방송이 고삐가 풀린 듯이 나갈 수가 없는 방송 자체의 영향력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유일하게 직접 선출권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그만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비율로 나눠져 있는 인선 할당 자체는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에서 방송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도 많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직능단체를 안 넣느냐, 왜 이런 단체를 왜 안 넣느냐,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권한을 어느만큼 대변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국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통령도 선출권력이고 국회도 선출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이른바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정권을 가진 세력과 공영방송 간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의 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의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 선출권력이 가지는 권한,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그것만이 오로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방송기자나 PD연합이나 기술자연합이나 시청자위원회나 학계 인사들이나 이 선발 과정부터도 누가 담당할지 지금까지도 정리된 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 선발 기준에 맞춰서 선발되더라도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부터 그리고 왜 직능단체가, 특히 기자단체와 PD·기술연합이, 이건 하나의 크게 보면 직역에 있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가 국민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인사가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방송이 갖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송은 방송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PD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그건 오로지 전파를 사용하는, 공유의 주파수를 쓰는, 그것은 국민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와 대통령과 그 선출권력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제도적 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논의의 틀을 시작하려면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 문제인데 편하다고 편의에 맞다고 모든 걸 망라할 수……

아까 몇 분이 그랬습니다. 작가협회나 이런 게 다, 배우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자협회, PD협회, 기술협회 이렇게 많으니까 가자. 그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채운다? 그건 월권이고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안 자체가 갖는 위헌성을 떠나서 이건 국민들의 뜻을 몇몇 정파적 이익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거지 과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방송개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틀을 100%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논리나 명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통과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론노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연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숙고된 법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지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 여러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일부 의원의 개인 발의지만 발의가 있었고.

그런데 2020년 4월 21대 총선이지요. 그때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은 아예 입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결국 20대 대선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바뀌었지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도 결국은 방송 관련 종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역 대표도 있고 다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안 자체에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넣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아예 또 들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만으로. 물론 여야 구도는 한 5명으로 가장 최소화되고 나머지 한 4분의 3 구도는 전부 다 이런 제3의 세력이 주로 방송종사자들 위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 자체 약간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으로 민주당 안이 짜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야당이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 자체도 원안이 아니고 방송종사자들 위주로 판을 다시 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의 인원수가 여당이 1석 정도 많은 정도로 이사 수를 조금 조정하는 정도였는데 방송종사자들을 넣어서 확 늘려버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민주당 안의 특징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홍근 의원안 아까 얘기드렸고요. 박홍근 의원처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명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그때는 국민의힘이지요—의원안도 2020년 8월에 발의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가능했는데 결국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여야가 이사 수를 조금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의 여러 가지 언론노조 상황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상당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정한 보도라고 보시고 있지만 저희는 민주당이 약간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방송환경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방송정상화, 이사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가는 제도개선인데 이걸 가로막았던 것 아닌가, 결국 그런 것이 민주당이 지금 상정한 방송장악 3법의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배경에는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됐는데 2018년 3월에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이렇게 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의, 특히 방송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 가짜뉴스 문제는 가짜뉴스로 뭔가를 압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짜뉴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언론의 기본적인 상식인 오보는 최대한 근절해야 됩니다. 오보는 오보가 난 이후에, 오보라고 하면 실수라고도 치고 잘못된 보도를 그냥 망라해서 오보라고 할 때 오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되고 더 성실히 해명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경 설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파적 이익은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마치 뭔가를 얘기하면 모든 걸 자꾸 정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몇 가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가짜뉴스냐 이것 표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언론탄압이다,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 충분히 약간 의도가 개입된 오보라면 그것은 더더욱이 방송이라면,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면 절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몇몇의 방송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영방송의 힘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 꼭 지금 같은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더 단순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지금 2공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반드시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잠깐의 눈길을 끄는 뭔가를 던져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누가 봐도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을 진행자로 내세워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그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얘기하신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은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틀을 던져야 됩니다.

민방과 공영, 민방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영방송과 선을 긋는 이유는 민방은 그것보다 약간의 자율성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오보라도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소한 문제가 툭하면 걸려도 '실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 그런 식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워야 되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도적 보완 중요합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 보완 이전에 공영방송이 그동안 과연 공영방송다웠느냐는 평가에서 적어도 점수가 팔구십 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정파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를 많이 얘기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언론문화는 다르지만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을 거의 전문으로 씁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역대 대선에 항상 민주당 후보를 거의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신문은 밝힙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문화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용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뉴욕타임스나 이런 미국의 유력지가 미국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팩트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물론 이 부분이 좀 비중이 많이 실린다 안 한다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취하는 팩트나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형 오보가 나면, NHK의 경우도 전에 한번 큰 오보가 났을 때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램의 신뢰도 문제가 이슈가 되는 순간은 경영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저 정도 해서 다음에는 잘해 보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도를 가지고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퀄리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넥스트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MBC가 그런 보도에 자신감을 보여 왔냐 그리고 국민들이 MBC의 보도 태도를 100% 동의를 못 하더라도 '저것은 그래도 팩트야'라고 인정할 만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MBC가 몇 점을 스스로 매길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공영방송다운 행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 시국에 MBC는, 안 사장 체제에서 MBC가 우리는 최소한 이런 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자정선언문을 발표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방송 3법 통과시켜라,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연 안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최소한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대형 오보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사태로 번지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 어떤 식의 자성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식의 자체 구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평가할 별도의 검증팀을 두겠다' 그러면서 매일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MBC는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건 일부 노조원들의 생각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의 주류이고 그래서 MBC 전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약하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MBC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하는지. 약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노조 숫자 자체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1노조와 3노조, 세 노조 이런 쪽하고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숫자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냉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이 방송장악, 크게 보면 4법이지만 이 부분의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MBC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법이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8월 12일 날 교체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 교체를 내다보는 것이고 사장을 스테이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왜 온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공영방송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물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숫자가 막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토대로 정권의 지지도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로 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꼭 그렇게 볼까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의석수는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당 전체를 합치면 거의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의 의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상당수 위축된

상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의석만으로 민주당을 밀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갤럽 조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4개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로 두 자릿수까지 여야 지지율이 격차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도 호된 국민의 회초리를 받았지만 야당도 모든 걸 이렇게 흔쾌히 받는 게 아닙니다. 일대일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당한 만큼 야당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흔쾌히 동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게 여론조사상에 반영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의석수만이니까, 다수결이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약간 비약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실 때 만나시는, 접촉하시는 MBC 고위층들이 있다면 MBC 스스로의 자정 선언이나 소위 개혁·혁신 선언이나 뭐 그런 유사한 형태로 그런 게 좀 뒤따라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오히려 그게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약간 이런 반응들을, 미덥지 못한 반응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연욱 의원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안 가도 됩니다.

공영방송이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공영방송이 관리되지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지요, 해임 사태에 이른 방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서 22년도 12월에 갑자기 나왔다가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안인데 야당이 되고 나서 다시 꺼내서 한번 던져 보고 부결되자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낸 겁니다.

여기에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건드려서 방통위 무력화를 하겠다는, 현재 구

조에서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는 거지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장악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들에게만 주어서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정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들의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었던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양도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당장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 숫자로 이렇게 조금씩 외연을 넓혀 왔고 선출 권력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버넌스 논의를 벌였던 무대로 민주당이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폐기됐던 안이 아니고 박홍근·박성준 의원안으로 수렴하는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한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종사자들만의 이사회는, 물론 그게 방송종사자들이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이 방송종사자들로 채워지는 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역할은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OTT 시대라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됐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방송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견과 정쟁의 문제로, 언론시장이 이제 기능의 문제가 갈라지는 현실, 모두 정치적 논의에서 편 가르기 문제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방송은 그 특정 세력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도라 누가 임명하더라도 결국 방송의 퀄리티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동안에 몇몇의 프로그램으로, 보도로 국민을 흔들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방송의 생명은 그 리포트나 프로그램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담보되는 것이 공영방송이 크게 생존해 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 절차지요. 입법행위가 행정권한까지 침범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질서가 문란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정치가 어느 영역에 서야 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사태가 초기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KBS 정리된 과정에 대해서도 MBC는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 때 간부들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내고 거의 100% 특정 노조 출신의 보직자들로 채웠습니다.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초대형 산불 때 친민주당, 친문재인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산불이라는 아주 촌음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지요.

그때는 보통 재난방송을 해야 되고 재난방송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은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난방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강원도 산불보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 그것을 방송했던 시사기획 창은 재방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김의철 KBS 사장이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KBS 취재진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의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생태탕을 먹었다는 의심스러운 증언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선거 때 보도가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지는 웬만한 초보 기자들도 알 겁니다. 이 증언이 다 그 녹취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지, 녹취가 있어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재차 그 몇 차례, 그 몇 겹에 걸친 확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언론계의 기본 ABC입니다. 과연 그 부분이 있었는지.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생태탕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KBS 이때…… KBS 보도도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KBS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2018년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이 특정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독식하니까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이라는 자리는 묻지 마 득템을 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는 중에 방송 현업 종사자들, 방송종사자들과 언론계, 학계 그다음에 시청자위원 4명이지요, 이렇게까지 구성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그 책임성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송종사자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인선하더라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장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은 어떻게 인선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특히 KBS 사례입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가 최근 6년간에 두세 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 등을 평가해 볼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돼 있다는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체들이 100% 어느 편을 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경향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시청자위원이라는 하나의 둥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터를 만들었다는 부분,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 옛날에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개정을 보는 여러 시각 중의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련의 쭉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지난 정권,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이렇게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식, 말은 그럴 듯합니다.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걸 과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면 이사장 구성도, 이사진 구성도 지금의 방송종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대표성이 있거나 최소한도의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 명분이 내세운 명분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올린 법안의 내용대로면 이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 독립도, 방송 독립이라는 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방송 독립이지만 결국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위축되는 것은 OTT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매체, 새로운 콘텐츠의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권과의 유착, 정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신뢰 관계에서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신뢰 회복이나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이게 시청률을 넘어서는 신뢰를 돈독히 받는 매체라면 여든 야든 다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1998년 출범했던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에서 당시에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후 모든 정부에서도 이 틀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야당 때지요.

핵심은, 그때 주장하는 핵심은 야당 측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이런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렇게 주장하던 게 아니고 기존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거버넌스 체계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전부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출신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문제를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공영방송은 자기의 목소리를 여든 야든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도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놓고 방송의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제는 이 영역이 좀 굳건해지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예능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98년도에 얘기됐던 그 부분에 맴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지금 방송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만든 통합방송법을 개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2000년도 당시, 이게 아마 김대중 정부 때인데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시청자 권익보호, 그래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훌륭한 대의명분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통합방송법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입니다. 이때부터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불렸고 그래서 그런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정목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일단 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시청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도 이런 방송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법안은 이런 연면히 이어진 하나의 통합방송법의 연혁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언론노조와 무관한 독립단체다,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조, 제3노조지요. 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한통속이라는 성명을 내자 아마 반박하는 형식으로 냈습니다. 실제로 MBC 제3노조는 ‘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이중대, 삼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에 해당 단체들이 참여해서 친야·친언론 노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 단체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방송장악 4법에 포함된 단체들이 이사진 티오가, 숫자 자체가 적절한 걸 떠나서 과연 그런 배정 자체가 맞나 이런 겁니다.

KBS도 여러 프로그램 가지고, MC들 선별을 가지고 이런저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적절하냐, 안 하냐. 그런데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견 자체가 제기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의견은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적 색깔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고 일을 추진한 주체가 서로 달랐을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도 있고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돼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연주 KBS 사장이 있을 때 당시 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인물현대사라는 프로의 MC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노조원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과연 이게, 자꾸 균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앞으로 방송 플랫폼이 더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런 OTT나 디지털 OTT 같은 방송 플랫폼이 계속 바뀌지요. 전 세계 공영방송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사도 하고 요새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방송, 기존의 공영방송이 과연 그런 새로운 혁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냉정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C 문제는 아까 민영화는 거의 악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선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을 떠나서 MBC는 KBS, EBS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수준을, 기준을 맞춰야 되고 공영방송에 걸맞은 방송을 해야 된다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MBC가 기존의 KBS, EBS와 엄연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씨를 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같이 여든 야든 한번 공유를 해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MBC의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단순히 언론노조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MBC는 기본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지요. 그러니까 MBC 지분의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가 아마 그만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MBC에 대한 감독과—관리감독이지요—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아마 이번에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의 이사가 이런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즉 방문진은 주식회사인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MBC 사장 추천이 주된 목적인 단체로서 방문진의 이사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의 단체입니다.

MBC는 주식회사지요.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데 사장을 추천하는 게 방문진이지요, 방문진 이사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국가기관이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이사, MBC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을 사실상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국가기관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누가 과점 내지 독점하는 것을 상당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MBC의 7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사실상 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겠지만 엄연히 방문진이 갖고 있는 주식은, 70%는 주식회사로서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MBC와 방문진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40% 룰을 제외하고 70%까지 용인하는 이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이런 특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MBC의 구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가 맞다, 공영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MBC 문제를, 어차피 제일 핫한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 MBC 구조적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어정쩡한 구조를 어떻게까지 계속 남겨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한쪽으로, 한쪽에 비중을 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면에 따른 공영 역할만 강조하고 주식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실제로 KBS 사장과 MBC 사장이 바뀔 때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문제가 원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올려서 방송 주식회사 성격에 관계된 수익은 또 올려야 되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져가라.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MBC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MBC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금의 방송법 차원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과정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저도 30년 넘게 기사를 작성하고 하나의 논평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 보고 신방 겸업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방송이 갖는 엄중함도 단순히 오락 기능을 넘어서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여기서 방송장악 3법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특정 방송종사자, 특정 방송기자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방송 리포트를 제작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겁니다. 방송기자가 모두 못 합니다. 소위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고 크면 중계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재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소음 제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제목을 어떻게 밑에 달고 하는 문제, 제목 하나 가지고 크게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세월호 문제도 처음에 밑의 큰 제목이 잘못 나가서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모든 방송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협업이, 철저한 협업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특정 방송종사자들만이 이사 선정에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나 토의, 숙의가 왜 없었는지, 과연 그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임박한 8월 달 방문

진 이사 문제를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러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까지를 떠올리고 싶지만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방송이, 만에 하나 제도라는 문제는 한번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야당까지 합치면 192석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로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권의 권한입니다. 그것 자체를 저희가 탓할 것은 없는데 다른 입법과 다르게 방송이라는 문제에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문제가 한번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 버리면 다시 못 돌립니다. 그리고 제도의 틀을 한번 바꾸는 순간부터 이것을 아니야, 이것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어, 또 바꾸기 시작하면 그 뒤 후폭풍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직능단체, 그 포함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동의를 구하고 이 세 단체로 압축했는지,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부터 하나하나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문제가…… 이게 방송의 이해관계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의 이해관계는 아주 첨예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 가지 정치세력도 있겠지만 또 정파적 색깔이 다른, 정치적·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여러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지금은 선거가 끝나서 괜찮지만 또 선거철 되면 그 사람들이 뭉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하나의 이런 제도적 틀을 바꾸는 문제에서 얼마만큼 숙의를 거쳤는지, 최소한도 몇 차례의, 웬만한 건설 계획도 주민공청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형식적이나마 거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 이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8월 달 그 부분을 앞두고 이렇게 긴박하게 몰아갈 사안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 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제기됐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의 발언들이 종종 바뀝니다. 시사 프로그램 중에…… 종편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지상파도 처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다가 주로 요새 활성화시킨 게 아마 시사 프로그램들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패널들 배치 문제, 숫자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많은 편향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면 당별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으면, 국민의힘에 기존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 쪽을 대변하는 세력이 있고 쫓겨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 그러면 자꾸 방송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준석 대표도 한나라당,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냥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당에 있는 기존의 주류가 있는 소위 당대표 세력은 '저쪽은 우리 편 아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세력을 야당하고 같이 출연시키냐' 이래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선정 문제는

작가들한테 맡길 수 없는 영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세력이 나눠져 분화가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말은 민주당이지만 그건 민주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비토를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도 MBC가 과연 프로그램을 그런 고민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 소수 노조가, 제3노조가 지난 5월 달에 성명서를 한번 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 중 야권 성향 인사가 여권 성향 인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패널 섭외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 아마 데이터를 뽑은 모양입니다. 친여 성향 패널은 해당 기간 4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 패널은 37명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모니터 결과를 참조해서 MBC 표준FM 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방송인은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이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10명입니다. 5 대 1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은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27명이 출연했습니다.

3노조는 MBC라디오가 대통령 방미 기간인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대표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친야 패널과 방송인들이 출연했었고 방미 성과에 대해서 편파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방미 일정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편파 패널의 출연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메인 뉴스에 나오는 몇 개의 꼭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요새 대낮에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패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패널 선정도 진행자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방송은 패널 선정은 본부장이 다 체크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힘이 특정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누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세력, 정치집단들이 이 방송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의 배치에 아주 민감해하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동안 MBC가…… 이 데이터만 보면 약간 좀 5 대 1 정도로 치우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순방, 방미나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잘한다는 식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도 사례는 제가……

또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 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이 요새는 더 주목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작년 12월 달에 한 오후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뉴스톱 대표에 있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때가 총선을 앞두고, 한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긍·부정이다. 이게 20%p 이상 차이가 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이 패널이 말한 겁니다—대충 대통령 긍정 35대, 대통령 부정 60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거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기가 귀찮아서 수

치는 말만 드릴 텐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 내가 단언하건대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지금 지표로는 어떤 수를 써도 보이지 않는다. 제가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선거제도를 뭐로 하든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국 전망을 하는 건 100%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까지도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며 '저는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거 4개월 전 얘기입니다.

MBC는 이 방송에서 이 김 씨를 팩트 체커라는 이름으로 출연시켰는데 정작 여론조사 수치 같은 팩트는 건너뛰고 개인적 의견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 말을 듣고 제지하거나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패널의 소신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과반이 돼야 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저는 원래 스윙보터(부동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진행자는 약간의 민감한 현안이 나오거나 이런 여론조사 한 수치,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인용할 때 오차한계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앞선다는 표현보다도 '오차한계 접전 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절대 어떤 우위를 표기하는 방법을 아주 민감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 방식을 죽 적시해서 표기를 해야 되고요. 이 개인적인 바람이 과반이 돼야 된다는 건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자체에 정치적 중립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공직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를,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과반이어야 된다는 건 1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과연 그런 방송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온다는 건……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더욱이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당신 개인 의견이고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발언을 취소하겠다든지 이건 적절하게 사회자가, 진행자가 중간중간에 적절히 제동을 걸어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공식적인 방송의 ABC입니다. 방송 진행의 ABC입니다.

어느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걸 공개방송에 나와서 다수의 국민들이 듣고 보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한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방송을 정치적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MBC 시사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자 문제 몇 가지들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느냐? 뭐 진행자 바꾸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특히 최소한도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 내년은 큰 선거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아마 보궐선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선거 치르면서 겪어 보셨겠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선거법의 고발 고소 대상이 되는 게 냉엄한 현실 아닙니까? 더더욱이 방송 프로그램이, 그것도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보여 왔느냐에 따라서 대국민 신뢰도 문제가 훼손이 돼 버리면 그 방송종사자들의 요구가 과연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보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데.

그게 특히 MBC에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MBC의 제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표적 탄압이다, 표적…… 물론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만능의 키는 아닙니다. 이런 몇 가지들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자성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MBC는, MBC의 지금 주류가 돼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한번 믿어 보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또 선거 앞두고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상캐스터의 노골적인 미세먼지 1번, 1번 찍으라는 선거운동.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를 느낍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올라가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4층 건물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위치였는데, 시민들 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든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걸쳐 놓고 내려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제 스태프가 당장 커피를 내리시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건방지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방송종사자들과 비슷한 콘셉트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의도는 한 게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비쳐지는 순간 정치인은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저쪽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고 해도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기보다도 과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번 많이 제기됐던, 지난 2월 달 나왔던 기상캐스터의 노골적인 미세먼지 1 이리포트 자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MBC 3노조가 했던 성명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쿵 소리와 함께 내려오는 1이라는 숫자 그리고 손으로 1을 연신 가리키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이라고 강조하는 멘트입니다. 선거운동 방송으로 착각할 만큼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고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

어제 뉴스데스크 날씨에서 이 기상캐스터의 방송 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수치 1이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숫자였을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 새벽 1시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어도 서울 중심권 27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1㎥당 18㎍이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11㎍이었다.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이렇게 강조해서 쓸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도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통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등급으로 표현하지 이처럼 숫자로 예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갑자기 숫자 1을 접한 시청자들은 1이라는 숫자에 어리둥절하거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선거가 40일 남았다. 거대한 1번을 형상화한 다음 기상캐스터가 손으로 1을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선거를 연상케 한다. MBC 직원이자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민망하고 다른 시청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물론 보도국 담당자와 기상센터 담당자들은 우연의 일치다,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27일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이 아니었고 보통은 좋음, 나쁨 등급으로 예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 체크를 할 때도 저도 알기로 좋음, 나쁨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선거철에 1번, 2번 막 유세차 돌아다니고 한참 민감한 시기에 과연 색깔이 또 그렇게 파란색이고 이렇다면 과연 그걸 공정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정치권에서 이 방송법 문제를, 진짜 방송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풀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에…… 이런 여러 가지 방송 플랫폼의 변화 과정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번진 상황에 대한, 방송법 문제로 모든 걸 논의하게 되는 지금 현실이 저도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장악법이 이대로 가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고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고 또 다른 다음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것까지 번지면…… 진짜 우리 정치권의 대결, 충돌, 마찰 이런 유의 키워드만 나오는 국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을 다룰 수 있다면 방송의 선진화 영역이라는 부분까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가 소속 상임위가 문광위라서, 문화체육관광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분야를 짚어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치적 이슈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빈말인 것 같고 정치적 이슈를 안고 가더라도 이렇게 급속, 급하게 밀어붙이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말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고, 제가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나머지 방송 3법, 이사진 구성 수를 대폭 늘리는 부분까지는 다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일련의 맥을 같이한다고 볼 때……

자꾸 정치적 의도를 제가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거나 한번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남은 주자들이 더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중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논란이 되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쟁점이 되는 MBC 문제에 대해서 MBC 스스로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동안 기존 보도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과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든지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다든지 그리고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소한도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든지 뭔가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이런 방송법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든 야든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놓고 결국 또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될 사안들이 좀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자체가 결국은,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같이 특정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갖는 기준이나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저희는 아마 시사 보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국민들 모두가 보는, 중앙에서 보든 지역에서 보든 뭐 어디 섬에서 보든 여러 영역에서 보더라도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방송장악 3법이 나온 게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지, 저는 회의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정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전종덕)

(10시05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양심의 소리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단결하는 세력입니다. 오늘날 그 세력이 바로 우리 사회의 동료와 후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노조이고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그 사회의 양심 세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두환 군사 독재가 총칼로 광주를 피로 물들일 때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 노동자들입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맨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모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17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대다수는 직장인이라고 불렸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사당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손이 거쳐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만든 주역들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역대로 숨길 것이 많은 정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에는 목숨을 걸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인들을 국민들이 지켜 줬습니다. 그렇게 지켜 온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멈추십시오. 온갖 마타도어로 언론노조를 공격한들 방송과 언론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자 하는 검은 속내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는 박정희 군부독재, 중앙정보부는 보도지침을 작성해서 기관원들에게 시달했습니다,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일체의 기사를 간섭하거나 금지할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독립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광고탄압을 동원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그랬습니다.

‘MBC를 응징해 달라’,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 많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SNS에 쓴 글입니다.

제가 오늘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 특히 보수정권들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언론장악이었습니다. 언론을 길들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편향적인 보도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마음 놓고 언론탄압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법으로는 방송장악 시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KBS, MBC, EBS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에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할 만큼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

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사용 의혹이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안을 상정해 경영진을 쫓아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해고나 인사조치를 하고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은 성격을 바꿔서 정권에 유리하도록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고 대통령의 술친구라 불리우는 박민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KBS는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기자와 PD를 수신료국으로 전보시키는 등 구성원의 의사와 반하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또한 KBS 박민 사장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기자들과 뉴스 진행자들을 대거 하차시켰습니다. KBS 시사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진행자가 교체됐고 2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폐지됐으며 9시 뉴스, 뉴스광장, 사사건건 진행자가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켰습니다.

MBC는 아직 장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사장 김재철과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는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하며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SNS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진숙 본부장이 인터넷 매체 사장에게 언론노조 MBC본부를 공격하는 SNS 여론전을 요청하며 금전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체 사장마저도 MBC 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 온라인 매체조차도 거절할

만큼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를 파괴하고 언론탄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진숙 씨는 본인 스스로를 우파전사라 칭했던 수구 편향 종합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당시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기사가 나갈 때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가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벗겨도 파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특급호텔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는 총 7500만 원을, 연평균 1000만 원 넘게 사용했고 와인은 670만 원어치, 빵도 97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카의 여왕입니다.

이렇게 부정 의혹이 많고 수구 편향 종합세트인 정말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런 분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신문은 거액의 명예훼손과 소송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방송은 공영성을 잃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히틀러 내각의 선전국가부장관 괴벨스의 말입니다.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선전·선동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방심위의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위협이 민

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세계 언론지수 순위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2위로 1년 만에 15계단이나 폭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역대로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 억압과 동아투위,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땡전뉴스, 2000년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통과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종편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입틀막·눈틀막·언틀막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의 위기를 부추긴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국민들은 TV 뉴스를 꺼 버렸고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 3법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방송 4법 통과로 언론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진종오)

(10시31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진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고 애로사항들을 귀담아들어 주지 못하여 선배 국가대표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잠시 뒤 16시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첫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 서울올림픽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을 상징하는 대회였으며 무려 2520억의 흑자를 기록한 대회였습니다. 올림픽의 유치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서 또한 한국의 고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확장, 잠실 주경기장,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등등 올림픽의 효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교권이 무너져 있고 소외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걱정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후손들과 청년들,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존중과 화합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협치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는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가짜뉴스와 편향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공영방송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뜨려 회복불능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영구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침해받고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가 왜곡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국회 다수당으로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킬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합니까? 이제 여야 싸움을 멈추고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장악은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비교적 여야의 주장을 공정하게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비록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지만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가장 큰 노조가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 강했고 자연히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퇴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교수는 소송을 했고 4년 넘는 외로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면직이 불법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렸던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후 문 정부의 언론사 장악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인사권을 활용해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프로그램 개편, PD와 작가 교체 등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 인사들을 모두 방송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방송사 노조들이 문재인 정부와 이들이 임명한 경영진에 우호적이라 견제 세력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노조들은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 갑자기 반정부적으로 바뀌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정작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충분한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관심과 성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자는 의지가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 차원의 언론적폐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대책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동료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을,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 변명했지만 이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시절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 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으로 TV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짜뉴스, 편파뉴스 등으로 인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했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정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법안을 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 표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리 급해서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거를 답습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만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여야 논의로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동의하고 언론종사자들도 동의하는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만 동의하고 있는 법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만 지지하고 편파성이 짙은 특정 단체와 학회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공정성은 보장되지 않고 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혼란만 키우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방송체계상 정부 주도형 방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중심 주도형 방송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 구조, 공영방송 거버넌스,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즉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 여야 의견이 불일치할 때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방송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불공정 사례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방송법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경우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먼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KBS가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방송을 공익우선적 기준의 규제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 왔고 연방통신위원회 사회공동체 내에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경우 존재하는 견해들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하는 의무를 주파수 사용허가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임을 강조해 방송 내용의 한계를 공평 원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1949년 이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례와 연방통신법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쟁점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보도할 때 대립적인 주요 견해들을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구체화 또 실체화돼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주파수 희소성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미 정부는 위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 해외 사례만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거적 입법 시도가 그들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되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지 알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법률의 개정의 의미를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평하며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친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가 필요하나 이는 방기한 채 공영방송 이

사회 이사를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된 개정안만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대표는 서민경제가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지적대로 본 개정안이 법률이 되면 이사 수 외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도 2배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정파와 노조,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공영방송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 대표가 지적하는 점은 비용 문제만 다가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오래된 속담처럼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 또한 증대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처럼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은 이사 수를 5~11명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대표는 KBS, MBC, EBS의 업무범위와 규모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KBS는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 1조 5000억에 소속 인원 4300여 명이고, MBC는 매출액 8600억 원에 소속 인원 1700여 명, EBS는 매출액 3500억 원에 소속 인원 600여 명의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모두 이사 수를 동등하게 늘리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초등교육을 받은 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는 단체의 대표성은 근거도 없고 오직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 이사 구성에 대한 편중성 또한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공영방송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 전문단체 6명,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 6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최소 친민주당·언론노조 17명, 친국민의힘 2명, 중립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정상적인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 공영성은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이익에 따라 왜곡된 방송 편성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 대표는 기존 정관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법률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특정 단체를 지정, 명문화해 추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기존 방송사 정관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한다라고 하며 특정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 가치 등에 따라 대표성을 띠는 분야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만약 명기 시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적 고려를 무시하고 법률에 특정 단체를 명기해 성문화한다면 경직성 및 특혜 시비는 물론 특정 관련 직종 종사자만을 회원으로 두고 회원 권익 보호와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위 이익단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직능단체인 방송경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인촬영연합회 등은 명기하지 않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합니다.

또 위 명기하려는 3개 이익단체는 오랜 기간 친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왔기에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법 개정 취지로 내세우는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성 확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틀어 최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장과 이사진 추천·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이 아니라고 그 법적 권한을 입법 폭거를 통해 특정 정치성향의 언론·시민단체와 야합하여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대표는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는 영국 BBC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제도가 아닌 그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오히려 지난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거나 개정하려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고 정부가 방송을 악용하면 선거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말씀처럼 방송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보조하고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이사진 수 늘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에 따라 콘텐츠 이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방송의 전송매체, 플랫폼, 시청하는 기기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해외 OTT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뀐 환경에 대응 못 한 채 미비한 틈을 타 한국 시장을 이미 잠식 중인데 오직 방송계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 일문일답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를 21명으로 구성하자고 한다. 이사회 21명 중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만 17명이 될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에서 민주당 몫이 3명, 친언론노조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한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언론노조와 함께 행동하는 방송 전문 단체 6명을 합치면 13명이다.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몫이 6명인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언론학회를 제외하면 4명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이다. 구성하기 전부터 21명 중 17명의 편중성이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편향된 성향의 절대다수로 구성될 것이 뻔하다. 개정안 자체가 정략적 발상이다.

이 개정안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반복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주요 취재 제작진 전반을 장악했다. 이들의 추천으로 구성될 이사

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정 그룹에서 추천된 사람의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사장을 뽑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친민주당 내지는 친언론노조 인사로 이사회 3분의 2를 구성했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 개정안 낼 때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에 무슨 대표성이 있나, 방송 전문 단체도 결국 소수 이익집단이다.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곳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평가받는 방송사가 영국의 BBC입니다. 이곳도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을 의회나 기타 단체가 아닌 행정부에서 주도한다.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독립성 확보는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가 크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측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악용할 경우 각종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다른 편향성 우려가 나올 텐데.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업고 가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갈등의 장으로 이어 가느냐. 하지만 행정부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 폐단이 적을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폐단과 부작용이 적은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관련 제도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했다. 군사정권 이후이기도 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최소 견제 기능을 넣어둔 것이다. 선의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수십 년 해 보니 결국 정쟁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소수 쪽에 견제 기능을 줬다고 하지만 7 대 4 내지 6 대 3 표결로 끝나면 소수의 분노만 키우는 꼴이다. 현재 이사회가 대단히 부적절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나?

법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사 확대와 관련해서 보자. KBS, MBC, EBS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재 이사회를 보면 KBS가 11명, MBC와 EBS가 9명 구조다. 각 사 매출과 인력을 비교하면 KBS가 제일 크고 MBC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EBS는 KBS의 4분의 1 수준의 규모다. KBS의 매출과 인력이 타사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차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 다 생각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21명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졸속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늘리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겠나. 21명에 따른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 인력도 적지 않다. 21명이나 모인 회의체는 이제껏 없었다. 제대로 된 토론도 힘들 것이다. 정상적인 토론이 될지 의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영방송 회의체가 5~12명 수준이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방송법은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한다. 과거의 낡은 법제가 문제다. 현재 방송의 매체부터 이용 방법, 수단 모두 바뀌지 않았나. 공영방송사들도 지금 유튜브나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한다.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유통에 관한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이런 사각지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렇듯 현재에 맞게 이용자, 즉 국민의 편익 제고와 관련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도 다시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하냐는 말도 나온다. 해외에서 공영방송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상업방송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영역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 방송법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편파·왜곡 방송에 돌을 던지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이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런 법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도 더는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을 맞춘 개악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의 답입니다.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 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정부, 연방정부 대표를 비롯해 지역·종교계·노동계·사회단

체·언론계는 물론이고 추방자 연합, 스탈린 희생자, 이민자, 성소수자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권 몫을 줄이고 추천 단체를 늘렸다는 점에서 독일 방송평의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수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여 개 단체가 추천하는 20여 명의 이사로 다원화된 사회의 영역별 대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분야별 대표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는 독일 제도 역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추천 단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야별 다양성보다는 같은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띄고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방송평의회 구성 방식에 비추어 봐도 야당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들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고 국회 추천 몫을 뺀 방송·언론학계, 방송 직능단체들이 모두 언론·방송 관련 단체들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 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 규제·감독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고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 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도입을 통해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안에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명시 등 공영방송 별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다원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단일 기구에 의한 규제 독점 및 정치적 갈등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라고 편성과 경영 관련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내부와 외부 규제 시스템 분리로 민주적 다원주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율성이나 취재 보도의 자유도 이전에 비해 크게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를 풍자하는 것을 넘어 슬리퍼 신고 대통령 등 뒤에 대고 고함을 쳐도 되는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왜곡된 정보들이 창궐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매체 환경이 자유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결국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의 이념적 지향성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이 분열되고 의식이 다양화되는 극단적 원심 효과를 견제해 사회적 균형감을 형성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C가 6·25 기념식을 중계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입니다. 혹시 한국의 권위주의적 특수 현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국가 행사나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기제입니다. 더욱이 6·25는 아직 전쟁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고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기억 속의 역사가 아닌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으며 6·25 당시와 유사한 대립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이했던 6·25 전쟁 74주년 행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식 중계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한 MBC의 행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MBC는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편파방송과 허위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종 심의·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 심각성만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

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민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고, 관련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 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친화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성격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를 학계에서 3분의 1 가까이 추천하는지 솔직히 들어 본 적조차 없고, 더구나 3개 학회의 구성 또한 사실상 크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추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린 것은 이 학회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이 추천 단체들이 어떤 국민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국민 합의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대표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야당이 인정하는 정파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 방송판의 자화상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방송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상적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런 형태를 그야말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저질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만든 현행 방송 관련 제도들이 도리어 방송을 극한의 정치판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개정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소극적 태도로 미루다 21대에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합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던 개정법안을 포기하고 집권 이후 기존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은 개정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언론노조를 비롯해 야당에 친화적이거나 활동을 같이 해 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송 4법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 점유율과 영향력 모두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 훼손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영부터 보도·제작 분야 보직자들이 대거 언론노조에 가입하고 결국 편성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MBC가 사실상 노영방송이라는 의미라며 정치 규약을 가진 민노총 산하 노조에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것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에도 위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입법독재 체제를 발판으로 제어장치가 없는 무궤도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야당의 입법 난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어장치가 없는 민주당의 극단 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좌파세력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대국민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국민의 성공을 위해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흠집 내는 데만 몰두해 온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언론자유나 공정보도 같은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직접 관련이 없고 특히 언론의 구조적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나 정치적 독립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 공익성 같은 의제를 야당과 좌파세력이 전유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먼저 목소리 높여 선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좌파정권이 훨씬 더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곡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비열하게 탄압한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어용 언론인들이 여전히 주요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런 구조 아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외려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KBS), 혹은 6 대 3(MBC)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어떤 단체도 이런 정치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인씩 총 6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 시청자위원회는 거의 좌파 또는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문사회 계열 학회가 그렇듯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들 또한 좌파·진보성향 학자들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방송 관련 단체들도 오래전부터 언론노조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해 온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 야당 몫 최소 2인을 합하면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이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내막을 알기 어려운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 그런 포장술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

다.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를 언론자유나 공익으로 포장하는 능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황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 공세를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 정권을 언론탄압하는 반민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말씀입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노조나 진보·좌파 성향 인사·단체 입맛에 맞도록 지배구조가 개악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야의 힘을 동원해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내용적 위헌 요소, 글로벌 스탠더드 불일치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86조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토론을 위해 60일 동안 각 당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만 과다 대표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영성·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66인의 이사진 중 17개 시도에서 20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소수민족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직역별로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가의 추천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방송 유관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추천 인사는 소수에 그치며 대신 수십 명이 다양한 직역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야당의 개정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규모의 이사진 구성 방식은 지난 수백 년 쌓인 독일의 전통적인 직역별 대표제도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 중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의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따른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ZDF 방식을 참조했다고 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 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을 두 배로 늘린 것은 대한민국 학계의 좌편향 또는 조직화된 소수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2017년 MBC·KBS 경영진을 힘으로 쫓아낼 때 한국의 3대 언론학회라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학자 472명이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의 성향도 편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발의안의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방문진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어 숫자를 늘렸습니다. 아직 방문진 정관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는 MBC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MBC는 박성제 사장 때인 2020년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해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 4 대 3으로 구성했는데 의결에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MBC에서는 시청자위원도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시청자위원들이 방문진 이사 4명을 추천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추천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방문진 이사 21명 가운데 무려 6명을 추천한다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언론노조와 구성원들이 대부분 겹쳐 초록 동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3개 단체 회장들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SBS 기자인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을 맡았던 언론노조 간부 출신입니다. 전임 방송기자연합회장들이 안형준 현 MBC 사장과 성재호 전 KBS 보도국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조직의 성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교육문화국장을 지냈고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친민주당·친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친언론노조·친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 이 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직들이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허울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방문진법 제9조제5항을 신설해 사장 선임 투표가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사장으로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로 MBC 사장을 뽑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초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자고 선전했고 정필모 의원의 방문진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를 슬쩍 다수결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일단 좌파진영이 방문진 이사 3분의 2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3분의 2 선이 무너지면 다수결로 MBC 사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입니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8일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정책발표회 때 허태정 후보는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형준 후보도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사장 지원 직전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BC 경영권이 계속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있으면 추정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방송사 MBC가 좌파 인사들의 독무대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이 극심한 편파 보도로 비난을 받다가 작년 말 결국 하차했습니다. MBC가 이 가운데 신장식 의원을 즉시 영입했습니다.

MBC의 이 같은 행태로 국민의 불신과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안이 발효되면 그 뒤로는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가 표명돼도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MBC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국민주권을 신장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MBC가 최근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진은 지난 2월 시민 15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시켰습니다. 시민평가단이 방문진 1차 면접을 통과한 사장후보 3명 중 2명을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박성제 당시 사장이 유력한 경쟁자들을 1차 면접 때 탈락시켜 자신이 선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정책발표회 때 '나는 들러리'라고 말했고 안형준 후보는 발표문마저 제대로 숙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는 등 준비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 1인 2표씩 투표한 결과 뜻밖에 박성제 사장이 탈락했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탈락한 뒤 SNS에 '처음 도입된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이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한동안 침묵했고 오마이뉴스는 'MBC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MBC 사장 선발이 다시 실시된다면 지적받은 운영 방식, 예상 밖의 결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입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

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 이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괴리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내부적 편파성을 오히려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아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 추천권을 가진 3개 단체는 해당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말했습니다. 방송 3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헌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다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폭압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방송장악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왜 이 법률이 법상식에도 또 공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오직 정략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만 있는 폭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5인 위원회인 방통위의 의결 구조에서 기존 2인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 개의가 가능했던 구조를 4인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재 위원 2인의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 없이는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익과는 상관없이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도 의사정족수 도입 시 회의 개의가 제한되므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국민 권익과 관련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해당 상임위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이번 본회의에 다수를 앞세워 상정한 것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4조 및 제73조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 또는 위원회도 구성인원의 80%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법상식으로도 일반상식으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에 다수당임에도 이러한 법을 발의도 통과도 시키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그 의도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맘에 들지 않으나 성적만은 잘 받고 싶은 대학생이 수업은 오직 수강인원 80%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대 해외 OTT 업체들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민심을 외면한 정략적인 추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한 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전문가층 일각에서 이제 위원회 형태의 방송규제기구가 한국 정치문화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정치가 점점 더 극단적 증오와 대립이라는 야만적 상황으로 변질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이나 공정성 같은 추상적 명분에 함몰된 무기력한 위원회 기구보다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영국과 같은 독임제 기구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각종 통신 관련 지표들이 크게 하락해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방송 현안들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매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 갈수록 위력을 더해 가고 있는 글로벌 OTT 규제 그리고 고질적인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같은 정책 현안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협상 거부 움직임은 방송 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방송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방치된 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입법 독재는 그들이 공익과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방송장악을 통한 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을 걸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회의 개의 요건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자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내세운 것은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거부한 채 오직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를 조직하기 위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고 2022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지금까지 민주당은 묵묵부답 지연전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 내용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일부가 2016년 이후

열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한 지 이미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는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며 회의 의결 요건까지 상식 밖의 출석률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 보이십니까?

민주당은 매번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로는 외칩니다. 제발 국익과 공익을 자당의 사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과 국익 그리고 공익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정리정략적인 법 개정안 말고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OTT 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방통위 고유 업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소속 언론단체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중 이사 선임에 있어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회의 방송사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당연히 방송에 있어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단체에는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를 편향된 단체로 규정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과거 행적을 따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기자연합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2024년 7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지명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대전MBC 사장 시절 유흥주점과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수없이 사용한 내용이 터져 나왔다. 모두 광고 수주와 회사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최고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는 해명이 기가 막힌다. 정말 이진숙답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시절 이진숙다운 지시로 뉴스룸을 망친 장본인이다. 종군기자 출신이던 자신과 친분이 있던 중동지역 사람들과 중동지역 뉴스를 연일 제작해 방영하도록 지시했다. 중동대사를 불러 대담하고 이집트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도 했다. 공영방송을 마치 자신의 SNS처럼 친분 과시의 수단으로 사유화했다. 요르단 현지를 취재했던 뉴스는 때만 되면 흑역사처럼 소환돼 기자들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돌격대장 이진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극우의 편에 서서 5·18을 폄훼하고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갈라치는 모습에

섬뜩한 기시감을 느낀다. 우리가 느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언론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좌파쯤으로 치부해 억누르고 공영방송을 사영화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편협한 사고관으로 방송과 언론계 전체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에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이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이라며 일방적인 본인 주장만 나열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집단과 입장이 같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2024년 7월 4일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참담하다. 그에게 MBC 전 기자라는 소개는 어울리지 않는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동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MBC 흑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2012년 MBC 기자회가 회원에서 제명했던 이진숙이다. 그런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C 장악을 넘어 다시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할 수 없게 파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의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강요하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차별적 심의와 징계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언론관을 구현할 적임자가 이진숙 씨라는 것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의 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도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비수를 꽂으며 MBC 뉴스를 사회적 흉기로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MBC 뉴스 신뢰도와 시청률 추락의 시발점에 있는 것이 이진숙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탄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김홍일 전 위원장은 긴급회의까지 열어 가며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사퇴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을 보니 딱 한 가지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다급하다는 것이다. 다급하면 헛발질을 남발하기 마련이다. 이진숙 지명부터 철회해라. MBC 장악 시도를 멈춰라. MBC 기자들은 공영방송 기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막무가내 장악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연합회 등과 함께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4개 법안 중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였던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힌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원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

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 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 현업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을 포함한 원로 언론인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규제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일각 언론 징벌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방심위와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법정 제재를 퍼부어 비판언론 말살을 꾀하는 마당에 징벌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듯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입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수는 없다.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다시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에 언론탄압의 날개를 달아 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 포기를 요구드립니다. 지금은 방송장악을 저지할 방송 3법 입법에 집중할 때입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 사유재산 이용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담은 내용으로, 편향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19일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서 1994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해 왔던 TV 수신료 제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 4개 단체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해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다시 말해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 4개 단체는 KBS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런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 4개 단체는 언론 현혹 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4개 단체는 국민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다. 정권이 치졸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협박하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PD연합회는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행보를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를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방송기자연합회의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부각되었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자 국민감시단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감시단에서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지지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지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KBS와 MBC 등에서 민주당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내부 갈등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에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이를 지지하며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의 언론정책을 지지하는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KBS와 MBC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방송PD연합회입니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한국방송PD연합회는 이진숙 후보에 대한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이진숙 후보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자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에 나선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MBC에 몸담았던 이진숙 후보자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 자리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성진 한겨레 기자 등 이진숙 후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석해 증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2012년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비밀회동을 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 통화한 뒤에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겨레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 사실을 보도하자 MBC는 불법 도청이라 규정하고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일방적인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민영화 음모를 덮기 위해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건 당사자인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MBC는 공공재인 전파를 무기 삼아 음해성 허위 왜곡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일주일간 뉴스데스크와 라디오 뉴스를 포함해 사십, 오십여 차례 보도했다. MBC와 이진숙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진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칼 들고 나타난 전사처럼 살벌하게 휘둘렀다고 회고합니다. 부당 전보를 인정받아 복귀한 직원을 다시 타 부서로 보내는 등 집요하게 보복 인사를 저질렀다. 방통위원장으로 돌아온 이진숙이 어떤 한을 품고 보복과 응징을 할지 우려된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2023년에 한국방송PD연합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비판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김어준은 2022년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김 PD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선후보 출마를 거론하며 '지금부터 당신들이, 청중 및 시청자들이 도와줘야 해'라며,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 왔거든'이라며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PD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방송PD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PD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한국방송PD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PD연합회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이 단체는, 2023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44개 단체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언론개혁과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라며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언론개혁과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로 해석된 부분입니다.

2019년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 법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과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정치 편향성이 다분히 보이는 성명 발표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후보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재명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향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소속 방송사들이 다분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

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로 보여졌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KBS와 MBC 등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고 1995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활동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고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괴한 구조가 되어 이는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해화가 우려됩니다.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진 구성을 특정 세력이 사실상 좌지우지함으로써 기사의 본질, 방향, 가치는 상실되고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국민들의 가치 판단과 의견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론을 오도하고 사건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객관적 사실 보도를 통한 사회적 여론 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날 나치 독일의 선전국장 괴벨스는 거짓말을 계속하면 대중이 곧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조소한 바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의도대로 가짜뉴스가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하면 국기는 문란해지고 나라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진실과 탈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사기꾼이 득세합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 작동하는 방통위의 권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좌파진영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민심 왜곡으로 초래되는 국가의 혼란입니까, 정권 찬탈입니까?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나치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목표입니까? 야권의 강행처리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악법인데 국민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21대 국회 첫 부결 때부터 방송 4법의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에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며 이사 배분에서 국회의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도 친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 버리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은 정권 응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서 이사회 추천을 국회 5명, 직능단체 6명, 학회 6명 등이 하도록 했는데 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에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라며 벌써 민주당이 추천권을 주려는 직능단체와 학회는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라는 비판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사추천 자격을 가진 단체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이 같은 민주당식의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힘으로 내쫓았다, 이래 놓고 이제는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워진 직능단체와 학회 등을 이용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날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방송사 경영진을 축출할 때 방송법은커녕 최소한의 사회윤리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방송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법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하려 합니까? 앞뒤 다른 내로남불식 방송장악 시도가 이미 사설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숱하게 지적돼 왔음에도 의석수를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 그 어느 국민께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KBS 강규형 이사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횡포로 인해 방송사 출입을 저지당하고 자신이 재직했던 대학교에서까지 피해를 입었던 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난폭하게 방송을 장악해 온 게 바로 민주당 중심의 좌파세력입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정치권력을 다시 거머쥐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방송 4법 추진 의도인 겁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추진해 온 사회단체 미디어연대는 이달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방통위법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 개정에 결사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좌편향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대리조직으로 내세워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갖고 있던 정치적 영향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 KBS는 이사진이 교체가 되었고 YTN은 민간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두 방송사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는 최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윤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편드는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MBC를 사수하려는 민주당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MBC의 구사대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가운데 방문진과 KBS, EBS의 현재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9월에 걸쳐 끝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문진 현 이사 9명 중 6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차기 이사진 구도는 6 대 3으로 역전될 전망이라고 내다보며 그러면 MBC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전위조직 같은 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은 군소 야당들과 손잡고 방송 3법을 개정해 이들 3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정치권 외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이사후보 추천권을 주려 하고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이처럼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결국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탄받는 지상파 보도 환경을 민주당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공은 줄이고 실은 부각하면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 그것이 결국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장악의 포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디어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미디어 관련 학회나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는 좌파 언론노조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방송 3법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언론노조, 나아가 민주당의 손아귀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이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 4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단호히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간 드러난 민주당 행보는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복리와는 관계없어 보인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기득권을 절대 수호하는 한편 온갖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또 수사받는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산업을 더욱더 첨단화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 나라의 제1 야당이 그간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 유지와 당대표 방탄에만 혈안이 돼 벌이는 온갖 기행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더 볼지 사뭇 걱정됩니다.

민주당 여러분, 정녕 이런 지적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방송이 문화산업과 과학기술의 첨단 역할을 해야 할 때 정치뉴스 왜곡 편집에 골몰하는 수준으로 전락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 국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곤두박질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짜뉴스, 조작선동, 정치편향, 그동안 그 단맛을 좌파세력이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 당시 최철호 KBS PD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다 바뀌었나.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지지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이 됐지 않나'라며 '지금의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교통방송의 경영진을 보시라. 전부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친언론노조 인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최 PD는 '그렇다고 해도 방송은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자질이 없는, 검증도 안 된 부적절한 사람들을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앉히고 주요 출연자로 내세웠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상파 방송사마다 돌아가며 뉴스도 시사 프로도 매한가지로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비판적 논평을 일삼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태평성대여서 방송사들이 그렇게 입 다물고 칭송의 눈빛만 보내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최철호 PD는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매체들이 편파보도를 했다면, 그것도 선거기간에 그런 짓을 자행했다면 이는 국민 권리에 대한 중대침해 아닌가라는 월간조선의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라디오에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편파방송이 진행되는 거다. 종일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행태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른 참정권의 행사다. 국민의 표가 제대로 행사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편파방송은 국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다’.

방송장악이 정권 탈취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기어이 헌법 유린을 자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권리와 투표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특정 진영이 감히 한 나라의 헌법정신까지 파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악의에 찬 진영논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로 막대한 세금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적 이익 달성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지난 6월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으로 방송 3사의 비상임 이사진이 63명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이사회 운영비용이 37억 535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KBS의 경우 현재 11명의 연간 이사회 운영비용으로 4억 1376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사회 참석 1회당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3법으로 KBS 이사진이 2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사회 운영비용도 9억 38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직무수당과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운영경비 등이 포함입니다. MBC의 경우 현재 9명의 이사회 운영비용 5억 9915만 원이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비용도 13억 9801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목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 연간 840만 원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워크숍 회의비, 회의진행비 등이 포함된 액수라고 합니다. 정파 논리에 골몰하여 불요불급한 탁상공론으로 치달을 것이 뻔한 방송사별 회의를 위해 국민들이 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해당 법의 상황 논리나 명분에만 치중할 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25만 원 살포로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려 했던 정당답게 국민의 혈세나 나라의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는 속임수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기만적으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방송 4법은 특히 공론화 과정 없이 야권의 입법 폭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심지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까지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자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22대 국회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만약 정부 입법이라면 이렇게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조항제 부산대 교수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갖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을 주장하는 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수는 어떤 법이든 일

방적으로 통과되면 국회가 바뀐 뒤 재개정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복 정치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성향 언론학자들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상황에서 방송 4법을 밀어붙인다라는 건 민주당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 불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당독재가 이어질 테니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오만을 품고 악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진보학자들까지 역설한 합의의 테이블, 협상의 과정을 무시하고 걷어찰 만큼 민주당은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력이 탐이 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방송 운영을 이끌 게 아닙니까. 진보학자들의 지적까지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난폭 입법을 질주하는 민주당이 진짜 진보 맞습니까?

(「더 세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더 세게 할까요?

진보의 탈을 쓴 위선의 독재와 독재를 탐닉하는 가짜 진보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고 독재당으로 바꾸십시오. 정치 이익만 달성할 수 있으면, 이재명 아버지 사법리스크만 방탄하고 정권 찬탈할 수 있으면 진보도 버리고 민주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면 됩니다.

김용민 의원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KBS, YTN을 우리 정부가 장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과방위 인사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고인으로 나선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퇴장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당시 KBS에서 벌어졌던 좌파세력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적나라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듣기 싫다라는 이유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강규형 전 이사는 문재인 출범 첫해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을 압박하던 언론노조원들로부터 자택, 직장 등에서 사퇴 압박과 함께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이사가 2017년 당시 수십 명이 달려들어 야만적인 집단린치를 가한 사건 등 발언을 이어 가자 최민희 위원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걸 제재하겠다 하며 발언을 끊고 퇴장시키려 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듣기 싫어 답변을 막느냐라며 이럴 거면 증인 불러 답변을 듣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방송장악 사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했다라고, YTN을 장악했다라고 버젓이 이 같은 폭거를 자행하면서 이 무너진 보도 균형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씌운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의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혹시 느끼십니까?

이미 민주당 입맛대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MBC에서 공영방송 정당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MBC 제3노조는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 4법 가운데 특히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장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 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민주당이 노리는 이러한 책임 전환 효과 외에도 국회의 유권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였을 때 이미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헌재의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MBC 제3노조는 울분에 찬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은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관습헌법을 깨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다 갖겠다고 선포했으며 18개 상임위 가운데 7개라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편성규약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요 법안으로 소개한 뒤 MBC 3노조 등이 반발하자 13일 정책의총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당론에서 뺐다라고 합니다. 간 보기에 나섰다가 반발이 나오자 꼬리 자르기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 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MBC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KBS 노동조합 역시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이 수신료 위기에 몰린 자사의 경영 실태를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 왔던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은 KBS 노동조합의 성명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해 이사를 뽑을 권한도, 이유도 없다. 현업 단체는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

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수신료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 자리는 묻지 마 득템하는 따놓은 당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2~3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시청자위원회, 현업 단체가 특정 정치세력의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양승동, 김의철 전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세력들이 KBS를 장악해 무능경영과 편파방송, 가짜뉴스 보도 참사로 인해 참다못한 국민이 등 돌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위기가 벌어진 KBS에, 이런 악법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은 더욱 KBS를 신뢰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민이 등 돌려 수신료 대위기에 처한 KBS가 또다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방송법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시점이다.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이 같은 절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더욱 기울여 아예 좌우의 날개를 꺾어 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MBC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왜곡 미화하여 보도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력 지상파 언론이 이처럼 민주당 쪽으로 뉴스의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악법이 도입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의 기능은 분명히 마비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MBC의 편파보도를 문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7시 40분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3법 개정안을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PD협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같은 직능단체들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여야, 대통령만 추천하는 이사진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들이 모두 야권 성향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보도했으나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에 좌편향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대거 참여하게 해 좌파진영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더욱이 MBC는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일정대로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국민의힘의 비판을 단 2개의 문장으로 짧게 소개한 반면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의 주장은 '공영방송 이사추천권, PD협회·기자협회·학계·직능단체·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라는 자막까지 방송하며 상세히 소개를 하고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라거나 '방송 3법 개정안, 정치 후견주의 탈피 법안'이라는 자막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탈피시키는 법안이라고 왜곡해서 미화하였습니다.

또한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2024년 6월 10일, 뉴스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데, 고위공직자들 부인은 막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공직자들 부인은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남편이 세무서에 다니는데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몇백만 원 백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부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선물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지?'라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이라고 말했으나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설령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입법 미비를 방치한 국회를 비판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가 마치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조사라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다음, 또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치 지도자 잇단 피습, 유럽 극우 우려' 리포트에서 덴마크 총리가 수도 한복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서 앞서 슬로바키아 총리도 피격당했고 독일에서는 의원과 경제장관이 연이어 테러를 당했다면서 '정치 지도자를 향한 잇따른 피습 사건은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총리 테러범은 '체포된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제목에 '유럽 극우 우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리포트 말미에는 뜬금없이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6월부터 치러지고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약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최근 잇따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가 극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우파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위반에 들어갑니다.

지금 각 방송사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방송법 강행 처리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시즌 2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KBS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 감사실이 5년 동안 무려 7만여 건의 KBS 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민노총 노조 출신에 장악된 KBS 안에서 저항하던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하 성명의 내용입니다.

KBS 노동조합이 입수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KBS 감사실은 지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해마다 약 1만 2000여 건에서 2만여 건씩 모두 7만여 건의 사내 직원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KBS 노동조합은 KBS 감사실이 특정 노조원인 KBS 노동조합 조합원 다수를 대상으로 감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 모두 7만여 건에 이르는 무차별적 열람 속에는 특정 노조원을 겨냥한 집중 감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KBS 전 직원 수는 4000여 명이었으며 KBS 노동조합 조합원은 1000여 명이었다. 감사실은 직원의 주소와 가족 신상, 학력은 물론 사내 상벌 이력, 근태 현황,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감사법과 개인정보법에는 그 권한을 감사의 목적으로만 제한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용도나 특정 목적을 위한 사찰 목적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는 거의 100%에 이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 보직자가 전권을 휘둘러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파방송을 저질러 왔다. 근로자 과반에 육박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역시 이들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KBS노동조합은 투쟁에 투쟁을 거듭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방송 체제에 장악된 KBS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 대형 산불사태 때 재난특보 대신 정치 편향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 줘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허위 녹취록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터뜨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은 축소하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만 불공정하게 증폭시킨 이른바 생태탕 보도 참사도 일어났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리,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장관후보자는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KBS는 무려 160분을 할애해 중계방송을 한 반면에 반박하는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고작 28분만 중계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편향방송은 여전했습니다. 울릉도를 향한 북한 미사일 발사 경보가 2시간이나 늦었던 사고나 민노총 간첩단 체포 관련 뉴스 누락 등 공영방송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긴 민노총 노조세력이 장악한 양승동·김의철 사장 체제에 KBS 노동조합은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인한 수신료 위기를 막는다는 일념으로 조직력을 총동원해 결사항전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KBS 감사실은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 사찰해 온 것입니다. KBS 노동조합은 KBS 감사실의 만행에 충격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합원 내 피해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 극복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지상파 유력 언론들은 여전히 민노총·민주당의 입맛대로 뉴스를 재단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공영방송의 위상은 이제 민주당의 방송악법으로 형해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다 결사항전으로 내몰린 정의로운 방송인들은 탄압당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영방송이 좌파와 노조의 사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독재 민주당의 어버이 수령동지 이재명 전 대표께 외칩니다.

공영방송을 당신의 방탄조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공영방송을 당신의 전위부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공기로 남겨주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겁박과 입법 폭주를 그만두고 민생 우선 정치로 복귀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해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방송을 짓밟아도 국민 여론을 영원히 좌익 맹목적으로 가둬 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정권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악법에 의하여 공영방송의 늘어난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각종 방송……

(「이 사진이 아니고 이사진」 하는 의원 있음)

이사진을.

(「이사진」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사진을.

(「그냥 이사진」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사진이라고 했어요.

각종 방송 시민단체들이 좌파 진영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야권의 진영논리대로 구성될 것이 뻔한 운영진으로 공영방송이 잘못 가동된다면 국민들께서 가장 피해를 입으시게 될 것입니다. 방송장악으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서 여론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바로 민주당의 저의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민을 제물 삼아서 권력을 얻어본들 그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정녕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송이 무너지면 국민이 흔들리고 나라가 없으면 야당도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작금의 야권 편향 보도의 중심에 정상화가 시급한 MBC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MBC 경영진인 방문진의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MBC는 대선 또는 총선을 앞두고 교묘한 방법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우익 정당에 불리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번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1997년·2002년 김대업 병풍 보도, 2020년 총선 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 투자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 김대업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MBC가 패소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MBC는 2022년 대선 투표 3일 전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근거 없는 녹음 테이프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빌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를 덮어 준 것인 양 허위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대하여 2023년 9월경 현재 김만배와 신학림의 정치 공작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MBC 노조는 현재 단체협약상 규정된 보도국장, 편성국장, 제작담당국장 등에 대한 임

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이용하여 방송사의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MBC 노조가 가입한 전국언론노조는 강령상 정치위원회를 두고 민주노총,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직원이 어느 노조에 가입하는가는 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노동조합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법령의 테두리 안이라면 보장될 수 있으나 MBC 임직원이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작·보도할 때에는 공영방송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진보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등 방송을 노조의 정치도구로 악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듯 방문진 이사들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를 비판해 온 상황에서 그 이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른말 하나조차 제대로 못 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 방송악법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좌파 일색의 정치논리로 물들어 가면 편향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과 결탁한 언론노조의 정치세력화 교두보 노릇을 해야 되며 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뉴스만 생산하는 반쪽짜리 언론사로 전락해야 합니까? 왜 바른말 하는 사람은 내쫓고 진영 이익에 앞장서는 특정 정당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방송사는 방송을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해야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을 타락시키고 정치를 진정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행 처리되는 방송악법으로 유튜브 연예인 거짓 사망 영상보다 더욱 해괴망측한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해도 결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습니다. 방송사가 좌파세력의 권력기관이 되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만 쏟아 내는 패악을 저지른다 해도 정상화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약자를 참칭하고 진보로 둔갑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송악법의 앞잡이들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권은 각성하고 방송악법을 철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과 역사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진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선원)

(14시31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박선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박선원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오늘 무겁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초선 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온 부문이 파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체적인 파산 그것이 윤석열 정권 2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안보, 경제, 서민 생활, 민생 경제, 하다못해 수출부터 환경 그리고 교육, R&D 분야까지 모두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허망하게 바스라지듯 가라앉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와 탄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론·방송 분야입니다. 이미 이에 관한 연구와 논문은 매우 많습니다. 작년도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의 총체적 정부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질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현 정부는 전 정권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권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그분이 제대로 된 경제위기 대책 한번 여는 것 봤습니까? 안보관계장관회의 한번 여는 것 봤습니까? NSC 제대로 주재하는 것 보셨습니까?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일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V0, V1, V2…… V1, V2도 계시고요, V0, V1, V2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VIP가 많습니까?

국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안보 분야에 있든지 경제 분야에 있든지 노동·언론 관계에 있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책임 있는 해법과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닥치고 있는 도전에 대한 극복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지성은 실종되고 오로지 한 곳에서 술 먹고 주취폭력 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위기와 총체적 파산으로 몰아가고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국력이 단단해지고 그 장래가 빛을 발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래 또 그보다 가까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5년, 80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어느 순간 뒤로 한없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방송도 말해야 됩니다. 방송, 영어로 브로드캐스트, 넓게 널리 널리 펼쳐서 의견을 말하라 하는 것이 브로드캐스트의 어원입니다. 방송이 과연 얼마나 숨겨져 있고 뜻 있고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신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전혀 아닙니다.

언론장악을 야당이 한다고요? 정말 우리끼리 얼굴 마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민 KBS 사장,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면면, 그들의 경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취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짓을 한 사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같으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은 대한민국 진보정권의 언론 수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력이나 삶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웬 검찰 출신이 언론을 안다고, 언론 수사해서 합니까?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하는 제4의 권력이자 정의의 기둥이고 대한민국의 산소와 같은 존재, 언론을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오염되고 곳곳에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았기에 우리 당은 21대부터 꾸준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이번 방송 4법을 발의하였고 통과시켜서 더 나은 민주주의와 언론 신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정권 들어서 입만 열면, 연설만 하면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집권한 그 어떤 정권에 비해서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며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는 자유를 말할 자유와 자유를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설만 했다 하면 자유를 주장하시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연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언론을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잘 기획되고 준비된 국민과의 대화조차도 소화를 못 합니다. 언론인들의 질문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소화해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을 짓밟아야지요. 방송에 자신이 원하는 박민이라고 하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통제해야지요. 통제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정파와 정치적 지향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 피부로, 호흡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의 후퇴 바로 그 현장들입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SNS를 통제한다든지 유튜브의 언론 방송 내용을 검열한다든지. 이건 전두환 때 쓰던 방법이지요. 그 전두환 때 쓰던 방법을 또다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그것이 바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과 접한 이태원로의 집회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라든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이쪽은 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하는 곳 그곳만 150m 정도에서의 집회가, 시위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권이 좋아하는 시행령 통치로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꼼수 마왕이라는 저질스러운 표현을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써서 죄송합니다. 의장님께도 죄송한데요. 꼼수 마왕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회·시위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은 국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과 경찰이 아니면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탄압과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성스러운 저항권을 짓밟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 집시법의 시행령 개정 이것은 항차 계엄령 관련한 법안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당시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위수령은 지금 없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 못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릎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 곤봉을 사용하여 폭력으로써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군에게 넘겨주는 것이 위수령입니다. 그 위수령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보고……

다시 한번 화면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 계획 세부자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일견 계엄령과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

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되는 등 12·12 쿠데타를 기억하던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시 청와대는 26사단, 국방부·합참은 20사단, 국회 30사단, 정부청사는 26사단 등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시에 황교안 명의로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26사단은 청와대를, 20사단은 국방부·합참을 그리고 국회에는, 바로 이곳 국회에는 30사단 그리고 정부청사에는 26사단 등의 병력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사실이며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교훈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안보분야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최루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지요. 박근혜 탄핵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경찰로 옹위되는 철옹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친위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과거가 아닙니다—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을 곁에 두면서 검찰을 앞세워서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 검열까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장악과 검찰…… 탈법치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용산에서 나름대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

그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이 정권…… 제대로 일을 하면, 떳떳히 하면 광화문이 두렵겠습니까, 세종로가 두렵겠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동네 맥줏집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동화 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치권자의 퇴임 이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넓은, 국민들과 대면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그 반대로 일제 군부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옆에 주한미군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감청장치와 시설과 인력이 배치된 그곳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숨어들어가시는 그 모습, 과연 국민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그러한 철학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호실이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활동에 필요한 군·경·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지철의 경호실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조차, 총리조차, 내무부장관조차, 심지어 중앙정보부장조차 무시하고 대통령을 포위하듯 길을 감싸고 동선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차지철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호처, 경호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근접 경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심지어 일정 부분 경호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옆에 친근한 인상을 가진 경호원을 의도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경호실, 경호처도 있습니다. 권한은 약화시켰지요, 당연히. 두 종류의 경호실과 두 종류의 경호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호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권은 차지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탈법적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지요.

2023년 5월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실 판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논란이 되었던 2023년 5월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강력하지요?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지요. 아까 제 앞의 진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지요.

이처럼 집시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또다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 이례적인 인력 충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 평균 1.1%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용산경찰서, 11.1%의 병력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용산경찰서에 배치된 경찰력은 842명으로 2021년에 비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 17.1%, 123명이 증가하였고 서울 다른 경찰서들의 평균 1.1%를 훨씬 상회하는 인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축차적으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 경호의 경비업무를 일부 담당했던 종로경찰서의 662명, 2021년의 662명보다 30% 많은 숫자가 용산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내·외를 경호하던 101단을 빼고 말하는 수치입니다. 용산경찰서에 과도하게 경찰력을 배치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인 암살, 중요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 세력, 그러니까 타국으로부터 침투해 온 위해 세력, 반안보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암살, 중요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라든지 101단 같은 경우에 근접 경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테러팀……

(「박선원 의원님, 자세히 잘 파악했는데요 내용을 조금…… 이 법안에 관해서 토론해 주세요. 전혀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회의장이 다른 줄 알고 내가……」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법안에 대해 토론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건 일종의 문제 제기의 발제로 들어 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것 때문에 저 박선원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박선원 의원님, 주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예.

그래서 경찰청은 명칭 변경에 대해 '서울 지역의 특성상 업무 비중이 높은 위기관리·경호사무를 명시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존재해 왔던 경호사무를 지금에 와서 명시하는 근저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보자고요.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과잉경호, 심기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김용현 처장 체제의 문제입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점철된 라인이 군 관련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내의 인사가 특정 계보나 인연에 의해 목도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의장님, 주의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곧 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정리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 아직 15분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도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 드릴게요. 또 의장님께서도 주제에 집중하라 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들어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도매체 및……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 보세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선포 시부터 적용……

(「누굴 가르쳐요, 누굴」 하는 의원 있음)

예, 알려 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알려 준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천천히 하세요. 저요 끝까지 할게요. 시간 많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토론에 왜 ‘무제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내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여러분들 나오신 분 6시간 7시간 하시잖아요. 저 이제 이삼십 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계엄 관련 문서에.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이것은 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거예요, 증거. 이것 여러분 관계되는 정부,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앞을 보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나한테 말 거니까 친절하게 내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화면에 잘 나옵니다. 화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응해 줘서 힘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무제한토론의 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활력 있게 여야가 의견을 나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 뒷자리 계시니까 다선 같은데 한번 들어 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들어 봐요!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계엄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 61명, 거기에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씨라는 분을 왜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왜 김홍일 씨 같은 검찰 출신을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그 배경을 당신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16년 기준 등록된 방송·신문·통신매체 102개.

이 사람들이 102개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100여 개도 아니고 102개.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이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요? 방송……

(「앞에 보고 얘기해요」 하는 의원 있음)

어디 보든 내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뵙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

하고 싶어요. 저도 친구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제한토론 하자는 여러분들의 제안을 우리 당이 받아서 함께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찬성토론, 여러분은 반대토론. 저 토론 시작한 지 40분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공유해 보자 이거예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102개라고 했어요—통제요원 운용. 그 뒤에 붙임도 있습니다. 중앙매체(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는 계엄사 보도검열 조직에서, 지역매체(방송 32개, 신문 14개)는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2시간짜리 4개 오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헌법의 일관성,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의로운 국가로서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인식하시는 위대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 의지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라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곳에—16명), 이에 대해 기무사 1명, 현역 13명,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동원 34명, 동원도 군인입니다.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8명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내가 말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왜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언론·방송하고 관계 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쭉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줘 보세요. 어차피 우리 밤새야 돼요, 무제한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누구 보고 얘기하세요? 힘 빼지 말고 앞을 보고 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모르면서 어떻게 찾아와요?)

아니, 그쪽에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초선이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을 얘기해야 방문할 텐데……)

(「임이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중진이십니다, 중진」 하는 의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쪽 보라면 또 이쪽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좌익이네.

(웃음소리)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고 언론은 자유 창달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하에 마음껏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과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언론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 이런 내용도 있고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주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런 계획으로 쭉 설명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집권세력의 학맥 한번 봅시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이 있지요.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 '님' 자 한번 붙여 드릴게요. 8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1년 선배, 7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지휘감독권을 가진 분이지요, 12회.

방첩사령부 기무사령관 했던 여인형, 17회.

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부친 때부터의 근무 인연으로 인해서 특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경호처장 김용현,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그리고 현 신원식, 육사 37회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출신. 같은 보직 바로 이어 주고 이어받은 그런 관계, 국방부와 경호처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방첩사령부, 기무사, 수도사령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도사령부는 유사시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군대를 경호처로 이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언제 경호처가 경찰 앞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막고 팔 비틀려고 그러고 서류 갖다 주면 길 저쪽의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짓 하는 경호처 보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가면 경찰 앞세워 가지고 의원 목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계엄을 위해서 마치 의원들을 자극해서 의원들에게 경찰이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케 하고 그것을 뒤의 경호처가

백업 하다가 여차하면 지원병력 받아 가지고 진입 쿠데타 형식의 경비계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영방송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통심위 위원장하고 사무처장 둘이서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언론보도 통제하십시오. 그 권한 다 합수부에 주고 계엄사령부 검열단에 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언론이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시행계획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해야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탄압, 방심위 장악, 공영방송 장악, 검찰을 앞세운 탈법치, 검치, 마침내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한 친위그룹의 형성, 이란에서나 보는 혁명수비대 아닙니까, 이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각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안보정책을 검토한 그 결과 이들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같은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 관련 인력, 병력 증원,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군을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학교에 가면 학생 패고 언론인과 대화하면 언론 멱살 잡으려 하고 그 날카로운 손으로 국민들의 몸에 손을 댑니까, 감히 경호처 주제에?

그러면서 방송장악 다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위기를 느끼고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에 비교해 봐서 과연 이 법으로 민주적인 공영의 가치를 실행토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실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 좌파니, 걸핏하면 우리 당보고 방송을 장악하니…… 우리가 무슨 방송을 장악합니까? SNS도 검열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무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 최후의 마지막 절벽에 서서 풀뿌리를 잡겠다, 마지막 공영방송의 숨통을 유지해 보겠다……

의장님 안 계시니까 강한 표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처절하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송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본인들이 과연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 뒤에 의장님 계시니까 의장님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 가지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한테요?

(「의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늘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의장님이 왜 안 보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하실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합시다. 무제한인데 시간 많잖아요. 잠시 다녀오셔도 되고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이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올려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MBC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세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습니다. 2017년 2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군사 2급 비밀은 기무사에서 군사 2급 비밀로 작성을 했다가 너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군사 2급 비밀로 등재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고 국방부 장관 만나고 뛰어다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인데 형식적으로 이 문건은 군사 2급 비밀이 아닙니다. 군사 2급 비밀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등재되지도 않은 군사 2급 비밀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평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발전과 창달을 위해 평문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현상 진단 한번 봅시다.

현 상황 평가.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집회 등—그러니까 절반은 태극기가 한 거예요—보수·진보 세력 간 대립 지속. 태극기 집회 13회 연인원 1000만여 명, 촛불집회 16회 연인원 1325만여 명. 태극기 집회,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 동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먼저 비평화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조짐을 기무사에서 포착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치안을 누가 위태롭게 하는지 기무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촛불집회,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 진단 중의 하나입니다.

북극성 2호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3월—이것은 2017년을 뜻하겠지요—한미 KR·FE 연습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니까 내외로 불안하다 이런 뜻이지요.

한편 현행 계엄계획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현재의 계엄계획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 다소 제한. 쉽게 말씀드려서 군대가 튀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전망.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세력 준동, 대립 격화. 양측 모두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 헌법재판소 점거 등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 반정부 소요사태(집회·시위 등)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전망입니다.

무력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 고조.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돼서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거 시도로 군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 불가피. 이것 언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이버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 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사법·행정 기능 수행 제한, 국정 마비 초래.

당시에 민주진영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진영이 문제의 소지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단계별 조치.

단계.

계엄 준비,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계엄 해제.

조치사항.

계엄 준비에서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대비계획 검토. BH—청와대지요—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 조치.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절차의 시행, 정부 부처(기관) 지휘·감독, SC—소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스트레티지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방안 추진, 군사조치 시행.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선포하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항상 언론 대응이 들어와 있잖아요.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국회에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계엄 잘못됐다라고 해제를 의결할 수 있으며 해제 의결이 되면 즉각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 있어요.

계엄 해제.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해제 절차 시행,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군사조치 환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 계엄 준비 단계.

조치 중점.

정부부처 긴밀 협의하 계엄 선포 명분 확보, 계엄 선포 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준비,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언론·국회 보안대책 강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언론·국회 보안대책, 보완대책이 아니고 보안대책. 그러니까 국회도 모르게 언론도 모르게 순식간에 해치우고 나중에 언론들 짓밟고 국회도 짓밟자,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필요성.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싶겠지요. 우리는 절제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수언론에서, 잘 들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보수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도록 유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케 한다 또 혹은 동조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실린 거예요. 여기에 언론이 맨 앞장서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송법을 고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법만 갖고도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언론을 각각 해서, 각 언론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게 방송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있잖아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보수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제 KBS 박민 사장이 지시해 가지고 '자, 이제부터 군이 나와야 될 때다. 우국충정을 가진 존경하는 군에서 꼭 나와 주십시오', 왜 못 하겠습니까? 조선일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함'이라고 했던 조선일보들이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잘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수언론에서 이런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고 여기에 보수층 및 경제단체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석사논문으로 일본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세칸자이, 정·관·재, 삼재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권, 관, 재벌이 하나다.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요. 정·관·재·언입니다. 보수언론, 정치계, 관료, 재계가 하나로 뭉쳐서 지배 엘리트로서 상황을 장악하고 권력을 영속화한다 하는 것이 자민당의 꿈이며 바로 여러분들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꿈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당 이름도 빌려 오잖아요. 고쿠민노 치카라, 국민의힘 그런 당명을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는 민주, 평화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방금 한 3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할게요. 왜냐하면 벌써 서로 마음의 울림, 영어로 레저넌스(resonance), 공감이 있지요. 왜? 우리는 똑같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공감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대미·대중·대일 사전 교감. 이제 여기에서

중국은 빠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썼네요, '미국, 중국, 일본에게 사전 교감을 한다'. 아니, 미국, 중국, 일본이 쿠데타 하겠다는데 무슨 사전 교감을 해요. 이렇게 자신들의 부족한 전통성, 정당성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이런 줄을 하나씩 넣어 놓는 겁니다.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의 건의,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입법사항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신들도 늘 이게 불안하고 켕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계엄 선포 결심조견표에 의거 치안상태, 대북 위협 등 면밀 검토.

NSC(안보실장·행자부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안건. 원래 NSC에 행자부장관은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NSC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다른 장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다 하면 국토부장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환경부장관도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여기 행자부장관을 집어넣었지요, 경찰력과 합세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국·정책실장, 여기에서 국·정책실장은 뭡니까? 국방부의 국장, 정책실장입니다. 주도하에 계엄준비 TF 구성하 계엄기구 편성 등 검토. 북 도발 억제,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 임무 고려, 계엄사령관 추천안 마련.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설치 관련 운영지침 마련 및 유관기관—검찰·국정원·경찰·헌병 등—과 협조. 계엄사 검찰부·군사법원 설치 및 업무 인수.

다음 페이지, 군사 대비 계획 검토.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지정 및 규모 판단. 가용부대는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 플러스. 즉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그리고 기갑 2여단, 기갑 5여단, 특전사의 제1여단, 제3여단, 제9여단 및 가공스럽게도 707특임대대까지 동원해서 계엄임무를 수행하겠다.

아니, 탄핵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서 공영방송도 짓밟고…… 도저히 국민의 선한 정의, 선한 분노에 맞설 수 없을 때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경비계엄 할 가능성을 배제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장악은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방송 4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은 비록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통령실은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경호처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엄임무수행군 부대를 사전에 지정' 이렇게 해 놨지요?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기갑 2여단, 기갑 5여단, 특전사 1·3·9여단, 소위 1공수, 3공수, 9공수 그리고 707특임대대. 차마 특임이라는 말은 못 썼었어요, 자기들도.

중요 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 등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31개소),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누가? 계엄임무수행군이.

합참을 중심으로 KR/FE 연습 고려. 2월 말, 3월 초에 하는 군사훈련입니다. 한미 대북 억제대책 마련. 그러니까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정권도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BH·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조.

국무조정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 정부 컨트롤타워를 앞장세워서 허수아비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북·치안·해외 정보 실시간 공유 채널 가동. 합참·정보본부, 777부대, 스리 세븐이라고도 합니다, 777사령부·정보사 포함,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긴밀 협의.

계엄 선포 시기·범위, SC 방안, 정부부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방안 논의. 여기에서 SC가 뭐냐? SC는 전략적 의사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판단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SC가 바로……

(「국가 기밀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아니라고 설명했잖아요. 잠깐 다녀오셨어요? 전 세계에 이미 다 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은 2016년부터 작성돼서 2017년 2월 핵심 군 지휘부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이미…… 말씀드릴게요. 2000……

(장내 소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정을 수행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 제1의 가치이고 이 대한민국국회에 부여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 저거 하십시다, 개원식. 개원식 해서 집단으로 다시 선서하고 우리의 의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문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군사 2급 비밀 써 놓고 군사 2급 비밀 등재도 못 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군사 2급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기밀에서 아예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론화돼서 이런 계획 수립하지 못하도록 해서 군이 시민을 짓밟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봉쇄하기 위해 비밀 해제가 돼서 이것은 평문이에요. 평문이라는 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평문! 비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국회의원 하시려면 뭐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애국심이 있고 저도 애국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언론과 방송공영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왜 중요한가.

(「사과……」 하는 의원 있음)

그래야 대화가 부드럽고 좋잖아요, 의원님. 제가 속으로 사과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싶고, 제 친구도 많아요. 신성범 의원도 그렇고 임종득, 옛날 행정관으로

내 밑에 일하던 친구예요. 어디 갔네요?

(「말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동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내 소란)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임종득 의원님께 전해 주세요.

(「의장님 주의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소리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안 치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점잖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자, 다음 단계 갑시다.

아까 이게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해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임종득 의원에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 의원 오시라 그래요. 내가 사과할게요. 왜 그러세요?

(「사과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임종득 의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의장 우원식 동료 의원에 대한 호칭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동료 의원님들께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보고드리고 토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저한테 간단하게 하라 그러세요?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무제한토론을 안 하셨어야지요. 무제한토론을 하자고 하셨으면, 반대토론 지금 찬성토론의 한 두 배 정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도 조금은 해야지요.

(「편하시게 가져온 것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12시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오시고 지겨우시면…… 저 다음에 하시는 의원님이 박정하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오시고요.

천천히 하십시다.

(「몇 시에 오라고?」 하는 의원 있음)

한 9시나 10시는 와야 되지 않겠어요?

박정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하고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함께하자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잘 안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감정을 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냐…… 아니, 존경하는 의원님 이게 국가기밀로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평시에 군인들이, 기무사가, 국방장관이 이런 걸 지시해서 작성하고 준비시키는 게 그게 기밀로 존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은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송영무 장관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했던 것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재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주체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 건은 저희가 기밀 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밀 해제했다고 했어요. 제가 송영무 장관님이 해제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했어요, 이것은.

더 높은 권위로 이런 문서는 작성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군의 어떠한 시도나 계획, 심지어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문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 걸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 두 시간짜리를 한 세 번까지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그때 참 학생들 반응이 없으면 힘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김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이것은 송영무 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발언 때문에 재판까지 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작성의 의도와 주체에 대해서 혼선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게 제 발언이에요.)

이 문서 작성의 주체는 송영무 장관이 아니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김은혜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송영무 장관의 그 부분이 재판에 가 있기 때문에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혼선을 자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요. 이 문서가 국가기밀이냐, 전 세계에 알려도 되느냐…… 이런 문서가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계획을 해서 뭔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공개되는 것,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다. 이런 문서는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가기밀이어서도 안 된다. 평문으로 전환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보안 조치, 마지막 보안 조치 있지 않습니까?

‘계엄준비TF는 합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외부인 및 출입기자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해라. ‘정부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이것이 국가기밀로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이런 것을 계획했다면 이런 문서가 과연 합법적입니까?

그 어디에 정부부처 간 협의 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민간인이나 무슨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세력도 아니고 ‘정부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고 그래서 민의에 따라서 심판받아 내지는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대정부질의 및 설명 요구 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군 기본 입장 설명, 국내 정치 상황에 군의 불개입 입장 견지’라고 이것도 위장이겠지요.

‘계엄 선포 단계. 계엄합수수행기구 신속 설치, 계엄 업무 수행 체계 마련, 국내외 계엄

시행 지지 여론 형성 및 대북 억제력 유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또다시 여론 형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법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행토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유사시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권이 여기서 저리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민들의 희생 없으리라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서울의 봄’ 그 영화, 그 영화의 상황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당시에 광주민중항쟁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새 발의 피입니다, ‘서울의 봄’은. 현실에 비해서.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당시의 것들을 계속 이 문서에,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조금 낮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 시행.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후’…… 대통령이 부재 상태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의미하였겠지요. 대통령 시해 상태의 최규하가 연상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신속 통보 및 대국민 권고조치.

계엄 선포 당위성 및 조기 공공질서 회복 목표 제시. 정치권, 국민 지지 유도.

계엄사령관, 합수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 및 계엄합수기구 설치.

정부기관 지휘 감독. 계엄협조관 48명 파견 및 정부연락관 58명 소집, 지휘·감독 체계 구축.

뭐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시위 진압한다,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부부처 조정·통제 훈령 발령, 국가 행정기능 정상화.

정부부처 지휘·감독. 국내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계엄 시행 방침 설명, 국민 불안 해소 주력. 그 외 외신기자, 주한무관단 설명회 개최, 국가신인도 유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외신기자와 주한무관단에 설명을 하고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설명하겠다. 법조 출입기자 가지고 지금 검찰 통치하는 것 똑같지요.

군사조치 시행.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중요시설 접근로 차단 및 중요시설 방호 증원. 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 차단. 한미 긴밀 협의하 미국 전략자산 활용 대북 억제력 현시.

무슨 말입니까? 계엄령으로 권력 찬탈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미국에게 그럴싸하게 설명해서 활용하자.

더 재밌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미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한미동맹 강조. 계엄 선포 관련 군의 역할에 대한 대장병 메시지 하달, 군심 동요 방지. 합동수사본부 주요 직위자 관찰 및 군내 반계엄 세력 색출·처리.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장도영 숙청하듯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영방송이 죽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법안에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더 낫고 더 숭고한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법안 관련해서 찬성하는 저의 의지는 바로 이러한 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숨 쉬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 시행 단계. 계엄법 의거 사회 혼란 세력 색출 및 유언비어 차단, 사회질서 회복, 국회 내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청와대 진입로, 광화문, 국방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휴대폰 전파 방해. 그쪽으로 오면 휴대폰 안 터지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진입목 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 계엄지역 단체활동 금지 특별공고 및 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색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엄 상황에서? 상상이 가시지요?

총기·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 및 소지자 검거, 폭력시위 확대 방지,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합동수사본부 고첩 색출, 종북세력·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 국정원·경찰·헌병 등 정보수사기관 역할 조정, 수사방향 통제. 수사방향 통제 이것 무슨 말입니까? 아무거나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특정 방향으로 싹 끌어모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통제하겠다, 이것은 저의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 또 나옵니다, 언론 대응.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보도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 계엄사,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무슨 말이에요? SNS 게시글조차 실시간 관리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4개 법안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 지금 이미 뭐 네이버 다 장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에 의해서? 네이버·다음 그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은 대통령실에 행정관이다, 비서관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계엄사가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를 단일화하고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시위·선동 및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SNS·유튜브 등 계정 폐쇄.

자, 이 문서하고 계엄령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법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 우리가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보십시오.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 대상 엄중 처리.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결연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에 서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우리 당에서 발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방송 관계 4법이라 저는 판단하고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을 대상으로 엄중 처리하고 여야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유도해서 비상국면 조기 안정화에 협조토록 한다, 협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하게 만들어 놓고 비상국면을 조기에 안정화하면서 죽 쥐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쟁이다, 과방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법사위 심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칼 포퍼가 말했듯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겨 내야 될 장애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 과제,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79년, 1980년 이래 44년 만에 정말로 전대미문의 미증유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능하고 이토록 무도하며 이토록 방약무인한 이 정권이 언론과 정치세력을 탄압하면서 방송도 장악하고 마침내 경호처를 보강하고 집회·시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용산경찰서 인력을 대거 늘리고 서울경찰청 테러본부를 경호 업무로 전환케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문 앞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150m, 200m 전방에 가면 경찰들 복면 씌워 가지고…… 그들이 무슨 707 특임대입니까, 뭡니까? 대테러 특수부대, 카운터 테러 유닛(CTU)도 아닌데 왜 그들을 앞세워서 복면을 쓴 채 자기의 계급과 직책,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달하는 법사위의 문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의원님들의 팔을 비틀려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들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이 문서에 대해 복습과 예습이 있었다고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현천은 왜 왔을까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 계획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누구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을 계획하고 계엄을 꿈꾸는 자, 그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런 거지요.

지금 수방사령관 체제, 작전본부장 체제, 기무사 체제, 그것을 관리하는 경호처장, 이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다면 그것은 남가일몽……

(「김용현 처장하고 동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누가요?

(「조현천」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지요.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님.

저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야'. 문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야'. 우리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당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당을 포함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

건에 대해서 합의 유도시키고 이 정도에서 계엄 해제할 테니까 잘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뭡니까? 박정희 때 그랬어요. 박정희 때 민정이양 3개월 만에 하겠다, 얼마 만에 하겠다 이러면서 민정이양 했습니까? 출마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국민들에게 지지율 잃고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밀릴 것 같으니까 뭐 했습니까? 유신, 종신체제 만들었잖아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바로 그들의 그런 생각, 사고 이것이 칼 포퍼가 말한 민주주의 4대 적 중의 하나, 영구집권의 망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계엄 해제 단계.

계엄 해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비난 여론 최소화, 행정·사법 기능 등 정부부처 기능의 조속한 환원,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계엄 안정도 평가에 의거 치안 기능 회복 및 불안감 해소 등 해제 요건 평가, 국회 및 여론 동향 추이 등 고려 해제 시기 판단, 계엄 해제 절차 NSC 안보실장·행자부 등 협의 후 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이게 뭡니까? 계엄 기구 해체 및 행정·사법 임무 환원 등 정부 부처 업무 정상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여기 대통령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에 현 대통령만 집어넣으면 이거대로 실행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계엄 해제에 따른 관계부처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현재 군사 진행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조정, 군사 조치 환원, 계엄 임무 수행 군 복귀 및 경찰 책임하 집회·시위 통제.

향후 추진.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계획 완성 2017년 3월 3일까지. 기본 계획 및 우발 계획. 기본 계획이 있고 우발적인 각종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계획, 우발 계획. 그들의 용어로 컨틴전시 플랜 세운다 하는 거지요, 3월 3일까지. 그리고 사안별 세부 조치 매뉴얼 등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탄핵 심판 선고일에 한해서…… 그때까지, 여기서 '한'은 그때까지라는 뜻이지요.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 계엄 선포의 여건, 계엄 선포 건의 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시행 준비 착수, 탄핵 심판 선고일 D-2일부터, D-2일부터 준비해 두겠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국방부 계엄 준비 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철저한 보안 대책……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참고자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부분, 참고자료 목록을 한번 보시면, 아직 참고자료가 영상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면 현 상황,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 진보·보수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장관—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검토한다. 비상대책회의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는 합참의장, 육군총장, 연합부사령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정책실장 및 정보 및 작전본부장, 즉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으로 편성, 계엄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 시 계엄 성패와 직결.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어떻게 쓸 것인가, 언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방통위를 비롯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2인 체제로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는 재적 과반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5명에서 야당 몫을 임명 안 해 버리고 2인 체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3인이 돼야 과반수 아닙니까?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왜 이런 기형적인 체제를 손보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손보자,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손보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방송, 소위 정치적 중립성, 신속성, 공정성 그 모든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게 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늘 걱정하는 상황, 그 상황이 뭡니까? 일부 언론에서 공권력의 폭력 대응 등 편파 보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치안 및 사법질서 마비 초래. 언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인식 속에는. 그래서 언론이 통제되지 않고서는 다시는 계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탄핵심판 그 기간 중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하고 있던 그 시기에 군과 기무사, 일부 군 지휘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의 언론,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의 언론이 편파적이었습니까? 당시 일부 언론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아무리 허수아비라 해도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장관이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계엄사령관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계엄사령관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육군총장으로 알고 있는데—육군참모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됐든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군 지휘부에서 신원식 장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작전본부장, 경호처장 김용현,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현재의 수방사령관, 자신들의 직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이,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누구라도 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은 쓰리스타, 3성 장군 중장입니다. 총장은 육군총장입니다. 현재 합참의장은 해군입니다. 합참의장한테 안 맡기겠다는 거지요. 합참의장이 해군이고 육군총장한테 맡기거나 수방사령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을 복습했던 분들 그리고 예습하고 계시는 분들 눈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오늘의 언론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분들은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서 있게 단호하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하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할 것이고 필요하면 투쟁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칙하에 투쟁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앞에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감히 말하건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일부 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일부 세력에 의한 방송장악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의 형해화, 껍데

기만 남은 채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제2 제3의 박민 KBS 사장, 제2 제3의 이진숙 같은 분들로 채워서 SNS부터 유튜브, 포털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찬성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이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최소한 정면으로 저해하거나 아니면 짓밟으려고 하는 계획, 본성 내지는 관성이 강하게 바탕에 깔려 있음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합수본부 설치간 유관기관 조정·통제 방안.

이들은 협의·조정·임무의 어떤 분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조정하며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한다.

계엄사에서는 국정원,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 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관이 못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국정원 업무 중에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 조치임을 고지한다. 즉 계엄사가 국정원에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한다 하면서 계엄령이 선포 시에 대통령은 없고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와 수정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맨 처음에 계엄 언제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이따 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로. 조금 있으면 표가 나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엄 군사법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여기 상황 전제는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시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의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 지원 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것조차 필요 없다 하는 거지요.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판권의 위임, 마지막 동그라미로 돼 있지요.

계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반법원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일반법원에게 그 재판권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심, 2심에서 다 처리하고 2심은 바로 대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때도 사무가 너무 많고 일이 많다 하면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위임하고 그것도 통제한다.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가용 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사단 4개,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 기계화사단 8·20·26·30사단, 기갑여단 2·5여단, 특전사 1·3·9여단 그리고 707대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사단장들이, 지금 현 정부의 해당 사단장들이 이런 계획을 알고 있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편제돼서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게 하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자는 헌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싫다 하면 국정을 정말 책임 있게 잘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방향의 투쟁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의 대전환과 국정에서 파산이 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전면적 점검 실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 노력하라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반드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막아져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SNS 함부로 검열돼서는 안 되고 뉴스 포털 특정인에게, 만약 대통령실이라면, 대통령실이나 홍보수석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국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기로서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체계가 다 망가지고 그것의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민주성도, 어떠한 국민을 위한 공익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개정됨으로써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언론 일반의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흐르고 그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 속에서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정책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공통분모를 만들어 감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할 태세가 되어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언론개혁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송사들은 광고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현 집권세력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제도적이든 구조적이든.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 권력에 순응하거나 권력에 의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거의 모든 민주세계의 언론·방송사들은 그러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자본과 운영진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100%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송출되거나 그대로 보도되거나 하는 일은 이상적인 형식이겠지요. 아이디얼 타입(ideal typ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적 형태이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상적인 언론의 현 상태, 언론의 지향태, 언론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률체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방송 관계 4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득을 보고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막아야 된다.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케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자 집권세력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욱 공정하게, 더욱 떳떳하게 언론인들이 일할 수 있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고 기사를 쓸 수 있고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보의 흐름에서 차단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하자 하는 것이 ‘특정 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하면 민주당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특정 당에게 불리하다. 즉,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의 잘못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언론과 함께, 선한 집단지성과 함께하지 못한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언론은 보장되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는 더욱 강력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세부부대 편성표를 한번 보십시오.

임무지역별 세부부대 편성(전투력 할당), 무엇입니까? 치안력 보강 이런 것도 아니고 전투력 할당.

집회·시위 지역을 먼저 점령하자.

광화문 일대, 시청과 서울역 등에 26사단, 5기갑여단, 제3공수여단. 공수부대와 기갑부대와 육군 정예부대를 깔아 놓겠다, 광화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 이게 바뀌었겠지요, 이제. 광화문 일대에 깔려고 했던 26사단, 5기갑여단, 제3공수여단이 용산으로 오고 용산에 두려고 했던 20사단 1개 중대가 광화문으로 간다, 이 문서를 복습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촌,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 있는 신촌, 26사단 1개 대대. 대학로, 26사단 1개 대대. 서울대 일대, 서울대학교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입니다. 대대 병력을 한 300명으로 잡으면 한 육칠백 명을 깔겠다 이런 뜻이지요.

주요도로 통제.

톨게이트, 서서울톨게이트, 서울톨게이트, 동서울톨게이트, 30사단 1개 중대,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배치. 한강다리 10개, 그것은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이것은 30사단 1개 대대가 맡아라 하는 것이고.

이런 계획을 군 지휘부가 세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 지휘부는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안보 위협인 대북 억제에 집중해 주셔야지요.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 상황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현 통치권자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써 보겠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께 현재 국정운영의 파탄 상태와 그간의 정책 실패 소상히 밝히고 대대적으로 인적·정책적 쇄신을 하여 국민들에게 마지막이라도, 단 몇 %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상을 보장하고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뼈를 깎고 피눈물 흘리는 자기반성 속에서 국민들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에 가까운 야당에 대해서 그 지위와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함부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이 선출하고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니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감히 걸핏하면 좌파다, 우파다, 이념 색칠합니까? 어디에서 감히 그 폭압적인 검찰권력으로 야당의 지도자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검찰철권을 휘두르면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87년 이 헌법을 기초하고 작성하신 분들이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 앤드 데모크래틱(free and democratic)이라고 썼어요. 한글로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 쓰고 영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썼습니다.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일본 자민당의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입

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온 국민이 잘살든 못살든 부와 권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동등한 수준의 자유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린다는 매우 발전된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권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폄훼하거나 모욕 주지 마십시오.

감히 우리 민주정통세력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국가세력, 정말 그러한 용어 쓰지 마십시오. 천박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근거 없으며 매우 공격적이며 비생산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발언입니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존경하는 의장님의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 정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문서, 정부부처 통제방안.

정부부처 통제방안이요, 한번 찾아 주시겠습니까?

정부부처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처 30여 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중에 서열 14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위에서 17위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가 정부 전체를 통제하는 방안, 아직도 이런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니될 일입니다.

바로 그러할진대 이것을 가지고 임기를 채울 계획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처연한 일이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촉발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집권 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것을 수립해 낼 능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장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과 함께하며 그 어떤 일도 헌법적 원칙과 가치, 규정에 충실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정치적 권리를 지킬 것이며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군의 정부부처 통제 혹은 잘못된 통치권자의 경호처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린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애시당초에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부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코 교육받고 민주적 질서에서 호흡하고 성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주변에 작전본부장 출신, 수방사령관 출신으로 체제를 짰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각성하십시오.

법사위에서 문서 전달하려고 할 때 정중하게 수령하십시오. 예의를 다해서 국민의 대표를 맞이하시고 그간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고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절도 있는 법적 조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쓸데없는 꿈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바로 당신이기에, 두렵기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예습, 복습을 반복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집권세력의 미래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 절실함과 함께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을 거스르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귀하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부처 통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실의 6개월, 1년, 1년 6개월 쓰던 행정관·비서관, 부처 차관으로 장관으로 내려보내면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해서 짜여 가지고 경호처 앞세워서 경비계엄해 가지고 짓밟으면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는 일렁이는 노도, 분노한 파도, 그 정서에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처절하고 하루하루 비장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4법,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그러한 구조와 장치를 만들겠다, 마지막에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탄핵되고 계엄 준비해서 그 당시부터 계엄협조관을 운영하고 정부연락관을 운영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 관두십시오.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파견 지시를 내려서 24시간 내에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 파견, 업무 지휘 감독 및 협조를 끌어내겠다.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즉 국방부와 행자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엄사령부의 여러 부서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훈령으로 발령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엄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 조율, 이견사항 조율 그리고 위원장은 계엄사 부사령관, 위원은 군·정부부처·민간 분야 선정 인원 20인 이내, 처음부터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이런 것 꿈꾸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 세력은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때 2016년부터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이 계획, 그 이후 청와대 주요 보직자, 특정한 비서관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가 협조를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외교장관이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장악되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신 등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조하는 일을 외교부장관에게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일처리 하는 것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계엄시행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보도자료 배포, 주한 외교관 대상 언론 왜곡보도 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언론사까지 통제하겠다 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외신 기자 대상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외에 중요시설 방호 병력 편성 이것은 오늘의 주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맞지요, 의장님?

다음입니다.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들의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

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제가 아주 농담 한 말씀 올리면 학교 다닐 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누구하고 싸울 것도 아닌데 왜 늘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래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옆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고 대한민국이 광주하고 전쟁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황을 제가 조금 항상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어렵게 보고 거기에서부터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늘 긴장이 되어 있고 태도가 약간 경직된 것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선배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저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을 제가 잘 모셔야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상황에서 안보를 죽 담당해 왔고 또 지금도 항상 유사시에, 여기서 말하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또는 위기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유사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북의 남침도 있고 한중 군사충돌도 있고 한일 간의 독도에서 교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고민하고 대책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자산이라든가 세력 그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세력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로 우리가 어느 만큼 밀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서 반격을 한다든지 상황을 호전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매일, 너무 오랫동안 해 와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민간인답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좀 더 뭐랄까, 덜 긴장되고 오히려 사람이 여유가 있을수록 창조적이고 좀 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세력이나 여당이나 소위 말하는 국가권력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보았던 감사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저런 감사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검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질적으로 새로운 종, 다윈이 말하는 새로운 종이 나타났고 그 새로운 종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 정세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정책 방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극우에서 극좌까지 0에서 10, 10이 극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진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위치는 5·6·7에 있었거든요. 1부터 10이 있으면 5·6·7, 중도라고 하지만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9 아니면 10에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평소에 8·9에 존재해 있다가 우리는 5·6·7에 있고 저 사람은 8·9,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7·8 정도예요. 사실은 매우 보수적인 세력이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입니다. 그 중도층에서 이 사람은 훨씬 저쪽 극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6·7로 있었어도 우리 민중의 다수 대중으로부터 민주당은 보수적이다 말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9·10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다 보면 우리도 8·9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5·6·7을 견지하면서 8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서 이 정국을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정책, 더 나은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확장 안 시키려고 해도 저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기조가 또 저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경향,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함께했던 우리 다수의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약간 유리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하면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분들의 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대한, 우리가 극좌에서 극우까지, 10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4·15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려고 하니, 처음 본 집단인데 이것을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우리가 잡아내는 것도 힘들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여기까지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치적 대립구조나 어젠다, 정책 의제 간의 경합의 틀과 판이 그렇다는 건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상대하느냐, 저들이 워낙 상상하지 못할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사실은 싸우기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언론 지형에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보면, 이제 진짜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분께서 저를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10번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이것 한번만 좀 올려 주세요.

이것을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게 이 계엄사 문건이 왜 오늘의 이 주제와 연관 있느냐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가정돼 있느냐? 아까 모 의원이 죽 우리보고 좌파다 뭐다 하면서 했던 그런 시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도매체가 탄핵 결정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위대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공권력에 의한 시위대 강경 진압만 발췌해서 왜곡 방송하고 있고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은 편집하고 평화 시위 모습만 부각한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할 때 여러분, 단 하나의 짱돌 들어 본 기억 있습니까? 단 하나의 화염병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화적이었지요. 정말로 전면적인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도매체가 시위대 입장에 편파적으로, 시위대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정부 경찰 관련 부정적인 편파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때 누구도 정부나 경찰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한 적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법원이 정해 준 평화적 시위 범위 안에서만 시위를 했는데 이 문서 작성자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20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이 보고서 있지 않습니

까, 180개(기자 1만여 명)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갖고 있어요. ‘언론매체(TV·신문 등 인터넷)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이것 분석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무사와 방통위예요. 방통위를 어떻게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180여 개(기자 1만여 명), ‘언론매체(TV·신문 등 인터넷)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누가? 기무사와 방통위가.

구분을 해 뒀습니다. 언론, TV·라디오와 신문이 있다. 여기서 보수, YTN KBS CBS MBN 채널A tvN 등은 보수다.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보수다. 중도, MBC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한국일보. 그다음 진보, JTBC 뉴스1 등,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이 진보로 돼 있어요.

지금 2016년 기무사와 방통위에서 분류한 이 분류표와 지금 우리가 내지는 제가 정성적으로—제가 수치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인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연합뉴스 뉴시스, 뉴시스는 사실 제가 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연합뉴스를 왜 저들이 그렇게 사려고 했을까? 왜 일개 기업에게 대주주를 넘겼을까, 그래서 연합뉴스 YTN 지금 과연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에 진보였던 JTBC 뉴스1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언론 지형에서 남아 있는 것은 뭐만 남아 있습니까? 진보는 없지요. MBC 정도가 중도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인지적 판단입니다.

신문으로 보시면 그때는 서울신문 한국일보가 중도였고 그때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이 진보였는데 과연 매체의 힘,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동등하게 보수·중도·진보로 3분의 1씩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밑에 인터넷 매체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보수, 뉴데일리 독립신문 데일리NK 등. 중도, 경제투데이 등. 진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인터넷 매체 중에서 아마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를 빼면 과연 얼마나 중도 이쪽으로 좀 남아 있을까, 매우 암울한 상황이지요. 그 속에서 보수 언론 대상으로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시위대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언론 통제와 보도지침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말이 바로 있어요, 밑에. 언론매체·인터넷 통제 방안 수립 및 보도 검열 지침 하달 준비, 그것도 합참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국방부 공보관실 이런 것도 아니고 합동참모부가 이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엄사 보도검열단 편성 및 계엄 선포 시 소집 교육 준비, 이것은 합참·문체부·방통위에서 해라. 현재 보도검열단 편성은 대부분 전시 전환 및 동원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싹 조정해 가지고 대거 편입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계엄 선포 이후 보도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계엄사·합수본부·문체부·방통위에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본부 및 방송·신문·외신·공연 등 9개반 48명으로 편성을 해서 문체부에 61명 보내고 방통위 16명에게 검열을 위임하고, 언제 적 단어입니까, 이게? 검열을 위임하고 또는 위임하지 말고 직접 통제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 및 대책반(민관군 합동), 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보도 금지사항, 보도 금지사항입니다. 계엄에 위해되거나 공공질서에 위협, 군 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내용 등 보도를 금지시킨다. 거의 유신 긴급조치 구호입니다.

확대 보도사항, 그러니까 보도에서 죽여야 될 내용 금방 말씀드린 거고 더 키워서 크게 확대해서 보도해야 될 내용은 정부와 군 발표 내용, 반정부 의식을 불식시키는 내용,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 시위대, 민주 시민들 사기를 저하시켜라 하는 거지요.

보도매체의 검열 시행,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은 공통, 그러니까 계엄사·합수본부·문체부·방통위 모두 다 이 일을 해라 하는 거지요.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공통).

보도 금지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확대 보도사항, 더 키워서 보도할 내용 똑같습니다. 정부와 군의 발표 확대 보도하고 반정부 의식 불식시키는 것 크게 보도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도 확대 보도해라.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등 보도지침의 일상화 그런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위대가 혹시 습격할지도 모르니까 KBS→MBC→SBS→CBS로 방송 기능을 유지케 하고 방통위가 앞장서라. 다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제기한 방송 4법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방송 4법이 과연 그렇게 우리 당에게 유리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그 의원 이야기하는데 요약건대 이것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보시오, 되는 것 있나. 우리가 다 거부권 행사할 텐데'. 아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행정부가 아무리 집권당이고 집권세력하고 관계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토록 주장하는, 자기들 맨날 주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이 '법 열심히 만드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거부해 버릴 텐데요'. 지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정치적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거나 있는 것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발의하고 토론하고 여러 개 법, 여러 개 발의안이 4개 5개 있으니까 모아서 대안 입법하고 그 입법한 것을 또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법사위를 거쳐서 체계·자구 수정 등 법으로서의 기초 구성요건, 내용 다 다듬고 살펴 와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방송 4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고 이 무도한 윤석열 독재정권이 독재정치를 그만둔다, 그러한 기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언론의 마지막 자유, 방송종사자들의 마지막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 마지막 기관으로서 언론 수호를 해야 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작동 기제, 그것을 제공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매우

강력한 것 같지만 매우 소박한 그러한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짓밟고 조롱하고 아무런 되새김도, 반성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소위 무제한토론에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방송장악 운운하는 정말 잊지 못할, 있어서는 안 될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5시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단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법안 통과 시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의장님께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데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뵈면서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의장님께서 앞으로 표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늙은 초선이지만 자리를 지키고 버텨서 싸워서 이겨 내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싸워서 이겨 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어떤 '당신이 그래'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선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롱 웨이 투 고(Long way to go), 하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170석 180석 이런 의석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제발 잘 싸워라', 우리 당원들께서 뵐 때마다 '저는 핏속까지 파란색이니 이번에 꼭 승리해서 저 사람들 좀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세요'. 한 500% 순화시킨 겁니다, 제가 의장님 계셔 가지고. 한 500% 순화시켰거든요. '저것들을 때려잡아 갖고 어떻게 해 불든지 말든지 겁나게 거시기해 보랑게' 이런 식인데……

신성한 국회에서 일반적인, 정치 상징적인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면 정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소모전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그래도 전국 5400만 인구 중에서 175명, 180명도 안 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이 국회라는 곳에 보내 주신 우리 숭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닌 무제한토론 같아 보이는, 시간 때우기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서 무제한토론을 제시해 놓고 제가 들고 온 이 주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자들은. 제가 경호처장, 작전본부장 출신, 수방사령관, 신원식 장관,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이런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자체가 이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어떤 유사 상황도 사전에 예봉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꿈도 꾸지 마라, 국물 없다, 노 수프(no soup).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 내면…… 그토록 강고해 보였던 전두환도 우리가 이겨 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안보팀, 문재인 정부 안보팀이 수사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40여 명의 1급 이상 공직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됐었고 10여 명, 15명 정도가 재판에 시달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저에게 '당신이라도 가서, 국회에 좀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5·16 총알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신독재도 뚫고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해협에서 돌아가실 뻔했지만 살아 나오셨습니다. 5·17 광주 학살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두환의 독재 뚫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보안사, 기무사

다리에 돌멩이 묶어서 바다에 던져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껏해야 검찰 검사,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제가 존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곧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 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를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오더가 내려왔을 거예요. 무제한토론 지키고 철저히 장렬하게 투쟁하고 필요하다면 전사해라 뭐 이런 것이지 않았겠어요?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들은 계속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 법안 내놓으면 이건 쟁점 법안이다, 정쟁이다, 좌파다 몰아간 다음에 언론 공작하고 그 언론 공작의 어느 시점에서 무제한토론 또 걸고 무제한토론 걸어서 자기들의……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울 줄 몰랐겠지요. 좋다, 같이 하자, 찬반토론하자 해 가지고 뚫고 나가면 용산에서 거부권 스물다섯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열여섯 번 했나요? 25건 하라고 하십시오. 한 달에 5건씩 올려서 빨리 20건 채우게 해 주고 21건부터 도저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엄이 두려웠으면 이 문건 안 가지고 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한 번만 좀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언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작성한 표입니다.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운영.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검열단은 계엄사·문체부·방통위, 언론대책반은 합수본부 해서 각 본부·방송반·신문반·통신반·외신반·출판반·공연반·전시반·음반류·사이버대책반. 본부 밑에 도대체 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반, 9개 반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요즘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센티미터로 작두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사에서 몇 명씩 투입되는지, 문체부에서 몇 명씩 투입되는지 다 나와 있지요.

아까 소개되지 않은 통제해야 할 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지요. 오른쪽 끝에 ‘통제매체’ 거기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제해야 할 매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방송,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통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종편 등이지요. 신문 통제, 중앙일간지—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레거시 미디어 중에, 신문 중에 메이저들—잡지·공고물·간행물. 통신, 통신의 신속성, 정확성 해서 매우 기초적인 언론매체, 종합통신·전문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 메일·유무선 전화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일종의 위계적 구조예요,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order). 위계적 구조라 함은 뭐냐? 맨 위에,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한다. 왜?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방송으로 쏴 줄 수 있으니까 방송부터 통제하고 그다음에 일간지·잡지·간행물 그리고 통신사, 나아가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유무선 전화 등도 통제한다. 통신 전체를 통제한다. 아주 그냥 잡아먹다 배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걸 하겠다는 거지요, 인력을 투입해서. 사이버사, 정보사, 정보본부 등에서 키운 일상적 능력을 여기다가 투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제기구, 친한 단체, 심지어 교포 매체까지. 미국에 있는 교포 매체 MissyUSA 이런 데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언뜻 보면 원대하고 야심 찬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탐욕적인 것입니다. 탐욕적이라 함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하는, 되지 않을 망발에 다름 아니지만 그런 것이 기무사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기들끼리…… 한 서너 페이지라고 하면 그걸 개념계획이라고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겠는데 서너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반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초반에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사이버대책반 보십시오. 인터넷, SNS.

아이, 이것 의장님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 제가 주제 밖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의장 우원식 예, 말씀하세요.

○박선원 의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시도 내지는 우리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약 두 달, 우리가 국회 개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 들어온 지 두 달 좀 안 됩니다만 방송 관련 법안을 우리 당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MBC·KBS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이 숨 쉬고 역동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은 바로 이 문서에서 본 바와 같이 공영방송부터 통제하고 잡겠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부터 바로잡아야 되겠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에 우리 당이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킨,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기, 그러니까 숨 쉬는 공기가 있고요 공적인 기구라고 하는 그 공기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릇입니다. 수단이자 제도인 것이지요. 그 민주주의의 공기, 공영방송 저희가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거의 단말마적인 이 처절한 투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엾이 보아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함께 이 무제한토론장에서 버텨 가면서 싸우는 저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감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다음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인데,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부시장, 도지사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서 육군부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져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의 무기가 탈취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시위대를 경찰에 더해서 군과 함께 막는 것, 이것이 위수령인데 과거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내지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할 때 1965년에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었고 1971년 교련 반대 시위할 때 서울 지역에 위수령이 선포됐었고 1979년 부마항쟁 시에 위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 평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더 이상 위수령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평시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책임 있는 집권자와 정책 당국자가 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시위하는 분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는 것이 길이지 아무 때나 '시위를 진압해라' 해서 경찰력과 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위수령 자체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계엄입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뭐가 터져라, 터져서 보복 반격하고 국가를 비상사태에 몰아넣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세월 안보 분야에서 종사해 왔던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어떤 판단 능력이나 감각 능력이 불필요하게 예민해서 센서가 잘못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향 그리고 그러한 제보, 그러한 내부 토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19 학생 의거 때 서울 지역에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62년 5·16 쿠데타 때 전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시행 전 또는 후, 전에 대개 경비계엄 시행하고 비상계엄 하고 다시 경비계엄으로 낮추는, 그리하여 군이 또는 군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이 곧 매우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7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사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의 필요, 두 가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왼쪽 주먹은 계속 상대방을 때리는 척하면서 오른쪽 주먹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상대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는 그러한 대북 억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장관은 늘 북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외칩니다.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물풍선이 1600, 1700개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만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 긴장을 키우면서 도대체 우리 국익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안보를 관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안보를 이용합니까?

아까 산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군사전략가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가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작성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학장도 하신 분입니다. 국방부차관까지 했던 분이고 현재 전 세계 안보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분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안보란 산소와 같다’, 악시전(Oxygen)입니다.

이 안보, 산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국가권력은 국민과 그 국가에 산소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를 차단하거나 이 산소를 오염시키거나 이 산소의 밀도를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안보는 산소만큼 또는 산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졸도하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바로 그러한 안보를 가지고 말로 지극한 끝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안보는 힘으로 하는 거야’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정작 힘은 써 보지도 못하면서 평화만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는 이 무지몽매한 소위 집권 집단의 안보 세력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노리길래 걸핏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몇 배로 보복할 거야’ 하면서…… 주먹 한번 써 보지도 못한 것들이 정치를, 즉시 강력하게 북한에게 끝까지 싸우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받게 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낮추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향해야 할 국제적 투자유치는 차단시키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바로 유리한 정치 환경,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언론학에는 스핀 닥터(spin doct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핀 닥터. 한쪽에다가 방향을 줘 가지고 방향의 어떤 곡선을 형성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그것을……

○의장 우원식 박선원 의원님, 잠깐만……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의 주장, 이 방송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그런데, 그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누구 한 분이라도 와서 좀 들어야 어떤 논거로 찬성을 하고 있는지 당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한참 지켜봤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밖에 계시면 들어와서 찬성의견을 이야기 들으시는 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

우리 김희정 의원 처음 들어오셨는데……

(「아니요,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법과 무관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모욕하는 발언들을 이어 갔습니다. 본인이 과거 조직에서 데리고 있었다는 둥 아닌 둥 그렇게 의원에 대한 호칭도 붙이지 않고 그런 발언을 일삼았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발언에 대한 정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토론 계속하시지요,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박선원 의원 무제한토론을 제기하시고 무제한토론을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시면 철회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세요,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맞는 발언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방송 4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헌법 수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창달과 언론 가치 신장을 위해 지금 제가 3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싸구려, 좌파다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하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안하신 것은 반대토론할 가치가 있고 토론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들어와 보세요. 아니면 중단하시고 그냥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기 싫은 일 왜 하십니까, 여러분!

(「하기 싫으면 내려오세요, 그냥. 하기 싫으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는 할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신장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장치로서 반드시 이 법안은 발효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선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신조이고 그 신조에 입각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주제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을 유지하실 의사가 없지 않나…… 그러면 표결하실 수 있도록 빨리 시간 잡읍시다.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토론할 것 다 했다 이거지요?

(「계속하세요. 무제한토론이니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좋은 기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장 우원식 자, 박선원 의원님, 이제……

○박선원 의원 귀 당에서 토론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제한토론의 원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토론해 주시지요.

(「돌아가세요. 돌아가, 주제로」 하는 의원 있음)

○박선원 의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주제에 맞는 소리를 해야 우리가 앉아 있지. 주제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는 의원 있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제에 맞는지는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당 누구도 여러분들 반대토론하실 때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토론’ 돼 있잖아요.

(「계속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밖에서 듣는 건 TV로 보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밖에서 듣는 것이 편할……

(「아,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럽다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토론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찬성토론 신청하셔서 말씀하세요. 시끄럽다니!

(「본인 토론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모든 나라의……

(「존경하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우리 민주당의 입법 목표에 먹칠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토론을 철회하시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의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토론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대이자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의원님들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

(「우리도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많이 했어!

(「누가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참았던 거야! 왜? 내가 찬성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자, 토론에 집중해 주세요.

○박선원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토론 계속하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토론 지속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제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께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일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끼리끼리 앉아서 '아이고, 저 사람 보소' 하면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라도 계십시오. 정의의 목소리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불의의 세력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치가 있어야 듣지」 하는 의원 있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속기록을 통해서 역사가 알 것입니다.

(「무슨 역사 타령이야」 하는 의원 있음)

타령이라니!

(「아니, 토론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의장님이 토론하라 하셨기에 내가 하는 거지 귀하들께서 토론해라 마라 하는 것 듣고 제가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로지 국회에……

(청취 불능)

아니, 아프면 아프다, 네가 하는 말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이해해요. 귀하의 마음, 귀하의 정서, 귀하의 감정선에서 어떠한 느낌이 오고 가고 튕겨져 나왔을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이 되면 그에 맞게 저를 비난하든 뭘 하든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조직 가운데 국회는 가장 숭고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드높은 가치를 실현시키고 구현해야 할 장입니다. 이 장에서, 국회법에 수없이 많은 논쟁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탄생된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영국의 빅벤, 영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꼭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 아너러블 칼리그 멤버스(my honorable colleague members),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정쟁 아닌 정쟁을 지켜보시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주관하시는 우원식 의장님!

다시 한번 저희 당에서 발의한 방송 4법 왜 통과가 돼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정책과제를 설명할 때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보니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분석에 기초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찬성토론할 것입니다. 제가 산업자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방송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지 제가 그 각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맞게 안보 문제와 국가의 헌법적 항상성과 실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되는가, 방송 4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저의 방식에 맞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처럼……

(○복기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찬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료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설교와 좋은 목사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개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무리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도 밖에서 듣는다고 하니 과연 그것이 국회 운영상, 거기도 국회 본청인지 의사당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복기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

는 어떤 경험과 기준을 가질 수 있으시리라 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 가야 할, 우리 민주당이 현실로서 부딪히고 있는 소위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일진대 이것조차 우리가 이겨 내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힘 의원들이 자꾸 방송 4법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좋습니다. 잠깐 다녀오지요, 그쪽으로.

(「지금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휴가도 주말도 다 반납하고 밤샘 교대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입니까? 얼마나 불법적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발적인, 언론과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짜뉴스다 해서 규제를 한다? 그것도 출판물도 아니고 무슨 신문 언론도 아닌 SNS나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규제한다? 방송 진흥을 창달하고 방송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북돋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과연 국민들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억압하고 겁을 주는 그러한 범죄적 행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국방부로 기어들어간 대통령실, 그곳에서 다 지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앞세우고, 안 되면 심지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아니, 기본 개념상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지하는 이런 반어법적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어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 존중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위해 부디 지켜 달라고 소청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외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고급 300만 원 받아도 된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두 사람으로도 모든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이런 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일을 시켜도 못 하겠다 해야지요. 그런데 버젓이 합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 임명을 안 합니다. 대놓고 안 해요. 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힘을 쥐었다라고 하는 과장된 자신감 때문이지요. 힘을 갖고 있으니 할 수 있다, 검찰권력을 갖고 있고 감사원 장악했고 언론장악했고 방송장악했고 권익위든 인권위든 뭐든 검사 출신으로 쫙 깔았고, 그래서 니들이 뭐 할 건데라고 국민을 겁주는 현 체제에서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 진리 추구의 자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직관직언의 자세,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쓰는 그런 언론과 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관이 우리 민주당이 만든 법에 의해서도 100% 지켜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래서 대행해야 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또 그것의 집합체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을 꼭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의무감과 책임감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들이 하자고 하는 무제한토론, 반대토론 할 때 마음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디 시장 바닥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마치 두꺼운 백과사전에서 뒤지고 뒤져서 나쁜 말만 찾아내듯이 그러한 에너지와 정력을 써 가면서 우리가 제시한 법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온갖—이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악다구니를 퍼부어 가며 우리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반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 오물을 끼얹는 이런 반헌법적, 반의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언론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앞세워서 마음대로 떠들게 하더니…… 이제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순간이 무엇이겠는가. 반헌법적 정권 탈취 내지는 반헌법적 궁정쿠데타 가능성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정말 2~3페이지마다 그런 문장이 들어 있는 이런 문서를 놓고 토론하는데 주제와 다르다니? 누구 마음대로 주제와 다르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만큼 그래서 반대토론하시는 만큼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찬성토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찬성해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서 대한민국의 방송공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귀하들이 나의 찬성토론에 부담을 갖고 겁이 나서 본회의장을 지키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시니 들어와서 잠깐 들여다보는 척하고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시적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소설적 표현으로 하면 가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관, 볼만하다는 뜻이야」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가히 볼만하다, 그것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모습에 대해서도 가관이다, 장관이다 이런 말 함께 쓰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 방송 이것이 중요하냐?' 옳으신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당론 법안으로 가장 먼저 제출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생회복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였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25만 원? 차라리 10억 달라 하지', 정말 말이 됩니까? 10억 줄 수 있으면 전 국민에게 10억 주십시오. 당신들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단돈 25만 원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드려서 이 어려운 폭염과 홍수와 민생의 보릿고개 이 시기라도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 달라, 당신들이 우리가 제안한 것이 예산권을 침범한다 해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10억 주라 그러지 왜 2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귀하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김경률 씨가 왜 김건희 씨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빵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저기 많아. 먹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이나 한국판 마리 앙투아네트를 모시고 사시는 윤 모 님의 ‘무슨 25만 원? 10억 달라 하지’ 하는 발언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국민 대중을 무시하고 국민 대중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면하면서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망언은 최고 통치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권력 위임을 받고 헌법 앞에 선서하신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분의 말로 토해져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민생회복지원금 하나도 못 해 주는 것이 이 정권이고 그것조차 말장난으로 삼고 그것조차 조롱하고 그 말 한마디에 기대서 정말 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 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10억 하라지’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 말 해서 대통령이 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는 총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는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탄할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과 우리 서민 대중과 중산층과 함께하겠다는, 우리 당의 민생을 되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이 벽에 부딪히고 부딪히는 상황에서 ‘25만 원 주라’ 했더니 ‘10억 주라 하지 그래’라고 하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정론으로 비판하고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어야 우리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저희의 민생회복, 민생지원 전선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 삶, 우리 가난한 자의, 가난하신 분들의 하루 1시간의 고통, 장마 져서 힘들고 날 뜨거워서 힘들고 하루하루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세금 내기 힘들고 세금 못 내서 어렵고 이자에, 월세에, 자식들 키워야 하는 이 모든 고통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절절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국민 여러분들의 비탄과 한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하는 한편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을 비하하고 조롱합니까? 그것이 용인되는, 용납되는 이 구조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대신 싸워 달라, 대신 행동해 달라 해서 뽑아 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합니다. 민생과 함께하고 노약자와 함께하고 장애인과 함께하고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며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받아서 자식 키우고 생계 꾸리는 서민 대중과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살아 볼 수 있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중산층과 함께합니다. 그 전선에서 단 한 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지금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주시민, 다수 서민 대중, 중산층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동발의, 대표발의해서 이미 정말 수백 건이 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국민

대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촘촘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부터 노약자까지, 농어민부터 수산업자까지, 중소상공인부터 심지어 반도체 육성 법안까지 우리 당에서 만들고 있음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써 보고드리고 결과로써, 법안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가 헌법적 기초 위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임무를 해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제출한 방송 4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수많은 뉴스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로 충돌해 보이는, 정보가 넘치는 21세기 다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까지, 방송 4법이 아니라 더한 새로운 언론 발전법이든 뭐든 간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더욱 강화시켜야 될 것은 확실하게 강화시킬 것입니다. 왜곡, 시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송 4법은 허공 중에 무의미한 문자와 언어의 기호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서 일정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4법이 통과돼서 그 공영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절대다수 국민 모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정치 상황에 대한 정상적이고 활발한 흐름 그것이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도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 4대 기본요소 중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앞에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들끼리 의사를 소통하며 정치적 정보를 교신하고 발신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박선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언론질서, 건강한 언론활동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해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발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은 더합니다. 아까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까지 작성된 계엄 내지는 비상시국의 쿠데타와 관련된 문서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문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국회를 차단해야 한다.

자신들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하면 그 순간 계엄 해제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방송을 장악해야 되고 언론을 통제해야 되고 중앙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야 됩니다. 통신사, 통제 장악

해라. SNS, 주요 정치 포털, 통제해야 된다. 인터넷 그리고 메일—여기서 말하는 메일은 이메일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유선전화, 무선전화까지 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지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야말로 들리는 것은 한탄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파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분야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다, 좀 바로잡아 달라,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러한 퇴행을 멈춰 세워 달라라고 하는 호소와 바람이 우리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집권 집단이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집단 처음 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그 누구도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하는 자 없고, 그 누구도 '저라도 장관직 던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해병대사령관 하나도 사표 안 내고, 사단장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장 2급, 잘해야 2급 공무원 수준이에요. 그런 자들도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명령 안 내렸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권, 이 세력들이…… 이렇게 뻔뻔한 정치집단 보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들은 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처럼 영구 집권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 집권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 연구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정관재 3자, 정치·관료 그리고 재벌 이 세 집단이 똘똘 뭉치면 영구 집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미 언론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들어라!

귀하는 알 것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당신이 일 잘해서 대우한 적 없어. 조지훈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 그래도 지조는 지키겠지, 대한민국의 가치는 지키겠지, 외교부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겠지라는 기대, 저의 일방적인 기대였을지 모르나 그 20년의 기대, 당신의 선친께서 그토록 온갖 시·수필에 강조했던 지조 다 팽개치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22대 들어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채택한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반대 결의안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에 당신이 서명하고 면죄부를 주는 당신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저께 최초 보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인들의 군자금을 만들어서 대포도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가미카제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하와이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병참기지화하고 그 출발이 사도광산, 출발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발지 중의 하나가 사도광산이에요. 여기에 징용돼서 끌려가고 그 지하 막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긴 그 돈표, 그 돈표 조각, 하루에 10엔 뭐 이런 것 모아 가지고 살아 돌아와 후손에게 주고,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문화유산, 일본 산업화의 무슨 기지 이런 것에 서명해 줘. 그리고 사도광산에 고통받았던 우리 징용공에 관한 이야기는 수십 킬로 떨어진 딴 곳에다가 ‘그런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따위 문장을 받아 오는, 그래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라도 앞장서서 외교통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될 사안이에요.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이에요. 헌법에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그 외교·안보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지가 뭔데, 기껏 한 게 3성 장군, 쓰리스타 한 게 다인 신원식이 누구 맘대로 그 따위 문서에 서명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날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우리의 역사 자체를 묻어 버리는 그러한 서명을 하는데 어떤 언론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어떤 방송도,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은 긴급속보로 떠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져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순치됐고 대한민국의 방송은 철저하게 장악돼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관변학자를 동원해서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외교부의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망해 먹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따위로 팔아먹습니까?

이런 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정상적인 토론 보장되는 수많은 수단 중에 다 망가지고 깨져서 공영방송 하나라도 지켜보겠다는 우리 당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이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한다더니……

의장님 계세요?

○부의장 이학영 예.

○박선원 의원 죄송합니다. 좋은 말 쓰겠습니다. 의장님 안 계시면 나쁜 말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이 자들이……

(「방청도 안 하고. 국민의힘 다 나가서 쉬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나가서 쉬고 있어요. 필리버스터 신청해 놓고 참석도 안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들,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박선원 의원 저도 정말 이 토론, 찬성토론 20분씩만 딱딱 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다 넘겨 가지고 반대토론을 아주 고통스럽게 진행토록 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우리의 정의로운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힘을 빼라, 이런 얕은수라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통 민주진영의 본진입니다.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를 세웠고 집권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공화당이니 한국당이니 뭐 이런 당과 질적으로 다른 생각과 정책 가치와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해도 그 내부에서 어떠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것조차 묻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지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최대한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법안에 넣은 이것은 정말 최소한 중의 최소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이것,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앞서서 국민의힘 모 초선 의원님이 ‘이 분야 잘 모르시면서 당신들이 그래 본들 뭘 하겠냐, 뭘 할 수 있겠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는 뜻이겠지요. 좋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한 서른 번 정도 행사해 보십시오. 지금 열다섯 번, 열여섯 번 거부권 행사하셨지요? 우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매달 5건씩, 10건씩 당신들의 독재 본능, 당신들의 민주주의 파괴 본능, 당신들의 민주 압살 본능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할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 법안, 정통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화하는 법안 계속 개정하고 발의하고 필요하다면 제정까지 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니 거부하고 또 거부해 보라. 그러한들 당신들은 거부 한 번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권력집단, 통치집단으로서 한발 한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희의 거부권이 두렵지 않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부권 행사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점수다. 이제 15점 받았으니 100점 받고 당신들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국회의원 박선원의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이러한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자유의 창달, 방송의 공영성과 정치적 중립성, 신속성과 객관성, 정의의 대표성을 담은 법안 거부해 보라.

당신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비록 존경하지만 매우 비겁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들은 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지 빵을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작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줄 거니까 우리는 하는 체만 하면 돼’, 그런 정치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정치세력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러한 집권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반대토론 할 능력도 없고 찬성토론을 들을 배짱도 없는……

나쁜 말 쓰면 또 우리 의장님이 불편하시니까 좋은 말로 표현할게요.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이며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참으로 졸렬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죽 해서 아까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었지요.

4번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제가 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영속성을 유지해 감에 있어 언론이 중요한가 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계엄령, 군정 쿠데타 꿈도 꾸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성에 의해 용

산경찰서 경찰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다름 아닌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여전히 경호처장은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 판단에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23년, 작년 5월 달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지요.

이것을 반대에 부딪히자 수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였느냐, 비교적 아름다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가치중립적 언어로 재포장하였습니다, 즉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는 것이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호처장은 자신이 원하는 인력 그러니까 군, 경찰 공무원을 인력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 그리고 장비, 도대체 이 장비에 무엇이 포함돼 있겠습니까? 장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경호처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용산경찰서에 이례적인 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2023년 들어 서울 평균 1.1% 인력 충원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는 17.1%의 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다른 경찰서가 평균 1.1% 인원 증가를 하였는데 용산경찰서에는 17.1%. 저도 청와대에 5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인력의 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 5월 중순까지 용산으로 이전할 때 당시 청와대를 경비하던 충분한 인력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로경찰서,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던,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의 인력 661명보다 30%가 많은 숫자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경호처장이 수방사 등을 비롯해서 경찰과 필요 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시설과 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종로경찰서 인력 대비 30% 많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 암살, 중요 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세력, 국제 테러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하였습니다. 근접경호만이 아닌 유사시 위기대응타격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테러대응과를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하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입틀막 정권이 탄틀막을 위해 경호처장이 수방사 예하 특정 부대를, 인력을 조정·동원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비, 여기서 말하는 장비가 뭡니까? 기갑 및 총기를 포함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정·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시행령을 경호처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쓰리스타 3성 장군 출신, 작전본부장, 수방사. 그 1년 후배 경호처장 김용현 똑같이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충암고 12회, 김용현 경호처장 충암고

7회, 여인형 방첩사령관—기무사령관도 했지요—충암고 17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래 군 내의 어떤 파벌도 불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특정 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궁정수비대처럼 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그 결과 법사위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도발을 합니다. 무력을 과시합니다. 의원님들 치려고 합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서류를 가져가면 내팽개칩니다.

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졸업생 목을 칩니다. 심지어 국민대토론회에 자기들이 초청한 사람 중에 패널 한 사람이 손 들고 물으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자들이 어깨에 근육이 넘쳐흘러서 국민들을 한 방에 날려 보낼 타격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경호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차지철 경호실입니다. 장관도 무시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조차 좌지우지하던 대령 출신 차지철, 그 차지철 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쓸어도 된다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경호실장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열린 경호, 비록 약간의 경호에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까이 다가오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통령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따뜻하게 통치권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줬던 그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건 두세 페이지마다 계엄을 할 경우 어떻게 언론을 통제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저는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이 일어났던 청와대 재수 없어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국방부 건물이고 국방부에 있던 분들을 다 합참,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밀어내고 합동참모본부 일부가 또다시 경비 시설로 물러나게 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도청·감청 당하고 그 도청당한 대통령실의 정보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될 것인가, 과연 어느 나라에까지 공유될 것인가, 나토까지 줄 건가 일본에게도 줄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즉 위성 합동정보 공

유체계—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 나라에만 줬을 것인가, 나토 30여 개국 전체한테 줬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는 안 줬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작년 4월에 발생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훔쳐 간 장물은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얼마에 받고 팔려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그렇게 취약한 도·감청 공간에 옮겨졌는데 왜 옮겼을까? 천공이 옮기지 않으면 박근혜 꼴 난다 그래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렇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안과 국방 그리고 통수권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대통령 관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대지 허허벌판에 저러고 있어요. 효과적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갖다 놔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있겠지요.

왜 갔을까? 박근혜처럼 탄핵당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시고 정말 뽑아 준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좀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론장악…… 짓밟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에서 통과시키는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집권기간 단축 마일리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로서 저의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또 통과시켜야만 하는 방송 4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여러 기초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슨 득을 본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검찰권력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감사원이 합리적 감사 기초를 다 어긴 채 정치 감사로 날을 지새우고 외교부는 사도광산, 비탄한 징용의 우리 역사를 지워 버리는 문서에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가 서명하고 작전본부장 출신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일본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뒤집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무도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주여, 저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할 정도로 악을 범하고 있는 이 정권을 단 한순간, 단 한 치라도 더 나쁜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반대를 외치던 국민의힘, 방금 한 분 들어오셨지만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반대한다면서. 농담도 아니고 나보고 ‘몇 시에 끝낼 거냐’ 이런 소리나 하고. 밥 먹고 오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끝장 봅니다. 저는 이 연단을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가’ 기표를 하는 그 장면을 존경하는 이학영 의장님께서 주재하실 수 있도록 지켜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 왜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7대 요소,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맨 앞에 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같이 사는 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사회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당연히 중간에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중 매체, 언론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우월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의사를 표현해야 정치 결사도 있는 것이고 의사를 표현해야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의사를 표현해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많은 원소가 있지만,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산소만을 호흡해서 생명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이 가장 무겁고 중요하며 국민의 의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의지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그 두려움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론자유의 한 축인 방송 공영성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영성 확보 이전에 더욱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물학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경제대책 관련 특별법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있는 자에게 25만 원, 별 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 어떤 가정에게 25만 원, 4명이 모여서 100만 원, 큰돈입니다. 제가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 다니고 이러면 정말 눈물 없이 이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월세 걱정, 손님 없고 여름에 전기세 오르고 이자에 월세는 내야 되고 손님은 안 오고, 뭐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작자'를 써야 될지 '놈'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분'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그따위 것 10억 달라

그러지’,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라고 소위 팁을 줬다,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는 분이 한덕수 총리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이들에게 우리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이 엑스엑스야 10억 줘라……

못 하잖아. 그렇게 못 하면서 왜……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지역화폐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이라도 좀 더 드리자, 지급하자, 그래서 말라빠질 대로 말라빠지고 힘든 우리 서민경제에 최소한의 습기라도 적시고 물기라도 좀 돌게 해 드리자,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 그것이 그렇게 나쁜 주장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가?

위협적이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국민들을 조롱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팍팍한 사람 더 팍팍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뭐 좀 하나라도 해 보세요. 원전 체코에 수출해서 23조 벌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원가 다른 나라 절반도 안 되고, 이명박이 UAE에 수출하겠다는 것보다 더 싸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숫자 장난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피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이러한 뜻을 조롱하지 마세요. 아예 당당하게 우리하고 경쟁을 하세요, 국민들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더 절실하게, 더욱더 절박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단 1㎝라도, 단 얼마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두 달 좀 안 됐습니다만 서민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농어민, 수산업자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수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 있는 행위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 언론의 신장,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쟁점이니 정쟁이니…… 아니, 도대체 누가 싸움을 겁니까? 저희는 싸움 건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싸우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말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 살림 이런 것은 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극소수 가진 자를 위한 감세, 가진 자를 위한 권력의 보장, 상속세를 없애느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 합리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국민 다수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말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당은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치장물, 정치적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곧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 중심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전한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에 힘입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뚜벅뚜벅 나가는 길에 이 방송 4법이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저들이 만에 하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사 반란이라든지 궁정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신속성, 객관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확보 이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훼손돼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론·방송 정치적 사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요구이니 들어 달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내라 말할 권리가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존심과 힘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부자감세도 잘된 일이다, 무슨 자본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왜곡, 정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이 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진숙 씨라고 하는 분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하시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보이는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무슨 법인카드를 그렇게 많은 액수로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와 언론 종사자들은 조롱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법카 사용은 4000원짜리 빵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에다 무슨 호텔에다 골프에다 단란주점에다……

이런 분이 그러한 부분이 노출됐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이 방통위원장인지 뭔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아니지요.

그들은 그들에게 짜여진 기획이 있을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정부에 반대되는 말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

도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잡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할 정치적 이유 그것을, 이익 앞세우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이 폭압적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단 한 치라도 막아 보자 하는 충정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투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번만 지나면 다 짓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사이에 방송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장악해 버리고 그러면 끝이지, 뭐'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토론하는 자리에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을 반대할 논리도 없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다. 용산에서 알아서 거부권 행사해 줄 텐데 뭐 하러 바쁘고 힘들게 싸울 필요 뭐가 있겠냐'.

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이 막 꼬이거든요. 제 앞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도 자신이 쭉 말하다가, 가만히 말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토론이다라고 하는데 무제한토론을 할 자신도 힘도 없어지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 공간을 귀하들에게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언론전문가들, 언론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도 장악되었고 공영미디어 YTN도 뺏겼고 TBS도 저렇게 된 것 아니냐, 심지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포털도 한번 살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미디어 공공성이 훼손되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기제가 파괴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해 왔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을 고려해서 볼 때 역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크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관계법 개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 그것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왜? 국회에서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은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그동안 나왔던 법안은 다시 살리고 대안 법안을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분야별로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요청과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편집·제작·보도에서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그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

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성안하였고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야말로 주지의 사실입니다.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도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일반 레거시 미디어도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이 언론사들 상당수가 건설회사의, 대주주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이 언론사들 대다수가 자체 경영 유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광고주의 뜻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수신료 문제가 그토록 절박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이 민주주의 세력, 민주적 단체를 어떻게 죽이는가, 간단합니다. 돈을 끊는 것이지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 어떤 정권이 좋았냐 했더니 MB 정권 때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천민자본주의 정신 바로 그것에 찌든 이명박 씨가 '돈줄을 끊어라.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끊는 것입니다.

아니, 경제·인문사회위원회 이사회의 예산 400억을 200억으로 깎아 버려요. 도대체 이 정권은 전문가, 지식인을 적으로 보고 있고 언론인은 존재해선 안 될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버려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명한 학자들에게 그냥 논문 안 써도 좋으니까 여생을 편히 지내시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로운 연구,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는 새로운 사상이 창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월급과 예산으로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노예처럼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지요. YTN인가 연합뉴스 이런 데도 예산 절반으로 깎아 버립니다. '교통방송 김어준 쫓아내', 아니면 예산 깎아 버립니다.

자기들 예산은 안 깎아요. 대통령실 예산 올렸어요.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월급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월급은 올리고 방송 예산 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연구·개발 예산, 과학 연구분야·기술분야의 R&D 예산 깎았다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공대에 다니는, 국내 공대에서 석사·박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못 해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석사생에게 잘해야 180만 원 줍니다, 연구 다 하라고 하면서.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깎아 버려요, 없애 버려요. 90만 원, 70만 원 줘요.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연구 프로젝트 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갑자기 하던 일이 사라져 버려요. 봄 학기까지 했는데 가을 학기에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변국에 했던 주변국 궁핍화 전략을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 기반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기술 저력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없애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몇십년 만에 GDP 캐피타(capita),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섰는데 2년 만에 뒤집어져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미래 비전의 기초, R&D를 없앰으로써 아예 대한민국을 경제 후퇴로 몰아넣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망하고 미래를 통째로 없애 버리는 그런 망발입니다.

이것을 주변국 궁핍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국제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수입을 해 왔는지, 천공에게 듣고 왔는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한두 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별것 있느냐, 월급쟁이지. 예산 잘라' 이렇게 천박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70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대부터 시작하면 100여 년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상해 임정 포함해서 이렇게 무도한 정권 없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도 독립신문 만들려고 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종사자들을 도왔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도 우리 민중들은, 뜻있는 우리 애국지사들은 우리의 정치적 의사소통 수단, 신문을 만들기 위해 온 재산을 투입했고 투옥도 당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제의 폭압적인 한민족 말살정책, 주변국 궁핍화 전략,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통령실입니다. 그것이 언론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목 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언론사라고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한 3500~4000은 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떼고 150만 원 준다. 그런데 정부에 반발하는 기사를 네가 감히 쓸 수 있어? 이것이 폭력 아닙니까?

이러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윤석열 정권이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파산시키는 현주소입니다. 경제 파탄시키고 안보 멍들게 하고 민생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떠들면 예산 잘라서 입 막고.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카이스트에 가 가지고 졸업생이 뭐라고 하는데……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경호원의 그 손 보셨습니까? 그 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 손짓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언어에 금도가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사진에 찍힌 그 모습, 눈을 노리고 있고 그 강력한 손가락 힘으로 그들의 폭압성, 폭력성……

언론 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실 못 나가게 만들고 연구과제 없애 버리고 석박사들에게 180만 원 주던 것 차비 빼고 연구비 빼고 제 커피값에 밥값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도 연구하려고, 해외로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못 나가서 국내에서라도 석박사 하려고 하는데 그 R&D 예산 다 깎아 버리고 노예로 만들고 90만 원, 80만 원 주는데 다 깎아 놓고 20% 올려 준다? 90만 원의 20% 올려 준다? 108만 원, 장난합니까?

참으로 추악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하는 짓 하나 하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 아니 들지요?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이 정권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포악, 무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경호처 직원이 그렇게 손을 내뻗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곧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곽상언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농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경복궁 다 뚫릴 뻔할 정도로 시위를 합니다. 대나무를 들고 죽창으로 우리 의경·전경을 찌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님, 아무래도 최루탄 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새벽 1시니 한 시간만 버텨라' 하십니다. 버텨서 시위대가 잦아들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 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그 누구라도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월급 깎아 버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월급을 삭감한다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우니 많이 받는 분은 10% 깎고 좀 적게 받는 분은 5% 깎아라 이런 것이지요. 절반을 깎아 버리고 네 마음대로 싸워 봐라, 너희들이 배고프면 별 수 있냐.

대한민국 언론인이 노예입니까? 아침밥 고깃덩어리 하나 주면 그것 먹고 꼬리 치고 점심 안 주면 대가리 처박고 있다가 저녁에 징벌로 아예 굶기면 그다음 날 찍소리도 못 하는 개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따위로 대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당신들이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이자 흉기여야 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히 야당 대표에게 무슨 아버지, 수령이니 좌파니 뭐니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통째로 퍼붓고 있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도덕적 자기 여과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낮게 갈수록 우리는 높게 가자, 저들이 천박할수록 우리는 고결하게 가자, 저들이 철학과 가치를 뭉갤수록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가치와 기치를 들고 나가 싸웁시다.

우리가 제출한 이 법안, 그것이 그렇게 두려울 정권이라면 퇴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단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살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기에 갈등이 생기고 조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일곱 가지의 기본 권리 중에 의사표현의 자유,

먹고살고, 생명 유지 권리라는 말은 없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것에 기초한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 구성의 자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은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내 자신과 오늘을 위해 우리는 토론할 수 있고 우리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시켜야 그것이 곧 인권이자 그것이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은 중요한 것이고.

이 방송과 언론을 건설자본으로 넘겨 버리고, YTN 20% 지분 팔아라 결정해서 팔아 버리고, 이것 국가자산, 공공재산 팔아 버리고 그리고 눈엣가시 같은 사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주주 이사회가 잘라 버리고, 월급 깎아 버리고, 집회하면 입 막아 버리고, 마침내 KBS 시청료 깎아 버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의 마지막 바닥까지 곡괭이로 파헤쳐 내듯 긁어 없애 버리고.

이제 MBC를 비롯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기갑여단 부르고 공수여단 투입하듯이 2명 체제로 소총수 뭐 필요 있냐, 2명이면 된다, 기갑여단 특전사 파견하듯이 보내서 방송의 비읍 자도 모르는 검찰 출신 보내고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되면 더 나쁜 놈 보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탄핵하면 탄핵받기 전에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더니 다른 사람 임명하겠다 겁주고, 2명 체제로 가고, 야당에서 제안한 사람 몇 달씩 임명 안 해 버리고, 너무도 많은 문제와 모순덩어리로 방송의 공영성을 해치고.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오늘의 언론 현실을 만들어 내는 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 관계법 좀 고치자 해서 한 게 이번 방송 관계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좁혀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폭압정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이고 원칙이고 정의고 진리 이따위 것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다 안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한다 그러면 대법관 싹 바꿔 버리고 헌재 싹 바꿔 버리고, 버티면 당신들이 어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자신감 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거부권 마일리지 많이 쌓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것은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15개 거부권 행사,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계속하세요. 우리도 계속 법안 올리고 무제한토론 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해 봅시다. 국민들이 과연 퇴진 마일리지를 몇 차례의 거부권에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법권·예산권·정책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단 1㎝라도 더 낫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정권도 잡아 봤습니다. 당신들이 기무사와 방첩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또다시 발에 돌 묶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고 장한평 보안사 분실에 데려가 우리를 팰 수도 없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고문이겠지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수백 배 더한 것도 뚫고 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나온 민주 정통 세력입니다.

당신들이 일시적으로 이기고 있고 버티고 있고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농락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오판입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우리 국민들 교육받을 만큼 받으셨고 아실 만큼 아십니다. 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아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만큼 당신들이 져야 할 빚,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적으로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커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저 사람 말 그만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최고로 두 시간짜리 하루에 세 번까지는 해 봤는데……

그래서 의장님,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

○부의장 이학영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박선원 의원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장님.

○부의장 이학영 시작하십시오.

○박선원 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미 뉴욕 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문 인력을 다 쫓아내서 발생한 일이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정부 때 대미 라인, 철저하게 미국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손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에 근무 세 번, 두 번 이상 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이 일어났다, 전 정권 책임 또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31페이지짜리 기소장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연평균 1.6개, 그러니까 소위 60개의 혐의가 죽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진짜 혐의다라고 생각할 만한, 박근혜 정부 때 1.6개, 문재인 정부 때 2.4개, 1년 평균.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20개 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 저것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관계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감청한 것이, 미국 합참의장에게 보고되는 자료에 감청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보실장 김성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다른 안보비서관이 뭐라고 했다 하는 것이 따옴표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것은 곧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사안 중 하나를 긁어모아서 작년 2023년 6월부터, 그러니까 2023년 4월에 미 국방 정보 관계 쪽으로부터 용산을 도·감청

했고 그것이 드러났으니 2개월 후인 2023년 6월에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한 미 FBI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감청에 항의로 나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준비했겠구나. 그랬으면 서로 협상을 잘해서 저런 문제가 공개가 안 되도록 했어야 한다.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보능력과 정보활동이 손상받지 않게 노력했어야 됐는데 도대체 왜 저걸 못 막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박진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단의 대미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지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미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나온 말, '무슨 소리냐?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네가 회복시킬 한미 관계 손상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한 거지요. '설마 그랬겠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 다 망가뜨렸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4일인가 16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요. 방문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나 이번에 서울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정을 재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한미 관계가 망가졌어야 됐는데 안 망가졌다 그러고 문재인이 싫다 그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서 또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공동성명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문재인이 서명한 그 정상 선언을 다시 2022년 5월 달에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처럼 죽 하면 돼, 이것을 재확인해 주면 충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의 같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지요. 2022년 5월의 일입니다.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약간의 부정을 탔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서 2022년 6월 17일 미 국무부 앤서니 블링컨 장관이 주재하는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수미 테리가 참석을 했고 나와서 마치 엄청난 국가기밀을 준 것처럼 장면이 포착이 됐지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6월 17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한미 관계가 나빠야 되는데, 문재인과 바이든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한미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니 이 사람들 흔들린 거야. 도대체 뭐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앤서니 블링컨 주재 비공개 한반도 전문가 토론이 중요해졌겠지요. 그래서 지시를 내렸겠지요. 뭐라고? 바이든, 윤석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내부평가가 뭔지 알아봐라 했겠지요. 그걸 보고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왜 걸렸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 국정원을 망치는 세 사람, 윤 정부의 외교 라인 박진 외교부장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 현재 국정원장. 이들은 모두 경기고-서울대-외교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 프로토콜 다 깨 버리고 무조건 정보 물어 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이 전문가 업계에서 쓰는 특정 용어가 있습니다. 그 특정 용어가 뭔지는 말 않겠습니다만 제가 단순히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표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고-서울대-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경기고-서울대-외교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경기고-서울대-외교부 당시 주미대사.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처럼 보이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망치고 이들이 과도한 임무를 부여해서 한미 관계를 이미 2022년 6월부터 멍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2023년, 헷갈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들어 봐 주십시오. 2023년 4월 미 합참의장 보고서에 나온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그것에 대한 방어로 미 FBI와 법무부가 움직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국가정보원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부 출신,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이 잘난 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망쳤고 대한민국의 한미 관계를 망쳤다. 그래서 미국 대선 110여 일을 앞두고 이번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난 것입니다.

어떤 초유의 사태이냐? 동맹국 간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미 법무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미 테리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미 관계 최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는 분들은 '미 사법 당국은 13년 전 공직을 떠난 민간인 수미 테리의 기밀 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면 문재인 정부 때 항의를 했겠지요. 제가 해외·대북 담당 1차장인데, 제가 기조실장인데 저한테 항의를 했겠지요. 그런 항의 받은 적 없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그렇게 쉽게 깨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너희들의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그 결과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다던 한미동맹이 이렇게 첩보전으로 점철되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교·안보 책임자들이에요.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수미 테리를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혀, 빨간 옷 입혀서 대놓고. 이미 FBI와

미 법무부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게 아니에요. 외교부와 그 잘난 이 3인방,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이 3인방이 그렇게 어리석게 한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외교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조선일보에다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니 거의 모든 도하의 언론이 그대로 베꼈습니다.

제가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들의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똑같은 주장을 더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바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외교부-서울대-경기고 출신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고 외교를 가장 잘 안다는 바로 이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야만 한국과 미국의 책임 있는 최고위급 당국자들 간에 이 문제의 수습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연히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우리가 한 부분이 당신들의 눈에 약간 과도한 게 있을지 모르나 미국의 국가기밀을 가져온 건 없다. 미국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정부의 기밀문서 이런 것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맹국 간에 우리가 당신들을 문제 삼지 않듯이 당신도 문제 삼지 말라 했어야지요. 그것이 외교지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보를 지키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으면 저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간혹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정보사회에서,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동맹국끼리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범 케이스로 가장 친한 대한민국부터 조져라. '조져라'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범 케이스로 된 것입니다. 아니,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삽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였고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입니다. 모래사장에 혀 깨물고 죽어야지요.

이 정권은 도대체 책임을 안 져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책임지면 다 책임지고 윤 모 씨까지 다 책임지고 결국 파헤쳐 보니 김 모 여사가 있더라 뭐 이런 것까지 나가서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져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그럴듯해 보이는 한미 관계의 진상이 드러나고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외교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야 동맹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못 하는 정권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 주고, 일본하고 군사협력과 정기적 군사훈련 정권이 바뀌어도 못 하게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외교는 있는가, 이 나라에 국격의 마지노선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수호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해요. 왜? 언론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KBS 사장이 바뀌고 안 합니다. 그전에도 안 했지만 더 안 합니다. 다른 신문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다음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 기간 동안을 유네스코에 일본 산업 근대화의 상징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허용해 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잘난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서명해 준 것입니다.

(「말을 가려 하십시오. 그 잘난……」 하는 의원 있음)

내 마음이야. 나도 그 사람 알아서 하는 이야기야.

(「수식어를, 조지훈 선생 앞에 어떻게 '그 잘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그 훌륭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하는 의원 있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한 시인 조지훈 선생의, 지조를 가르치고 '승무'라는 시를 쓰시고 그 많은 수필과 대한민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양시킨 조지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서명을 하는 이러한…… 적절한 한국말을 찾고 있습니다.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쓸개 빠진 짓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조지훈 선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저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이따위 서명을 하고 다닙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은 불가역적으로 일본과 군사훈련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정책도, 안보정책도 새로……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불가역적…… 저는 그래서 NSC에서 일했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 결정은 대통령한테 보고된 결정이다. 누구 마음대로 불가역적으로 문서에, 군사 관련 문서에 국방장관 마음대로 서명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수납받아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식의 반헌법적 행위는 곧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서 행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와 판단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언론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되니까. 이제 일본과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게 훈련되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이제 마구마구 가도 된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발행하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사병 교육자료에 독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켜야 되고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국리민복을 지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일본이 아직 해군, 해상보안청이 됐든 해상자위대가 됐든 침공하겠다고 배도 안 보냈는데 자기 나라 지도에서 지워 버려.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졸렬하기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그 국방부가 도대체 국방부입니까? 국방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국방부는 나라를 안 지키고 외교부는 국익을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 3인방,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파괴시키고 해외 정보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며 그 좋다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사전에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헌법에 칼과 가위로 난도질하듯 그어 대는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일본인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어?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나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 언론을 장악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곧 모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쥘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 바로 그것 때문이겠지요.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발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시행하고자 하는 방송 관계 네 가지 법, 이처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R&D 전문 과학기술, 공부하는 석사·박사, 심지어 학부생들까지. 왜냐하면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비를 가져와야 3·4학년 실험도 시킬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약한 자는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힘든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게 팍팍하게 삶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포기한 이 집단이 우리 당에서 만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승부수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하자.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거부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슨 자랑스럽게 극장 암표 막 돌리듯이 하는데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미국의 전문가로 살면서 서울에서 탄생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전문가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미 CIA에서 일하고 했던 이 가냘픈 여성, 이분이 한국 정부에게 그 어떤 군사기밀도 가져다 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였고 해당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대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금도를 깨고 '블링컨 장관의 회의 자료를 갖고 와라' 하고 들키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 사진, '수미 테리, 국정원 정보관 지침을 받아 2023년 3월 7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였다', 미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관은 이후 해당 기고문을 본 당시 주미대사, 조태용 현 국정원장이 흡족해하셨다 하고 수미 테리에게 전달하면서 또 같은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미국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한 사람을 과도하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서 사람을 법무부 뉴욕 남부지청에 기소당하게 만듭니까?

한번 보십시오.

흡족해하셨다는 그 국정원장, 지금 직원들을 감찰하겠다, 문책하겠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니까 감찰하고 문책하겠다. 웃기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장관 차관 누구도 책임 안 지면서 직원들 실무자들에게 감찰한다, 문책한다. 참으로 추악하기가 그지없는 정권이고 추악하기가 끝이 없는 세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국가의 기본 금도와 기초적인 자격과 자존심이…… 이따위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왜? 그 어떤 레거시 언론도 한 달 전까지는 그 어떤 소위 주류 언론도, 그 어떤 주류 방송사도 대통령실 출입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사건에 대통령이 전화했느냐? 그 사건에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 있느냐? 그 사건에 삼부토건 무슨 비리와 연관되어 있느냐? 그 사건에 과연 채 해병은 죽어도 되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병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의 명령을 받아 전시에 상륙작전을 하든 침투작전을 하든 나라의 명을 받으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장 군대입니다.

뭐 특전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특전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입니다. 해병대는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헌법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18개월 근무하면 제대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들에게 걸핏하면 수해 생기면 사람 구해 와라, 폼나게 빨간 해병대 옷 입고 그런 일 시키고 사망했는데 책임도 안 지고, 말이 됩니까?

다 자기 자식 군대 보내 봤지 않겠어요? 자식이 다 큰 거지만 큰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스무 살 아들이 다 큰 겁니까? 저의 아들 둘도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만 서른 살 넘었는데 지금 봐도 애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예쁘다고 안아 주고 뽀뽀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차라리 최전선에 보냈으면 망정이지 이게 뭡니까? 왜 책임도 안 지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표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겠습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배 들어가 있고 언론 다 장악해 있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입틀막하고 용산 마당에서 샌드위치인지 계란말이인지 해 주면 다 동화되고 까칠한 질문 안 하도록 사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편집국장이든 해 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1년 동안 정말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 보았습니까? 임성근이든 김 무슨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참회의 눈물, 그 생때같은 젊은이가 내 자식이다 생각했을 때 한없이 미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 그것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인면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가권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1만 5000, 1만 2000 되는 해병대사단장을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령관 합니까? 사령관(commander). 사령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것을 방패 삼아 지금 이토록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것입니까?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라는 말을 씁니다. 수치는 언제 느끼느냐? 남에게 들켰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문화인류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과연 채 해병의 그러한 슬픈 희생에 그들은 수치를 느낍니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절대자 앞에 회개하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아니면 들켜서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죄지은 게 없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신원식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을 할 수 있다' 그것 무슨 말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다.

통수권은 군정과 군령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것은 군정에 해당될지 모르지요, 군사명령 아니니까, 군령은 아니니까. 그러나 군정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통수권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아니, 대통령이 절대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쟤는 무죄, 쟤는 유죄' 할 수 있습니까, 사법체계 위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도 군정권도 군령권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켜서 장관이 한 거다 다 시인한 거지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비록 자신이 국방장관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회개의 정도 없이 통수권자가 지휘해서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말 안 들은 박정훈은 항명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매우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시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장관이다, 군 통수권자다, 사령관이다, 사단장이다,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이것이 올바르다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분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장 1년 동안 책임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수치심은커녕 당당하게 거짓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증인 선서도 못 하는 자들이 그것을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쳐듭니다. 고개 쳐드는 그들을 집권당이라는 소속 의원님들은 잘했다고 하십니다.

(「말 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방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전방에서 온몸을 다해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휘관과 장병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노고가 그에 걸맞은 평가와 존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지요. 안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이렇게 짓부숴 버리겠다 나서는데 그분들이 버티고 계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내놓은 이 법안이 통과되고 효력을 발휘해야만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절제와 금도가 잡히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과 객관성, 신속성 그리고 진리 대표성, 중요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인내를 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희 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관계법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이 중요한가, 방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다수 깨어 있는 시민은 기존의 언론 매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주제를 찾아 들어가서 보아야 하는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성 그리고 불편부당함 그리고 사실을 보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직관, 직언, 직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토론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무슨 가짜뉴스의 소굴이다, 온갖 좋지 않은 말씀들을 퍼부어 대시지요. 왜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 두드려 잡았으니 공영방송 이것만 없애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때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니까 말씀 많이 하세요. 아까 어디 가셨다가 이제들 들어와 가지고…… 저녁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속기사님, 적는 데 문제 없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한 말 내가 써서 다시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말이 되고 있어요.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가치 없다고 하는 저런 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당신들이 제안한 거야!

(「짜깁기하러 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짜깁기해! 뭐야 당신은! 어?

무제한토론 하자면서 자리도 다 비우고 어디 갔다가, 밥 먹고 들어와 가지고 힘 남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내 소란)

주제에 맞는 토론 하고 있어요!

(「토론하라 그랬지 흥분하라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지 그래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리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주제도 아닌 걸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뭘 안 해요! 의원님이 끼어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선원 의원님, 고생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박선원 의원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선원 의원님, 물 드시고……

○박선원 의원 누구에 대해서 주제 타령하는 거예요? 저도 사회과학 해 봤고 정치학 연구한 사람이에요. 주제가 어디인지……

(「오늘 주제가 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은 뭔데? 반말하지 마세요.

○부의장 이학영 박선원 의원님, 주제토론 계속하세요.

(○배준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서로 부닥치지 않도록 좀……)

박선원 의원님, 국민보고 하십시오.

○박선원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무제한토론 제시해 놓고…… 여러분들 하신 반대토론할 때 다 했어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앞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마디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원님들처럼 여기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

하신 적 없어요.

(「계속 '당신'이라 하지, 왜」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보다 더한 말 많이 했어요. 남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통째로 무슨 파니 무슨 파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할 말 다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용어 가리세요. 할 말 다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십시오.

아, 또 일어서셨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하세요, 그러면.

(「의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해서 현 외교부와 현 국정원 지도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왜 그런 환경을 허용했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파 보니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객관·공정성과 보도의 사실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기자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현재의 언론 상황과 방송장악을 한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과 결부시켜 보니 적어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코럴레이션스(correlations)도 있고 코즐릴레이션스(causal relatio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과학에서. 그것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쉽게 쉽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쉽게 쉽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반대토론하자 해 놓고 다 나가 계시더니 들어오셔 가지고 찬성토론하는 사람한테 겁박하고 막 소리 지르십니다. 다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닥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자 해 놓고 찬성하는 토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폭넓게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제시하는데,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1분 내로 '방송 4법 찬성, 찬성' 할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적 현상을 배태한 원인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 사건과 가장, 이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언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동시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자 구조물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시합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기본 권리 중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왜 가장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여타 생명체와 달리 사회를 형성하고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언론이라고 하는 장치, 그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고 그 글로써 표현한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교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나 부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다 언론 활동이자 언론의 역할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이 정권 들어와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21대 때도 시도했었고 또다시 우리 당에서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키겠다,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막아 보고 싶다, 막겠다라고 해서 방송 관계 4법 저희가 성안하였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시겠다 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 진술 아닌 일방적인 주장으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찬성토론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4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의원의 경험과 능력과 학식과 지식에 맞추어서 반대하시고 토론하십시오. 저는 안보 문제로 방송 4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가 달리고 지식이 부족하고 할 말이 없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쏟아붓고, 그것 반대토론 때 하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찬성토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절실하게 방송 관계 4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시하는 문제, 안보 문제, 수미 테리 사건 이것을 들고 이 방송 관계 4법의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젠가……

(「박선원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저들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하자 해 놓고 철수합니다. 좀 이따 또 들어오시겠지요. 자, 곧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시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터득했습니다. 자, 들어오실 준비 하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각 국가마다 우호의 수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한 동맹 미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적국 에너미(enemy) 혹은 애드버서리(adversary), 긴장완화 상태 데탕트(detente), 협정국 안탕트(entente), 우방국 프렌들리 네이션(friendly nation), 동맹국 앨라이(a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적국과 긴장완화 사이에 들어 있고 현재 상태는 긴장완화보다는 적국에 가깝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협정국이고 때로는 우방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미국은 유일 동맹입니다.

모든 국가는 가급적 적국에서 협정국, 긴장완화 등을 거쳐서 좀 더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일본을 방문했어요.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협력이 중요하고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갔어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헌법 위반 사항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헌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훈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협상을 나가는 협상 최고책임자에게 내리는 지시문이 훈령입니다. 인스트럭션(instruc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 훈령이 있었기에 국방장관이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헌법적이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될 반헌법적 인식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합의조차 깰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아니, 합의를 깨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국가 간의 피치 못할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니, 요미우리신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한국 언론에 먼저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훈령이 있었다면 미리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에 따라 국방장관 신원식이 그 명을 받들어 이행하러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요.

이런 일을 어디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다 이렇게 떠들어 대면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언론은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요미우리신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대한민국 언론에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중대한 일을 말 안 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까 그랬을까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이 좋아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 놓고 가면 일본의 뉴 오타니 호텔이 됐든 데이코쿠 호텔이 됐든 거기 가서 잠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환영해서 그것 즐기려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먼저 말하는 이러한 작태, 바로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은 아사히신문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언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까? 그것도 이틀 만에, 이틀 사이를 두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이 정권이 이미 다 순치시켰거나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방송만 장악하면 되겠다. 이미 방송도 다 장악했다. YTN이고 뭐고 다 장악했다, 뭐 채널A도 장악했고 다 장악했다. 그러하니 딱 하나 남은 타깃을 이번에 밟아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언론이 없고 방송이 없고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송두리째 박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번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반대토론하겠다는 분들이 온갖 무슨 좌파니 뭐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 봅시다.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송공영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정상적인 건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각도에서 있는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언론의 자유는 확장되어야 된다. 주요 종합 일간지는 물론이거니와 종편, 나아가 특히 공영방송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 추구 바로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중요한 내용을 훈령으로 받아서 일본하고 가서 사인하겠다는데, 서명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요미우리신문에게 무슨 인터뷰하듯, 자기 개인 이야기하듯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엠바고를 일본 외무성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일제 징용에 관한 그 어두웠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장관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들통나듯 위안부 할머님들께 찾아가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 당국자·책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합니까? 왜 일본 언론은 대우해 주면서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에 사전 보고도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기왕 하신 것 차분히, 힘 빼지 말고, 우리 의원들 11시 반에 오니까 차분히 그때까지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나 힘 넘쳐요.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좀 가시고」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기를 해 놓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 국민이 보시는 그 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표결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찬성토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의원님의 우정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왜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동맹,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런 말을 일본 언론에 합니까? 그것은 법적 타당성도 안보적 실효의 측면에서도 명분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지요.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최초에 결심하는 것부터 전쟁을 지속할 건가 말 건가, 전쟁을 종결시킬 건가 말 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수준의 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국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한미 간의 협의에서, 합의 과정에서 북이 남침을 하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 주도 미국 지원 방식, 즉 이것은 국력의 크기와 별개로 한국에서 군사적인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력으로 일차적으로 맡은 책임을 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결심, 지속, 종결을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 전장은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방을 지키는 여러 수단, 안보를 지키는 여러 수단은 다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DIME 요소라고 합니다. DIME—디플로머시(Diplomacy),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밀리터리(Military), 이코노미(Economy)—즉 외교수단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고 정보활동도 해야 되고 군사력도 써야 되고 경제력도 써야 돼서 우리 국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안보의 수단, 그래서 4대 안보의 수단을 DIME이라고 합니다. DIME—디플로머시,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그리고 이코노미—그것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겠다 그것 한미동맹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꾸 한미일 동맹을 주장합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자,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 투입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억제를 해야 되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번짐에 따라서 중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일본이 지상군, 육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분쟁, 군사적 위기에 연루되거나 우리의 안보 목표가 한미일에, 특히 일본의 안보 목표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고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인해서 안보비용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금 분단이 되어 있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다.

대만이 공격받을 때 우리 해군 투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태에 당하기 전에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전술 목표, 전략 목표에 따라서 관리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가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제가 시비 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 대한민국 안보 목표에 맞지 않는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기고활동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방송도 이런 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 이 모든 것이 언론의 보도와 언론의 보도 행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와 언론은 인과관계는 없을지 모르나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도 언론과 방송 4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찍었던 분들은 길에서 만나면 '더 열심히 싸워라, 뭐 하냐? 도대체 왜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고 찍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찍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분명한 분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휴, 그만 좀 싸워' 이러세요. 싸움은 민주당이 걸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평화를 숭상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 이런 정신과 방법을 매우 존중하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 당이 오로지 민생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정권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한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요미우리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가운데 놓고 한국·일본 앞에 놓고 이 3자가 북·중·러와 싸운다, 그 그림이 요미우리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작게 돼서 이것 보여 주기가 좀 그런데……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간다고 요미우리신문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해서 1면에 쫙 까시고.

그리고 외교장관은 사도광산에 우리 조선인 징용공의 아픈 역사,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 '조선 징용공이 고통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팻말 하나 두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외교부입니까? 그것이 지조로 유명하신 고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장관이 할 짓입니까? 부끄러워서 한국 언론에 알리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이 보도되니까 대한민국 방송 그렇게 보도합니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 말을 못 해요.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가를 해야지요. 방송기자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못 하고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와서 이런 것을 송출되게 합니다,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정부의 고뇌에 찬 뭣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말이 아니지요.

친일파가 되기 위해 친일파를 또 동원하는 친일화의 승수효과. 이런 정권이 언론은 다 매수했다, 예산 깎을 것 다 깎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방송에 마지막 한 발 더 나아가서 낭떠러지로 밀어 버리면 된다 해서 이진숙이라는 분을 무슨 위원장에 기필코 앉혀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 나가는 일입니다. 지극히 심각한 일입니다. 대개 국권 상실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의 예가 그렇고 대한민국 이전 대한제국 한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완용이 이 나라를 망령처럼 다시 이토록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워낙 일상으로 반복되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훈련되듯, 사육되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통관에 가서 비판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기가 정말 힘들고 바쁠 정도로 이 정권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으로 현재의, 현 정권의 이러한 오류와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21대 때의 일부 시도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했다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이, 우리 민주시민이 포기하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켜 내야 되겠습니다. 온갖 왜곡·거짓으로 우리 민주당의 언론자유와 방송문화의 창달을 위해 애쓰는 노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모욕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더욱 빛나게 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비로소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를 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밀어주신 우리 국민들, 유권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낼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그리고 비상경제 특별대책 수립을 위해 우리 당에서

첫 번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들 느끼시는 아픔과 절망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부평구을에도 전국 평균보다 장애인이 많으시고 평균 연령은 더 높으시고 젊은이의 인구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한부모가족도 많으시고. 그런데 같이 가난한,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돕겠다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저분들 저렇게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늘 반성하고 스스로 자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시민들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오늘날 단 한 건의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왜 안 해 주냐고, 그것 한다고 내가 무슨 떼돈 버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인지 뭔지 옛날에 하니까 참 좋더라, 그것 좀 돌아가게 해 줘라 하시면서. 그날은 손님이 많길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님께 속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많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 다 골병 들어서 금융 거래도 못 하는 신용불량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월세 내고 자신의 노동력 가치도 못 받으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영업 잘되는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도와주자고 25만 원에서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리자고, 좀 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말이 돼요?

좋다. 되받아쳐 주겠습니다. 10억 주세요! 10억 제발 좀 줘 보세요, 각 가구당. 10년 동안 나눠 줘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10억 줘 보세요. 그런 계획 세워 보세요. 향후 10년 동안 각 가구당 10억 벌 수 있게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 보세요. 그런 것도 못 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10억 달라 하지? 국민을 조롱하십니까?

아니, 주가조작하고 삼부토건 왔다 갔다 하고 젤렌스키 마누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가 뛰고, 뭐 좋습니까, 세상? 그래서 귀하의 입에서 10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터져 나오십니까? 그 말을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 민주당을 조롱하면 우리 민주당이 조롱받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조중동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났겠지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책비서관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의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선임비서관회의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른 수석비서관들 대답 못 할 때 대답을 하는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런 농담 안 하십니다. 어디 '10억 주라고 해 보지' 그런 소리를 해요? 지는 10억이 날마다 들어오는갑네, 그래. 그런 자들이 최고 권력자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김경률이…… 또 뭐라고 시비 걸래? 김경률 내 후배예요. 이상한 사람만 내 후배로 다 있네요.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 아니, '25만 원

국민들에게 줍시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바깥분은 ‘아이고, 10억 주라 그래’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고프다는 민중들에게 ‘아이고, 빵 아니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 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뭐가 달라요. 그런 분들이 용산이라는 곳에 앉아 계시니 도대체…… 조선시대 같으면 상소문을 백번 천 번 쓴다 한들 그 상소가 경회루까지 도착할까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언론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관·재, 정치권력, 관료사회, 재벌집단 다 장악했고 제4의 권력인 언론까지 품 안에 넣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본 자민당처럼 해도 된다 하는 몰역사적·비경험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 어렵다고 또 질문하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몰역사적이라 함은 스스로 경험한 적도 없는 사실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을 몰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이 정도로 언론을 장악했으니 일본 자민당이 해 먹은 것처럼 몇십 년이라도 할 수 있어. 국민들 무시해도 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한민족입니까. 중국이 5000년 역사 동안 5년에 한 번씩 침범했어도 우리 한민족이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를 지켜내 온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버드대학교의 한국 관계 역사학자마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동안 천 번이 넘는 외세의 침범을 이겨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위대한 한민족이 5년 중에 3년도 안 남은 이따위 실패 정권, 대한민국을 파산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억눌리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어떠한 기획도, 계획도, 전망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좀 조용히 이야기하려 그러는데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안 되네요, 그렇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느끼지 않으세요?

이 홍수에 폭염에, 정말 지역 가서 우리 유권자들, 할머니·할아버지, 장사하시는 형님·동생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여러 번 정말 민생전도사로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영업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 문 닫고 싶어한다, 이자도 못 내서 힘들어한다’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보 문제가 생기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그것 준비하실 때 장관들 한 10명 가까이 오지 않아요?

(○김성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아니, 기재부장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산업장관이니 과기부, 부총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경부장관까지 다 와요. 이 나라 경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고리를 풀어야 할 건가, 그러면 대통령 주재로 그러한 회의를 하시면, 토론하고 회의하면 하늘이 뻥 뚫리는 대책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 통해서 정부부처들이 우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들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가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하이 총영사 그리고 국정원 외교안보특보·기획조정실장·1차장으로 먼 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이 없을 것 같아도 관계장관회의를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2시간 회의 잡아 놨다가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10시에 잡은 회의가 3시 반, 4시에 끝나기도 해요. 지금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건설이 어렵고 지금 티몬이니 뭐니 사건 터지고 이러면 대통령께서 맨 먼저 새벽부터 전화하셔 가지고 '다 나와라. 뭐 하냐', '총리, 잠이 와요?', '기재부장관, 빨리 와서 보고하세요'부터 하면 긴장이 빡 들어가서 행정부 전체에 '야, 큰일 났다. 대통령님 뭐 대안 빨리 안 갖고 오면 우리 부처부터 혼날 것 같다' 해서 실·국장회의 새벽에 소집해서 다 대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 열 개인지, 백 개인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테레비에 나오는, 좀 고상하게 TV에 나오는 행사 말고는 일체 집무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그 외에는 일정이 실제로 없대요. 그래서 장관들은 6개월 단위로 스트레스가 팍팍 오거든요. '이번에 내가 잘리려나' 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독대 보고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들어오라', 가면 '서류를 놓고 가라', 놓고 오면 삼사 일 뒤에 어떤 분께서 '고생하셨어요' 이러신답니다. 제가 목이 쉬어 가지고 남성이 아닌 젠더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국회의 이 신성한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정 운영 최상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왜 바로잡혀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물 저렇게 날아오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해요. 대통령 주재 NSC 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했다는 말 들어 보셨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대통령 하고 있어요. 정말 마법입니다. 매직, 마법.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어제 그제까지 1700개…… 우리 국회에 2개 떨어진 것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저녁에 미대사하고—박지혜 의원님도 가셨지요—저녁을 했는데 미대사관저, 그러니까 중구 정동 있잖아요. 거기 필립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떨어졌대요. 더 웃긴 것은 이분 말씀이 일본대사관저에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일본대사관저와 미국대사관저에 이것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떨어뜨린 타기팅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 쳤습니다, 위안 삼으라고. '주한 중국대사관, 대사관저 엄청 넓어서 거기 여러 개 떨어졌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속 푸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르면 지금 DMZ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그 속에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하냐. 군사회담

갖고 상호 방송이 됐든 오물이 됐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중단할 때에 대한 주제로 접촉을 해서 군사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팩스도 보내고 다 했는데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서 크게 말해라, 만나자고’.

그런 적 있어요. 저쪽에서 전통문을 안 받으면 가서 소리쳐서 나오라고 한 적이 실제로 있어요. 다차원적으로 안 되면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노력을 해라 했더니 이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쪽 다음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표현의 자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분이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고 해서 매번 행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관계장관회의, 경제면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제의 심각성, 이런 어떤 문제의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철주야 밤낮을 안 가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정말 기본 아닙니까?

물론 클린턴이 대통령 때 많이 놀아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 쓰지 않고 제임스 루빈 재무장관에게 맡겼더니 경제가 더 좋았더라’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경제장관회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국정을 내팽개치면서 비 오면 비 온다고 술 드시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술 드시고 나쁘다면, 나빠도 술 드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누구 마음대로 술을 드십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어떤 경우에도 포도 주스 드셨어요. 제가 9·19 핵합의 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때 송민순 대표 또 조태용 차석대표랑 같이 대통령님께서—그냥 저희들끼리 쓰는 언어입니다—저녁을 베풀어 주신다 하여 관저에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와인을 주시고 대통령님은 포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취해서는 안 되시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밤늦게까지 그렇다더라 했으면 언론들이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대통령님들께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물론 비판한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언론은 깨어 있는 우리 사회에 시대를 알리는 종이 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예산으로 통제하고 인사로 통제하고 주주 바꿔 버리고 대주주, 건설업 다 차지하고 있고 YTN도 이상한 회사에 넘겨 버리고 다 팔아 버렸어요. 다 팔아 버리니까 그 무슨 주택, 무슨 건설 거기도 공사 따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한테, 큰 회사한테. 그러니 경제를 비판합니까, 사회 현상을 비판합니까, 도대체 나라를 비판합니까? 그것 다 장악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시나브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송 4법,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 덕 보신 것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주에 가까운 기사가 쫙 깔리고 점심 되면 그중에서 가장 독한 것만 골라서 다시 문화일보에 깔리고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저녁에 가판으로 깔리고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끝까지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에 혼신을 다해도 국민들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데 아예 프로포폴을 공유하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황이 어떠한 따끔한 비판과 질정 어린 정책 제시도 없는 세상, 사막에 오아시스는커녕 키 높은 선인장조차 없어 물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 사막을 걷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정권의 탓도 있고 정권이 망가 놓은 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정치적 중립성, 취재에 있어서의 치열성까지 발톱 뽑고 눈 가리고 손발 감각 다 없애고 그래서 일본식 정·관·재 제3, 정치권력·관료세력·재벌에 언론을 옆에 세워서 정·관·재·언 제4의 권력이 정말로 민주주의와 민중에 반하는 그런 권력으로 군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 아십니다. 정말 '아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할 정도로 다 아십니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스스로 훈련하시며 스스로 옳고 그른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섭취하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니까, 나라가 망가져도 망가진지를 모르니까 이 세력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이 다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할 건가, 잘 아시면서도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줄기차게, 더욱 분명한 정보와 지식과 정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개인개인마다 SNS도 해야 되지만 역시 아까 기무사 작성했다던 그 문건에서 보시다시피 방송의 역할, 방송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시간짜리 강의 3개를 하루에 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기록을 한번 깨 보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저들이 반대의 무제한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공간을 개방하려고 했더니 듣다 듣다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받아 적으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 말씀들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과한 말씀, 근거 없는 말씀, 인격을 모독하고 기본적인 금도 따위는 걷어차 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침내 표결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서서 감히 민주주의를 더욱 유린하며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찬성토론을 하고 저분들이 반대토론을 하시지만 우리의 시간, 주어진 공간 확실하게, 보는 분이 얼마나 있고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민주시민과 절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입니다. 보통 한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대개 0에서 10까지 놓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판단을 하지요. 안보 부분에 있다 하면 남북대화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그러나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협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간 보수는 평화를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대화보다는 억제로 간다, 여기까지는 보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회담, 대화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통일부장관 월급은 또 받아먹어요. 말이 됩니까?

외교를 한다면서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을 한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면서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법무행정을 한다면서 법을 유린하고 검찰이 없는 사실 조작해대고.

환경부가 뭘로 찍힌 줄 아십니까, 이 정권의 환경부가? 이념집단으로 찍혔어요. 의원님, 이념집단, 환경부가. 그래서 환경부차관에 개발론자가 차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말이 됩니까?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분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을 파괴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환경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분이 가시고.

통일부는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이 아니다, 그분의 내심에는 북진통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 교류협력 필요 없다 해서 그런 분이 통일부장관이 됩니다.

감사원 보십시오. 감사원은 징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찰하고 감사는 다르거든요. 감찰은 어떤 위법행위가 있을 때 그걸 조사하는 것이 감찰이고요, 감사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시정할 바를 시정토록 계도하는 역할이 감사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청의 무슨 파견부대처럼, 감사원이 공무원들 싹 불러다가 조사해 가지고 그걸 통째로 수사 의뢰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면 변호사도 쓰고 해서 자기를 방어를 하지요. 감사원의 원래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에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러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설명하면 그것을 취조하듯, 무슨 범죄 했던 것처럼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편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수사를 받는다 생각하면 다 이야기하겠어요? 방어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것은 말하지 않겠고’ 이렇게 하겠지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선의와 국가 권력기관,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있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 뭐 위반인 줄 알아요?’, ‘위반 아니고 내가 정해진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걸 범법행위로 몰아가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감사원입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 헌법에 기초해서 각 부처의 설립 목적과 취지, 관계 기본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부 기관이, 행정관청이 몇 개나 됩니까? 과연 그 부처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파괴해요. 감사원이 감찰하면서 국가공무원을 범죄자로 몹니다. 법무부가 인사 업무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법무부 어디에 대통령을 보좌하여 인사 자료를 모아서 의견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또 한 모 씨가 하더니 안 하니까 또 안 해요. 뭡니까? 위인설관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평생 공무원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이상한 분들이 부처의 장관으로 오셔서 권한이 아닌 권력을 행사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할 법률적 기능과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너무 자주 비일비재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고, 검찰 출신 그것도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신 전 고위 검찰 간부께서 변호사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언론 잘 아냐?', '잘 모른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탄핵한다니까 도망칩니다. 버텨야지. 자기의 전문성과 자신의 공무담임이 자신 있고 떳떳하면, 우리 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그러는데 버텨서 이겨 내야지요. 판판이 사표 내요. 못 버텨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탄핵 아니라 더한 것도 버텨 내서 살아 돌아와서 박수받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질타해 보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나라에 국토교통부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고 금감원이 있는데 PF대출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안 해요.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면 선거 뒤로 미루고 덮어요. PF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도 악화되면 터지는 것이 경제 분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숨겨요. 그래서 '그래, 총선 지나면 일 좀 하겠지. 자신들에게 아픔이 있으니까 안 하나 보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티몬 사건이니 뭐니, 과연 정책 당국자가 하나도 그걸 몰랐겠어요? 정책 당국자가 그걸 감지 못 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터져요. 업주도 책임 안 져요. 나 몰라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막아 줘야 되고 예방해 줘야 되고 미리 경고등을 켜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

존함처럼 경종을 울려 줘야지요. 안 합니다.

도대체 일이 터지면 각자도생이 아니고 '각자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정부는 왜 있고 국가권력은 왜 있습니까? 이번 일 터져서 몇천 명의 피해자가 나타나도 또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소비자감독원이 됐든 어디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뢰밭 세상이 되었습니까? 권력이 무능하고 정권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론도 그것을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 지적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그러면 다른 것…… 건설회사가 자기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PF 터질 것 같은데 막아도 다른 데서 시비 안 걸고 서로 나의 등 당신이 긁어 주고 당신이 나의 등을 긁어 줘서 상부상조하자. 이익분할 공동이익 추구, 그 속에서 언론은 망가지고 있고 국가권력은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PF 문제가 심각해져도 하다못해 반도체까지, 반도체 산업 연구단지, 반도체 연구단지 일본에 갖다 세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해요. 왜 말합니까, 대주주가 건설업인데. 왜 말합니까, 잘못 말하면 예산 깎아 버려 가지고 YTN, TBS 꼴 나는데.

여차하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문화일보인지 뭔지 하는 기자분이 사장으로 떡하니 내려와 가지고 무슨 방송을 안다고…… PD는 다 진보다, 주요 프로그램 PD들한테서 다 거두어서 기자들한테 맡겨요. 기자들은 안 해 본 일이잖아요. 거기 빠져들어요. 기자들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PD들은 불만 있어도 밀려났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제 앞에 반대토론을 했던 모 의원께서 하다 하다 말하다가 이제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봐라.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정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원인 모를 서거도 이겨냈고 5·16 쿠데타 속에서도 민주화의 기치를 놓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박정희와 대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위협하였고 마침내 탄압받고 대한해협에서 목숨을 잃으실 뻔하셨고 길에서 트럭에 치이실 뻔도 하셨고 그 역경,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의 한 분인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유신독재 긴급조치 9호에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허울뿐인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당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정권을 잡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고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삶의 현장 곳곳에 다가갈 것입니다.

22대 국회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우리 우원식 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조직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 갑이 아닌 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가 발전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 이 언론 지켜내겠습니다. 비록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언론인 개개인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분들도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하소연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제한토론 들어오면 무제한토론 받아서 이겨 내겠습니다. 반대토론자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릴 것, 요청드릴 것 있으면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과 함께, 언론을 사랑하며 언론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지지합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민주당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억누른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만 저희는 늘 겸손하고 소박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언론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때가 돼서 다시 정책으로, 예산으로 더 나은 언론환경으로 보답할 기회가 있다면 보답할 것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송인들의 그 무한한 창조성과 그 무한한 도전정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한 번 잡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이겨 내겠다고 하는 전투적 호승심, 존경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방송 관계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기록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거부권 기록은 당신의 퇴진 속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시속 30㎞, 시속 100㎞,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이 못 할 일을 하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래도 될까, 강도가 1부터 10이 있으면 지금 8을 해야 되느냐, 7을 해야 되느냐, 6을 해야 되느냐 예민하게 우리끼리 토론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때로는 반 발 앞장서서 이끌고, 때로는 한 발 뒤에서 등을 밀어 드리며 언론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언젠가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 씨가 그런 말을 했지요. '5년짜리 정권이', 뭐 이런 말의 표현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한 7년 되니까, 대부분 뭐 5년짜리 정권 별거 있냐. 당신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고 있다,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안사 발에, 철삿줄에 돌 묶여 사라진 친구, 동지를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쟁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먼저 쓰러져라 하면 쓰러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뒤따라오면서 뒤에서 치고 들어온 것을 막아라 하면 막아 낼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 우원식 얼른 다녀오세요.

○박선원 의원 의장님, 아까 들어오실 때 인사 못 올렸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무제한토론하는 과정에 발언하시는 분이 오래 하다 보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양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당에서 4건을 새로 제안했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한바 현재 방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미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또 남은 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의 무제한토론의 제기로 인해서 정말 깊이 있는 법안 정책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까지는 정당끼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토론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 또 대안언론이라고 하는 SNS, 유튜브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절대다수 국민 전반에 대한 모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유튜브, SNS가 무슨 좌파의 소굴이라든지 그런 표현은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의 발전상황과 현재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무작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용자 일반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을 주는 적절치 못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급적 민의의 전당이고 품격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찬성토론을 이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등하게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빅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날마다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야가 이렇게 죽 양쪽으로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한 3m밖에 안 돼요, 양당의 지도부가 앉아 있는 거리가. 그 정도 거리면 정말 옛날 말로는 펜싱 검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인격모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정말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토론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러면서 의장님의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다, 의원들 간에……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백벤처(backbencher)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앉

은 사람들이 초선들이고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선인데 백벤처들이 막 항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도에 넘치는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질서, 질서’라고 하는 말을 외치시면서, ‘오더, 오더’라고 하면서 앉히면 다 앉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품격 있는 언어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다루고자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또 방송법 일부개정안,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방송을 누가 봅니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컸는데 대학시험을 평준화 시기에 학력고사 봤는데요. 촌에서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해 주는 방송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3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력고사 대비해서,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종로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 나와서, 국어선생님 이름은 목영부 선생님인데 얼마나 시도 잘 가르치고 하셨던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외의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법을 만들면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선이, 사회적 선, 공공선이 물결을 일으키듯 파장을 일으키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 또 나쁜 법, 문제가 있는 법에서 독소조항이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회, 의회가,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며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야 된다, 동시에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입장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그야말로 공익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개개인들의 어떤 지역구의 어느 특정한 유권자에게 유리한 법안이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 표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객관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이 방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계와 제도, 기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자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당은 이 법안들을 기초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이미 만나셨고 이 이전에 21대부터 공청회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 토론도 수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개별 면담도 하셨습니다. 일부 직접 언론 관계자들 다 만나고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법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키워 나가고 우리 인권의 기초를 다지는 법이다, 또 유사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정권이 경호처 등을 앞세워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최후의 방패이자 보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자료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입수한 제보와 정보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감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집회 시위를 한남동 인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의 한남동 등 때때로 거소로 사용되는 그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이에요.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곳, 집무실 부분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는 곳, 거소, 거소는 집회 시위 금지 대상 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용산경찰서의 인력이 170여 명 늘었는데 그것은 평균 서울 경찰서의 인력 증가 1%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청와대의 경호 인력을 포함했던 종로경찰서 600여 명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경찰청 대테러본부가 해외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안보 위해 세력, 국제 테러분자를 막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역, 시청역 지하에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한다, 인질 납치극을 벌인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 대테러본부에서 나가서 진압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호임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어떤 임무를 더 중시하겠습니까? 경호 임무와 대테러 임무, 당연히 경호 임무를 더 중시할 것입니다. 테러 업무에 펑크가 나오는 것이지요.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력 조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경호처 시행령에서 또 내용을 바꿉니다. 경호 목적으로 처장은, 경호처장이겠지요, 처장은 경호 목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등 경찰과 군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통제·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초안을 작성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자 군, 경찰, 공무원 이것을 인력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히려 추가를 해요. 시설, 시설을 쓸 수 있다. 거기에 또 추가를 합니다, 장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이 시행령을 통해서 반대에 부딪히자 더 부드럽고 일반화된 표현을 가지고 업무 영역을 오히려 확대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대통령실 건물 바로 옆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을 역임했던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육사 1년 후배이자 수방사 1년 후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령관 1년 후배, 작전본부장 1년 후배인 김용현 처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국방부의 거의 모든 인사는 그분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세간에 퍼져 있을 만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퍼져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인 경력자, 즉 앞으로 승진을 바라는 분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수방사 예하의 일부 부대를 언제든 소위 경호 목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봤더니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사이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서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을 억압하고 방송장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엄 관련 문서 곳곳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당시 102개의 방송사·통신사 등 주요 언론사의 성향을 분석해 두었습니다. 보수 언론기관, 보수 방송기구, 중도 언론기관, 중도 방송기구, 진보 언론기관, JTBC는 당시에는 진보 방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언론기관·방송기관을 대상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통제를 위해서 문체부·방통위·계엄사·합수부 68명이 검열 및 통제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촉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최악의 경우에 앞에는 검찰로 쓰다가 또 막판에 대법원도 있고 헌재도 있고 다 하는데 안 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군과 국방부와 기무사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서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반민주적·반헌법적 행동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동원될 부대가 30사단·20사단, 1공수·3공수·9공수·707특임대까지 그 문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것과 관련된 인적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 인맥, 이 수방사를 비롯해서 경호처 또 방첩사·기무사로 연결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호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임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다. 즉 차지철의 경호실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실 가운데 하나의 극단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김재규 국정원장,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무시하고 비서실장도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예비 경각심 차원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실제로 2016~2017년 사이에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이 기획을 했고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전문가 중의 한 분이, 요즘 채 해병 사건으로 유명한 어떤 분이 이 업무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일을 기획하거나 꿈꾸고 계신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실 것이니 아예 상상력에서도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언론 창달이 되며 다시 방송을 억압하지 마시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간의 국가권력에 대한 잘못된 활용과 운영 중단하시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대외적인 정책 전환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포기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반대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짓밟는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순되고 참담한 현실에서 더 이상 악정을 펼치지 마시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 여러

분들께 정정당당하게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십시오. 언론장악 같은 그런 계획, 그러한 미몽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방송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나 뭐 기타 사익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중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바로 그것을 마지막 벼랑에서나마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모욕과 마타도어 중단해 주십시오. 모 어떠어떠한 방송사가 문재인 정부 때 뭘 어떻게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악선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존경하는 상대 정당 의원님들께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니 뭐니 YTN을 팔아넘겨 버리고 TBS 예산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런 부분을 과연 정당하다라고 하신다면 토론하십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참 애국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무제한토론에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기해 놓으시고 제가 길게 하니까 간만에 휴식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인권의 한 영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토론의 기본은 경청인데 경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최근에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찾았어요.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수미 테리라고 하는 한국 문제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성은 김 씨, 태어난 곳은 서울. 김수미 씨예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셔서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시민권을 땄고 미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CIA의 초급 직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 CIA에서 근무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DNIC, 즉 미 국가정보장사무처 그리고 NSC에서 일을 하면서 대외 접근 및 아웃리치(outreach)라고 하지요, 교류가 허용되는 직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대외 접촉이 인가된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에 이 직장을 관두셨고 뉴욕에 있는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외교협회의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원의 일부 직원과 접촉을 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2013~2023년까지 10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올 7월 10일경에 기소하면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31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갑자기 이 사실이 보도되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미 사법 당국은 13년 전 공직을 떠난 민간인 수미 테리의 기밀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전 정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는 '수미 테리 씨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그의 행동이 많은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미국의 어떠한 국가기밀도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법정 싸움에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교부가 됐든 정보기관이 됐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튀어나와서 전 정권 탓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31페이지 중에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보아서 소위 혐의사실이 식별되었습니다. 식별하였습니다. 그 속의 혐의사실 기술 항목을 죽 분석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연평균 1.6개 항, 이건 뭐냐 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2.4개 항, 윤석열 정부 1년간 20개 항. 그래서 기소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야지요, 뭘 잘했다고. 전 정권 탓하느라고 더 많은 20개에 달하는 혐의를 그야말로 양산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나 러시아가 듣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미국 대선 110여 일 남짓 남은 그 시점에 미국 법무부와 FBI가 이것을 기소하면서 동맹국에 쓸 수 없는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능하다는 간부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외교장관 박진,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당시 주미대사 조태용,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을 거쳐 현재 국정원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막았어야지요. 미국 국방 관련 첩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 삼아서 막았어야지요.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정보기관이 이제 전 세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재국의 고위 인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재국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바로 국정원이 아니라 외교부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진 안보팀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보십시오. 수미 테리를 자기 옆에 앉혀 놓고 국민의힘 빨간 옷을 입혀서 무슨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에미상을 받게 해 주겠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 좋다던 한미관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대선 110일을 앞두고 왜 미국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시범 케이스로 걸려 가지고 '전 세계 각국, 미국 대선에 간섭하지 마라' 하는 경고용 소재로 활용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미동맹입니까?

제가 듣기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직후 박진 전 외교장관을 비롯해서—거기에 조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위 대미 외교 특사단을 워싱턴에 대선 끝나고 10일인가 15일 지나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분들이 듣고 싶은 꿈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문재인이 망쳤다', '한미동맹 회복 불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한미동맹이 참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니 상대방에서 한미동맹 회복시켜야 될 사항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꾸 남의 나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잇 쿠든트 비 베터(It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다, 이대로만 해라. 한미동맹이 훼손되긴 뭐가 훼손돼, 당신들이 회복시킬 한미동맹 없다, 정 잘하고 싶으면 더욱 강화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좋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5월 달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약 8~10페이지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셨어요. 8~10페이지는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길이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정말 수개월 동안 백악관과 청와대, 바이든 백악관과 문재인 청와대가 수십여 차례 전문, 텔레그램(telegram) 전문이라고 하지요. 전문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한미동맹 발전 방향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집대성인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 바로 그 공동성명이 2022년 5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게 제시한 한미 정상 공동선언과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에서 더 손볼 것 없다, 당신이 원하면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운 거지요. 아니,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 문재인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이고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도 되고 한 번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케미가 맞는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모종의 작업이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얏트 호텔에서 만날 뻔 하셨는데 전화통화로 우정 어린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2022년 5월 중순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극우보수의 판단이고 능력입니다. 한미관계가 나빠야 되는데 좋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백악관에 찾아갔더니 한미관계 충분히 좋다, 국무부도 찾아갔더니 한미관계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한미관계가 감히 좋다니,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한미 공동성명을 작성하는데 바이든·문재인 때 작성했던 한미 정상선언과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어요. 기조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이후에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요.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한반도 전문가 비공개회의에 수미 테리가 참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온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기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문가 회의에서 장관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미국 FBI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부뚜막에 올라오더니 밥상 위에 올라오네 이런 느낌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조사해야 되겠다, 딱 걸린 거예요.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교부가 국정원이 상대하던 수미 테리를 납치해 가지고, 마치 납치하듯이 이 가련하고 성실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한국의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기념 행사를 공동 개최해서 윤 대통령이 방미하니 좀 최대한 띄워 달라, 그 행사를 기획해 달라, 여기에 한국국제정치학회까지 동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니, 국정원은 자기가 일하는 페이스와 리듬이 있습니다. 조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면 알았어, 오해하지마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교부가 올라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천영우 MB 정부의 안보수석까지 동원해서 온갖 띄우고 거기에 또다시 이분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돈 갖다 주고 이따위 초아마추어도 안 하는 짓을 해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에 던져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득달같이 받아서 씁니다, 그 어떤 비판도 없이. 문재인 정부 때 심각한 일이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기소했어야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왔을 겁니다. 제가 처리했지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왜, 금도를 지키고 동맹국 간에 상호 존중해야 될 선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터진 것입니다. 국정원을 마치 주한미대사관 정보지원센터처럼, 마치 외교부 미국정보지원센터처럼 남용하면서 확대하면서 마구잡이로 앞장세우고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보부에, 국정원의 해외활동 업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탓하고 조선일보에다가 던져 줘서 스핀을 먹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개혁돼야 되고 언론이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문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해외 담당 차장 사표 내고 국정원장 바뀌고 외교장관 바뀌고 주한미대사 본국 갔다 오고 주미한국대사 들어와서 설명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열고 난리가 났겠지요. 조용합니다. 왜 조용합니까? 언론이, 어떤 단어가 가장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에 포섭당했다', 아닌 것 같고 언론이 제 말을 못 하는 것이지요.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에 관한 문제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광산 일본 근대산업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서 써 줬습니다. 그 등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등재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광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징용공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어 갔습니까?

그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돈표? 징용공 선조들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 5엔, 10엔, 3엔 이런 것 쭉쭉 모아 놓은 것. 돈 못 받고 도토리죽 같은 것 드시면서 이 돈을 모아 놨어요,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자기 친구가 한국 갈 때 주고,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사도광산에 조선 징용공이 이렇게 고통받고 동원돼서 비통한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한 동판 표지 하나도 못 붙이게 하고 몇십㎞ 떨어진 무슨 향토문화관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한 적 있다 이런 거나 쓰게 하고.

이런 반민족적·반역사적 세력들이 외교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않는 조지훈 선생의 아들, 그래서 저도 청와대 있을 때 괜히 그냥 좋게 봐줬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능력은 있는 그대로 봐줬어야 됐는데. 지조를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조지훈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막연하게 외교도 잘하겠지, 후광효과로 점수도 줬어요.

바로 그분이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의 결의안 채택하고 발표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직후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해서 소위 엠바고가 깨진 채 보도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비통한 경험과 기억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일본 아사히신문에 엠바고가 걸렸다 하니 한국 신문에도 엠바고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신문이, 그 어떤 방송이 엠바고를 깨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도한 게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대주주고 아무리 예산 깎아 버리고 월급 못 받는다 해도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지요. 방송사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 친애하고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이 서둘러서 SNS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요새 하도 일이 복잡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 것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의, 간만에 국민의힘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채택한 바로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결의안이 정말 옛날 인쇄 기준으로 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조를 그토록 강조하신 조지훈 선생의 아들이 외교장관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국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보도하고 아산 연구재단의 모 전문가가 나와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한일 간의 협력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따서 보도한다, 정당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당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린하고 돌아가신 선조까지 또 한 번 역사의 뒷골목으로 매장시키는 이러한 비정하고 추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하루 전 신원식이라는 국방부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주 긴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군사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의 범위 더 이상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다음 정권에서 손보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이 군사훈련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고 해 갈 수 있도록 무슨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것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정도의 문서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보고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훈령에 따라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서 행정권, 새로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그 권력의 권한입니다.

누가 3년도 안 남은—죄송합니다—것들이 감히 누구 마음대로 공동군사훈련 등 한미는 물론이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의 범위를 손대지 못하도록 문서로 묶어 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통령의 재가와 훈령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제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행위를 일본 언론에 인터뷰라고 하는 형식으로 떠벌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맞습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작성된 사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가 없어요.

국방이 무엇입니까?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안보의 목표이자 국방입니다. 아니, 일본이 무슨 해상자위대를 끌고 와서 독도를 침탈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 질려서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면 우리 해경 전력, 해군 전력 투입하지 않겠다고 우리 사병들에게, 해군에게 교육시킨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국방을 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언론에서 비판합니까? 방송에서 다뤄집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노력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송 관계 네 가지 법안은 반드시 법안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법이 돼서 집행력을 갖추어서 더 이상 국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피어린 고통의 매 순간순간의 선조의 역사를 지워 버리는, 팽개쳐 버리는 이런 짓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들의 행위는 당연히 반헌법적 위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인 어느 자리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 그런 문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문서를 접하고

대통령께 재가를 건의드리고 훈령을 받아서 국방부에 전달도 하고 외교부에 함께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간혹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그것은 매우 다양한 것이지요.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도 다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한일 간 군사훈련의 범위를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스스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 탄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의 일상 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수출, 반도체부터 최근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차전지부터 미래 먹거리로 꼽아 왔던 현대·기아의 전기차까지 우리의 핵심 성장 산업 하나하나의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꺾이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은 술 드시고 정시 출근도 안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하시고…… 아니, 오물풍선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1700개 이상이 넘어왔는데 단 한 번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걸핏하면 국방장관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제가 알아봤더니 정전협정 위반 발언입니다.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설령 군사적 충돌이 있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갖추어서, 시간을 들여서 안정을 취한 채 사태를 재진단하라, 강력하게 반격하지 말고 참아라, 끝까지 싸우지 말고 분쟁이 있으면 가급적 일찍 종료하라 이것이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이자 정전협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말을 해요. 그러고 오물풍선 왔는데 하나도 못 떨어뜨려요. 국회까지 왔어요. 대통령실, 용산…… 심지어 엊그제 만났는데 미국 대사 관저, 일본 대사 관저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것이 코인시던스(coincidence), 우연이냐?'. 화가 난다는 거지요. '일본 대사관에도 떨어졌고 미국 대사관에도 떨어졌는데, 아니면 무슨 장치를 한 거냐?' 해서 저도 그분을 위로해야 되겠기에 '주한 중국 대사관 마당이 넓은데 거기도 여러 개 떨어졌을 것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그랬는데 화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 중단시킬 수 없냐?' 그랬더니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 옆에 의원님께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보장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북한 탈북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제1차 냉전 때는 미국이 중국을 활용해서 소련을 봉쇄해서 소련을 망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2차 봉쇄, 냉전기라고 하지 않느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제2차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핵심은 봉쇄입니다. 누가 누구를 봉쇄하고 있습니까? 1차 냉전기에는 중국을 동원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때때로 인도, 때때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란, 거기다가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SCO라 그러지요—그런 국가들, 그리고 북한. 그래서 유라시아의 대륙 전체를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려면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낮춰져야 된다. 그것이 한미 공동의 이익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차 냉전 때는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봉쇄해서 붕괴시켰다—제가 미국 대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지금 제2차 냉전, 제2차 봉쇄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북한,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국가, SCO 회원 국가까지 다 포위하는 냉전 구조다. 힘이 벅차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과 소위 한반도 전역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은 전력을 가지고 제대로 봉쇄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니 이것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 주시네.

맞다고 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판국에 국익도, 안보도 모두 이념 전선으로, 아주 얄팍한 안보 상업주의로 오염시켜서 마치 이 정권이 한미동맹을 잘하는 양, 안보를 잘 지키는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 대선 100일 앞두고 수미 테리 사건 터뜨려 가지고, 그것도 외교적으로 서로 무마하고…… 처리 못 하고 뚫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한 일이 마치 이란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벌이는 미국 대선에 관여한 행위처럼 비쳐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파탄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고, 한일 간에는 사도광산 강제징용공 사실조차 지워 버린 채 유네스코 일본 문화유산, 근대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합의해 주고, 일본 등과 군사훈련은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손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합의하는 문서 서명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제, 그제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이진숙이라는 분이 어떤 것은 답변을 잘 해요. 어떤 것은 답변을 못 합니다. 나 그분이 쓴 법카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나가면 아주, 너무도 우리 스스로가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되…… 이런 경우에도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이진숙이라는—객관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후보자가, 공직후보자가 ‘위안부는 강제로 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대답을 못 합니다.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6세 17세 어린 조선의 처녀들이 제 발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진들 많이 있어요, 일본 육군 옷 입혀 가지고 끌고 가기 직전에 찍어 놓은 그런 사진들. 그때 우리 꽃다운 소녀들의 표정,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데 이것을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맡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다못해 놋수저, 놋숟가락까지 다 공출해 갔는데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놋그릇, 놋수저 갖다 바쳤습니까?

조선일보는 했지요.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그자들이 나라를 백 번이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위안부는 강제로 간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입니까?’ 이것에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친일 매국 맹동분자들이 정말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토착왜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진왜란부터 1894년 이후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부터 역사를 훑어보면 하루에 우리 선조를, 조선인을 2000명씩 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민족, 우리 강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대한민국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강력한 역사의식과 투쟁정신, 독립의 의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성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기필코 해내야 되겠습니다.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고 반드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곧 좌절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또 올릴 것입니다. 거부권 횟수가 올라가는 것은 곧 탄핵지수이자 마일리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3년도 안 남은……

다 적나요, 속기사님?

이 모리배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3년도 안 남은 모리배들이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모욕적인 언사를 1분, 2분마다 한 번씩 토해 내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분이 저와 같은 초선이었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의장 우원식 박선원 의원님, 같은 의원들까지 포함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선원 의원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중으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격조 있는 표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기분이 상하셨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만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 안 하는 정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은 숨 쉬는 모든 순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월·화·목·금 출근하시더니 또 다른 현직에 계신 분은 도대체 출근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적자니 너무 불규칙해 가지고 혹은 너무 늦게 나오

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치를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8시에는 출근해야지요. 감안해서 9시에는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관저에서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시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시에 안보 관련 보고서 일독하시고 7시 반에 관저 내에 있는 식당으로 오셔서 주요 정책 관계자, 비서관, 수석, 외부 전문가 불러서 8시 반까지 조찬하시고 8시 40분에 선임비서관,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책실장 불러서 6시 45분부터 9시 5분 전까지 10~15분간 회의하시고 거기서, 관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십니다. 9시부터 집무하십니다. 12시에 오찬하시고 잠깐 쉬시고 또 근무하십니다.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만찬하시고 30분 쉬시고 다시 문서 보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올린 문서를 다 보시고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잘했다, 좀 보고서 분량을 줄여라, 누구 비서관과 이야기해라, 누구 수석과 상의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셔 가지고 1시 반, 2시까지 문서 보시고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안보관계장관회의 들어 보셨습니까? 1700개 넘게 오물풍선이 들어오고 거기에 무슨 화생방 물질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날아온 방향을 추적해 가지고 그 오물풍선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손상을 줬다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하면서도 NSC 상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보도 안 챙기고 경제도 안 챙기고 서민 생계는 외면하고 민주주의는 짓밟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이라는 그 제도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가 부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술을 드셨다든지 수정방을 마셨다든지 위스키를 좋아한다든지 무슨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웠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분은, 이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라고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언론인이라고 판단 능력이 없겠습니까, 지적 능력이 없겠습니까? 상황을 보는 혜안이 없으시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면 내 친구도 나설까, 내가 이 기사를 쓰면 내 후배도 써 줄 것인가, 어느 순간 써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들이 철옹성으로 예산으로 사들였다고 착각하는 그 언론도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매우 두꺼운 강철 솥뚜껑에 내리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민의의 폭발 아래 오히려 그 새로 만든 솥뚜껑이라 할지라도 폭탄이 되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언론은 공적인 기재입니다. 제도이자 사회구조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언론과 언론인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서 마치 안정을 이루고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내지는 판단 착오에 빠질 수 있겠지요. 모든 독재자와 실패한 위정자가 바로 그러한 망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근현대사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된 질서, 억눌린 침묵,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의문의 서거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정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하려는 그 수많은 시도를 다 뚫고 나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뚫고 나오셨고 우리 민주당의 전신의 전신인 신민당부터 유신독재를 물리쳤습니다. 유신독재, 유신헌법 잘못됐다 말만 해도 감옥 가는 긴급조치 9호, 1979년 2월에 포고됐다는 바로 그 긴급조치 9호가 나오던 그해에 바로 절대 통치자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7월27일 24시 경과)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화적으로 스스로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자성하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민생회복특별지원금과 지역화폐까지 포함한 비상 민생경제대책 특별조치로 포함된 모든 내용 법안을 통과하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제도로써 현재의 대통령이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정권 들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분노와 개탄과 탄성이 질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 원 지급하자, 지역화폐로 하자, 제발 자영업과 소상인 숨통 좀 틔워 드리자.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다 하는 것에 대해……

‘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의장님? 나쁜 말 쓰면 안 되지요?

○의장 우원식 예.

○박선원 의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람이’는 괜찮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이 국힘에 입당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 같다든가 유사든가,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지요.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김경률 회계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5만~35만 원이라도 제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좀 주자 했는데 그것을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뭐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 매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말하라 해 가지고 했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억이라고 해서 한번, 저 사람들 늘려 주세요’ ‘그래, 그것 좋은 말이네.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이런…… 여기도 말씀이라고 써야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맞았다. 왜 김경률 회계사가 여사님을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 저렇구나. 이분이 좀 더 심한데 둘이 비슷한 과에 있구나.

17세기, 18세기에도 그러한 발언은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언 300년 전에도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 좀 돌아가게 해 달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때 식으로 말하면 '5프랑 달라고? 요구하려면 한 5만 프랑 달라 하지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 대신 케이크를 먹어라' 했는지 그 발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발언과 그 군주라는 자가, 여기는 윤석열이 아니니까 '자'라고 해도 돼요. 그때 그 군주라는 자가, 민중들을 위해서 5프랑이라도 달라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군주라는 자가 '무슨 5프랑 달라고, 그러면 한 20만, 50만 프랑 달라고 그러지. 참 웃기네' 이랬으면 그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보다 심각한 겁니까, 안 심각한 겁니까?

(「심각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 지적을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고, 동물학적 표현으로는 사육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은 아시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중국을 비롯해 외세가 5년 만에 한 번씩, 5000년 동안 천 번을 침범해도 물리치고 우리 한민족의 견결성을 유지하며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키며 우리 문화를 이끌어 온 위대한 한민족입니다.

3년도 안 남은……

의장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외세의 침탈을 이렇게까지 유발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짓밟고, 통일부는 적대적 정책을 쓰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사무국 간판은 바꿔 버리고 교류협력국장은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러면 왜 통일부장관을 합니까, 유튜버로 전국 강연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나라 국방장관은 국방을 안 합니다. 이 나라 외교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통일부장관은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적 통일의 책무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을 짓밟고, 감사원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해서 공무원을 범죄자시 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로 넘깁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 탄압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필요하다면 진술 조작 세미나까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술 조작 세미나로 보이는 행위까지 자행하면서 야당 정치 지도자를 압살하고 악마화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일은 단 하나도 안 합니다.

도대체 산업자원부는 반도체연구소 일본에 갖다 세우겠다 할 때 뭐 했습니까? 미국·일본이 칩4 동맹, 반도체 동맹, 타이완·한국과 함께 반도체 동맹 하자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뼈 빠지게 날밤 새워 가면서 발진시킨 반도체산업 갖다 바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R&D 연구소 일본 갖다 세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찾아서 하는 이 정권, 이 정권의 속성이 무엇이기에 과연 이토록 처절하고 치열하게 반민주적…… 민중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반민중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919년 4월 10일, 어느 관보는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정원 의결은 4월 10일 날 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히 말하는 건데—형용사적 표현을 쓰겠습니다—범죄적 국정운영에 가깝다라고 하는…… 매우 타협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우리 국회의, 민의의 전당의 격과 자질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말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품격을 유지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멋집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율을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존중하며 그 말씀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선이니까.

배우고 또 배워서 같은 말이라도 좀 더 품위 있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폐부는 분명하게 찔러 주는……

말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말했듯이 실행하면서 배운다(learning by doing)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권,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정권이 아직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탄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핵심 조직에 검사 출신을 갖다 앉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의 고문, 사외이사, 때로는 사내이사로 낙하산처럼 쏟아져 내려지고 그리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기에 정계, 관계, 재벌 그리고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힘으로 짓밟으면 짓밟혀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이 정권도 우리 위대한 한민족이 한번에 일어서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기 전에 제발 부디 원컨대 잘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 위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며 합법적으로 수권 세력이 될 것이며 합법적으로 집권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오로지 귀하들께 달려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늘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 우리 존경하는 당원들과 함께 민생의 어려운 부분,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인 장애물을 함께 거두어 내겠습니다. 모순과 질곡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존경하는 국민들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앞에 서라 하면 앞에 서서 화살이 됐든 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막아 내겠습니다. 뒤에 서서 등을 밀어라 하시면 뒤에서 국민들을 지키고 앞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쪽 장애물을 없애라, 없애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70년 가까운 우리 당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여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다 못 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결코 오래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의 분노 마일

리지는 쌓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국민들, 서민,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국회에 와서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는 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다 합치면 한 육칠백 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육칠백 개 되는 법안들의 기본 축이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자, 약자를 도우자.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법안이라면 서로 다투어 공동발의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우러나서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법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 있는 반도체 성장 및 육성에 관한 법안도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모아서 공동 발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 그것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 법안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일할 줄이야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마' 이러셔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최고위원 나갈 걸 그랬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감히 언감생심,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국보와도 같은 박지원 원장님께서 저렇게 턱 하고 앉아 계시면서, 턱 하니 앉아 계시면서 우리 후배·동료 의원들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시면서 하루에도 2건 이상 언론, 유튜브, 모든 채널에 불러 주는 데는 다 나가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첫 번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저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시는 점도 있다.

두 번째, 이 엄혹한 언론환경 속에서 그래도—원장님 죄송합니다—박지원은 먹힌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보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시면서부터 '언론은 지원하되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박지원이 언론은 지원한다 해서 박지원이다. 언론은 간섭하지 않는다'……

○의장 우원식 박선원 의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토론에 집중해 주십시오.

○박선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으니 의관정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본안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협력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의사소통의 기본 기제가 언론입니다. 그렇기에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하나의 묶음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가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은 어느 시기, 어느 환경에서도 탄압받거나 위축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예산으로 TBS를 반 토막 내고 YTN을 특정 기업에게 매각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 사주들이 대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그 언론을 존중하고 그 언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언론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방송,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살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야 비로소 경제도 살고 안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안보 전문가로서 이 방송 4법이 단순히 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던 언론자유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기반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동시에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것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송 관계 4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이 법이 통과돼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리하다. 복리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험난하지만 반드시…… 무제한토론 하자는 분들이 그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이번 방송 관계 4법,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밝히려는 진리 추구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말로 최소한의 장치가 이번 우리 당이 통과시켜서 시행하려는 방송 관계 4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교육방송을 비롯해서 그 주체, 그 대상에 대한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의 기민성과 신속성, 보도의 정확성이 보장되었을 때 더 이상 이 검찰 폭압 정권은 폭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언론인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으로써 반드시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최우선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며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민복을 보장하는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기에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연단을 결

코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방송 관계 4대 법안, 반드시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발효토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신다면 우리는 또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먼저 지치느냐, 누가 먼저 국민이 심판을 하냐, 두고 봅시다. 우리 민주당은 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인가?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과 함께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러한 감각 기관이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세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을 지키고 방송을 지켜서 국리민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을 반드시 시행케 하여야 합니다.

저들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매우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표현한다면 스스로의 기반을 잠식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스스로의…… 이 표현은 쓰면 또 말씀 계실 것 같지만 전문용어로 묘혈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표현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잘 목욕을 시켜서 아이는 버리지 말고 때만 버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아이를 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곧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다. 뭐 이런 서양의 일반적인 속담과 이런 게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립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통과시켜서 시행코자 하는 방송 관계 4법은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법안입니다. 인권의 기초 법안입니다. 헌법의 기둥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누가 이것을 쟁점 법안이라 합니까? 누가 이것을 싸움으로 몰아갑니까?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함께 살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에서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성실하고 숭고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해야 합니까? 의장님, 마무리해야 됩니까?

○의장 우원식 내가 중단시킬 때까지.

○박선원 의원 저는 지침에 순종하는 조직에 있어서 비교적 조직에 충실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서 ‘이것 해’ 하면 저는 했고 ‘이것 하지 마’, 안 했습니다……

○의장 우원식 박선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제기한 이 법안은 또 하나의 민생법안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의 근간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생법안입니다.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 국민복리를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은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없을지 있을지 잘 몰라서 토론을 종료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까? 종료?

(「부결되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은 종료하지만 제 앞선 분들의 관례로 보아 투표가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분 더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도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내려가도 됩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의장 우원식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치는 것 아닙니다.

박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

챙겨서 나가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뭘 많이 가져오셨네.

○박선원 의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00시37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이기헌 의원, 정을호 의원, 서왕진 의원, 정춘생 의원, 이주

영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0시39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0시5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9표 중 가 188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6)

(01시00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4일째 새벽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내내 텅 비다시피 한 본회의장 모습도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더해서 본회의 4일째인 이 시간까지도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호영 부의장께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호영 의원이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으로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주호영 부의장께서 보여 준 사실입니다.

지난 7월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그 사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검 법안에 찬성해서 사회를 본 것이었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주호영 부의장께서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하신 말씀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원은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도 무책임합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은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었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양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양당을 포함해서 모든 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 절차라는 사실이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당의 작은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의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7)

(01시05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7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방송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강승규)

(01시08분)

○의장 우원식 먼저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예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좀 듣고 가시지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미디어법을 통과할 때 한 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KBS·MBC·EBS, 공영방송 3법의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합쳐서 방송 4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 방송 4법의 부당성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죽이는 방송 사(死)법이 결국은 공영방송을 죽이고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탄생시킨다.

방송은 제한된 수신 주파수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것인데 결국 페이크 캐스팅으로 방송의 본질이 바뀐다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정의하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과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 살리고 대통령 만들고 방탄하기 위해서 이 방송 4법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개딸민주주의가 더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역시 공영방송이 해체되고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송 4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1대 말에서 시작된 그런,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철저히 죽이고 사장을 교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말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이 방송 4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180일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통위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

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공화국을 주창하면서 정작 탄핵의 1호 정조준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으로 표적을 삼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공화국의 통치, 검찰공화국을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검찰공화국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검찰공화국은 윤석열 정부를 규정 짓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은 내용의 맞고 틀림은 상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반복적으로 국민의 귀에 대고 못이 박히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를 주창할 나팔수, 그것으로 방송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공영방송 독립은 공영방송을 노조와 민주당이 영원히 장악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에서, 공공재에서 민노총의 또는 언론노조의, 민주당의 기관방송, 직영 나팔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긴급 현안 사항이 MBC 사수입니다. 이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 이를 통해서 MBC를 그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언론노조가 계속적으로 노영방송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MBC를 노조의, 민주당의 손아귀에 계속 가둬 두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지요. MBC의 외눈박이 정치뉴스와 편향된 다큐멘터리 등으로 '방탄 재명 방송'을 계속 만들어 대겠다 그런 속셈입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바이든'을 '날리면' 또 MBC 스트레이트, 뉴스 등에서 수없는 가짜뉴스가, 정권에 대한 무지막지한 네거티브 방송 등이 지속되어도 MBC 임원진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또는 지지자를 통해서 그 임원진들에 대한 사실상의 준테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MBC는 여전히 언론노조의 소도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소도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일정 지역은 성역으로 범죄자 등이 도피를 하더라도 이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도피처가 되었는데 이제 MBC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의, 가짜뉴스의 소도처럼 성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 MBC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를 무지막지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 4법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들과 정책 연합을 맺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방탄재명단' 행보에 MBC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언론노조가 KBS·MBC의 박근혜 정부 몫 이사들을 강제해임시키고 자진 사퇴시키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 정권은 그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장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강 이사는 당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필자가—강 이사를 말합니다—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의 협박과 회유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버틴 이유는 이런 죽창이 난무하는 상황을 나라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노조원들이 보인 막장 행각은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고 또 다른 KBS 관계자들도 보여 준 기회주의적 배신의 행태는 기회가 될 때 모조리 정리해서 기록에 남길 계획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기록입니다.

강규형 이사는 실제로 KBS 사장을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는 이사회 인원 구성을 위해 폭력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언론노조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받으면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은 강규형 이사의 이런 해임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은 강 이사가 재직하고 교수로 있는 명지대학으로 몰려갔습니다. 스피커를 틀고 그리고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라고 협박에 협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또 뭐가 테러겠습니까? 흉악범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가 2년간 사용한 32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 이사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가 월급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다른 이사 11명도 강규형 이사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독 강규형 이사가 쓴 김밥 또는 다양한 다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입 다물지 않았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강 이사는 인민재판식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양승동 KBS 전 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사용내역에 이렇게 린치를 가하거나 악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 사장의 경우는 세월호 사고 당일에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강규형 이사는 이사직에서 쫓겨나야 됐고 양승동 사장은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친민주당 임원은 무죄였고 반민주당 강 이사는 유죄였습니까?

강규형 교수가 해임되고 이사회 구조를 바꾼 문재인 정권은 KBS 사장을 교체합니다. KBS만 그렇지 않습니다. MBC도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MBC 이사였던 전 정권 몫,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의 몫 유의선 이사는 자신의 제자들인 이화여대 출신의 언론노조원들의 협박 때문에 자진 사퇴합니다. 이어서 같은 몫의 김원배 이사가 사퇴합니다. 강제로 구성한 친민주당 이사회 체제는 결국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그저 KBS로부터, MBC로부터 얻어터지기만 했습니다. 이사진 1명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사장 쫓아낼 생각은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른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공영노조라도 동원해서 민주당 몫 이사들 협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민주당 몫 이사들의 학교, 사업장, 그 어딘가 쫓아가서 협박하고 테러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또다시 촛불정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정해진 임기가 끝난 KBS MBC 사장을 교체하고 임원진을 교체하는데 그것이 왜 언론장악 시리즈로 바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적용했던 법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용했던 기존의 방송 관련 3법과 방통위법은 다른 법입니까? 아무리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표변하는 두 얼굴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민주당 정부가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진,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정의고 진실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장을 교체하고 임원진을 교체하면 방송탄압이고 언론탄압입니까? 어떤 법 해석 논리인지 참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구호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지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적나라함을 제가 강규형 전 이사가 기록한 당시의 일지를 읽어 드리면서 그 민주당의 수법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또 이 방송 4법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저희는, 국민들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언론노조의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을 향한 집단린치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힘들게 사장, 이사장을 먼저 갈아 치우는 것보다 방문진—그러니까 MBC의 사장, 임원을 위한 조직이지요—과

KBS의 이사 2명만 겁박해서 끌어내리면 손쉽게 이사장도 바꾸고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끌어내린 이사들은 주로 교수들을 선택했다. 학교에 재직하기에 괴롭히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역시 괴롭히기 쉬운 상대로 표적을 삼았고 실제 실행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회사로 몰려가고 또는 교회로까지 몰려가서 난동을 피웠다.

결국은 방문진에서, MBC의 두 분, KBS에서 한 분의 이사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진사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KBS의 경우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김경민 교수, 이원일 변호사 그리고 필자인 강규형 교수였다. 그런데 이 3명은 공교롭게도 전국언론노조에서 임의로 발표한 소위 언론 부역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명단과는 달리 괴롭히기 쉬운 사람을 주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다.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언론노조의 이사 퇴진 운동은 온갖 탈법,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 자기들은 정의이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다 정당하다는 생각들로 무장했고 이들의 거친 언행에 사용되는 논리로 사용됐다.

2018년 8월부터 이들 이사에 대한 협박,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인 유의선 교수에게는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압력이 비인간적으로 가해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게는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단체로 몰려가 패악질을 해댔다. 김 이사의 부인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린치를 당했다고 한다.

KBS의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다. 학교에 단체로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김 이사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 세 분은 이러한 압력을 견디다 못 해 사표를 제출했다. 항간에서는 사표를 제출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세 분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9월 12일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그리고 2노조입니다. 그런 KBS 언론노조와 2노조가 집단으로 학교에 쳐들어와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온갖 허위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온 동네에 배포했다. 필자에 대한 비방, 사임 압력과 협박이 주 내용이었다.

성재호 KBS 언론노조위원장은 다음번에 올 때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남겼다. 공공연하게 이런 협박을 일삼았다. 같은 날 강의실로 언론노조원들이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들고 와서 필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들의 핸드폰과 카메라에 다 담겼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로운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필자의 집 앞에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이 몰래 혹은 대놓고 필자 가족들의 사진들을 마음대로 찍어대고 그것을 동네방네 보여 주며 필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냐고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들에게 그럴 만행을 저지를 권리를 누가 부여했는가, 더군다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가장한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공공연히 해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과연 성재호 노조위원장의 공언대로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도열해서 구호와 협박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을 벌였다. 9월 20일에 이르러서는 집단린치하는 사태까지 터져 버렸다.

강규형 전 이사 집단린치를 한 동영상과 이후 성재호 2노조위원장이 시큐리티 직원을 가격하는 영상 여러 개가 존재한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2노조위원장의 가격으로 시큐리티 직원이 다친 KBS 보고서와 사진도 있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조차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고개를 들고 보지 못했던 영상들이다.

원래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린치 장면들은 다 삭제한 동영상을 공개했었다. 그들의 전매특허인 악마의 편집을 통해 대중을,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것이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옛 강연을 멋대로 편집해 방영해서 당시 문 씨를 낙마시키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징계를 받은 그 유명한 영상에도 바로 이러한 악마의 편집 기법이 쓰였다. 다행히도 당시 실제 상황은 시큐리티에 의해서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2017년 10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영상을 틀었다. 고통스럽게 이 영상을 본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 표현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대상에게 상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그 위원장도 이렇게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은 당시 침묵을 고수했다.

더 가관인 것은 필자가 가까스로 계단으로 피신하고 이사회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설 때 성재호 위원장은 자신들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직원을 발견하고 극단적인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그 직원의 팔을 내리쳐서 부상을 입혔다. 자기들은 수십 대로 찍지만 상대방은 자신들의 작태를 단 한 대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그런 사람들이 방송하는 선전·선동 방송을 마음대로 틀어대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방송정상화인가 묻고 싶다.

2017년 9월 20일 이후에도 필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육체적 폭력은 계속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강의실로 몰려와 괴롭힘을 가했고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 필자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필자를 취재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2017년 11월 4일에는 250여 명의 KBS 언론노조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들이닥쳤다. 학교 정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였다. 승용차와 셔틀버스 출입을 방해했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결국 출입을 방해받은 한 졸업생과 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온갖 욕설을 하던 언론노조원들은 상대방이 핸드폰을 켜니 욕설을 일제히 중지하는 그런 교활함도 보였다. KBS 이원일 이사는 대형 로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 로펌 앞은 2017년 8월부터 여러 번에 걸친 시위 또는 집단시위로 회사와 인근 지역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전 이사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집 앞에도 다른 단체를 동원해 퇴진 압박 시위가 벌어졌다. 야권 이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방송국 내외에서, 안팎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그들이 학내로 쳐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음이나 마구 뿌려대는 유인물의 내용은 야비하기 짝이 없는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찼다. 그런 사람들이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꿈의 직장의 기자와 PD였다. 그래서 당시 한 일간지 사설은 그들은 방송장악위원회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장악을 완료한 MBC는 당시 아직도 파업 투쟁 중인 언론노조 KBS 동지들을 위해서 PD수첩 방송을 통해 응원했다. 2017년 12월 19일 MBC PD수첩 방송은 이들을, KBS 동지들을 응원하는 선전·선동의 장이었다.

필자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본부도 감히 주장하지 못한 유명한 허위 선동인 KBS 공금으로 애견 수입했다는 카드를 꺼내 놨다. PD수첩에서 등장한 느닷없는 애견동호회 회장은 개장수가 동원되었다. 애견동호회 회장으로 둔갑했지만 실제는 개장수였다. 그는 필자가 KBS 공금으로 애견을 수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실명으로 그리고 민낯으로 주장했다. MBC는 그것을 촬영해서 방영했다. 광우병 난동에서 갈고닦은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 실력을 유감없이 다시 발휘한 개그 콘서트였다.

선악 개념도 상실하고 공평성도 상실하니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난 뒤에는 온갖 부도덕한 행동도 자기편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런 일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정치권력,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부언론을 비롯한 몇몇 언론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한 웃지 못할 소극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송정상화라는 공허한 수사로 치장하기 바빴다.

그래서 KBS, MBC, EBS 그리고 SBS까지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언론노조의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이라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탈법적 수단이 동원됐고 절차적 정당성은 깡그리 무시당했다.

결국 한국 방송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제5공화국보다 더 교활하고 저질적인 방송장악이 21세기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MBC, SBS 등에 이어 KBS도 본격적으로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방송이 됐다. 즉 노영체제가 개막된 것이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실질적 지배하에 보도나 시사, 다큐 등에서 가공할 편향성 방송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강규형 이사가 기록한 방송 이사진 등을 린치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방송장악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 같은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이 글의 목적은 문 정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장악의 전개 과정과 본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기 위함이다.

2017년 5월 집권한 뒤 네 달 만에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2017년 9월 7일 조선일보의 특종보도를 시작으로 폭로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사건은 이후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갔다. 따라서 최초 기획자와 실행자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공개 검토보고서 내용을 폭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했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전술도 소개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해 퇴출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본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한국의 공식적인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지 또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지 심각히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KBS·MBC 사장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라고 각본을 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주당은 KBS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의 퇴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해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하여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우려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퇴진 운동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민노총 성향의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그들의 친근한 학계 등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래서 퇴진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건은 적고 있습니다.

언론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 회의를 구성해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쟁 전술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측 및 사장의 비리, 불법행위 그리고 다양한 의혹 등에 관련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 퇴진 전술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장의 경영 비리, 예를 들면 공금의 사적 유용 등 경영 비리 등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나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년, 그러니까 2017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건부 재허가들은 나중에 방송사 재허가 등에서 다시 등장하지요.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했다. 야당, 즉 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해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의 강도 높은 진상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각각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낙점설 진상을 재규명하고 관용차량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건이 폭로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 언론—조선일보—에 보도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리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관련 실무자가 의원과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 준비용으로 만든 것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문건이 워크숍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큰 쟁점이었던 방송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며 실무자 개인의 의견인 이번 문건을 무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송개혁 노력을 방송장악 음모 등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많이 들어 본 내력들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 실제로는 방송장악 시리즈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워크숍 당일에는 이 문건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 지도부에는 보고나 전달도 되지 않았다, 문건 내용대로 주요 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차한 변명이 사실상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민주당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 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 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KBS본부 노조위원장은 당시 성재호 기자였고요—KBS본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파업 100일 승리대회를 여의도 KBS 민주광장에서 열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총파업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등장했던 홍위병 난동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 줬다.

언론노조원들은 대학교수 또는 대형 로펌 공동대표 등 괴롭히기 쉬운 상대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구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위 기준에 따라 KBS에서 3명, MBC에서 2명을 주요 축출 사냥감으로 표적을 삼았다. 민노총 세력의 잇따른 집회 등으로 사립대 법인이나 관련 법무법인에서 큰 부담감을 느껴 해당 이사의 KBS 이사직 사임을 받아 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사진이 근무하는 대학교 등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집회 차량을 동원해서 샤우팅을 하고 고성방가하고 그리고 축출 대상으로 낙인 찍은 이사들을 그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고립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심지어 이사나 사장의 집 근처에서,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고 사퇴를 압박하는 수법을 잔인하게 썼다.

당시 광화문에서 벌어진 소위 비리 KBS 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KBS 2노조의 릴레이 발언은 이러한 도덕적 마비 상태, 홍위병들의 적나라한 그런 만행을 보여 준 사례

였다.

이 릴레이 발언의 첫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KBS 아나운서협회장이기도 한 윤인구 아나운서였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동안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뛰며 무려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회부된 상태였다. 그 이외에도 여러 노조원이 억대에서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문재인 집권 여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졌다. 강규형 이사의 해임 의결 소식이 전해진 날 민노총은 이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 집회에서 환호했고 민노총 조합원끼리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해임 절차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처리됐다. 2017년 12월 27일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를 해임 의결한 날 오후 방통위 상임위 4명, 이효성 고삼석 허욱 표철수 이 4명의 방통위원은 강 이사의 의견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건의 결정을 초스피드로 내렸다.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하고 첨부자료를 보고 동영상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데도 성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2017년 연내에 다 처리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무리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12월 28일 불법 해임을 인가했다.

이후 공영방송 축출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다.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이후 고대영 KBS 사장은 2018년 1월 10일에 해임안이 상정됐다. 2018년 1월 22일에는 해임 제청안이 통과됐다. 다음 날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함으로써 2018년 1월 24일 0시부로 해임됐다.

MBC 김장겸 사장은 2017년 11월 중순 이미 방문진의 결정으로 해임 처리됐다. MBC 민노총 세력은 강규형 이사가 끝까지 버틴 KBS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MBC를 장악한 것이다.

KBS 장악 과정에서 새 이사장이 된 김상근 목사는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고 임명된 보궐이사로서 원래부터 강한 친북좌파적 성향을 보여 온 인사이다. 김상근 이사를 KBS 이사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꾸준히 부정해 왔다. 미국에 가서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선전 활동도 열렬히 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의 무죄 석방도 계속 주장했다.

강규형 이사는 이러한 압력에 버텨서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문재인의 불법 해임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었다. 강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KBS 이사직 해임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낸 것은 2021년 9월이다. 이른바 공영방송의 홍위병 난동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강 이사의 1·2심 승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상고는 심리할 가치도 없다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냈다.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 승소했다고 복직할 수도 없었고 보상금도 2000만 원 남짓했다. 그러나 명분을 놓고 싸워 이긴 결과였다. 방송장악 과정을 잠시나마 늦출 수 있었고 불법성을 알리는 작은 효과도 가져왔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의 한반도 인권청문회에서는 2021년 4월 KBS의 편파적 보도 행태와 인사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강규형 KBS 이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KBS 이사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숙청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노총 세력은 양승동 KBS PD와 최승호 MBC PD를 각각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옹립하며 공영방송을 최종 장악했다. 이들이 KBS와 MBC를 장악한 뒤에 자행한 첫 조치는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불공정 방송을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포장했다.

적폐청산 기구의 이름은 이렇다. KBS의 경우 진실과미래위원회, 2018년 6월에 발족한다. MBC는 정상화추진위원회다. 2018년 1월에 발족한다. 이런 간판을 들고 공영방송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경우 감사실과 별도로 조직했다. 설립 초기부터 그 정당성을 놓고 이론이 제기됐지만 강행됐다. 공공기관 또는 감사실 기능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감사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소위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설립에서부터 실행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규형 이사를 축출한 뒤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민주당 추천의 김상근 이사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임 사장 시절 주요 보직간부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한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이 버젓이 자행됐다.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에서 반민노총세력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어떤 형태를 보였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난장판이다.

주진우, 김제동, 최경영으로 대표되는 편파·왜곡·불공정 방송이 매일 민노총의 노영방송 KBS와 MBC의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확산됐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전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즉 정권과 지지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 방송이 돼 버렸고 5공화국 당시의 땡전뉴스를 능가하는 왜곡과 편파 방송이 계속됐다. KBS, MBC 등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났을 때 조국수호 방송으로 방송 사상 최악의 몰골을 보여 주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도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더 중요 직책에 올라가고 온갖 불공정 보도를 계속했다. KBS의 양승동·김의철, MBC의 최승호·박성제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은 목숨을 걸고 편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옹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했었다. 공영방송인이라는 사람들이 문화혁명에서와 같은 홍위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집단적인 발작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그 조직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당시 KBS 부사장을 겸직했던 정필모는 민주당에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김덕재 부사장은 당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구의 조사역으로 설쳤던 인물들은 그동안 KBS에서 승승장구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의 권태선 이사장은 KBS 이사로 재직 당시 KBS 불법 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이 난장판을 벌여 가면서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민주당 추천 KBS 이사인 윤석년은 2020년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KBS 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한상혁은 이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 상태이고 역시 해임됐다.

EBS의 유시춘—유시민 전 의원의 친누나—이사장은 규정상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고치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검증을 피했고 무려 5년째 이사장으로 재직했었다. 마치 조직범죄집단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때로는 공영방송으로 존중받거나 때로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불리며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아 왔다. MBC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구에 의해 감독받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KBS·MBC가 초심을 잃고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으로 돌변하며 그들의 선전매체로 전락할 경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이를 국민이 가만두고 보고 용납하겠는가.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이 아닌가. 자성도 없다. 그리고 당시의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 방송장악 문건부터 시작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분노한 국민은 이미 자신을 배신한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며 민노총 노영방송, 민노총 왕국방송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북한 간첩단 사건 보도 패싱, KBS 9시 뉴스 앵커의 옷 바꿔치기 가짜뉴스 등 불공정·편파·왜곡 방송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북한 간첩단 사건 보도 패싱의 사건은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 소위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9시 뉴스 앵커의 옷 바꿔치기 가짜뉴스는 지난 23년 5월 18일 KBS 이소정 앵커가 지난 9시 뉴스에서 민노총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민노총 편향 멘트)를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후 옷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한 뒤에 재녹화한 영상으로 다시보기 뉴스 화면에 올린 사건을 말한다.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이 잘못했는가? 결코 아니다. 공영방송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머슴 노릇을 해야 할 세력이 공영방송의 주인 행세를 하며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은 강규형 교수의 방송장악 일지를 기록한 것을 소개해 드린 글입니다.

강규형 교수의 일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방송장악이 무엇인지를 모범 매뉴얼을 보여 준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노조가 굳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이사진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지 않고도 노영방송 시대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외눈박이 언론관은 급기야 탄핵, 탄핵, 탄핵 열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어디까지 몇 량으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들어 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풍경입니다. 남미 페루와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탄핵 남발을 분석하며 의회가 위헌적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와 같다, 사실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탄핵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미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교란을 그대로 불러오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가 역시 탄핵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SOC를 까는 행위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철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방송 4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임 라인을 되짚어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임명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수개월, 180일 동안 방통위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고육지계로 먼저 사퇴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이번에는 MBC 차례입니다. MBC 사장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탄핵 열차가 또다시 출범합니다. 역시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MBC 이사진 교체 시기가, MBC 이사진 임기가 다가오자 협박과 탄핵 위협이 반복됩니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지만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협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런 폭거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고육지계가 또 작동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강조하는 법대로를 보면서 대한민국헌법 65조 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탄핵부터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국회 민주주의 이름을 단 민주당에서 이런 협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이런 거듭된 탄핵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위헌정당 요소를 본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자성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룰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앞세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이런 룰을 정하는 국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주장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다수를 앞세워 협박하고 또 협박하는 폭력 집단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자성해 봅시다.

대의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의제를 받들기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협의와 또 룰을 통해서 지켜 가려는 노력보다는 오직 다수를 내세워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제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여러 국민의 뜻을 국회가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횡행은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3법, 방송 4법이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 4법이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을 죽이고 진보 좌파 편향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는 방탄재명당의 민주당 기관방송을 만들려는 방송 4법은 아닌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추천권을 대부분 국민의 대표기구보다는 특정 단체 편향 중심의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등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임원 추천제도로 적확한지 그 진의를 다시 묻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법상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인으로 여야 합의와 관례상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었던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180석의 거대 여당이자 전권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6인의 이사를 추천·선임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되었다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대부분을 친야당 성향의 단체, 노조, 학회 추천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21명의 이사를 그렇게 추천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렇게 외쳐 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 또 다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뻔뻔한 거짓말로 공영방송을 앞세우고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그 뻔뻔함에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이사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한국PD연합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성명서입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언론은 검찰발 정보를 검증해 보도하라’.

2023년 12월 6일 성명서입니다. ‘대통령은 부적절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3년 10월 12일 성명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망치기를 중단하라’.

23년 3월 28일 성명서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해야 한다’.

21년 4월 27일 성명서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언론 관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인데 어찌도, 더불어민주당의 성명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추천권 2명을 주자고 합니다.

언론노조는 이렇듯 정부 여당을 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책들을 선으로 포장하는 조작된 팩트를 전달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세계관을 왜곡시켜 투표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들겠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때 일입니다. 이회창 대선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에 관련된 가짜뉴스 사건입니다. 그 가짜뉴스가 대선 직전 일파만파 퍼졌고 이회창 후보는 패배합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실은 이게 문제야. 너무 늦게 드러나거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대사입니다. 미디어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가짜뉴스 앞에서 정치와 시청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대선과 총선 시즌이 오면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언론노조가 원래는 통진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나니 민주당과 전속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몫의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면 민주당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지요. 언론노조의 미디어 정책이 그대로 민주당의 정책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 그것을 부추기는 방송 4법은 한마디로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민주끼리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법입니다. 우리 민주끼리,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지요? 북한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민주끼리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망법의 마지막 퍼즐은 역시 방통위법 개정으로 돌아옵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2인……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합의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합의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3인을 추천합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기자 출신으로 쪽팔린 줄 알아!)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대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들어 보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라니? 당신이라니!

(「양문석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니!」 하는 의원 있음)

당신이라니!

의장님, 저기 좀 끌어내시지요.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보고 당신이라고…… 의장님, 좀 끌어내시지요.

(「의장님, 사과 조치해 주세요. 아까 폭력집단이라고 민주당에 대해 얘기한 것 사과 조치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조용히 하고 토론을 좀 더 들어 보시지요.

(「의장님, 폭력집단이라고 한 말은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저기 손가락질하는 것도 지적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강승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쪽팔린 줄 아세요, 기자 출신으로!)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 대출받은 것 쪽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의석에……

(「뭐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의원 있음)

(「삿대질을 하고 난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정신 나갔구먼. 정신 나갔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자, 서로 과한 표현들 좀 자제해 주시고 토론을 들어 봅시다.

○강승규 의원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통위원회의 식물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

(○양문석 의원 통로에서 — 어디 가서 기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승규 의원! 쪽팔린 줄 알아!)

당신이 인정 안 해도 내가 기자 출신인 것 다 알아!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사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방통위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의를 개최해 토론과 타협으로 합의제 방통위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십시오. 이사추천은 안 하면서 방통위법부터 고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방통위 제도를 민주당 정부가 집권 여당일 때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내걸고 자기들끼리 개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친 양문석 의원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6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은 '언론의 별칭은 원래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개 개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을 삶아 먹겠다는 것입니까?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는 국회법 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원회 소위를 거쳤습니까?

보통 우리가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되는 데까지는 1년도 걸리고 평균 2년도 걸립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원,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숙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방송 4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도, 정부여당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폭정 앞에 검토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

일본 NHK도 경영위원회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총리가 각 지역 또는 분야 대표를 지명해서 상·하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프랑스도 상·하원 추천 등으로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합니다.

독일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벤치마킹했다는 방송평의회 등은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경제·종교·노동·언론단체 등의 추천과 시민사회·인권·전문 분야 등의 추천 등으로 60명의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설령 민주당이 벤치마킹했다는 독일 방식에서도 분명히 민주당과는 다른 그런 추천 제도를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근 교수가 지적한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 그러니까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소위 말하는 내

적 다원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단체 수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내적으로도 다양성은커녕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공영방송에 외적 다양성을 내세운다고 학회든 언론단체든 다양한 곳에서 추가하여 21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에 내적 언론노조 등과 동일한 성향의 구성원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영방송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황 교수의 지적을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실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정부·연방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종교계, 노동계, 사회단체, 언론계는 물론이고 추방자연합, 스탈린 희생자, 이민자, 성소수자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 몫을 줄이고 추천단체를 늘린다는 점에서 독일 방송평의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기에 수가 턱없이 적다. 불과 10여 개 단체가 추천하는 20여 명의 이사로 다원화된 사회의 영역별 대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분야별 대표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는 독일 제도 역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 포함된 추천단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런 점도 의문이다. 분야별 다양성보다는 같은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띈다.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방송평의회 구성 방식에 비추어 야당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들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다. 국회 추천 몫을 뺀 방송·언론학계, 방송직능단체들이 모두 언론·방송 관련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방송의, 방송을 위한, 방송에 의한 기구다.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된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내용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이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을 설정하고 편성정책을 사안들마다 의결한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으로 규제·감독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황근 교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네 섹션으로 나눈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하게 된 위기를 다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방송이 방송을 잃고 페이크 캐스팅, 가짜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를 얼마나 만들어 내 왔고 그런 방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국언론노조 창립 이후 공영방송 노조가 어떤 일에 개입하고 가짜뉴스가 횡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 PD수첩은 2008년 광우병 조작방송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조작방송 한 편이 국민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켜 분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옛날 'Fucking USA' 구호를 소환하여 우리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을 흔들어 댔습니다.

진실을 전달하려는 상식적인 언론에게는 성난 군중을 참칭하여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보다 어린 나이의, 제 아들 나이보다 어린 전경들은 노조의 죽창에 이리저리 찔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 집회에 파티 참석하듯 출석 체크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뇌송송 구멍탁'이라던 모 개그우먼은 미국산 소고기 햄버거 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MBC가 주도한 이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동료 방송인들에게도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노조가 주동한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방송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방송인들은 한직으로, 창고로, 직무와 상관없는 한직으로 인사조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때 언론노조가 배현진 앵커를 창고에 가둬 두지 않았다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하나가 없을 뻔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언론노조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진 역시 위법하게 쫓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진 중 새누리당 추천 몫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촉했습니다. 고작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초밥 등은 과연 얼마입니까? 몇만 원인가요? 아니면 몇십만 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몇천만 원인가요? 무려 5000만 원의 혈세를 도지사 부부가 초밥 사 먹고 다양하게 유용하는 데 썼다는 의심이 지금 수사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이들 뉴스가 어떻게 방송되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법카 10만 원 기소에 황당’ 이게 MBC 제목입니다. 지금 법카 10만 원 유용했다고 기소됐습니까? 이게 MBC 방송 뉴스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법카 10만 원 기소에 황당’.

‘법카로 밥값 10만 원 계산.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JTBC, ‘검찰, 10만 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SBS, ‘혜경 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연합뉴스TV. 지금 김혜경 씨가 10만 원 때문에 기소돼 있습니까?

MBC는 김혜경 씨의 검찰 출두 발언을 아예 기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보통은 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이름을 붙이지요. 누가 보면 진짜로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사가 10만 원짜리 법카 쓴 것으로 기소한 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그리고 생활비로 유용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는 2018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카로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초기에만 확인된 배 씨의 법카 유용금액은 2000만 원 상당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월급을 쓸 일이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엔교육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도 왜곡이지만 드러난 사실 중 일부는 축소 서술하고 일부는 확대 서술하는 편집도 왜곡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언론노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대적으로 적은 혐의로 김혜경 씨의 수천만 원대 법카 유용 논란을 호도한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법카 얘기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KBS 이사회는 강 전 이사 해임으로 이사진 비율이 친문재인 정부로 구성되자 고대영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3년 6월 29일 이와 같은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진을 위법하게 쫓아내고 그 이사진 결정에 따라 해임된 사장이니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KBS 이사들을 위법하게 쫓아냈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자신들이 몇만 원 김밥으로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그래서 방송장악했더니 아주 꿀맛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공영방송 사장 임원진들이 법에 따라서 임기가 다하고 그에 따라서 바꾸려 하는데 무슨 방송 4법이다 뭐다 공영방송이다, 무슨 장악 시리즈…… 장악이다 뭐 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꿀맛이 떨어질까 그렇게 겁이 나나 보지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 사장으로 임명한 양승동 사장 얘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법인카드로 노래방 결제를 했습니다. 언론노조 출신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날 음주가무를 즐겼어도 죄가 안 되나요? 이것을 보수인사가 했을 때 이것…… 세월호 참사를 보도준칙에 따라 취재한 보수 성향 언론인들은 탄압을 하면서 이런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시나요?

(「이진숙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문제 제기 안 하시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들이 문재인 정권 사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연속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외쳐 대고 떠들어 댑니다.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성남시장하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개발비리 아닙니까? 이런 사실 북한주민도 이제는 알 걸요? 그런데 신학림의 가짜뉴스를 KBS와 MBC는 검증도 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MBC는 또 검언유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채널A와 함께 유시민 씨를 사찰하는 정보를 요구했다는 제보, MBC는 이 검언유착 조작 방송을 사흘 동안 내내 틀어 댑니다. 진실, 팩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안중에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나하나 논쟁 한번 해 볼까요?)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역시 MBC 스트레이트 뉴스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장장 30분간 공개합니다.

의장님, 저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발언하는데, 다음번에 와서 자유토론 하세요.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손가락질을 해?)

어디서 소리 지르는 거야!

양문석 의원 좀 퇴장시키세요.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의장이야?)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자야.

○의장 우원식 자자, 또 토론 들읍시다.

○강승규 의원 가짜뉴스, 가짜뉴스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로 선거운동 기간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됩니다.

개그콘서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개그란 원래 정치 풍자 요소가 강합니다. 유럽 왕실에서도 광대의 역할은 절대군주에게 익살을 가장해 민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그콘서트는 당시 정부 여당인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민주당 실정을 지적하는 대신 야당에 대한 폭력적인 조롱과 조소를 보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했고 수많은 스타 개그맨을 배출했던 개그콘서트는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가짜뉴스, 방미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민주당 총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한쪽만 편들었습니다.

EBS는 또 어떻습니까? 지식채널e는 청소년용 5분 교양 다큐멘터리를 표방합니다. 이 채널은 무상복지의 이점, 자본주의의 나쁜 점, 공산주의의 이로움 등을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해 송출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 영상들을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쓰며 청소년의 세계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듯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제조하고 내로남불, 편파방송을 하고 겉으로는 공영방송 하면서 뒤에는 노영방송을 하는 양두구육의 후안무치함, 파렴치한 행태는 결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야 말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그래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더 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광우병 보도입니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촉발한 광우병 공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국민과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게 합니다. 서울 도심은 100여 일 동안 폭력시위가 판을 쳤습니다. 이후 PD수첩의 광우병 편이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당시 진행자인 송일준 PD 뒤에 쓰여 있던 섬뜩한 문구입니다. 이 방송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전염돼 바로 죽을 수 있는 공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촛불시위를 부추겼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의 참여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피켓이 들려 있기도 했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소고기 MB 너나 드세요' '나도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요'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수입 중단' 이런 피켓도 들었네요.

광우병 위험,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도 뜹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 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를 검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그다음은 참여연대 사이트가 뜹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라니.

광우병 사태에 민주노총이 등장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 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야당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과학적 근거도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가 추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협박성 발언 등을 퍼부은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를 맞아 불안과 분노에 가득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외교적 폭거이며 주권국가의 국민 여론 형성에,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국제정치적 도발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날마다 더욱 크게 타오르는 촛불과 더불어—여기에도 더불어가 나오네요—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미 외교적 실효를 사실상 상실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진정한 이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어 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식용을 기피하며 우리 국민도 수입을 거부하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강요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를 무시하는 발언은 또 무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버시바우 주한대사는 내용과 형식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폭거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2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런 광우병 가짜뉴스에 민노총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8년 5월 6일 화요일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전국 네티즌, 시민사회, 소비자, 생협, 학생, 학부모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라는 한시적 네트워크를 결성합니다.

이때의 자료집을 살펴보면 사회는 박석운 당시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이 맡았고 대책회의 소집 경과 및 취지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문제점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에는 박상표 당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향후 활동 계획은 한국진보연대에서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는 계속 취합 중이라며 총 1500여 개 이상의 참여 단체 명단을 공유합니다. 이 명단에 민주노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성명서가 공유됐던 것입니다.

민노총 외에도 참여연대, 진보연대, 맑스코뮤날레,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 연구소, 서울평양교류협의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광우병 가짜뉴스를 앞세워서 하려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선동에 앞장섰던 야권 진영에서는 사태가 가짜뉴스로 판결 난 이후에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는 급기야 국무위원후보의 인사청문회에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 광우병 가짜뉴스 답변이 기록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제367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박영선 후보의 기록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광우병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좋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우농가를 생각해서도 이런 발언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한미 FTA 재협상이 있었는데 미국 쇠고기의 월령 문제를 미국이 고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국민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국민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협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자 당시 정유섭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만요. 30개월 쇠고기를 미국에서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자 정유섭 위원이 재차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안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싼 고기인데 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예, 싼 고기를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지금은 그리고 질문을 하신……” 정유섭 위원, “아니,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국무위원후보자와 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진짜였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싸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수입 반대 피켓을 들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3년 6월 7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광우병 괴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시민의 함성, 촛불집회 말합니다. ‘(촛불 집회) 시민의 함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해서 미국 시민이 먹는 쇠고기 월령 30개월 미만만 수입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보다 앞서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래서 정유섭 당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미국에서 모든 월령의 소고기를 소비자가 구입해 먹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 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쇠고기를 다 먹는다는데 한국에서는 ‘30개월 이내의 소고기만 미국 사람들이 먹고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하려다 광우병 사태, 100일 동안의 광화문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를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먹어도 되는지 김보슬, 이춘근 PD가 취재했습니다’라는 진행자 송일준 PD의 멘트 후 비틀거리는 소의 뒷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한 축산 농가에서 남자가 소를 전기충격기로 찌르며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었지요. 이 역시 가짜입니다. 당시 PD수첩에서 사용된 해외 취재 테이프를 직접 번역하고 감수한 번역가 정지민 씨는 해당 영상은 광우병 소와는 무관한 동물 학대에 대한 영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방송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뷰의 한국어 자막은 이러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막이 달립니다. 이 인터뷰 뒤에 MRI 결과가 틀릴 수 없다는 의사의 인터뷰를 덧붙입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광우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이 역시 가짜입니다. 실제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은 인간 광우병이 아닌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지민 씨는 PD수첩 제작진은 빈슨 씨의 어머니가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밝힌 부분을 번역하면서 인간 광우병이라고 고친 데 대해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방영되지 않은 화면을 보면 빈슨 씨 어머니는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 씨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PD수첩이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빈슨 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는 완전히 다르다. 야콥병과 인간 광우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 광우병 사태로 국가가 유·무형적으로 입은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보도의 주역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MBC에서 각종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05년 PD수첩 책임프로듀서를 역임한 최승호 PD가 2018년 MBC 신임 사장에 취임합니다. 대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 당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 역시 핵심 요직인 기획편성본부장에 앉힙니다. 조 PD는 87년 교양제작국 PD로 입사를 한 후 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광우병 편 진행자를 맡았던 송일준 PD는 이후 광주MBC 사장을 역임합니다. 이춘근 PD는 시사교양4부 차장으로, 김보슬 PD는 시사교양3부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진행에 일부 참여했던 손정은 아나운서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배현진 아나운서 후임으로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령납니다.

제작진들이 이 방송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짜뉴스의 수준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이 한 건으로도 충분히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다고 돼 있습니까, 있다고 돼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는 어땠습니까.

(「묻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저의 발표 시간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 우리나라 가짜뉴스 사례를 죽 집대성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백서 51쪽에 나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의 가짜뉴스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장윤선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이것은 천일염을 말합니다—'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 불안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혼란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나' 이렇게 보도합니다. 마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금 사재기와 가격급등이 일어났는데 왜 정부가 방치하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보도입니다. 이 역시 가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는 6월 15일 전라남도, 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천일염 가격 동향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된 천일염 가격 상승의 원인은 강수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9월 김장철을 대비한 재고물량 증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논란과는 무관했던 것이지요.

이철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장은 17일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매장에서는 천일염이 품절이라고 하는데 생산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없다. 실제로는 생산량이 줄고 대량판매도 위축됐을 뿐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딱 2~3주 동안만 천일염 수요가 폭증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천일염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패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보도 전날인 23년 6월 6일 머니투데이는 '일본 오염수 불안, 천일염 사재기로 가격 40% 폭등, 사실 아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해양수산부는 4월 첫 주 대비 6월 첫 주 천일염 가격은 26.8% 상승했는데 천일염 판매량도 감소해 사재기로 보기 어렵다며 천일염 생산자는 장마 기간에 대비해 5월 경에는 생산을 하고도 판매를 유보하는데 올해는 봄철 긴 강수일수로 날씨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어 출하 유보량이 늘어난 것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저 '천일염 사재기, 정부 왜 방치하나'라는 뉴스로 둔갑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괴담이 이렇게 난무하자 정부는 23년 7월 7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4분 25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등 전문가들이 등장해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 수가 한 달여 만에 16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런 높은 조회수에 대해서 조작 의혹이 또 불거집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년 8월 2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게 가짜뉴스다. 생각해 봐라. 아니,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만이 나오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KBS 사사건건에 패널로 나온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이름도 못 들어 본 제삼국에서 엄청난 조회 수들이 몇 개국을 꼽아 있을 것이라며 조작된 클릭일 가능성이 높다,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조회 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도 25일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는 이렇게 이례적인 조회 수가 나온 이유가 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 가짜뉴스였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이나 광고 조회 수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를 집행한 기관에 팩트 체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영상 유튜브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해당 영상에 투입된 광고비는 5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 제시하는 광고비 투입 대비 산출 조회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시청 지역은 99% 이상이 대한민국이며 해외 지역 조회 수는 2023년 8월 25일 12시 기준 3400여 회, 전체의 0.0002%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광부는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30초 이상 본 1630만 명의 평균 시청시간이 3분 3초나 되며 전체 길이가 4분 26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끝까지 시청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데이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의 노출 횟수는 2023년 8월 26일 기준 약 4000만 회로 이 중 해당 영상을 30초 이상 봤을 때만 조회 수로 집계되는데 이것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1700만 회를 넘었고 2024년 7월 24일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1925만 회입니다. BTS에 열광하는 만큼 진짜뉴스를 갈망했던 국민들의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음은 사드 괴담에 대한 가짜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가짜뉴스 공장은 사드 괴담을 생산해 냅니다. 2016년 8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경북 성주에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대중가요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이들은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싫어’라며 소리 높여 괴담송을 부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내 좌파 야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듯 성주로, 사드 반대로 뭉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포 조장이 벌어집니다. ‘사드 전자파 튀김’,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 그런 가짜뉴스가 무작위 살포됩니다.

2023년 6월 2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 수질, 토양, 생태, 소음, 진동, 전파, 경관 등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단 사실을 밝힙니다. 언론노조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발표 다음 날인 2023년 6월 22일, KBS 9시 뉴스는 ‘사드 전자파 무해 보도에 주민 반발’이라는 제

목의 리포트에서 박태정 이장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골 마을 노곡리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가 10명 발생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암 환자 10명 발생’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등장하니 진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이 말을 팩트 체크 해 봤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측과 통화한 김천시청 전문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곡리 암 발생 환자에 대한 박태정 이장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등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라고 밝혔으며 오히려 ‘노곡리 주민들이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반대해 용역이 무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암환자가 10명인지 100명인지 1명인지 조사도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보도가 될까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방송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건강보험에도 문의를 해야 되고 관련 행정 당국에도 통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팩트 체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뭔가를 특정 목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가짜뉴스에 얼마나 더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많이 보도됐지만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 관련 내용도 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겨레 선임기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왜곡 보도했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1면 톱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대기업 돈 299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 이렇게 1면 톱 기사에 보도합니다. 해당 보도는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최순실이 다닌 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혔다는 내용으로 ‘마사지’라는 단어를 앞세워 스포츠전문가를 마사지업소 주인처럼, 최순실의 마사지사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 지목됐던 정동춘 씨는 가짜뉴스 속의 마사지사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분야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이후 이력을 살펴볼까요? 난곡중학교 체육교사, 서울한사랑병원 운동처방과장,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동덕여대·인천대 강사,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운동기능회복센터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마사지사입니까? 이 이력이 어딜 봐서 마사지사로 1면 제목으로 표현해야 될 상황입니까?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는 이력으로는 반박할 수 없으니 정동춘 씨가 번역한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등 외국인이 쓴 스포츠마사지 책을 번역했다는 점을 기사에 언급하며 마사지라는 단어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다수의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 목적으로 취재 원칙조차 무시하고 선정적 보도를 쏟아 냈습니다. 청와대 굿판, 태반주사, 마약에 취한 대통령, 비아그라 등 이런 가짜뉴스에 가짜뉴스가 선정적으로 보도를 이어 갑니다. 참담한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런 김의겸 의원이 2022년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가짜뉴스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그렇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이렇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다.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고 회식 자리도 안 간다’며 ‘저 술자리에 있었거나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 안에 있었으면 장관직을 걸겠다, 김 의원은 무엇을 걸겠냐’라고 반박을 하지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수십 명의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믿기 어려운 가짜뉴스였습니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합니다, 증거라면서.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중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좌파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김의겸 의원과 기절초풍할 가짜뉴스를 또 재생산, 재생산해 나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진원지였던 첼리스트 A 씨는 11월 23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라고 진술했고 이 다음날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다,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첼리스트 A 씨와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봤더니 A 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해당 술집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습니다. CCTV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와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던 모모 씨가 사건 당일 밤 역삼동의 모처에서 새벽 3시까지 머물다 귀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뉴스를 입에 올렸던 김의겸 의원은 24일 이렇게 밝힙니다. ‘첼리스트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토를 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로 떠들썩하게 만들고 또 거짓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놓은 변명입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대응을 해 나갔지요. 12월 6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 제보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 출신이었다면, 지난번에 또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큰 경험이 있으셨다면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2022년 12월 26일 비민노총 계열의 MBC 제3노조는 이렇게 성명을 냅니다. ‘일간지는 물론이고 KBS와 SBS도 관련 내용과 파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이틀 연속 외면했다’. 그래도 다른 방송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MBC 뉴스는 이틀 연속 외면했다라고 제3노조가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시쳇말로 말했던 ‘똥볼 찬 것은 다루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라고 MBC 3노조가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

3노조는 또, MBC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 한 장관은 술을 못 마신다는 정황,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한자리에 모였을까 하는 의심을 또 술집이 어디인지 거론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그 위치가 어딘지 등을 하나라도 팩트 체크 했다면 면책특권 뒤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가짜뉴스 메이커라는 닉네임을 한 번 더 얻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또 3노조는 비판합니다. 여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사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했다면 MBC가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죽음을 정쟁화하는 모습 등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 등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참사입니다. 299명의 학생 등 어린 학생들이 사망했고 5명이 영구 실종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객선 침몰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사고 수습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수습 현장에 다양한 오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가짜뉴스들이 검증 없이 보도됩니다.

가짜뉴스 첫째입니다.

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시신 수습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자칭 잠수사 강대영 씨의 거짓 인터뷰가 4월 29일 보도됩니다.

이때 손석희 JTBC 앵커는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당시 구조 작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이 보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종인 대표는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2~3일이면 3·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등 일방적 주장을 펴며 다이빙벨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손 앵커는 당시 4월 29일 잠수사를 자칭하는 강대영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신 수습 고의 지연 외에 여러 일방적 주장들을 내보냅니다. '조류가 빨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나'라고 묻자 강 씨는 '아니다.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단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살아 있는 학생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내보냅니다.

이를 본 유족들은 정말 분통을 터뜨립니다. 고의적으로 구조 지연을 한 듯한 인상 등이 인터뷰에 묻어납니다.

그러나 강 씨는 29일 밤 팽목항에서 만난 뉴데일리 기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건 없다. 다른 잠수사가 들었다고 주장해서 그 말을 대신 방송에서 한 것'이라며 JTBC 인터뷰에 했던 말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강 씨는 스스로 잠수사라고 주장한 것 외에 실제 구조에 투입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손 앵커는 강 씨를 포함해 8명의 민간 잠수사가 언딘 관련 제보를 했다고 했으나 강 씨 외에 다른 잠수사 인터뷰는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언딘이 허위사실 보도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자 JTBC는 해당 인터뷰를 포함해 언딘이 고의로 시신 수습을 지연했다는 보도를 정정합니다. 죽음이 가짜뉴스에 이용됩니다.

다이빙벨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4월 25일 밤 정조 시간에 맞춘 다이빙벨의 첫 투하는 기상 악화로 불발됐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의 2차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간 수차례 다이빙벨 설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채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초에 다이빙벨의 투입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차주홍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속이 약한 바다에서 모선을 고정한 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다이빙벨인데 유속이 빠른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상진 잠수사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시간 연속 잠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잠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이빙벨에 대한 다양한 가짜뉴스는 무수히도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뉴데일리의 윤희성 기자는 팽목항에서 이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이 대표는 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수중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압을 위해 수차례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20시간 작업하는 것이지요. 20시간을 어떻게, 아무리 다이빙벨이 어떤 특수기술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들이 방송에서 그냥 버젓이, 검증 없이 보도가 됩니다.

다이빙벨은 사고 발생 2주가 지난 지난 5월 1일 다시 투입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 이 대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보장도 해 주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실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해서 다이빙벨에 대한 실험용, 정부에 뭔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주장들 이런 부분 등이 당시 유가족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8월 7일 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합니다'. 방심위는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서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는 2014년 10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으며 당시 진행을 맡았던 손 앵커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6년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7년이 지난 2023년 7월 13일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제 컵라면 논란도 기가 막혔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쪽잠 자며 자리를 지켰던 서남수 당시 교육부장관은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

았습니다. 거대한 슬픔 앞에 원인과 책임, 비난의 대상을 찾는데 서 전 장관이 희생양이 된 꼴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 인사들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여의도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컵라면조차 거악이라고 꾸짖던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이 정치적 수사이자 공세가 아닌가요, 이쯤 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오직 이것마저도 상대를 죽이고 그를 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런 데 쓰였습니다.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 또한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 가짜뉴스 백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백서 내용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0년 4월 7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등 최강욱 씨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해 확산시킨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0년 3월 31일 채널A의 모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검찰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진행한 장인수 기자의 앵커 대담 등을 사흘 연속 관련 보도로 이어 갔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로 지목되면서 한 검사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좌파진영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하반기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때 좌천당해 부산고검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씨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아래와 같이 긴 글을 띄웁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 특종으로 띄우면—우리 방송은 채널A입니다—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 글에 담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과 언론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착하여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9일 유튜버 유재일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녹취록을 보면 검찰이 뭔가를 요구한 것이 없고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 내용과 다른 것이지요.

'사기 전과범 지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변신해서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최강욱 씨 녹취록 글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3년 8월 3일 유시민 씨를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전 기자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서 승소합니다. 이

전 기자는 유 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힙니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부여했다. 더는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유 씨는 한동훈 장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난해 6월에도 본인과 한 장관을 비난하는 것을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10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낸 4쪽 분량의 엄벌탄원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유 전 이사장은 상습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다’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16일 법원 1심에서 강요미수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고 단순 취재윤리 위반사건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3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3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KBS가 16일 한국과 일본 정상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했는데 범기영 앵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대는 우리 국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의장대에다가 경례를 했으니 일본 국기에 대통령이 경례했다 이렇게 오인하도록 보도합니다.

KBS 뉴스특보 이재석 앵커는 방송 말미에 또 뉴스특보에서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됐으면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탁현민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은 여기에 기름을 또 뿌립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페이스북에 2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지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해당 사진에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 숙인 것처럼 나온 모습과 애국가가 나올 때 부동자세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후 3월 20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해당 게시글에는 ‘일부 거짓 정보, 중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습니다’라는 경고 레이블이 붙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 등이 포함된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어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이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페이스북은 AFP의 팩트 체크에 따라 이 같은 표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AFP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특정 각도에서 찰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사과의 글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할 리가 없지요, 일부러 만든 것이니까.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2023년 4월 11일 성명서를 냅니다. ‘범기영 앵커는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범 앵커가 언론재단 해외연수자에 선정된 것을 비

판합니다. 언론재단이 다시 심사위를 개최하여 범 앵커의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기 앞에서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짜뉴스의 소재가 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KBS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산불 발생 시 골프를 쳤다는 오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식목일 행사에 다녀와서 오후 5시 반경 골프연습장에서 20여 분간 골프연습을 했다 일과 중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강원도 원주·홍천에 산불이 나서 200여 명이 투입된 그때 잔불이 정리되는 중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난이 컸습니다.

그때 원주 산불을 기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오후 4시 7분에 났고 홍천 산불은 18시 1분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김 지사는 산불 중 골프라는 논란이 일자 4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1일 강원 고성에서 식목행사를 마치고 춘천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과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7일 김 지사가 관할 지역 산불 진화 중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보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당무감사실에 지시했습니다.

KBS는 김 대표의 지시가 나온 그날 7일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강조한 뒤 31일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이어 저녁 술자리도 가졌다, 홍천과 원주에 불이 나 200명 넘게 투입됐고 저녁 식사 무렵엔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루 전날에도 화천에 산불이 나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5ha 이상 산림을 태운 18일 평창 산불 때도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보도도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산불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고 술을 먹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18일 토요일 오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았으며 평창 산불이 일어난 시각은 오후 4시 이후였습니다.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을 찾은 시점은 산불과 무관했던 것입니다. KBS 9시 뉴스의 기사도 김 지사가 18일 아침에 골프연습장을 갔다고 보도했으며 김 지사 측이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골프연습장에 있어서 오후 4시 넘어 발생한 산불과 상관없다고 했다는 반론도 실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KBS 뉴스 9의 기사 중 김 지사의 18일 골프 관련 내용은 삭제했어야 맞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일을 9시간 뒤에 발생한 산불과 연결시켜 도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대목은 억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KBS는 기사 뒷부분에 도지사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덧붙여 가지고 18일 오전에 골프 친 것과 산불 난 것 등이 마치 무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보도를 뒷받침하려는…… 변명이 군색하기 짝이 없지 않나요?

김 지사는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은 토요일 아침 7시께 연습장을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였다.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첫 보도에서 골프연습장 방문 시간을 김 지사에게 확인하지 못해 해당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 사실 자체가 가짜뉴스를 인정한 꼴이 아닐까요? KBS는 여러 차례 기사를 수정해 뉴스 9에 보도했지만 과연 김 지사의 산불과 골프 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쁘게 각인시킨 그런 인상을…… 수정해서 피해자를 보호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MBC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암묵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4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에서 기상캐스터는 2월 27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파란색 그래픽으로 1을 강조합니다. 기상캐스터가 등장하자 곧바로 파란색으로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래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라면서 손가락으로 1을 펼치면서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라는 멘트를 이어 갑니다. 이후 낮에 촬영했던 경복궁과 북악산 라이브 화면이 등장하자 파란색 1은 사라집니다.

다음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MBC 제3노조도 입장문을 통해서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다며 기상캐스터의 숫자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꼼수 그 자체입니다.

이런 거짓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일입니다. KBS는 6월 24일 이렇게 보도합니다. '단독, 이승만 6월 27일 일본 망명 타진' 이렇게 보도한 데 이어 28일까지 6·25 전쟁 6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의 제목만 바꿔 가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시 국민과 국군을 버리고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라는 충격적인 허위 보도를 감행합니다.

2015년 7월 3일 KBS는 망명 요청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의 의견을 보도합니다.

짧은 정정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지난달 24일 KBS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과 관련해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은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KBS는 앞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창언 기자, '지난달 24일 KBS가 보도한 일본 야마구치현 현사와 미 군정 기록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뒤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기념사업회는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닌 야마구치현 자료만을 근거로 망명정부 요청설을 제기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정 기록도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비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제주 이전도 반대했는데 일본 망명정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인터뷰 화면이 재생됩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6·25 사변 중에서도 권총을 옆에다 놓으시고 주무셨어요. 결국 싸우다 죽는다 이것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일본군을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임고문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이 땅에 일본인들이 오게 되면 공산당에 겨누었던 총을 그놈들한테 먼저 겨누겠다고 그러셨거든요’.

‘KBS가 보도한 야마구치현 기록은 망명정부 요청이 전쟁 초기 상황으로 묘사돼 있을 뿐 보도에서 나온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 상황에서 일본 정부 망명설, 독립운동가·건국대통령을 6·25 전쟁 와중에 6·25 망명설을 검토했다라고 보도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저렇게 해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학림 가짜뉴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씨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인 22년 3월 6일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21년 9월 15일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을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의 말은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개발 자금을 알선해 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주면서 커피를 타줬다는 것이고 좌파 친민주당 매체들은 김 씨의 말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며 일파만파로 확산시킵니다.

뉴스타파 보도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21년 인터뷰 이후 1억 6000여만 원을 책값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가짜뉴스 생산용 짜깁기 편집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는 2023년 9월 6일 이 보도를 다루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김만배 씨가 유착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다시 불러옵니다. 주 씨는 이날 방송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다, 우연 치고는 이상하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특히 ‘샀다’가 아니라 ‘사줬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에게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21년 9월 29일 열린공감TV의 의혹 제기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주 씨는 윤 후보 측의 반박을 무시하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입니다.

열린공감TV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 씨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뇌물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았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주변 단독주택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윤 명예교수의 주택에서 90m 떨어진 주택은 2018년 3월 3.3㎡당 2286만 원 그리고 110m 거리에 있는 주택은 2019년 12월 3.3㎡당 238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명예교수의 주택은 314.4㎡로 19억 원에 팔려 3.3㎡당 1998만 원이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4월 서대문구에서 거래된 18억~20억 원의 단독주택은 모두 4건이며 윤 대통령 부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실거래가는

평당 2300만~2600만 원이었습니다. 주 씨의 진행발언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확산시켜 온 이들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물러서지 않는 게 특징이지요.

특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증 없이 이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계약을 통해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씨가 누나를 동원해 편의를 봐주려 했던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23년 3월 1일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범죄수익으로 동결된 김만배 씨 재산 중에는 누나가 사 준 윤 대통령 부친 집도 포함돼 있는데 누나를 조사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부동산 업계 현황은 김 의원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박해서 웃음을 사기도 했지요. 그렇지요? 김의겸 전 의원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 아닙니까. 김 의원이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일을 두고 한 한동훈 전 장관의 일침이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테제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가운데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년도 더 지난 2023년 9월 해당 보도가 짜깁기 편집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보도는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통위는 23년 9월 25일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시킨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해서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 신 씨는 23년 9월 21일 패널로 출연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함께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선 소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는 가짜뉴스를 또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중징계 의결한 건 처음인데 YTN 내부에서는 어떤가라고 말하자 고 지부장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공정언론국민연대가 팩트체크팀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YTN은 22년 3월 7일 이브닝 뉴스에서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라는 리포트에서 4분 4초 중 3분 38초를 할애해서 해당 녹취록을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의 경우 리포트가 대개 1분 20초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리포트 3개 분량의 길이로 다른 언론의 보도를 여과 없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어진 국회 중계차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야, 김만배 육성 격돌'이렇게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36초, 국민의힘 반박 20초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브리핑도 27초였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 의혹 제기를 리포트해 이어서 공방을 배치했지만 방식은 반론이 아니라 일방적 의혹 제기를 쌍방의 논란처럼 그렇게 가짜뉴스 형식으로 생산했습니다.

같은 날 YTN24도 ‘뉴스타파, 윤이 봐줬다. 김만배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앵커 단신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단신이 45초, 이재명 SNS 공세 17초, 민주당 선대위원장 공세 32초, 김은혜 공보단장 해명 60초 이렇게 짜맞췄습니다. 반론보다는 공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한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공정언론연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리포트나 스트레이트 어디에서도 YTN 취재진이 반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시 YTN 보도는 팩트 확인 없이 리포트 뒤에 여야 공방 기사를 배치해 시청자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가짜뉴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는 주장 또한 여기에서 파생된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신학림 사건을 두고 여러 전현직 기자가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려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특히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기자 출신 범죄 피의자와 선거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를 두고 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언론 역시 대선 직전에 김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BS 지식채널e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한 좌편향적 해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짜뉴스 방송을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의 좌편향성은 2007년 지식채널e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4분 24초의 영상은 배경음악과 자막이 나오면서 이런 전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것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한 EBS의 방송 내용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본가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소비 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데서 끝난다’. 1776년 영국에서 책이 출간되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지배하던 시절 책은 주장했다.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인용부호로 인용합니다.

책의 저자, 당시 도덕철학자로 유명했던 애덤 스미스, 책의 제목 ‘국부론’, ‘국부론’에서 주목한 것들, 자기 이익 추구의 결과,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에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인용구가 또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 행사는 정부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출간 몇 년 후 국부론은 널리 인용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 모두 인용된 것은 아니다.

국부론은 당시 인도주의적 법령을 반대하는 데 흔히 인용되었다, 로버트 하일브로너 경제학자.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 그들은 모두 정부 법령이 시장 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린이를 기계에 묶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까지도.

그리고 국부론 1권 제11장.

이 계급이 제한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이 채널이, EBS 지식채널e가 보도한 교육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봤고 그래서 자본가들을 부정했다라는 인용으로 이렇게 교육 내용을 짰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자유기업원은 국부론의 이러한 악마의 편집과 EBS 지식채널e의 좌편향 선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방영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인터넷상에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유통되며 좌편향 측들에 교육용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기업원의 이 EBS 지식채널e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 지식채널e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과 자막 그리고 음악만을 가지고 고도의 감성적 내러티브로 접근합니다. 국부론 해설 동영상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EBS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핵심을 반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일부러 스미스의 주장을 앞뒤를 잘라 마치 좌파 사회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BS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신흥 자본가 계급들을 비판했다며—마지막에서 그게 나오지요—17세기 부르주아 사진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소비 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 담합을 인상하는 데서 끝난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며 이렇게 결말을 냈습니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 하니까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EBS 지식채널e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기업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악랄한 편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냐 하니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기했던 이 주장들은 EBS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내세우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비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EBS가 인용한 국부론 제1권 11장의 문단 앞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판매업자의 이익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흔히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일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공익에 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이윤을 자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 이외의 동포로부터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 문단에 이어 EBS 지식채널e가 인용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흥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비판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백주 대낮 EBS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는 상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공익을 빙자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 시장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을 하자는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입니다.

통신 시장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통신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찬성하는 사업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인 셈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의 셀프 인터레스트(self interest), 즉 자기 이익의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통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공익의 조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흔히 등대, 바다에서 우리 등불이 되어 주는 등대가 공공재이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는 유럽에서 등대 역사를 살펴보니 18세기에 부두 하역업을 하는 업자들이 무역선을 자기 자신들의 부두로, 자기들이 하는 자신들의 부두로 유도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등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등대로 탈바꿈된 것이지요. 이익 추구의 상업적 동기가 배들에게 안전한 등대,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익을 창출한다고 생각되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들이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지요.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조화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충성을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경쟁을 제한하려는 일부 상업 만능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을

두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러한 시장주의, 신흥 자본가 등을 공격한 것처럼 교육시키는 이 잣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언론노조의 그런 2017년 공영방송 잔혹사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5년 만에 교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에 집착하면서 공영방송을 앞세우고 공영방송을 내세우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편을 핍박한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적폐청산, 통계조작, 무상복지 포퓰리즘 등 그 면면에 방송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균형되게 알아야 될 정보나 관련 상황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결국 국민에게 그것이 들통난 결과는 아닐까요? KBS·MBC 양대 공영방송 언론노조를 불 지펴서 불법파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사들을 쫓아내고 사장을 교체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갈 때 그때 많은 모순들은 그곳에 잠겨 있지 않았을까요?

MBC·KBS 양대 공영방송 등을 기관방송,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면서 이에 앞서 장악 시리즈를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또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상황 등을 한번 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같은 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부터 언론노조의 활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수별로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 한 달 차에 김장겸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불과 열흘 사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 이들은 김장겸 사장을 협박합니다.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 위협합니다. 심판, 적폐청산 구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성명서가 이어집니다. 구호가 외쳐집니다.

2018년 8월 10일 보도국 취재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합니다. 취재기자들은 출입처가 아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 로비 등 곳곳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측이 근무 시간에는 시위할 수 없다고 경고하자 언론노조는 반차 휴가를 내고 피켓 시위를 이어 갑니다. 심지어 핵심 간부로 분류되는 취재센터장마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며 제작 거부 사태는 악화일로로 거듭 치닫습니다.

문재인 정권 3개월 차인 8월 이후에는 보도국 밖의 인원들까지 제작 거부에 참여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직원들에게는 본사 로비, 보도국장실, 회의실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조원들의 피켓 시위와 샤우팅과 다양한 시위가 전개됩니다.

파업 참여자들은 업무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는 동료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노조원은 취재부서장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몸으로 막고 자신들의 스크럼으로 만든 모욕의 길로 입장하라고 조롱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세지는 파업 사태에 본분과 신념을 지키던 기자들도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기자라는 자부심에 살아왔는데 비파업자로 분류돼 곳곳에서 압박을 받고 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기자가 아닌 보도국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파업 중인 선배들의 권유 또는 압박을 받은 직원들은 하나둘 업무에서 손을 뗍니다. 날씨, 교통 이런 정보를 전하던 리포터 12명도 제작 거부에 돌입합니다. 윗선부터 말단조직까지 언론노조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되는 순간들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절규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이 속속 보도되고 아우성이 전달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줘야 될 포항MBC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촬영만이라도, 아니 지역주민을 통해 얻은 제보영상이라도 보내 달라는 전국부장의 읍소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다', 당시 포항 취재부장의 차가운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부장 1명, 데스크 1명, 취재기자 2명뿐이던 본사 전국부의 인력으론 재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없던 기자들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일부 기자들이 지인을 통해 얻은 시민 촬영 영상을 몇 개 전달받아서 겨우 보도꼭지를 이어 갈 수 있었다는 게 전국부장의 회고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은 당시 MBC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 출신 기자가 자원해서 현장 취재를 내려갔고 이삼일 단위로 2명의 기자가 차례로 현장에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취재와 보도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역민들이 당한, 당시 포항시민들이 당한 그 엄청난 재난을 노조의 파업이란 이유로 외면한 언론노조였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틀어쥔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합심해서 경영진 무너뜨리기에 돌입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9월 7일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모욕과 협박에, 그리고 조롱에 못 이겨 사퇴합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유 이사는 자신의 제자 출신들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의 모욕에 스스로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줬던 기자는 이후 앵커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꽃길을 걷지요.

유 이사는 사장 면접에서 노조 배제를 암시하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유 이사가 사퇴한 다음 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방문진 이사진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4단계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첫째,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방송사 노조·시민단체·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자. 셋째, 언론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촛불집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활동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문건에, 활용 방안 등을 문건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문건이 공개되자 티타임에서 잠시 나온 말을 부풀려 보도했다고 반발했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이지요. 왜냐 하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전개됩니다. 많은 상황 등이 문건 속 로드맵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10월 18일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고 11월 2일에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그리고 13일에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잇따라 가결됩니다. 결국 언론노조가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셈이지요.

끝까지 보도국에 남아 일하던 기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8일 비파업자들에 대한 처리가 전광석화처럼 치러집니다.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설 무렵 보도국 내부로 진입한 언론노조원들이 근무 중인 기자들에게 '내 자리다, 내 자리니까 나가라'라고 요구합니다. 비파업자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창고로, 현장으로 그리고 기사도 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유폐를 당합니다. 써놨던 송고 기사는 폐기처분됩니다. 비파업기자들이 보도국 내에서 투명인간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비파업자 88인에 대한 조리돌림을 한번 대략 짚어 보겠습니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MBC 잔혹사'를 기록한 두 번째 장에서 사장까지 일사천리로 몰아낸 MBC 언론노조의 비파업기자 축출과 보도국 점령 과정 그리고 이를 전후로 그들이 저질렀던 인민재판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입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된 지 25일 만에 보도국으로 들이닥친 언론노조는 본격적인 점령군 행세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의 이름은 그렇게 뉴스에서 사라졌고 사내 게시판에 블랙리스트 형태로 박제됩니다. 자리에서 쫓겨난 88명에 대한 공식 인사 발령이 나기까지는 최소 닷새가 걸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대규모 인사 발령이 납니다. 비파업자 대부분은 취재기자가 그동안 거의 가는 일이 없던 그런 한직, 새로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름조차 생소해서 뭐라고 부르기조차, 모르는 그런 부서들로 유배가 됩니다.

특히 생방송 뉴스팀 발령은 당시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보도국을 이끌던 보도국장,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기자가 한꺼번에 중계차 뉴스 PD에 편입됩니다. 중계차 PD입니다. 이 자리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와 기상캐스터 등을 지원하는 기술직으로 국장급 기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보도국의 전문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비파업자 축출을 마무리한 점령군은 이번에는 해외로 눈길을 돌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소집한 MBC 평가위원회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12명의 특파원에게 모두 귀국하라는 지시가 2018년 2월 28일 시간까지 제시되어 내려집니다.

조직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임차 기간이 남은 탓에 뉴욕과 런던지사가 물어야 하는 10억 원 안팎의 위약금도 이들 점령군에게는 아랑곳할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노조가 장악한 보도국 한가운데는 이렇게 소환당한 특파원들이 조리돌림당하며 격리되고 고립된 특파원의 섬이 생깁니다.

언론노조의 광기가 수위를 높여 가던 2018년 3월 9일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당시 배 의원은 영입 환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냈다’ 이렇게 폭로합니다. 배 전 앵커를 포함하여 전직 보도간부 6명이 사실상 유폐된 채 몇 달을 비참하게 견뎠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입니다.

훗날 대법원은 2020년 9월 조명창고에 발령났던 박용찬 전 논설실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조명창고 논란 이후 한 달이 지난 2018년 4월 16일 MBC는 보도본부 산하에 뉴스데이터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에는 조명창고에 유폐됐던 전직 특파원들과 그리고 직원들, 전임 보도본부장과 시사제작국장 등이 발령받았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에게 파견직 직원들이 맡았던 복사와 첨부 등의 단순 업무를 맡깁니다. 20~30년 다양한 보도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 왔던 취재기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넘어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비참함을 버텨야 했습니다.

보도국의 조리돌림 섬이었던 뉴스데이터팀에 발령받지 않은 비파업자 가운데 일부는 보도국 산하 영상관리팀에 유배됩니다. 이곳에서 차장급 기자들은 사실상 속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원본 파일에 담긴 질의응답 내용을 워딩 그대로 받아쳐서 입력하는 단순 작업입니다. 업무 부여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처사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스데이터팀의 업무가 기자 업무로 볼 수 없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 종사했던 기간 기자 업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2년 8월에는 뉴스데이터팀과 영상관리팀에서 일했던 6명에게 1인당 7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근 근무도 당연히 비파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20년 4월 23일 당시 국제부장이던 모 씨가 국제부 야근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비파업 기자 3명에게 야근 전담 업무를 제시합니다. 국제부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3일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야근 전문기자로 지목된 3명은 예외 없이 모두 비파업 기자였습니다.

경력 기자들을 향한 강압과 차별은 더욱 집요했습니다. ‘너희가 MBC에 있어야 할 이유를 대라’, 다른 회사에서 MBC에 경력 기자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너희가 MBC에 있어야 할 이유를 대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박도 반복됐습니다.

한 명예퇴직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저렇게까지 잔인하고 잔혹하게 보복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빈자리를 경력 기자가 채운 게 아니냐, 그렇게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것이었지요. 오랜 파업의 동력으로 볼 수 있는 MBC라는 드높은 자부심, 이 근간을 이루는 순혈주의의 틈새를 경력직들이 무임승차하듯이 파고드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했다는 게 이들 명예퇴직자들의 증언입니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MBC 잔혹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8년 1월 19일 출범합니다. 17년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중심이 됩니다.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된 17년 11월까지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자체 조사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상 3월부터 MBC는 언론노조 파업에 의한 비정상

체제였는데 사실상의 보수언론인들에 대한 인민재판 성격이었던 것이지요.

정상화위원회는 다음 사항 등을 규명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첫째 방송의 독립성 침해, 둘째 사실의 은폐·왜곡, 셋째 부당한 업무 지시, 넷째 방송 강령 위반, 다섯째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겠다 이렇게 공표합니다.

그리고 모두 262명을 조사하여 12명을 징계 요구합니다. 당연히 12명의 징계 요구 대상에는 언론노조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사받았던 직원들은 증언합니다. 조사 과정은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라고 압박합니다.

허무호 전 MBC 노동조합위원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상화위원회 조사위원들은 허 전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17년 3월까지 보도국 사회2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기사를 보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객관성 없는 특정인을 인터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편향적 집회·시위를 보도하는 것을 주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특히 일명 보수 편향적 집회·시위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물었습니다. 추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이 '내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라고 답변했지만 이들은 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취지의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혼자 모든 책임을 진다거나 수사에 의뢰하겠다거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든지 등의 협박과 겁박을 일삼습니다.

훗날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허 전 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협박과 겁박과, 결국 김장겸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보도본부장을 또 직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요.

대법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결국 이 피고는 MBC 정상화위원회지요—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또는 언론노조 등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공정언론이다' 이렇게 명분 내세우고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탄압의 내용들입니다.

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었던 박상후 기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전국부장이었다는 이유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때문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이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기자에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 기자는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것은 언론노조원들이라고 반박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전원 구조 오보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위원회는 박 기자 관련 조사사항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보도라는 항목을 추가했고 결국 박 기자는 3개월 대기발령 후 2018년 6월 해고됩니다. 2018년 4월에는 언론노조를 향해 비판적인 글을 쓰며 회사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데 대한 보복으로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이었던 김 모 기자가 해고됩니다. 2018년 5월에는 이른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신동호 전 국장이 법인카드 사용 실태 특별감사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 전 국장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강압적 조사는 이후 MBC 측이 대부분의 소송전에서 패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채무자, 즉 정상화위원회가 징계 내지 형사처벌의 염려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그 자유의사에 반해 출석·답변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행 시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을 하고 이 사건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침해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한편 정상화위원회와 보조를 맞춘 감사국의 이메일 불법사찰 감사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 전 사장 취임 다음 해인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MBC 경영진이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 들통났습니다. 감사국은 노조, 좌파 같은 키워드를 이용, 이러한 단어가 검색되는 이들의 이메일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노조의 이러한 전체주의적 패악들에 대해 당시 민주당 내부는 방조했습니다. 혹은 부추겼습니다. 이미 탄핵 정국 때부터 MBC 출신 민주당 신 모 의원은 'MBC 후배들은 취급 안 한다' 식으로 몸소 적폐 기자로 좌표를 찍어 줬습니다.

동료 기자고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어제까지 같은 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의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위병 같은 파렴치하고 몰염치만 남았습니다. 뒤에서는 점잖은 척,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악마와 같았습니다. 대체 이들이 외치는 언론정의, 진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 정의, 진실이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천양지차 탈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결국 그동안의 2017년 MBC 잔혹사 등을 살펴보건대 이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까요? 언론노조의 패악을 법제화하겠다고요?

예, 많이 하십시오.

방송운영권을 틀어쥐고서는 영원한 기간방송을 하겠다는 방송 4법, 국민들이 막아 낼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듯 국민의 공영방송 죽이는 방송 4법이 세 번째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열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꿔 온 민주

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랬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렇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려고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이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이 상부상조하는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한 세상이 두렵습니다. 공영방송 죽습니다. 그 자리에 방탄 재명방송이 탄생합니다. 그날이 두렵습니다. 한 번 해 봤으니 두 번은 더 쉽다며 정권 탄핵의 군불을 땔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死)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딸 민주주의가 판을 칩니다. 90% 찬성의 반민주공화국이 활개를 칩니다. 중우정치, 뉴파시즘이 태동할 것입니다.

개딸들의 언론장악을 위한 몸부림은 정말 애처롭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라며 민주당에 공식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는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보도하고 그를 통해서 보도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만큼 허위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정보도입니다. 본인들이 개혁의 딸이라고 자부하면서 개딸이라고 줄임말을 사용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라고 정당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개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을 정당에 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저

는 개딸 민주주의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용어를 또 보니까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이 사용했던가요.

하여튼 민주주의는 근간이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이고 대의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여러 상황이 삼권분립을, 법치주의를, 대의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민주주의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인 반민주적이 아닌가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개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명치주의, 대의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선전·선동 정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유겐트(Jugend)가 있었습니다. 레닌에게는 뱅가드(Vanguard)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는 홍위병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개딸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우상화, 세뇌를 강요하는 전위대들이 유겐트이고 뱅가드고 홍위병이라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은 무엇과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이 통과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딸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겠지요. 방송 4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때는 국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90%가 넘고 99.9%의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수치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되어서 이렇게 정당의 이런 모습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관철되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양심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수결의 원칙인 이유입니다.

다수결만을 앞세워서 법대로를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폭정일 뿐입니다. 가장된 다수의 폭정은 실상은 소수의 폭정입니다. 소수의 폭정을 다수의 이름으로 숨기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수 국민 또는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MBC 수난사에서, 잔혹사에서 많은 비파업 기자들이 겪었던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가요? 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 바로 중우정치입니다. 플라톤은 다수의 폭력이 이끄는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폭민정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우정치는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정치 행태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중우정치의 현실을 봤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중우정치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지게 될까요? 고스란히 국민이 받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중우정치의 여러 징후들의 피해가 돌아갑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천안함 폭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괴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폭로 등 허위사실을 이용한 가짜뉴스로 민심이 선동되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많은 비용을 국가가, 사회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은 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여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뉴파시즘으로 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매스미디어 또는 다양한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언론이 국민 생활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집단사고에 물들면 가짜뉴스에도 맹목적 쏠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공론의 장이 사라집니다. 선동정치가 팽배해집니다. 포퓰리즘이 일어나고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체성은 갈수록 위협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이러한 행태들을 많은 언어들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자유 방송이 탄생합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민생 방송이 탄생합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민주적 방송이 탄생합니다.

국민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역시 민주적인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그에게는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TV와 라디오를 정치 선전에 활용한 선구자이자 정치쇼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고 그것이 허위로 드러나도 계속 외쳐 대는 이유가 이놈의 괴벨스 이론을 너무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스탈린의 기만전술을 조롱하는 저서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전선동부는 교양부로 둔갑합니다. 고문실은 문화체육부로 명명합니다', 참으로 이런

명제들은 21세기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인사이트(insight)가 보입니다. 1984는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현대의 뉴 파시즘 전체주의적 세태를 역시 꿰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묻습니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정치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방송 4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사랑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납니까? 저는 노(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4법이 어떤 패악질을 가져올지,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공영방송 장악 시리즈에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방송 4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해 보고자 이런저런 해석들, 선언문들,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은 무엇일까요? 방송·미디어가 왜 중요할까요? 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지금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소통에 있어서의 보편성이라든지 영향력, 그 기능 등을 살펴볼 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왜 합의제로 왜 방송을 좀 더 많은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감독하고 또 그런 방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을까요? 그런 노력 등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그런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또 이렇게 탈민주적·탈헌법적·탈…… 그런 민주주의와 맞춰서 이런 방송 4법이 진행됐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혀를 차고 많은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투쟁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네거티브한 정쟁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방송은 언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해 오기도 하고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균형 발전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를 벌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정책 수립·시행 또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행위, 방송 광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행 기준,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 방송으로의 위상 강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17대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방통 융합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영방송이, 또 다양한 방송이 DMB 또는 IPTV 또는 뉴미디어, 스마트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가오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Framework Directive)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으로서 현재 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에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통신 분야의 공세적 시장 개방 요구와 방송분야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등 방송과 통신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 현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민영 또는 통신환경과 결합된 다양한 미디어통신 융합환경을 발전시키고 그런 중에서도 공영

방송을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영성을 높이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어야 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국가기간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송통신 융합환경은 2008년 미디어법을 통해서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국가기간방송은 그 이후에도 시도가 되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종편이 탄생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방송체계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긍정적 효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0년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던 한류 열풍이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 등에서 시작된 또 그전에 선배 연예인들께서 시작했던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BTS가 만들어져서 지금 반도체 성과를 넘나드는 K-콘텐츠 사업이 글로벌에서 촉망받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과제, 공영방송을 또 방송 미디어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태를 보면서 국가기간방송 등이 그 당시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되었더라면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또 특정 정파의 제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거부운동 또는 수신료 분리운동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 당시 국민제안 코너에 취임 초기부터 수신료 거부 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제안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국민토론에 부쳐야 된다는 의견들이 처음부터 팽배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 등이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또 이것이 국민제안 토론에 부치기보다는 정상적인 국회의 논의들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차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서 토론에 부쳐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이 진행되고 났을 때 저희도 놀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인 KBS 수신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또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국민제안 코너를 운영하는 한 담당자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불신이 강하구나.

물론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KBS 수신료를 내야 된다는 것, OTT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수상기 중심의 수신료 납부 방식이 과연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많은 토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방송 4법이 가져올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반공정, 반민생, 그런 방송장악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공정성,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4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논의도 없이 특정 편향 이념 중심의 그런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고착화하고 영구히 하겠다는 철저히 반민주적 방송입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이름으로 사망하게 하고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 대한민국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이재명 방탄 재명 방송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로 도배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속셈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사장 바꾸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MBC 사장은 불법으로 바꾸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사장의 임기가 다했고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개정한 법도 아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사용한 법으로, 그 법대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물가, 금리, 민생, 취약계층, 서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MBC 사장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현안이어서 온통 민주당의 당력을 방송 4법에 다 쏟고 있습니까?

지난해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입니다. 어떠한 일도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우선하는 것보다 절박할 수 없습니다. 때만 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민주당의 외침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MBC 사장만 사수하면 이런 민생 현장의 절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와서 2년 동안 MBC 사장,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분이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년 할 동안에 소위 MBC 잔혹사로 표현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을 때 공영방송 혁신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을 때 공영방송 혁신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 방송 4법에서 수많은 내용 등을 적어 놨던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5년 내내 공영방송 혁신이 필요 없었습니까?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사장이 바뀌어야 될 때니까 필요해졌습니까? 공영방송,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개인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재명 방탄 방송 못 만들어집니다.

22대 국회 제발 달라집시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민주당이 정쟁과 발목 잡기 시도를 멈추고…… 다수당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생에 좀 앞장서시고 협의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 주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조계원)

(07시45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조계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보다는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어디서 감히 지금 민생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민생을 파탄 내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정권이 누구란 말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좀 잘못하고 있다고 회초리라도 드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제일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데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방탄하는 데 여념이 없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에 대한 진심은 사실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방탄하고,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방탄하기에 급급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탐욕과 사리사욕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도대체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기에 또 추가로 지금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맞물려서 일어났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제에 맞게 하세요. 방송법 주제에 맞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강승규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에서 토지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800억이 넘는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한 김건희 일가의 비리의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해에 무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추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며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부가 밝히는 성공 확률은 20%에 달하고 대통령은 이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업체 액트지오사에게 맡겼고 검증도 국내 유수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액트지오는 어떤 업체였습니까? 연매출이 4000만 원도 채 안 되는 1인 기업에게 5000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석유탐사, 그것의 시추의 여부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트지오와 함께 검증에 참여했던 해외전문가들 또한 석유공사의 직원들과 학연으로 얽혀 있는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탐욕과 사리사욕의 끝은 어디까지 향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리사욕과 탐욕의 수단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부부를 신줏단지 모시듯 받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듣기가 민망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또한 당연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채수근 해병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채수근 해병의 부모가 마흔한 살에 시험관 시술까지 해 가며 어렵게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채수근 해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

어마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누르면 적당히 물러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양심과 정의감만 고취시켰고 윤석열 정권의 범죄 의혹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명령이 있었지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배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사실상 실토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이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전두환, 노태우마저 용서하고 협치를 통해 국민을 화합시키고 IMF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의 반열로 우뚝 세웠습니다. 또한 지원은 하되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지금의 한류 열풍의 토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꿈꿔 왔던 문화가 큰 나라, 문화강국의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제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햇볕정책과 6·15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입으로는 떠벌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장 중시했던 협치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면서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75년 전 강대국의 이념전쟁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제주 4·3사건, 여순 10·19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이념의 미명하에 수십만 명의 동포를 학살하였습니다. 만약 김구 선생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동족을 학살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금 이념전쟁을 끌어들이고 일방적인 신냉전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룩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평화적 관계는 깨뜨려졌고 경제는 경제대로 수렁에 빠지고 안보는 안보대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해 낸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고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끝없이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보유했던 러시아를 북한으로 돌려세웠고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를 오히려 도와준 정권이 바로 윤설열 정권입니다.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저버리고 미·일 중심의 진영 외교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라면서 군대조차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북한에 대한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맞서 가지고 지금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 모색보다는 대북스피커 공세 강화 등 적대적 해법만 구사하며 북한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주 많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겹도록 해 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조계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의원 예.

○부의장 이학영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시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하기 이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앞으로도 발언하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서 의장, 부의장인 사회자가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의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오늘 방송법 토론을 큰 주제로 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그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계원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의원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평화요, 최고의 외교도 평화이며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길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은 4000㎞가 넘는 방대한 전선에서 치러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150마일 휴전선에 세계 최대 수준의 화력이 밀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단 며칠 사이에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더구나 핵까지 사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남북한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지극히 위험한 외줄타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윤석열 정권의 일방 외교, 대북 냉전 외교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식음을 전폐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또한 공기와 같이 한 호흡도 멈출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떤 권력이나 특정 세

력이 점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독립성 보장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달리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을 감시할 공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 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냉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군말 없이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결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방송 4법에 도입된 규정들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2. 서비스 품질의 하락, 3. 기술적 쇠락이라는 삼중의 실패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영을 기반으로 기술적 혁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방송 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법 재입법을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국민의 권리 억압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정치적 정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열망인 것입니다.

(「물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제안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

서론,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1000만 촛불로 표출되었고 1000만 촛불은 언론을 공범 혹은 부역자로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를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6대 긴급현안의 하나로 꼽았을 정도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언론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세월호 보도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개한 2014년 5월 KBS 보도국장의 폭로는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고 휘둘리는 프로그램, 이로 인한 언론 현장의 왜곡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없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각종 조사에서 수치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래미디어연구소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언론학회 회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KBS는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세 가지 항목에서 2007~2010년까지 줄곧 1, 2위를 유지하다 2012년부터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8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MBC 역시 2012년 이후에는 순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공영방송이 집권세력 편향의 정치종속적 지배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1990년대 이후 KBS 사장 가운데 출근 저지, 사장 퇴진 운동, 제작 거부, 파업 중 하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구성 방식과 사장 임명 방식—이하 지배구조로 통칭—을 꼽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평가해 본다.

공영방송과 공적 책임.

1. 법적 논의.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양대 공영방송으로 KBS와 MBC가 꼽힌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낱말은 방송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공적 책임, 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MBC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설치·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였다. 정당법 제39조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정 부분 보완된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였고—2012헌마271 판결—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EBS,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제시되어 있다. 그럼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가? 전술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방송법 제1조(목적), 제5조(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서 규정—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겠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가 않다. 방문진법에는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목적)에서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획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요약컨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된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에는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에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고 노력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학술적·사회적인 논의.

공영방송의 개념과 공적 책임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public broadcasting)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public Broadcasting act)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서유럽 학자들이 내린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만도 20가지가 넘는 상태이고 방송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은 하나의 정해진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특정 시기의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조건 아래 규정된다는 쉬베르트센의 개념 정의가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다.

개념의 복합성 및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공영방송 운용 사례 등을 통해서도 공영방송의 존립 이유는 주파수 희소성이나 공공산업론이 아닌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책임의 이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개념은 공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존재 이유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제도는 처음부터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공영방송 최대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의 탈규제 정책 기조, 기술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의 정체성, 공익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의 영향력 약화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불확실한 미래를 탐색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매체·다채널 시대일수록 공적 책임 구현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이다.

그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만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석민·홍종윤·오형일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첫째, 민주주의에의 기여(정치적 차원의 목표), 두 번째 양질의 서비스 제공(사회문화적 차원의 목표)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돼 왔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KBS가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중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의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다.

요약컨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

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한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이자 숙명적 귀결점으로서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면서 공영방송 저널리즘 구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의 심화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전의 진보정권 시절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기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으로 인한 방송사 내부 조직의 정파적 분열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념 대립이 공영방송 조직 안으로 고스란히 옮겨 오는 양상이 되면서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정파적 구호 또는 주장으로 전락해 구성원 간의 불신과 대립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파적 분열은 저널리즘 문화의 붕괴로 이어지며 저널리즘 문화가 붕괴된 공영방송은 다시 정치적 종속 구조를 용인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양극화되고 분열되어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갈등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 촛불집회에서는 취재를 거부당한 채 쫓겨나며 극도의 불신을 받고 반대로 보수단체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공영방송사들이 누구의 편도 아닌 사회 전체의 공기로서의 위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전해 온 안건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는 후보자 박근혜와 후보자 문재인 모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언한 바 있었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KBS 이사회의 제청, 대통령 임명.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7 대 4.

MBC, 근거 법률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9인(방통위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방문진 이사회에서

추천.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6 대 3.

EBS, 근거 법률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9인(방통위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6 대 3.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임명하는 3명의 이사와 여당이 임명하는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택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 및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여야 3 대 2의 구도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각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되고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집권 여당, 방통위, 이사, 사장이라는 수직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통령·집권 여당, 방통위, 이사, 사장의 수직적 관계는 최근 들어 더 강화되었다고 지적된다.

인선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들 중에는 전문성, 도덕성, 대표성 측면에서 부적격 시비에 휘말린 인물들이 다수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적격 시비가 제기된 대표적 인물로는 김인규 전 KBS 사장(이명박 대통령 대선 선거방송 캠프 출신), 김재철 전 MBC 사장(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도덕성 논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등 정치편향 논란), 이인호 전 KBS 이사장(뉴라이트 학회 고문 활동), 이춘호 전 EBS 이사장(회사차량 개인 사용, 투기 의혹으로 장관후보 사퇴) 등이 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운용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결과를 산출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영국에서 BBC와 정부의 법적 관계는 한국보다 더 비독립적이나 실제 운용은 BBC가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제도보다는 문화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고, BBC는 KBS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지만 그 기준이 정권과의 친밀성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기 때문에 BBC의 사장은 때로 정부와 대립하는 불편함도 감내해 왔다는 평가이다.

민주화 과도기에 있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공영방송의 전통이 부재하여 정부, 정당 등 정치권력이 한국처럼 공영방송사와 감독기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독립성의 확보는 한 사회의 역사, 문화적 토대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우선주의의 함정은 경계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제도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운용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 공영방송의 역사가 짧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문화적 토양이 취약한 한국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오용의 소지가 높은 제도를 놓고 합리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국내 학자들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왔고 이에 더해 일본, 프랑스,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2013년 국회에서 꾸려졌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표를 제시하였다.

표가 슬라이드로는 안 보이니까 말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

감독기구는 BBC Trust(12명, 지역 4명 포함), 선임은 여왕, 방식은 인사위원회 심사, 문화부장관 추천 그리고 수상 지명, 여왕 임명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장의 선임은 BBC Trust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식은 위원 간 합의로 선임합니다.

다음, 일본의 NHK.

NHK의 감독기구는 NHK 경영위원회로 12명입니다. 지역에서 8명, 전국에서 4명 해서 12명의 경영위원회가 감독기구를 맡고 있고, 선임은 총리가 하고 방식은 총리실 후보 심사, 의회 승인, 총리 임명을 거쳐서 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경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이 됩니다.

프랑스(FT).

FT의 감독기구는 FT 이사회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임과 방식을 보면 정부에서 5인, CSA—시청각최고위원회를 말합니다—에서 5인, 의회에서 상하 각 1인 해서 2인, FT에서 2인을 각각 임명하여 15인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사장 선임은 대통령이 하고 CSA에서 의회 상하원 상임위 승인을 거쳐, 이때는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ARD/ZDF.

감독기구는 방송평의회로 인원이 17~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임 방식을 보면 주총리 또는 추천단체에서 임명하고 단체 내 미합의 시에는 주의회에서 임명합니다. 사장 임명은 방송평의회에서 하고, 여기도 5분의 3의 찬성 그리고…… 아, ZDF는 5분의 3, 바이에른방송은 2분의 1 이상, 서부독일방송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핵심 내용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 공영방송 감독기구, 구성 인원, 구성원 선임 방식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바이에른 방송사가 과반을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17~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평의회의 과반에 따른 의결은 9~11인으로 구성되는 한국 공영방송사 이사진들의 과반 의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독일의 ZDF는 5분의 3, 서부독일방송은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 각 방송사의 사장을 의결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독일을 과반수 찬성 의결 방식이라 분류할 수는 없다. 즉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결 방식이다.

해외 4개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은 영국과 독일이다. 영국의 BBC는 전문형 모델로, 독일의 ARD·ZDF는 조합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영국은 BBC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BBC

외부에 BBC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BBC 내부에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며, BBC의 감독기관인 BBC Trust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BBC 이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들이 장점으로 꼽힌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이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지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평의회와 행정평의회로 분리된 이원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를 반영하여 다수의 인원들로 방송평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 표2에서 소개되지 않은 나라들로 미국과 스페인이 있는데, 우선 스페인의 공영방송사인 RTVE는 사장 선출 방식을 행정부 직접 임명 방식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변경한 후 공영방송사 사장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미국의 공영방송은 다양한 지역방송국의 전국 네트워크인 PBS와 방송국을 소유하지는 않고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금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CPB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미국의 공영방송법은 CPB의 사장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CPB 이사회의 구성 인원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일 정당에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22대 국회를 향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꽤 두꺼운데 발제 부분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다음 내용은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중점 입법과제에 대한 제안이다. 제22대 국회를 위한 입법과제 제안은 제21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제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성과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상황이다. 공영방송 KBS, MBC 장악 시도 또는 장악, 공영미디어 YTN과 TBS의 민영화 추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통제에도 뒤늦은 대응을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에서 시작됐다. 그 방식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을 동원한 전방위적이었고 야당 추천 위원 임명 거부나 강압적 위원 해촉,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활용한 비민주적 운영, 위법적이고 보복적인 방송 심의 등 온갖 파괴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그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묻도록 만들고 있다.

총선 이후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가 민주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여섯 가지 입법 제안을 하

고자 한다.

1.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

현황과 관점.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 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이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 등을 고려하면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2명 포함). EBS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두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

이사회는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 제청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대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언련의 공영방송 개혁 방향이 담겨 있고 고 이용마 기자의 뜻이 담긴 2018년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과 2023년 민언련이 마련한 TBS 시민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책임자, 방송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KBS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KBS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자 추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봄.

다음은 2023년 3월 31일 자 민언련의 TBS 시민조례안입니다.

TBS의 방송편성·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을 대표하는 위원과 편성·보도·제작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시청자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대표이사후보 추천 시 시민평가단의 공개정책 설명회 평가 결과를 50% 이내로 확대·반영하여 의사결정에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함.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안은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이 제시했던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위해 3분의 1 이상 중간지대 이사를 배정하거나 시민 참여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안에서는 국회 추천 이사 배정이 5명으로 전체 이사 21명에서 30%가 되지 않아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방송사 종사자의 이사추천 의견도 방송 직종별 단체 추천 방식으로 해소됐다고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안에는 방송 취재·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제도와 임명동의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제21대 국회에도 방송 자율성 보장제도와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

법제화되지 못한 임명동의제는 관철되기 어렵다. 최근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통해 합의되고 규정된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불이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제작·편성 책임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실현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방송법의 취지에 맞고 단체협약이나 방송편성규약에서 얼마든지 합의되고 효력을 발휘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해야 할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재원도 비상인 상황이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역 ‘뉴스 7’ 방송 시간 축소 등 공적 서비스를 줄이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신료 이외에 공영방송 재원을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수신료 정상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수신료 감소를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KBS 방송제작 역량의 파

괴와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대폭 축소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정체성을 확정하거나 현 방송 관계법 체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미디어 체제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공영방송을 흔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추후에 마련될 논의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공영방송의 편집·제작·보도 자율성의 강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 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견.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편성위, 시청자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편성위원회도 주요 방송사업자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편성의 자유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명동의제 마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의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장 임명동의제도 시도된 바 있어(SBS는 2017년 사장을 포함한 보도·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임명동의제를 노사가 합의했지만 2021년 사장 임명동의제 제외를 다시 합의) 공영방송으로 제한하여 법제화하거나……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나 편성 등 각 부문 책임자 추천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이행, 임명동의제 이행 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벌칙 조항을 두게 된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국회에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KBS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수신료 증감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료 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현재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

수신료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제67조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 성격 변화나 통합미디어 정책·규제 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롭지는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현실에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긴급하다.

입법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파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위원 정원을 현재 5인에서 증원하고 중간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추천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 관련 학회나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의 위원 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야당 추천 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의 경우에는 추천되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거나 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방통위법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담은 허숙정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7일 발의됐지만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방통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규정하는 것이지만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거나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 등은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방송장악을 위한 공세를 펼치는 정권이라서 촘촘한 규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의 위법적 회의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개의 및 의결정족수(재적위원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를 변경해야 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정치적 후견주의를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기구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희생으로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확인될 뿐인 상황이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파성이 과잉돼 있고 이미 방송을 멈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보복성 심의, 청부 심의까지 넘쳐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KBS, YTN, JTBC 등 5개 방송 프로그램에 과징금 모두 8000만 원, 대장동 수사기록의 중요 사실관계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JTBC 프로그램에 과징금 2000만 원을 의결한 2023년 11월 13일이 절정이었다.

국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야당 추천 위원이 연속 해촉되고 위법적 행위와 연루됐다고 비판받고 있는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촌극 속에 여야 위원 구성은 6 대 1의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방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해서 방송 심의를 용인했지만 공정성 심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심의 기준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객관적 심사가 어려운 권한을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 부여하여 자의적 심사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고 성표현, 폭력, 혐오·차별 등에 대한 국민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선 미디어 정책 등으로 제안해 왔다.

입법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현재와 같은 여 6, 야 3(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 상임위 추천 3인)의 정파적 구도를 해체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 방식이 있겠지만 적어도 민언련이 그간 제안해 온 여 3, 야 3, 여야 공동 추천 3이 현실적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해체하고 1차적인 심의 과정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심의안을 변경할 경우엔 합당한 의견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고 있는 정파적 갈등 구조가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하겠다.

보복적이고 청부적인 심의가 난무하여 사실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거나 권고 정도의 제재만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심의를 성표현, 폭력, 혐오·차별 등 콘텐츠 심의에 집중하고 위원회가 2014년부터 검토해 온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현황과 문제.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의 법적 규정 등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란 법정기구로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검증·공개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기기도 했다. 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등을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어 기사 배열 기준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또는 시정 권고를 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포털 책임성 강화, 자율규제 추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심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5월 2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잠정 중단됐고 8월 25일 네이버 팩트체크 서비스와 SNU 팩트체크 센터 지원이 중단됐다.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 22일 카카오 다음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지금까지 포털 뉴스가 뉴스의 다양성 제고에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회적 인식이 무너진 것이다.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카카오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매체가 아니라 콘텐츠 제휴사로 한정한 것은 포털 뉴스의 여론시장 지배력으로 보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은 상당한 타격을 봤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는 엄청난 권력,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심사 기준 등에서 보여 주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 등은 심각하다.

2024년 1월 18일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및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계획안 마련을 위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이 출범했다. 경험상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뉴스 생태계나 여론 다양성에 기여할 방안 마련과 실천을 기대하긴 어렵다.

최근 포털 뉴스 관련 논의는 포털 사업자의 독점 권한 확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과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입법 제안.

제휴평가위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포털 뉴스 통제, 더 나아가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입법화가 필요할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포털 뉴스는 법률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신문법에서 규율되고 있고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사회적 합의나 사적 계약으로 보장되던 것을 법률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 시행령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배열 기본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의조항이지만 신문법 제6조에 따라 독자(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위원회 또는 이용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신문법 체계 내에서도 포털 뉴스, 즉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방향은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회적 책무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내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법 제10조와 신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반 신문의 편집 기본 방침이 아니라 기사 배열 방침, 즉 기사 배열 알고리즘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 요소를 신문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뉴스 포털과 언론사의 동등한 관계 설정이나 지역 언론 등 중소 미디어에 대한 고려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수단으로 하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위법적 언론장악과 통제, 언론자유 침해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되는 등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내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또는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운영 기간, 진상규명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위법적 인사 조치,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위법적 추진, 공영방송 및 공영미디어 내에서 벌어진 방송의 자유, 편성 자율성 침해, 단체협약 위반 등 장악 기도, 언론 취재·보도의 자유 침해, 각 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인 인터넷 언론 심의와 청부 민원 등이다.

6.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현안과 문제.

미디어 공공성 재건을 위해서는 미디어 생태계 규제·진흥·지원 체제의 종합적 검토가 긴급하므로 통합적 정책과 법제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미비한 법제 개선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실질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상생을 위해 미디어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수적이다.

입법 제안.

제22대 국회에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공공성 구현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토론 및 조정을 거쳐 미디어 개혁 정책과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되어야 한다.

주요 의제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25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제정 36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 3법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종속되어 왔던 공영방송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수를 확대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학계, 현업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고 공영방송 사장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오랫동안 방송 3법은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왔으나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언론탄압과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이 지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정권이 KBS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 술친구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아 땡윤방송을 만든 일, MBC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표적·정치 심의와 법정 제재 남발 등으로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중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62위로 전해보다 15단계나 폭락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 요인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의 퇴행을 지금이라도 끊어 내고 정상화하려면 이번에 발의된 방송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해 좌파 장악법이라는 날조로 비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며 합리적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민심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에서 법안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다가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고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2024년 6월 3일 자 성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입틀막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 수용하라.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방송 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하여금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이후 공영방송 이사 자리와 사장직을 매개로 벌어져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찬탈극을 멈추고 공영방송을 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자

는 것이 이 개정안 발의의 논리다.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공영방송 탄압과 전방위적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자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 덕에 이 개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아 가던 차였고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 사흘 만에 빠르게 발의가 되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싸워 왔던 현업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 경험에서 보았듯 법안 발의가 곧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알권리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생·노동 법안들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와 관련된 법안들, 즉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검경 압수수색으로 정권을 비판한 언론과 풍자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한 시민들을 겁박한 입틀막 정권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는 데에도 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입틀막의 중심에 공영방송과 방송 3법이 있다. 국민 알권리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만들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도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KBS를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망가뜨리고 MBC도 집어삼키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집권 2년 만에 8할의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 국민에게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권리가 되어 버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시대착오적으로 탄압한 독재적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언론장악도 거부권 행사도 폭력적인 입틀막도 우리 민주주의의 눈높이로는 용납 불가한 일이다. 그만큼 해도 소용없는 일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국회를 향한 거부권도 국민에 대한 입틀막도 거두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이 지지율뿐이겠는가.

국민의힘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하기 전에 방송 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합류하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에도 다시 요청한다. 22대 국회 개원 전 90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며 방송 3법의 조기 입법을 다짐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조속히 방송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에 돌입해 주길 바란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여기까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이 버젓이 자행해 온 적나라한 공영방송 장악행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보수정권의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이는 불법이다)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선거마다 일사불란한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시청률·청취율·구독률) 점유율과 광고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 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 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인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방송의 경우 편성권)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 양면을 인사와 예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태우 정권 시기 확립된 권·경·언 수평 유착구조다. 군의 물리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재벌과 보수언론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던 구조가 노태우 정권의 언론구조 개편을 통해 권·경·언 삼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대체되었다. 6월항쟁이 군부와 타협하여 절반의 승리, 미완의 혁명에 그친 것과 맞물려 있다.

사영 보수언론은 그동안 법의 자의적 악용이 잘 먹히도록 보수정권과 손발을 맞춰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법 악용을 축소·은폐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치장하는 한편 야당에는 지도부의 각종 비리(사법리스크)와 탐욕(방탄국회와 사당화)을 덧씌우기 바빴다.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오가며 한국 근현대사를 유사 식민사관으로 비틀어 내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과 2016년 촛불을 폄훼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및 586세대에게는 부패와 특권,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2022년 9월 28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문화방송 편파방송조작 진상규

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였다.

KBS, MBC, EBS, 연합뉴스, YTN 등 공영미디어는 언론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미디어는 군사독재 시절 관영매체로서 정권의 일부였다. 6월항쟁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집권하는지에 따라 독립적 공영과 예속적 관영의 양극단을 오고 갔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도구화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선거에 의해 민주정권이 출범하면서 편성권이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과거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수순은 첫째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두 번째로 낙하산 사장 투입, 정권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인사 단행. 세 번째로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개편 및 저항적, 비판적 사내 구성원 탄압과 축출. 네 번째,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이다. MBC에 대해서는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아직 못 해낸 것이다.

현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지작거렸던 최악의 카드, 민간 매각을 통한 사영화 카드를 다시 꺼내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MBC 사영화로 국민의 알권리가 회복될 길 없어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최악의 국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결연하고 큰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C에 비해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상대적으로 더 작을 것 같은 YTN은 방송장악 기획단계부터 사영화로 내몰렸다.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졸속 매각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 정권의 공영미디어 장악은 경험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현 정권의 친위대로 채워졌고 2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 같았다. MBC를 제외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3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등 수많은 비판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분투 중이다. 이들은 현 정권에 의한 장악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다. 시민들이 정권의 온갖 횡포를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언론자유도가 아직까지 상위권 끝자락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것도 이들 덕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정권의 검열과 기소로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판 그대로 심의기구여야 한다. 하지만 불법적 위원 교체 뒤 곧바로 검열기구로 돌변했다. 검열은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불법 그것도 헌정 파괴의 중대 범죄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위원장 청부심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검열을 일삼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비판언론은 주류언론이 은폐하거나 왜곡한 진실뿐만 아니라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 지면을 빌려 지지와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만 아쉬움 한 가지도 덧붙여야겠다. 비판언론을 선도해 온 일부 매체에서 야당에 대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사당화' '친명횡재 비명횡사' '지지층 이탈'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 데 대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의 본령은 합리적 성찰에 기반한 비판과 진실 추구에 있고 늘 시민을 향하는 데 있다. 성찰이 거듭 필요한 때다.

앞서 말씀드린과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이전 독재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공영방송 장악 및 사유화 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자행해 온 방송 및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실태

1. 방송통신위원장 퇴출 및 방통위의 정권 하수인화 획책, 바람잡이 감사원 동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 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강제퇴출 감행.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이후 방통위에 대한 검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방미 막말 보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겁박을 시행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을 통해 구체적인 보도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민의힘 당 및 보수단체의 형사고발,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MBC만 탑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하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MBC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든’이라고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합니다. 현재 MBC는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빌미로 임 모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및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의 책상을 열람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압수수색을 하다가 제지받아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는 MBC 민영화 추진 압박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작년 11월에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은 금년 2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3월 2일 감사 실시를 발표합니다. 감사가 결정된 6개 항목은 1,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관련, 그다음 두 번째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 손실 재발 우려 관련, 세 번째로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관련, 네 번째로 MBC PLUS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방치 관련, 다섯 번째로 MBC ART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여섯 번째로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을 명목으로 해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숨은 의도는 MBC 길들이기와 보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방문진 음모와 무관한 MBC 경영 관련 내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자료조사가 끝난 후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에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으로 질문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감사에서 청구된 여섯 가지 감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사방해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8월 7일 감사원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합니다. 이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단 해임을 위해 썼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대상의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절차로 수사 요청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쓰는 편법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8월 31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권 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현재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 하고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데 방문진은 이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문진이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행정소송과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방통위의 사무검사·감독.

방통위는 7월 초에 MBC를 겨냥한 방문진 검사·감독에 돌입하였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8월 4일과 7일에 방문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BC를 겨냥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기도의 숨은 목적은 검사·감독으로 꼬투리를 잡아 야권 성향의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이사로 보임하고 방문진 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 현 사장을 퇴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지난해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진숙 방통위 내정자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사용 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총 188건을 제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12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9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숨은 의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이사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두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빌미로 해임하여 과반수를 재확보하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야권 측의 김기중 이사 해임 뒤 현재 여야 3 대 5 구도입니다. 여기서 권태선과 김석환 2명을 해임시켜 여권 측 이사 2명을 보궐 이사로 임명하면 5 대 3으로 역전되어 과반수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MBC노동조합의 제3노조는 기존 노조하고 전혀 다른 반대 성격의 노조입니다.

KBS.

KBS에 대해서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BS 내 보수노조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국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5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KBS 옥죄기 시도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월 23일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

즉 이 내용은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로 KBS 사장과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퇴출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 4당과 전국언론노조 및 KBS본부, EBS지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효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KBS 2TV에 대한 민영화 추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경영악화 및 내부 혼란을 초래한 다음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 미이행 등을 핑계로 정부 여당은 재허가 심사 과정 등을 통해 KBS 2TV를 민영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윤석년 이사—윤석열이 아니고 윤석년 이사입니다—에 대한 해임 및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전에 방통위의 여권 측 두 사람의 위원만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기소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윤석년 이사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처럼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해임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기소 사실만으로 해임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도 탄핵 마일리지에 쌓일 수 있는 거겠지요.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 관련입니다.

7월 12일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 영농법인에서 수가

100만 원대의 확인하지 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 원대 식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 추천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주도로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을 추진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7월 25일 방통위는 방만경영 방치,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내용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영진 KBS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합니다.

(「조계원 의원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TBS 관련입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직후 TBS의 이강택 사장 및 김어준 등 핵심 진행자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집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처음 개회한 2022년 7월 4일 국민의힘 시의원들 76명 전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11월 15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 소속 시의원들 합세로 해당 예산 지원중단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참고로 TBS는 연간 예산의 약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 중단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27일 TBS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공식 선언되었고 희망퇴직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티비에스 지원폐지 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폐지 조례 시행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현재 TBS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YTN 탄압 관련입니다.

YTN에 대해서는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진행하였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8일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했고 10월 23일 유진기업이 YTN 주식 1300만 주를 3199억 30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11월 10일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인수 주체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진기업이 51%, 코스피 상장기업인 동양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지요—유진이엔티를 만들고 11월 15일에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6일 방통위는 YTN 및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정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에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정 의견을 냅니다.

당시 유진그룹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지요. 첫 번째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도 부족했고 사회적 신용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했었고요.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도 빈약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진이엔티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졌던 유 회장의 변호사가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지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의결 시 당연히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건 방통위 설치법 제14조 위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고요.

11월 23일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 명의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통위가 부여한 YTN 최대 주주에 대한 열 가지의 승인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임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진그룹이 낸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세 번째로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1명이 전부인 페이퍼컴퍼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방통위가 경기방송을 인수하려던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최대의 주주로서 사회적 신용이 떨어지고 재정 능력이 부족해 변경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YTN노조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혐의 확정판결, 레미콘 관련 상습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진투자증권 불법채권 거래 의혹으로 인한 수사 진행 중, 유진기업의 노조탄압과 언론자유 침해 판정 등 사회적 신용도가 현격히 결여된 사항을 YTN노조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유진그룹의 범법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4월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억 5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전 EM미디어 대표도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됩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무마 대가로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김광준 검사는 특수3부가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유진그룹 계열사에 투자, 김 검사를 비롯해 특수3부 검사 3명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주가조작 불법리딩방 운영 의혹이 연달아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 A 임원이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모 에너지 관련 업체의 주가가 급등할 시 A 임원이 작전세력과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호재를 퍼뜨리는 등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6월 유진투자증권 B 이사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B 이사는 지난해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것을 예측해 주목받은 투자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B 이사는 7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편 검사 뇌물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경찰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검경 충돌로 번졌던 사안입니다. 당시 법률신문 등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부장검사는 윤석열입니다—는 김 검사의 본인 실명계좌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에 소위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인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의 불법대출을 했던 자를 검사실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고 돌려보낸 사실도 있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 편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장 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3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현재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및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2월 15일 유진그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상무를 지낸 김백을 YTN 사내이사로 지명했고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사장을 지낸 배석규를 임명합니다. 김백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지명한 것은 YTN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내정 수순이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설치한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과거사백서의 내용 중에 보면 김 전 상무는 경찰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는 내용을 다룬 돌발영상 아이템을 질책했고 이후 YTN 돌발영상이 폐지됐습니다. 또 배석규 전 사장의 경우에는 2013년 YTN지부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자 경찰에 당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경력을—경찰 병력이지요—출동시켜 현행범으로 노조원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의 결재권자로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배 전 사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의 YTN 불법사찰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9월 3일 해당 문건에서 배 전 사장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 바칠 각오가 돋보이는 인사라며 '취임 후 즉시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와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 PD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 조치를 계속한다. 사장으로 임명해 힘 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YTN 간부 4명이 YTN을 사찰했던 원충현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며 YTN 안팎에서 보도전문채널 사장과 주요 간부들이 정부와 연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월 29일 보수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 초대 이사장 출신인 전 YTN 상무 김백은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김백은 취임 직후 노사 협의로 시행 중인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곧바로 보도국장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김백 사장은 4월 3일 날 그동안 YTN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황당하지요.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YTN 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맙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 대한 탄압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11월 29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을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합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 승인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 감사 및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 5월에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원은 공언연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방심위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3주간의 감사를 통해 MBC, KBS 등 주요 언론의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미뤘다는

의혹 등을 감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20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가 다시 2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5년 치 분량의 실적보고서와 회계검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근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을 겨냥하여 본인도 모르는 선수금 결제, 국실별·팀별 직원들과 점심 식사한 후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간 문제, 점심시간 집행 시간의 문제, 법인카드 대신 본인 카드 결제 사항 등에 대해 마치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인 양 호도하는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숨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상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 측에 불리한 심사 요청 사항은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에 불리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려는 전략을 실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과 방심위 장악과 통제를 위한 불법적인 해임·해촉 만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건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방통위 여권 측 2인 위원인 김효재와 이상인—당시 김현 위원은 기권한 상태였고요—2인 위원만으로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해임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8월 9일 서기석 변호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고요. 8월 23일 KBS 이사회는 서기석을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대해 이에 맞서서 7월 13일 해임 취소 소송 및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김현 위원은 기권—만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당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하고 방통위는 8월 21일 황근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11일 남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김의철 사장 해임.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이사 6명, 야권 측 이사 5명은 표결 직전에 퇴장하였습니다. 6명이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김의철 사장은 다음 날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14일에는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살펴보면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당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서 경영의 위기를 초래한 거였지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와.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자기들이 분리징수해 놓고 덮어씌우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네요. 다음,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이런 사유를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야권 성향 이사를 축출한 후 여권 성향 이사로 보임하여 6 대 5 구조를 만든 다음 즉시 현 KBS 사장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정연주 전 사장 퇴출과 같은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해임 조치로 해임을 강행합니다.

네 번째, 박민 사장의 임명.

2023년 10월 11일 오전 방통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주동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여권 측 이사 김종민 후임으로 추천하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당일 밤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서기석 이사장은 10월 4일 이사회에서 KBS 사장후보자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 그 뒤 10월 6일 이사회를 개회하여 4일 사장의 추천절차 폐회를 선언하고 결과적으로 사장 선임절차는 종료시킵니다.

그럼에도 10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여권 측 인사 6인만으로 임명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 절차에 따른 임명제청인데……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 내용은 문화일보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았음.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10월 4일 면접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반 전화상담을 했다고 번복합니다.

10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절차와 관련해서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에 대해 국회인사청문을 재가하였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국회 과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고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연이어서 폭탄을 터뜨리는데요. 11월 12일—임명된 날인데요—9시 뉴스 앵커 하차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취임식을

갖고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방영을, 당일 편성을 바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뜬금없는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해서 9시 뉴스가 보도 공정성 훼손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9시 뉴스 앵커 리포트 관련 38기 기자들의 비판 연명성명이 발표되었고, 라디오 PD 76명의 라디오센터장 사퇴 요구 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1월 16일 날 KBS기자협회는 9시 뉴스 앵커 리포트 관련 보도본부 책임자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박민 사장은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대한 폐지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취재기자들은 박민 사장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대국민사과 때 불공정 편파 사례로 꼽은 기자에 대해 취재기자들이 박민 사장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반박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더 라이브 폐지 결정에 맞서서 더 라이브 제작진은 편성본부장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하였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내부감사 청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1월 20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박민 방송법·노조법 등 위반에 대해서 고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사장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노조법 위반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민 사장 취임 후 불과 거의 일주일 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민 사장은 2024년 1월 4일 전두환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부를 것을 강제하는 내부지침을 하달합니다. 1월 26일에는 노사 간 협의로 시행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 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2월 7일에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방송을 하고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의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로 표현합니다. 2월 15일에는 KBS보도본부장이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방송편성을 연기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MBC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박민 사장의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5월 17일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KBS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네요.

다음은 방문진과 관련한 탄압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날 방통위원회 안건 의결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언급한 뒤에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를 강행합니다.

8월 3일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8월 14일 날 개최하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8월 21일 날 해임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 새로이 위원장이 된 이동관과 이상인, 2명만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부당한 방문진 사무검사·감독 실시와 불법적 권태선 이사장 해임 만행으로 김효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1심 판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합니다.

이 고등법원 결정문의 특이점이 소위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즉 2인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휴가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관보에 게재, 일명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김 이사는 11일 당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는데 11월 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11월 8일 즉시 항고 절차를 밟습니다.

9월 20일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모두 2인 의결로는 해임처분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판결을 받자 또 권익위가 나서 가지고 다시금 지금 해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EBS입니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세워 EBS 이사회에서 해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 해임처분을 위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 김현 기권만으로 해임을 의결합니다.

8월 28일 위원장이 된 이동관은 이상인과 함께 강규형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당시 출석위원에 김현 위원님이 참석해서 기권한 경우에는 이걸 상임위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임을 시켜 냈고 김현 위원님이 빠진 해임 절차는 무효로 처리가 된 거고요.

다음, 방심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리가 8월 17일 이루어졌고 8월 18일 날 정연주 위원장 후임으로 보수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신임 위원이 위촉됩니다. 그리고 당시 여권 측 방심위원 4명만으로 9월 8일 날 류희림 신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8월 17일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국민권익위는 정민영 방심위원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에 여권 측 방심위원들만으로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건의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해촉안을 재가합니다.

(「화장실 좀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더 하지요.

(「잠깐 쉽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고생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포털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사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 대해 정부 여당의 기사 배열 관련 회유와 협박 그리고 윤석열식 가짜뉴스 통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당과 TV조선이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실태조사 실시 후에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합니다.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심의하기로 선언하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나 권한 없는 방심위의 심의에 불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10월 26일 날 류희림은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 장악·탄압 주동자의 재등판.

윤석열 대통령은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으로 8월 25일 임명하였고 지난 7월 6일 전 문체부장관 유인촌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더니 불과 2개월 후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충복 인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통제사령관과 인터넷신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배후 총괄조정관의 쌍두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MB 정권 시절에 익힌 언론 장악·통제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인물 등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및 KBS 이사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던 차기환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교수를 재등용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방심위 위원 등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동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9일 날 민주당은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11월 10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11월 13일 국민의힘은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민주당은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자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 즉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미상정되었고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방송위원장으로 그동안 방송사, 언론탄압의 선두에 섰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 과방위는 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과정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아주 전면에 서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정민영에 대해서 권익위 발표 직후에 방심위는 정민영을 해촉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 조사 중에 해임이 됐고 조숙현, 이상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 권태선, 김석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으로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임했고요.

그냥 악질적으로 행동한 게 권익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 가장 악질적으로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호위용 철 지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9월 7일에 설치하고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 당시 중수부 수사 때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조 씨는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 1155억의 불법 대출을 당시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께서 무혐의로 처리했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김만배, 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춰내 가지고 수사를 제기했지요. 그래서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에…… 뉴스타파 그다음에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들이 전개가 되었고요.

JTBC도 해당되네요, 본사 사무실. JTBC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봉지욱 전 기자가 JTBC에서 근무하다가 뉴스타파로 이직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군요. 그래서 소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팩트는, 조우형의 1155억 불법 대출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조우형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무혐의로 나온 것 또한 팩트고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백신 팀장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건 뭐냐? 그 커피를 마신 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수사관이, 수사 검사가 커피를 준 건지. 그런데 이 녹취에서는 그 부분이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준 것으로 허위사실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건을 몰아간 거지요.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먼저 특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특검을 하자. 대장동도 특검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TV 토론회에서 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에 대한 요구를 회피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는 그때 당시에도 특검을 회피했지요.

대장동 사건이 종잣돈이 없이는 그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고 대장동 사건의 범죄가 발생할, 소위 그 대장동 일당이 불법적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대장동 범죄의 종잣돈을 불법 대출한 것을 묵인 방조한 게 누구인지 그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야기하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할까 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에 관해서입니다.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 4개월여 동안 2008년 3월에 방심위가 설립된 이후 초유의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전 위원장을 강제 해촉하고 다음 날 바로 전광석화처럼 후임으로 류희림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하고 곧바로 여권 방심위원 4명이 모여서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가짜뉴스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류희림은 위원장 자리를 꿰차자마자 취임 당일 오전에 국민권익위가 정민영 전 방심위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을 발표하자 당일 오후에 여권 측 방심

위원들만으로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즉시 해촉을 단행하였습니다.

사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부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기획조정실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동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9월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인 인터넷 언론보도를 월권으로 심의하겠다고 공작을 편 것입니다. 이는 9월 18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장악한 방통위가 발표했던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에 보조를 맞춘 방심위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은 독단적으로 9월 26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출범 하루 전인 지난 9월 25일 탁동삼 팀장은 류희림 위원장과 전 직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메일로 보내 항의하는가 하면 10월 6일 팀장 11인은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심의센터 소속으로 편성된 평직원 전원은 센터가 가진 법적 논란과 업무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전보 요청을 하는 등 고충을 방통심의위 사측에 요청하자 평직원 150여 명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대통령 입맛을 맞추기 위한 뉴스타파 때려잡기에 첨병으로 나섰습니다.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합니다.

그러자 뉴스타파 측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에 반발하였고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방심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11월 8일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고 서울시로 떠넘기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인터넷 언론 통제에 나섰음을 자인하는 꼴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1월 13일에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에 6000만 원의 과징금, KBS에는 3000만 원의 과징금, YTN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 JTBC에는 1000만 원의 과징금 등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기준 과징금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까지 증액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MBC는 최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도 10점이나

감점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심위는 11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를 구성해 의결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선방위 위원 추천에 대해 발족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보수 편향 인물이 주도하는 학회와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심의 대상인 TV조선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TV조선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본 단체 간부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본 단체가 MBC 등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심의 신청을 하여 이해충돌적 심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보수 인사 중심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 언론은 감싸고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통제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YTN노조가 발행하는 YTN 노보, 2015년 6월 30일 자 YTN 노보에 따르면 류희림은 과거 YTN 사이언스 본부장 재직 시절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 대해 25회나 보도하였고 누나가 주인인 대구의 모 식당을 이 시대의 맛집으로 두 차례 소개하는 등 사내 지위를 이용하여 YTN을 가족 홍보에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류희림의 대학원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선방위 위원 총 9명 중 민주당 추천 1명, 선관위 추천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 친정부, 여당 성향의 보수 인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말로 철면피네요, 철면피.

다음, 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 의혹인데요, 방송위의 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

2023년 9월 4일부터 같은 18일까지 보름간 60여 명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민원 160여 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류희림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민원인 현황, 민원 내용과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 중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절반 이상인 40여 명의 피고발인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절반 이상의 민원 100여 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10여 명이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민원 내용과 글의 구조가 유사하고 오타까지 비슷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댓글하고 비슷한 특징을 보이네요.

민원인 추정 현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과 가족 주변인, 친인척 등 10명이 각각 1건에서 4건의 민원을 넣었고, 류희림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주 엑스포 직원, 미디어연대 임원, KBS 입사 동기 등까지 합치면 민원을 넣은 위원장 이해관계자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6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9월 4일부터 6일까지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넣은 민원은 10건, 신고자는 이 중 7건은 가족 2명이, 3건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되기 전 일한 미디어연대의 대표가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12월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가족 추정 인물이 넣은 MBC·JTBC·KBS에 대한 민원 4건은 심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때는 전화번호로 실명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빼박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던 9월 12일 제32차 방송소위부터 최종 과징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11월 13일 제23차 정기회의까지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반을 하면서 2022년 3월 6일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 MBC 등의 방송사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 신고자는 12월 23일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합니다. 류희림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 즉 류희림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본인, 가족,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등과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9월 14일 피고발인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모 씨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고발인은 신고, 회피 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4일 뒤 민원이 취하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지상파 방송팀 소속 직원이 피고발인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글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를 올렸는데도 이 사건 신고자는, 피고발인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는커녕 사무처 부속 실장을 통해 글 작성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류희림은 12월 26일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뻔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발뺌하기 위해 공적 기관인 방심위 명의를 악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익신고자 색출 의사를 표명하여서 겁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당일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감사실장을 포함해 5인의 특별감사반원 인사 발령, 감사반 구성은 비자발적 인사로 기관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상 민원 열람로그 기록이 남아 사내 감찰로 제보자 색출이 가능해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감사 기간은 2024년 2월 8일까지였습니다. 이에 제보자 측은 국가권익위에 제보자 색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묵묵부답이

었습니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꾸린 방통심의위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희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은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감사반원 5인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신고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였고 방통심의위 지부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12월 27일 류희림이 장악한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에 이송되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오전에 경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류희림 위원장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특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공익신고 색출 감사의 경우도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류희림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1월 11일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에 대해 직무수행능력평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96.8%가 부정 평가, 매우 미흡이 76.2%, 미흡이 20.6%가 나왔군요. 96.8%가 부정 평가를 했다고 발표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방심위 직원들 절대 다수는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류희림은 탄핵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의 만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월 12일 방심위에 여권 측 심의위원 4인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또다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 해당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김유진 위원이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고, 옥시찬 위원의 경우에는 1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가 무산되었을 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서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임 근거로 삼았고요.

옥시찬 위원의 경우에는 김유진 위원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이 소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반발하며 실랑이가 벌어지자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XX, 너도 위원장이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퇴장했다는 일을 문제 삼아서 해촉 건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즉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제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려고 했던 옥시찬·김유진 위원을 해촉해 버린 것입니다.

1월 8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 안건 논의 비공개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5분 만에 정회를 했고 3시 30분경 회의실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의혹 관련 안건의 비공개 진행을 시도하다가 야권 측 위원들의 반발로 10분 만에 정회되었고 두 번째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무산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해서 안건은 이러이러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비밀유지 위반으로 해촉을 해 버리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이 류희림 위원장 본인입니다. 민원 사주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과 불법 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린 장본인이 바로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류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입니다. 살다 살다 참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방통위 설치·운영법상 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해촉할 당시 정치활동 해당 여부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를 경유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촉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와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따른 사전 절차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류희림 위원장 주동하에 군사작전 하듯 해촉건의안을 의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중심으로 여권 측 방심위원들이 어설픈 이유를 들어 옥시찬, 김유진 두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결국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숨은 의도는 현 방심위 구도를 국회의장 추천 몫 2인의 위촉을 최대한 미루면서 예전에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2명의 현 위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여권 측 인사를 채워 놓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계속 위촉을 미루고 있던 국회의장 추천 몫 2명을 위촉하더라도 방심위 구도는 6 대 3으로 여권 측 위원이 과반수를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2일 날 여권 측 심의위원 4인만이 모여서 일사천리로 두 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숨은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1월 1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위원 2인, 옥시찬·김유진 해촉 건의가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 149명이 단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 190명 중 1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 지부가 공개한 신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여부를 인지하고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과징금 의결 과정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심의위원 2인 해촉건의안 재가 및 보궐위원 위촉. 예상대로 1월 17일 윤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1월 22일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문재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2009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자유선진당 추천 몫 위원,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당시 여권 측 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센터장은 2021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즉 여권 측 인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023년 11월 민주당에서 선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연세대학교 최선영 겸임교수는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방심위는 9명 중에 6명을 정부 여당 측 인사로 재편하고 정권은 방심위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해촉 무효소송 및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2월 27일 인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해촉처분 취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배포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안건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한할 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보호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고의적 회의 방해 관련, 김 위원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이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13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8일에 해촉된 정연주 위원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 든 것은 윤 대통령의 해촉건의안 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법원은 방심위는 국가 공무기구가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해촉 처분의 부당함은 기각했지만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심의를 통한 통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1월 8일 날 윤석열 지각 체크 영상을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서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사건이 있었고요.

2월 22일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에 ‘여사’를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으로 붙였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짜깁기형 풍자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한 강력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선방위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1월 30일 방송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출연시켜 편파적 입장을 방송했다며 최고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3월 29일 박지훈 변호사는 하차하였고 후임으로 보수 유튜버이자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던 배승희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4월 4일에 선방위는 고의성이 있다며 MBC 일기예보의 파란색 1에 대해 최고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30건 중에 17건이 MBC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가중형 과징금인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의혹에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보도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 MBC·YTN·CBS 노조위원장 등은 선방위원 5인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손형기, 이미나, 최철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후의 몸부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과 사유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불법적 연임과 정권 보

호를 위한 칼부림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의 조속한 시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당 언론개혁TF가 주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에서 방송 4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이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의장님, 피곤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괜찮아요.

(「앞으로 필리버스터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계원 의원 인간이라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호영 부의장님이 사회권을 거부함으로 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거의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의장 우원식 괜찮습니다. 할 만합니다.

○조계원 의원 주호영 부의장님은 속히 사회권 거부를 철회하고 사회를 봐 주시는 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 아주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알찬데 너무 많아서 발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법안 추진의 필요성, 심영섭 전 방심위 위원,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1.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정책은 정쟁의 시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시간은 구체적인 현안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 전략을 찾아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행위로 정치의 시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쟁의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맞춰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약탈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약탈적 언론 정책을 보면 정책 상실과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보다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인적 청산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만 지난 2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화하여 방송을 권력의 도구,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결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적 기구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불법성이나 유해성 여부를 숙고를 통해 결정해야 될 합의제 기구를 정권 수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사후적 검열 기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방송사……

보면 적도 동지도 없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두 다 악마화하고 있지요. 모두 악마화하고 모든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 동 결정 중에도 일부는 방송사의 행정제재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으로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강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면수심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저널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구들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디어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팩트 체크 기관을 악마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예산 분담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팩트 체크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팩트 체크 예산은 여당 성향 단체에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와 KBS 사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 영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YTN의 공적 지분 민영화를 통해서 보도전문채널을 정권 우호적 민영 매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아무런 방향도 없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해 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미디어 진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발전 계획 발표와 정부부처의 후속 정책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제도의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크로스미디어렙 허용과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십과 같은 규제 완화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영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 책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ISDI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통부, 방통위 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공영방송제도 개혁, 공적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주무부처의 지속 검토 정도로 의미를 격하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혁신의 정체와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 지지로 대선과 지선을 연속 승리한 현 정부의 아집과 무도한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연속하여 질타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제22대 총선 참패의 교훈을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여전히 무시하고 방송을 정권의 도구화하기 위한 무도한 행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인데 레임덕도 아닌 데드덕을 향해서 질풍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한번 적시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성비를 맞추기 위한 규정에서 홀수로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교섭단체 가운데 1인을 추천할 때는 성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의 적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직능단체 6인의 경우에도 성비를 적용하는 규정의 부가가 필요하다. 셋째, 사장 추천 과정에서 특별다수제를 통해 2회에 걸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장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최고득표자 2인 중 1인을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ZDF는 재적 평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3차시에 걸친 투표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하고 있으며, 독일 SR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1차시 3회, 2차시 3회에 걸쳐 총 6차례의 투표에서도 사장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시 4회 투표에서 다수결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판결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2인 방통위원에 의한 인사와 관련한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회의) 제2항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4인·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개정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작위에 의한 합의제 기구의 독임제식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입법이지만 방통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범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분석한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분석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습니다. 감독과 규제를 맡았던 BBC 트러스트와 운영을 맡았던 BBC 집행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가 BBC 이사

회로 통합된 것입니다.

BBC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지역 대표, 전문성을 가진 각계 인사 5명 그리고 BBC 집행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들어갑니다. 집행위원 이사들은 모두 BBC의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직원들입니다. 즉 이사회에 BBC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 기능이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콤으로 이관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방송 진행자의 심각한 성범죄를 은폐한 의혹과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은 외부 규제 필요성의 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BBC의 상징이었던 독립적·자율적인 내부 규제가 정부의 규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영국 왕실의 칙허장입니다. 이 칙허장은 BBC의 공적 목표, 재원, 조직, 규제 시스템까지 BBC의 기본을 모두 담고 있어 BBC의 헌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약 10년마다 갱신되는 이 칙허장의 결정 과정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9만 개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고 영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수행이 됐습니다. 수많은 자문위원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방송 산업의 모습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시청자에게 복무하는 적합한 모델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재정립의 기저에는 국민과 종사자들의 뜻을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종사자 대표들의 이사회 참여입니다. 앞서 봤듯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독일의 ZDF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이사로 구성합니다. 프랑스의 텔레비지옹 이사회는 직원 대표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임명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리 원전은 국민들의 토론을 거쳐서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이사회인 ZDF 방송평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수입니다. 원래 77명의 이사였고 줄어든 현재도 60명입니다. 독일 역사의 분권성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살려 정당, 주정부, 각종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위원을 맡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각종 단체에서 정치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료와 정치인이 전체 이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이에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ZDF 방송평의회 이사진에 정치인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재 ZDF 방송평의회 위원의 숫자는 60명으로 줄었고 정치인의 수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각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게 핵심 특징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지배구조는 행정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이사회 격인 행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의회,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추천 위원은 물론 프랑스 텔레비지옹 직원 대표 2명이 참여합니다. 정부 추천 위원에는 문화부 미디어 및 문화산업위원회 의장과 국립영상원 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문화 관련 상임위 의장을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시청각최고회의는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각계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 및 영상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다음, 호주의 공영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의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호주 정부가 프로그램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그리고 회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윤리강령은 수시로 수정 보완해 규제기구인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 유지는 기본적으로 다각적인 법적 보호 및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BC의 근간은 ABC법으로 이에 포함돼 있는 ABC헌장은 ABC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수행, 책임에 관한 법은 호주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 ABC 이사회와 경영진은 재정보고서, 회계장부 보관 및 유지, 연차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제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생활법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사용·보호하는 방법, 정확성 유지 그리고 일반인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익공개법은 불법행위, 권력남용, 부실 행정, 부패 등으로 의심되는 사건·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 내부고발자는 동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ABC 내에도 내부고발자를 위한 특별 부서가 있습니다.

AB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고 이사회의 임무는 호주인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ABC의 독립과 통합을 유지하며, 뉴스 및 시사 프

로그램 보도 시 고도의 저널리즘과 함께 정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ABC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장, 이사장, ABC 내부 선출 이사 그리고 이사 4~6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과 ABC 내부 선출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임원은 정부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고 ABC 내부 선출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의 최장 임기는 10년입니다. 이사회 임원 추천 시 총리 수상실 산하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한 선발기준으로 엄중한 선별작업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ABC법이 정하는 이사회 임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커뮤니케이션 혹은 경영에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 재정경영 혹은 문화산업, 문화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이사를 임명하기 전에 호주 총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독이 임명할 이사 가운데 총리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총리는 의회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선임과 각 정당이나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KBS 이사회 임원 선출 과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들이 ABC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사회 임원으로 빈번하게 임명되는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이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 ABC 이사회 임원들의 배경을 보면 미디어 경영, 금융·재정회사, 기업체 운영, 국립도서관장, 박물관장, 문화행사 전문가, 여성 상공인 회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모두가 ABC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업무는 임원의 부재나 결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BC 내부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이사회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도가 80%가 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ABC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편파적인 보도를 용인할 수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할 때부터 ABC 예산도 삭감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승강이를 벌여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좀 더 비판적인 A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액수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ABC의 공익을 위한 노력은 편집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도 잘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편집과 관련된 이슈는 편집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회에서 다룹니다. 편집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 담당, 법률 담당, 시청자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됩니다. 편집장은 ABC에 대한 불평·불만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며 편집 관련 이슈에 대해 제때 사장에게 조언하며 편집 기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렇듯 ABC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편집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나 사건을 다룰 때 편집책임자는 외부 인사로 규정된 외부 편집위원회의 의견 또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때에는 이에 대한 정정 및 사과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즉시 공지합니다.

ABC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보다도 호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뉴스폴 조사에 따르면 ABC에 대한 신뢰도는 80% 이상이며 호주인 대부분은 ABC를 공정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방송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ABC가 공사화됐을 당시부터 보여 준 호주인들의 ABC에 대한 신뢰는 지금까지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6시간에 걸쳐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그리고 방송 4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들 나라와 같이 방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부럽기도 하였고 많은 과제와 고민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은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 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자 흑사병에 잘 버티던 유태인을, 질병의 원인이 유태인 아닌가 하는 악의적 의심이 퍼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폭동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향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인해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치 떨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공영방송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방송 4법 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권도 국민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적 공기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정론직필로 언론장악 기도를 막아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괴벨스를 만드는 방송 악법들을 함께 막아서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자유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조계원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유용원)

(12시35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유용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및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입니다.

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신문사에서만 34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오랫동안 출연했지만 방송 전문가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장악 4법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자로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34년간 기자 생활 중 31년을 국방부만 담당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7개 정권에 걸쳐 20명의 국방장관을 겪었습니다. 출입처와 담당 분야가 자주 바뀌는 한국 언론환경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어서 주위에서 '리얼리?'라며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반응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초년병 기자 시절에는 1992년 12월 당시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하나회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하나회 명단 특종을 했고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하나회 숙정에도 영향을 끼쳤음이 지난 3월 방송된 모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신문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 재직 중 총 46회의 사내 특종으로 최다 사내 특종상을 받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제 자랑질 같은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나름 30년 넘게 정통 언론인으로 살아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근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 상정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며 공정 언론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태로 보이기에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젯밤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기무사 계엄령 관련,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인데요. 당시에도 저는 출입기자로 사건의 전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이 군을 동원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를 벌일 계획을 세웠고 수행 준비를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데타, 내란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력과 장비 이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시절 수사 당국에서 장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먼지를 탈탈 털듯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 서류상에 거론된 부대의 병력이나 장비 동원 등 동원 준비와 관련된 지시가 내려진 정황은 전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전 정부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현 정부 들어 귀국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데타라든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실과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대 국회가 힘들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이 다시금 입법 폭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 구성은 물론 입법까지 모두 여당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또다시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과 개정권을 제한하고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 횡포와 독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정신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은 패싱한 채 단독 선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장악 4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사장의 임기 보장, 공포 즉시 시행 등을 추가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규정했습니다.

이후 사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회계 부정, 고의, 중과실로 공사나 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장의 해임을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악법, 방송장악 3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됩니다.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과 학회에 상당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됩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유지요.

다음으로 이사회의 방송사 견제 및 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견제와 감시의 실질적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이 초래됩니다.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돼 임명권의 제약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해 사추위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이 우려됩니다.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위임해 이사회가 사추위를 자의적·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의 해임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책임성 확보를 저해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 임명 전후에 발생한 개인 비리나 법령 위반 등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 문제, 방송사의 명예 손상, 방만 경영 등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다양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며 대통령 임명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인 ‘공포 즉시 시행’을 넣은 것은 오는 8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휘둘러 7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사진을 민주당 사람으로 채우려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BC는 오랜 기간 좌편향 편파·왜곡 보도 전문 매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많은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MBC 장악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MBC 언론노조의 편파·왜곡보도를 질리도록 봐 왔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과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확대 보도하고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가 여당 국회의원을 불러 놓고 말싸움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패널마냥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용과 맞지 않는 자막을 달아 가짜뉴스를 송출하는 등 수많은 편파·왜곡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MBC의 노골적인 좌편향 왜곡 보도의 몇 가지 사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펜앤드마이크에서 작년 3월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달의 가짜뉴스 1위는 MBC의 홍콩 어민 자막조작·YTN의 이동관 사진 방송사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7월, 8월에 가짜뉴스를 상당히 여러 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M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바른언론시민행동,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그리고 신전대협은 28일 이달의 가짜뉴스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언련·바른언론·전교모·신전대협 등은 이달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로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가 홍콩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 인터뷰 발언 자막에 '후쿠시마' '일본' 등의 단어를 임의로 넣은 사실과 이달 10일 YTN이 분당 총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낸 방송사고를 꼽았다.

네 단체는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의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인 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자막으로 내보낸 가짜뉴스를 연상시킨다며 이번 사례 또한 MBC가 뉴스 자막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몇 개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홍콩 어민 라이의 발언 자막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저기 다 퍼질 텐데, 그리고 하루이틀 만에 퍼지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거라서'. '일본 수산물은 납품을 안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산시장 상인 알룽의 발언 자막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월 26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당시 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홍콩 현지인의 반응을 전한다면서 라이의 부정적인 발언을 자막으로 전했지만 인터넷 매체 더 퍼블릭과 공언련이 해당 방송을 현지인들에 각각 통역을 의뢰한 결과는 MBC 자막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염수 관련 언급이 없었고 알룽도 인터뷰에서 일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이를 자막 처리했다고 합니다. 통역을 의뢰받은 현지인들은 라이 등의 심한 사투리로 난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사항인데요, 제목은 '신장식,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로 사임?'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신장식 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중 골프 논란을 반박한 것을 두고 '2006년 3·1절에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2주 뒤에 사임했어요. 3·1절에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것 때문에 사임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 총리가 비난받은 이유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를 쳤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동반자들이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 연루 등으로 부적절했고 물류 수송 대란이 예상되던 철도파업 첫날이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7월 20일 자 보도도 있는데요, '과학자·전문가들은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토론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모 대학 명예교수를 섭외했지만 본인이 갑자기 참석을 번복했다. 그분을 제외하면 과학자 가운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이 5~7월 KBS·MBC·YTN의 오염수 관련 대담·토론 방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한 전문가는 2명이고 이 중 과학자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했고—이분은 자기한테 1조 원 주면 3~6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시는 분이지요—그 외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도 정상 처리·배출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에 손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아르준 마키자니의 발언을 태평양도서국포럼 18개국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꼭지 ‘태도국이 한국 걱정, IAEA는 일본에 물어라’에서 마키자니 발언을 다섯 차례 인용하고 IAEA 관계자는 두 차례, 다른 회원국이나 포럼 사무총장, 18개국에서 이에 동의한 회원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에서도 마키자니 발언을 여섯 차례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두 차례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도서국포럼 관계자는 마키자니가 유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KBS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중국과 북한 등 공산화 국가를 연상케 하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진미위라고 하는데요, 진미위 하니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그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릴 텐데 저도 이번에 이 보고서—1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를 보면서 제가 3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언론인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진미위라 불리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른바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장 질서 문란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KBS 숙청기구 진미위는 1년간의 활동으로 KBS 직원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당시 진미위 활동의 최전선에 있던 정필모 KBS 부사장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고 김의철 당시 진미위 위원은 KBS 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미위 만행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의 분노와 슬픔을 모아 지난해 제작한 KBS노동조합 ‘진미위 흑서’ 내용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내용을 들어 보시면 다 같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KBS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례는 시사제작국장을 지내셨던 강석훈 기자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기고한 제목의 글은 ‘진실과미래위원회에 저항한 자들의 몸부림’ 제하의 ‘21세기판 완장, 진미위’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8년 만의 첫 충격.

2018년 6월 17일은 KBS에 입사한 이후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던 날로 기억된다. 1991년에 입사했으니 2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어이없는 충격이기도 하다. 휴대전화에 찍힌 구내 전화번호 02-781-8476에서 전해져 온 기계음과도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 때문이었다.

목소리의 장본인은 자기를 진실과미래위원회 소속 조사역 K 모라고 하면서 대뜸 기자

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 성명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미위 조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 법이나 사규 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느냐? 무턱대고 조사할 게 있다며 오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 규정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무슨 그런 회사 규정이 있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쨌든 사규에 따른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차고 황당했다. 어떻게 자율적 임의 단체인 기자협회 내부 문제를 사측 기구가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적 조사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가. 이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다음과 같이 문자로 협박을 해 왔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석조사 2차 통보.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연구동 3동 305호 진실과미래추진단 조사실'.

물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에 회사가 개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해서도 절대 아니되며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신이 있었기에 징계를 앞세워 협박한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행각에 부역하거나 방조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사에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행위가 자행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지고 있었다.

며칠 뒤인 7월 1일 이번에는 진미위 이름으로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내 왔다. 7월 4일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공문을 가져온 간부에게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다.

그다음에 답정너식, 짜맞추기식 표적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진미위는 황당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표적 조사와 표적 징계를 위한 진미위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답변이 뻔하게 정해져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삼척동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설문에 들어 있었다.

'문13. 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보직·근평·연수 등 강력한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이 비공식 모임 결성을 주도하며 평직원들에게까지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고 참여자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 반목을 초래해 직장 내 편 가르기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보도국 내 여러 인사 행위가 정상화 모임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이익이, 비참여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해야 할 직장의 질서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사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모임이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동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기획하고 주도한 일부 간부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있고 귀하에게도 직장 내 건전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사의

간부로서 이러한 모임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기정추'라는 명의로 낸 성명은 기자협회의 정치편향적이고 특정 진영에 경도된 뉴스 모니터 내용에 대해 협회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기자협회의 운영을 촉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성명을 낸 동기나 이유, 내용은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오로지 파업 반대 세력을 징계해 자신들의 경영권 장악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기에 위의 설문처럼 위에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갖추는 식이었다. 여기다가 설문조사 대상자도 대부분 파업 참가자들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불문가지였다. 이렇게 나온 진미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 회부서, 소명서, 1차와 재심 징계 결과 등을 기록을 위해 날짜 순서대로 밝혀 두고자 한다.

그래서 쭉 이 날짜 순서대로 일기처럼 기록을 해 놨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만적 폭력의 경과, 표적 징계.

2018년 8월 31일, 뜬금없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통보가 왔다. 진미위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사를 거부한 진미위 외에는 징계와 관련해 감사실 등의 어떤 조사도 없었다. 무슨 근거로 징계위에 회부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2018년 9월 6일, 징계위 회부 통보에 대해 징계위 출석 자체가 불법적 행위와 절차에 협조하는 모양새로 느껴져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징계 추진에 대한 진술서만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진미위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징계위에 회부한 행위도 의아스러웠지만 진미위의 조사 결과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 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표적 조사에 따른 짜맞추기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위반이나 질서문란 등도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구체적 사실행위의 적시 없이 진미위 측과 진미위 측 조사에 협조적인 사람들의 주관적 진술과 감정, 느낌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격이어서 도무지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2019년 5월 27일, 이번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수정돼 통보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미위 규정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 진미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 사유만 삭제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했다. 여기에 대한 진술은 이미 2018년 9월 6일에 보낸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입장이 없기에 그때 보낸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2019년 7월, 10월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경우 7월 15일 자 메모를 보면, 표적 조사에 의해 어차피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표적 징계 절차를 모를 리 없었기에 재심 청구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징계 수위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주변 동료들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진술서를 보냈다. 이렇게 죽 돼 있고요.

그다음 챕터는 KBS사의 귀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50년 가까운 역사에는 적지 않은 오욕이

점철돼 오면서 성장통의 역할을 했지만 이른바 진미위라는 기구만큼은 분명코 태어나서는 안 될 암적 조직이었다.

진미위는 그 설치 주동자들로부터가 지극히 특정 정치진영에 경도된 편향적 구성원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미위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리를 지어 정치성 파업의 성격이 짙은 행위를 주도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주관적·감정적 잣대로 매도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협박에 가까운 성명서로 파업 참가를 압박했던 장본인들이다.

이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를 조사한다는 진미위 취지와는 달리 애초부터 진미위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하다. 허위의 탈을 쓴 진미위의 이중적 실체는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정에서부터 드러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조사권은 물론이요 심지어 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진미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조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기자협회 내부의 쟁점을 꼬투리 삼아 진미위가 무람없이 조사하겠다고 나선 행각 자체가 그 첫째다.

조사 대상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의 편향된 뉴스 모니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당시 간부직을 맡고 있던 기자협회의 회원들을 타깃으로 표적 조사를 자행한 것이 다음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불법적 협박을 전화와 문자, 공문으로 실제 실행한 행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적지 않은 기자들은 진미위 협박에 신변이나 업무상 불이익을 걱정하며 조사에 응했다고 실토했고 특정 보직을 제안한 뒤 진미위 조사에 응하도록 은근히 채근한 사례를 얘기하는 기자도 있었다.

예상한 대로 미리 정해 놓은 표적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짜맞추기 조사를 토대로 해 표적 징계를 자행했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는 편성규약이나 인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실 날조와 왜곡, 예단, 일부 구성원들의 주관적 진술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 사유가 될 구체적 사규 위반 행위가 육하원칙으로 제시됐어야 함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진미위 주동자들이, 배후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징계 사유를 얼기설기 갖다 붙였다고 해도 맞을 듯 싶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사내 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편성규약 위반자로 되어 있었고 인사권이 없고 인사권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부당한 인사를 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취재·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회사 공식 직제상의 취재·제작 부서인데도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마치 취재·제작의 주체인 것처럼 둔갑해 있었고 기자협회 모니터를 비판한 성명이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돌변해 있었다. 어떻게 협회가 취재·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나 외부 세력의 주장이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협회의 모니터는 취재·제작 부서나 그에 소속된 기자들은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편향된 모니터가 오히려 취재·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들이 웃을 진미위의 저급한 엉터리 완장질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상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한자리와 한 밥그릇을 차지

하려다 보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야 할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정치적 격변기를 이용해 불 맞은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진미위의 존재와 행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백화제방의 여론을 존중하고 통합해야 할 언론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야만적 폭거이자 폭력이요 무자비한 전제주의적 광기의 산물이었다. 진미위는 국가나 사회의 상식과 원칙, 규정을 제멋대로 유린해 버린 요괴이자 괴물이기도 했다. 진미위를 필두로 한 요괴와 괴물 앞에서 국민의 방송 KBS의 생명력과 활기는 염장된 배추처럼 공포에 절여져 버렸다. 총기와 생기, 의기로 반짝거리던 구성원들의 눈빛은 광기와 살기, 분기로 이글거렸다. 마귀들의 주술 같은 악다구니 앞에 비바람을 맞으며 어렵사리 쌓아 왔던 KBS의 저력과 전통, 미풍양속과 동료애는 폭풍 속의 먼지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저주와 증오, 경계와 외면이라는 패거리 문화의 상흔만이 휑뎅그렁한 광장에 고사목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최악의 시절이었다. 반면 진미위의 주동자들과 일부 하수인들에게는 최고의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불법 기구 진미위 망동 대해부, 양심과 자유를 짓밟다는 내용의 챕터입니다.

KBS 진미위는 2018년 6월 5일 출범 직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공사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며 그 목적을 명시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진실과미래추진단을 설치하고 2016년 당시 성명서에 참여한 기자들 등에 대한 조사를 실행했다. 진미위가 징계 무효 소송 등의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100명에 이른다.

첫째, 진미위 조사의 불법성, 위법한 증거로 징계 강행.

진미위의 출범 이후 조사받은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진미위 조사는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여름까지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필자에게도 강 모라는 진미위 소속 직원이 전화 문자로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미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 이 같은 협박은 아래에 적시한 당시 진미위 규정 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조항이다. 진미위를 주도한 현재의 경영권 장악 세력도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진술·자료 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한 자, 3.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법원에서 상기 조항을 불법으로 결정한 시점은 2018년 9월 17일이다. 진미위의 성명서 참여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보다 앞선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쯤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진미위 조사는 불법적 규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징계 회부의 근거가 된 이 같은 조사 내용은 당연히 불법적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도 진미위 측은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법적 증거를 토대로 표적으로 정한 특정 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감행했다.

진미위에 불려 가 조사받은 일부 기자들은 조사 당시 진미위 담당자로부터 진미위 규정 13조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상당수가 향후 회사 생활과 관련해 신변적 불안이나 불이익이 미칠 우려 때문에 조사실에 나가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불법적 조항을 들이대는 압박감에 못 이겨 반강제적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모 기자의 증언이다.

‘휴가 중이던 2018년 6월 25일 오전 진실과미래위원회 추진단의 강 모 조사역이 휴대전화로 KBS기자협회 정상화 모임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는 의무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진미위에서 모임 참여 서명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자 강 모 조사역은 구체적인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출석 거부 시 징계도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사역은 출석 시일을 정하자고 재촉했고 사법기관도 감사기구도 아닌 진미위의 KBS 동료 직원들이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싶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빌미로 정직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로 보복할 수 있겠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일단 휴가가 끝난 뒤인 7월 2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당당히 출석해 KBS의 공식 조직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의 의견 제시는 절대 진미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따져야겠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중에 출석해야 하고 개인의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휴대전화를 통한 구두 통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6월 28일 강 모 조사역에게 KBS 직원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장에게 출석 관련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 조사역은 공문 시행 요청에 대한 답변 대신 아래와 같이 직원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이상은 김 모 기자의 증언 내용이고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진미위는 또 특파원 등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서면조사서 안내글 중에도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정된 조항이 아래와 같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

이건 성명서 참여 기자에게 보낸 조사 안내문인데요 이런 식의 Q&A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Q, 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A, 모든 공사 직원은 아래의 관련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KBS 진미위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Q, 회신이나 답변을 안 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회신을 안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답변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제재 감면)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사건의 진실규명에 충실히 협조할 경우 인사조치 등에 있어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 진술, 자료 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한 자, 3.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질문, 혹자가 말했듯이 보복이나 징계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요? 답변, 우리 추진단은 아무것도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관련된 분 누구에게나 드리는 공통된 질문이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귀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오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귀하의 생각을 적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Q&A 예시입니다.

진미위의 거의 모든 조사 과정이 불법 조항 아래 위법적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하는 명징한 물증이다.

두 번째, 독수독과, 불법에 오염된 징계 사유입니다.

굳이 독수독과 이론을 제론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상기 안내문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시 진미위 조사 내용이 모조리 불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산 증거이다. 그러므로 징계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진미위 조사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용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아니 된다. 곰팡이에 썩은 식자재처럼 불법에 오염된 부정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증거 사용 사실과 관련해 진미위 출신이 장악한 사용자 측은 징계 무효를 다투는 노동위 답변서에서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답변 내용입니다.

한편 신청인은 진미위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설령 진미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적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징계 사유, 징계 양정 등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위법적 조항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절차적 적법성 문제인가? 수사기관이 불법 수단인 고문이나 협박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 놓고 절차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피조사자들을 협박하고 강압하는 행위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문제이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사행위와 내용 자체는 근본적으로 부정돼야 하는 불법적 실체이다. 따라서 협박과 강압적 행위를 해 놓고 이를 절차적 문제로 우기는 사고와 논리는 언어도단 그 자체이다. 이런 불법행위까지 자행하여 만든 징계 사유도 물론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불성설로 점철돼 있다.

그리고 일부 생략하고 4번, 네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법 사례, KBS판 플리바게닝입니다.

진미위는 또 서면조사서 안내문에서 조사에 협조하면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줄여 주겠다는 규정도 아래와 같이 포함해 놓았다.

제12조(제재 감면)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사건의 진실규

명에 충실히 협조할 경우 인사조치 등에 있어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의 지각이 대변동을 일으킨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진미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며 조사에 협조하면 살려 주거나 솜방망이로 살살 때리겠다는 치졸한 회유책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강박이다. 진미위 발족 당시의 기세등등한 위세를 이용해 자신들이 선정한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강압적·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미위의 불법성과 자기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적 측면부터 보자. 위 규정은 조사에 협조하면 불이익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래의 제안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를 증언하는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 즉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검토된 적은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거나 법적 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반대 여론이 우세해 유보되어 현재까지 원칙적 위법으로 간주가 된다.

아무리 조급해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가기간방송인 KBS 조직의 사규가 이런 위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법하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코미디 같은 명분이 어디 있는가. 더 나아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세력들도 꿋꿋하게 상대해야 할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얄팍한 꼼수를 사용하여 구슬리고 회유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하며 치졸한 짓거리인가.

다음은 좀 건너뛰고요.

일곱 번째 내용은 KBS의 2018년은—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아시지요?—'1984'와 마찬가지였다. 진미위는 소설 속의 진실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내용입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 내야 할 국가기간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기자들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지경의 소름 돋는 폭압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진실로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당시 사내 일각에 이러한 자조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올린다.

KBS의 2018년이 '1984'가 되고 진미위는 어쩌다가 소설 속의 진실부가 되었는지. 성명서 참여자들은 빅 브라더를 사랑하면 살아남고 반대하면 형제단으로 몰리는 건 아닌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독재자 빅 브라더가 텔레스크린과 충성스러운 당원 감시 조직을 이용해 모든 시민의 사생활과 사상까지 통제하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소설 속 진실부는 빅 브라더를 위해 모든 자료와 통계 심지어는 과거사까지 조작하는 부서의 반어법적 명칭이며 빅 브라더에 반대하는 형제단 단원으로 적발되면 세뇌 후 모두 처형당한다.

다음, 이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위 불법 판결과 진미위 세력의 여죄라는 항목인데요.

2022년 10월 14일 대법원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형태로 기소된 전 사장 양승동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양승동은 진미위 세력의 수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되었다.

1심과 2심, 최종심을 거치는 동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은 진미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적시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진미위가 주장하는 겉치레 명분보다는 실질적 행위와 본질적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법원의 지적대로 진미위는 상기한 대로 얼토당토아니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전에 표적으로 좌표를 찍은 특정 간부 출신들을 탄압하고 징계까지 자행했다. 엉터리 여론조사로 징계를 합리화하는 요사스러운 기법까지 동원했다.

진미위 구성 자체가 불법화되었으므로 진미위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행각도 당연히 불법이다. 진미위의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진미위의 조사를 토대로 진미위가 징계 의뢰한 행위도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진미위 세력은 징계 무효를 다투는 법정에서 여전히 징계 행위가 진미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말인가.

법적으로 진미위가 불법 기구로 확정되면서 진미위를 만들고 진미위에서 활동한 장본인들을 비롯해 진미위 활동을 공식 지원한 인물과 기구 등 이른바 진미위 세력은 불법 행위를 수행한 자들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미위는 태동과 존재 자체부터가 불법이었을 뿐 아니라 규정의 위법적 흠결과 조사 과정의 불법성 등으로 거의 모든 조사 내용과 징계 근거도 불법적이다. 일부의 주관적이고 감정적 진술을 근거로 만든 사실관계도 왜곡·날조된 것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진미위가 자행한 모든 불법적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진미위 세력의 주동자들에게는 일련의 불법적·위법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응당 모든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장한식 전 KBS 보도국 편집주간의 '진미위에 쫓긴 5년, 진미위와 싸운 5년'이라는 제목의 기고입니다.

2018년 4월 양승동을 사장으로 언론노조 KBS본부 출신이 KBS의 사내 권력을 장악한 직후부터 과거 사장 시절의 간부들을 손볼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를 휘감았다.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였다. 흉흉한 괴담이 구체화된 것은 2018년 6월이었다. 2018년 6월 5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실과 미래, 좋은 문구의 조합이었지만 최악의 보복 기구로 작동할 것이며 과거 사장 시절 국장급 간부를 지낸 나 역시 또한 무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늘 피해 가지 않는 법이다. 2018년 여름에 시작한 진미위와 나의 악연은 2022년이 저물어 가는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지난 5년은 진미위에 쫓긴 세월이자 진미위와 싸운 시간이다. 돌이켜 보면 KBS 기자로서 나의 삶은 진미위라는 괴물을 접하면서 180도로 달라졌다.

2018년 진미위가 만들어지고 그 이빨을 들이댄 지 5년이 흘렀지만 2022년 11월 현재까지도 그 독성은 청산되지 않았다. 진미위를 만들고 동료 직원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했던 자들이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 나와 동료들이 진미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날은 언제쯤일까?

이 글은 진미위가 출현한 이후 내가 겪은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일지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오전 10시 55분.

강 머시기라는 직원이 전화해서—전화 781-8467요—기자협회 정상화와 관련해 조사할 게 있으니 진실과미래위로 출석해 달라고 말하였음.

‘나는 친목단체이고 임의단체인 기자협회와 관련한 성명에 내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진미위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받을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유인지 공문을 보내라. 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을 비우고 조사를 받을 경우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모 씨는 ‘귀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진미위 결정이기 때문에 통보한다. 만약 전화 요청을 거부한다면 2차로 문자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하였음.

전화를 받고 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기분이 나빴음. 회사가 직원을 돕기는커녕 괴롭히는 것이 옳으냐는 생각을 하였음.

그다음에 그날, 아까 10시 55분이었고요. 직후인 11시 10분에 문자가 날아왔다면서, 출석조사 2차 통보문자.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연구동 3동 300호 진실과미래추진단 조사실’

문자에 답신할 이유가 없어 응답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7월 2일 오전 10시 20분.

강 모 팀장이 말하길 진미위에서 두 번째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은 장한식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을 팀장에게 보낸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 나에게 보내야 된다.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른바 진미위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어야 한다.

이런 반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해 7월 13일 오후 2시 20분에 또 출석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는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귀하께서는 2016년 사드 보도지침 관련 논란 사건에 관련한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1일 17시.

어제 장모님 첫 제사를 치르고 상경하는 길에 천안휴게소에서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기협 정상화 관련 성명에 이어 또다시 조사받을 이유도 없는 사드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불쾌하고 화가 났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전혀 조사받을 이유가 없는 기협 정상화 성명과 조금 다른 업무에 관한 논쟁이므로 서면조사 또는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생각이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것을 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국방부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등을 상대로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드 반대 집회에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반미 단체라든지 그런, 즉 좌파 단체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서 장한식 기자께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요.

2018년 7월 17일 오후 KBS 구내 우체국에 들러 출석조사를 왜 받지 못하는지 나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두 쪽짜리 내용증명을 KBS 진실과미래위 추진단 앞으로 보냈음.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냈음. 나의 입장문을 받고 진미위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해 봄.

그 이튿날인 7월 18일 오후 5시 15분에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진미위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귀하께서는 2016년 사드 보도지침 논란 건과 관련해 앞선 출석조사 요청에 불응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분이 극히 나빠졌다.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인사위 출석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로 넘어가서 2019년 4월 15일에 진미위 산하 진실과미래추진 이름으로 메일이 왔는데 기존의 자신들 주장을 반복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일방적인 조사 내용이어 가지고 장 기자님이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엉터리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음. 진미위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조사 결과가 그대로 공포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작은 사명감과 분노를 느끼고 반박문 작성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와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의 혐의에 대한 진미위 조사는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과 사드 보도 관련한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두 가지였다.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는 아래와 같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 나는 근거 없는 조사 결과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진미위는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해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사 신청자, 조사 대상자는 동 운영규정 16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19년 4월 29일 12시까지 첨부된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실과미래추진단 코비스 메일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조사개요를 보면 조사대상 장한식, 조사명은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사항, 조사 결과는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과 조사불응.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에 따라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결성 권한을 남용한 참여자

모집, 실명이 게재된 성명서 게시 등을 주도함으로써 직원 간 줄 세우기, 편 가르기 등 직장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주요 보직인사 승진, 특파원 배치, 앵커 선발 등에 있어 정상화 모임 참여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초래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음. 그리고 부장이나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정상화 모임 관련해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불응 행위를 통해 취업규칙 제4조(성실), 제5조(품위유지)를 위배했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 1호·제2호. 제1호는 제 규정 위반, 제2호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드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무리한 조사를 한 건데 조사 결과는 이렇게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직원은 누구나 취업규칙 제4조(성실)에 따라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 사람은 보도국 편집·방송 책임자인 방송주간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7월 17일 연합뉴스가 사드배치 저지 공동투쟁위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폭력 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기사를 쓰자 네트워크부를 통해 대구 보도국에 취재를 지시했고 대구총국에서 취재 결과 외부세력 개입 여부가 확인된 바 없어 리포트 불가 입장을 네트워크부에 전달했음에도 SBS 8시 뉴스에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인터뷰가 나갔다면서 관련 리포트 제작을 재차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음. 이는 편성규약 제5조에 따라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두 번째 조사불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미위에서 조사 진술 기회 부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내용증명 형식으로 진미위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반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정 국장의 경우도 결국 지루한 소송전을 하게 되셨다는데요. 그 내용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미위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나를 비롯한 징계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3일 KBS 공영노조의 성창경 위원장, 박혜령 부위원장 2인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진미위 운영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양승동 사장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 고발과 형사처벌 확정, 진미위 본안소송,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싸움, 징계무효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영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은 사필귀정의 사례였다. 나 또한 당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와 접촉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법 논리를 설명하였던바 법이 규정한 대로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 진미위 출범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한 근로감독관과 담당 검사의 노고를 KBS인들은 기억해야 하겠다.

진미위 관련한 가처분소송은 2승 2패로 팽팽하였다면 징계 관련은 노동위원회 신청에서 나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구제신청 도과 판정을 받아 구제에 실패했다. 나의

경우 1심과 2심, 재심 징계 수위가 정직 1개월로 동일한데 이런 경우에는 1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에 맞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 도과라는 논리였다.

통상 재심의 징계 수위는 1심보다 경감되는 특징이 있는데 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고 또 1심 이후 재심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던 만큼 3개월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항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KBS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 기간 도과로 판정하였다. 본부 노조 출신 사측이 주도한 이런 처분의 결과는 앞으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KBS 직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징계무효소송은 2020년 12월에 시작해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11월 현재 항소심 및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얻기까지 족히 1년 안팎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힘든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끝내 승소판결을 얻어 낼 각오다. 1심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 소송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사실 진미위 징계절차의 불법성과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사실 진미위 징계의, 과거 사장 시절의 보도국장과 주간 등 보도국 핵심 간부 출신들만 골라 징계하였다. 블랙리스트 경영의 절정인 셈이다. 피징계자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KBS 기자협회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과 부당한 취재·보도 관여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표적 징계, 보복 징계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불법 기구인 진미위에서 조사불응 시 처벌이라는 위력적인 조항으로 직원들을 압박해 획득한 조사 결과로 징계한 만큼 부당징계임은 더할 나위 없다. 징계무효소송이라는 민사적 대응을 넘어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형사책임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비록 성긴 듯해도 놓치는 법은 없다.

양승동에 이어 김의철도 결국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진미위 불법행위와 부당징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정법을 어겨 가며 같은 직장 동료들을 짓밟은 진미위와 그 핵심들이 저지른 행위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시정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 분 사례 더 소개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 사례인데요.

2018년 고대영 사장 퇴임 파업이 거세게 진행되던 때였다. 기업에 다니던 한 인사가 파업 주도 세력 중 한 명이던 KBS 기자의 말이라며 나에게 충격적인 귀띔을 해 주었다. '나중에 형은 반드시 해임될 거라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기자협회 성명서 관련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자들끼리 기자협회 내에서 성명전을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돌이켜 보니 이미 그때부터 진미위는 기획되고 있었던 것 같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KBS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어김없이 그때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내부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KBS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기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를 비롯한 기자 160여 명이 KBS 기자협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 보도 분위기 훼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민노총·언론노조 이중대 역할을 하며 정치 편향 활동을 함으로써 KBS 전체 기자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KBS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불행하게도 결국 이 세력들은 정권교체기 파업투쟁 등을 통해 KBS 공영방송, KBS 장악하기에 성공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을 만들었다.

이들이 KBS를 장악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반대했던 눈엣가시 같은 직원들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것이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소위 인민위원회식 적폐청산 조직인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들었다.

연차 휴가 중이던 2018년 6월 26일 전화가 왔다. 진미위 조사역이라는 사람이다. 대뜸 '휴가 중이시지요?'라며 진미위 출석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휴가 중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고 했다. '휴가 중인 걸 알면서 이런 전화를 해도 되냐? 다음 주 휴가 마치고 출근하면 그때 얘기하자'는 항의에도 진미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잔말 말고 피의자 소환에 응하라는 식이었다. 이때부터 진미위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완장을 찬 진미위 조사역들의 안하무인격 일제 순사 흉내내기가 시작됐다. 진미위는 교묘하게 조사 대상자들을 괴롭혔다.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 코비스 메일 등을 보내 출석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스토킹성 협박을 계속했다. 메시지를 볼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통보 내용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했다. 합의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진미위 13조 규정에 따라 조사 불응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인사평가권을 갖고 있고 나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인재개발원장 아무개 씨까지 동원해 조사를 받을 것을 은근히 강요했다. 그해 결국 나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게 과연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믿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조사를 거부했다. KBS 감사를 사칭한 불법 유사 감사기구라는 점과 정확한 징계 사유와 이에 대한 조사 내용 없이 임의동행식 출석조사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었다. 표적 징계 대상이었던 나로서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앞길이 구만리 같은 많은 후배 기자들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사 불응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사역이라는 완장을 찬 동료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 모욕적인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사 불응 시 처벌이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 진미위 독소조항 제13조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당연히 사장 양승동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이 불법 조항을 이용해 조작해 낸 불법 조사 결과물로 징계가 이루어진 후였고 장물과도 같은 진미위 일방적 주장들은 아직도 진미위 백서에 그대로 남아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인민재판식 설문조사 징계까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나를 포함한 핵심 징계 대상자들의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미위 조사는 더욱 가속화됐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모바일 설문조사라는 여론재판식 수단까지 동원했다. 기자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자 시일을 계속 연장해 가며 설문조사를 통한 징계사유를 제조해 냈다.

2018년 7월 보름간에 걸친 설문조사에 응하라는 문자가 11통이나 날아왔다.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을 묻는 식이었다. 증거재판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판정 위원들이 정말로 설문조사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냐며 황당해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실체였다.

진미위가 설문조사를 의뢰했던 조사업체는 기자협회 집행부가 이용해 오던 업체였다. 징계사유를 무리하게 짜내다 보니 인권이나 민주적 절차, 팩트 확인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사 시작 한 달도 채 안 된 2018년 7월 12일 미디어오늘에 징계에 관한 자세한 기사가 떴다. 진미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나를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 이름이 공개되고 일방적인 징계사유와 함께 인사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그들 스스로 그토록 외쳤던 사법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전신이 언론노보이던 미디어오늘 등 우호 매체를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진미위의 악행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했다는 것이다.

진미위 출범 1년 후인 2019년 6월 24일 위원장 정필모와 단장 복진선이 나서 진행한 활동 종료 기자회견과 진미위 백서도 온갖 추측과 일방적 주장을 통해 나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명예를 난도질했다. 정필모는 이후 민주당 의원으로 영전해 언론인의 윤리를 어겼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복진선은 연차 휴가 사용 문제로 노조에 의해 감사원 고발까지 당했다. 이들이 진미위를 이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미위의 위선적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진미위 백서와 관련해 지면의 한계상 일일이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드 문제다.

당시 언론 대다수가 보도한, 심지어 JTBC마저 똑같이 보도한 사드 외부 인사 참여 확인 리포트가 왜 문제가 됐는지 그때 그토록 떠돌던 전자파 피해는 어떻게 됐는지, 외부 인사는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성주군수의 인터뷰가 SBS 8시 뉴스에 생생히 방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수 인터뷰는 아무도 한 언론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당직 근무 중이던 모모모 아무개 전 기자협회장은 지금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둘째, 역시 대다수 언론들이 다 보도했던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평점과 관객 평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기사가 왜 KBS 홍보성 리포트로 취재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

KBS 뉴스 편집의 최고회의인 편집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채택된 아이템을 마치 홍보성이라고 거부한 게 과연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좌파성향 평론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인천상륙작전이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불편한 역사적 사건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위 회부 서류에 서명을 했다며 나에게 씌웠던 징계 사유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무효로 확인이 되었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서는 이주형 사회부장 당시 적폐청산 특집보도 형식으로 관객 평가와 평론가 평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아이템이 오도성 아이템이었다는 식으로 대형 오보를 낸 적도 있다.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평점 문제는 주말용 편집회의에서 아이템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한 참석자가 관련 기사를 보고 아이템을 발제했고 거의 15분간 토론을 하다가 채택된 아이템이었다. 다른 언론들도 대부분 다 기사화했던 교과서 같은 아이템이다. 이게 팩트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만들어 9시 뉴스에 특집보도까지 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와 함께 소름이 돋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셋째, 진미위 백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국정농단 관련 보도다.

이와 관련해 진미위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편집회의에서 이영섭 당시 기자협회장이 한겨레신문을 들고 들어와 오늘 밤 9시에 기사를 받으라는 주장에 대해 최순실이 맞냐라는 확인 발언한 나의 발언을 악용해 보도를 묵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도 분명히 반박을 한 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에게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 팩트다. 또 당시에는 태블릿PC가 나오기 한 달여 전으로 최순실의 존재가 명확하지도 않은 때이기도 했다.

편집회의에서 보도국장은 오보 방지 데스킹 차원에서 항상 반문하고 팩트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역할이고, 당시 이런 상황을 게시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들은 거두절미하고 측근 맞냐라는 워딩만을 이용해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KBS 보도의 대원칙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다. 다소 늦더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KBS의 오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세력들은 팩트보다는 진실 보도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으면 팩트 확인을 안 해 보고도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 세력의 주장이다.

양승동 사장 이후 KBS 보도가 제보자의 말만 믿고 반론이나 팩트 체크도 없이 확증편향적으로 보도해 대형 오보 사태가 잇따른 것도 이러한 이들 세력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어쨌든 당시 태블릿PC 보도 이후 KBS 9시 뉴스에서는 12월까지 한 달여 동안 국정농단과 관련해 무려 35건의 단독 보도를 한 성과를 올렸다. 이 자료는 보도기획부에 보관돼 있다. 보도기획부 자료들을 탈탈 털었던 진미위는 당연히 이 자료는 외면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만 짜깁기하고 불리한 자료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광우병 보도 사태에서 보듯이 이 세력들의 이중적 실체이다.

참고로 진미위 조사 결과 중 기정추 성명서와 관련해 내가 박태서 뉴욕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을 종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박태서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어 진미위단에 통보를 하였다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온 바 있는데 진미위는 아무런 수정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019년 6월 불법 유사 감사기구 진미위는 그렇게 편파적 주장과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적 추리, 제13조 조사 불응 시 처벌이라는 불법 독소조항을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강요해 만든 조사 결과 백서를 남기고 나를 포함한 기자·PD들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는 진미위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베낀 듯 낯뜨거운

리포트가 보도됐다. 심지어 가입자에게는 인사 특혜를 줬고 미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 보도했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었다. 반론이나 팩트 확인도 없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도 이 부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정도 안 된다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짜뉴스다. 이 리포트를 보도한 기자는 KBS 기자협회 멤버인 전 기자협회장 김진우였다. 김진우는 이후 법무실장으로 영전했다.

낙인 찍고 가스라이팅, 진미위의 잔인한 수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미위 불법활동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진미위와 이 세력들이 인간의 약점을 만들어 선전·선동하는 데 가히 천재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에 접근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낙인 찍기 공격이다. 진미위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과거 고대영 사장 시절 간부들에 대해 공격을 했다. 나쁜 사람들, 국정농단 부역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 찍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진미위 세력들은 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 매체 등에 흘렸다. 이어 민노총 KBS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인신공격을 하며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진미위 세력들은 노동위원회와 소송 과정에서도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해 견강부회식 논리를 만들어 나를 공격했다. 보도국장이었던 내가 실세로서 보도본부장을 제쳐 놓고 모든 인사와 결정을 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쟁쟁한 로펌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된 회사 측 준비 서면을 받아 볼 때마다 화려한 법률용어와 추측과 해석을 동원한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들로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사측 변호사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마치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욕까지 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공격을 당하다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 저 사람들도 혹시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게 된다. 특히 젊은 기자들을 대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저들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런 것이 낙인찍기와 가스라이팅 효과를 노리는 그들의 전술이었다.

무려 5년여 지속돼 온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는 진미위 세력들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궤양성대장염 환자인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심지어 유화그림 그리기 등 별별 노력을 다 해 봤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KBS를 보는 것이었다. KBS 보도국장을 했던 내가 KBS 뉴스를 가급적 안 봐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진미위에 협조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부풀려 나에 대해 밀고를 하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를 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KBS 뉴스를 통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투 피해자나 학폭 피해자들이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을 힘들게 고발하는 이유가 TV 화면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트라우마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더욱이 기자 생활을 함께 동고동락해 오면서 형 동생 하며 지내왔던 동료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진미위에 협조해 나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진미위는 2019년 6월 24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종료일 뿐 진미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진미위 망령들과 싸우고 있다. 민노총 KBS본부 노조는 나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중노위 판정이 있을 때마다 판결문을 왜곡하며 공격을 해 오고 있다. 판결문까지 왜곡해 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의 악질적 행태는 이들이 과연 KBS 공영방송 직원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진미위는 불법 유사감사기구다. 그것이 대한민국 공공감사법과 방송법 그리고 KBS 정관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미위 세력들이 진미위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었고 반대했던 직원들에 대해 KBS 감사를 제쳐 두고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 사적 표적징계, 보복징계를 한 것이 진미위 사태의 본질이고 실체다.

한마디로 진미위는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동료 직원들을 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산당 혁명기에나 있을 법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KBS의 흑역사,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당한 행위였다면 굳이 KBS 감사라는 법과 제도를 피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유례없는 유사감사기구를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일부 특정 문제에 대해 잠시 활동했기 때문에 감사기구가 아니었다는 진미위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절도범이 잠시 조금만 훔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미위 운영규정 제13조 조사불응 시 처벌조항과 관련해 징계 사유에서 조사불응 혐의는 추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어이가 없다. 위폐제조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면 위조지폐는 모두 폐기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위폐제조기를 없애 버렸으니 죄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진미위는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세력이 막대한 공사 재원을 투입해 불법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또 비단 KBS뿐 아니라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후 방송계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일련의 문제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MBC 정상화위원회와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는 유사한 형태의 적폐청산기구들이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런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KBS를 장악한 진미위 세력들에게 공정한 방송과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미위 기득권 세력들은 공영방송 장악 이후 진미위를 이용해 직장 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KBS를 편향적으로 운영했다. 완장을 차고 설치는 진미위 세력들과 민노총, 기자협회 등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누구든 이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는 진미위 징계들처럼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진미위 세력들이 파업 과정에서 보여 준 폭력성은 이미 KBS 구성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KBS 단독회견 때는 기자가 감히 대통령에게 버릇없이 질문했다며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대는 그들이다. 비판 목소리를 막아 놓고 정당 홍보방송을 연상케 하는 편파보도와 저널리즘의 ABC도 모르는 엉터리 오보들,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만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나오는 정치편향적 시사 프로 MC들이 저질·편향 방송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히 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진미위 기득권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지 5여 년, KBS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넘어 조롱을 받는 삼류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진미위라는 KBS 흑역사를 깨끗이 씻어 내고 진미위를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망가진 KBS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매체와 유튜브 방송 등으로 혼탁해진 방송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불편부당한 팩트를 전달하는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떠나 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공영방송 KBS의 설 자리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KBS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진미위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농단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진미위 세력의 폭력성에 위축되지 말고 언론인, 방송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해야 KBS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프라이드 평원을 암흑으로 만든 스카와 하이에나 떼에 맞서 라이온 킹으로 거듭나 평화를 찾은 심바처럼 우리 KBS 언론인·방송인들의 자각과 분발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광주 총국장이었던 박영환 앵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앵커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승승장구하던, 인정받던 앵커가 하루아침에 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박 앵커의 글을 읽겠습니다.

나는 91년 KBS에 18기 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부 사건기자를 비교적 오랜 기간 했다. 종로경찰서를 시작으로 강남·영등포·마포경찰서에서 일진을 했다. 나는 동기인 박승규, 장한식, 황상무, 이춘호 기자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당시 사회부장이던 고 이봉희 선배는 외압과 청탁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력과 기득권 집단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9시 뉴스 ‘현장추적 1234’ 코너는 거의 매일 아이템을 쏟아냈다.

고 이봉희 선배를 정점으로 우리는 MBC 뉴스의 아성을 깨트리고 넘어서자며 의기투합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마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지존파 살인사건 등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혼연일체가 된 사회부 사건팀은 전력투구했고 특종을 쏟아냈다. 마침내 KBS 9시 뉴스는 시청률에서 MBC 뉴스데스크를 이기고 메인 뉴스 왕좌 자리에 올랐다.

31년의 기자 생활 내내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개인 신상에 황당하고 돌발적인 변화는 없었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사회부와 특집부에서 일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종필과 박태준의 자민련을 거쳐 과반 의석을 지닌 야당인 한나라당을 출입하다가 청와대로 출입처를 옮겼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TV 밤 11시 뉴스라인 앵커를 지냈다. 이후 진보좌파에서 보수우파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나는 오디션을 거쳐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됐고 3년간 미국특파원을 지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 박근혜 정권이었다. 나는 사회1부장과 국제주간, 취재주간을 거쳐 광주 총국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2017년 나라다운 나라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영방송 KBS를 지탱해 온 모든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졸지에 적폐기자가 됐다. 그해 9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서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

명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일으켰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안보 의혹 국면에서 또한 포항 지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뉴스 취재를 내팽개쳤다.

언론노조는 지난 정부 여당 몫,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이 된 강규형 이사 등 3명에 대해 그들이 속한 대학과 변호사 사무실로 몰려가서 행패를 부렸다. 이사들을 먼저 쫓아내면 KBS 사장을 더 쉽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목표로 담은 언론적폐 청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등장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문건에는 정치권이 앞장서면 언론탄압 의혹의 빌미가 되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 학계가 먼저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고대영 사장은 강제로 쫓겨났다. 민주당은 자기들과 무관한 문건이라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분 없는 당시의 방송파업은 KBS 장악을 위해 문재인 정권과 궤를 맞춘 관제 데모였음이 드러났다.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민주주의 기본인 인권과 법치를 망친 세력이 바로 언론노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영방송이 뉴스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파업 와중에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은 적폐로 몰렸다. 언론노조 소속 박태서 기자는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의 직책과 이름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렸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사장이 던져 준 보직에 감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는 당신들이다.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이제 적극적인 공범자를 자처하려고 하는가?'. 이 박태서 리스트는 나중에 고대영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새 경영진이 인사 차별과 배제에 악용했다. 피해 기자들은 노동청에 이를 고발했고 노동청은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 현재 수사 중이다.

언론노조는 양승동 PD와 김의철 기자를 차례로 KBS 사장으로 옹립했다. 이렇게 언론노조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사장·부사장·감사·보도본부장·제작본부장·보도국장·취재주간·라디오센터장 등 20여 개 핵심 보직은 언론노조 지도부와 협회장—협회장은 기자협회, PD협회 등입니다—출신들이 전부 차지했다.

반면 박태서 성명서에 이름이 적혔던 기자의 90% 이상은 맡고 있던 국장·부장·팀장의 보직을 박탈당했다.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었다. 파업 거부자와 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뉴스 취재와 보도,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에서까지 퇴출당했다. 마이크와 볼펜을 빼앗긴 후 기자 업무와 무관한 곳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들이 물러난 곳에는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KBS노조를 이탈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 옮겨갔다. 언론노조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꿈꾸던 교섭대표 노조가 됐다. DNA가 일치하는 언론노조와 경영진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언론노조가 경영책임자인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노영방송은 이렇게 탄생했다.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된 겁니다.

노사가 한 몸이 된 괴물, 즉 노영방송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감사와 소수 이사의 반대에도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름과 달리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는

탄압기구였다. 보도국 국장급 기자 4명과 1라디오 담당 국장에게 직장 질서 문란을 공통 징계 사유로 내세워 정직 6개월 등 중징계를 때렸다. 기자협회가 언론노조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게 무슨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란 말인가? 라디오 국장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게 왜 징계 대상이란 말인가? 그런데 정작 시청자를 볼모로 다섯 달 동안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원은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언론노조의 첫 꼭두각시 KBS 사장이었던 양승동과 불법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 그리고 진미위 위원인 김의철 보도본부장 등에 의해 공모돼 저질러진 파업 거부자 탄압의 배후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있음은 여러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자행한 불법적인 적폐청산 놀음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파업 불참자 공개 성명서에 박영환 광주총국장 이름을 적시하며 압박.

2017년 9월 21일 오후 2시 43분 박태서 기자, 당시에는 국제부장으로 언론노조에 가입한 뒤에 방송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태서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민노총 언론노조 주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자 78명의 실명과 직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남아 있는 보직간부들에게 중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제작국이 나선 지 벌써 한 달째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후배들의 의지는 여전히 결연하나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어제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사장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여러분이 지켜 주고 있다고 맹비난. 이어 이번 제작 거부와 파업의 중립은 없으며 고대영 사장 퇴진이냐 아니면 지키기냐 둘뿐이다. 제작 거부와 파업 동참을 거부하는 당신은 뉴스를 지킨다는 변명 아닌 변명 아래 고대영 사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보직을 던지고 내려와 사장 퇴진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고 겁박함. 박태서는 25년 차 이상 기자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중견급 기자 39명의 실명도 연명해 공개.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민노총 언론노조의 광주총국장 출근길 방해 5개월.

2017년 8월 28일 광주방송총국 산하 순천방송국장인 김종명 기자가 공영언론인과 보직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방송 파업에 가담하겠다고 밝힘. 소수의 인력으로 방송 제작을 수행했던 터라 본사 고대영 사장, 김우성 인력관리실장과 긴급하게 전화로 대책을 협의.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통화 내용을 엿듣고 '박영환 총국장이 순천방송국장 김종명을 서울로 발령내지 말아 주세요'라고 민원을 했다고 제보함. 총국장은 산하 방송국장에 대한 인사 내지 인사 내신 권한이 있으므로 사장 등과 인사 문제 협의는 정당한 업무 영역임. 그런데 언론노조는 이 발언이 노동법 위반이라며 총국장이던 나와 고대영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 다음 날 언론노조는 고대영의 문고리 박영환 총국장을 고발한다. 파업 보복 인사, 박영환의 막후 공작이라는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노보를 잇따라 발행하며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부당한 공격을 하였음.

언론노조는 5개월 동안 출근을 폭력적으로 방해함. 어떤 날은 9층 총국장실까지 10여 명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함. 장기간 이어진 언론노조의 폭력 탓에 대상포진과 급성 전신 통증을 겪기도 했음. 또한 노조는 대리기사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JTBC에 제보했고 뉴스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제가 노동법 위반자인 것처럼 명

예를 훼손하였음. 고대영 사장과 나는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권이었던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김우성 인력관리실장, 김종명 기자만 불러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함.

그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블랙리스트 게시자 박태서 기자의 파업 종료 후 처벌 예고 전화.

2017년 9월 초 박태서는 광주총국장이던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옴. 쿼트(quote)입니다. '형은 앞으로 파업 마무리되면 크게 다칠 거예요. 형이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을 주도했다고 여기에 파업 주도세력 핵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당시 박태서 기자가 던진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들었음. 그런데 나중에 언론노조가 KBS 경영진과 합세해 저지른 인격모독과 부당한 인사탄압을 지켜보면서 박태서 말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

그다음에 4단계입니다.

4단계는 협의, 통보 없이 광주총국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

2018년 5월 언론노조의 옹립으로 사장이 된 양승동은 광주총국장으로 일한 지 8개월 만에 나를 평직원으로 강등시키는 발령을 냈음. 지역 총국장은 본사를 대표해서 지역에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통상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는 게 관례임. 그런데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양승동은 일과가 끝난 시각인 금요일 밤 7시 반쯤 인사발령을 냄. 나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 열차 안에서 광주총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됨. 발령지는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이었는데 서울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에 무려 4시간 이상 소요됨. 당시 국장급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된 직원 7명이 한꺼번에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양승동 사장이 부담스러운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기도 했음. 1년 뒤에 기자나 앵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청자센터로 발령이 났고 3년째 KBS 견학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게 작년 기준 내용입니다.

5단계,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가 강제 조사를 압박, 이후 정직 5개월의 부당 징계.

2018년 6월 양승동 전 KBS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사실상 불법 적폐청산 기구로 확인된 진미위라는 괴물이 공영방송 안에 처음 탄생했고 그 기구는 하수인이 된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함. 나에 대해서는 1심 정직 6월에 이어 재심에서 정직 5월의 부당 징계 강행.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김영한 인재개발원장을 불러 불법적인 조사에 응하라는 말을 들음. 김 원장은 진미위에서 밀봉 문건이 맞다며 건네주고는 조사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되니 받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함. 양승동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김영한 원장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면서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음.

나는 기자협회 비판 성명서는 언론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한 일이고 기타 일도 취재주간으로서 정당한 직무에서 일탈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조사해야겠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라며 조사 불응을 통보함.

김 원장은 거듭 조사를 안 받으면 어떤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걱정했으나 나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었고 징계든 뭐든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전달, 다만 양승동 사장을

포함한 진미위 관계자 등 기자협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관련해 불법적 조사를 설계하고 추진하고 징계를 주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함.

일부 진미위 조사위원들은 일과가 끝난 뒤에 강압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괴롭혔음.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공영방송 KBS 안에서 자행되었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노영방송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악마적인 도구로 사용됐다. 공영방송에 진미위 같은 괴물이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진미위 탄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시에 특정 정파를 위한 선전·선동 스피커 역할을 하는 노영방송을 국민 전체를 주인으로 모시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는 국민 전체가 주인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야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고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목표는 선명하다. 모든 뉴스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법이 규정한 3대 원칙, 즉 객관·공정·균형에 충실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기계적 중립주의 보도 태도일 것이다. 모든 뉴스는 기자와 데스크에 따라 재해석되고 편집되기에 엄밀한 의미의 기계적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언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래 네 사람의 언급은 시공을 초월해 이른바 노영방송의 심각한 폐해와 공영방송 KBS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앞세워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바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뜯어고쳐야 한다.

2022년 3월 6일 경기도 유세 발언.

그다음에 박권상 DJ 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KBS 사장의 퇴임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KBS는 어떤 편에 서서 어느 당파에 봉사하기 위해 뉴스보도에 편파·왜곡·과장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뉴스로 포장해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널리스트는 특히 방송의 경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소위 편파적 멘트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 말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당파적, 독선적이거나 선전·선동적 동기에서 세상사를 보도하고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대자보식 언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주주로 모시는 KBS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팩트, 사실은 신성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고대영 KBS 사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당시 박대출 국회 과방위원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의로운 보도는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 이 논란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여당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야당은 정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야당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당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의를 축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을 축으로 하세요. 사실 보도는 하나지요? 사실대로 보도하면 여당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거고, 야당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생각대로 보도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장님이든 성재호 참고인이든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 KBS 고대영 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고요, 동의합니다’. 반면에 언론노조 KBS본부장인 성재호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5개 공영언론에 음습하게 뿌리내린 노영방송 체제는 언론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불공정 보도 재앙을 초래했었다. 시민단체인 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감시단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약 100일 동안 5개 공영방송사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1200건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12건의 불공정 보도가 저질러졌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개 공영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절대적 다수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위원장이거나 핵심, 민노총 언론노조와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인 기자협회와 PD협회장 출신이었다. 노영방송 체제가 공영언론을 망치는 주범임이 드러난 셈이다.

KBS 취업규칙에는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금지를 못 박고 있다. 또한 KBS 방송강령회는 우리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노조 KBS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진보진영을 지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는 2012년 총선에는 통합진보당, 2022년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선기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지배적인 집단이나 권력을 쥔 집단이 뉴스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특정 의미를 크게 키우고 다른 의미들은 배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공영방송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종사자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안에 대한 보도 여부와 내용을 조정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왜곡된 저널리즘을 재생산하는데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종사자들은 특정 정치를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조활동 유보 조치가 헌법상 근로삼권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

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얼마 전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 2020년 10월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독감 백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보도·방송 지침을 하달했는데 언론노조의 보도 개입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특정 색채가 강한 집단 간 노조 협약 등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기에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교섭대표노조는 언론사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노조의 조직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의 산하에서 방송사들 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실제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방송법 위반 행위라는 내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제 백해무익한 노영방송 체제는 공영 언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끝내야 한다. 그게 공영 언론의 시대정신이다.

다음으로는 방송사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조직적인 시도를 하고 있던 한편 정치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언론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성명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런 시도의 중심에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명분과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악법을 발의하고 국회의 통과를 시도한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악법으로 평가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이 발표한 많은 반대 투쟁 성명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노조 성명, ‘집권 여당의 영구적인 언론장악 그 큐시트의 마각이 드러났다’는 제목하의 성명입니다.

집권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드디어 언론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냈다.

1. 어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가 뉴스 편집을 못 하도록 막고,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말하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은 그들의 행위가 증명한다. 민주당은 2016년 민주당 의원 박홍근의 발의로 특

별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116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입을 싹 씻고 박홍근 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2016년까지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다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민주당과 똑같이 입을 싹 씻었다.

이른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른바 운동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든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주 독하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모략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좋아하는 윤미향 같은 시민단체가 KBS 직원이라도 뽑아야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인가? 가장 확실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이사를 뽑는 방법은 KBS 이사를 뽑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직도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나? 그 국민투표, 이른바 레퍼렌덤(referendum)이라는 것 역시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즐겨 썼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른바 국민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치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는 우리도 100% 동의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방향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인 사기극인가는 양승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양승동의 사장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도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들어가 있고 양승동아리는 양승동을 시민이 뽑은 사장이라고 추켜세웠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금까지 그 시민평가단이 각각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당시 이사회의 평가점수와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평가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를 알 방법도 없고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공정하면서 동시에 정확하리라고 보장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얼마 전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시민평가단 논란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그 시민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이 KBS를 장악한 집단의 의도에 영향을 받거나 그들의 조작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KBS본부 노조는 양승동 임명 당시의 시민평가가 일회성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평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치집단의 의도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은 모르는 체한다. 그들이 그동안 유착돼 왔던 정치집단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다만 그 국민이 뽑는 사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양승동이다.

최근의 여러 사장과 양승동을 비교해 보자. 방송의 경쟁력이나 공정성, 경영의 측면에서 양승동과 이전 사장들을 비교하면 어떨까? 정권에 대한 부역이라는 측면에서 양승동보다 심한 사장이 있을까? 예를 들어 길환영 같은 경우는 양승동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대현, 고대영 시절에 검언유착 주구저널리즘 참사나 오세훈 생태탕 물어뜯기 참사 같은 노골적인 정권 부역 사태가 있었나.

지금 사내 권력을 잡고 꿀을 빨기 바쁜 자들이 과대 포장해서 난리를 친 정지환의 최순실 관련 발언이나 선대인, 황교익, 한완상 관련 논란, 그리고 모 보도본부장의 정 모 기자 제주 발령이나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등과 양승동 임기 동안의 보도본부, 1라디오, 시사교양 프로에서 벌어졌던 이루 셀 수 없는 정권 부역 보도, 제작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라.

이전 사장 시기 김용민, 주진우, 김제동 같은 선동꾼들이 KBS의 전파를 오염시킨 적이 있었나. 이전 사장 시기 검언유착 오보 주구저널리즘이나, 생태탕 참사 등과 같은 노골적인 정권 부역 행위가 있었나. 이전 사장들이 야당에 대해 '찍지 않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기라도 했나. 양승동의 정권 부역과 다른 사장의 부역은 안드로메다만큼이나 규모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민이 뽑는 KBS 사장이라는 개념의 보다 결정적인 결함은 따로 있다. 이른바 자발적 부역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승동은 마치 자기가 제작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KBS의 보도 제작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도 되는 양 우기지만 이미 KBS가 주구저널리즘의 선봉이라는 것은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의 KBS 점거 기간 발생한 모든 정권 부역 행위는 양승동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부역이었던 것이다. 양승동이 시키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운동권 정부를 위해 행동대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언론노조의 운동권 세력들에게 국민이 뽑은 사장이 선사하는 이른바 제작 자율성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또한 민주당도 그런 사정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언론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언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특별다수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들 자신이 목이 터져라 외쳐 왔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모른 척하면서 벌이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나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물론 그들은 한때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에 의해 형성된 국회의원 180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들의 이 같은 패악질도 언젠가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 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탄압 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용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인가. 행여나 집권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국민 추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로 엿 바꿔 먹느라고 장난질 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2021년 6월 18일 KBS노조 성명서.

다음은 ‘징벌적 손해배상법, 언론자유 경종’이라는 제하의 KBS노조 성명서입니다.

우윳값이 상승하자 우윳값을 통제한다. 그러니 낙농업자들이 우유 생산을 포기해 우윳값이 또다시 폭등한다. 우윳값 폭등의 원인이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을 파악하자 다시 사료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건초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건초 생산을 포기해 우유 가격은 더욱 치솟는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실시된 가격통제의 허망한 결론이다.

눈앞의 문제만을, 단 한 수만을 보는 진보좌파적 조급함과 경솔함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우윳값 파동 때문에 고통받았던 혁명 이후의 프랑스인들의 고통과 본질적으로 같다.

눈앞의 단 한 수밖에 보지 못하는 허접함이 이제 언론계를 강타하려 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면서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이며 손해배상 산정액의 기준을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산정액의 하한선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KBS는 최대 67억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익히 봐 왔듯,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예외 없이 상상 이상의 부작용을 만들어 냈다. 이 법률이 불러올 부작용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를 미리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만 KBS인들에게 특히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에게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하나의 부작용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민주당의 안대로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양승동아리 체제에서 벌어졌던 윤석열 물어뜯기 주구저널리즘, 김학의·최순실 관계 과장 너절리즘, 오세훈 생태탕 보도 등 무수한 너절리즘, 주구저널리즘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철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 점에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처럼 단 한 수만 보고 두 번째 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지 않으면 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최대 67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언론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일 터이므로 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67억 원이라는 손해를 회사에 유발한다면 취재기자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팀장, 부장, 국장 등 데스킹 권한을 갖고 있는 간부 전부 혹은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회사가 배상을 하게 되면 행위의 성격이나 경중에 따라 그 손해액을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누군가에 대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취재기자가 위험하거나 논쟁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가 절대로 어떤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팀장, 부장, 국장 등 간부들의 입장을 보자. 기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이들 간부들은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어떠한 추정이나 논평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실무 제작자와 어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들은 구체적 수치나 자료 등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정성적인 이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흐름을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KBS 내부의 기자와 PD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작자율성은 말살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물어뜯기 주구저널리즘, 김학의-최순실 관계 날조 너절리즘, 오세훈 생떼탕 보도 등의 사례를 보면서 혹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양승동 치하의 저질 선동 저널리즘으로 전락한 KBS 보도를 치유할지도 모르는 독성이 강한 약일 수도 있다는 상상을 잠시나마 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여파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언론자유가 말살되는 암울한 미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동의할 수 없다. 언제까지 눈앞의 단 한 수만 보고 정책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언론의 자유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 노조에도 호소한다. 국민팔이 사장선임제도 해 달라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 문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은 없는가? 그래도 그대들과 정책협약도 맺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하니 말이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투쟁과 관련된 KBS노조 성명서입니다.

KBS 이사의 3대 조건 독립성, 세대 교체성, 지역 대표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특히 KBS 이사의 적합 조건은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끔 하는 시절이다. 특히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2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KBS 이사의 조건을 다시금 심각하게 뒤돌아보게끔 하는 중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KBS인들은 최근 10여 년 정권교체 시기에 두 차례의 큰 아픔을 겪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지난 2008년 8·8 사태였고 두 번째 사건은 KBS 내부인들이 임기가 남은 고대영 전 사장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면서 KBS인들끼리 극도의 분열을 보인 사건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지배 욕구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KBS인들의 가슴속에는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큰 상처가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사례가 전 정권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들 두세 명을 핀셋 공작으로 해서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추천한 이사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해 KBS 사장을 갈아 버리는 행태였다. 강규형 전 이사를 뽑아 버린 자리에 김상근 현 이사장을 낙하산 투하해 고대영을 축출하고 양승동을 사장으로 앉혀 버리는 그런 작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영방송 KBS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사태 속에서 집권 여당 측이나 KBS 내부 구성원들이 핀셋 공격을 한 이사들

의 반응을 보면 놀라울 정도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다. 모 이사의 경우 자신에게 행여나 사소한 인신공격이 가해진 경우 KBS 이사로서의 책무선언은 내팽개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사직을 던져 버리는 수가 많았다. KBS 이사라는 자들의 학자적 양심이나 직업소명이 땅에 떨어졌음을 목격하는 수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법적소송을 걸어 2심까지 해임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영방송 언론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사건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KBS 이사의 의무와 책무는 막중하고 확실하다. KBS 사장 권력이 시청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지를 밀착 감시하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 또는 야권 추천 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KBS 이사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공익과 공정방송, 지역대표성을 담보해내는 감시·견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숙명일 것이다.

KBS노조는 앞으로 선임될 공영방송 KBS 이사가 아래와 같은 3대 조건에 부합한 인물들로 추천되고 선임되길 바란다.

1. 독립성.

사장 권력을 밀착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여야 추천 이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다. 여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집권 여당,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려는 KBS 사장 권력과 장단을 맞추고 같이 놀아난다면 그건 해사행위이고 배임행위일 것이다.

또 야권 추천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양승동 편파방송을 공정방송이라고 위록지마식으로 알 수 없는 헛발질을 하거나 표결할 때도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모 이사들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아닐 수 없었다.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기록은 남았고 영원히 따라다님을 잊지 말라.

사사건건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파적 관점에 줄을 선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도 곤란하다. 민언련, 민노총 기타 좌파와 우파 시민단체에서 얼쩡거리면서 특정 정파에 줄을 섰던 자들은 아주 곤란하다 할 것이다.

새로 선임될 이사의 제1 조건은 그래서 KBS 사장 권력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는 투쟁성이 가미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KBS인들이 지난 4년간 양승동 체제의 폭정과 보복 정치에 신음하고 레지스탕스식의 소송전을 벌일 때 어디서 뭘 하다가 정권교체기가 다가오자 슬금슬금 얼굴을 들이대는 이사 후보들이 있다고 한다.

행여나 KBS 내부에서 활개치는 사조직이나 술자리, 접대골프 모임에서 형 아우 부르는 자들과 영합해 정권교체 시기에 자신의 경력 관리에 좋다는 KBS 이사 자리 한번 꿰어 차 보자는 식으로 이사직을 노리는 인물들이 있다면 그쯤에서 그만두길 바란다. 나오는 순간 그동안 뭘 했는지, KBS를 망친 인적 네트워킹과 끊임없이 뒷거래해 온 그들의 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2. 세대교체성.

이는 나이나 연령만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KBS는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야 한다. 양승동 체제하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라. 편파방송, 인사참사, 막장경영의 끝판왕을 보여 준 양승동 체제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KBS 이사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 추천 이사였지만 KBS 보도에 대해 불공정성을 비판한 모 이사의 사례는 세대교체의 방향성이 어떤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항상 사장 권력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면 곤란하다. 필요에 따라 사장 권력을 엄정하게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야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흔들어 대서는 그것도 아주 곤란할 것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과 같은 어젠다는 여야 추천 이사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어젠다임을 명심하라. 또다시 수신료를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팔아먹을 각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대표성.

그동안 KBS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나 거주자들로 채워져 왔다. KBS 수신료의 절반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징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실태가 아닐 수 없다. KBS노조는 최근 그동안 일본 NHK나 영국 BBC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의 이사회가 해당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지를 강조해 왔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지역 안배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법안 발의를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점도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KBS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여야를 떠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KBS 이사회도 이런 새로운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KBS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초지일관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선임제도를 주장해 왔다. 이는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투쟁의 정신이고 산물이었다. 사내 특정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던 입을 싹 씻고 비현실적인 방통위의 국민추천위를 통한 사장과 이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때 그때 달라요 식으로 중차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벌인다면 정략적인 정치놀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부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KBS노조는 이번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모두 기록할 것이다. 독립성, 세대성, 지역대표성이 구현되는 이사 선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6월 28일 KBS노조 성명서였습니다.

노조 성명서 중의 마지막인데요. 제목은 '너절리즘과 주구 저널리즘의 종합선물세트 이러고도 공영방송으로서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제목의, 제하의 성명입니다.

KBS노조와 공정방송과 비전 회복을 위한 직원연대, MBC노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언론국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7개 단체는 2022년 대통령선거 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을 운영합니다.

11월 1주 차,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각종 불공정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불공정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 편향성 혹은 편파 진행 14건, 이슈 편향—이것은 친정권 이슈 부각, 친야권 이슈 축소 등 이슈 선정 자체의 편향—7건, 프레임 왜곡—이슈의 성격을 왜곡해 정권 편향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3건이고요. 무비판적 정권 시각 수용 1건, 주관적 편견 7건, 비중 불균형 1건, 문제 축소 1건, 추측 보도 1건, 뉴스 가치 편향 1건, 부실 보도 1건, 편향적 출연자 섭외 3건, 편향적 시청자 의견 4건 등 44건의 불공정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감시단 모니터링팀이 발견한 숫자일 뿐이며 찾아내지 못한 케이스나 편향적 출연자 선정 사례처럼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KBS의 많은 프로그램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노골적인 정권 편향적 속성을 드러내 왔고 검언유착 오보, 오세훈 생태탕, 최근 조폭 일방 대변 보도 등 상상하기 어려운 보도 참사를 잇따라 일으켜 왔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지금 어느 정도는 불공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국민감시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KBS 뉴스 9과 주진우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에서 불공정 방송이 노골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유형별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노골적인 편파·편향 방송뿐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에 긍정적인 야권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시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주관적 편견에 의거해 야권 후보 혹은 야권의 어젠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경우도 적지 않고 편향적인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편향적인 시청자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도대체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나름 방송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지금 이런 노골적인 불공정 사태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불공정 방송을 했었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양승동 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이연희 라디오제작국장에게 호소합니다. 자중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러고도 KBS가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향후 모니터링 방향.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확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보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에게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 단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공정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는 물론 방송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일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모니터링 11월 1주 차 상세 보고서인데요. 첫 번째가 편향성 또는 편파 진행입니다.

11월 1일 KBS 뉴스 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초과 세수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압도적으로 반영, 또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내년 소득세의 전망 등을 소개한 반면 야당의 주장은 반발, 매표정치 등 정치공세의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처리.

11월 1일 사사건건, 국민의힘 경선 투표 전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영상을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집함. 홍준표 후보는 9회, 윤석열 후보는 3회,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 나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주로 질문하는 영상을, 윤석열 후보는 수세적으로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표출함.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를 누락하고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부분만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보여 줌.

11월 2일 주진우 라이브,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불법 선거 의혹을 다루면서 대장동 의혹에서는 단정적으로 문제를 축소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선거 과정의 논란을 불법 선거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불법 선거 의혹도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 이름도 나왔어요?’ ‘이것은 불법선거 의혹이 나올 법도 한데’ 등과 같은 윤석열 후보를 이른바 불법 선거 의혹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다수 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슈 편향인데요.

예를 들어 11월 1일 KBS 뉴스 9의 경우 김만배, 남욱 등의 영장 청구를 리포트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이재명 시장에 관한 적극적인 취재는 없이 해명만 집중적으로 소개.

그리고 11월 2일 뉴스 9는 김만배, 남욱 등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검찰이 김만배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KBS는 회피함.

이런 사례들을 쭉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프레임 왜곡 사례인데요.

11월 3일 KBS 뉴스 9, 홍준표 후보가 ‘선거 앞둔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보수 선명성을 강조했다는 정치공학적 관점 부여함. 국민 여론조사 와중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부각하려는 듯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역시 뉴스 9인데요. ‘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 등의 우려’ 리포트에서 북해 풍력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그것을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증거이고 최근의 에너지난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런 관점은, 허실하지만 이런 관점은 전혀 소개되지가 않았다. 또한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폭주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에 내재된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유지향 기자는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보다는 많지만 석탄의 절반 수준이라 그 비중이 늘었는데 공급이 들쭉날쭉

이어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문인데요.

지난 2017년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적폐청산 문건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서 뿌려진 이 문건에는 총 9건의 로드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의 1건이 바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방송장악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사 구성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원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당시 2017년 폭로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적폐청산 문건에 의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민주당 정권의 언론장악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언론의 흑역사입니다.

지난해 나온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소송 참가로 인한 비용은 제3자 소송 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입니다.

이유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제3자 소송 참가인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본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방송법 제50조 2항에 따라 참가인 공사의 사장 임기 3년에 임명이 됐다.

나. 참가인 공사의 이사 4인은 2018년 1월 8일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에 이사회는 2018년 1월 11일 그리고 1월 15일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뒤 2018년 1월 22일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둘째,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 참가인 공사의 이사로서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강규형에 대해 위법하게 해임처분을 하고 강규형의 공석에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김상근 이사를 임명하는 등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기초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강규형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었다. 따라서 강규형에 대한 위법한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임제청안도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각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과장한 것들이므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1)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방통위는 참가인 공사가 지난 수년 동안 방통위원회로부터 우수한 방송평가를 받아 왔고 경영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공적 책임, 공정성, 필요성, 공익성, 적절성 등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주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적폐청산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참가인 공사에 대해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할 것을 요청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모두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근거로 참가인 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 결과는 방송사에 대해 떠오르는 주관적인 이미지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단기적인 사회 여론이나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언론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참가인 공사가 객관적인 수치인 시청률과 점유율 측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 점, 방통위가 실시한 방송평가와 KI 시청자평가지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돼 다수의 상을 수상한 점, 메인 뉴스 시청률이 타 경쟁사들의 2배를 넘어서는 점 등 우수한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음이 명백하므로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 상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된 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 운행한 점, 단체협약을 위반해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 교육을 폐지하고 노조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본부 노조 파

업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조는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조치는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점, 공정방송위원회의 회사 측 대표는 부사장이어서 원고가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 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노조 교육을 폐지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본부 노조가 단독으로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중에도 대부분 직원들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70%가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었고 시청률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으며 재난재해 방송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도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파업 사태로 인해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 개혁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 설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 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 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이 부분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해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과 서영민·송명훈·정홍규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여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65조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징계 양정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가 감봉 징계의결한 서영민·송명훈·정홍규 등에 대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한 것에 원고의 관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처분 대상자들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2년 동안 했던 수많은 인사처분 등에서 이 사건처분이 문제 삼는 부분은 4명에 대한 인사처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처분 사유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및 인력 운용 부적정인데요.

이 사건처분은 감사원이 원고에게 과다한 상위직급의 비율을 감축하라는 주의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상위직급의 축소와 직제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경영 효율화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상위직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원고는 KBS노조와 본부노조가 직급체계의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축소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상위직급 감축 문제는 2008년과 2014년 감사 당시에도 지적됐던 것으로서 감사원에서 2017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해 다시 지적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시정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허위 또는 부실 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하면서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출자 실현 가능성,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과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위한 콘텐츠·시설 투자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아 방송국이 규정한 예금·자금 계획과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그 처분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항에 관여하는 이사회에서 논점이 되어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및 보완 및 추가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신설함으로써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를 기망했고 방송법이 정한 예금 및 자금 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도 그 처분 사유로 보았다.

하지만 경영성과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퇴직급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과급의 이중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경영성과 인센티브가 성과급 이중 지급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로 인정돼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

이 사건은 원고가 보도국장 재직 시 200만 원 금품수수 의혹과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행위 의혹에 연루돼 참가인 공사의 공영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그 처분 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위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처분 사유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세 번째,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인데요 첫 번째로 판단 기준입니다.

가, 판단 기준. 방송법 제5조에 의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등 공적인 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하는 등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인 참가인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해야 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참가인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이자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고 그의 임기가 3년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사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규정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공사 사장에게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방송법은 이사회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사장의 임명 제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한편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해임의 절차를 규정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 공사 사장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사회가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구이고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바 이사회에서 참가인 공사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피고는 그 해임 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참가인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은 피고에게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그 해임 제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바 앞서 실시한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해임 제청 과정 역시 적법한 해임 사유에 기초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한편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방송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사유가 방송법 제51조 1항에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해 참가인 공사 사장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방송법의 여러 규정의 입법 취지, 참가인 공사의 설립 취지, 사장의 임기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 기능 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고대영 전 사장의 혐의 항목별에 대한 판단을 죽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개인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들 중 일부는 참가인 공사의 사장인 원고에 일부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실 및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유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의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제가 판결문과 그다음에 KBS노조 성명서, 그다음에 KBS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분들의 수기를 읽어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입법 운동장에서 방송장악 3법 법안 처리는 발의된 지 5일, 법안 심사에 20분, 의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도 없고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기간 15일도 위원장이 생략했다고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국회법과 관례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준석)

(16시17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이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법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찬성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이 법안의 내용이 모두 옳다고만 생각해서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창당했을 때 이미 이 방송과 관련해서 개혁신당만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극한 대립이 방송을 두고 벌어지는 것은 방송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달콤한 유혹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나 또 국민들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언론과의 접촉은 필연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홍보하고 싶고 광고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크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을 놓고 항상 정치세력 간 충돌을 이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극의 역사는 과거로, 독재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독재정부 입장에서는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력해 왔고 언론

인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과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방송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 쪽이 항상 꾸준하게 장악을 기도했던 것은 결국 2012년 그즈음에 벌어졌던 방송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들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때로는 소강기로, 때로는 격렬하게 벌써 12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쯤 되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매번 이 갈등을 가까이에서 목도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항상 이 경쟁의 결말은 장악하려고 했던 쪽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을 내주고 선거에 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입법하는 이런 법안 따위로 장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입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각자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KBS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서 저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서면 방송국의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되짚어 보면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저는 그 당시 야당의 당대표, 지금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꾸로 그 당시 야당은 방송정상화를 모토로 걸고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KBS에 대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59초 쇼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은 공약했었습니다, ‘KBS가 진정하게 공영성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진다 하더라도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대하사극을 의무 제작해 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지상파채널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도 다 대변할 정도로 많은 채널이 다루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는 적어도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광고까지 받지 않으면서 공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가 생긴 뒤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상저작물들을 자료화면이든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이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

세상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KBS의 영상저작물을 아카이브에서 공개하라는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했던 방송정상화 공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대선 과정의 그런 부분을 놓치셨다면 그 당시 국민들이 어떤 언론 공약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게 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짚어봐 주십시오. 그 당시의 선거 콘셉트는 자유를 창달한다는 것이었고 창의성을 진흥한다는 내용이었지 어디에도 방송이 한쪽 성향을 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약, 지금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아주 오래된 진실에 가까운 격언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2021년 당시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갈등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언론에게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시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민사 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체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때 국민의힘이 연대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노조라고 낙인찍어서 이야기하는 언론노조입니다. 그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좌파라서 우파라서의 문제보다는 결국 권력이 민사적 배상을 통해서 언로를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입장과 결을 같이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그것을 막아 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고,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서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시간 토론에 나섰던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집권 이후에 아니면 힘을 가졌을 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행대로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되 반면 정말 방송사 내의 노동자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주 소중

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의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면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어쩌면 이런 정국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될 정치활동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 이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과 관련된 법 하나 조율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을 입에 담고 권력구조 개편을 입에 담는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생경한 목표로 들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신문이냐에서 정부 없는 신문이 더 옳다', 물론 그때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사 사장이었으니까 조금은 걸러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깨워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장악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이삼 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KBS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도 교체되었고 YTN이 민영화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되었고, 그들은 각각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보수계열의 유튜버들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각자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KBS와 YTN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들어가고 난 뒤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비판해 마지않던 진행자들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오는데 그 여의도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맞닥뜨려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KBS 사장이 바뀌고 나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우선 결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라이브라는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던 수많은 젊은 방송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한 달 가까이 그것을 폐지시킬지 아니면 잠시 휴식 뒤에 살려 놓을지조차도 말해 주지 않고 말 그대로 경영진이 그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그들을 희망고문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글쎄요,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떤 경영인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고민하는 사람은 봤어도, 성과가 잘 나오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고용 유연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 작가들, 자부심을 잃었겠습니까? 3년 넘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세대가 그 안 좋은 결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방송장악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청률이 올라갔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한번 찍어 먹어 보고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전개시켜 나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과방위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 못 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더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언론노조가 좌파노조인 만큼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과 참고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은 MBC의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의 간부였고, 어쩌면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바로잡는, 사실 바로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 교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 갚아 주는 미러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방통위원장후보자의 답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규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명이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 누락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무슨 영업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숨기는 것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톤은 절제했지마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저는 3일간 제가 만족할 만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편 내 편하면서 결국 방송이라는 확성기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동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정이 뭡니까? 바로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론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식대로 만약에 MBC 문화방송에서 좌파적 성향을 갖추었다고 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89%에 달한다면 그 자체가 수치적으로 문제인 것이냐, 그 수치를 교정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9%라는 수치가 다소

놀라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을 교정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현재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당에 우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80%, 90%의 득표율이 나오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정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호사가들이나, 저쪽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느니 이런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권자를 폄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안 따위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슷한 고민을 저도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빨간 당의 당대표 할 때 절대 공략할 수 없다는 지역, 진짜 상대 당이 90% 득표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국민들을 교정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90%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적된 역사가 있었고, 오히려 교정해야 될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었던 것이고 그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고 결국에는 그간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아니었겠습니까? 89%의 언론노조 조합원을 MBC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MBC의 사장 선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론노동조합 또는 좌파·우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신 것이냐, 없으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고 이진숙 후보자는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좌파라고 언급했다고 해 가지고 누군가를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동작한다면 MBC 사장은 KBS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MBC 사내 인물이 항상 임용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그 전통이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경영진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장 또한 MBC 출신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좌파냐 우파냐 가리지 않고, 언론노조 조합원이냐 아니냐 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말 그대로 실력만으로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그 바로 주장하는 89%의 확률로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장이 선임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부당하게 MBC 사장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율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거꾸로 이 비율과 어긋나는 형태의 임원진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장이 교체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거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 MBC에서 있었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못 합니다. 결국 자신과 뜻을 다르게 하는 직장 동료들을 한직으로 발령냅니다.

과거 MBC가 드라마촬영장이 거대하게 운영되던 시절에는 보도 역할로 평생 MBC에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용인에 있는 드라마촬영장에 말 관리하는 역할로 발령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MBC가 상암동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취재밖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사옥건설단으로 발령나기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 가지고 본인이 천직으로 여기던 보도 역할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창고 같은 방에서 인터넷 하나 안 깔아 주고 면벽수행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에 분개해서 정치를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면벽수행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면벽수행해야 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더 큰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문명적인 태도일 것인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가장 자연법칙에 가까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 갚아 준다' 이 정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언론장악, 방송정상화…… 제가 양비론이라도 하려면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라도 얘기할 텐데 사실 애초에 두 개의 방향성이 둘 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거부권의 행사, 이것은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장악 가능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입니다. 복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지금까지 항상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MBC 얘기를 하는 방송문화진흥법이다 보니까 MBC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MBC가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 자체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이삼 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방송 MBC의 경영성과는 그전의 어느 경영진보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MBC 지금 흑자 아닌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이색적이기에 오늘 국민들께 소개합니다. '흑자의 질을 따져 봐야 된다. 불황형 흑자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불황형 흑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드라마 제작하던 것을 제작하지 않아서 흑자가 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겠지만 과거에 수요드라마, 목요드라마, 주말드라마 옹기종기 가족들이 앉아 가지고 채널 고정하고 시청하던

시대의 드라마라면 지상파방송사가 그 권한을 독점하고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라마라는 것은 TV수상기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직장인들은 기다려서 보기보다는 OTT서비스에 가입해서 몰아 보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환경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MBC문화방송 경영진은 그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오히려 시대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서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경영실적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가지고 '불황형 흑자니까 당신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거면 그러면 다른 경영진은 와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영역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현실에 강제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원래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AI는 사람과 다르게 목표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로봇이나 어떤 AI를 저희가 이용한다고 하면 무엇에 최적화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할지를 정해 줘야 됩니다. AI에게 만약에 MBC 경영을 맡겨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뭔가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지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게 방송을 만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인은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은 어중간한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공정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지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지요. 코가 예쁜 사람과 눈이 예쁜 사람, 귀가 예쁜 사람의 얼굴을 모아 놓으면 그것이 꼭 조화롭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사장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MBC는 거기다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만 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불러다가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사유 삼아 가지고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정성은 또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다 경험해 봤을 것이 뭐냐 하면 토론입니다.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토론도 있고 우리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의무적으로 지역별 선관위에서 관장하는 선관위 토론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선관위 토론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너무 공정해 가지고 상호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다. 너무 공정해 가지고 A, B, C, D 순서를 지어 가지고 A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하고 D가 얘기하고 그다음 차례에는 순서 바꿔서 B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C 얘기하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 발언시간이 딱딱 공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이 재미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토론이 보고 싶은 토론입니까? 지

금도 저는 선관위 토론 보면서 저거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토론 같은데 지금 방송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는 '론'이라는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해도 국민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만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약 30% 초반대의 지지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중에 3분의 2가량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국민들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이 비슷한 것을 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관위 토론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오늘 뉴스 어젠다를 보면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게 숫자가 부족하면 억지로 만들어 내서 채워 넣고, 이게 공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왜곡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언론은 확성기의 역할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맛깔지게 확성기 역할을 해내는 언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음성은 확성기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도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방 기계가 조금씩은 보정해 줍니다. 목소리가 좀 가는 분에게는 에코 기능을 집어넣으면 울림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정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음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노래방 기계가 조금 낮춰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게 노래방 기계가 가진 부가기능이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 노래방 기계의 에코 기능이나 아니면 키 조절 기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박자를 못 맞추는 분, 음정을 못 맞추는 분을 잘 부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언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만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아마 가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송 4법에 대해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신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대립구도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토론 방식으로 각자 할 말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렇게 해도 아마 국민들이 믿을지는 의문이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선 보여 주시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갈등을 중재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그 중재과정을 조율해 주시면, 아마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가 뭔가를 논의할 줄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헌이든 아니면 나중에 경제 살리기 입법이든 필요한 것들을 토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은 입법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요, 공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저 개인 이준석에게는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고마우면서도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방송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고마웠던 것은, 많은 분들은 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수 있느냐,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에 특혜를 받았을까요? 진영논리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보수정당에서 스스로 낙인찍어 가지고 ‘저 방송은 좌파 방송이야’, ‘저 진행자는 좌파 진행자야’, ‘저기는 편향적으로 진행하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던 방송마다, 방송국마다, 그런 것만 골라 나갔거든요.

그건 제가 좌파라서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어느 진행자가 있든지, 어느 방송국에 어느 성향이 있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든지 결국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는 너무 공정해서 결국은 듣고 판단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어떤 방송사가 정권친화적이어 가지고 좌파 방송이라고 만약에 보수 쪽 인사들이 지적하면 저는 그런 곳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토론들 다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출연자들이 출연을 거부했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정말 크게 부각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그때까지 30 넘게 살아오면서 젠더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좌파 방송이라고 지적하던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여성주의운동을 많이 했던 신지예라는 분을 방송에서 토론을 통해서 겨루게 해 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장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른 방송국은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 보수진영에서 좌파 방송국이라고 지적하던 JTBC에서 두 시간 넘게 전장

연 박경석 대표와 토론하면서 그것을 이슈화시킬 수 있었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보수당의 당대표가 선거를 치러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뭐가 달랐습니까? 예전에 2011년 말에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편성채널들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 방송은 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1년 넘게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언론을 성향을 나눠서 편식해서 출연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는 그렇게 자명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넘게 이어졌던 민주 진보진영의 종편 출연 보이콧은 그 당시에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지형에서 보수진영이 승리하게 만드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송에 대하여 가진 선입견, 우리에게 좋은 것만 편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정치세력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패배의 씨앗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들 이것부터가 우리가 스스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진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저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동안 그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니면 방송사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정책은 사장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 회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가 더 큰 확성기를 타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방송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KBS와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 집행되는 광고의 수와 광고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왜곡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최근에 수사 관련 다큐멘터리물을 지상파의 PD가 만들어서 그것을 지상파의 채널로 내보내지 않고 OTT 채널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영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장면,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 다 규제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송제작자들, PD, 작가들 모두 창의력 하나로 승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 저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이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수많은 제약과 규약을 놓고 방송시장을 진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혹한 모래주머니입니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규제를 뚫고 방송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더니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있었나라고 놀라워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에서 조제분유나 조제우유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 모유수유를 진흥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유와 우유 광고를,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광고를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가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데이트서비스와 같은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결혼중개업은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그런데 또 그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국제결혼중매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규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하는 동안에 방송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방송콘텐츠 경쟁력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즐기는 서민의 술인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16도 정도로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혹자는 순한 목 넘김을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송광고 규제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술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술인데 뚜껑이 빨간 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광고할 수 있는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방송을 진흥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 사업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용기 있는 PD, 작가들은 내가 내 창의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규제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누가 내 창작물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작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상파방송 방송시장은 그런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없고 규제는 너무 심해서 자기 방송국에서 만든 것을 자기 채널로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영방송 사장을 놓고 정권 잡을 때마다 경영실적이 이래서 안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공정성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느니 하면서 사장 쫓아내고 우리 쪽 사람 심으려는 노력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었던가요, 결국 이 아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은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친모였지 '이 아이가 어떻게 돼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잘되면 안 되니까 반으로 잘라 주세요, 아니면 내가 가져갈게요', 방송과 사장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방송진흥이나 방송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앞으로 방송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예시라도 좀 몇 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잘 진행하는 것이

다. 어떤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인 것이다, 정말 이건 당론으로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들이 ‘우리 당론으로는 시청률 높이는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딱딱 시간 잘라 가지고, 초 단위로 맞춰 가지고 발언시키는 진행자가 좋은 겁니다’, 뭘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과목을 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시험과목도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달려들고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몰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송을 기계적 중립대로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다 알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방송관계법 세 개, 두 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 뭐 이런 법들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무제한토론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 당이 정해진 절차처럼 이렇게 무제한토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정당의 대표자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절대 불연속적인, 정말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이 연속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쌓는 선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이런 법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끝없이 비판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놓친 사람들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할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언론노조라고 언론노조를 비판할 때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방송 진행이나 뉴스 편성상의 수치적 불평등, 이런 늘어진 테이프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언론노조 비판이라도 해 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노조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이 찬사만 받아 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이 언론노조는 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의 권익은 대변해 주지 않냐면서 오히려 언론노조에 항의하는 형태의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다양한 직역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으시고 언론계 출신도 있으시고 과학기술 연구자를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것이 검사를 지내신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해 가지고 모든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계에 계시던 분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꼭 그분이 모든 의료계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각을 우리 국회에 투영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로 오래 지내신 분이 검사의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를 통해 국회에 기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검찰 내부만 본다 하더라도 검사와는 조금 더 활동 여건과 근로 여건이 다른 수사관들도 계시고, 언론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와 계시는 정규직 출신의 기자나 PD를 지내시고 경영진까지 지내신 그런 노조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언론인들만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은 그런 정규직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 5500만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니면 비노조원 언론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방송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물었을 때 별다른 생각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언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들의 처우를 모르셨겠습니까? 어쩌면 이진숙 후보자는 언론사 경영진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여건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아니면 가장 좋은 해법을 낼 수도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안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분들과의 삶이, 본인과의 접점이 적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노동조합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노동조합이 가진 단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방송 노동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노동자가 불편한 만큼 만약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인권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5500만 국민 중에서 너무 큰 다수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까 말했듯이 연구자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역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우리가 살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의정 갈등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리지 않는 많은 간호사 직역에 계신 분들의 과로라든지 간호조무사 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은 채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이 여의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BS 더 라이브의 사례처럼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마지막에는 가장 아픔을 주는 대상은 발언권 한 번 주어지지 않았던,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뒤에서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약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 가지고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스스로를 바친 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는 정말 비장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살려서 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웃펐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이 냉각된 정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제한토론 이어 가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2대 국회에서 흘러 내려온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 구성이 진행될 때부터 결국 일방의 의견을 투영하고 그리고 그 일방의 의견에 맞선다는 그 논리 하나로 결국 극한 대립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논의돼 가지고 이 방송 관련 법들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들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 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결국 사장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또 사장을 해임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피드백 효과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입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오셨던 김홍일 전 위원장, 중수부장까지 지내시면서 명예로운 검사 생활하신 분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국가의 일을 맡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오시게 된 것은 저는 이것은 방송 관련 이력이 전무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좌파 좌파 얘기하면서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 투수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병법을 배우면 병법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차투입이라고 하지요. 이 축차투입을 반복해 가면서 이 전장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모든 정권은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든 아니면 그게 문재인 정권이든 그다음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축차투입을 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패배의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총선에서의 민심이 그리 강하게 와닿지 않아서 더 큰 자극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방통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 경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실지가 저는 계속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TBS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진행자를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TBS라는 또 다른 공영방송국의 재원을 옥죄고 편성에 대한 권리까지 건드려 가면서 결국은 그 진행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TBS에서 방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자는 본인의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TBS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시접속자 수,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지형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 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1등 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 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 정권은 불편해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MBC가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가장 잘 팔린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보기로 유튜브 계속 찾아봐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유튜브 찾아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진행자가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했길래 저렇게 권력이 불편해하느냐 그것을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다시보기로 본 겁니다. 왜 저렇게 권력은 난리를 치는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관심을 정권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 자극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자, MBC에 대해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이 보게 된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이든-날리면’ 논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그것이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으로 들리든 그것은 본인의 느낌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수의 국민이 그 음성을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음성을 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이든과 연계해서 비속어가 섞여 가지고 송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점은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를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 여러 좋은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 반 잔을 따르고 나중에 일본이 반 잔을 채워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찰나의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바이든이라는 표현이었고 그 표현 뒤에 붙은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내용의 이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는 취지로 일정한 기여를 국제기구에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스테이지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 ‘저쪽에서 이런 예산 문제 생기면 뭐뭐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다소 냉소적이고 또는 상대의 곤궁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만 해도 ‘아, 한미 외교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운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반응이라고 한다면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갔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다. 항상 방송 내용이 송출된다는

것을 조심해서 방송에 임하겠다' 아니면 '국제행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성명일 줄 알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의 방송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벌적인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말실수도 가끔 했고 그래서 지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을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되신 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방송을 계속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심을 받으신 것은 그 전에도 우연하게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 어느 수행을 하던 국회의원에게 넥타이 색깔을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하하는 욕설을 하신 것인지 헷갈리는 음성이 보도된 적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기고 당신들이 잘못 들은 거야, 당신들이 왜곡에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 보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관심법까지 써 가지고 교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사와 국민의 청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교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하겠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자산인 비행기이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내가 내 비행기에 누구 태울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거였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지 대통령 소유의 비행기입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일 잘하시라고 수천억대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서 대한항공에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그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징벌적 조처로, 검사가 무슨 구속 기소를 징벌적 조처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를 규제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언론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중궁궐같이 쌓여 있는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의 집무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산에 대통령 당선 이후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을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했고 그 로비에는 국민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그 도어스테핑이라는 스스로의 공약을,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가 왜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지를 보여 주겠다고 했던 그 자랑거리를 없애 버리는 과정도 참 특이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어스테핑을 없애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던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무엇이 불경스러웠습니까? 공교롭게도 문화방송

기자가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차렸던 도어스테핑 공간에 가벽을 세웁니다. 그 가벽이 과연 언론과 대통령을 가리는 가벽이었겠습니까?

애초에 도어스테핑 하겠다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언제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무로 급하게 둘러치면서 가벽을 세워서 없앴던 도어스테핑, 그 가벽 뒤로는 대통령이 보이는 곳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 있게 추진했던 본인의 개혁 과제를 본인의 불편함으로 결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래 놓고는 또 악마화에 나서는 겁니다. 제도는 너무 좋았고 잘 운영하고 싶었는데 언론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언론이 자꾸 편향적인 질문해서 그렇다. 글쎄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 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거악과 싸우는 길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흔한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처럼 도구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방송 4법, 저희 개혁신당은 여기에 찬성하는 투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는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의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2주 전에 제안하셨던 그 중재안은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소간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였던가요. 23살 때였군요. 그 당시에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시위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간 것은 아니고요 광우병 시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 지금의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제가 그 시위를 관찰하면서 그 당시에 경찰버스가 그 좁은 청계천로를 세로로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시위대가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고요.

언뜻 보면 그냥 그런 시위 광경 중의 하나였지만 약간은 이해 안 가서 제가 시위대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에게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넘어가지고, 청계천 광장을 넘어서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위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결국 이 교착상태는 해결되지 않고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긴 시위기간 동안 이견이 좁혀지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건강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설명하는 자세로 다가설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다른 진행 과정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찰나에서 우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는 거고 막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이런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장악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저는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하에서 방송장악하면 뭔가 유리할 것 같겠지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장악에 대한, 사실 양쪽이지요. 양쪽 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송사는 엽관제와 비슷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유지되고 있으면 이 안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사실상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KBS 출신 직능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와 같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과 관련된 오래된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이 방송만 장악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언론이라고 지목하는 그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그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뤄 낸 성과인 것이지 MBC가 덜 괴롭혀 가지고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될 자신감인데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불편한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에 있어 가지고 협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수 국가기관장과 그리고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임명동의제라는 방법은 펜 기자와 펜 언론사와 방송 언론사를 막론하고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본부장, 편집국장의 직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아니면 민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이나 이사진에서 편집국

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어서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무엇으로? 투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단순 다수의, 50% 이상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임명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집권 여당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언론노조가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따라서는 60% 이상의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 사장이 아니라 보도국장 또는 편집국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절대 다수 임명동의제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89%가량이 언론노조 노조원이고 KBS 같은 경우에는 양대 노조가 약 2 대 1 또는 3 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잊고 있지만 방송사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잘 나오는 뉴스,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가 등장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일터이고 그들에게는 평생의 명예입니다.

저는 만약에 MBC나 KBS의 어떤 구성원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찍어 내린 낙하산인데 정말 우리 회사 잘못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겠어'라고 투표할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나는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서 평이 좋고 회사를 살릴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하지 않겠어'라는 사람이 나올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언론인들에게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대안들도 같이 놓고 거론되어야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언론노조가 또 똘똘 뭉쳐 가지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합리적인 인사를 여당 측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임명동의를 통한 거부권으로 언론노조가 만약에 그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언론노조가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혁신당부터도 그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신 언론사 노동자 모두가 임명동의제 투표를 해서 60%, 70%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한 사장이 뛰어난 분이라면 그때부터는 저희 개혁신당, 언론노조의 편협성을 비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런 모험을 걸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들어간다면 적어도 다음에 임명하는 사장, 다음에 교체되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영진이 하는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내야지 그것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MBC는 이미 올해 150억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임명되었던 사장들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넣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도 없으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정말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해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무한 루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난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KBS에서 오래 기자생활 하셨던 이영풍 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영풍 전 기자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소위 보수 우파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영풍 전 기자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시각과는 다를 겁니다. '박민 KBS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영풍 전 기자의 그 발언과 이영풍 전 기자가 지난 몇 년간 겪어 온 과정을 결합해서 저는 판단했을 때 그분의 주장은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풍 전 기자와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은 복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풍 전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KBS 구성원에게 뭔가를 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풍 기자가 구체적으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보직간부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영풍 기자와는 생각이 다른데 박민 사장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이 60%를 상회하는 KBS에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KBS를 지켜 왔던 구성원들과 KBS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 어젠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본인이 애국보수를 자처하고 보수우파를 자처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영풍 전 기자의 시각대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계속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이 당했던 것에 대한 또는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복수인가? 혹시 그것이 젊은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미러링 같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당한 방식대로 똑같이 해 주겠다. 누군가를 면벽수행시키겠다는

얘기냐? 누군가를 드라마 촬영장으로 발령 내겠다는 얘기냐? 말 키우라고 시키겠다는 얘기냐? 기념품 판매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박민 사장마저도 본인이 언론 정상화 또는 언론장악의 선두에 서 가지고 KBS의 사장석에 앉아 보니 누구 바라는 대로 언론노조원들 다 대기발령시키고 사실상 학살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노조원들이 더 많다고 하는, 89%라고 하는 MBC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방법론이 결여되고 목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복수나 아니면 정치적인 린치를 위한 길을 열어 주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또는 어떤 언론사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답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토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대통령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또 하나 못한 거 하나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왜곡입니다. 언론노조원이 89%가 됐으면 그들이 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치를 교정해야 된다. 그게 할당제 아닙니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수치가 발현됐는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교정하겠다고 들면 그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숙청 아닙니까?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한 해법은 호남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안 나올까, 그렇다면 저는 그걸 영남 사람들에게서 해법을 찾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영남에서 불편하게 생각했을 주장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큰 사고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지목할 때 그것은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유태인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했던 일이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 아픈 과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언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 탓하고 좌파 노조 때문이야라고 계속 지목하면서 가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이 무제한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옳다고 오만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고 역사적으로도 로마 공화정부터 그런 비토권, 약자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지요.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송 노동자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그것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것들, 방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무수히 외주화되어 있는 그런 방송가의 일자리들, 아까 제가 단 한순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도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프로그램과 일자리와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던 더 라이브 제작진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방송편성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그 선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두 분의 사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의중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사퇴하게 된다면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OTT 규제 같은 것들도 갈수록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3명의 방통위원장을 내리꽂는 동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우리 제작자들은 전부 규제 적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황당하게 공정위에서는 OTT 요금제를 일할 요금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1만 원 주고 구독하는 OTT를 하루만 시청하고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누가 만든 포퓰리즘적인 공약인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일할 계산으로 OTT를 구독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한심한 발상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30일 중 하루 결제하고 몰아서 본 다음에 200원만 내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드라마 제작합니까? 예능 제작합니까? 모든 제작자들은 한국을 뜨겠지요. 그리고 그 돈 받고 넷플릭스는 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영위합니까? 벌써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 버린 트위치처럼 한국을 뜨겠지요. 그러면 그 넷플릭스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웨이브와 티빙이 뜨겠습니까?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 가지고 집에서 받아 본다고 하면 그것 끊고 내일부터 갖다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에는 가능했겠지요. 왜냐, 계란이나 우유나 신문이나 하루에 일정량이 배달 오니까 끊으면 일할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손대고 있는 OTT 관련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멤버십 아니면 쿠팡 멤버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혀 다른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쿠팡 일할 계산법이 된다고 하면 한 달 치 쇼핑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배송 무료로 다 받은 다음에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문판매법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OTT를 진흥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 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방통위원장후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송장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끝없는 대립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원내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거나 의총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협안을 다시 한번만 가동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논의해 보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MBC 경영진 선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경영진 교체 사유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려고 하십니까.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공정성 시비를 삼을 겁니까, 아니면 슬리퍼를 신었다고 해 가지고 사장을 해임할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150억 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자의 질이 낮으니까 해임을 시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는 MBC 사장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사장보다 더 나은 경영적 성과와 더 나은 이념적 완결성을 가지고 운영할 분인 겁니까? 당장 KBS 박민 사장이 보직간부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다수 임명했다고 KBS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한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 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시험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MBC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청률은 잘 나와 가지고 경영 성과를 이뤄 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남한테 강제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서 도대체 어떤 사장을 선임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절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밀림에 가면요 야수들이 있습니다. 야수들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꼭 야수들이 비슷한 양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야수는 성격이 고약해 가지고 힘을 쓰고 휘두르는 것 자체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살육을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수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재벌도 마찬가지지요. 돈을 쌓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저 권력을 더 모으는 것이 좋아 가지고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빨리 그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KBS에 대한 방송장악으로 인해서 KBS는 과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KBS의 아침 라디오 청취율, 실시간 시청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고 결국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자를 다 바꿨던 YTN 라디오의 시청자 수, 청취율, 피인용 횟수 모든 것이 다 감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을 장악할 거면 장악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장악이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원하긴 원하는데 잡으면 뭐 할지가 불명확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를 설득해서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KBS 수신료 문제 그것도 건드렸지만 수신료를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 있게 만든다라는 초기의 구호와 다르게 지금 재정 상황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KBS에 대한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KBS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달고 발표된 KBS 공약이면 지금쯤 국제뉴스 편성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공개 아카이브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사극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까먹으신 것 같은데 왜 저만 애착을 가지고 매번 검색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KBS의 사극 제작은 비용 문제로 멈췄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국제뉴스 편성은 30% 편성이 되기는커녕 수신료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특파원 중 이삼십 %가량을 감축했습니다. KBS의 특파원 수는 그렇게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BBC나 NHK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방송 정책에서, 여당의 정책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돈도 깎아 가면서 뭘 자꾸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방식으로는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돈줄을 옥죄어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TBS의 돈줄을 옥죄어 가지고 진행자를 자르게 한다. 그래서 정작 피해를 받은 것은 TBS고 그 진행자는 떼돈을 번다. 이런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언론 대책의 한계인 겁니다.

KBS 아침 라디오의 청취율이 잘 나오면 그것을 보수 유튜버로 바꾸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유튜버들을 YTN이랑 KBS의 진행자로 집어넣었더니만 YTN과 KBS의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왜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 같으면서 MBC, 최근에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MBC마저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 그것은 드라마 속 멘트나 이런 거지, 국정운영의 철학이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가 돼서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가 드라마 왕국이고 예능 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 측 과방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만큼 지상파방송이 방송광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면서 저는 우리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셨던 타협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모이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 상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이 깊이 고려한 흔적 없이 거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판단이 제가 아는 국민의힘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의원님들 간에 소통과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의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 봤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주의자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 낼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화 협상이라는 형태로 종전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우리는 휴전이라는 형태로 지금 분단을 맞이했지만 보통 국가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조약이라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결과로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자존심을 살려 주는 방향으로 외교문서를 쓰고 너무 가혹하지 않은 결과가 조약에 담기기를 기대하며 협상문이 쓰여지게 마련입니다. 가끔 가다 이런 강화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르사유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결말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양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된 문구대로 써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우리 국회가 스스로 협의된 안을 써 내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을 해내지 못

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더 첨예한, 나중에 연금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입법 과제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 훈련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두 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주제넘게도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때로는 격한 언사로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와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 방송법에 관련된 이런 극한의 대립이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이 국회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저희가 앞장서고 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준석 의원 아주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성범)

(19시05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가 겸임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방위입니다, 과방위.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 여야 대치, 이로 인한 정국 혼란의 진앙지가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그 진앙지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과방위에서 해 보니까 정말 과방위가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의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하는 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틀 할 때도 저는 왜 이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 이틀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이렇게 서너 명 정도가 이틀 했습니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틀 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흔히들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장관급. 장관이 아니지요.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흘을 했습니다, 사흘. 3일간의 청문회.

사흘간의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였습니다. 정홍원·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 3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다수 의석의 힘에 밀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청문회라는 초유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청문회 내용은 또 어땠습니까? 사흘 내내 제 뇌리에 남는 것은 법카, 빵뿐이었습니다. '극우다', '일본 대변인 아니냐?' 심지어는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드디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오더니만 챗GPT가 작성한 사과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후보자의 50년 전 생활기록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등장했습니다. 50년 전 10대의 시절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한 구절을 근거로 원천 부적격자라고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 검증을 빙자한 망신 주기와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사상 검증, 이념 색칠하기, 어떻게 보면 역매카시즘의 공격 현장이었습니다. 빈정과 조롱,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겁박,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호통과 고함이 난무하고 억지 주장이 판을 쳤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꼭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라서기보다는 그 자리에 이진숙 아니라 김진숙, 박진숙, 최진숙이 앉아 있었어도 야당은 꼭 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고발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발했는가? 그 근거가 더 촌극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서들을

병원에 보냈는데 가 보니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전화도 안 받는 것 보니 아프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미 의사가 발행해 놓은 진단서를 받아 보고도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겁니다. 진료가 끝나면 집에 가서 휴식 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믿기 싫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답은 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발이 수사기관에서 기소 등 수사대상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더욱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낸 경위를 따지면서 담당 진단서를 전달한 방통위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발을 덜덜 떨었고 온몸이 발바닥까지 땀으로 범벅이었다는 게 그 직원을 위로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급기야 119구급대가 국회 본관 6층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여러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께서 주무시는 사이 이 국회에서 심야 119구급대 국회 출동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당 위원들의 청문회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이런 소동 끝에 다음 날 이상인 대행마저 사퇴함으로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상임위원 0명, 1명도 없습니다. 제로 명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지 일곱 달, 그 후임 김홍일 위원장이 또 물러난 게 고작 3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제 물러난 겁니다.

왜 이렇게 야당은 무리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진숙이든 김진숙이든 박진숙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다, 앉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이유,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 가고 계십니다. 8월 12일, 다음 달 12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BC 장악 음모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편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참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아냥대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진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으면 방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임을?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몇 명이 들어왔느냐, 8월 12일 끝나는 방문진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후보가 32명,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이 53명,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하겠다는 분이 45명, 이미 지원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 말씀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할 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방송은 아시다시피 공공재입니다. 날아다니는 전파에 온 국민이 함께 쓰는 공공재화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은 누구나 쉽게 등록·발간할 수 있지만 방송은 정부에서 허가합니다. 라이선스제라 그럽니다,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방송 내면 해적방송입니다, 해적방송. 처벌받습니다.

공공의 재화인 전파를 공익의 최대 담지자인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기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뭘 합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KBS, MBC, SBS 점수 미달하면 재허가 안 됩니다. 방송 못 합니다. 라이선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방통위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익의 담지자인 국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를 분배·관리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야당,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방문진 위원,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 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야당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 하는 것, 국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진숙 위원장후보 임명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임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이 임명돼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야당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지요. 또 가처분이니 뭐니 법정소송도 낼 겁니다.

그러나 방문진·KBS·EBS 이사진 교체라는 결과는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집행된, 이미 시행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빨리 선임해라. 그래서 5명 체제로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 안에서 논쟁하고 협의하는 게 합리적이자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어 네 번째 탄핵이지요. 이번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텨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해 봅시다.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언론정책은 어떻게 보면 당내 강경세력에게 휘둘리는 측면이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주관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계, 언론사 주변 출신 몇 명의 견해만 듣고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초에 탄핵이 진행되고 또 기각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 출신 사장이 들어왔고—KBS 이야기입니다—간부들은 우왕좌왕 지연, 혈연, 학연 찾아 줄 대느라 바쁜 모습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기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고 초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간부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저 같은 일선 기자들은 일하고 월급 받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KBS와 MBC의 경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역대 사장을 놓고 가만히 따져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는 서울신문 출신의 서기원 사장님, 동아일보 출신 박권상 사장님, 경향신문 출신의 서동구 사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사장님 계셨고 이제

문화일보 출신의 현 박민 사장까지 외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KBS 기자, PD 등 KBS 내부 출신 사장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등 차라리 드문 경우가 있지요.

반면 MBC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의 김중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MBC 출신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최문순·최승호·박성제 사장님,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된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이 바뀌는 겁니다. 사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물갈이가 되는 내부 헤게모니 투쟁 양상이 어느 언론사보다 사실 심했던 것이 그 특정 방송사였고 내부 투쟁의 핵심 주체가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평직원들은 견딜 만한 정권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결정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간부진 숙청이었습니다. 저는 '숙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적인 클렌징, 숙청 작업입니다. 방송사가 완전히 두 조각 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해 보니까 보도본부장 출신, 사장 출신들 다른 소리 하고 싸웁니다. 정치판의 여야 대결은 저리 가라입니다. 완전히 방송국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6·25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몰락하고 밀물이 썰물에,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들어오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방송국에 횡행하는 것이 이 시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적폐청산, 공문 한 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분석입니다, 물론.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17년 7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모든 정부부처에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라는 이 한 장의 공문을 전 부처에 내립니다. 2017년 7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이었고 두 달 전 끝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으로서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숨죽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소리를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적폐로 몰렸고 도덕적 헤게모니는커녕 도덕적 권위를 다 잃어서 손가락질 받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적폐청산하라.

그래서 정부 각 기관마다 적폐청산 TF가 설치됐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에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개혁발전위원회.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찾아내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까지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메인 서버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 거기서 나온 자료는 어디 있는지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게 이 시점 이야기입니다.

이 TF가 정부 부처에만 만들어졌느냐? 정말, 방송사에도 만들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진실과 미래, 정상화, 미래 발전, 혁신, 전부 다 조직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 적폐를 찾아내자는, 한마디로 해서 숙청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인 언론 적폐의 상징인 KBS와 MBC 사장·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가 언론적폐 청산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있고 방송사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학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등 공영방송과 경영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내세워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퇴진시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획책, 계획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행됐습니다.

첫째 MBC, 2017년 9월 방문진의 유의선 이사가 사퇴했고 다음 달 10월 달에 김원배 이사가 사퇴합니다. 그때 김원배 이사는 MBC 노조 등의 압박 때문에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진 구도가 바뀌었고 방문진 이사장은 해임됐고 김장겸 사장도 임시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옆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배현진 MBC 앵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는 감사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한 KBS 이사에 대해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원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강규형 이사가 2년간 327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쫓겨났습니다. KBS 노조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규형 이사 김밥집에서 2500원, 식당에서 8000원 사용한 것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스피커를 팡팡 틀어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다른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은 놔두고 이렇게 표적감사 끝에 강규형 이사는 해임됐고 이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고대영 사장이 해임된 겁니다.

이게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공영방송의 간부진 교체 작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이 교체된 이후, 내부권력이 바뀐 이후에 공영방송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MBC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하게, 당시 보도국 뉴스센터 상황을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점심시간 지나—12월 8일은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12월 7일 다음 날입니다—언론노조원들이 일제히 보도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일하고 있던 기존 기자들에게—파업 불참했던 기자들이겠지요—퇴거해라, 여기는 내자리다, 당신들이 있을 자리 아니다라고 몰아냈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 발령도 안 난 상태였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기자들끼리 밀고 당긴 끝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송고 기사는 모두 폐기되거나 밀고 들어온 언론노조 기자들이 이름만 바꿔 쓴 리포트로 대체됐다. 바이라인만 바꿨다는 거지요, 기자들 말로.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대기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호철 전 국장의 설명입니다.

보도국장이었던 저는 조직도상 3단계 급전직하된 보도국 편집부 중계팀 부서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취재기자 3명이 같이 중계팀으로 발령났습니다. 보도국장, 사회부장,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기자는 최악의 적폐였습니다, 그들에게. 2017년 겨울 유독 한파와 폭설이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 파업기자들이 취재부서장, 내근데스크를 점령한 사이 MBC 방송정상화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기현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2017년 대선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 리포트는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정상화위원회가 집중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루는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MBC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그렇게 비판 보도를 많이 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2017년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특파원들까지도 전원 소환 통보라는 희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도쿄특파원이었던 강명일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입사 후 주로 경제부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 활동을 정리하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도쿄로 떠나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사에 다시 돌아오라 해서 안내받은 사무실은 8층 뻥 뚫린 공간에 공용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1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특파원들이 빠진 자리에는 언론노조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이게 MBC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적폐청산 작업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정지환 보도국장의 일화입니다.

계속 조사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미위가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전체 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도국장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일……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인사가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MBC 사장 공모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허태정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MBC 시사교양본부의 국장을 하셨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었습니다. MBC 내부자 본인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전북대학교 강준만 신방과 교수는 지금의 MBC를 두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버린 MBC가 비극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작년 7월 달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인 ‘MBC의 흑역사’에 나온 대목입니다.

요지는 뭐냐?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힘써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방송노조가 장악해 노영방송이 되어 버린 지금은 최소한의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MBC의 흑역사’에 나온 강준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세력은 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다음 10년은 모든 게 뒤집어졌다. 그간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던 지식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닫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방송노조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방송의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폄하하거나 부정한 이가 많다.

강준만 교수 설명입니다.

다른 중립은 몰라도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늘 논란이 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기계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부탁인데 자신들의 편향성을 선과 정의라고 떼를 쓴다.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그랬다면 MBC 사원들은 모두 존경받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인 게 분명한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인 양 굴고 있다.

이게 이런 자, 편을 서는 공영방송의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삼자적 시각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장악기술자, 공영방송 해체기술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큰 잡음 없이 언론을 장악했습니까? 내응세력, 다시 말하면 같은 편이 방송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감을 나누어 온 세력이 내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상화 노력은 왜 방송장악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방송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득권 세력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고 제1 야당 민주당과 공동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숫자가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이 없어지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대목, 적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새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야당은 방송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편향된 방송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측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송을 가져가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이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저는 앞서 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고 정부의 할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나왔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은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이 처음입니다.

초대위원장 윤석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윤석중. 진보당 출신 윤길중이 아니라 윤석중. 아동문학가였습니다, 아동문학가. 우리 다 아는 엄청난 아동문학가셨지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 우산 세 개’, ‘날아라 새들아, 오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노래 만드셨고, 모든 어떻게 보면, ‘짝자꿍’까지 만들었던 정말 아동문학가의 대부이신 윤석중 씨가 방송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때 방송위원은 9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지명 셋,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3·3·3.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충실하려는 의도처럼 보였던 게 초기 방송위원회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3·3·3이었다.

그럼 그 전에는, 방송위원회 전에는 누가 방송 담당했느냐? 사실 없었습니다. 공보처예요, 공보처.

제가 몸담았던 KBS도 중앙방송국—남산방송국—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공보처의 방송국 소속이었습니다. 공보처에 있는 1개 국 이름이 방송국이었어요. KBS의 출발은 공보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공보부가 됐고, 문화공보부의 대명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유고’라고 썼던 김성진 씨, 문화공보부장관 겸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판에 썼던, 보도했었던 그분입니다.

문화공보부였지요. 그리고 방송위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2008년도. 그래서 이때 5명 체제가 2008년부터 16년째 이어져 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빠져 버렸어요. 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2명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이니까 굳이 여야와 정치적 색깔을 따진다면 3 대 2로 만든 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3 대 2.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MBC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추천권이 있고 감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대 2 구조를 투영시키다 보니까 11명의 KBS 이사진은 굳이 나누면 여야가 7 대 4가 됐습니다, 7 대 4. 쭉 지켜져 왔던 겁니다.

현재 KBS 이사진은 6 대 5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구분이 아니라 성향상 구분한 겁니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MBC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MBC는 9명이었어요, 9명. 3 대 2를 투영시켜 버리면 6 대 3이에요, 6 대 3.

KBS의 11명은 7 대 4, MBC의 이사진은 6 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법 규정이

아니라 관행처럼 됐던 겁니다. 잘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사장 때마다 적어도 내부에서 찌그럭찌그럭 작은 소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유지가 잘 되어 왔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KBS는 박권상, 서동구 사장을 썼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사장이 왔어요. 별문제 없었어요.

MBC 노성대 사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중배 씨. 이렇게 나름 돼 왔던 겁니다.

제 말은 뭐냐? 다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적어도 18년간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바꾸는 제도가 훨씬 더 공영방송의 발전에 나으리라는 확신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가.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야당이 내놓은 네 가지 법을 한번 제가 따져 봤어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의결정족수가 2명인데 이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 4명. 왜? 1인·2인 체제가 기형적이라는 이유예요. 1인·2인 체제를 막기 위해서 4명으로.

그러니까 5명 중에 최소한 4명이 나와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최소 출석 인원을 규정했습니다. 의결도 4명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시지요, 5명 중에 4명이 나와서 회의하면 되겠네?

이게 조직을 운영했거나 하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짝수로 2 대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야 간에 찬반이 동수가 되면 어떤 결정도 못 합니다. 2 대 2,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우리가 다 봤지만. 2 대 2, 교착 상태에 빠져서 방통위 일을 못 합니다. 차라리 3명이면 몰라. 홀수로 해야 되는데 짝수로 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정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우리 2명 추천 못 해라고 하면 방통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3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있나요,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완전히 엉망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그냥 1인·2인 체제가 안 되니까 4인 체제로 갑시다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뻔하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공영방송의 공익성·공정성·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추천권을 다양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취지.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왜 그러냐? 가만히 하나씩 따져 볼게요. 21명은 누가 되는데? 어떻게 뽑는 건데, 지금?

첫째, 방송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방송 직능단체라 하면 여러 개 있을 텐데 방송기자협회, PD협회, 기술연합회에서 2명씩 딱 뽑는 거예요. 6명 되고.

그러면 당장 나오는 질문이 방송국이 기자와 PD와 엔지니어밖에 없는 거야? 아나운서도 있고 성우도 있고 비정규직 작가들도 있고 경영직군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만 2명씩의 권한을 갖고 가느냐. 우리는 원천 배제되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이 가능

한가요? 방송 직군으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큰 학회가 3개 있어요. 이 사람들만 할 겁니까?

얼마나 많은 학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멀티미디어학회,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가미디어학회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를 선정해 6명을 뽑는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방통위원회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명 구조였어요, 2단계. 방통위가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낸 법은 세 단계로 늘렸어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법정 추천 단체에서 단체와 인원을 법으로 정해 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 3개 단체에서 6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학회에서 6명, 그러면 여기에서 근원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이사를 보낼 기회조차 못 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대로라면 그나마 어느 경우에는 이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의하면 적어도 방송국 내 소수 직렬들은 이사진 구성에 원천 배제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 단체로 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황정근 변호사라고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의 방송 3법에 대한 법률적 견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이럴 거면 평의회식으로 가, 평의회. KBS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역에서 1명 또는 2명 숫자에 따라서 대의원을 내고 그 대의원들이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원리에 맞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100명이 됐건 60명이 됐건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봤어요. 여기에는 말이지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이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모두 삭제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지방선거 후에 전국 의장단의 의석 분포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 17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2022년도 이야기예요. 지방선거 후에 민주당 소속이 6명 줄었어요. 이것 외에는 왜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일괄 삭제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자꾸 왜 우리만 문제 삼냐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왜 문제 삼느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저 양반이 통이 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3분의 2면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중에 되면 중도적 성향의 누군가가 합의를 해서 될 거라는 나름의,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대 당이 되고 나서는 그래 가지고 완전히 꿩 구워 먹은 소식이 됐어. 없애 버렸어. 그래서 시작된 게, 대신 시작한 게 공영방송 장악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이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지요,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 그런데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에서 공모를 거쳐 인선해 가지고 국왕이 임명해요. 그게 정부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뽑고 국왕 찰스 3세가 임명하는 게 BBC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BBC의 14명의 이사회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왕이 임명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선임하는 BBC의 사장, 이 구조가 BBC 구조입니다.

일본 NHK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의사결정구조는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영위원 12명입니다. 어떻게 뽑느냐. 교육·문화·과학·산업 분야 더하기 8개 광역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2명을 총리가 후보자 명단을 상하 양원, 중의원·참의원에 제출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총리가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우리와 비슷합니다. 상하 양원, 중의원·참의원 모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사회에서 NHK 회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NHK는.

자, 그러면 NHK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말이지요 아베 신조가 살아 있을 때 NHK 이사진을 많이 교체했는데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슨 특징인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BBC 지배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방송종사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는 방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크게 3개가 있다. 핵심 노조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노동조합이 있다.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주요 교섭사항은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개인의 인사상 상담과 조합원 대리, 건강과 안전, 상여금·서비스 복지. 또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는 언론인 노동조합, NUJ(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3만 8000명이 있어요. 또 하나가 엔지니어·전기 분야 노동조합 83만 명이 있

답니다. 3개의 언론 종사자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노사협정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규율하는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고려대 박지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의 독립성이 하여간에 방송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 노조원들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독립 사이에는 일정한 한계를 긋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또한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도 편성에 노조가 개입하거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유로 파업하는 그런 것은 적어도 BBC에서는 없다는 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독일 ZDF, 오스트리아 ORF 여기도 조사를 했는데, 유럽 노조들은 주로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및 정책협약보다 조직대상 업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근로조건, 임금·근로시간·휴가·복지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송의 독립성, 방송종사자의 제약에 대한 자유 이런 데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좀 추상적이고 적어도 언론자유 환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제한적 범위 안에서 항의와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그러니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서 방송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사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마치 독립성과 민주성의 상징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런 사례는 드물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공영방송에서도 독립성, 공영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런 것 필요한데 지금 사실 현재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편성규약, 보도의 준칙 이런 데도 노조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방송사 내부의 서열 문화, 기수 문화, 직종 간의 뭐랄까, 알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에서 만든 잘못된 방송 사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한 이런 정말……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미FTA 반대하면서 ‘주저앉은 소’ 광우병 논란을 키웠고, 하지만 역사는 다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했던 노동조합, 방송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 버려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호주에서도 어디에서도 여기에 관한 기사 1건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바다가 모두 오염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우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적어도 대통령선거 사흘 앞두고 이것을 메인뉴스에, 뉴스데스크에 서너 꼭지로 방송할

사안이었는지. 그렇게 자신 있던 거였는지. 전체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부의 어떤 작동을 한 것인지.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학자는 물론 정치학자들과 사회 각계의 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당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21명 이사 가운데 절대다수가 특정 이념에 편향적임이 여러 차례 노출된 그런 분들로 구성되고 또한 법적으로 저렇게까지 정해 놓으면 많은 방송 내 소외집단, 소외된 소수세력으로는 원천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런 법안이 정말 공영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2017년에는 이 좋은 방송법을 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걱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개혁의 적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조용하다가 왜, 왜 이 시점에서 여당과 합의도 없이 밀린 숙제하듯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저도 묻고 국민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이표처럼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 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사장이,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해 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환경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매체, 유튜브도 있고 다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

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짚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물 한잔하고 하세요.

○신성범 의원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의 위헌성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 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 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의 추천에서 추천 단체 및 인원을 법으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을 보면, 현재의 방송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을 보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야당의 법안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관련 단체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공정성·대표성의 보장을 위한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놓고 보면 현행 방송법처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인사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과 처음부터 참여하는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 법률안은 추천단체로 법정되지 못한 분야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법치주의 원리의 주요 개념인 명확성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 법률안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낸 법률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법률로 공포된다면 위헌입법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첫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영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행사하는 방식과 법률에서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를, 법률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여 배제되는 분야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나 단체를 추천단체로 법정하고 추천인원을 할당까지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21명의 이사회 구성인원을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로 배분하고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첫째, 다원성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46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제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는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에 따른 것일 뿐 어떻게 지역성을 고려할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 내에서의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법정단체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다원성을 충족시킬 많은 분야 및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회계와 법률은 대표적인 분야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제2호 학회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가 무엇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측은 어렵지만 일단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학회나 미디어학회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방송이나 미디어 연구 그 외에도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전통적인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방송언어학, 방송엔지니어링, 디지털, 정보보호 등 여러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방송학과 미디어학만이 공영방송을 연구한다는 전제는 전혀 근거가 없다.

넷째, 방송 관련 직능단체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만 포함돼 있으나 방송연기자,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 등이 속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넷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만일 법규범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문상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회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현행법상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개념인 학술단체,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이 학술단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학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

학회는 과연 회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컨대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는 헌법학회, 민사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학회가 있는데 법인격은 없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임원, 규약, 활동 등 교내외적으로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받고 있어서 이를 학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술단체와 다르고 적어도 회원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학회는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입니다.

규모, 재정 상태, 활동 정도,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회를 분류할 수 있다. 학회의 개념과 범위가 이러할진대 방송위원회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대로 입법되어 시행된다면 방송통신위의 학회 선정부터 분란이 생길 것

이 분명하며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5,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버넌스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법률안이 정한 법정 추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 법정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의 사람을 이사로 추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공영방송 이사회 참여의 기회가 자신과는 무관한 사유, 그러니까 법률이 분야를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이른바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행사의 제한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3년 5월 13일 선고 92헌마80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사정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안이 규정한 추천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단지 법률의 규정만으로 이사회 추천의 기회마저 봉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을 오래 하신 분의 전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황정근 변호사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낸 방송 3법 개정안 중에 특히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단체로 선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연구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방송 직능단체, 저는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는 제가 현업을 해 봤습니다만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기자연합회가 전국의 방송기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있고 대형 구조가 있어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대표성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KBS, 다음에는 MBC, 돌아가면서 하는 임의단체지요.

이 임의단체 세 군데만 6명, 2명의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주겠다. 거듭 말씀하지만 방송국은 이 세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자 탤런트 배우들,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성우, 경영·회계 직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법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라면 그나마 언젠가는 우리 대표도 방송사의 이사가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낸 이 법안에 의하면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법정단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단체, 방송단체, 미디어단체, 학회 6명으로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한국언론학회만 있습니까? 방송학회만 있습니까? 언론정보학회만 있습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경영 직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멀티미디어학회,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가미디어학회 이런 분들은 그러면 또 배제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6명의 권한을 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의적이란 말입니다. 졸속한 거지요.

저는 이런 상식을, 왜 답이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방송언어학, 정보보호학 이런 데에 대한, 현대 방송에 필요한 이런 학회와 전문가들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진 참여는 왜 원천 배제했습니까? 왜 원천 배제돼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2022년, 작년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낸, 몇 명이 낸 법안에 의하면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역성이라는 요소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이것이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심화시키겠다는 법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저는 현업 때 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공 상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장악이든 영향력 행사든 간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언론과 정치, 특히 방송과 정치의 영역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영역,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 정부 입장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침소봉대, 사실 왜곡,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손도 대지 말라, 손 떼라. 자기들은, 자기들은 스무스하게, 아주 쉽게 장악해 놓고 뒤에 와서 교정하려는 우리에 대해서 장악이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부가 손도 못 댄다?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책이나 진공과 화이트,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2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하지 않았던 정당 2명, 야당 2명,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을 3 대 2 구조로 가져왔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KBS 11명에서 7 대 4, MBC 9명 가운데 6 대 3의 관행으로 정착됐고, 이런저런 말은 있었지만 역대 사장들 다 와서 그래도 큰 문제없이 방송국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겠다? 왜 늘려야 되지요? 늘리는 게 과연 공영방송을 발전시키고 국리민복에, 공공선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저의 힘을 총동원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사태, MBC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많은 분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유의해 보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방송사에서 정권의 교대에 따라서 사장이 바뀌고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방송국 내부가 내전처럼 찢어진 경우, 양분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것을 2017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았던 그분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3노조를 만들고 계속 반대를 해 왔고,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현재 제3노조와 당시에 축출됐던, 어떻게 보면 당시 간부들의 전언을 좀 읽겠습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현재 제3노조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총 9개 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 기수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 빈둥거리며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의 길을 막고 그 앞을 지나가라고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노조원들에게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 재가입을 받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하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는커녕 길 안내를 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며 손을 흔들어 지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총장이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한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최승호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보도국 전 보직 부장 김 모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승호 사장은 2017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2017년 12월 8일 보직해임됐습니다.

닷새 동안 어떤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 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 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냐는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 마스터 디렉터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 근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늘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계속하면 망막박리가 재발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전 보도국 보직 부장 김 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

하러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 네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돼 있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 그동안의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지금 당시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해 온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았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 한 통이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로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다. 또 대기다. 이런 증언이지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들에게 유일한 죄라면 파업에 참가 안 하고 그 당시 보도를 했다는 것일 텐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은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던 이상현 부장의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된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이상현 부장과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포함 파업 불

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 왔고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돼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현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런던 특파원이던 박상규 특파원.

사내 권력이 교체된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사측의 조치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 통보, 특히 본인이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콕 등은 지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에 지국 폐쇄 결정은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향후 민형사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죄가 있으니 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지국을 폐쇄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 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보니 계약 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본사는 협상을 통해서 잔여 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잔여 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했고 그 협상은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 기준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급 교육청과 서울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 임대료 협상,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보도본부부 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도본부부.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고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듭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는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급 재부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0여 일간 방치됐다가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한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임 특파원과 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뉴스중계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마침 진행된 명예퇴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동기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급 강등, 부당 전보 등 부조리한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부당 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 경기 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하는 부서인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 방송됐고 뉴스데스크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주말 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자꾸 바뀐 관리자들도 할당된 아이템만 채워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소심한 저항도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러 동료가 함께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언론노조를 견제하고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힘을 키우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MBC 노조가 없었다면 특파원 소환 뒤 그때보다 더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명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상규 전 런던 특파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전 정치부 기자 김천홍 부장의 증언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북받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생방송뉴스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뉴스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뉴스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으로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서포트해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태프들을 아우르면서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 일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맡는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편집

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 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 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새벽에 중계차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군 복무 2년 2개월보다 긴 2년 3개월간의 1차 생방송뉴스팀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는 날씨 중계,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난 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 제작 전반에 대해 많은 걸 알아 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경력 기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쯤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만 니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식의 경멸적인 언사와 태도를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타사 선후배 동료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 줘서 한 말들이겠지만 제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뉴스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라이프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시기를 합쳐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직 후 2년 2개월 정도를 취재기자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겁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보도국장이 저를 불러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생방송뉴스팀은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니니 보도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닌데 4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도록 한 건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보도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을 가긴 가는데 메트로라이프팀 아니면 경제부, 국제부가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정치·사회 법조와 금단의 구역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비파업자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내쫓고는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대충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간판을 단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 다 몰아넣는.

그래도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소개하겠지만 멀쩡한 취재기자들에게 영상편집 업무를 시키고 또 다른 선후배 기자는 각각 기술정보사업, 브랜드디자인 파트에서 본업과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떠올린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저들도 자기들끼리는 좋은 선후배, 형님, 동생일 테고 지극히 평범한 교우관계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동료는커녕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MBC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부 근무하던 김천홍 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베이징 특파원 김연석 부장 이야기입니다. 역시 특파원 강제 소환 이야기입니다.

특파원 강제 소환.

아내는 어느 정도 예감했던 일 같았다. 최승호 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을 예고하는 TV조선 보도를 봤기 때문일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할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고2를 앞두고 있었지만 귀국하면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들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큰아들은 한국 학교로 전학하면 수시 입시의 길이 모두 막혀 버리는 상황이었다. 중국 내 한국 학교 편입을 위해 한 학년을 낮춘 터라 더 이상 학년을 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이 더 지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황 설명을 들을 때 큰아들은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귀국할 때까지 큰아들은 물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아내와 둘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았다. 1년이 넘는 중국생활 내내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가족들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픈 와중에도 귀국 준비를 멈출 수 없었던 아내는 몇 개의 침을 정수리에 꽂은 채 외부활동을 해야 했다. 중국 의사는 침을 놓으며 이렇게라도 화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소환 통보 또 본사 귀국 후 나는 회사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받았지만 아빠의 직장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불편한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큰아들은 예상대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큰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다. 둘째도 중학교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들이 동급생이 된 상황을 불편해했다. 중학교 시절까지 최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자신감도 잃었다.

화가 누적되면 폭발하는 법이다. 낮에는 회사에서 1노조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수험생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결국 몸이 반응했다. 2018년 7월 망막이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쭉쭉쭉 해가 바뀌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그러니까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위에서 보기에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이게 있는 분들만 겪은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좀 뭐라 그럴까 이 일을 해 봤던 저로서는 느낌이 참 남다릅니다.

조사 또 조사, 김기현 전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2017년 MBC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다가 최승호 사장이 오자마자 보직해임된 김기현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만든 사내기구가

바로 정상화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진술 강요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힘을 잃고 사라졌지만 한동안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화위원회는 정치부를 제1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왜 하게 됐는지, 이 리포트는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조사는 결국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후보, 사실상 미래권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견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럼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와서 MBC가 심하게 망가졌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를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MBC 언론노조 민실위와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이른바 대선보도감시단을 구성해 일곱 차례나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치부원 중 절반 이상은 언론노조 조합원이거나 비노조원이었습니다. 저와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은 이런 환경과 수많은 공격, 감시 속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세운 명목이 뭐든지 결국 저의 전임 정치부장이기도 한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조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상위원회가 막을 내린 후 2021년 언론노조가 낸 노보 특별판은 2017년의 대선 보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방송 강령,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선거 보도준칙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편향적 보도로 일괄했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뛰는 대변인이자 기관지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MBC의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보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제 이야기 아닙니다. 김기현 당시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대선 선거 보도 두 달여 동안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객관성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게 모두 일곱 차례, 방송사 선거 보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방심위 제재를 많이 받은 것을 들어 저와 우리 정치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재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위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언론노조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사실상의 보복 보도 아닙니까? 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김기현 전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와 정치부 동료 기자들을 향한 서슬 퍼렇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지난 7년 동안 MBC에서 자행된 불공정 편향 보도로 다시 한번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저와 함께 대선 현장을 지켰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지금 7년째 취재부서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이상의 큰 선거가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전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허 모 전 부국장의 '그런 조사 또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허 모 기자가 아마 북한 담당했던 모양입니다—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재 당시 MBC 언론, 그런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김정남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200만 명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게는 적폐 행위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가 청부보도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2년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후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존엄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도했던 어느 기사의 한 단락이 떠오릅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제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와 관련해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강압과 모멸감은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무호 전 부국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전 도쿄 특파원 강명일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12월에 MBC에 기자로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명일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 고통스러운 경력 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또 PD로서 활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2017년 12월에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3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설마 혹독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과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 편집 등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 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자가 하지 않던 방송 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며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배현진 아나운서, 박용찬 전 시사제작국장과 같은 분들은 조명 UPS 창고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 받은 사무실은 보도국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용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소환된 특파원 6명과 오정환 보도본부장 등 7명이 함께 있다가 그 공간에 다른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여 두 차례 다른 장소로 옮겨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은 제2의 조명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과거에는 예능과 드라마 직원들의 숙직실로 쓰였던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영센터 3층의 숙직실로 쫓겨났고 그곳의 문 앞에 A4용지로 '보도본부 사무실'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역시 아무런 일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4월 14일쯤 되어 뉴스데이터팀이라는 이름의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이곳은 뉴스와 전혀 상관없이 당시 방송기술본부장이 전산업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팀장으로 앉혀 신설한 뉴스 자료정리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 1년 반을 근무하다가 제가 부당 전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갑자기 저를 보도국 내의 라디오뉴스 PD로 발령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저를 라디오뉴스 PD로 발령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같은

시기 언론노조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줄곧 써 오던 이 모 국장을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낸 뒤에는 뉴스데이터팀이 특정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10월에 저를 특파원에서 소환한 것부터 뉴스데이터팀에 발령 내역, 단순 자료정리를 시킨 일까지 모두가 불법행위이고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 위자료와 체재비 등 모두 5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저를 특파원에서 조기 소환한 행위는 보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고 제게 회사에서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미발령 대기시키거나 유령인간 취급한 행위와 뉴스데이터팀에 1년 반이나 두고 단순 자료정리 업무를 반복 지시한 행위 등이 모두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최승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서부지검이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전 보도국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형준 사장과 민병우 감사는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감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는데도 오보를 한 그 기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전화해 보니 자유한국당과 같은 전화번호를 쓰더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언론노조원인 이 모 기자가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보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있고, 총선 직전에 보도한 장 모 기자의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장 기자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회사를 퇴사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의 기자들과 PD수첩 PD들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어 벌어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허위보도 관련자들도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논문조작 의혹 보도를 했던 MBC노동조합 조합원은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에 돌아온 뒤 다시 6개월 징계를 받는 등 혹독한 징계를 하여 오보에 대한 대응조차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기소까지 2023년 4월에 진행되자 회사는 지난해부터 저희 MBC 노동조합원 기자 3명에서 5명 정도를 국제부와 경제부에 분산하여 전보한 뒤 취재센터에 배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저희 전체 기자 조합원 30명 가운데 겨우 10%에서 20% 인원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여전히 팔구십 퍼센트의 기자들이 보도국 취재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뉴스의 방향과 어젠다를 정하는 정치부와 사회부 보조팀에는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보직자에도 적어도 2명은 인원 비례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단 1명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본부장과 인사담당 국장, 기획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직자가 언론노조 소속을 가져도 된다고 하고 있어 회사가 그야말로 민노총 언론노조원 일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

섭 대표노조 결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언론노조와 회사는 전체 보직자 가운데 언론노조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직팀장, 부국장 113명 가운데 97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고 국장 23명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 국장 23명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면 보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 133명의 보직자 가운데 120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2%가 되는 보직자가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노영방송이 아니고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는 보직부장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한두 달 뒤에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직원 비율로 보면 최소한 13명의 보직자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8년을 누락되고 밀리는 고통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떳떳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사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고 차별을 없애고 문화방송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5일,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죽 읽고 있는 이 대목은 2017년 12월 8일 이후 벌어졌던 한 공영방송사의 현장증언집입니다. 적어도 지면에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전달하고 있기에 읽어 보는 중입니다.

전 이주승 경제부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 전까지 기자였습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MBC라는 회사의 기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심지어 가족이 아플 때도 일이 우선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생 직업은 한 가지였고 그래서 할 줄 아는 일도 이것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사고과 최우수 평가도 여러 차례 받았고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적도 없습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치·경제·사회부 등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앵커로도 활약했습니다. 주요 부서 보직부장도 했고 특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큰 오판을 했나 봅니다. 2012년 파업에 불참해서 MBC의 실세인 언론노조의 눈 밖에 나더니 급기야 2017년 파업에도 불참했다가 마이크를 영영 빼앗겼습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파업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철저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이후 난생 처음 스포츠 관련 사업 부서에 배치돼 석 달 동안 아무런 일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뉴스데이터라는 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자료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망신 주기지요. 당신처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중계방송 PD로 4년 가까이 수해현장과 화재현장에서 밤을 새웠고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뉴스 PD는 뉴스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도국 내에 속해 있는 부서니까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꼼수 괴롭힘이었습니다.

‘아, 내 젊음이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활기차게 관리자로서 일

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외부 지인을 만나기도 창피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경력 단절과 그동안 겪은 수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원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참기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 5년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아낌없이 즐긴 세력 아닙니까?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추진하던 법안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은 철저히 공영방송을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지금의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주승 전 경제부장이 안에서 느낀 점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니까. 마지막으로, '공영 MBC의 주인은 정말 국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MBC에서 일한 내부자로서 실토하건데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겁니다'라는 마지막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기가 뭐한데 조금만 더 들어 주시지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인데 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워싱턴특파원 출신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차장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차장이랍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기자로 입사했습니다—딴 데에서 아마 기자를 하다가 경력기자로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부 수원지구로 발령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제가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수원지구로 쫓겨난 겁니다. 제1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에 또 한 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됐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 발령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돼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 자막을 담당하는 AD 업무였습니다. 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달에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 기간 중에 채용된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회사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가 보니 10명의 임원들이 1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뉴스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에 참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그 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기자를 수원지국 등으로 뺑뺑이 돌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는 통보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런 치졸한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개발부 담당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또 부당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보도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의 메일을 보내자 '나도 편집기술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하라'는 간헐적인 답 메일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클래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몸이 안 좋다라고도 말하고 기자로도 영상편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항의를 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기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는 저는 그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저를 급하게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냈습니다.

지금 MBC는 안형준 사장께서 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진희 기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이진희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지부가 2017년 파업으로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후임 사장에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씨가 경영권을 거머쥐게 되자 MBC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복 조치에는 특파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뉴욕특파원이었던 본인도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본사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특파원의 소환과 해외지사 폐쇄는 사규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야 했지만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뒤 MBC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부임 뒤 불과 10여 일 만에 강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3년 임기를 보장받고 뉴욕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되어 가족들을 동반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자는 이로 인해 부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조기 소환됐습니다. 소환된 명확한 이유나 근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국제부장의 전화 통보와 인사 발령, 사내 인터넷 게시물로 조기 소환 명령을 확인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임기가 거의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 소환 통보를 받은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자녀들도 진학이나 학업 계획에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조기 소환을 당한 뒤 필자는 보도본부 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으나 구체적인 소속 부서 발령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업무나 역할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됐습니다. 방치된 방송센터 8층 사무실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후 임시로 만든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역시 업무나 역할 없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새로 조직된 뉴스데이터팀으로 전보됐습니다.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쭉쭉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MBC에서 잔뼈가 굵은 저는 지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희 부장인데요. 말을 했습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게 이진희 부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읽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언론에는 한 줄 나오고, 사장이 바뀌었다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뉴스를 다루고 선택하고 방송을 하는 뉴스센터·보도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길항작용, 인간관계가 작동해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심히 쳐다봤던 겁니다.

제가 확인한 사안은 어찌 됐건 이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노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88명이나 됐고 대부분의 경로가 똑같지 않습니까? 보도 업무 현업에서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자들이 안 한 일에 갔던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4개의 법안은 아쉽게도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아주 훼손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그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도 현실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언론 출신들의 강경한 주장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

당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명 국회 몫을 임명합시다. 그러면 5명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끼리 논쟁하고 싸워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21명으로 늘리겠다, 4명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폐해를 가져올 테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멀리 내다 보시고, 정말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한민수)

(21시57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한민수 의원 시작도 전부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두 번째 소명을 받기 전까지 24년을 기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기자라는 직업을 표현할 때 언론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론노동자로 살아왔던 24년 정치부장과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등을 거쳐서 논설위원을 지내기까지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올바른 기자 한 명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비참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으며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자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키기 어려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얘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몇 분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어느 분이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본인의 SNS에 게시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헌법의 가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며 대대적인 언론장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처럼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수많은 언론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던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걸핏하면 각을 세우고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의 곁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송정상화 4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이 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명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저지하겠다고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MBC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법을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꼬박 새워 가며 싸워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5년 권력 그것 뭐 대단합니까? 이제 3년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영원히 집권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이 영원히 야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도 방송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정치 세력도 이사회를 지금처럼 장악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막아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반대토론을 추진케 한 장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할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바꾼 후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졸속 의결하고 이를 빌미로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준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 YTN을 하루아침에 민영화시켰으며 관변단체를 동원해 무리하게 MBC에 감사원 감사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MBC의 사장을 바꾸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취임 후 2년 가까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언론장악·방송장악 행태를 속인다고 속여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방송 4법의 재발의를 놓고 강행과 날치기 방송장악 4법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찬성토론을 준비하며……

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들어 보셨지요?

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질문은 윤석열 정부의 윤 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탄압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감정도 정쟁도 의도하지 않은, 한번 제가 물었던 게 의심이 되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물으셔도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탄압 사례에 대해서 말을 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1. 방송사 재편.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을 임명하면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 이사회에 보수성향 인사를 대거 배치하고 친정부적인 뉴스 채널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KBS의 새로운 이사장은 일부 인기 뉴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배제하며 과거 정부를 지지하는 편향된 보도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챗GPT가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 증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18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이 언론사나 기자 또는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인물에 대해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세 번째, 언론자유지수 하락.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47위에서 62위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순위로 언론자유가 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려는 시도와 이에 따른 언론인들의 심리적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만 묻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 언론자유를 알고 싶은…… 케이팝 때문에라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에서도 분명히 챗GPT에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대로 뜰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집권당, 언제나 집권당임을 자각하십시오.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 현실 무겁게 받아들이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방송·언론탄압 정책을 쓰면서 무자비하게 신문의 헤드라인을 바꾸고 온라인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며 방송에 땡윤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 개혁이든 언론 발전이든 단골로 인용되는 1942년 미국에서 설립된 허친스(Hutchins) 위원회가 5년 뒤인 1947년에 발간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성취하려면 정부의 개입, 규제, 통제하는 권한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공중의 판단을 형성시키는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정부의 권한도 제한해야 합니다. 자유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하는 정부의 범위를 분명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개입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균형을 다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분명히 제한돼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방송정상화 4법의 입법 목적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마크 커티스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기만의 그물망을 짜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력에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총선 전에 아까 챗GPT도 얘기했듯이 저와 우리 민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KBS를 정말로 순식간에 망쳐 놨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 방송정상화 4법을 위한 싸움을 이어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언론지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언론탄압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 언론탄압 사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언론탄압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1974년·75년에 자유언론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1980년에 언론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980년,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저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도 저랑 같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아마 가장 추앙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사람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끝부분에 가서 시간이 된다면 이진숙 후보자 반대 이유를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도 이진숙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라는 규정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저를 포함한 많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건이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어떻게 그런 분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5·16 군사쿠데타도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물어보는데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기시지요?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라도 보실 우리 국민들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자리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3월 집권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4월부터 언론 사주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친정부 성향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통폐합 대상 언론사를 선정합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는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에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 대상자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드라이하게 문구를 읽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시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됐습니다.

통신사의 경우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을 해산하고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통합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단일 통신사 연합통신을—지금 연합뉴스의 전신이지요—만들었으며 통제가 용이한 하나의 취재원에서 기사가 공급되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거나 해직 이후 취업 제한, 생존권 위협 등으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은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모가 밝혀졌으며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것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그다음은 꼭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 ‘MBC 정정보도 소송과 세계 언론자유지수’, 제가 설명드리려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거니까요.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소송, 이것 하도 유명하고 조금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잊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대단하지요.

2022년 9월 MBC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괜찮지요, ‘쪽팔려서’ 하는 그런 일들은? 보도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날리면’ 몇 시간 걸린 지 아시지요? 그 ‘날리면’을 바꾼 그분이, 그 수석이 저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언론사는 다르지만. 잘 아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요, ‘날리면’ 찾아내느라고.

제가 새벽에 이 얘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김 모 수석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취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막 육두문자로 욕해도 됩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본인도 선출됐고 우리도 선출된 권력인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024년 1월 12일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 하도록 판결을 합니다.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였으며, 그해 7월 19일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아, 이름이 나오는군요.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외교부 측에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 반발합니까?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파악한 후에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언론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언론자유 수준을 측정하여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언론인 및 언론 매체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계하는 정량 평가와 언론

인, 학자 등 언론자유와 관련된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성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2위로 지난해—지난해에도 윤석열 정권이었지요—47위보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15위 정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 31위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졌으며 2017년 63위에 머물렀다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이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였지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님이셨지요,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전직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땡윤뉴스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 안 보는데. 세계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공영방송사의 고위 경영진을 임명 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이사진도 마찬가지고 방문진법도 개정해서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 환경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언론 소송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우려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 이렇게 자료 준비도 잘해서 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별로 언론 관련된 이슈를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속된 말로 기가 찰 겁니다,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면을 보시면 정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숨을 쉬고 사는 건, 민주당 의원들만 숨을 쉬고 삽니까? 다 숨을 쉬고 살지요, 국민의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짚어 볼 이 모든 사건들이 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곤두박질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지를 쭉 설명드릴 텐데요 보면서 제가 덧붙일 말 있으면 같이 붙이겠습니다. 아니면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언론탄압, 방송장악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어느 국민도 하라고 하지 않았고 어느 국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난 지, 본인이 스스로 중단해 버린 지가 꽤 됐지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아,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의 교육방송 전환 발언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하게 됩니다.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7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께서 KBS를 비롯하여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일 뒤 감사원이 방통위 정기감사를 돌입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송 얘기도 했던 그 유명한, 요즘 우스갯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후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입니다.

9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종편 보도전문채널 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 자택과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압수수색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유출과 관련해 MBC 보도를 항의하기 위해 MBC를 방문합니다.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MBC를 방문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다들 기억하시지요, 이른바 윤석열차—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 선정과 전시에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9일 백오십구 분의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제 기억으로 한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그때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지금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고 경찰청장도 임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런 정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11월 9일 날 동남아 순방에서 MBC 취재 제한을 통보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 왔습니다. 청와대 기자들은 자사 비용을 대고 대통령과 해외 순방 정상회담 일정을 보도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내고 갑니다. 그 전용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가용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순방을 가야 되는 기자를 배제했다? 이러니까 언론자유지수가 급전직락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분노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켜켜이 쌓여 있지요. 폭발할 시점을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11월 11일 기획재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1월 14일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게 왜, 아시지요? 정부에서 명단도 공개되지 않게 막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우리 차고 있는 리본, 근조리본도 근조 글씨를 못 쓰게 했습니다, 뒤집게 하고. 한번 돌이켜보시면 도저히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날 했던 북부지검이 또 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11월 21일 그 도어스테핑 출근길 문답을 대통령이 중단합니다.

11월 23일, 22년입니다.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의결 처리합니다. 대통령실은 천공 관저 이전 개입설을 제기한 김종대, 김어준을 고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합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6개월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합니다.

12월 7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를 압수수색합니다.

12월 12일 대한민국…… 이건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MBC 170일 파업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 중요한 판결이지요. 서울시 TBS 내년 예산안 88억 원을 삭감 확정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YTN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허설 방송이 돌발영상에 나갑니다. 이것을 또 사내 징계를 하겠다고 추진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KBS 공공성 강화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국민의힘은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의 균형을 맞추라며 방송사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더라, 보수 참칭 패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는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의혹으로 방통위를 세 번째 압수수색합니다.

12월 29일 YTN은 돌발영상 제작진에 경고를 하고 주의 조치를 하며 보도제작국장을 교체합니다. 더탐사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일 날, 12월 31일 김어준, 주진우 이분들이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작년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벽두부터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생략하고—올해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선일보와 별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내용도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월 4일 날 국무조정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통위 감사를 실시합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사 간부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SBS 뉴스에 보도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한 언론사의 전직 간부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 같은 언론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이런 수사 행태나 이런 것은 범죄 혐의와 의혹과는 별도로 지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마저도 옹호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죽음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항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모 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1월 6일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게 YTN을 민영화시켜 버리는 현 정권의 야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는 걸 요일별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검찰은 김만배 언론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것 저도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수사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진 차기 MBC 사장 선임 논의는 부당한 알박기'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1월 11일 감사원이 MBC 대주주 현장 방문 조사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고리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직원 구속영장심사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순방기에 MBC 탑승시키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12일 TBS 이사회가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을 결정했고요.

1월 13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을 소환합니다.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는 MBC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연구위원을 소환조사합니다. 소환조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당시에 국정원과 함께 진입한 검찰, TV조선…… 너무 많으니까 엉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5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방심위 심의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요.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MBC 뉴스데스크에 간첩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라고 주문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1월 28일 우리 민주당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주관사 입찰 제안요청서 공개하고 매각 일정을 12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2월 2일로 갈까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민주당, 우리 당이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고요. MBC 사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2월 3일 날 방통위가 신년 업무계획을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팩트 체크 사업 정책을 삭제하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의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를 고발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천공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술인 같던데 제 기억에.

2월 15일 날 검찰은 TV조선심사위원장직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2월 16일 날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

통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TV조선재승인심사위원장인 현직 교수를 구속하고 네이버는—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언론사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유선영 TBS 이사장이 중도에 사의 표명을 또 합니다. TBS 언론노동자들, TBS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TBS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방문진이 MBC 신임 사장후보로 안형준 후보를 선임합니다.

2월 22일 민언련이 TBS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조례안 발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2월 27일 지금 안형준 MBC 사장 주식 차명 소유 의혹 해명을 하고요. 국힘이 정당 민원을 공개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고소합니다. 이것은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번에 또 아주 긴급하게 졸속적으로 연임이 되었지요, 방심위원장에. 방심위를 또 장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 2월 27일이 중요합니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가 있고요. 경인일보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월 2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발언격인 대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 여기까지, 이것 양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3월 6일 날 보수 성향 언론인 모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출범을 합니다. KBS 감사가 4월까지로—세 번째 감사 기간을 얘기하지요—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신인 성동규 교수라는 분이 한국경제TV 이사로 선임되는군요.

그리고 3월 8일 TV조선이 600점대 후반의 역대 최고치 점수를 받으며 재승인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전 재승인심사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직 교수가 구속기소됩니다.

3월 10일 대통령실은—다들 기억하실 겁니다—현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를 이슈화합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가 내정돼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여권의 방통위원들이 3월 14일 야권을 패싱한 채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이 3월 15일 KBS 부당징수 수신료 7억 원 환급을 통보합니다. 3월 15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물론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통위를 5인 협의 체제로 만들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3월 20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통과를 시키는데 7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으로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비헌법적으로

방통위를 엉망진창으로 무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다 대고 야당에다가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저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아는데.

3월 2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이 역대 최고점으로 3년 조건부 없이 재승인을 의결을 받습니다.

중요한 인권보고서 하나 있군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서 언급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보면 황당하겠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징수방안을 쟁점화하고 KBS 여권 이사들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아까 KT 앞서 가지고 대통령 고교 선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일감 몰아주기, 사외이사 접대 등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분이,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22일 날 한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으니까 이틀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민주당 장경태·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KBS법을 영구징수·조세갈취 악법—이 말도 참 대단합니다—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EBS 수신료 확대 등 방송 관련 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 날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언론단체들이 구속 기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셔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3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편을 들어 주지 않으면 허위 정보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KBS 측에서, 이때까지는 K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때 논란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수신료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던 거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제안이라는 형식을 띠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제안의 신뢰성, 근거나 방식이 없어 가지고. 그때 언론노조에서 수신료 국민제안은 여론 조작극이라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4월 11일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선일보를 넣었는데 특정 언론사니까 제가 내용은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미 감청의 부당함을 따지기보다

능력을 키우자, 이게 아마 이때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로부터 도청되고 있다는 의혹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공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YTN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매각 주관사 선정 단계부터 입찰 번복과 유찰이 거듭됩니다.

아, 여기 나옵니다. 김태효, 지금도 실세로 외교안보 쪽에 자리 잡고 계신데 여전히 있지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된 질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파원들이 묻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는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가지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또 그때 무슨 얘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 도청 자체가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때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지요. 도청을 놓고, 도청은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까?

아, 기억이 납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웃으면서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천공 보도, 아까 대통령실이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주째 대통령실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재단이 그에 앞서 가지고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그것 기억나시지요, 일본 가 가지고? 그 기자의 해외연수 취소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MBC의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기소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적 기능이 위축되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을 놓고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4월 17일 보수 성향 매체와 단체 출신으로 대다수가 구성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특위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그런데 핵심 과제에 연관된 것에 현업 언론계나 포털업계 이런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지를 정리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해외 언론, 취소 과정에 대해서 언론·시민단체들이 비판 언론인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YTN 매각이 이때까지 또 세 번째, 마사회의 YTN 매각 주관사 선정이 세 번째 유찰이 됩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지요.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친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라며 과거 우리 당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때와 다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가만있을 일이 없지요. 보도자료를 냅니다.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털 자율심의기구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자협회나 이런 곳에서 정부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를 의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체부가 임명한 언론중재위원 중 10명 중 4명이 윤석열 후보, 인수위 때지요. 캠프 출신, 후보 때군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언론자문위원 출신들이 차지했다는 기사가 있고.

이건 열일곱 번째 압수수색인데 지금 저 숫자를 보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5월 1일 날 감사원은 9개월간 KBS 감사를 합니다, 세 번의 연장 끝에. 청구 항목에 위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송장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마사회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선정 입찰, 이게 매각 주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소를,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된 거 기소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얘기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우리나라 순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그제인가요?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국회에 출석을 하기로 다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면서 불출석을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들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힘만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야당들과 함께 탄핵발의안,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니까 이제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망갔다고 저는 봅니다.

직을 또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난해 5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으로 서울법대 동문인 그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합니다.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때 야당 추천 몫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45일째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TBS가 5월 8일 날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강령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검찰은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정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합니다. 아마 기소됐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요. 여권 인사들이나 여권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방통위 장악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착수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5월 14일 문체부장관의 조사권을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바이든, 쪽팔려서’ 외교부 정정보도 소송이 시작됩니다.

5월 22일 날 정부 여당 압박 속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운영이 잠정 중단되고 이강택 전 대표 등 TBS 노동이사 2명이 사퇴를 합니다.

5월 30일, 경찰이라고 가만있겠습니까? 검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자료가 무엇이었냐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국회 들어와서 예전에 기자로 취재만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김문수 의원님, 아직 인사청문회 안 하셨지요?

(○김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하면 자료가 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오는데 그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이만큼 자료가 오잖아요. 기자들, 우리 출입기자들 정말 수백 명 있는데 상주기자만 제 기억으로 한 6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취재를 합니다, 의원실을 통해서 하든 뭐 이렇게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이 자료는 MBC 기자뿐만 아니고—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수많은 기자들, 정말 거의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국회 출입기자들이 아마 입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 혐의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압박을 하고요. 서울시는 TBS에 7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아, 이날이군요. 면직을 압박했는데 대통령이 임기 두 달을 남겨 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합니다.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두 달을 못 참아서. 그런데 보니까 두 달이 아니고 지금 뭐 이틀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대변인을 6월 1일 날 교원대로 발령,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막 그럽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6월 5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언론과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지칭하는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이동관, 본인은 싫어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칭을 하니까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이 사장직을 내려놓겠으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해 달라. 이제 KBS 여권의 이사들은 이사회와 집행부 동반 총사퇴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KBS 사장이 물러나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가 많은 인용이 되는데요 이때 6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뉴스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상실해서 신뢰지수가 아마 28% 같습니다. 46개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46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방통위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쫓아낸 거지요. 쫓아내고 막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군요, 6월 16일 날 입법예고 40일을 10일로 단축하고. 다 그래요, 이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예전에 제가 단통법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아, 그건 제4이동통신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고 그 정책이 철회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통법 폐지 절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이 한상혁 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 쭉 한번 보시고요.

7월 3일 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의 민영화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년도니까 올해겠군요, 문체부가 올해 연합뉴스 지원금을 공란으로 해 가지고

1차 예산요구안을 제출을 해서 공영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논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KBS 측이 이때는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야당은 방송법에 TV 수신료,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드디어 감사원이 등장을 합니다. MBC 대주주 본감사에 돌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상경영을 선포한 KBS 김의철 사장은 법률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계속 수신료 문제가 7월 11일, 12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 했고,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 버립니다. 윤 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의 시작입니다.

7월 13일, 대통령은 해임을 재가하는군요, 윤석년.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은 방통위 검사나 감독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기구를 구성합니다.

이제 7월 24일 날,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도쿄전력이 MBC·한겨레에 대한 취재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아닙니까? 정부가 오염처리수 얘기를 하다가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하면서 오염수로 했던 제 기억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처리수라고 하더군요, 여당 위원 질의에. 아무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를 시작합니다, 7월 25일 날. 검사 출신의 여권 추천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가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졸속이지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EBS 이사 해임청문을 통보합니다.

여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당의 추천 위원이거든요. 여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이 공영방송의 개념조차 없다며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KBS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고 언론계의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이동관 씨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이틀 뒤에 배우자 관련 인사청탁 의혹 있었잖아요,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 법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아무튼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할 만한 입장을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KBS, EBS에 이어서 MBC 방문진 이사도 해임을 추진합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KBS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악을 하고 MBC는 법원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보내고 김홍일 보내고 이번에 이진숙까지 보내서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시절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보궐 이사에 서기석, 차기환을 추천하고 임명을 합니다.

8월 1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을 하고요.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강행합니다.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청문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반발을 합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8월 15일 날 이동관 씨의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씨는 VIP 격려 전화—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언론인 관리 문건 공개로 파장이 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MB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끝나고 등장한 MB 정부는 모르겠어요. 이게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건지 자신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태생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생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언론을 관리하고, 관리라는 표현도 맞지 않지요. 언론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들, 국정원도 동원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집니다. 거기에 이동관 대변인이 끼어 있는 문서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부터 13년 2월까지 집권 기간인 MB 정부의 그런 대언론 정책, 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탄압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더 안 좋게, 악질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짚어 보겠습니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부결이 됩니다. 이동관 씨가 그 YTN 방송사고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법인카드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걸 정말 트집 잡아서 모욕 주고 쫓아낸 다음에 그 대단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이때 후임으로 옵니다. 방통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8월 22일 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한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씨가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내정이 됩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강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바로 임명 재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 원 예산을 삭감해 편성합니다.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합니다. 방심위의 여권 위원들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면서 긴급 심의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 규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동을 겁니다.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된 예산을 삭감합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이게 순수한 의도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없어진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TF 튼다고 할 때 방통위 직원들이 안 가려고 했다는,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니까. 이분들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기피한다, 피한다는 보도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부 직원들이 볼 때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요. 이런 가짜뉴스 신고센터나 TF 만들고, 신고센터였습니다. 만들어서 정권의 폭주나 무능이나 이런 걸 질타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말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라는 이런 오명을 씌우면서 탄압할 가능성,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저도 뭐 24년을 했으니까요—워치독입니다. 권력은 불편할 거예요, 언론이 살아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도 많은 기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 취재할 때도 '저 기자들만 없으면 살 만한데' 이런 농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언론은 불편한 겁니다. 유착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야 되고 권력은 언제나 긴장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이렇게 일본식 용어가 있습니다만 취재하고 돌아다니지요? 그러면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워치독이지요. 도그(dog)가 들어 있다고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워치독이 그래서 정말 언론은 워치독입니다.

랩독은, 애완견은 저 반대지요. 최근에 야당의 전 대표가 정말 무자비하게 검찰이 주는 정보만 갖고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만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랩독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던데 언제 나온지 아실 겁니다. 2016년, 2017년…… 우리 1600만입니까, 1800만입니까?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을 시점에 이른바 언론 부역자들 명단이 언론단체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랩독, 애완견입니다. 그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지요,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분노할 일 아닙니다. 저도 기자 오래했지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많

은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특정 언론들은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들었고…… 2016년, 17년도에는 있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프게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언론은 그런 본연의 기능이, 워치독의 기능이 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TF 공식화 하다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또 9월 7일 날 방통위가 지난 대선 가짜뉴스 관련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얘기할까 말까요? 가짜뉴스 얘기 나오면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에 남을 거니까.

대선 때 가짜뉴스, 저도 그때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 재임 때 국정감사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뭐 했습니까? 사진 들고 나와 가지고 조폭 자금 20억 원 수수했다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충격적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말 그대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 국회의원 징계 받았습니까? 사과했습니까? 그 뉴스 보도한 언론사 정정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가짜뉴스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0.73%, 저 그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찍었으면 선출된 권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 것마냥 마구잡이로 시스템 망쳐 가면서 검찰권 남용하고 마구잡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고, 기소해 놓고 또 기소하고,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검찰 수사했습니까?

관련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가지고요 우리 당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정말 후안무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검찰권 그렇게 남용하면서…… 멀쩡한 검사 우리 당이 야당들과 함께 탄핵합니까? 그분들이 멀쩡합니까? 온갖 비위 혐의, 비리 혐의 받고 있잖아요. 소명하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약간 빗나갔는데 빨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팽 당했던데. 그분 걸핏하면 결기를 보입니다. 누구한테?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만. 그 결기를 용산에 한번 보여 보세요, 제발 좀. 정말……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입니까? 기도 안 찹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크게 흥분한 건 아니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분명하게 역사의 평가에 이어서 그것에 합당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엄정하게, 다시는 이따위 짓을 못 하게 책임을 물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가면 정부가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YTN 지분 매각 사전 공고를 발표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대정부질문—여기 와서 그랬겠군요—자리에서 ‘국기를 흔드는 공영방송 존립을

재검토해야’…… 대단합니다. 류희림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9월 5일은, 그 당시만 해도 류희림은 방통심의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1일 법원이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법원이 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정말 합리적 판결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가지고 이 방문진법을 또다시 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이때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KBS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BS 이사회가 9월 12일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합니다. 하루에 엄청난 일이 많았네요.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모두에게 법정 제재를 예고합니다.

가만히 있을 검찰이 아니지요. 9월 14일 검찰은 뉴스타파,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인용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을 고발합니다.

왜 제가 잠시 머뭇거렸냐 하면요 계속 이걸로 나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도, 청문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신학림, 김만배 뉴스타파 기사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밝혀 보자고. 억울하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 억울한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시킨 겁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당은 그런 캠페인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인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2022년 3월 초인데 5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4일인가 5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을 하자면서 만약에 윤 후보나 나나 집권하는 사람은 특검을 해서 특검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그것 책임을 지자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장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지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계속된 재촉에 촉구에 끝까지 머뭇거렸어요. 영상 있을 테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영상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특검법, 본인이 거부권 썼습니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 대장동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할 자격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부결시키고? 정권 잡으니까 뵈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정권 어떡합니까? 이제 3년도, 정상적으로 가도 3년 안 남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어느 한쪽을,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하는데요. 한쪽을 꼭,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옹호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검찰권 누가 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겁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줍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까, 검사들끼리? 아닙니다. 국민이 주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검찰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입맛대로 씁니까? 자기편은 부르지도 못합니까? 창피하게 휴대폰 내면서 압수수색당해 가면서 신분증 내면서 경호처 건물 가 가지고, 그게 소환 조사입니까? 정말 창피해서. 그걸 소환 조사라고 하고 와 가지고 조사했다고 말하는 그 검사들, 집에 가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결기 갖고 그게 뭐 검사입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가 가지고 협박이나 당하면서, 지금 조사하는 것 나가면 나 중단한다고. 말이 됩니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찬성토론만 아니면 이 얘기 갖고 한 10시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 출신과 그분들 모두.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고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그런 결과 나올 겁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9월 15일로 가겠습니다. 9월 14일 뉴스타파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9월 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합니다. 방심위는 방통위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제재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경찰은 이동관 위원장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 제 기억에 이 압수수색영장은 아마 검찰도 부끄러웠는지 반려했던 것 기억나는데, 밑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최고 수위의 제재 과징금을 의결합니다.

방심위나 방통위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지난 대선 때 똑같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보도했던 매체들과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언론을 옥죄고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불편한 언론을, 정말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재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9월 21일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한다면서 인터넷 언론사 심의를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9월 25일은 감사원이 방통위 본감사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 9월 26일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동관 인사청문 자료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KBS 사장후보로, 다른 분들은 얘기 하나마나겠지요, 아무튼 박민 씨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그때 벌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좀 일었던 것 같은데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후보 놓고, 임명 제청을 놓고 무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방통위에서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압박을 하는 행보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는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공정성, 객관성, 이 공정성이라는 게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 공정성 조항 때문에 심의 규정 9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역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그 수치가 어디 있을 텐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KBS 보궐이사에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추천이 됩니다. 10월 12일 대법에서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10월 17일 KBS본부는 박민 KBS 사장후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기자 출신, 법조기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클럽 회장 출신인,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에 재가를 합니다.

10월 18일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10월 23일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지요. 유진그룹이 3199억 원으로 YTN 최종 낙찰이 됩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회의 끝에 서기석 이사장 해임을 부결시킵니다.

이제 10월 30일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처리하면, 지금은 이것 논란되지도 않지요. 거부권을 밥 먹듯이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당시에는 행사 건의에 대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에 대한 형사고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떨고 있는 거지요.

11월 10일 KBS 사장 임명도 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합니다. 12일 낙하산 의혹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합니다. 11월 14일 KBS 박민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참 그런 모습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주요 본부장들을 다 대동하고 나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일방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9시 뉴스 앵커가 막 발표하고 또 그 사람도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파보도 기자·PD 즉각 업무 배제한다고 밝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의 총선과 관련해, 총선 전이니까요. 요직에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청문회 때도 어떤 분이 증인인가 참고인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저도 기자들을 많이 아니까, 고위직들도 많이 아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들어 보면 맞는 것 같아. 지금 KBS 박민 사장이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속도도 내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KBS를 장악하고 땡윤뉴스를 만들고 앵커도 인사

도, 고별인사도 못 하게 다 쳐내고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박민 약하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박민 약하다고. 그래서 더 센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상식 참 대단하지요. 박민 사장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친할 정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기자를 같이 했으니까, 저보다 좀 위인데, 선배인데.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종사했습니까 부역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모 방송사의 국장급 기자가 저한테, 후배가 해 준 얘기였는데. 그래서 '설마 저렇게 잡는데 뭐가 약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좀 미흡하대, 저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 어떤 증인인지 참고인인지가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땡윤뉴스 갖고 안 돼, 그러면 땡김인가? 땡김뉴스 만들려고 하나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합니다. 19일 날 법원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를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은 또 사퇴를 했지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인 것으로 11월 20일 날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가 정상적이라면 논란이 되고 심사 과정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제척이 되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지요.

가짜뉴스센터 직원의 전보 요청에도 방심위가 거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YTN 낙찰한 유진기업은—자기들 기업 내겠지요—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고소하고 해서 노조탄압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합뉴스TV 이것을 또 인수하려고 하는 을지학원 을지재단, 결국 지금 잘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12월 1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논의가 되고 발의가 되니까 처리 전에 자진사퇴를 합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12월 10일 날 대통령은 김홍일 추천, 어디 가서 했을까요? 자수성가해서 방송통신 분야 국민 입장에서 볼 것.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자수성가를 해서 방송통신 분야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또 참석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읽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줄였습니다. 줄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에는 축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일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참, 치졸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이버가 총선 앞두고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 이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다음에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말 전무후무한, 저는 이 또한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봅니다.

방심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해 심의 요청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됩니다. 친동생, 매제 뭐 아무튼 엄청난 가족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당일 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민원사주, 청부민원 의혹이지요. 의혹이 터지자 인용보도 금지 및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섭니다. 그다음 날은 감찰반까지 꾸렸네요, 12월 27일 날.

12월 29일 대통령은 또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것 보시면 방송사 과징금이 수치로 나옵니다, 3개월간 11건. 정연주 방심위원장 2년간 18건입니다. 이것 뭐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자, 이제 올해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박민 사장이 지금 용산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네.

1월 3일 날 민원사주 의혹 관련 논의 전체회의에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취소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KBS, 전두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꾸라고 강제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됩니다. 아니, 이런 사장을 약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각 체크 영상을—출근 지각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잘 믿기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대단한 권익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법 위반 행위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죽 가다가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정말 그러면 됩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질질 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건희권익위원회라고 국민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국가기관 하나가 대통령 부인 건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모든 국민의 조롱이 됐습니다. 새로운 부패의 채널을 열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댓글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본 게 아니라 다 보셨을 텐데.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부인을 통해서 받으면 되겠다,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엿을 300만 원어치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주면 되냐, 그것 다 올라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참

창피할 거예요, 검찰 못지않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흉기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테러를 당하고 헬기 이송했다고 그것을 관련된 소방청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결정 내리고, 창피합니다.

1월 12일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인 해촉 건의를 의결해 버립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월 15일 경찰은 방심위 민원상담팀을 개인정보 유출로 압수수색을 한답니다. 이러니 중요한 사건마다 국민들과 우리 야당들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하시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들, 핵심적인 간부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둘이나 들어 있잖아요, 공수처에. 최근에 이제 회피한 것 같던데, 그분들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제가 경찰의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날 옥시찬·김유진 심의위원의 해촉을 재가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1월 19일 날 이정옥·문재완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이 거론되고 바로 22일 날 대통령은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 위촉을 합니다. 여야 구조가 1 대 6이 됩니다. 야권 추천 위원 심의 중단, 그래서 6 대 0이 돼 버립니다. 편향성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공정성은. 이래서 방심위가 6 대 1이 되니까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이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 사이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 수사를 안 하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박민 사장이 또 등장했습니다. 임명동의제 거부한 채 뉴스룸 국장 등 주요 5개 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이 많은 언론사를 놓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룬 MBC 표적으로 계속합니다. 심의를 해서 경고 결정을 하고 바이든-날리면 이런 것으로 계속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나오는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방송을 합니다. 녹화방송 날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 YTN 최대 주주 유진그룹이 됐는데 MB 정권 YTN 해직 사태 주역들, 주요 경영진이 내정을 합니다. 당시에 김백 전 YTN 상무가 있었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사장으로 와서, 또 이분도 KBS처럼 YTN의 주요 방송을 정말 일거에 다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고 진행자들을 교체합니다. 그런 일들을 벌였지요.

이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등장을 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뒀지요. 두 달도 안 남았지요. 출범 2개월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비판 보도, 워치독 역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랩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이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죽 나오지요. 신장식 의원이 계셨는데 뉴스 하이킥, 일곱 번째 법정제재를 합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저도 이때 원외대변인을 하면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도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할 때 이랬으면 저도 가만 있지 않았을 텐데 다른 때 그랬나 봐요. 김건희 특검법 얘기할 때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했답니다. 이것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잠시만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했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방송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제 일지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정말 이해를 떠나서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방송이 자기들 개인 유튜브입니까?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월 27일 MBC 후속보도까지 법정제재를 합니다, 그 바이든-날리면 때문에. 야당 추천 심의위원은 복귀를 못 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제가 읽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박민 사장 외에 만약에 바뀐다면 그다음 사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이런 뉴스를,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참 방심위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촉했다는 게 자른 겁니다. 자른 김유진 방심위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당…… 옳은 소리를 하신 분이지요. 공명정대하신 분이지요. 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게 방심위마저도, 2명으로 방통위만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방심위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2월 29일 방심위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또 접속을 차단해 버립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패널의—패널이요, 패널—편향성을 지적하며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관계자 징계 및 김현정의 뉴스쇼 행정지도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누구를 믿겠지요, 이번에 또 됐으니까. 법원 결정도 무시해 버립니다. 김유진 방심위원 회의 참석을 계속 못 하게 하고, 밑에 보시면 그냥 폭압적으로—누구 닮아 가는 것 같아요—계속 회의를 진행합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18건 신속 심의, 압도적인 최대이고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워치독의 역할을 한 언론만, 보도만, 방송만 제재를 한 겁니다.

6월 5일 날 22대 총선…… 넘어가지요, 이것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선거에서는 우리 야권이 압승을 했지요. 6월로 넘어가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도저히 2인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공영방송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들이 모여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또 6월 27일 날 발의합니다. 그랬더니 28일 날, 저도 여기 갔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갔는데 방통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민원실 앞에서 막아 가지고 출입을 시켜 주지 않아서. 참 무도한 정권이지요.

선임 계획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자진사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것 참 붙여 주기도…… 이동관, 런동관이라고 하나 아무튼 런홍일, 도망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사퇴라고 하고 도망가고 7월 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논란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 아마 정무적으

로도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언론의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명되는 날부터 그냥 방송장악의 의지를, 야욕을 숨기지 않고 밝히더라고요. 그분을 상대로 저도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진숙 후보자는 아주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도 보고 청문회는 처음입니다만 이런 후보자, 장관급 후보자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법인카드를 저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이것은 저는 여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들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보도된 것만. 저희처럼 깊이 자료를 안 보고 보도된 내용만 한번 보십시오.

(7월28일 24시 경과)

새벽 4시에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고 다닙니다, 집 근처에서, 7000원짜리 콩나물국밥 사 먹고, 1만 2000원 꽁보리밥. 이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맞습니까? 집 주변의 고급 식당만 돌아다닙니다.

저도 법인카드를 써 보기도 하고 지금도 대변인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문율이고 자기 집 근처 가서는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는 겁니다, 공금이니까.

그리고 이분의 역사관과 가치는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12 군사쿠데타를 말을 못 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말을 못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 자기들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법적·역사적·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매듭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폄하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고 MBC 공영방송 무너뜨리고 장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특정인들만 보라고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당 의원들도 속속 오니까 더 제가 힘이 납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파이팅!

그러면 안 했던 것 다시 또 한 번 할까요?

(「못 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못 들었지요? 계속해서 말씀……

일지는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3일간 청문을 24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더니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이 지금 0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3일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보니까 참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지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런 일들을 윤석열 정권은 집권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2년 2개월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지로 봤잖아요. 정말 들어 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제공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언론장악, 언론탄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별, 방송사별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법꾸라지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방송 장악의 특징, 1단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2단계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 치우고, 3단계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전의 일지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실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고 방통위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도 자주 등장했던 감사원, 감사원에 양심적 감사원 직원이 있으면 조금 속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간부들이나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바람을 잡습니다. 감사원이 바람잡이로 동원이 되는 거지요. 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퇴출시켜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지요.

검찰은, 이제 검찰이 등장합니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근거는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입니다. 검찰은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숫자를 세 보니까 4회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사무실—연구실이지요—이메일을 압수수색합니다. 출국금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직원 등을 마구잡이로 소환조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야당 의원들 수사 이 형식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잡이 소환조사, 괴롭히지요.

그래서 2023년 3월 24일 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하고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니까 5월 3일 날 불구속 기소를 하고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버립니다. 잘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통위가 검사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건 상임위 때도 드러났는데 이분이 검찰, 국세청, 경찰 이런 사정·수사기관 사람들 다 받아 가지고 감사 기능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통위가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탄압을 하고, 기술자들을 부른 거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영과 준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한 실상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원을 과징금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막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을 통해서 구체적 보도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는 형사고발을 하고요.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는 MBC만 탑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해서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빌미로 당시 임 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하고—압수수색을 한 겁니다—그리고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방문진 감사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감사원은 2023년 2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 후에 3월 2일 감사실시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감사가 결정된 항목들을 보면 가령 이런 겁니다. MBC PLUS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방치했다는 것 관련, MBC ART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숨은 의도는 다 아시겠지만, 간파하셨겠지만 MBC 길들이기와 보도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방문진 업무와 관련이 없는 MBC 경영 관련 내부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은 2023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자료 조사가 끝난 후에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을 질의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감사에 청구된 여섯 가지 감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사 방해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기는 합니다마는 23년 8월 7일 감사원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로 송부를 합니다. 이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검사 출신 아닌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절차로 수사 요청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쓰는 편법이라고 합니다, 편법. 이런 방법을 쓴 거지요.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통위의 사무검사·감독', 너무 많으니까……

국민권익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있습니다. 3노조가—아시겠지만 언론노조와는 다른, MBC지부와는 다른 노조지요—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다 봤을 텐데 53차례 업무추진비 192만 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갖고 왔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화려한 업추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관련 지도도 있거든요. 보시면 입이 쩍쩍 벌어질 겁니다, 저렇게도 법인카드 쓰는구나. 과방위원들이 어제 현장검증까지 나갔다 왔거든요. 빵을 한 번에 한 50만 원어치씩 삽니다. 단팥빵 280개를 47만 원어치 사고 합니다.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썼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직원들 줬답니다, 직원들.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방위원들이 직접 구매까지 해 본 열성까지 보였는데 도저히 산 것 같지 않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공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MBC 제3노조 얘기하다가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아마 제3노조 같습니다. 열두 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숨은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결정 2023년 9월 11일—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결정되어 이사회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두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빌미로 해임—이것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방법과 동일합니다—하여 과반수를 재확보하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감사원 국민감사를 실시합니다. KBS 내, 여기도 보수노조가 등장을 합니다. 보수노조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국민감사 실시는, 그런데 이게 또 처음에는 좀 꼬입니다. 23년 5월 1일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꼬이는 거지요.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서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가 윤석열 정권이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KBS의 탄압, 옥죄기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MBC 한 것처럼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패턴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23년 3월 23일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순 조사가 완료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악이 끝났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무튼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지별로 설명드렸던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몰이를

약 한 달간 합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고 7월 5일 약 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7월 11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를 하고 그리고 7월 12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KBS 2TV 민영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경영 악화 및 내부 혼란이 초래가 되고 재허가 시에 부여한 조건 미이행 등을 핑계로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재허가 심사 과정 등을 통해 KBS 2TV를 민명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년 이사 해임 및 남영진 이사장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조사해서 해임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하려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아니고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보면 윤석년 이사는 2023년 7월 12일 오전 방통위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윤 이사에 대해서 해임제청안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일 날 재가로 해임을 해 버립니다.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는 아까 등장한 KBS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23년 7월 12일,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의 영농법인에서 100만 원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이분은 회사 인근에서 썼네요. 이진숙 후보자는 집 근처에서 많이 썼다니까요—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에서 300만 원 사용을 했다 이것을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재빠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반년 이상 그리 많이 뭉개더니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7월 12일 날 신고하니까 17일 날 현지조사를 시작합니다. 8월 22일 날 법령을 위반했다고, 720만 원 상당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대검과 방통위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이것 참…… 그리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KBS가 있는 데다가 사건을 송부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해 버린 거지요.

방송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BC는 도저히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TBS 건 이제 다 아시니까…… 오세훈 시장 출범 직후에 이강택 사장과 김어준 씨 등 핵심 진행자들을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가지면서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면 23년 11월 27일 민영화 추진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원래 폐지조례 시행일은 올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YTN 부분은 일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말 그대로 이것은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인데 매각된 이후에 YTN의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왜 정권이 이렇게 했는지를 여실히 아실 겁니다.

제가 일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것 심각한데…… 23년 9월 8일 날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가 나고요, 죽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YTN 최대 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 유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3년 11월 29일 방통위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직전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해 주고 가겠다는 거지요. 이게 실제는 김홍일 위원장이 와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은 사퇴를 또 했습니다만 그분이 왜 이것을 맡으면 안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배임증재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하고도 아주 절친이군요,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런 상황이면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심사 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이때 YTN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도, 우리사주조합이지요.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321명이 11월 23일 날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완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법성에 대한 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되니까요.

방통위의 매각승인은 불법이다. 유진그룹이 낸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의결은 위법이다.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1명이 전부인 페이퍼컴퍼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도도 지난해 심사 때보다 더 나빠졌다.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려면 이런 것 중요합니다. 방송은 공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이게 중요한 거지요—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지난해 12월—2월 7일 기자회견 내용이니까 지난해 12월이 맞습니다—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러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런 신청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지부의 부적합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24년 2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위법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그룹이 인수를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상무를 지낸 김백 씨를 대표로 보내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YTN 사장을 지냈어요, 그때는. 배석규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 갔습니다. 이거 뭐 끈끈한데요.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29일 날 이분이 보니까, 아까 제가 일지에서 말씀드린 보수단체 이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초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김백 씨가. 보수진영에 이것 지낸 사람을 YTN 상무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엄청나게 큰 갈등이 있었지요, YTN에. YTN을 장악하려고 했고 YTN 노조, 기자들, PD들 반발하고 막아 내려고 하다가 해직됐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PD들이.

그때 그것을 사측의 입장으로 주도했던 분이 당시 김백 상무인데 이 사람이 사장으로 온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사장은 유진그룹 유진이엔티라는 사외이사로 또 영입을 하고. 다 고리가 있는 겁니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고리.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한번 들으시면 의원님들이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박민 사장이 KBS 사장 되자마자 대국민 사과 했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합니다. 24년 4월 3일 날 김백 사장도 본인들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진행되다가 지금 을지학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감사 및 검사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23년 5월 공정언론국민연대, 아까 보셨지요? 여기는 또 다르네, 아까 시민연대였는데. 아무튼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이라는 곳이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나…… 아, 이분들이 그러는군요. 방심위가 자기들 의견을 받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를 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등장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9월 25일 감사원은 3주간 감사를 통해서 MBC, KBS 등 주요 공영언론의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미뤘다는 의혹 등을 감사한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이 오잖아요. 그리고 검찰, 국세청,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 진행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래 한 11일 정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합니다, 21일로. 그러니까 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했다가 다시 21일 연장을 하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진행을 하고. 이것은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지요. 정부부터 5년간 분량의 실적보고서와 회계검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근태 등을 집중 감사를 합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수법.

그래 가지고 정연주 위원장을 먼저 해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8월 10일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을 겨냥해 본인도 모르는 선수금 결제, 국실별·팀별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 후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간, 집행 시간, 점심 관련된 겁니다. 법인카드 대신 본인 카드 결제 사항 등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에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실제 됐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장이 추천한 두 분의 방심위원은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요. 한 분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야당이 추천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을 해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도 임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민희 방통위원후보가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의 방심위원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최선영 교수—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물으실까 봐—그 두 분들 결국 임명 안 하고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5기 방심위원 임기가.

이렇게 나라를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국방 다 망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 보십시오. 언론, 방송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패턴이지 않습니까.

숨은 의도 아까 1을, 2는 또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말씀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실 거예요. 2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당 측 인사로만 교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부 여당 측에 불리한 심사 요청 사항은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에 불리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게 실제로 건수로 드러난 겁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대로. 심지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전체 5년 털어서보다도, 2년 동안. 기회가 되면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과 방심위 장악·통제를 위한 불법적인 해임·해촉을,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지금 이분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만 윤석년 이사입니다. 이분은 2023년 7월 12일 오전 방통위 여권 측 2인 김효재·이상인, 지금 김현 의원은 기권을 했어요. 두 사람으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한번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현지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해임을 재가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남영진 이사장,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4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권의 위원 2명, 여권 측 위원들 김효재·이상인 뭐 그냥 환상의 짝꿍입니다, 김효재·이상인. 또 김현 의원은, 그때 위원은 기권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 의결, 그러면 당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재가, 그러고 방통위가 며칠 있다가 보궐이사를 추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보수 성향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또 임명을 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오셨지요? 쭉 설명한 것 들어 보시면, 이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자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얘기하는 데 흐름 끊지 마시고.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면 그런다니까요. 공부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설명한 것 들으시면.

(「설명? 아니, 자기들 정권 들어섰을 때 어떻게 했어」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반대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올라가서 하세요.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또 김의철 사장의 해임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어 보시면 '이것 진짜 잔인하게 하고 있구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느끼실 겁니다.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이사 6명, 야권 측 이사 5명은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요.

김의철 사장은 되자마자 다음 날 해임처분소송 본안제기를 합니다.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 이유는, 해임 사유야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겁니다.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공정 편파방송을 했다고 그리고 또 분리징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보면 정부 여당은 야권 성향 이사의 축출을 한 뒤에 여권 성향 이사로 보임하여 6 대 5 구조를 만들어서 당시에는 현 KBS 사장을 퇴출—김의철 사장을 얘기하겠지요—한 것처럼, 정연주 전 사장 퇴출과 같은 방식으로, 정연주 사장은 방심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대로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서 더 세게 땡윤 뉴스를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박민 사장의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서기석 이사장이 10월 4일 이사회에서 KBS 사장후보자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지요. 그래 가지고 10월 6일 날 이사회를 개회하여 4일 사장 추천절차 폐회를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 선임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13일 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여권 측 인사 6인만으로—야권은 5명인데 퇴장을 하고 했겠지요—임명제청안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위법

절차에 따른 임명절차 의결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재직할 때 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았는데 월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본인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일부의 야권 인사들이 면접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또 입장도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요.

이분은,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0월 17일 날 박민 사장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재가하고 청문요청서가 와 가지고 11월 7일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제대로 채택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일 날 대통령이 박민 사장을 임명합니다.

이 얘기는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면 박민 사장은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항목이, KBS를 얼마나 지금 망치고 있는지 이 실태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2024년 1월 4일 이미, 정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결된 12·12 군사반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씨의 호칭을 놓고 ‘씨’를 쓰니까 ‘씨’를 앞으로 쓰지 말고 ‘전 대통령’으로 부를 것을 강제하는 내부지침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아니고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각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꼭 부르라고 내부지침을 내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1월 26일 날,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명동의제.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국의 국장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월 7일 날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역시 대통령은 2년 연속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면서 지난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한 달이 지나간 2월 7일 날 완전히 장악한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녹화 대담이지요—당시, 이름까지는 밝히지 말까요? 박 모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로 표현하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2월 15일 KBS 보도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방송 편성 연기를 지시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오늘 논란되는 것 다들 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KBS의 기자가 본인의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앞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배지입니까? 거기 붙어 있는 것을 모자이크를 처리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MBC 스트레이트는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을 통해 박민 사장의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스트레

이트에서요.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진 관련된 게 있습니다. 방문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권태선 이사에 대한 무도한 해임이 법원에서 제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김홍일이 못 한 것을 해내라고 MBC 시절에 MBC 노조를 탄압하고 또 사찰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수억 원대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유용했다는, 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서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휴일에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라고요. 그건 뭐 본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대통령께서 지명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 포인트가 되더라도 MBC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그것 일본 대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정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정부 대변인이나 우리 정부 쪽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울릉도 해상 앞에 오염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와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좀 품격 있게 해 보십시오, 품격 있게.

(장내 소란)

그래서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추측과 억지를 가지고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추측과 억지에 대해 나와서 얘기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실을」 하는 의원 있음)

(「진실을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여기 진실 얘기하는 자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기……

(「다 진실인데, 뭐. 아니,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때 나와서 할 말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또 뭔 얘기를 할까요?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들」 하는 의원 있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전혀, 하나도」 하는 의원 있음)

자, 또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집권당이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돌이켜보시면 상당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시고,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 때 조용히 계십시오.

(「그럼 토론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시고요.

(「언제 반말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부의장 이학영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 계신 분들은 전부 앉아 주시고 상대가 하는 말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시간을 가지고 순서를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다음 순서에 나오시면 반대토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으시면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계속하세요.

○한민수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면 공부를 하시고 혹시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반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기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우기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계속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다른 얘기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부의장 이학영 한민수 의원님 방청석 상관없이 계속하십시오.

○한민수 의원 자, 지금부터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전 기자의 저서 ‘한국의 언론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있는지 또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창피 떨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12·12, 12·12 군사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관급 후보자를 보낸 대통령,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2·12,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장내 소란)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개정판을 펴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목도하며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염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도 많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닮아 가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걸 배운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사를 하면서 배운 것 아니겠

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간 가지고 죽 할 거니까 이걸 먼저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 두툼한 것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죽 한번…… 제가 쓴 글은 아니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한 날이지요. 그때부터 현업에 있는 언론단체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그다음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성명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죽 한번 보시면 그때 고비고비 때마다 이분들이 기자들과 PD, 기술직 종사자들 또 시민단체에서 죽 냅니다, 입장을. 이것을 보면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와 어떻게 장악을 해 오고 탄압을 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명과 기자회견문, 입장문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 진심이다. 특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니 기대된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 함께 활짝 웃어 보자.

10일, 삼성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홉 손가락에 꼽을 일간신문 1면에 똑같은 5단 광고를 낸 것이다. 이른 아침 독자 눈길을 가장 먼저 붙들게 마련인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한 채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게 5월 10일 날 죽 설명하는 거지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이것 성명서입니다—자유라는 가치를 30여 차례나 외치면서 국정기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겁박하는 소송으로 언론자유에 맞서고 나섰고 일선 언론인과 소통할 국민소통관장에는 대기업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봉쇄 소송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을 발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잠시 미루어 놓은 책이 있었지요.

이것 모두 언젠가 본 성싶은 싹수 아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입으로는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일삼았다. 보수 족벌언론과 재벌들에게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가능케 만든 미디어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시궁창에 빠뜨렸던, 처박았던 추악한 시절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날 조짐이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이런 고언을 좀 새겨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시즌2로 후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 포위돼 본질에서 이탈한 채 언론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아울러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 포위돼 본질에서 이탈한 채

언론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사례도 반면교사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 다 읽어 드립니다. 알려 드리니까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체들이나 언론노조도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온, 발표한 성명서가 무려 넉 달 16일 뒤에 나옵니다. 9월 26일 성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목이 '윤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 이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쓸게요—새끼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새끼들이 미국 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일컬었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 여기서부터는 땡땡으로 하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땡땡을 두고 비속어로 일컫는 매체가 많은데 틀림없는 욕설이다. 굳이 비속어를 찾자면 '쪽팔려서'일 테다.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쪽이 팔리는 건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는 뜻 아닌가. 체면 깎이면 바이든은 어쩌나를 걱정했든 한국 민주당이 날리면은 깎일 자기 얼굴에 속을 태웠든 쪽팔려서는 사람 바탕을 내보이는 말일 수 있기에 참아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그가 한국 대통령인 바에야 아무 날 아무 시에 허투루 쓰면 곤란하지 않은가. 욕설은 두말할 것 없겠고. 하니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한국 대통령과 나라 위상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26일 강변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 보도였는지 그가 언제 어떻게 내보일지 모르겠으나 국익 운운하며 초점을 흐리는 국민의힘 장단에 맞춘 것일 뿐이라면 매우 곤란하다. 부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납득될 만한 소리인지 곰곰이 짚어 보길 바란다.

제가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날은…… 한번 또 보십시오. 이게 심각해지니까, 상황이.

9월 27일 날은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그다음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기자회견문을 냅니다.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기니까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대통령답게, 언론답게' 이 얘기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비속어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진실게임과 책임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순방을 마치고 대통령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의 입에서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기대한 국민들과 언론인들은 귀를 의심했다. 알다시피 말을 뒤집고 논란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다. 대통령은 그에 쐐기를 박았다. 순방에 동행한 영상기자들이 발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때에 이뤄진 대통령실의 비보도 요청, 욕설은 미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국회, 그중 제1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15시간 만의 해명, 그러다가 미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는 욕설과 비속어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욕설이 제1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홍보수석의 해명까지 스스로 뒤집어 발언의 진위를 더욱 미

궁 속으로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다. 진상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확실히 밝혀야 할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성명서는 긴데 제가 자르고 뒷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주 긴 성명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자들은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에 따라 순방에 동행했다. 기자가 응당 취재해야 할 위치에서 담은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의 진위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하고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음에도 특정 방송사의 짜집기와 왜곡이라고 덧씌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앞에서 기자들은 참담함을 느낀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악의적 발언과 주장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통해 확산됐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사 항의 방문과 국감 이슈화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가짜뉴스, 좌파언론 운운하며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반대 진영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진영논리와 음모론으로 덧칠해 보려는 뻔뻔한 낡은 초식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실책과 치부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불쏘시개로 삼아 보려는 얕은 계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대목만 딱 여기서 하고 이 성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들으라. 사실 앞에—사실, 팩트지요—겸손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권력 감시자와 비판자의 눈길을 의식해 늘 언행과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이런 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 사건을 빌미로, '바이든-날리면'을 빌미로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아니고 불허했지요. 불허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더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기자와 언론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합동으로 긴급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도 같이 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여덟 개 단체군요, 세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어제 늦은 밤—어제가 아니고 9일입니다, 이때. 11월 9일인 것 같아요—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나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다. 당시 미국 언론계는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 흘려 쌓아 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신년 성명도 새겨 볼 만한데 제가 여기는 지나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지난해 3월 21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합회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한국여성기자연합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곱 개 단체가 공동으로 냈으니까요.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이때 방송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에 대해서 일곱 개 협회와 연합회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민주당 편을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 만이다. 그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공영방송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서 몰아냈고,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를 흔들며 말 안 들으면 공영방송 재원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양대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장기 감사는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보유 덕에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왔던 YTN도 정부가 매각을 주도하면서 특혜 매각설, 사전 내정설 등 복마전이 돼 가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3월 21일)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지난해 가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돌출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이후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폭력 및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 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 기준과 언론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대안 없는 시간 끌기와 현업 언론단체들에 대한 가당찮은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 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로운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방송법 문제를 포함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길지만 한 자도 빼지 않고 이 논평을 읽었습니다. 입장문을 읽었는데, 저도 한 번 봤습니다만 다시 보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부분도 있고.

물론 이 중에 특정 단체나 조합이나 연합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현업 단체 7개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민주당을 위하는 논평입니까? 성명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1년도 훨 넘었습니다. 23년 3월 21일이면 넘었는데, 그때도 이 단체들이 이런 성명을 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번 제가 지금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문진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무슨 민주당이 장악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논리들이 맞겠습니까? 맞다면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입장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집권당이 국민의힘이지만 나중에 선거, 대선이 있고 하면 또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정권을 이용해 먹겠다 한다면 이런 법안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통과를 시키고 또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다시 또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 가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제가 다 읽어 드리기는 힘드니까 한번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5월 9일 날 윤석열 정권 이제 1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낸 성명입니다. YTN 문제도 있고 죽 있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옥같은 모든 얘기들인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이 부분은 넘기고 방통위원들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을 읽어야 되나? 방송장악 문제인데.

이것은, 이 앞에 부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인데 그러면 또 언론노조 성명서냐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 더 많은 시민단체들까지 같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23년 9월 6일 기자회견문입니다.

참여한 단체는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낸 성명서니까, 이게 또 방송법 관련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회는 방송독립법(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완수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때는 방

송 3법 개정안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시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던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불법적 언론인 해직과 보도·편성 개입에 맞서 피와 땀으로 파업하고 투쟁했던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비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동관, 이진숙, 차기환 등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들어 보시면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 모든 사태의 뿌리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가량이 되도록 관행화되어 있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가 되어 왔다.

이사회는 사장의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 성향으로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사장을 필두로 방송사 내부의 정파적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면서 이 제도는 살아남았다. 윤석열 정권이 경로의존적으로 방송장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적 문제는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여 5만 명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주체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언론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제 국회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되어 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 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들으라.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 여당은 국회 법사위를 활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펴는 동시에, 오히려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방송장악 야욕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국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입법하는 곳이 아닌가. 방송·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여당이었던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라. 작금의 방송 자유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데에는 당신들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들이 마련해 준 이번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라.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방송독립법 처리를 완수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라.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정권의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 앞에

국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국회의 수반인 국회의장에게 있다. 엉거주춤한 태도를 걷어치우고 입법부의 대표자로서 방송독립법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파성이 들어 있습니까? 민주당 편을 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성명서 일부러라도 한 자도 안 빼고 오탈자 나오지 않게 수정해 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다 이어져 왔고 한 번의 대통령 거부권 통해서 폐기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거의 보완을 하고 당시 많은 협회, 기관들에서 단체들이 요구했던 방송 3법에 이번에 방통위 설치법 하나가 추가된 거지요.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방송을……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생각한다면 이런 성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제가 죽 말씀드린 건전한 내용들을 곡해하지 말고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본다면 다 새겨들을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글을 통해서 이번에 처리되는 법안들이 여당도 잘 협조를 하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양이 많으니까요 제가 보면서 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반대토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보면서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구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기자 출신을 떠나서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보수정권, 진보정권 마찬가지…… 만약에 진보정권 때라도 언론사 압수수색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반대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언론은 불편한 겁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부정이 됐든 비리가 됐든 잘못된 정책이 됐든 그것을 감시하고 국민들께 전하는 게 정말 언론의 최고의 기능이지요. 건전한 기능,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항시 있어야 되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보도가 정말 잘못됐고 그게 잘못된 보도라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가지고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정권 때도 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기자도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이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10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제목이 ‘언론인 무차별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이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 3명의 자택 압수수색에 들

어갔다. 지난 9월 14일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또 벌어진 공권력 남용이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해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압수수색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공적 인물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과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핵심이 바로 권력 견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수많은 판례를 통해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과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왔다.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보장해 온 사법적 판단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 정권의 안위를 고려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검찰의 언론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 들어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 등 온갖 기관과 수사권까지 마구잡이로 동원해 펼쳐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한 축으로 권력을 총동원한 언론 검열 시대로의 역행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이미 해당 보도와 인용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례 없는 보도 정황 자료 요청과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직 대통령 한 명을 향한, 그것도 명예훼손의 요건조차 불확실한 혐의 하나로 정부기관과 검찰까지 집중 포화를 쏟은 사건이 또 있었는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충견임이 다시 확인된 오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의 행태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언론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 모두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폭력이자 독재 회귀로 간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변화와 반성을 말하면서 뒤로는 무지막지한 언론자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양두구육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 낸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서 저항할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동원한 위헌적인 국가검열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뜻이 같은 양심적 시민, 학자, 노동자, 예술인, 종교인 등 모든 이들과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방송법을 11월 6일에 다시 한번 처리하라—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입니다—탄핵하라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은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아, 여기 이것은 대통령께서 방송법을 거부한 뒤에 나온 12월 2일 성명인데, 잠시만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몇 분 안 계시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배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에서. 고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막 괜히 그러시니까……

이것은 그래도, 방송법 거부나 이동관 꼼수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길면 좀 자르더라도……

이것은 언론현업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12월 1일입니다, 지난해. 방송 3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퇴, 그런데 그 뒤에 이동관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지금 김홍일 전 위원장 또 이상인—전 직무대행이지요—벌써 이렇게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니까 한번 들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 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부터 방송 3법의 대안을 제시하며 언제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 여기에 일언반구 없이 좌파 영구 장악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술친구인 극우 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정부 여당이 독립성이니 편향성이니 하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취임한 지 57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가?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정 책임을 오직 노동자와 야당에 떠넘기고 적대세력으로 만들어 온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얄팍한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려다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고도 언론탄압·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생각은 똑같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회의 탄핵을 피해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당초 반헌법, 부도덕, 반언론의 상징인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지난 98일간 이동관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고 그 자리에 구시대 적폐 인사들을 임명해 공영방송을 친윤어용 방송으로 망쳤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빌미로 방송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권한도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검열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 부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획책하는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

100일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만행은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자를 중용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세게 썼습니다—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다.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부질없이 저항하는 당랑거철의 신세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들으라.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일각의 주저함 없이 윤석열 정권을 독재권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무자격자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 그분은 도망갔으니까 빼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3년 1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다시 임명되셨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회견문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제 발 저린 도둑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지난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입니다, 2023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와 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뜻이며, 민원 청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더기 민원을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했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마치 복사-붙여넣기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고 한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심의를 공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청부 심의를

이용한 방송탄압이다.

게다가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자 해당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사실 역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 심의라는 기능을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 하게 확인된 셈이다.

청부 민원 관련 보도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제보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다. 이제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문해 보라. 반헌법과 위법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며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주문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 방심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이 성명서가 나온 게 작년 12월 28일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임기를 끝내고 대통령이 3명의 방심위원을 지명하고…… 이게 6기입니다, 6기. 6기 방심위인데 기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기 방심위원 2명, 지금 여당이 추천한 방심위원 2명을 합쳐서 5명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과연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제가 말씀드린 성명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또 나온 건데 제가 새해 것은 다 뺐으니까요. 이것은 새해는 빼고 또 보면서, 꼭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류희림 관련된 건데요. 이건 한번 했으니까 제가 하나 빼겠습니다. 이 역시 전국 언론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해 가지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도 하지 않으니까 언론노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라 하는 정말 타당한 논평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바로, 4월 총선 이틀 전에 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성명서를 같이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고요.

한번 보시지요.

24년 4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

윤석열 정권 2년 남짓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언론자유의 후퇴와 돌이킬 수 없는 공공

성의 파괴를 목도해 왔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파탄냈고 대통령 술친구인 무자격 사장을 앉혀 조직을 뒤흔들었으며 방송장악 문건까지 작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중분해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정권이 청부한 YTN 민영화와 지방의회를 통해 사주한 지역공영방송 TBS의 해체가 자행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에게 오직 입틀막 선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자유에 대한 정권 탄압과 심의의 탈을 쓴—아까 제가 저 일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회 나옵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물어야 할 언론의 입을 이처럼 틀어막고 역사상 유례없는 제재 조치를 이렇게 남발한 선거가 과연 있었는가. 시민 모두가 언론이고 시민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에 한 줌 권력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 선거에 이길 것이라는 권력의 시대착오는 이틀 후면 국민적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5년짜리 권력을 1000년 갈 것으로 여기는 오만한 정부, 수준과 자격이 의심스런 이들을 후보로 내세우며 상대만 무찌르면 그만이라는 낡은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기반과 유권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입틀막의 광풍 속에 유권자와 언론이 묻고 요구할 권리는 철저히 묵살됐고 미세먼지도, 대파값도,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마저 권력과 정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독재의 상징인 국가검열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께 호소한다.

언론의 자유 말살을 넘어 시민의 대통령 풍자 영상까지 수사하는 정권,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입틀막을 장담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5만 시민의 청원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법의 재입법, KBS·YTN 등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관철해 낼 것이다. 또한 권력의 국가검열 수단으로 전락해 입틀막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성사시킬 것이다.

누가 권력을 쥐든 다시는 입틀막 따위로 주권자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총선 결과의 내용은 또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제가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돼 가고 있고 저도 이제 다음 분 또 반대토론, 저만 하면 반대토론을 하실 분의 또 입을 틀어막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정리는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입틀막이긴 한데…… 너무 단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입법 다짐문인데요. 이건 빼겠습니다. 여기 성명서에서는 제가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호소한 거니까 한번 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을

칭찬하는, 제가 보니까 제목만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읽고 나가 가지고 또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민수 뭐 읽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형평성 갖고 한번 보시지요.

이게 5월 14일 기자회견문입니다.

22대 국회 모두에 호소합니다—이건 또 경어체를 썼네요—22대 국회 여야 모두에 호소합니다. 방송 3법 즉시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한국 언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기관을 동원한 상시적인 언론탄압과 장악, 공영방송 KBS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아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자 교체와 폐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준공영방송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겨 공정방송을 무너뜨렸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한 시민은 경찰의 강제수사로 공포를 느끼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제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6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총선 일주일 후 열린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총선 참패와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며 총선 패인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미디어산업 내 최대 산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계를 대표하는 언론 현업 직능단체들에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딱지를 붙여 가며 존재를 부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적과도 회담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자 자신들의 세비를 내는 납세자들인 언론노동자들을 섬멸의 대상인 양 적대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집권 여당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인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극우세력에 기대 언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보수정당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함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참 언론단체들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제 또 6월 3일 날,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대통령에게 '국민 입틀막을 멈추고 방송 4법 개정안을 수용하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지요—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7개 야당에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것도 나왔고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뉴스 신뢰도 조사 이것을 김효재 언론진흥재단이 은폐를 했나 이런 얘기, 이런 성명도 나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니까 죽 여러 단체들 다 함께한 것 같은데요, 6월 25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성명·회견문은 그러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좋은 글이고 꼭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제목만 말씀드리면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것을 하나 하고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진숙 후보자를 제가 또 좀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 관련된 성명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명에 반대한다기보다도 '즉각 사퇴하라', 최근 겁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읽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7월 25일이니까 25일 하고…… 2024년 7월 25일, 여러 단체가 모인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MBC 민영화 공작, 세월호참사 왜곡·폄훼 보도가 지탄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용차 부정 사용,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여태껏 이런 부격적자를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이의 종합판이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사과 요구에 '아쉬움'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고 청문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사과문 낭독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폄훼 SNS 극우 댓글 공감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나'라는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비아냥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국 답하지 않았다.

적대적인 노조관은 어떤가. '언론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다',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이진숙 씨를 내정했음을 또렷이 보여 주었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 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후보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 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내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적단체…… 아니, 이권단체.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18 단체는 이권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 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는 사이 3류 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인사에게 노조 혐오, 극우 옹호, 국민 분열을 마음껏 조장할 선동과 변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청문회라는 허울을 두르고 허위사실과 억지만을 떠들어 댈 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까 제가 수정했습니다만 여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에 나온 용어는 정확하게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성명과 입장문을 소개해 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현업 단체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

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면 어디…… 방송 3법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 3법. 저희들이 말하는 방송정상화 4법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일각에서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민주당의 방송장악이다, 정말 그건 얼토당토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글을 봐도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시간 방문진법의 개정안 찬성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언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지금 야당들, 언론 현업 단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이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함, 정말 공직을 맡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흠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전에도 그랬고 청문회 때도 그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문진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정권이 이진숙 후보자라는 분을 보내고 속도를 내고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숨겨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은 정말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정말 부적합하다.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문회 때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계를 좌파나 우파로 이렇게 편 가르기 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가령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정말 좋은 영화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좌파 영화 그리고 또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우파 영화. 저는 이 영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 다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고 전 세계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지요.

이것 보면서 이게 무슨 우파다 이런 생각……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서 그 형제가 민족의 정말 분단의 아픔이랄지 갈라져 가지고 국군과 인민군으로 나눠서 싸움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우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비극이 더 가슴 속에 절절해지던데요.

그리고 또 서울의 봄은 좌파의 역사 공정이랍니다. 아니, 그것 김영상 대통령 시절에 다 정리된 문제 아닙니까? 쿠데타로 정리해 가지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처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아마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의 못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SNS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고 손가락 운동 얘기하고, '5·18단체는 이권단체' 좀 전에 했듯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 유튜브를 삭제, 게시를 삭제한 부분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MBC 시절에 노조탄압이랄지 방송장악 문건 이게 쭉 방송을 통해, 아니, 재판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의심받는 게 있었더라고요. 트로이컷, 이게 대법원에서 트로이컷 방조혐의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MBC 사장 시절이나 보도본부장 시절에 방송을 본인의 입맛이랄지 자기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사용화 논란도 있고요.

또 많은 위원들이, 특히 야당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법인카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사 재직 시절에 4억 3000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에 1억 4000에서 한 5억 7000이 되는데 이게 이 중에 2억 3000만 원이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식당, 골프장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300건은 한 천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휴일에도 아주 많이 썼고 그다음에 본인 서울 집 주변에서도 집중적으로 쓴 액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용이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건 야당의 과방위원들 계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입장을 또 바꿉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우적인 사고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다음에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또 계실 테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자료도 준비하고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가지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MBC 장악을 위해서 6월 27일 날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지요, 발의되자 당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3사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올리고 다음 날, 저도 갔습니다만 야당들의, 야당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과방 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MBC 이사 선임 계획을 방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려고 하니까 직전에 사퇴를 하고 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진숙 후보자의 부적합함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진행 상황을 본다면 MBC 장악 오직 한 가지의 특명을 받은 게 이진숙 후보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MBC마저도 KBS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땡윤뉴스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방송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 차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신문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터넷 방송사들도 더 정권으로부터, 지금도 압수수색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야당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민들과 언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기자 선후배들 동료들도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문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정말 우리 언론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수를 경신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그렇게 추락한다는 것은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이 정권에 통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틀막이 횡행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 정말 언론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삶 전체가 피폐해지고 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한민수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직 기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 중간에 제 말씀에 대해서 항의하시다가 저도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도 나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방문진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현장에서 정말 장시간인데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중에 보시게 될 국민들께도 제 마음이, 제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장겸)

(02시10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방송사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거쳤지만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출입할 때와는 달리 국회가 낯설고 배울 것도 많은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국회에는 정치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현재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적대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포장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품위를 잃고 정부와 여당을 폄훼하는 게 야당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다 하다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동원해서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법치 파괴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원과 동행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피케팅과 구호까지 외치며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 경내 안은 물론이고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회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는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집회를 주도한 것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문입니까?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을 향한 표 구걸에 나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이렇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제 할 말만 하는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수권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없는 셈 치고 버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을 두 달 넘기자 민주당 의원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뱃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 국가 미래를 헌신짝처럼 던져두더라도 제 당의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탄핵이 넘실거립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공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이 발의한 탄핵이 열한 차례나 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표결도 거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을 보면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미디어의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첨단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IN 등 좌편향된 5개 매체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이틀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입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해 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 중 하나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찬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 달라는 호소에도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 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국회 방호과로부터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국회 청사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최 측과 합의해서 취재가 가능하지만 뉴스타파는 저와 어떠한 협의도 조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IN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왜곡한 것입니다. 기자의 본분조차 저버렸습니다. 공동취재팀이 아니라 공동비방팀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24일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의 한시적인 상임위 출입을 제한해 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예방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 다 봤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에서 생중계되므로 출입 제한을 한다고 하여 이들 매체의 청문회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과방위 야당 간사 지난 6월 28일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증을 마패처럼 내보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창구 직원들에게 이름, 직위를 확인하면서 출입증 내놓으라, 책임을 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청사 출입 담당 여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말리던 시민은 넘어지는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런 정황을 보도한 수십 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영상에 근거해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과연 언론의 자유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의 취재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타파는 바로 이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매체입니다. 플레이어나 마찬가지인 이들이 방송 4법에 반대하는 저에 대해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겁박에 가까운 인터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취재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를 밝히기 위해 묵묵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선량한 기자분들과 언론을 위해서 선배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낙마로 답을 정해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명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처리도 국회 상임위에서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여당의 출석 거부로 법안소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심사소위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에 방송 4법을 올려서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안심의도 없이 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과방위에서 단독 입법 처리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서 방송장악 하겠다는 그 의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방송법안의 졸속·과속 처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소위로 넘겨 추가 심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당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해 저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장악, 방송장악 해서 불과 7년밖에 안됐는데, 2017년. 잊어 먹을 시기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까마귀고기를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 일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벌떼처럼 나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제가 연루됐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좌편향 매체들은 일제히 좌표를 찍어 가짜뉴스로 공격했습니다. 출퇴근 시위라는 명목으로 저를 가로막고 면전에서 모욕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관을

내려보냈습니다. MBC 사장에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부당노동 혐의로 노동청에 출석했을 때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하자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게 MBC에서 사실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안 시키거든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 조사팀장한테 그 여직원들이 신고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출산한 여직원들을 출산일에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면 임신한 그 즈음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야근을 했냐 안 했냐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MBC만 해도 기자나 PD들은, 여기자나 여성 PD들은 일 욕심도 많고 또 그래서 임신하더라도 초기에 자신들이 자진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일 욕심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몰라서 나중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야근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역산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두 차례나 걸쳐서 특별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걸 찾아낸 거지요. 대단한 노동부였습니다.

사실 이게 야근 문제는 부장 전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부장 전결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부 조사팀장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런 답 했습니다. 저를 조사한 조사팀장은 회사의 언론노조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하고 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 결국 방문진은 저를 MBC 사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고 1심 판결은커녕 기소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범죄사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을 6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의혹 단계에서의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사법부가 판결로써 사후 보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온갖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좌파 매체는 MBC 사장인 제가 구명을 위해서 종편 출연을 타진했다 이런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아니, MBC 사장이, 현역 MBC 사장이 종편에 왜 출연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저와 종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마는 끝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금까지 장악한 MBC가 만든 또 MBC가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뒤에 후임자가 최승호 사장인데, 제 후임자가. 최승호 사장이—그 당시에 사장은 아니었지요—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이것은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 뿌려졌던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공범자들 영화를 단체 관람한다. 그래서 여론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우원식 현 국회의장도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대표적인 허위 기사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는 직원을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라는 기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새빨간 조작 뉴스입니다.

그 당시 MBC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

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고요?'라는 제목입니다.

MBC가 신사업개발센터의 부서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눈을 쓸도록 청소를 시키고 주차장 관리를 시켰다는 얼토당토않은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승호 씨가 만든 공범자들 영화에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출한 거지요.

신사업개발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연봉이 1억을 넘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연봉 1억 원을 넘게 주면서 눈 쓰는 일과 주차 관리 업무를 시키겠는가. 물론 청소나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은 근로의 의미 역시 다른 근로와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킨 것처럼 왜곡·날조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MBC는 밝히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문화광장의 스케이트장 활용 사업은 2014년도 신사업개발센터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였다. 겨울철에 넓은 문화광장을 썰렁하게 두기보다는 두 달 정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놀이공간 명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들은 스케이트장 활용 계획과 협찬·홍보 계획을 세우고 외주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맺은 뒤에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시설 설치, 안전 운영과 청소, 티켓 판매는 모두 외주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청소, 외주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영과 안전, 청소의 6500만 원은 인력 업체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우환 차장이—지금 MBC경남 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스케이트장에서 넉가래를 들고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 이우환 차장이 정말 회사가 청소를 하라고 시켜서 넉가래로 눈을 쓸고 있었을까? 왜 갑자기 넉가래를 들었는지는—소위 친언론노조 매체—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납니다. 미디어오늘은 1대 주주가 언론노조고 2대 주주가 MBC언론노조 MBC본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환 차장은 미디어오늘 8월 23일 자 인터뷰에서—2017년 이야기입니다—처음에 최승호 선배가 찍으러 온다고 했을 때 내 PD 인생이—그러니까 이우환 씨가 PD로 있다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만 기억될까 봐 반대했다. 최 선배가 현장에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건 너뿐이라며 강행했다. 멀리서 찍더라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주차장 관리 업무도 시켰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주차장 임대사업도 신사업개발센터가 비어 있는 여의도 MBC 사옥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으로 채택됐고 2015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해서 2017년만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은 넉가래를 든 이우환 당시 차장이 낸 제안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사옥 주차장 임대사업에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이 하는 일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매달 수입금이 입금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의도 사옥 주차장에 나가 볼 이유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주차장 관리 업무를 했다는 것일까?

다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합심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전입니다. 선전·선동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어처구니없이 날린 광고만 그 당시에 수억 원이었습니다. 파업 첫날 MBC 제작진이 애써 만든 프로그램에 방송 의뢰가 들어온 광고가 불방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불방된 게 4억이 넘는데, 수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광고 데이터를 변환한 뒤에 프로그램에 의뢰된 광고 순서에 맞게 편집해서 주조로 송출하는 TV송출부 방송준비실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MBC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최소한의 필수 요원을 남겨 달라는 회사의 간곡한 호소를 무자비하게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노조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파업 참가자들은 최소한의—2017년 이야기입니다—업무 인수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광고 변환 송출 시스템인 클립뱅크의 매뉴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숨겼는지 가지고 갔는지요.

아무리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에 화답해서 노영방송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고는 MBC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익이고 수익은 그 파업이 그 어떤 형태로 끝난 뒤라고 해도 사실 소중한 일터 MBC의 기반일 것입니다.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언론노조 MBC본부 아닌가. 더 이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회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업할 때마다 지라시 매체와 언론노조의 비열한 야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당시 회사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라시급의 친노조 매체가 왜곡·날조한 가짜뉴스를 쓰면 언론노조 MBC본부가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성명을 통해서. 또 둔갑된 날조 사실을 지라시급의 친매체가 받아쓰는 비열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파업 때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안철수 의원님 계신데 안철수 의원님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한겨레신문의 김효실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라는 허위 날조 기사를 썼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대표 쪽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때 안 의원님, 제 전화번호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고.

(○안철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제목을 한겨레신문이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뒤에까지 안 읽어 봅니다. 자기들은 뭐 '어떤 접촉도 없었다' '부인했다' 한 줄로 면피하는 거예요. 이런 작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그리고 이 기사 출처도 익명이에요. 기사 출처가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익명을 빌려서 소설을 작성한 명백한 가짜기사입니다. 사실 증권가에 떠도는 지라시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회사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에—MBC 출신입니다—김성수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MBC 보도국장을 하신 분인데 카더라 뉴스에 또 가세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라디오 매체 CPBC에 출연해 가지고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들었다'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MBC 사장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말이 됩니까? 제가 어디 그런…… 공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카더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노조를 넘겨줘서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역시 2017년 8월 25일,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김장겸 MBC 사장, TV조선 출연 거부당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제가요 당시 대학 선배인데 김민배 TV조선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그분이 언론인회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아니, 김 선배, 내가 그렇게 요구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TV조선도 아마 사고를 그때 띄웠을 겁니다, 사실무근이다, 기사 삭제. 그런데 삭제는커녕 그때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나 다를까 언론노조 MBC본부가 9월 6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9월 6일 총파업 특보—9월 달에 파업에 들어가는데—4호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라시급 친노조 매체의 가짜뉴스와 언론노조를 지원하는 여당 의원의 카더라를 인용해서 제가 마치 정치권에 구명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왜곡·날조·비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당시 보도자료 MBC의 성명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회사 성명을 보면 파업 때마다 사장, 경영진, 보직간부,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인신공격, 인격침해를 해 온 언론노조 MBC본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이 길어지자 언론노조 MBC본부가 온갖 의혹과 소문을 양산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 잘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예 초반부터 인신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 특보 4호를 보면 사장이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일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사장이 무능하다는 근거로 20년 동안 뉴스데스크 리포트 수가 540개이고 다른 기자들보다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은 더 이상 기자가…… 기자 출신이지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내근이나 외근과 같은 근무 형태나 근무부서 등 변수들을 다 따져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또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자들의 자료는 외근 기간에 한정해서 산출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른바 통계 조작이지요.

그리고 당시 파업 기간이 좀 더 지나면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장겸 사장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성장 과정까지 파헤치고 들춰내서 날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인신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을 돌아가면서 난도질을 해댈 것이다.

또 보직간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부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부역자로 낙인찍어 5적이니 10적이니 주장하면서 인신공격, 비방 매도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이것 회사가 예견은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도 회사를 노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MBC본부에게 묻는다.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와 남에게 모욕을 주는 치졸한 작태가 정말로 공정방송을 외치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모습인가 하면서 당시 회사 성명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과방위에 언론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민주당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방위 앞에서 시위한 것을 따졌더니만, 물었더니만 '불법이면서 알고 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언론노조원이 아니고 기자나 P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 어떻겠습니까?

제가 2017년도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 이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가 MBC 사장에서 해임된 뒤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저희는 사실 23개 계열사와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배, 이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인 최승호 사장은 언론노조 MBC 본부장 출신인데 19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2년 남짓 만에.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조사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퇴진을 놓고 정치권이 나설 경우 역공받을 우려가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학계 등 동시다발적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으로 엄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권력을 활용한 퇴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괴벨스도 감탄할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민주당은 왜 공영방송에 집착할까? 요즘 지상파 뉴스 누가 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때면 TV 앞에 모여서 함께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와 결합하면 그 파급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좌파 특유의 가짜뉴스 활용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히 허구로 판명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뉴스 생성과 유통 과정을 보면 시작은 좌편향 인터넷 혹은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제삼자의 전언 진술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것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말을 들었다는 남자친구의 일방적 주장, 이 주장을 근거로 날조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보를 폐기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가 부인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하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이익만 된다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같은 성향의 매체와 단체들이 동조하며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공영방송이 등장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벨스 말마따나 특정 시점에는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실시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70%가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커피 사건도 시점과 등장인물이 복잡할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삼자들의 전언 진술을 토대로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취지로 좌편향 매체가 왜곡 보도를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가짜뉴스였지만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당되는 MBC는 당시 무려 네 꼭지를 편성해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 4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음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며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성명에서 보수 궤멸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안에 나와 있는 이사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노조 출신들이 대부분 단체의 간부를 맡는 등 사실상 인적 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18년 7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들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등 20명이 언론노조 출신인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과 함께 보수 성향 패널을 솎아내기 위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PD협회 등 민주당이 이사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언론단체들 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행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단체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훨씬 더 개악,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충분한 의석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사장, 임원, 보직간부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그들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알권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언론이라면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전과 선동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언론자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언론 내부는 어떠한지 PPT를 보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이 편파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BBC가 그렇습니까, NHK가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행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대업 병풍 조작 몰빵 보도입니다. 제가 당시에 보도국에 있었는데 뭐 매일, 심지어는 뉴스데스크에 스물다섯 꼭지 나가는데 거의 다 채울 정도로 매일매일 김대업 병풍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결국 떨어졌지요. 나중에 수사해 보니 어땠습니까? 뻥이야. 이미 후보는 떨어졌는데 김대업은 감옥 간들…… 이런 게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우병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무죄 났다고 하는데 그 무죄 난 게 허위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MBC가 했네요. '이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것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아니, 그게 정도가 있지요. 거의 몰빵 보도를 했어요.

생태탕, 이것 닳도록 끓였지요. 선거 때 아마 다 닳아 가지고 솥이 탈 정도로…… 이것도 공영방송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검언유착, 권언유착이었지요, 알고 보니.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보도를 하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뜹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진보 좌파 매체가 또 일제히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가 다음날인가 네 꼭지를 뉴스데스크에 방송합니다. 그게 대선 이틀 전이지요.

MBC 선거방송 준칙에 보면 검증·확인되지 않은 것은 임박해서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 내 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냥 마구 지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타 기타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민언련이 나섭니다. '아,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은 매체가 두 군데 있다', 어디냐? 하루 전날 'TV조선과 채널A다', 압박을 가합니다, 성명을 통해서.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두 매체가 이걸 안 했을까요? 두 매체가 굴복해서 겨우, 할 수 없이 그 두 매체도 보도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도 그렇지요.

대파 보도에 관해서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그걸 보면 이 대파 보도를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참 요긴하게 써먹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파 한 단, 그 대파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이걸 인용 보도합니다, 제목은 '875원짜리 파 한 단 어디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은 이제 이 순간부터 빠집니다.

또 JTBC가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 윤 대통령 물가 점검 날 대파 한 단 875원 할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 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젠다로 만드는 것은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없겠지요.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지요,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인데…… 아니, 지난 총선 때 저희 당이 받은 표가 45%, 다른 야당이 받은 표가 55%인가요, 두 당이 5% 차이 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위주로 몰빵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1명으로 이사 수를 늘리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하지요. 그러면 명목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늘려도 내부 구조가 어떤 다원적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한다면 이사 수 아무리 늘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그 역할을 합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아까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교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 이걸 무슨 언론노조의 탈퇴를 우리가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 가지고 소위 이른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자유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노총 언론노조가 동의하는 내용 외에는 보도할 수 없다면 언론자유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냐, 1980년 언론 통폐합이 근간입니다. 전두환 체제가 근간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유례없는 다수의 공영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KBS, MBC, EBS 이런 드러난 것 말고도 갖가지 광고나 이런 데서, 사실 KBS, MBC의 광고하고 같이 끼워 팔기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공영매체, 공영언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 없는 회사가 1980년 이후에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회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김장겸 사장이 왔는데 기껏 해

봐야 3년, 저는 8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주인이 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사실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간 경영진들도 책임이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원칙을 못 지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와 함께 언론노조의 진지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언론노조는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는 말이지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KBS 언론노조가 한 2200명 그리고 언론노조 아닌 1노조가 900, 저건 숫자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920명. MZ노조라고 300명 정도 되고, 거의 MBC는 1000 대 100이 아니고 1100 대 1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자체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아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민영방송이라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어떤 입맛에 맞게 하든지. 그런데 이것 문제는 국민의 재산이고 수신료를 받거나, MBC도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철밥통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지요.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시받고 이런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노총과 언론노조 강령을 보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2012년에는요 지금 해산된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수구 보수 궤멸, 보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당시 제가 계급이 좀 낮을 때 보도본부장을 향해서 언론노조 MBC본부가 성명을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도본부장에게 보도본부장이 보수 성향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재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제6조 2항 '방송은 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수, 진보 이런 것 차별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5번.

그리고 자신들은 이걸 견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으로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그러니까 MBC나 KBS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언론노조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주요 국장 임명을 못 합니다. 단체협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M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3년으로 늘렸답니다. 레이짐 체인지(regime change)에 대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성규약, 이런 것 굉장히 친언론노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도 노사가 동수로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수면요 그냥 언론노조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MBC에 공정방송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사장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냐면, 그러니까 언론노조의 압력에, 압박에 굴해서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한다. 노사

동수 5 대 5로 한다. 그런데 가부 동수일 경우 가로 한다. 원래 법률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 가입니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어떡하냐,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보직자에 대해 두 번 연속 인사이동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사장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협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장이고 당시 사장한테 '이게 말이 되냐', 만나 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노조가 계속 '정치부장 김장겸,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바꿔라'. 두 번 바꾸라고 그러면 그냥 바꿔야 돼. 사장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회의에 안 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또 파업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사실 거대 언론노조지요.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잘 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편집회의에 노조원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언론노조원이.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 편집회의라는 게 온갖 난상토론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다 적어 가지고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노조 간부가 편집 간섭 안 한다고요? 제가 정치부장 때 선거 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데스킹을 본 게 아니라 차장이 데스킹을 보고 '부장, 내가 봤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러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노조 간부가 올라왔어요. '부장,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안 되지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사무실에서 그때만 해도 뉴스 시스템이 접속이 돼 있었던 모양이야. 보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데스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올라와 가지고 '아니,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주먹인 거예요.

사회부장 때는 한명숙 총리 판결이 난 뒤에 제 기억에 노조 간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몇 꼭지 하실 겁니까?', 몇 꼭지 할 것을 노조 간부가 왜 물어봐? 편집회의 들어가서…… 언론자유는요 취재, 편집, 보도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경제 권력이든 노동 권력이든 다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 간부한테 '아니, 청와대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간섭이고 삼성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통제고 너희들이 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아무 죄의식도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사과는 했지만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배현진 의원이 겪어 본 겁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는 그러면 노조가 없고 해외는 노조가 이런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해외에 노조 있습니다. BBC, 특히 공영방송이 발달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노조 있어요. 노조 있는데, 단체협상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공정방송과 관련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자체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오직 후생복리만 단체협상을 체결합니다. 그건 몇 번 제가 거론했는데 고대 박지순 교수가 한 바퀴 돌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런던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그 BBC 내용은 좀 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 언론노조가 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공정방송의 판단 잣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지금 현상은 정치권력 배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권언 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언론단체들이 방송 4법 개정안에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정하고 있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보면 그 안에 전교조와 언론노조, PD연합회 등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우파 정권 때마다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계속합니다. 진보 좌파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문순 사장이 됐을 때요 최문순 사장이 부장에서, 직급상으로는 부장대우였습니다. 부장에서 갑자기 사장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보수정권하에서 사장이 들어오면 계속 낙하산이라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파업했던 노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내가 어느 간부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야. 부장에서 사장이 된 건 아주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느 편, 저편 내 편 이것 아닙니다. 권력에 비판을 해야지요. 우리가 비판,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그래야 맞습니다. 비판이 아니고 비방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비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악하겠다 이것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민주당 방송이 아니면 무조건 불공정방송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보도 관련해서 2012년도 파업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MBC의 사례입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한미 FTA 재협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때도 사실 잘된 협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붙인 게…… 문재인 정권 때는 조용했습니다.

탄핵 찬반 보도도 그렇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탄핵 찬성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반대가 있으면 당연히 보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도했다고 불공정 보도라고 저를 비판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반인들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언론노조원 기자나 PD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조원이기 이전에 입사시험 통과한 저널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싹 가실 겁니다.

음성은 안 나오는데 동영상을 한번, 2017년도에 고대영 사장 그리고 YTN의 사장, 저 이렇게 당했던 내용을 2분간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저건 그해 2017년 9월 1일 방송의 날 현장의 기념식장에 가서 봉변당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건 YTN 최남수 사장이 봉변당하는 겁니다. 지금 욕하는 기자는 여 기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보십시오. 사장한테 침 뱉습니다.

다음, KBS 보겠습니다.

역시 그해의 방송의 날 기념식장에서 이런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봉변당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기억납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 복만 입으면 아무데서나 노상방뇨하고, 그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자, PD입니다. 언론노조원이라는 완장만 두르면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한테 침 뱉는 그런 기자가 멀쩡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PD가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아니, 며칠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할 때 들어온, 참고인으로 나온 언론노조위원장이 당당하더라, 뻔뻔하더라고 그냥. 앞에 이진숙 후보자 지나가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국회 본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이 입장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불법인 줄 알고 했어요. 뭐 처벌받겠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처벌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런 것 좀 방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아, 의장님이 와 계시네.

의장님께서 2017년도 김장겸 사장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 지금 제가 왜 방송장악에 언론노조가 문제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10분만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다 나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우리 간사께서 사인을 줘 가지고.

(「최형두 의원 더 하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어디 계시나?

(「방에 있어요, 방에」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아니던데. 여기 와……

제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우리 언론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갔는데 CNN을 둘러보러 갔대요. CNN 쭉 도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CNN 관계자한테, CNN 간부한테. '아니, 보수정당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왜 CNN은 파업을 안 해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어요. 언론노조원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간 인솔자도 황당했고, 그 인솔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NN 관계자가 답을 제대로 해 줬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CNN 관계자는 이해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 노조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수시로 파업을 하는 나라, 그러나 진보 좌파정권하에서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조용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하니까 그 기자가 참 궁금했겠지요.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 드렸지만 일반인들은 노조의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자나 PD는 지성인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기자나 PD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물론 기술직이나 경영직이 포함돼 있겠지요. 그렇지만 투쟁의 선봉에 서는 언론노조원들은 기자나 PD가 대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이 또 가서 보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배나 이런 분들이 소위 꼿꼿한 언론인 상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사인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사인이 뭔데요?」 하는 의원 있음)

물 한 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부장 때부터 시달렸는데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이지요. 미디어오늘 제1대 주주가 언론노조고 2대 주주가 언론노조 MBC본부입니다.

제가 보도국장실에, 편집회의가 오후 2시인데 한 1시 50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곧 편집회의 들어가서 편집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앞에 여비서가 졸고 있는 사이에 미디어오늘 여기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 가지고 뭔가 내용을 흔들면서 '당신 왜 이렇게 했냐, 이것'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보도국장실에 어떻게 인터넷 매체 기자가 그렇게 난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그 뒤에 언론노조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여비서가 나와서, 졸다가 깨 가지고 들어와서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안 돼. 결국 경비원을 불러서 보냈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언론노조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그 뒷문으로 들어왔어. 뒷문으로 들어와서 뭔가 그 안에서 속닥속닥했겠지요. 그러고 5층으로 올라와서 제 방에 난입을 한 거야. 이제 한번 혼내 주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고발해 가지고 재판을 갔는데 그게 정당한 취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절 보고 괴롭히려고 참고인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지요. 나갔는데 판사가 저쪽에 좀 기울었는지 세뇌가 됐는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중앙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가서 취재하는 게 맞냐. 요새 공무원들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 방에 아무 때나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다행히 벌금형 유죄 받아서 대법원까지 유죄로 쏟아졌는데 그 정도로 오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앞의 다른 보도국장은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들 말 들었는데 왜 당신만이 유독 그러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돼서 제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서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검사가 도시락 점심을 같이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사장님, 혹시 정권 바뀔 줄 몰랐나요?' 물어보더라고, 밥 먹다가. '아니, 내가 사장이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고 제가 정치부장도 했는데 정권 바뀔 줄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면 이럴 줄 몰랐나요? 왜 사장이 됐습니까?' 이런 거야. 그 말에 표적, 당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벌받는 거야 이런 게 다 함축돼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기소당했고요, 6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고발 주체는 언론노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 2017년 8월 8일 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개혁을 앞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자정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말 안 듣는 방송사는 저를 겨냥한 거지요.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무슨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일은

아마 선진국에서, OECD 국가 중에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무슨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서면 진술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오라 오라 하더니만 9월 1일 날 방송의 날 행사장입니다, 63빌딩, 아까 거기 보이는 데.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무총리가 참석을 안 해요. 그때 내 느낌이 좀 이상했어.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런데 할 수 없이 저는 고대영 사장하고 들어갔는데 그 언론노조원들이 거의 뭐 폭력이지요. 거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히 폭력이지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그날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미리 친 거지요,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소위 그 방송장악 문건대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의장 우원식 예.

○김장겸 의원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장겸 의원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원)

(03시43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문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희의 토론을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도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다음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그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여기까지가 방송 4법, 저희 야 6당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곳에 사장의 추천권을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좌파라는 얘기 참 듣기 싫습니다. 방금 아까 토론을 하신 김장겸 의원님께서도 자꾸 좌파라고 하시더군요. 진보 좌파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보수 우파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조국혁신당에 있지만 예전에 제가 민주당의 대선캠프에 참가했었을 때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제가 중도 중의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좌파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좌파라는 말에는 혐오적인 그런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36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의원님보다 제 목소리가 제일 클 겁니다. 소리 지르시면 저도 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대로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상교육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이러저러한 사상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배운 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1975년생인데 제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태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에 대해서 같이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정당에 들어와서 있다가 보니까 자꾸 좌파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라는 그런 혐오 표현이 들어간 좌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치, 여러분들 아마 나치를 아실 겁니다. 저는 나치를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영화, 문화예술작품 그리고 나치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치는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가 왜 그랬을까요?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입틀막은 고대로부터 있기는 있어 왔습니다. 조직적이고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전략화해서 수행한 것은 아마 나치가 근대사에서는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37년 퇴폐미술전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히틀러의 명령 아래 선전부장관 괴벨스가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정신을 흐린다는 명분으로 나치당에 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뭉크, 피카소, 샤갈 이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나치가 선정한 퇴폐미술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는 독일 사회를 어둡게 그렸다는 이유로 단박에 퇴폐작품이 되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런 작품이지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지금은 퇴폐작품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지금은 고가의 그런 작품이 되었지요. 명작으로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독일 나치나 아니면 소련 공산당 등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체주의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괴벨스의 치밀한, 아주 계획적인 그런 계획하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 첫째로 비판적인 언론 또는 문화예술을 탄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술, 문학, 영화 등의 예술 분야를 오히려 반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전·선동 정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했는데 히틀러의 연설, 여러분들은 예전에 나온 그런 뉴스, 그런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히틀러의 연설뿐 아니라 나치군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화돼서 방송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영화도 제작됐습니다. 나치당의 대회를 담은 영화 트라이엄프 오브 윌, 1935년 작품이고요. 소련의 민족주의와 영웅주의 영화 레닌그라드, 1949년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민중지도자 그리고 영웅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대중은 미디

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미지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방송법 전반 의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회의 자료입니다. 본회의 심의안건요지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4법에 대해서 읽어 드렸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법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인가요, 아니면 KBS·MBC·EBS 사장인가요?

아니요.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 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은 시청자, 즉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의 주인은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장도 각 방송사 사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입니까, 아니면 KBS·MBC·EBS 사장입니까?

누구든 대답해 보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을 유지합니다. 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사적 자본이 아닌 공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공적 재원을 토대로 정치적 독립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임 수행의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입맛 따라서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법 안에서의 공영방송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제21조제1항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헌법 제21조 1항과 3항에 의해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 기본권 실현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헌재98헌바7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

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야의 비율은 6 대 3입니다. 수신료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가지고 다투는데 국민들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에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그리고 지금은 방송법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어떻게 어떠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2002헌바49에 따르면 입법자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

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연방에서 2명, 지방자치단체연합회 1명, 개신교 2명, 가톨릭교회 2명, 유대교중앙회 1명, 노동조합연맹 1명, 서비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경영인연합회 1명, 상공회의소 1명, 농업중앙위원회 1명, 수공업중앙협회 1명, 신문발행인협회 1명, 기자협회 1명, 구호기관 가운데 4명, 올림픽스포츠협회 1명, 유럽연합협회 1명, 환경과자연보호연방협회 1명, 자연보호연합회 1명, 구 독일제국 영토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추방자연합회 1명, 스탈린주의희생자협회 1명, 그 밖에 16개 주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ZDF 방송위원회 선출 과정은 파견기관에서 할당된 수보다 3배 많은 후보자를 추천을 합니다. 180명이겠지요. 그리고 각 주정부 총리가 위원을 지명합니다.

중앙독일방송도 있습니다. MDR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독일방송 방송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2022년 1월 31일 새롭게 방송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가능한 한 사회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표성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 계층의 서로 다른 지식, 기술, 관점 및 사회적 기대가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또는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인 활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734유로, 약 110만 원 정도 되는 수당을 받고요. 위원장은 월 1065유로, 약 16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외에 회의를 참여하면 1회 62유로, 약 9만 3000원 정도의 참석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법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인 활동가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회의가 매우 오랜 시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한 운영이 아주 매우 강조됩니다. ZDF 이사회는 회의 일주일 전에 의제를 먼저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참석자 명단과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21명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독일의 많은 수인 70명 혹은 74명에 비하면 정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권력자, 즉 임명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최고의결기구에 필요한 최소의

수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그렇다면 방송은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의견과 의사 형성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방송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규제해야 하지요. 소수의 미디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999년 맥체스니라는 학자는 '미디어 소유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비민주적인 편집권 통제가 일상화되면서 위험한 언론권력의 팽창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소수에 의한 방송 및 언론 권력 장악,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 민주주의의 위협이 현재 이 시간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에서도입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려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반인륜적인 보도와 이념 갈라치기, 극우 인식을 드러내며 뒤틀린 권력을 얻어 온 분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분이 과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한번 죽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난데없이 방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나? 방송법 개정하면 지금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려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는 거다'라면서 '완전히 사기다,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기자협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다 현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민노총 언론노조다. 이사추천권을 갖게 될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중 언론정보학회는 100% 좌파, 21명 중에서 17명 정도가 좌파 성향, 사실상 공영방송을 민노총 방송으로 영구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법', 이진숙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후보자는 방통위 청문회에서 본인은 좌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아닌 텍스트로만 봐도 공격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언급한 민노총 언론노조나 학회 또는 기자나 PD연합회 등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 성향 구성원도 꽤 됩니다. 무슨 근거로 100% 혹은 대다수가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건지 이진숙 후보 말씀해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추정한 그런 퍼센티지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으며 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재 저희가 논의 중인 방송법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 표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이 후보자는 보수 유튜브 채널 김경재TV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김경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 후보자의 말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뒤흔들

어 대는데 탄핵을 어떻게 막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또 온갖 거짓 선동으로 JTBC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무얼 했네, 무슨 시술을 받았네, 사람을 그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진숙 후보자의 SNS를 보면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택시운전사, 괴물, 변호인,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등은 좌파 영화다,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이런 것들은 우파 영화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연예인들도 좌우로 구분을 했지요. 문화권력도 좌파 쪽으로 편중돼 있고 연예계도 좌파에 편중돼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 또 전라도민들을 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인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하므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라고 주장한 인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과거 SNS에 세월호 참사 추모리본을 두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라고 한다던가 '저는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었다'라던가 '보수·우파 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을 이승만광장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댓글에는 '저도 이승만광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아예 답글을 적어 놨습니다.

'박정희공항, 박정희함정, 박정희시, 박정희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견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후보자는 '가짜 진보들의 조작을 거치면서 박정희는 독재자, 살육자로 이미지를 굳혀 갔다'라면서 '5·18이라는 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가짜 좌파의 박정희 조작은 도를 넘어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본관을 박정희컨벤션센터로'라는 댓글에는 '멋진 생각'이라고 동조를 했고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장소가 드문 이유에 대해서 '중공과 북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입김이 아직 주류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멸공'이라고 답글을 달거나 '좌파 출신 대통령기념관은 곳곳에 있는데 우파 출신 대통령기념관은 하나도 없다. 빨갱이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댓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문화방송을 응징해 달라'면서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단을 태우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MBC를 좀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정권이 우파로 바뀌었지만 좌파 사장, 좌파 방문진 이사장, 좌파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서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 이러고도 좌파를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과방위에서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던데요. 좌파, 우파 갈라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민노총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속했던 집단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였다. 그런데 민노총 강령에 보면 좌파진영의, 민주진영의 정치 이념을 교육한다는 그런 취지의 강령도 들어 있다. 그 교육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무엇이겠나, 방송이라든가 문화적 도구, 그런 툴들이다. 그쪽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게 MBC나 YTN이나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다. 임원, 사장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최근 이강택 TBS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KBS 출신으로 언노련 위원장을 했다. YTN 정찬형 사장도 MBC에서 노조 간부를 했던 사람이다. YTN, TBS, MBC라는 공영방송을 모두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직간부까지 노조원들로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MBC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도성향 사장이 가더라도 지난하게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MBC 관련해서 YTN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말 그대로 해가 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좌파적 문화가 지배적 문화다. 이런 현상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다.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의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밖에,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MBC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려면 중도적인, 중립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와야 되겠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 왜 중립적인 인물이 안 됐냐 하면 이것은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권 때 대단히 좌로 편향되게 만든 공영방송, 민노총 방송, 언론노조 방송을 정상화시킬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한다.

문재인 5년 동안 최승호식 방송, 박성제식 방송 이런 친민노총, 친민주당 방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와야 한다.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투사인 사람이 와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좌파에 접수돼 있다는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를 거론하면 인터넷 매체에 쫙 뿌려진다.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데서 몇 배 뻥튀기를 해서 뿌린다'면서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또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논평을 하는 그런 구조이다'.

이상이 모두 이진숙 후보자가 페북이나 인터뷰 등에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도 하지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 대한 인신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극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며 KKK나 반평등주의 등이 그에 해당한다' 등입니다.

이런 이진숙 후보자 발언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진숙은 김재철, 권재홍, 김장겸 등과 같이 정권이 MBC 문화방송을 장악하는 데 부역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진숙은 2014년 3월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원 구조라는 부끄러운 오보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깡패 등의 표현으로 폄훼한 왜곡 보도를 지휘했던 책임자였습니다.

2015년 3월 대전MBC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유성기업 대량 해고 등의 지역 현안은 축소 보도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부당 징계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2017년 12월 이진숙 후보자를 해임자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전MBC 사장에서 해임되고 난 후 2019년 10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볼 때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 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들의 발탁이 문화예술계 탄압과 방송장악을 통해 우민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주주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파편적인 내용이나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언론장악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맥락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어 온 슬픈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방송 4법의 통과가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군부정권부터 이어져 온 역대 보수정권의 검은 유산이고 훨씬 그 이전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 정권 언론탄압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2005년에 고승우 기자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은 자심했다. 그가 경제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해도 그의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 유린 행위는 역사적인 심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 언론 분야의 과거 조사가 정당하게 이뤄진다면 박 정권이 저지른 언론탄압에 대해 최소한 수 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불법·합법적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했다. 4·19혁명으로 등장한 제2공화국이 언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폭거였다.

정치군인들은 쿠데타 성공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 제1호로 언론의 사전검열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60년 5월 23일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를 앞세워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그 결과 76개 일간지가 37개로, 375개의 통신사가 11개로 줄었다.

박 정권은 쿠데타 직후 통일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언론활동을 하던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하고 이 신문사 사장인 조용수 씨를 사형시켰다. 이 신문은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 남북교류,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을 내세워 61년 2월 창간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반공이 국시임을 내세워 급조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조 사장 등에게 조총련계의 자금을 끌어들여 창간해 이북 괴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폈다라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했다. 조 사장은 5·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인 그해 12월 만 31세 나이로 사형을 당했다.

당시 혁명재판소가 내걸었던 조 사장의 죄목은 조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 괴뢰집단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 사장에게 공작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영근은 90년 정부에 의해 국민훈장을 받는 등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법살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군부는 62년 5월 박정희가 최고회의 언론정책을 발표한 후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의 경영권을 빼앗아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최근에도 제기되어 사회헌납 등의 주장이 속출한다. 정수장학회의 '정수'는 박정희와 육영수 이름에서 연유한다.

정수장학회는 설립 이래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 두 언론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문화방송의 경우에도 68년 이전에는 주식의 100%, 68년 이후에는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66년 이루어진 경향신문 매각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강압적으로 강탈한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일협정 추진 등 박 정권의 정책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했던 신문이다.

63년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준구 사장이 재직하면서 강화된 경향신문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은 크게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편집국장을 지낸 고 송건호 씨는 정부비판지로서 적지 않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던 경향신문은 67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압력으로 소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 든 사례 외에도 박 정권의 언론통제는 갖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법률적 통제로는 헌법,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반공법,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 집시법 등이었고 행정적 통제로는 기자신분증제 실시, 정부 각 부처 대변인제 도입 등이 손꼽힌다.

불법적 탄압은 보도지침을 통한 규제,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임의동행 형식의 언론인 불법 연행조사, 기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이 포함된다. 언론사를 드나들던 기관원은 관선기자 또는 언론계 출입기자로 불렸다.

이상과 같은 언론 통제를 통해 정부에 유리한 기사와 대통령 기사는 크게 다루어지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 왜곡, 삭제되었다. 또한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로 고속성장정책을 펴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경제 현장의 보도는 철저히 억제되었다. 군사정부는 이 시기에 언론에 대한 탄압과 함께 언론의 상업주의적 속성을 이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혜로 언론을 권력에 편입시켰다.

박 정권의 집요한 공세 속에 언론계는 점차 위축되어 67년 이후 기자의 구속,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보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언론의 무기력증에 대해 67년 선거 후 대학생과 독자들의 비판 및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잇따랐다. 즉 71년 4월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해 10월 제2의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는 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탄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0월 유신헌법이 등장하자 언론은 유신체제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박 정권은 기자신분증 발급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기자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언론인 자격 유무를 사전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정권은 이어 언론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내쫓았다. 즉 8개 지방지가 3개로 줄어들고 전국 기자 수는 6300여 명에서 3400여 명으로 감소했다.

73년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윤리위원회가 자율기구에서 법적 기구로 바뀌어 검열기능이 커졌다.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박 정권은 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에 이어 다음 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긴급조치를 양산했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75년 5월은 인도지나반도가 공산화되고 국내에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었다. 군부는 긴급조치 9호로 개헌 논의 금지, 집회·시위 금지와 함께 언론의 이에 대한 보도 행위도 금했다.

긴급조치 아래에서 정부의 언론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자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서 노조 결성이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리고 7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일어났다. 75년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섰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고 이 운동을 지원하던 기자협회보가 폐간되었다. 이후 10·26까지 4년여 동안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유린당했다.

여기서 긴급조치 9호는 김상진 할복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 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단체·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해서 긴급조치는 시행되었

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 시대는 완전히 민주주의 암흑기로서 800여 명의 구속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박정희의 향수가 수그러들지 않은 것은 그 시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실체는 그 측근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독재자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짓밟기 위해 거느린 하수인 집단의 무모함과 반민주성은 10·26과 12·12 그리고 5·18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정희가 총애하던 김재규, 전두환 등 권력 실세가 저지른 갖가지 범죄행각에서 박 정권의 정치철학이 어떤 것이었나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의 반민주, 반민족적인 천박한 지배욕은 언론탄압과 어용언론을 통해 미화되었다. 박정희 신드롬은 국민 기만이 빚어낸 비극이다. 독재자의 망령을 걷어 내기 위해 당시 언론탄압의 진상규명과 어용언론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보수정권 언론탄압 역사는 이후의 정권으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동아일보 광고 탄압.

1980~1985년까지 전두환,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전국 64개 언론사가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 언론인 1000명 강제 해직, 5공 보도지침 도입,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 신설, 보도 방향 및 분량, 형식 등 구체적 지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보복성 탑승 배제,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대표 김용진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 방식으로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징계한 사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압박이나 아니면 감시 이런 게 없습

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위해나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미 방송이 어용방송, 관영방송으로 전락을 했고 그 어떤 자민당 발표가 있어도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방송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민당처럼 오랜 세월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말도 못 하고 벙어리, 그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 나라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갖은 힘든 일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민초가 지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한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글을 배웠겠습니까? 먹을 게 풍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 온 나라, 그렇게 살아 왔던 국민,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지 그게 엔터테인먼트 방식인지—예전에 검투사 경기를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요—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지, 돈줄을 끊는 것인지, 기관장을 바꾸는 것인지 우리는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원조이자 토대를 닦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류희림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자발적인 추종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보면 국민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갈라치고 방송은 어용 방송이어야지, 우리가 사장을 임명해야지 안전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역대 보수정권의 유산을 계승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왜 언론과 문화예술을 핍박하고 돈줄을 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언론과 문화예술이 국민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게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어서 가겠습니다.

군부정권의 국민 억압 유산 계승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드러난 계기는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입니다.

총 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1. 문화권력은 이념 지향적 정치세력 2.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3. 균형화 추진 전략 4. 주요 대책(안) 5. 추진 체계 및 재원 계획 6.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에서 제시한 균형화 추진 전략은 단기간 좌파 척결을 위한 전쟁보다는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 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기관 내부 많은 수의 좌파 실무자들 청산 필요 등입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는 우파 문화 실행기관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우파 문화 싱크탱크 문화정책포럼 설립, 모금회 및 펀드 구성으로 건전 문화 세력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메이저 신문과 협력하여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기업을 통한 자금 조달 등입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여기 적힌 내용이 상당 부분 실행되었습니다. 이 문건 작성 이후에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20여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해임되었고 유인촌 장관을 필두로 47개 문화부 관련 기관장에 친MB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임 기관장들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승소하게 됩니다.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장관이던 시절 2008년에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곧바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원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이전 보수정권인 전두환 정부의 일해재단 문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씨가 역시 너무 작아서 읽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목적, 명분 설정, 실행 기관, 주요 사업, 자금 조달 방식, 기부금 출연자, 건물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해재단은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86·88 국제경기 선수 및 지도자 육성, 83년. 21세기 국력 신장과 조국평화통일 앞당기기 위한 것, 8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는 목적이 건전한 문화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 배정,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는 것을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분 설정 카테고리를 보면 아웅산 피해자들에게 23억 5000만 원 위로금 지급.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글로벌 시장 지향하며 영진위를 통해 영화 분야 1000억 원 펀드 조성, 15편 규모. 이렇게 돼 있고요.

일해재단의 실행 기관은 일해연구소입니다. 일해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해재단의 주요 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항구적 우파 문화권력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각종 포럼, 세미나, 공연, 정책 대안 개발, 콘텐츠 공모전, 우파 사업 지원.

자금 조달 방식은 일해재단에서는 모금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문화산업모금회 역시 설립이 됩니다.

일해재단의 기부금 출연자는 전두환 대통령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현대 회장, 김우중 대우 회장, 최종현 선경 회장 등 총 56명의 재벌·대기업이 총 598억 원을 84년에서 87년까지 출연했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억 원 기부합니다. SKT, 현대차, 삼성 등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 대상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200억씩 1000억 원 규모로 기부금을 내도록 합니다.

일해재단이 건물을 건립하는데요 일해연구소를 2년 뒤에 완공을 합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내용에서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2년간 약 500억 규모 문화창조센터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너무 비슷하지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일해재단의 주요 사업,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이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의 주요 사업과 일치하는 점입니다.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 조달 방식, 기업 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똑같이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1. 간부진 인적 쇄신, 2.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3. 소유구조 개편 등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기획에 따라서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 취임 후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MBC 모든 관계사 사장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지역사 19곳을 포함한 총 28곳 관계사 가운데 22곳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MBC 논설위원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문건에 반영해서 당시 논설실장은 특집 TF 팀으로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재철 MBC 사장은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하였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김미화를 상대로 김재철 사장이 직접 나서거나 라디오 제작본부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진행자 지위에서 사퇴시켰습니다. 또 배우 김여진을 대상으로 손석희의 시선집중 토론자 출연을 금지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 등을 명령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곤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구조화하고 개념과 전략,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민 억압 유산, 그대로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혹은

지시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비교해서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그리고 김기춘 발언·지시 문건.

먼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는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줄여서 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

김기춘 발언·지시 보겠습니다.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좌편향 문화예술계가 문제가 많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으로 넘어갑니다. '건전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김기춘입니다. '보수 가치의 확산을 위해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라', 유진룡 장관 지시사항 등입니다.

다시 균형화 전략 문건에 가서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

김기춘 발언입니다.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중간보고하라', 이건 수석비서관 지시사항 등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넘어갑니다.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 실무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청산이 필요하다'.

김기춘 발언입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 인사비서관한테 한 지시내용 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을 시작하라'.

김기춘 발언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경력은 물론 이념 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정원 작성 문건,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모철민 교문수석 이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으로 가 보겠습니다. '건전문화세력 형성 추진'.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받고 기뻐하여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하라'를 지시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문건으로 가서 '문화를 국민의식 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 조직적으로 대응'.

다시 김기춘 발언으로 갑니다.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 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 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수석비서관에게 한 지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 12월 15일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조치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였습니다.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김기춘 비서실장

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는 단체 3000여 곳과 개인 8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입니다. 일단 명단에 등재가 되면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포상도 안 되고 인선에서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단순히 명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문서가 내부에 있었다, 그리고 털었더니 그 문서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이 조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배제, 감시, 차별, 통제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블랙리스트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자행되는 문화예술계와 언론장악의 목적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존 권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상의 원천 봉쇄, 국가권력 강화, 국가 안보관 확립 및 반국가세력 처벌, 독재 유지, 기득권 등에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과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문화검열 찬성하는 그런 지지세력에 대한 확보, 노동계층과 빈민에 대한 혐오정서 확산 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런 언론탄압, 문화예술 탄압에는 역사와 유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 어째서 이렇게 친일 일변도에 언론과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노동계를 그렇게 죽어라고 싫어하는가, 그 이유와 시초가 바로 일제가 자행한 우민화 정책, 즉 문화통치 그리고 그것을 친일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들과 이권으로 결탁한 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따라 하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블랙리스트의 원조는 일제의 사상경찰입니다. 일제경찰, 즉 총독부 경무국은 사상이 불온하거나 총독정치에 찬성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인물을 요시찰인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갑종, 을종 이렇게 분류해 오다가 1928년 7월 갑·을종을 폐지하고 요시찰 명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당시 1928년 7월 28일 자 동아일보에는 흑표장—흑표장이 블랙리스트의 한자어 표기입니다—중의 인물 전 조선에 3000명이라는 기사에서 개명되는 소위 쁠랙크리스트에 드는 사람은 3000명 내외에 달하여 3·1운동이 일어나던 기미년까지 약 1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후 차차 증가해 현재의 3000명에 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새로 만든 쁠랙크리스트는 각 도의 명부를 통일해 사진까지 첨부해 배치하게 되며 종래는 정치 요시찰인과 사상 요시찰인으로 구분을 했지만 조선인의 행동이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민족운동자들도 사상 요시찰인 명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쁠랙크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한자로는 흑표장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일제 경찰이 만든 요시찰인 명부, 소위 블랙리스트 이것은 8·15 광복 이후 친일파가 득세했던 한국 경찰에 그대로 승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범, 즉 빨갱이를 감시하고 잡는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초를 겪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람들, 그래서 공무원 취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에 요시찰인 명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빼거나 아니면 친분을 이용해서 빼거나 자신의 명단을 요시찰인 원본대장에서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경찰한테 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요시찰인 명부가 일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북한의 간첩 남파가 빈번해지자 대검찰청은 1958년 3월 사상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검사의 주도로 반국가적 행동 단속요강을 작성해서 전국 각급 검찰에 시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제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격인 매일신보가 있었고요 민족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가 있었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1년부터 폐간되던 1937년까지 친일 논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당시 사회 대소사와 소식들로만 신문을 편집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 친일적인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독부로부터 권고하는 기사 혹은 지시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빼 버린 상태로 7년간 계속해서 정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증언을 해 줬는데요 국내 항일운동을 위해 조선중앙일보의 부고 기사를 암호 삼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고 기사 내용이 바로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암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신문사들과 다르게 조선중앙일보는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일 뿐 아니라 상당수 항일운동에 몸을 담고 있었고 신문이라는 매체를 항일운동에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조선과 동아가 이봉창, 윤봉길, 독립군을 범인, 도둑떼, 흉악범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실명만으로 간략하게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친일 매체로 그 당시에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36년 손기정 옹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지요. 그런데 36년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가 삭제된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총독부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보니까 며칠 뒤 동아일보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일장기를 없애고 한번 올려 볼까 그러다가 기자들이 '그러자, 우리도 손기정 사진만 싣고 손기정의 일장기 사진은 지우고 올리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게재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문제가 되지요, 한두 군데는 그냥 봐줬는데 다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김성수가 일장기 지운 사진을 올린 두 기자를 파면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총독부 지시에 따라서 친일 인사를 주주로 대거 편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선 기자까지도 친일 인사들이 동아일보의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뜻을 가지고 있던 일선 기자들 그리고 그분들도 대거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일장기 삭제 사건에서 기자·편집인 파면, 사과문 게재 그리고 친일 인사 주주 편입, 이렇게 총독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

해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1937년에 폐간이 되게 됩니다.

조선과 동아도 40년에 폐간이 되기는 되는데요 폐간 사유는 조선중앙일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던 1937년, 37년에는 중일전쟁도 발발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과 동아는 친일적인 논지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본래 1933년에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그리고 운영하면서 친일 인사들로 주주를 구성해서 주식회사 간판을 단 조선일보와 1937년 총독부로부터 경고 및 친일 인사들에 완전하게 장악이 이루어진 동아일보로서는 조선중앙일보의 폐간이 자극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의 조선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총독부 기관지 격인 매일신보의 불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매일신보는 '우리들이 기관지인데 그런데 조선·동아가 우리보다 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일본 본국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조선·동아가 너무나 총독부 또는 일본 본국에 대해서 정책이나 행위에 찬양 일변도로 나가므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조선인들, 조선·동아의 기자들이 관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조선총독부 문서 내용에 따르면 1938년에 중일전쟁이 나면서 물자난이 아주 심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일본 본토 내에서도 신문사 통폐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발표되고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본토 내에서 반수의 신문들이 폐간되거나 아니면 통폐합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도 이런 통폐합 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정리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의 신문사 정리 계획이 발표가 되자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조광—지금의 월간조선의 전신인 그런 자매지입니다—을 발행했습니다. 총독부가 신문사를 폐간하거나 통폐합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자매지를 발행했음에도 조선일보 1940년에 동아일보하고 폐간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처럼 강제적인 그런 무단 폐간이 아니었고, 무단 폐간을 하게 되면 국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기자들이 너무나 일본 정부 그리고 총독부에 협조적이었으니까요.

조선총독부 신문사 정리에 관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 동아의 내용이 대부분 매일신보와 동일하여 중복적인 신문사들은 가뜩이나 달리는 물량 자원—전쟁 중이니까—이걸 생각하며 불필요하다라고 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매일신보의 불만, 일본인 기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입맛에 맞더라도 일본 신문인 매일신보를 폐간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여 당시에 따라서 조선하고 동아를 폐간하되 일정 보상금을 인수 형식을 빌려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언론 재벌, 이때의 자금으로부터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독부에서 조선은 60만 원, 동아는 30만 원을 제시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 '이거 가지고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동안 충성한 게 있지 않느냐. 이미 폐간을 하게 되었으니 조금 더 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총독부에서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 동아는 3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반발을 하니까 20만 원씩 올려서 줬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40만 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1930년대 40만 원의 가치는 현재 돈 123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조선일보 폐간된 이후에 자매지인 조광은 계속해서 발행을 했지요. 조광의 경우에는 친일의 그런 농도가 한층 더 짙어지게 되는, 친일 문학가들이 신문의 모든 면을 다 도배

하고 징용, 징병, 정신대를 장려하였습니다.

방응모 그리고 김성수는 매일신보와 조광에도 많은 기고를 하였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방응모 혹은 김성수가 아닌 전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전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 이렇게 이름을 게재하면서 친일이 아니라 아예 숭일적인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징용, 징병, 정신대를 장려하는 글을 아무렇게나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물자 기부, 물자 기부는 비행기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그런 친일이었을까요? 당시에 조선중앙일보도 있었잖아요.

자, 오늘 이 나라에서 언론, 대통령 그리고 부역자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신문사 말고 3·1운동 때부터의 사람들이 본 광경, 이런 것들은 어떠했는가를 좀 봤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평화적인 시위 내지는 운동이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맨몸에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온 것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온 조선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거리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 큰 위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시위가 생기다니. 그래서 놀란 거지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로 합니다,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살육을 해대고 아무나 잡아가고. 유관순 열사 사진 보셨지요? 기껏해야 어린 소녀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왔을 뿐인데 그런 어린 소녀들까지도 다 잡아갔습니다.

역사 왜곡은 아주 심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일본의 신민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주입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뿌리를 잊은 채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다음에 저항 문인들에 대한 탄압도 그때 심하게 있었습니다.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글로 항거한 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육사·한용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은 위인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초창기만 해도 그런 문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문인들에 대해 일제는 갖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회유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이육사·한용운을 제외하면 그렇다 할 저항 문인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절필을 하거나 아니면 친일 문인이 되어 버리거나.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을 친일파가 되어 내모는 데 큰 역할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육은 강력하게 중앙 통제를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에게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그저 일 잘하는 노예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을 뿐 조선 학생들에게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압 정치를 하던, 무력 정치를 하던 일제가 조금 생각을 바꿉니다.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문화정치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 정치,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우게 해 주니까 조선인들 중에서도 고등교육받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씩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제에 저항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점령당한 나라의 국민들이니까 역시 먹고사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인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는 주었지만 사회진출 통로를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 탄압할 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주게 함으로써,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말라 죽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지요.

힘들게 진출을 해도 조선인으로서는 유리천장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 절대 조선인이라면 이 위치까지는 올라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지요.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가는 정도가 총독부 서기 정도입니다. 대학 시절에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일본인들, 그런데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일제는 그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회문제,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

하게 취업의 길도 좁히고 출세를 위해서 변절하게 만들고 거기에 딜레마를 느낀 지식인들은 변절을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저항하다가 가난하게 살거나 끌려가거나 그러다가 죽는 운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큰 권위에 복종해서 자기의 원래 소신을 버리고 혹은 정치권에 조금 뛰어들고 싶어서…… 이진숙 후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정치권으로 가고 싶어서 말하자면 극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발언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중도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방송은 정말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언론장악이 일제시대에 나옵니다.

아까도 신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전에 관에서도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제가 탄압을 심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계몽운동도 하고 조금이라도 민족에게 도움이 될까, 독립에 도움이 될까 부고 기사를 암호로 사용하기도 하면서요. 그런 신문들도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폐간되는 신문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시행 그리고 전시 동원체제하에서 남아 있던 신문들이 모조리 폐간되게 됩니다. 거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었지요.

폐간되기 전에 두 신문은 나름 그래도 노력은 하는 신문이었지만 폐간 이후 다시 간행된 때에는 완전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일등 공신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사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제일 큰 신문사, 재벌 언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자신들에게 협력적이지 않은 그런 조선인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정책 참여,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블랙리스트에서 볼 수 있는 배제의 방법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 법령,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법 앞에서는 조선인은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상정을 하려 하는,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방송법들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방송 전체를 장악해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속 있지만, 저도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 하실 때 봤지만, 그렇지만 중간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새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 여러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온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가 만든 법 앞에서 조선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요. 오로지 일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 상정 건을 읽어 드린 이유는 여기에 어디 좌파나 노동계가, 민노총이 사장을 임명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추천후보제 이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좀 강조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판사들 그때 당시에 죄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사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배를 법으로써 정당하게 갖고 조선인들에 대해서 억압이 더 심해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36년을 보낸 후에야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광복은 됐지만 일제의 잔재가 그 이후로 완벽하게 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빌붙었던 이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고요. 사회 각계각층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서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 일제가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스리기에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기관장을 갈고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행사, 입상 이런 것에서 제외하고 임명도 안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길들이기에 최고로 좋지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일제가 독립운동을 빌미로 많은 반대자들을 없애 나갔다면 이런 보수정권 대통령들은 빨갱이를 빌미로 정말 많은 반대자들을 없애 온 방법을 썼습니다.

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괜찮겠습니까?

○의장 우원식 예.

○김재원 의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제가 써 온 문화통치 즉 우민화 정책의 방법은 정권과 언론의 결탁, 군사 무력 통치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리고 돈으로 길들이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때서부터 답습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표로 비교해 드렸던 방법, 계속해서 역대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친일 행각에 의해 탄생해서 길들여진 그런 족벌언론을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보수정권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안통치의 형태로 자행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탄압과 문화예술의 탄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공안기관의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존안자료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육군방첩부대가 A4 크기의 종이에 안보를 명분으로 주요 인사의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반혁명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보부는 이것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초 정보인 1호 정보부터 가족사, 정치·사상 성향의 2호 정보 그리고 최근 동향, 접촉 인물 등에 관한 3호 정보 이렇게 분류해서 속속들이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1970년대 중반에 군 정보기관에 지시해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이것을 옐로카드라고 합니다—이것을 작성토록 그렇게 시킵니다.

군 내의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김충립 전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은 1974년에서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 장교 800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신동아 2016년 1월호 잠깐 보겠습니다.

1974년에서 1975년 청와대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대령급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인 일명 옐로카드를 작성했다. 장군 1명의 존안 자료를 차곡차곡 쌓으면 높이 50㎝가 넘었다. 그 기록을 대통령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장에 담는 작업이었다.

김충립 전 수경사 보안반장이 '1963년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음모 옐로카드 신상카드 기록하려다 무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신동아 2016년 1월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고위 장교 800명의 옐로카드 이것이 작성된 1974년에서 1975년, 이때는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이때 육영수 사망이 일어납니다. 1974년 8월 15일이지요. 베트남 공산화 통일, 1975년 4월 30일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안보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전인 1973년에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늙고 쇠약해졌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이 되어서 윤 사령관과 손영길 준장 그렇게 장교 30여 명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을 덮어쓰고 숙청된 윤필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안 자료가 탄생되고 작성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창건한 원조가 일제 사상경찰이라.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군의 인력을 감시하던 그런 계획이 민간인 사찰계획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청명·예비검속 카드 또는 청수. 청수카드는 동향파악 카드입니다. 이것은 1990년 10월 보안사에서 복무를 하던 윤석양 이병이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의 각계 주요 인사 그리고 민간인 1303명을 대상으로 정치사찰을 벌였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안사령관은 물론 국방장관도 옷을 벗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은 보안사를 기무사로 바꾸고 이때 조직을 개편해야 했습니다. 사법부도 민간인 사찰, 불법행위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1998년 7월 대법원은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 감사원장 그리고 노무현 의원, 박원순 변호사 등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해 국가는 한 감사원장 등에게 각 200만 원씩 모두 2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정희 후계자들이 승계한 또 다른 공안통치 자산이 바로 노동계 블랙리스트입니다. 자꾸 노동계가 어째서, 좌파가 어째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승계가 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노동계를 나쁜 사람들로 몰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게 일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역대 보수정권을 거쳐서 이것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용이 됐고 그리고 노동계도, 노동계는 얘기를 조금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이하 국정원 과거사위에 따르면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 분야가 바로 노동계였습니다, 의원님.

중정과 안기부는 불순 노동운동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 노동부, 경찰 그리고 상호 정보교류 속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해당 근로자 동향을 감시하고 노조 조직을 와해하는 그런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아까 청명계획이랑 굉장히 비슷하지요. 국정원이 보존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로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 노동탄압 그것이 바로 동일방직 사건,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입니다.

중정과 안기부는 민주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를 도산,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계해서 산업 평화를 저해하는 불순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동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고 이랬었을 때 집회에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나가니까 저를 담당하는 정보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낭 메고 나가서 때로는 음료 봉사 같은 거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저는 덩치도 작고 일개 가수일 뿐인데 정보관이 하나 붙어서 쫓아다니더군요. 나중에 연락처도 물어보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짓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감시가 붙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보관이 하나 붙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관리를 하려고 했겠지요. 제가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을까,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 세력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리스트에 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노동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를 하는데요. 특히 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유관기관에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을 제시를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 범위 그리고 대상을 수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대체로 개별 기업의 제보—기업들이 제보를 하는 거지요—에 의해서 기업, 노동부, 정보기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한 아래 작성돼서 각 사업장 및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실, 정보기관 이런 데 비치되어 활용이 되었습니다.

안기부의 도산 관련 해고자 681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재심사 등이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18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 그리고 인식과도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방화범 문부식의 배후인 김현장 이 사람을 검거하면서 김 씨를 당시에 보호해 준 최기식 신부를 구속을 하자 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두환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해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을 정부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종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 후에 1982년 5월 10일 전 대통령은 반체제 종교 문제를 정무1수석실에서 관장을 해라, 그러되 별도의 종교대책반을 구성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학원 및 종교 대책은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안 검사 출신 박철언 비서관이 교육문화수석실, 문공부, 안기부의 실무 지원을 받아서 종교대책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특집방송 또 기획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 전복을 목표로 하는 도산의 극한 투쟁은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도산이 침투한 기업은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으로 어김없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언이 회고록에 노동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딱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안기부가 관리한 도산 관련 해고자 블랙리스트 그리고 안기부 보도지침에 따라서 기획된 관제 언론의 도산 특집 보도, 이게 청와대 종교대책반이 지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파악해 보고했던 도산의 실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인식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민주노조 활동에 참가한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명단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 방해의 금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그 후계자인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관리 그리고 적용 실태는 그 대상만 노동계에서 문화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블랙리스트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판박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방송 4법 꼭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패턴이 있고 반드시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 정부에 충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수단의 하나로써, 그 툴로써 방송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장후보를 뽑아서 임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그렇게 한다,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게 되겠냐. 누가 그러시더군요. 거기 아까 나온 학회에 관해서도 트집을 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겠냐?

아니, 그러면 현장과 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회 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야당 사람들입니까? 야당 의원이 들어가요? 그런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또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법들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따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보수정권의 문화예술 및 언론탄압 그리고 노동계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이것을 참고를 하자면 문화권력이라는 것을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닌 문화를 수단으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다. 그들은 활동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나오는 그 얘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좌파가 국민의식 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문화를 조직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좌파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그 중심에는 노동계가 있다.

반면 우파의 경우는 구심점을 상실해서 세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우파 문화예술계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라고 문화 균형화 전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문건에서 좌파 문화예술 작품으로 적시한 영화가 이진숙 후보가 22년 강연에서 말했던 괴물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왜 이런 인식이 그대로 내려왔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올라와서 발언을 시작할 때 좌파가 어쩌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혐오 정서가 내포가 되어 있는 이 좌파라는 단어 그리고 북에 대한 악감정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는 언론·방송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불안정한 그런 정전 체제 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분단 극복이 된 게 아닙니다. 통일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정황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동안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무턱대고 북을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두 전체를 다 빨갱이 내지는 좌파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언론의 이런 태도가 북풍몰이로 고질적으로 반복이 돼 왔는데 1986년에 평화의댐 보도 또 북에서 잔인하게 숙청을 했다든지 처형을 했다든지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읽었다던, 리영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언론기관의 평화 기피증과 통일 공포증은 거의 절망적이다라고 토로를 하시면서 원인으로 우리나라 신문·방송은 섣부른 국가안보와 국가 지상주의 유일사상 주술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라면서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유일사상 선정·선동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분단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의 조선 침략 수단, 즉 113년이나 되는 일제의 잔재……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행정권을 장악하고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등이 일제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랬더니 일제가 근대 사법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구실로 제정한 법률 제1호가 신문지법입니다. 법률 제2호가 보안법이에요. 신문지법이 더 앞섭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언론장악은…… 모든 정권, 혹은 왕이나 이런 권력자에 있어서 언론이 제일 무서운 것인 겁니다.

왜냐, 왜 신문지법이 1호가 됐느냐? 사법권 침탈 후에 첫 번째 조치가 말을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신문지법과 정신을,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보안법을 제정한 겁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반발하는 신문은 폐간하고 의병을 탄압하고 1910년에 한일병탄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주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에 대한 기사 호의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념적 색채가 있는 논문, 소설 쓰지 않겠다. 공산주의·민족주의적 언론보도 하지 않겠다' 등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아까 윤봉길 의사를 '괴물'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 의거를 '흉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러시아의 적색테러라, 요즘으로 치면 종북몰이 보도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가 광복 후에도 극복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일제하에 시행된 법 중에서 예비검속법, 정치범처벌법, 신사법 등 7개 법만 폐지하고 신문지법과 보안법은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언론과 사상을 통제한 2개 법이 해방 후에도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법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도록 두었을까요?

이렇게 왜곡된 언론과 보안법의 결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심각하게 이념적 장애를 남게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내느냐? 제주 4·3, 대구 10·1 이런 현대사회 비극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분단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상잔이라는 최악의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혐북(嫌北) 문제, 이게 분단 아비투스 혹은 분단 트라우마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시대 정권은 언론기본법, 보안법 이런 것들이 결탁을 해서 정권 연장 혹은 정적 살해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 잔재가 민주화시대에서도 종북몰이로 발현되고 있고 정치인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정부의 이성적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종편이 탄생한 게 얼마나 됐던가요? 한 10여 년 되나요? 끊임없이 어떤 채널들은 혐북의 확증편향을 강요해서 거의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방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것 말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에서 발생한 윤석열차 사건 그리고 가수 이랑 배제사건, EBS '금정굴' 다큐 방영금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문화예술 탄압 사례이지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기자 및 대표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압색, 류희림 방통위원장의 청부민원 징계 이런 언론탄압 사례를 우리 지금 다 기억합니다.

노동계 탄압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보수정권이 했었던 것들과 지금과 너무 판박이같이 닮아 있지 않은가요?

이진숙 후보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좌파 노영방송 표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노조 등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제의 잔재, 가장 쉬운 통치 수단에 중독되고 세뇌되어서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성은 바로 두려움의 발로이지요. 정권을 쥔 자 혹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세력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권력을 위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민의 비판, 국민의 목소리인데요.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시키고자 이진숙 후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왜곡된 우파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공격성을 유지시키는 거지요.

이것은 일제가 우리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썼던 문화통치 방법 바로 그것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박정희의 엘로카드가 닮았습니다. 노태우의 청명계획이 닮았습니다. 전두환의 노동계 블랙리스트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많이 듣던 얘기지만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역대 정권들이 우민화 정책을 위해서 자행했던 블랙리스트 행위, 그것 종래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대해서 심판한 판결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읽다가 너무 지겨우면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판결, 이명박·원세훈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는 법원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서 전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6239 손해배상(국)

피고 1. 대한민국, 2. 이명박, 3. 원세훈

변론종결 2023년 10월 13일, 판결선고 2023년 11월 17일

주문

1.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부터 2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이명박·원세훈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명박·원세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 2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수립 문건의 작성

제17대 대통령인 피고 이명박의 재임기간 중인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명의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Ⅰ.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Ⅱ.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Ⅲ. 균형화 추진전략, Ⅳ. 주요대책(안),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Ⅵ. 향후 일정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Ⅰ.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항목 아래에는 문화권력이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는 등의 내용이, Ⅲ. 균형화 추진전략 항목 아래에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Ⅳ. 주요대책(안) 항목 아래에는 건전 문화세력 형성,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등의 방안 제시와 함께 건전 문화세력 형성 방안의 내용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좌파 연예인 TF의 구성 경위 및 운영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년 10월 30일 발표한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른 좌파 연예인 TF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

2009년 10월, 2011년 6월,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2009년 11월,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2010년 1월, 2010년 문화·예술분야 등 건전화 사업계획 보고, 김00 전 기조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TF는 문화·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실태를 수시로 점검

2010년 1월,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후보 배제 유도.

2010년 2월,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2010년 3월,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2010년 3월,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

2010년 4월,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2010년 4월, 김제동 출연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똑같이 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원장 지시).

신임사장 취임 3월 2일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2010년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민정수석 요청).

2010년 9월,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 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현 우려.

2010년 10월,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기획관리비서관 요청).

촛불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조치.

2010년 10월,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 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원장 지시).

2010년 11월,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원장 지시).

2010년 11월, 좌파 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원장 지시).

이것은 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치 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

2011년 4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원장 지시).

2011년 8월,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청와대 보고.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시키고 출연 제한 근거 마련.

심리전단 활동.

사이버상에서 특정 연예인의 종북 성향 폭로, 문화·연예계 종북 세력이 암적 존재라는 것을 부각, 댓글 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 모델 교체 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 활동 수행.

2009년 11월,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 글이나 댓글을 게재, 500여 건.

2010년 10월,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 모델 교체 유도.

2011년 1월,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2011년 4월,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친북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2011년 5월,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다. 국정원의 보도자료 배포.

한편 국정원은 2017년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피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 등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피고 원세훈이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예술계 내의 정부 비판 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 테러로 명예를 실추하거나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하거나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을 선동하는 등의 사유로 각 분야별 퇴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으로 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총 82명에는 원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 2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발간하였다.

백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 갑 제11호증의 2(100 내지 110, 112 내지 117면), 갑 제11호증의 9(220 내지 221면, 492 내지 494면, 675 내지 676면)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원세훈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원세훈은 피고 원세훈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MBC 경영진인 BF, BG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 원세훈과 BH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김미화로 하여금 종래 종사하던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직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원고 김미화의 위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미화로 하여금 종래부터 종사하던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 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원고 김미화의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원고 김미화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고 김미화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2020년 2월 7일 피고 원세훈 등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 방송사 경영진이나 제작담당 간부들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BG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BG의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 BG를 비롯한 MBC 경영진의 행위가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 원세훈이 BG를 비롯한 MBC 경영진과 공모하여 원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방송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원세훈에게 원고

김미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고 김미화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486호, 2018노3185(병합)호) 및 상고(대법원 2020도12583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자들이다.

피고 이명박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에게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인물을 견제 혹은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원세훈은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정부 비판세력으로 규정한 후 국정원 기관 조직을 동원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여론 악화,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기본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행위를 공통의 불법행위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원고들 각자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22년 12월 2일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은 2010년 11월경까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들은 불법행위일인 위 2010년 11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이명박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이 피고 원세훈에게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피고 원세훈이 위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비판세력으로 규정한 후 국정원을 동원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명박은 피고 원세훈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 원세훈의 주장.

원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원세훈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각각 자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등재된 이후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1호증(백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 중인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명의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위 문건의 3번 균형화 추진전략 항목 아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4. 주요 대책(안) 항목 아래에는 건전 문화세력 형성,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등의 방안 제시와 함께 건전 문화세력 형성 방안의 내용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5.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 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 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국정원이 2017년 9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피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을 권고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원세훈이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하거나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하거나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을 선동하는 등의 사유로 각 분야별 퇴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으로 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에는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 2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 사실, 위 백서에 피고 이명박 정부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국정원 주도로 블랙리스트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 수집, 대응 방안 마련,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지시하였으며 국정원 국익전략실 2단 산하 사회팀장은 2010년 11월 2일 자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계 단체·인물의 성향을 온건 좌파와 골수 좌파로 구분한 다음 골수 좌파의 경우 비리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나 형사처벌을 통해 세 위축을 유도하는 등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고 온건 좌파의 경우 포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 위 보고서를 피고 원세훈,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2010년 11월 12일 자 문화예술계 내 좌파 인물 단체 현황 및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 좌파 단체를 민예총 단체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단체별로 주요 인물, 회원, 회원 수, 주요 동향 등을 파악한 후 위 보고서를 피고 원세훈에게 보고하였으며 국정원 내부 신원검증 시스템 등에 등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부 비판적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피고 원세훈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국정원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 수집, 대응 방안 마련,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22년 12월 2일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은 2010년 11월 경까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불법행위일인 위 2010년 11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

조제1항, 제766조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참조), 민법 제766조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대법원 2005년 5월 13일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 2008다6022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바(대법원 1995년 8월 25일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관한 문건이 작성된 2010년 11월경 무렵이라 할 것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 원세훈이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9다2763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인 점.

2.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등 그 피해의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와 다른 원고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일부 원고들의 방송 출연 등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다만 그동안 피고 대한민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노력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들과 문화예술계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및 예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2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

한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 원세훈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9년 6월 1일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현지.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문화예술 장악, 탄압 내지는 배제, 검열, 그다음에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 또는 출연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나쁘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나 공무원이 했을 시에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술인 권리 복지법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노동계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파로 몰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미리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장악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다시 장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언론장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왜 문재인 정부, 왜 진보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왜 우리 정권만, 우리 측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폭동이 많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폭동이 안 일어나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는 겁니다. 장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고 입을 막으니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분인데요.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걱정입니다.

○의장 우원식 왜요? 걱정 없어요.

(웃음소리)

○김재원 의원 자, 좋은 말도 한 가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들으십시오.

군주인수(君舟人水),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백성이 물이라면 임금, 즉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후 맹자와 동시대를 살던 순자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말합니다. '백성이 정치에서 편안한 뒤에야 군주도 자리에서 편안하다. 전하는 말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도 무용지물이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례가 증명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순자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군주가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군주가 영광되기를 바란다면 예의를 드높이고 선비들을 공경해야 한다. 셋째, 군주가 공적을 쌓아 명망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진 자를 받들고 유능한 자를 기용해야 한다. 순자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외의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되새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약 800여 년 후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당나라 정관 시절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을 오긍이 정관정요에 잘 정리하여 놓음으로써 그 후로는 제왕학의 필독서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틈타 아버지 이연과 함께 수나라의 혼란한 각 고을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란군을 제압하고 수도 장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 후 부친의 정권 창출에 지대한 공이 있었음에도 형님 이건성이 존재하므로 황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똑똑했던 이세민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황궁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형 이건성을 제거하고……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정권을 잡은 당 태종이 하루는 신하한테 물어본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 놓고 왕은 궁궐 깊은 곳에 있어 천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니 거짓 없는 참된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위징이 나서서 답해 말하기를 항상 깊은 연못을 지나고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일을 처리하면 나라가 오래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간언합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관정요 정체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이때부터 군주민수가 군주인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민의 민자를 피휘하는 거지요? 피휘가 맞나요?

(「피휘」 하는 의원 있음)

피휘, 피휘하는 거지요.

위징이 태종에게 말한 요지는 소통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자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관료들과 소통하십니까? 아침에 왜 늦게 출근하십니까? 1분, 2분이라도 더 얘기를 하는,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군주가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요. 진정으로 정치에 보탬이 되는 것은 쓴소리입니다. 정말 태종은 잘했다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말을 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전설시대 빼고 역사시대의 군주로 최고의 군주로 지금도 꼽히는 겁니다. 1400년 전의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계시는 소비자들, 언론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작년 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지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방송법, 국민이 사장도 뽑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방송이 공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봤습니다.

성명서 내용입니다.

공정한 언론이 곧 민주주의 초석이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은 현 정권이 일부 공영방송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매체 장악을 위한 시도를 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MBC 취재 제한, KT 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행위이다. 공영방송을 왜곡하는 일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있기에 우리는 언론 정상화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와 장악을 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최근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과 야당 몫으로 추천된 방송통신위원 관련된 거부 언론 플레이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언론장악을 위한 대표적 작업이다. 그동안 공정한 언론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 수행에 미흡한 부분 또한 존재하지만 정권의 입장에 따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KBS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촉구하라.

KBS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TV수신료 납부를 국민에게 일괄 부여하면서도 운영주체의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송사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홍보기관일 뿐이기에 공영방송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권력에 의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익적 서비스 실천 및 시스템 개선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현 정권의 언론에 대한 무도한 행태에 언론인 스스로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돌아볼 때이다. 고유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해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소주는 건강한 국내 언론 문화와 체제 확립을 위하여 시청자들과 방송사 간의 건강한 상호 신뢰관계를 수립하고 방송 언론의 공정성이 확립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13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성명서였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나중에 오신 우리 국민들 꽤 많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두 번을 앞에서 읽어 드렸는데 이 법안들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

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여기에는 좌파도 노동도 언론노조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문화예술 탄압 혹은 그 명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수단 그다음에 통치 전략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일제의 잔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일제의 방법을 배운 그런 역대 정부들과 그리고 언론들, 거기에 결탁한 언론들에 의해서 자행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아까 얘기해 드린 지난하게 읽은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 입에서 말을 못 하도록 하고 비판을 못 하도록 하고 오로지 정부의 얘기만 듣는 그런 국민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으로부터 문화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유와 사상의 자유까지 빼앗고자 하는 위헌적 국가 범죄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권을 말소하는 행위이니 향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문화예술인과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이진숙 후보를 통해서 현재 시점 블랙리스트로 재소환했습니다. 이런 이진숙 후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공영방송의 내부 기관 구성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법리상 금지된 사항입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의무 사항입니다. 국가는 다양성을 보장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을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공공재화인 방송을 우민화 정책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여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광고주 62.4%, 정부·정치권 50%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압력은 2021년 32.4%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선, 즉 다수의 구성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방송을 공적의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방송은 특정 사회 부문의 목적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분명 다원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만을 전달하는 땡윤뉴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본 법을 통해 언론을 수호하고 헌법 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14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합니다.

열 가지 이유, 국민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공정과 상식, 두 번째 외교 파탄, 세 번째 경제 파탄, 네 번째 안보 파탄, 다섯 번째 검찰공화국, 여섯 번째 무속공화국, 일곱 번째 참사공화국, 여덟 번째 국회 무시, 아홉 번째 오만불손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언론을 포함하는 탄압공화국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시민의 물결 위원회를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맡아서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 아래서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 이런 것들 설명하기보다 국민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2016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과 정신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항하여 함께 촛불을 들었음을 기억한다. 그 최중심에 우리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은 총칼의 권력으로 대중문화를 검열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탄생해야 할 문화예술을 난도질한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 문화예술계 좌파 청산 기조를 이어받아 블랙리스트의 시초 격 문서를 보유하였던 전두환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을 거쳐 아버지 정권과 맥을 같이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금 갖은 핍박과 아픈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 정권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한편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의 관리 문서를 만들어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들의 권력에 순응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의식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언론, 방송, 문화계 전반에 걸쳐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 혹은 장악의 방법으로 정권 안위에 위협된다 싶은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공정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상실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실현을 퇴행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사상과 정신을 통제하겠다는 불온한 야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와 다양한 비판 등을 기필코 막아 대중의 눈을 가리겠다는 저들의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급 자체로 국민을 대놓고 협박함과 다르지 않고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이 말했듯 무지몽매한 개돼지처럼 국민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저들의 통제와 핍박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천명함과 다름이 아니다.

또한 영부인의 과거 멘트 중 ‘문화로 정치를 깨우자’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퍼스트레이디가 되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비단 전시, 문화, 예술뿐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의식을 업그레이드한다면 또 새로운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국민의힘 안상수의 발언 역시 국민들 잊지 않고 있다. 안상수의 발언은 예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모든 예술가들과 언론, 국민을 어용화시키겠다는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시작해 결코 한순간도 바뀐 바가 없는 보수정권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무서운 공작의 내용을 밝힌 것과 다름 아니다.

본래 문화예술은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진보적인 사고로부터 탄생되는 것이고 태생적으로 모든 기성의 잣대와 체제와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출동이 빚어내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오로지 문화예술만이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은 정치적 중립에서 비롯되는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독립성으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야 한다. 좌파나 우파로만 진영을 나누던 이전 시대의 구닥다리 이념 싸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망언을 함부로 한 이진숙 후보 당장 사퇴하라.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로부터 국정농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에 자행한 폭력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 인사 임명과 언론장악을 철회하라.

하나,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제 편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좌파로 몰고 예술과 언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어용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은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혼란을 겪고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견뎌 낸 후 지금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권력만을 좇으며 국민을 내심 개, 돼지로 여기고 통제하고자 하는 단 한 끗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꼭두각시만도 못 하게 행동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국민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연히 일어나 함께 맞서 주시기를 여러분께 통렬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무도한 정권에 대항해서 큰 횃불이 되어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너무 감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문화예술인이고 주변의 문화예술인이 힘든 걸 너무 많이 봤고 지금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찾아오시는 그런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 끊을 셈인가 봅니다. 모든 분야가 다 힘들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플랫폼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없어서 지금 제작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넷플릭스가 다 올려 놓은 가격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이제는 일본 가서 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제작을 할 그런 제작비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없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가장 풀뿌리가 되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중소 회사들, 좋은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는 지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산업에다가 5조를 지금 끌어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세수도 안 걷고 감세 일로로 가고 있는 이 정부에서 5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5조짜리 내지는 그 콘텐츠 산업, 어떻게 진흥을 할 거고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체부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이디어만 쏙 빼 가고 사실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광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을 국민들이 직접 내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방송국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러한 사태,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요?

압니다. ‘예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또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반대, 여당에서도 정말 나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많이 나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작정을 하고 국민들이 다 따라오게 하겠다.

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매료가 됐던 것이지요. 그걸 포장을 방송이 해 줬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기록영화 이런 것 보시면 히틀러가 연설했던 장면이나 그 군복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본 히틀러의 모습은 정말 영웅, 국민적 영웅 그렇게 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전범이 되어 버렸잖아요. 2차 대전에 가담을 한, 도와준 동조자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방송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사회 수 늘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서 뽑는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는 언론노조가 사장을 뽑는다는 얘기나 좌파가 사장을 뽑는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 없습니다. 국민 추천에 의해서 국민들이 뽑는다고 나와 있지요.

○의장 우원식 김재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에 동의를 해 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 법을 만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바치는 법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아껴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 같이 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장 우원식 김재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08시05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 문금주 의원, 이강일 의원, 이건태 의원, 김선민 의원, 김재원 의원, 이주영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8시06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8시1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7)

(08시28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8)

(08시3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용태)

(08시32분)

○의장 우원식 먼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본회의장 발언을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으로 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게 된 현 정치권의 상황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24시간 토론을 하겠지요. 그리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부치실 겁니다. 그럼 다시 국회로 와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주의자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 상황에 정치권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심각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정치권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포천시·가평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 봐라, 한번 바꿔 보자 하고 젊은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1대와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하려고 하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의원님들 계시면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좀먹고 어떻게 이 정치를 망치는지 잘 표현된 드라마입니다.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풍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더 큰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거짓말 그리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이 정말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었더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들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이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 보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MBC·KBS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다 보니 이것이 권력구조상 정부 여당이 3, 야당이 2인 방통위원회 권력구조가 그대로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바꿔 보자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언론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큰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언론인분들 계실 겁니다. 누가 언론장악을 노골적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대했지요. 그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 무엇입니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히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방송기자분들, 신문기자분들,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을 보고도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장악을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민주당은 시시탐탐 언론환경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작전을 짜고 계략을 펼쳐 왔습니다.

저는 언론환경에 대해서, 특히 방송사·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것도 저는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민주당 정부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2003년, 2007년 SBS·동아일보·채널A, 누가 언론사 압수수색했을까요? 왜 민주당 정부는 똑같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본인들만 선이고 본인들만 진리인 것처럼 합니까?

방송기자, 신문기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 포함해서 어느 정부에서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공방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은 법카 의혹이겠지요. 당연히 법인카드가 유용되고 했더라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장 우원식 김용태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시 33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이나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법인카드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방통위원장을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국민적인 공감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왜 그러시는 겁니까? 똑같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직, 같은 잣대라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 검찰에서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로지 이진숙 후보자 법카 논란. 이재명 대표가 썼던, 전 도지사 시절에, 기관장 시절에 썼던 카드는 무법 카드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고 여당을 비판하는 권력구조상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자정작용 있게 되려면 민주당에서 보여 주고 있는 최근 행태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가감 없이 비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님들 저한테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의원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 받고 이번에 배지 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선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나라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민주당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 아마 언론사의 많은 비판들을 의원분들께서도 읽으실 겁니다. 제가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서 방송 4법, 결국에 민주당이 언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 행태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발의했던 대북송금 특별법,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법안들, 탄핵소추 의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과 탄핵일 뿐이라고 읽혀집니다. 제 생각으로 민주당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판

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장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빠르게 권력을 침탈해 보고자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 22대 초선으로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정당 그리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관련해서 무제한토론 준비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 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대로라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과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MBC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선동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입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세 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하는 데에도 국민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는 국민이 선출했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추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해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 이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법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의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표성을 지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일 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 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9.9%, 20%의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언제,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관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이유만 보면 EBS가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없고 마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BS 방송 프로그램도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EBS의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어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지 편성표를 한번 다 찾아왔습니다. EBS의 방송 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EBS1, 창의 융합 교육을 담당하는 EBS2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보면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종속성 있는 논란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EBS1 TV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는 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그리고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어디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지식채널e는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글쎄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본 적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제 지역구인 포천시가평군 주민들도 EBS2 TV 공부 방송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주는군요.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지요,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EBS 방송 편성에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습니까? 여기 여야 국회의원 모두 편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시 읊어 드리겠습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플러스1, 초등·중학생 대상 플러스2,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편성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뽀롱뽀롱 뽀로로,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 이런 것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뽀로로가 뭐 국민의 힘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EBS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송강령, EBS 방송강령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변모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두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EBS 방송강령 전문입니다. 이처럼 EBS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 냈습니다. 펭수는 세대를 아울러 웃음을 선사하는 희망 아이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의 지역구의 많은 학생들이 펭수를 좋아할 겁니다. 그 펭수에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은 여러분의 무대를 넓혀 줍니다. 저는 참고로 지식채널e도 좋아하지만 세계테마기행도 좋아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서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세계 각각 곳곳의 많은 여행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정제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EBS는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BS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며 미래 교육의 교두보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이면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친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EBS가 자신의 사명과 공적 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EBS에 종사하는 PD, 작가, 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계테마기행 저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방송

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EBS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인 호불호가 없습니다. 아마 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제 기억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 계신, 이 여의도 밖에 계신 시민들께 물어보십시오. 펭수가, 뽀로로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대신 EBS을 더 발전시키고 더 질 좋은 프로그램,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현재 EBS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BS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의 TV 수신료를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종속성을 문제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이 70원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테마기행, 뽀로로, 펭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EBS의 독립성 강화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정쟁에 EBS를 끌어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TV 수신료에서 EBS가 받는 몫을 10% 정도로 과감히 올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테마기행에서도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지역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살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여행을 다니기 어려웠던 분들이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그런 법안을 만드신다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EBS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꿎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종속성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BS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방송공사 공공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지역이나 성별 등의 안배 등 함께 숙의해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 학습, 자아 형성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교육부장관 추천 몫 역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몫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EBS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EBS는 교육 당국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 교육방송의 위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실 혁신 역시 EBS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공급자와 시청자가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획기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의 부담 없이 EBS 등의 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직종들이 출현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이 보편화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에 대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글로벌 OTT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방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방송 환경의 변화를 기술과 콘텐츠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시대에 맞게 EBS 방송 자산이 지방의 교육자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EBS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의 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추천 주체를 포함한 임명 절차는 나라마다 다양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BBC는 비상임이사 10명에 상임이사 4명을 더하여 총 14명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임명 절차는 이사장 1명, 민족권역이사 4명으로 이루어진 비상임이사 5명을 문화부 공모를 거치고 난 뒤—영국이니까 국왕이 임명합니다—그리고 BBC 재직자 중 선임된 상임이사 4명—여기에는 사장이 포함됩니다—비상임이사 5명을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BBC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이렇게 총 14명의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NHK입니다.

일본 NHK의 지배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과 회장, 부회장,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사들이 있는 집행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의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직무집행 감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총리가 지역 및 분야 대표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서 위원후보자 명단을 상원·하원에게 제출한 뒤 각각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명합니다.

다음은 독일로 가 볼까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방송사 ARD는 의장과 18명의 GVK라 불리는 방송대표협의회로 구성됩니다. ARD 의장은 각 지역방송사 시장 중에서 다수결로 임명되고 방송대표협의회는 9개 회원사의 방송평의회장 9명과 운영위원회장 9명이 임명됩니다.

독일의 또 다른 방송사인 ZDF는 60명의 방송평의회와 12명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방송평의회 60명의 구성원은 주정부에서 16명, 연방정부에서 2명을 임명하고 경제·종교·노동·언론 단체 등의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전입니다.

총 15명의 경영위원회 이사진이 구성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상원·하원 각각 1명씩 총 2명, 정부가 추천한 5명, 방송위원회가 추천한 5명 그리고 노동자 대표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원은 국회 상원·하원 소관 상임위의 추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상임위 투표의 경우 반대 표가 5분의 3을 초과하면 무효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EBS 방송 편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EBS 프로그램 중 지식채널e, 클래스e, 위대한 수업 등을 보며 새로운 분석과 시각을 얻고는 합니다.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경우 2005년부터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식채널e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수업 교보재로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공감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 준다는 것보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할 때 역시 그러한 관점과 해석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관점을 빼고 해석만 전달하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전달하는 것은 월권이고 왜곡일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 작품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볼 때마다 꼭 알려 주려고 하는, 정답을 알려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각자가 미술 보면서 느끼는, 해석하는 그 관점·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교육을 할 때 관점과 해석이 같이 있음을 솔직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듯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매체가 사건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듯,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양 측면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는 정치교육에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어떤 사실들을 선별하여 알려 줄 것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은 어쩌면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이런 관점도, 저런 관점도 있

다는 것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EBS 경영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경영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법안 개정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행위가 국회 불신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위치에서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 세계시민 교육으로 지칭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의 가치는 퇴색된 것을 모자라 혐오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TV만 틀면 싸우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역구에 내려가면 주민들께서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늘 말씀하시지요. 물론 논쟁을 통해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정치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쳐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오인되고 중요성 또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교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국가를 운영하거나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정치,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가 떠오른다면 이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한 정치교육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개개인이 정보를 분석해서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교육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미국·영국·스웨덴 등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회 교과에서 정치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나 정치

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재건을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역사·사회·정치 등과 관련된 수업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당 및 정치재단, 독립적인 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정당은 각각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다양한 재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주로 특정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며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참고로 아데나워 재단의 독일의 연방의원들이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방송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저와 토론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CSU)의 한스 자이델 재단(HSS), 자유민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정치 이슈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 이해와 개발 협력 그리고 정치교육 등을 촉진합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CSU)의 한스 자이델 재단(HSS)은 자유주의와 기독교 사회 이념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에서 정치·사회·경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유민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유럽통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주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자신들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주체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원칙을 설정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 지원했기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가치를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인 7월 16일 독일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교육과 교육방송 등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공감대를 느껴서인지 정해진 회의 시간을 넘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히 제시하는 토론의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의원들이 독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단 사실을 들었을 때는 존중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들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체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 교육학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원칙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계몽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주요한 교육원칙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는 교실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논쟁적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교사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진보적 성향의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등으로 구분된 정치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사가 논쟁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때 균형 있는 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도 방송 등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사회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현실 사회에서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교육 원칙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동으로 보이텔스바흐 토론교육에 의한 공동체적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간 이념 간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처럼 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선후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EBS를 통해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고 2000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EBS가 출범했습니다.

교육방송이 없었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종종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과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학교가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이 교육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EBS가 지금처럼 본연의 정치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우원식 김용태 의원님,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방청석에 화성에서 학생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의 토론은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한쪽

에서 법안을 내고 또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방해하는 그런 국회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방송법을, 민주당에서 방송 관련법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필리버스터가 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토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대로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빈 자리가 많은데요, 5일째 토론하는데 이런 정도는 양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지금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님께서 방송 관련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론요지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김용태 의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마침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김용태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EBS 알고 계시지요? EBS 관련 교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BS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EBS 편성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EBS 많이 보실 것 같아서 EBS 편성표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EBS 편성표를 같이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것 보실 텐데 이러한 영화, 만화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EBS1 TV의 편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는 렙틸리언과 빅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 오늘 EBS1 TV의 편성은요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 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여러분들 아마 4시부터 EBS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EBS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여러분들 밤 12시에는 아마 EBS 못 보실 겁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북극에서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극지연구소를 가 보고 싶거나 북극연구소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EBS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EBS2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EBS로 공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EBS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나는 EBS 영어 프로그램이 이근철의 영어, 그것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EBS 방송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지금 여름방학 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저는 이것 안 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화영화인 것 같은데요. 곰끼와 처음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 공부만 하면 재미없지요? 만화영화도 틀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는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저는 이것 만화영화 안 봐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뭐 진보냐 보수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어른들도 EBS 봐야지요.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요리비결 어머니 보시는 것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EBS 요리 프로그램 가끔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 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버 아세요, 곽준빈 씨?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디오 FM, EBS FM 편성표도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

습니다.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아마 이게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른 편성표인 것 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그리고 밤에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저는 EBS를 보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EBS를 보면서 뽀로로가, 펭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던가요? 아니지요?

고교 대상 플러스1, 초등·중학생 대상 플러스2,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채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EBS 방송 편성표를 읊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안 내용에 개정 상정 이유에는 EBS 관련 이사진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길래 지금 EBS의 교육방송 편성표상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거해서 다시 한번 읊어 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EBS는 그만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EBS 방송강령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EBS 방송강령 전문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내용이 좀 어렵지요?

변모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여러분, EBS 방송강령 전문 참 좋은 내용이지요? 아마 여기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 교육받는 사회, 교육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방송이 담당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방송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방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들을 여기 자라나는 학생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각의 가치에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느껴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방송의 역할과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진의 수를 지금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사진의 추천권을 가지다 보니 그렇게 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해당 방송의 이사진, 사장을 장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교육방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무제한 시간의,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우리 국회법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EBS의 편성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국회의원입니다. 1990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떠올린다고 하면 나이 있는 기성세대의 정치인들을 경험하고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청취 불능))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전용기 의원과 함께 90년대 학생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여러분들의 화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다 90년대 정치인이고 아마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까운 나이대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EBS를 보고, 물론 시대는 달랐겠지만 저도 EBS를 보고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커왔던 세대입니다. EBS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EBS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BS가 경영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신료의 10%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EBS를 운영하다 보니 EBS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EBS에 재정 지원이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화영화가 더 재밌게, 더 현실감 있게, 더 다양한 만화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무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세계테마기행은 안 보시거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서 랜선여행이라는 것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세계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계 곳곳의 나라의 도시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

○의장 우원식 잠깐만, 김용태 의원님.

여기 전용기 의원님의 지역구에 계신 학생들, 주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용기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대해서, 임무를 바꿔서 저는 나갑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학영 계속하십시오.

○김용태 의원 예.

EBS의 재원 늘리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이 조금 더 풍성한 도시와 조금 더 풍성한 기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러한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대리만족도 하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에 정치적인 편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통해서 세계테마기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자본주의 국가를 간다거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세계에는 이런 국가도 있고 저런 국가도 있고 이런 이념도 있고 저런 이념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해 간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많은 학습과 교육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EBS, 한국교육공사법을 반대하면서 오늘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무제한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것 같습니다. 학급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학급 임원진들이 어떻게 풀뿌리민주주의, 학급에서의 민주주의를 운영해 가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 역할에 EBS 교육방송도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지요. 학교에서 배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공화정의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의 임무와 또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역할과 또 여러분들의 권리를 다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도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회에 오시면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꿈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국회 경내를 보면서 정치인에 대한 꿈도 키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치인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이곳 국회를 견학하면서 그 꿈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나도 국회의원이 돼야지. 나도 정치인이 돼야지', 꿈을 키워서 돌아가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스무 살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무 살이 돼서 사회로 나올 때까지, 여기 계신 사람마다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하고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이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이곳 국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학교로 돌아가서 배우는 교과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 모두 다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어른으로 그리고 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야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 현실은 여러분들께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개념과 오늘날 지금 22대 이곳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유민주주의에는 관용이라는, 톨레랑스라는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톨레랑스와 관용이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22대 국회의원 초선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곳 22대 국회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관용(tolerance)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 옳다, 내가 하는 말만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회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남의 주장은 듣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에는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실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설득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시거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관용(tolerance)이라는 정신만은 꼭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 관용, 톨레랑스가 잘 작동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몇몇 보고서와 김재원 박사의 연구논문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에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해 정보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정보를 소비하고 이를 비평적으로 평가하

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보다 관용적인 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개개인의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견을 감소하게 합니다. 특히 성별, 세대, 종교, 다문화 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회의 핵심 가치인 포괄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포괄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관여하도록 만들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대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만듭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과 이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됩니다. 정치는 권력과 통치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영역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개인의 학습과 발전을 돕는 과정이고 개인의 인지, 사고, 도덕적 가치, 기술 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적 고찰이나 논의 이상으로 실제 행위와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서로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에서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정치교육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능력을 키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 홍보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교육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단지 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기술과 가치를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 외부에서도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정치재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정치교육에 참여하면 그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주주의와 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치불신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진영,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 경제,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

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런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교육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러한 현상들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 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나 학교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의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활동과 참여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청년·여성·이주민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및 참여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라는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기존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반대·찬성 각각 이러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방청석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EBS를 생각하실 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EBS를 보면서 교육을 받고 또 커 왔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 집에서 EBS를 보면서 이 방송이 국민의힘으로 편향돼 있거나 민주당으로 편향돼 있거나 혹은 다른 정당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느끼신 적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보는 EBS의 여러 만화영화, 펭수, 뽀로로 이런 것에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보시는 EBS에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권이든지 이 EBS(교육방송공사)에 대한 방송장악은 좀 멈춰 주시고 있는 그대로 놔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오신 교사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에는 어린이 학생들이 보는 EBS 이런 만화영화나 아이 프로그램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식채널e,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교보재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쓰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지식채널e나 이런 것을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편향이 있습니까? 저는, 본 의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EBS의 프로그램을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EBS 프로그램 그리고 EBS 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EBS 이사진에 계속해서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이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관들과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EBS는 앞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EBS를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기 방청석에 새롭게 오신 학생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지금 이곳 22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의 과정에서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용, 톨레랑스입니다. 여러분 톨레랑스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 걸로 알고 있지요?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중요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 의사가 틀어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톨레랑스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다원성, 다원주의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토론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남와 다른 생각을 좁혀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규정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정치 현실과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 현실은 괴리감이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방송장악에 대한 야당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정치 과정을 배우면서 삼권분립에 대한 매커니즘을 배웠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것이며 아마 제가 8시 반부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는데요,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08시 30분 정도가 되면 우리 국회법은 이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종결 표결을 할 수 있는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8시 30분에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표결은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본투표가 바로 이어서 실시되겠지요. 역시

민주당이, 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이 법안은 재의요구권에 부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은 우리의 방송에 대한, 공정한 방송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혹은 여당으로서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재의요구를 국회로 다시 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국회는 다시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포함한 방송 4법에 대해서 재의결 표결에 부치겠지요. 여러분 재의결이,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로부터 입법부로 다시 오게 된다면 조금 더 높은 의결정족수를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석, 의원 수가 총 300명인데요.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이 재의결된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고 한들 2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의결이 온다면 폐기될 것입니다.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주의자로서 법안이 폐기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입법권의 제한을 우리 스스로 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토론하고 논의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혀 갔더라면 아마 이 법안은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통해서 통과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서 MBC, KBS 등 이사진을 공정하게 하자는 문제 제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에 따라서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3 대 2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언론환경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 언론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제기되고 폭넓은 시각과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러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척,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학회에 이사결정 추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방송환경이 더 불공정하게 될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에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22대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성인으로서 구성원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과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실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도 오늘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이 원래는 주말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각종 여러 가지 야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예상보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제 필리버스터의 발언시간이 월요일 오전으로 바뀌었고 우연스럽게 저희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앉아 있습니다.

가평에서 오신 학생들 맞으시지요?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고등학교 이호영 학생 그리고 황상원 학생, 한병준 학생, 설악고등학교 신정훈 학생, 설악고등학교 정병인 학생, 가평고등학교 공관우 학생, 청심국제고등학교 조윤아 학생, 가평중학교 이우선 학생, 가평중학교 최승민 학생, 조종중학교 이유현 학생, 설악중학교 강다경 학생, 설악중학교 원예린 학생, 연하초등학교 성현승 학생, 율길초등학교 손규환 학생, 조종초등학교 유준 학생, 참고로 유준 학생은 지난주에도 국회에 방문해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학생입니다. 가평마장초등학교 신유이 학생, 가평초등학교 민서희 학생, 가평초등학교 신지후 학생, 가평초등학교 신희원 학생, 목동초등학교 박소민 학생, 목동초등학교 이지민 학생, 상천초등학교 박혜빈 학생, 상천초등학교 장서연 학생, 방일초등학교 연나경 학생·정채영 학생·최승연 학생·홍소영 학생, 서유솔 학생, 강서현 학생 그다음에 이지연 학생, 권우현 학생, 이해진 학생, 송예담 학생, 김채율 학생,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외에, 가평 이외에도 방청석에 오신, 국회의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용태 의원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이학영 국회부의장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학생들이 오셔서 이왕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또 소개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탄초등학교 학생들은 왔다 가셨지요?

다음에 우리 김영진 의원실에서 오신 수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회도 다녀가셨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용갑 의원실에서 안내해서 대전 대성고등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김윤덕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위에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김용태 의원실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다시 들어 보세요.

환영합니다.

국회가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육방송, 여러분 EBS 방송 보시지요? 이 방송은 어떻게 좀 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여야의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체험의 공간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용태 의원 여러분, EBS 공사 그러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본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컸습니다. 여러분들 EBS 교육방송 보시면서 아마 많은 학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EBS 교육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저 프로그램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랬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EBS 편성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EBS 편성표를 보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BS의 방송 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EBS1 TV와 창의융합교육을 담당하는 EBS2 TV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EBS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말씀드릴 테니 같이 한번 잘 듣고 제가 말씀드린 의문에 같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1 TV의 오늘 편성을 보면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참고로 저는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제가 정치적인 이념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세계테마기행을 통해서 사회주의국가라든지 뭐 다른 민주국가라든지 보여지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 정치적인 편향성이 바뀌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 혈관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 여러분들 아마 4시부터 EBS 프로그램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물론 고등학생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여러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치원생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읊어 드리겠습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이것 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여러분들 밤 12시에 TV를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고등학생이나

다른 분들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극지연구소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극지연구소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인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오늘 12시에 EBS 초대석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탐구가 폭넓게 잘 담겨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중에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로 시작하는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편·속담과 관용어편·이야기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EBS 여름방학생활을 봤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국회에서 가장 나이대가 가까운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1990년대생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 이러한 EBS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EBS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의원님의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을 하고—공부만 하면 좀 재미없겠지요—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방송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른들 또 어머니·아버지, 학부모들을 위한 방송, 가족 방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오이물김치를 먹으면 민주당이고 두부구이를 먹으면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BS는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정부든 제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지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 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제가 불러 드린 EBS 1TV·2TV에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다른 정당을 지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한 프

로그램은 없지요?

혹시 라디오에 문제가 있을까 봐 제가 라디오, EBS FM 편성표도 찾아 왔습니다. 또 EBS 라디오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요.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영어로 이걸 이념을 말씀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을 듣고도 정치적 편향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대에는 제가 불러 드렸던 방송의 재방송이 죽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 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 가평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EBS를 통해서 수능이라든지 학교 공부라든지 민주시민에 대한 학교 교육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아마 EBS를 통해서 특정 정당의 가치나 이념을 캐치하신 학생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읊어 드린 오늘의 EBS 1TV·2TV·FM 라디오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EBS는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EBS 방송강령 전문을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EBS 방송강령 전문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EBS 방송강령 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좋은 내용이지요?

변모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 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 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 등 평생 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좋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문구들이나

문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지금처럼 잘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필요한 것은 EBS의 교육재정에 대한, 방송재정에 대한 수신료를 높여 주는 것이 EBS가 아마 원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EBS……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EBS 프로그램 중에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다닐 수가 없다 보니 EBS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랜선 여행을 했습니다.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저런 나라도 있구나. 아, 이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구나, 이 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구나. 아, 이 나라는 대통령제고 이 나라는 내각제구나. 아, 이 나라의 문화는 이렇고 저 나라의 문화는 저렇구나. 저 문화에서는 저런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 문화에서는 이러한 나라와 교역을 하는구나. 저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계테마기행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이 제 가치관에 일말의 영향도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그런 가치를 느끼는 게 있다면, 글쎄요?

여하튼 EBS 교육방송공사는 내버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더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사진을 늘리고 방송법을 개정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이 EBS(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들 뿐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EBS(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그 의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EBS(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가지고 국회법에 따라 반대와 또 찬성 측 입장을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소수당의 의견을 좀 더, 반대하는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만든 법의 취지이고요.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규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대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울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와 있고요, 가평에서도 다양한 초중고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부회장, 각각의 부장이라고 하나요, 요즘? 그러한 학급 임원진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지명하기도 하겠지요. 그 학급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 나가는 자유민주시민의 교육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것이 과연 가장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 되는 원리임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꼭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워 나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이 ‘아, 나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일 겁니다.

학교에서도 학급 학생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보고 싶어 하는 EBS 교육 프로그램도 다르고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거기서부터 배워 나갑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토론해 나가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해 나가겠지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는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주의야 얼마든지 획일화되고 나를 따르라 정하면—독재자가—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이 이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까지 우리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없애고 합리적 대안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조금은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주의자로서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가평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들, 서로가 존중하고 여야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여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주민인 학생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나오는 시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과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정치체제와 정치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평의,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평과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외교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방청객에 학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은 저마다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느 특정 국가와 특정 정당, 특정 단체들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이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가치 연대로 하는 대한민국은 중추적 국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를 넘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추 국가로서의 가치 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으로부터의 외압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발생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외교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위기의 사례에는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운동장에서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해 보려고, 조금 더 내가 이겨 보려고 룰을 바꾸고, 그리고 그 운동장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해지도록 진영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외교관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접하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전하고 공고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선가는 위협받고 붕괴될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다당제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우리 헌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국방과 우리의 내치는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외교관들은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고등학생분들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서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지, 제가 굳이 학생 여러분들께 가치를 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교육방송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아마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도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누구의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준비된 반대토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주주의와 정치를 더

욱 발전시키고 정치 불신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풍토는 대체로 두 가지 중요한 정치 진영,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경제·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전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나 학교 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의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 활동과 참여 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재로 인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활동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해야,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의 추천권을 현재 기준의 정치 성향으로 분석해 본다면 기존안은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에서 1명의 추천권을 갖고 보수정권의 교육부장관 추천권 1명, 즉 2명의 보수 성향의 이사를 교육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관련 단체를 2명의 추천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의 추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9명,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인 상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이 진보성향이 될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았습니다. 결국 현재 보수 성향 2명에서 2 대 1로 진보성향으로 바꿔 놓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개정안이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면 교육부장관의 이사추천권을 그대로 두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추가하는 것이 교육계의 EBS 이사추천권의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 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분야의 단체로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 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2018년에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최근 한국어로 변역되어 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선동적인 정치가에 의해 부식되어 가고 조금씩 변형되어 종국에는 독재 체제로 퇴행하는 형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야가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위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뤄 낸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상호 관용의 규범이 허물어질 때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사라진다.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도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 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치 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

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방송을 구축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한다면 대립의 상황은 더욱 첨예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야 대립의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주주의 생존에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 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안들이 계속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정당 운영과 의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이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합의제 관행을 깨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틀리고, 시간도 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양보를 하고 절충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더군다나 거대 야당으로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치워 버린 다수당은 의회를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행정부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검사들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기 일쑤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제의 규범이 무너질 때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정당 간 혐오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압도할 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 가장 먼저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 헌법적 강경 태도가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당은 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그들은 정부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투견이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을 깨고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대치를 이어나가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도 사법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제 관행을 깬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87년 이후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라는 이유로 합의제 관행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야당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우 특이한 이력과 대중에게 파고드는 선전·선동의 능력과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사법리스크를 갖는 전 당대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항변의 메시지를 드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가는 곳마다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작심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SNS 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습니까?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 깨기 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 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의 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님, 김병주 후보님.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까?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저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역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임 당대표가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는데 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 대안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나 민주당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차단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가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획일적 사고에 빠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실상 올바른 진보가 가장 경멸해 마지않는 전체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 등장한 팬덤정치 문화는 민주당에서 개딸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딸과 전 당대표는 서로 짬짜미로 힘을 키우면서 당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팬덤 개딸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시원하다고 박수쳐 줍니다.

따라서 개딸과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후보가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오랜 관행인 여야 합의의 정치를 헌신짝처럼 차 버리기를 원한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이 실상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좌파진영의 전유물로 만들고자 한 법이기 때문이며, 이처럼 법의 취지를 오히려 거스르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의 표결장까지 오게 된 것은 87년 이후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이 깨져 나갔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트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선출된 대중 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청사진 없이도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허무는 선동적 지도자와 위기를 느낀 기성 정치세력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붕괴의 과정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대중 선동가는 비판자를 적이나 체제 전복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며 도발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비판자를 적이나 반역자라고 칭한다.

언론인들 또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격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집단과 연관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독재자는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평론가들은 종종 대중 선동가는 그저 말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중 선동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그리고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들의 적대적인 표현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한다.

위협을 느낀 언론은 정부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 자제와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다. 또한 야당은 공공의 선을 위해 탄핵이나 대규모 시위 혹은 쿠데타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권을 허물어뜨릴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가족 소유의 기업과 군대는 명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양보,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후퇴는 피할 수 없고 승리도 언제나 부분적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비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아웃사이더들에게, 특히 선동 성향이 강한 독재자들에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견디기 힘든 속박이다. 견제와 균형은 그들에게 멍에와 같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인내심 부족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설명이 제발 민주당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폭탄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 선거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딸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법사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다른 정치인도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팬덤, 중우정치, 미디어 편중 및 착시 전략, SNS 폭력, 1인 사당화와 절대화, 사법리스크 부정, 언론 공격, 포퓰리즘, 당의 국가 장악,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좌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원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많이 넘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더욱 정도를 지켰어야 합니다.

다음은 헌법상 공교육 원칙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그리고 2011년 공교육 강화-사교육 선순환 방안까지 약 7년 동안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있어 고질적인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1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원년이란 정부의 성과 발표에도 EBS 수능강의 효과에 대한 연구나 언론들은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글은 EBS 수능강의 정책이 법리적 측면에서 정당한가를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즉 EBS 수능강의 정책은 우리 헌법상 공교육의 원칙 중 기회 평등의 원칙, 무상의 원칙,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교육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방송과 관련된 미국 방송사의 채널 원 방송과 관련된 판례들은 EBS 수능강의 정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EBS 수능강의 정책은 경제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학교 수업시간의 교육 방법과 교재 선택권,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적인 사교육을 강제하는 등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에서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반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부작용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독점 우려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 119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와 가치의 변화와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매체의 변화란 음성에서 활자매체로, 방송매체에서 통신매체로, 방송과 통신의 결합과 정보매체로의 변화를 말한다. 특히 2010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공유, 참여 그리고 소통의 문화와 가치가 중시되고 전 세계 지식의 양이 지구 둘레를 3층으로 쌓을 정도라는 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 그리고 지식의 변화를 학교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정보화이며 특히 방송과 통신매체의 결합, 정보매체를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교수-학습 방법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행태에 대한 변화, 사이버대학과 같은 학교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방향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으로, 교수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 수업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학습자료 중심의 수업 등을 통해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수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21세기 학습자의 능력인 4Cs 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교육정보화 정책과 사업들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고 발전되어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소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사례를 홍보하고 전파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보매체의 특징인 접근의 용이성, 멀티미디어성, 사용의 편리성, 상대적 저비용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후 2009년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11년 공교육강화 사교육경감 선순환 방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를 학교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 대비 효과 부족, 시설·설비 관리 비중 증대,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가중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며 교수-학습 측면에서 톱다운 방식의 정책으로 매체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강제함으로써 교육 본래의 목적과 이념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더 초점을 두어 자칫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수인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도 있다. 예컨대 교육정보화의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신장, 공교육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정책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의문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의 채널 원 사건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채널 원 사건은 1989년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에 특정 방송을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인데 학교의 상업화뿐만이 아니라 매체교육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인 EBS 수능강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보화의 목적인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 및 보장, 교사의 교육 내용 결정 및 교육 방법 선택권 확대,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채널 원 방송 관련 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미국 전역의 학생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와 비디오컨퍼런스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 접속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만약 그 자료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번역하여 사용한다. 화학수업 시간에는 물질의 원자구조를 컴퓨터를 통해 3차원 방식에 의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기술에 노출되어 있다. 예로 4세 아이가 Mickey's ABC라는 컴퓨터게임에서 'v' 자를 누르면 컴퓨터는 'v는 바이올린'이라고 말하며 미키마우스가 깨어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심시티(Simcity)라는 지리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 도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닌텐도, CD 플레이어, VCR 등과 같은 기기와 함께 성장한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교실을 변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녹스빌에 소재한 Whittle Communication 방송사의 채널 원 방송이다. 이 방송은 12분짜리로 타 방송국의 방송을 미리 녹화·편집해서 무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제공하는 것이다.

총 12분의 채널 원은 10분 동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뉴스거리들을 담은 프로그램과 2분의 일반 TV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10분 중 보통 6분 30초 동안 다른 모든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뉴스거리들을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앵커와 리포터들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종종 10대들의 의견들도 제시하였다. 나머지 3분 30초는 과학 이야기나 10대들의 관심사나 스포츠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송은 의무교육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분의 상업광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89년 공립학교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학교의 상업화, 방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교육자, 학부모, 입법자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채널 원 방송에 포함된 상업광고가 10대 소비자들을 겨냥한 시장 남용과 독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교구와 학교장의 입장에서 채널 원 방송은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통신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무료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익이 되었다. 또한 채널 원 방송만이 상업광고주들이 노골적으로 상업광고를 공립학교에 침투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이 방송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opt-out 방식의 방송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후 해당 방송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방송국은 각 교실에 TV, 위성안테나, 두 대의 VCR을 포함해서 각 학교에 6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임대해 주고 대신에 3년 동안 학기 중에 90% 이상 매일 방송을 볼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서에는 만약 학교가 학기 중 최소한 90%에 해당하는 날 동안 채널 원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널 원 계약양식에는 학교구가 학생이 채널 원 방송의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널 원 방송이 도입된 지 5개월 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주의 4분의 3인 2900개 학교가 채널 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의 상업화에 대한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2000개 학교가 채널 원 방송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800만 명의 10대들과 학령기인 12~18세의 40%가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한 것은 이 방송은 학교 수업 종료 후 또는 홈룸(Home-Room) 시간 등에 시청하도록 하며 정규수업 시간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 소속 공립학교들이 채널 원 방송국과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임의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가 있었다.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상업광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둘러싸고 전국에 걸친 소송과 공적 토론이 제기되었다. 즉 1990년 이래 채널 원 방송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학생이 채널 원 방송을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가 여부의 문제였다. 더욱이 학교는 첫 번째 교사가 채널 원 방송을 보여 주길 원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학생이나 그의 부모가 채널 원 방송 시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쟁 거리였다. 결국 채널 원의 교육적 효과, 주의 교육정책, 주 헌법상의 기준들로서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과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주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위원회와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것이다.

이하 소개하는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논점들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항소법원은 방송시청의 선택권 부여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공립학교에 단순히 광고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학생들이 상업광고물을 보도록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강요받거나 교육과정상 상업광고물의 양과 질에 있어 우연 이상일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며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학교구에 채널 원 시청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계획된 대안활동을 제안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기록에 의할 경우 학생들이 교실에서 광고를 시청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채널 원의 계약서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구도 학부모에게 탈퇴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탈퇴에 관한 절차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음을 이유로 하였다.

다음 판결을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상업광고주들에게 판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renton 교육위원회는 상업적 내용을 담은 채널 원 방송은 HR 시간이나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제공하는 부적절한 대가라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였다. 교육위원회는 HR 시간은 정규교육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채널 원 방송을 보여

주는 것은 교육 시간을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위원회는 단순히 광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남용 수준까지 유발하지 않으며 상업 광고물로부터 자유로울 것은 헌법상의 권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NJEA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뉴저지 최고법원은 이를 거부하였다.

지역학교위원회가 녹스 카운티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 채널 원 방송과의 계약을 허락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항소소송에서 제6순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학생의 아버지인 스티븐 월런스는 광고를 수반한 채널 원 방송 내용에 반대하고 그의 아들 그렉 월런스가 채널 원을 시청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는 채널 원이 방영될 때 그렉을 교무실에 앉아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대체교육이나 다른 학습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

미국 헌법상 평등 보호, 적법절차 조항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제6순회법원은 학교가 선택권이 있는 채널 원 방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학교 수업시간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최고법원은 지역학교위원회와 방송국 사이의 계약은 헌법이나 주 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며 더욱이 주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가 의무교육하에 학생들에게 상업적 광고를 제공하는 채널 원 방송계약을 금지하는 임시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중 하나는 공립학교에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주헌법상 보장된 무상교육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채널 원 광고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으로 인해 학습해야 할 시간을 빼앗겼으며 이는 광고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학생들이 방송국의 재정적 이익과 채널 원 광고주들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광고를 시청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수반되는 합리적이며 적절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최고법원은 채널 원 광고 시청이 과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헌법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교육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널 원 뉴스를 시청하는 데 추가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며 학생들이 2분간의 광고를 보는 것은 강제된 것도 아니다. 이 광고는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HR 시간 동안 방영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과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최고법원은 주 교육위원회에 채널 원 방송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임시규칙 제정에 대해 지역교육위원회가 보조자료, 도서, 출판물, 다른 교육자료 등등을 선택하고 획득할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주 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재량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채널 원 방송과 EBS 수능 강의 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EBS 수능 강의와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은 교육에 방송·통신 등을 활용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을 둘러싼 논쟁과 판례를 우리나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EBS 수능 강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목적 면에서 차이점이다.

미국의 채널 원 방송 등 각종 라디오나 TV 등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각종 이슈 등에 대한 방송을 통해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함으로써 미국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재정 부족으로 첨단 시설을 갖추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즉 국가가 아닌 방송국에서 방송 시청에 필요한 첨단 교육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그 출발의 목적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보다는 가정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로 인해 사교육이 지나치게 만연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과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EBS 수능 강의 시청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둘째, 미국 채널 원 방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탈퇴 가능성, 즉 강제성 여부다.

물론 미국의 상당 연구에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던 점은 학교의 상업화 문제지만 법원에서 채널 원 뉴스 방송 관련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들의 방송 시청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인 것인지 여부였다.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시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것인지 여부다.

판례는 채널 원 방송 시청은 강제적이지 않고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취하고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정규 수업시간에 특정 방송 시청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를 대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자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EBS 수능강의의 선택권은 학교나 학생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시키므로 EBS 수능 강의 시청이 강제될 수 있고 연계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의 제한 강도가 강해진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셋째, 미국의 경우 HR시간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라는 점과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채널 원 방송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혹여 정규 수업시간에 EBS 수능 강의의 활용을 강제하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채널 원 방송은 우리나라 EBS 수능강의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이다.

EBS 수능강의 정책은 방송의 특성상 교육 기회의 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서로 다른 문제며, 사교육비 경감이 국가의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장에 따라 일치된 의견을 얻기 어렵다.

둘째, EBS 수능강의 정책의 강제적 시청 여부다.

EBS 수능강의는 어디까지나 교육방송 본래의 목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교육으로서의 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보충교육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강의는 교육 본래의 목적인 민주시민 양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셋째, 학교 수업시간에 EBS 수능강의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공교육 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방송은 방송교육, 교수방송 또는 교육텔레비전, 학교방송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된다. 각 용어의 개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만 교육방송은 국가·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방송국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에 방송매체를 이용해 단계적·지속적·누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한다.

한편 1964년 제정된 구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방송이란 공중의 일반적 교양 향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래 방송에는 다른 여러 기능과 아울러 교육적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데 교육방송이라는 특수한 개념 속에 교육적 변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방송만 포함된다. 따라서 교실 내에서의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학교방송이나 일반인의 교양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교육방송이나 방송을 통한 정규 학교교육 등이 이 개념 속에 포함된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가 여기서 해석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교육방송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방송과 학교 수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송통신대학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의 방송을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방송의 사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 어떤 내용의 방송을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정의해 볼 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능방송은 비영리 공영방송이며 학교교육의 보완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방송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

는 이유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교육의 관리·통제·지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교육이며 그 이외의 경우를 사교육으로 보는 견해와, 학교의 설립·운영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교육 그리고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교육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공교육은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통제·지원을 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교육과정, 교과서, 학력인증자격 등)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공교육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으로 학원교육, 과외교육,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학교교육 중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인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 등은 공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이라고 본다. 후자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은 공교육이며 사립학교의 교육은 사교육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교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수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의하는 경우 초·중학교에서 동일한 교재와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교육을,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사교육을 받는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공사가 중요합니다. 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입니다.

다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전자의 견해에 강제성과 임의성을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통제에는 이미 강제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직간접적으로 학교교육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강제되는 경우라면 이는 공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경우 국가가 학교를 통제·관리하지만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은 보장되므로 사교육에 해당한다.

한편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구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공교육비이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방과후학교 활동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또한 사립학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공교육비에 해당한다.

후자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위한 부담은 공교육비, 사립학교 교육을 위한 부담은 사교육비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립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비는 공교육비이며 사립학교 수업료는 사교육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 그리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관련성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가 운영·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교육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담은 수요자가 하므로 일종의 과외 교육의 성격으로서 사교육비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EBS 수능강의는 공교육인가 아니면 사교육인가?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기 위한 학부모의 교재·교육비는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 여부이다.

한국방송공사의 EBS 수능강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국가의 관리 및 통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매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강제성이 있느냐 여부다. 즉 EBS 수능강의는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지원되지만 학교교육을 강제하지 않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교육이다.

또한 당초 EBS 수능강의는 경제적·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국가가 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비영리 공영방송이지만 그러하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하는 정책은 학교교육에서 EBS 수능강의를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시청하도록 하거나 교사의 교육 내용 결정권을 제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은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설혹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EBS 수능강의의 시청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육방송 시청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송 시청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한편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공교육비인가 아니면 사교육비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가 EBS에 지원한 국고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재비,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 등은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아마 도시지역보다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학생분들에게 이 EBS의 수능강의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은 편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곳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첫 번째 과제는 EBS 수능강의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이를 기존의 방송 형태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함으로써 수능시험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BS플러스1을 통해 상·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수준별 강의를 실시하며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고용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능강의 이외에 논술, 면접 과정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다.

2009년 마찬가지의 정책 기조에서 EBS 수능강의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강사 확보, 질

높은 교재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신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EBS 수능강의 영상을 만들고 교육방송공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 이 법안을 우리가 반대하고 여야가 논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수신료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2011년에는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를 70%까지 확대하고 학교 수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교재의 양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2011년 2월 23일 당시 정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EBS 수능교재에 대한 무료 배포를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과연 사교육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2월 15일 정부는 2010년 사교육비가 20조 9000억으로 2009년 21조 6000억 원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개인별로는 24만 원으로 2000원이 경감되었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은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는지 의문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하나같이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결국 EBS 수능강의 정책의 당초 목표인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체감할 만한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적 지원, 가령 수신료의 퍼센티지를 올려 주고자 하는 방안들은 여야가 폭넓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방송공사의 EBS 수능방송 등 굉장히 학생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되고 이 법안이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헌법상 공교육원칙과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원칙은,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교육의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 둘째 교육은 부단히 정기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의 원칙, 셋째 교육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응의 원칙, 넷째 교육 내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립의 원칙, 다섯째 학교교육의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교육 제도 보장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민주성·전문성, 학위수여 독점의 원칙 등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치행정의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 공교육의 원칙 중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원칙들을 중심으로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의 교육방송, 특히 계속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수능강의로서의 EBS는 전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의 원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균등, 기회 균등 밑바탕에서는 모든 인간이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추구할 때 생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평등권을 갖는다거나 또는 설혹 사람들 사이에 수리상의 평등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은 필요치 않더라도 더욱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된 대부분의 사람은 평등한 힘을 가진다는 이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의 불평등의 문제, 즉 정보격차 문제는 곧바로 교육 격차의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정보화 정책에서도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는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공교육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합당해야 하며 교육소외계층에게 정보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재 무료 제공, 인터넷 수신료 지원, PC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EBS 교육방송이 그동안의 역대 정권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 상관없이 여태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EBS 교육방송공사는 앞으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렇다

면 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편향성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대하고 폐기되어야 할 것이 맞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는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구태여 이 법안을 개정해서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EBS를 장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어느 특정 정당이, 특히 야당이 EBS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여당으로서는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무상의 원칙은 교육의 의무성 또는 강제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1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해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시하고 무상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이란 교육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무상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무상 범위 법정설, 수업료 무상설, 취약 필요비 무상설로 나누어지는데 취약 필요비 무상설이 가장 학습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신현직 저자의 말입니다.

즉 취약 필요비에는 교과서, 기타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 학교행사 참가비, 과외활동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학교교육 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실제 부담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많고 교육의 평등을 위한 교육비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상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공교육에 따른 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취학에 부수하는 활동, 예컨대 기숙사 비용 그리고 여행, 견학 등의 보충적 교육 활동의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용품은 집단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것일 때는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적인 용도의 물건일 때에는 가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황 씨의 글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시간 이외에 제공되는 학용품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의무교육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EBS 수능강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교육은 공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계됨에 따라 기존 사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초래되거나 EBS 방송 시청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EBS 시간에 할애하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공교육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합리적인 범위의 부담이라 보기 어렵다. 즉 EBS 수능강의로 기존의 부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마 이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를 방송으로 접하고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송

공사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운영·실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교육시설설치자·교육감독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즉 국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교육내용이나 방법, 교육기구 등이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행정 당국, 학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받지 않고 교사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이 도출된다.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의 자유, 교육과정의 편성권,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교수 내용 및 방법 선택·결정의 자유, 학생에 대한 평가권 등을 말하는데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의 교수의 자유, 교재의 작성·선택, 교육내용 및 방법 선택권이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회 경내에 계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들과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원칙과 다양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조금이라도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장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회 경내에 계신 국회 보좌진분들과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내에 계신 국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서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반대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됨을 막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막겠습니다.

교수의 자유란 교육내용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수의 자유를 대학교수가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대학교수가 가지는 교수의 자유와는 달리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대상인 학생은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독자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재의 선택·작성의 자유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제29조에 따라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문제는 교과서와 달리 EBS 수능방송 시청과 교재를 정규수업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활동은 교원과 학생 간의 직접적인 교육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교육활동의 현장에서는 교원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초·중등교육법도 제20조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제2항에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이나 통신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EBS 수능강의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EBS 수능강의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송이라고 해도 여전히 교사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의 소재는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성을 높이는 경우 교육 방법에 있어서 EBS 수능강의 시청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은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계획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정규수업 시간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교사의 재량권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가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규수업 시간에 이를 활용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또한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의 보완교재로서 이용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회 경내에 계신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경내에 계신 국회를 방문한 많은 국민들께서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모두가 동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방송공사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역대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방송공사는 교육방송공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아마 여기 아래에서 속기사, 속기를 하고 계신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방송공사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EBS 수능교재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적 편향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고 폐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갈 권리로서 국가권력이나 제삼자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할 학습의 자율을 그 본질로 한다.

또한 학습권은 학습과 지적 탐구라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격 성장권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즉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장래의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공교육의 목적이며 이념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본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과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사교육에 있어 이미 국가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 정책은 사교육비의 경감과 함께 소득격차로 인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공교육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측면을 가진다.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보면 정책의 초점을, 소득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해 사회 전반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며 수단에 있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는 안타깝게도 사교육비의 경감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EBS 수능강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됨으로써 기존에 받던 사교육비 이외의 또 다른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학부모의 수인의 한도를 벗어난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파악된다.

저자의 생각입니다.

헌법 제119조와 교육방송 활용의 정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영역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이미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현저히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득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이 사회가 자율성을 상실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교육에서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의 목적은 정당한 공익이다.

따라서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가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하는 정책은 사교육 시장의 경제질서를 규제하거나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교육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나 조정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여야의 품격 있는 토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학회나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특정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적 편향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관한 토론을 우리 여야가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을 풍부하게 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더 좋은 방송들과 폭넓은 방송들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토론하는 것이 민생에 더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EBS 수능강의에 국고를 지원해서 사교육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자율질서를 해치는 경우라면, 예컨대 중소 학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혹은 학원 강좌가 EBS 수능교재 문제풀이에 초점을 둔다거나 EBS 수능강사들이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독점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국가의 간섭으로 사교육의 자율경쟁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119조의 이념과 정신에 위반된다.

여러 차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BS가, 교육방송공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장기간을 통해서 본 의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에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사진이나 사장 선출에 대한, 지명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이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이 많은 국민들께 교양과 문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민생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전 대표가 말했던 먹사니즘에도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가 말씀하신 먹사니즘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적인 지원 방향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EBS 수능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이후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정책을 7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정책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미국 채널 원 사건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채널 원 사건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의 쟁점은 방송 시청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와 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즉 채널 원 방송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시청을 원하지 않는 교실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EBS 수능강의는 공영방송이지만 공교육이 아니며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나 근본 목적에 있어 경제적·지역적 여건에 의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계하고 연계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방송 시청과 교재 활용의 선택권을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더욱 제한되고 있으며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 수업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에 있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할수록 교사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선택권 등을 제한하며 직간접적으로는 다른 매체 활용에 비해 EBS 수능방송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정당한 목적 없이 개입함은 자칫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의 자율적 경제질서를 혼돈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교육 본래의 교육 목적에 따라 소득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많은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는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EBS 교육방송의 질 높은 방송을 위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부결되고, 반대되고 우리 여야가 EBS 교육방송공사의 질 높은 방송 편성과 또 교육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토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 개정안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반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호·주성재·전재호·유지혜 님의 글입니다.

이 연구는 EBS English, 이후 EBSe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EBS 편성표에 EBSe 프로그램들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관련한, 그 비슷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제안을 목표로 한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 및 게임형 콘텐츠 제공 등 영어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러나 EBSe 방과후 영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EBSe 웹사이트 이용자(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397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통해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공교육 보완, 듣기·읽기 능력 향상 등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 편향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웹사이트 사용자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밝혔으며 홍보 부족이나 타 콘텐츠 이용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학부모와 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의지 또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EBSe 방과후 영어 관련 콘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EBSe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단답형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구자는 조사된 의견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제안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의견과 집단별로 제안한 내용의 차이를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콘텐츠 다양화, 학부모·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법 개발을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폐기하고 차라리 여야 의원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글이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 활성화를 통한 영어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EBS와 공동으로 영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물론 여기에도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방과후 교실을 위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학교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EBSe—그러니까 EBS English지요—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첫 번째, 방과후 영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수·학습 교재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과후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고, 두 번째 이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지원하며, 세 번째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 관련 선행연구는 방과후 교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인식 조사,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다수의 연구가 방과후 교실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고 있지만 여러 개선 사항 또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문제……

아마 재정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EBS 재정 지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면 더 민생에 부합했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체계적인 수요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블렌디드 학습 환경 및 게임형 콘텐츠 제공 등 영어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기여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었다.

한편 놀이 방과후 영어교실 허용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방과후 영어 정책은 많은 영어교육 관계자에게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홍선호 외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현황, 효과, 사용 개선 요구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며 나아가 EBSe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들도 EBS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활동 일체를 가리킨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보완,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라는 정책 목표 아래 학교 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영어과에서 지적되어 온 교육 격차 및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연구자 및 현장의 교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최근 2018년 10월에 유치원 방과후의 놀이 중심 영어 허용 및 2019년 4월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리며 방과후 관련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조사,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것들 가운데 일부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예컨대 정혜옥과 박부남의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39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의 효과를 사전·사후 평가를 활용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 수준에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또한 박선호와 주혜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습부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전·사후 영어능력평가 결과 영어 점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한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인식 연구도 존재한다. 관련 연구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긍정적 인식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영어 참여를 통해 학습자들은 영어 수업 흥미도와 영어 학습 욕구가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의 긍정적 변화를 인지하거나 정규 영어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증가함으로써 영어교과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EBS가,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을 우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의 이사진의 확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는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다 같이 EBS 교육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야가 토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문제이다. 김선영과 백지원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유사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학생 간 수준 차이 및 학습자 중심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들은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EBSe 방과후 프로그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형태로 프로그램이 배포된다는 점에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양적·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요구 사항을 조사한 연구가 일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나 방과후 교실을 실행한 교사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학생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직접 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학부모,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등 다양한 관점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근거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오프라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한 학생 및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일반인으로 구성된 EBS English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방과후 영어교육에 필요한 학습 교재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서 정규 수업과 자기주도형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종합 학습 서비스이다.

EBS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학년제 수준별 교육과정, 정규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학습자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위해 무학년제 수준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 다섯 수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따라 강의를 스스로 선택하고 교재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EBS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평가를 제공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을 제시하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 맞춤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영어는 정규과정, 방학과정, 한국인 교사 콘텐츠, 원어민 교사 콘텐츠 이렇게 분류되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목적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이사진이나 사장을 편향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공교육 보완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제작 당시 현행 정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년군별 1학기를 1단계로 해서 정규수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정규과정, 방과후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을 목표로 한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그 수 또한 제한적이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와 관련해 황정희와 김영미는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오프라인 방과후 영어 교실을 연구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며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냈다.

EBS English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방송진, 이사진, 사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EBS는 그 역할을 제자리에서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 및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본인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최근 급변하는 방과후 정책은 많은 영어교육 관계자에게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설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BS가 보다 더 질 좋은 방송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여야가 어떠한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이 민생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포함한 EBS English 웹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선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의 사용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사용자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EBS English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EBS English 웹사이트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3971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참여자는 총 학생·학부모·교사·일반인으로 나누어진다.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지칭하며 학부모는 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로 구분하였다. 교사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수자로 근무 중인 집단이며 일반인은 대학생을 포함해 학생·학부모·교사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을 의미한다.

총 설문 참여자 3971명 중 학생이 25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63.7%를 차지하였다. 일반인 827명, 20.8%입니다. 학부모는 466명, 11.7%, 교사는 148명, 3.8%입니다.

본 연구는 참여자를 학생·교사·학부모·일반인으로 구분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별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한 4인의 연구자 및 외부 영어교육 전문가 2인은 제작된 설문 문항을 다섯 차례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4종으로 이루어진 설문은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삭제하였습니다.

설문지는 구글 인터넷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4주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첫 부분은 총 다섯 문항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EBS English 방과후 콘텐츠의 현황 및 기대 효과에 관한 문항으로서 문항에 따라 리커트 5점 척도, 복수 문항 선택형, 주관식 단답형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술 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카이자승검증을 통해 집단 간 응답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유무를 검증했습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연구자가 반복해 읽는 과정을 통해 집단별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에 활용

했습니다.

이 절에서 EBS English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 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397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에 응답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사용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 이 설문에서는 사용자들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각 집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를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 여부 관련 설문 결과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3971명 중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나 됐습니다. EBS English 설문조사 참여자 중 25%가 넘는 비율의 참여자가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BS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도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수능 방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국민의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방송국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정치적인 편향성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EBS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 왔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25%가 넘는 비율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의 과업이나 과제를 끝낸 뒤라는 뜻의 '방과후' 용어의 의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방과후와 관련이 비교적 적은 일반인 집단을 제외한 학생·학부모·교사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 응답에 대한 χ2 검증 분석 결과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사용 여부 관련 통계치는 .136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사용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로 설명드리면 학부모 집단은 43%, 교사 집단은 34%, 학생 집단은 25%, 일반인 집단은 22%로 교사와 학부모 집단이 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조력하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과후 영어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학생이나 교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듯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또한 높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 집단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가정에서의 방과후 영어에 대한 연구나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폭넓은 입법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민생에 더 부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모두 동일한 응답으로 일관하거나 무응답이 다수 포함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일부 결과를 제외한 총 1027개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인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 문항을 총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말하기·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효과와 관련된 집단별 설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 및 그림 3과 같습니다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기록하는 등 설문 응답자들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듣기 및 읽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학교 영어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영어교육을 보완해서 사교육 의존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EBS English의 사업목표와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수강으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항목인 '사교육 필요성이 줄었다' 및 '사교육비가 줄었다'에 대한 응답 결과도 각 4.23점 및 4.25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과후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EBS English 영어 프로그램도 기존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법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 설문 결과에 대해 집단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평가했습니다.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점수는 학생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후 검정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학생 및 교사 집단이 학부모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예컨대 '학교 영어교육 보완에 효과가 있었다', '사교육 필요성이 줄었다',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 항목은 학생 집단이 학부모 및 일반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대상인 학생 집단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부모나 일반인보다 더 큰 만족도를 보고한 것이다.

정리하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효과에 대해 모든 항목에서 학생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곳이 아니라 이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입법적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항목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교사, 일반인, 학부모 순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학부모, 일반인에 대한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EBS English 사이트의 이용자 3971명 중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 이유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나 업데이트 시 사용 의사가 있는지 묻고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설문 응답자 3971명 중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2893명을 대상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세부 항목은 '콘텐츠가 오래되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9개로 구성하였으며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응답을 허용했다.

제가 오전에 드렸던 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필요한 것은 수신료에서 퍼센티지를 올리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EBS 교육방송공사의 제일 첫 번째 혁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진을 특정 단체나 특정 학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자칫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EBS 교육방송공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교양과 교육과 그러한 문화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먹사니즘에도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괏값에 따르면 '홍보가 부족해서'가 1715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는 다음 상위 항목인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 850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설문 응답자들은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존재나 세부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 집단은 1163명, 학부모 집단은 175명, 교사 집단은 49명, 일반인 집단은 328명으로 네 집단 모두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해당 항목을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 이유로 제시하였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로 총 850명, 30.5%가 선택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 537명, 학부모 55명, 교사 29명, 일반인 229명이 이 항목을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 이

유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이유로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로 487명이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 281명, 학부모 70명, 교사 20명, 일반인 116명으로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미사용 이유로 설문 참여자들은 ‘홍보가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반면 ‘재미가 없어서’, ‘듣기·읽기 내용이 부족해서’, ‘말하기·쓰기 내용이 부족해서’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되었다.

EBS English에 대한 홍보 비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편 1.2절에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 학습 효과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다수의 사용자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뜻한다. 즉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분해서’와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등의 미사용 이유도 제시되었다. 차후 방과후 영어 콘텐츠 업데이트 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등 제시된 사용자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설문 참여자 3971명에게 신규 방과후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지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해 볼 것이다.

향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된다면 사용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설문 참여자 3971명 중 3206명, 81%의 응답자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BSe 방과후 영어 콘텐츠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078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결괏값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신규 콘텐츠 및 업데이트에 대한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 집단별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EBS English 방과후 영어에 대한 통계치는 0.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별 응답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이 433명, 교사 집단이 137명으로 이들은 향후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 75% 및 학생 집단 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한편 집단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인·학생 집단에 비해 교사·학부모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치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학생 집단의 방과후 영어 학습 조력하는 입장에 있는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더욱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정 및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가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EBS English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주관식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제시된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조사된 의견을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제안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집단에 관계없이 가장 빈번히 개진된 의견은 '문법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이나 집단별로 제안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순서로 개진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경우 문법 관련 콘텐츠 및 단어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빈번히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생활영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는 의견 또한 상당수가 개진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영어회화 등 실생활영어 관련 콘텐츠 및 수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쓰기, 파닉스 등 언어기능별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학교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에 의견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영어회화 등 실생활영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 다음으로 이어졌다. 일반인의 경우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영어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단어나 어휘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졌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듭해서 EBS 교육방송공사에 여야가 어떻게 하면 입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BS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 상정된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방송과 EBS 수능방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 등 영어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 관련 의견은 집단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 이후 이루어질 신규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발은 각 집단별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공 중인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홍선호 외 3인이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사용 현황과 효과, 개선 요구에 대해 EBS English 웹사이트 이용자 39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 참여자 중 27%, 1078명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들은 모든 세부 항목에서 사용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응답자들은 '학교 영어교육 보완에 효과가 있었다', '듣기·읽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영어 공부에 흥미가 생겼다', '사교육비가 줄었다', '말하기·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를 그 효과로 보고하였다.

한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기한 응답자를 미

사용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홍보가 부족해서’가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EBS에는 재원 마련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문 참여자 3971명에게 신규 방과후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면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지속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 중 3206명의 응답자가 향후 프로그램 사용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영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용자 제안을 조사한 결과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 등 영어 내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개진하였으며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설문 참여자 대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미사용자 중 61.5%가 미사용 이유로서 ‘홍보 부족’을 선택하였다. 이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을 경험한 응답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수의 학습자가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에 대한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활용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

신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사용 의사를 묻는 설문을 통해 학생, 일반인 집단에 비해 학부모 및 교사 집단의 높은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 및 교사 집단은 각각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의 방과후 지도를 조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용 중인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콘텐츠를 어떻게 영어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방과후 콘텐츠 미사용 이유를 조사한 항목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를 17.5% 설문 참여자가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콘텐츠 활용 및 적용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을 제안하였다. 필자의 말씀입니다.

예컨대 학생 및 교사 집단은 문법, 단어, 교과서 내용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학부모와 일반인 집단은 생활영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EBS English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네 집단이 제시한 구체적 요구를 근거로 하여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장시간의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고 심지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자료는 국회가 EBS 교육방송의 방송장악을 위한 한국교육

방송공사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BS 교육방송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과 또 문화와 또 교양방송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 더 좋은 방송과 폭넓은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법적 지원을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을 주고 토론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의 이행이며 환경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시민행동은 교사들의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 형성된 환경행동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의한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학습자들은 교사에 의해서 제시된 자극이 아닌 내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르는 상당한 주인의식 및 행동실행의지 강화를 갖게 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 환경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민경은 국민들이 환경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및 행동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생활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실천 과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환경교육의 효과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속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수업이 필요하며 환경수업의 방법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환경수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재식과 남상준에 의하면 환경교육 교재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공유를 위한 연결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웹사이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매체인 EBS 교육방송을 활용해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토의·토론, 글쓰기 활동, 발표,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환경감수성을, 환경책임행동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성덕과 김형균은 학습자가 자연환경과 적극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축적된 공감적 정서가 환경감수성이며 환경감수성이 체험과 매체를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EBS 교육방송의 영상은 또래 학습자들이 등장해서 환경문제를 탐색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학습자들의 공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김순식과 이용섭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천행남은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이 도덕적 감정, 도덕적 판단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경교육을 할 때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상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쟁점, 이슈를 제시하면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환경감수성을 배

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EBS 교육방송 영상은 환경 쟁점, 이슈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환경문제 상황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환경감수성 및 도덕적 판단력 또한 기를 수 있는 효과적 학습자원이다.

미래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 과제 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차원에서도 EBS 교육방송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BS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영상자료, 학습교재 등을 학습자를 위하여 기획하고 장기간에 걸쳐 개발 및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중심 환경수업을 계획하고 각 수업 차시에 적합한 EBS 교육방송 환경 콘텐츠를 선정·활용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P광역시 S초등학교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문정이 활용한 환경감수성 검사지 문항의 일부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환경감수성 검사지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의 내용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는 강민정 외가 개발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환경책임행동 검사지는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책임행동의 하위영역의 내용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책임행동 검사지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검사지로서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 개발에 대해서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환경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계획되었다. 학습자는 환경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가 초등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환경수업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환경수업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해 재구성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와 관련된 환경 주제를 기후와 탄소에너지, 생태계, 자원순환의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 세 가지 영역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총 30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30차시 분량의 수업지도안에 대해서 과학교육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3명의 자문을 받아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진 6차시의 수업지도안을 빼고 최종 24차시의 수업지도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둘째, 환경수업에 활용할 EBS 교육방송 콘텐츠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 수업에 활용하였다. 지식채널 프로그램의 초등환경교육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선혜는 대체로 지식채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환경교육 영상매체 자료로써 적합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료는 교사가 사전에 확인해서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환경수업에 활용할 EBS 교육방송 콘텐츠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직 교사 3명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논의된 방송 콘텐츠는 환경수업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환경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수업 실행연구를 수행한 김은영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EBS 방송자료를 접한 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제기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동료 학생들과 서로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업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각 주제를 선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와 탄소에너지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오늘 먹은 급식이 얼마만큼의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교실까지 오게 된 것인지, 채식과 고기의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디에서 왔으며 버릴 때는 어디로 가는지 등 탄소에너지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들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환경 문제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실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태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서로 어떻게 먹이관계를 맺고 있고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환경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권, 수권, 대기권, 생물권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인간의 생활에 직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환경교육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셋째, 자원순환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매일 만들어지는 생활 속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원순환을 환경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보 검색, 조사, 토의, 토론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매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계획해서 적용하였다.

수업지도안에는 환경수업의 세 가지 주제와, 기후와 탄소에너지, 생태계, 자원순환 이러한 내용을 담았으며 수업의 단계별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방안도 함께 지도안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처리는 윈도우용 IBM 버전을 사용하였다.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변화를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의 논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감수성에 대해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 집단인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감수성 점수에 대해서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전 독립표본 검정 결과는 연구집단의 평균은 94.40, 표준편차가 14.06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94.30, 표준편차는 17.15로 나타났다. 전체에 대한 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0.020, p는 0.984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환경감수성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후 환경감수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후 독립표본 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05.75, 표준편차가 7.87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94.85, 표준편차는 13.16으로 나타났다. 사후 환경감수성 전체에 대한 t 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3.179, p는 0.003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인 자연, 인공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과 대책, 건전한 소비생활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환경감수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초등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좀 더 민감하게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EBS 방송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었다.

멸종위기종 다큐멘터리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이준호는 멸종위기종 다큐멘터리 기반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필경은 일상생활과 연계된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은 유아의 환경감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감수성의 하위영역인 민감성, 심미성, 정서안정, 동정과 연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전수옥은 환경교육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미학적 요소가 담긴 영상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자료를 활용한 환경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강지영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자료는 학생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학습자의 환경적 경험을 시공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환경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볼 때 교실에서 인쇄된 환경수업

자료나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환경교육보다 실제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자료가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초등학교 학생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이 환경책임행동에 대해서 동질 집단인지 검정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책임행동 점수에 대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테이블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사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53.40, 표준편차가 19.62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150.05, 표준편차는 24.35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책임행동 전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보면 t는 479, p는 0.635로 나왔다. 결괏값이 본 연구에서 정한 유의 확률 0.05보다 높게 나타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환경책임행동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검정되었다.

한편 사후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사후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연구집단의 평균은 177.0, 표준편차가 11.03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159.25, 표준편차는 20.72로 나타났다. 사후 환경책임행동의 전체에 대한 t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t는 3.382, p는 0.02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환경책임행동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5개의 하위 영역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환경책임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지만 아직 국내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책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였다.

시원혜는 자연환경 관련 환경행위 전략에 대한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강민정 외는 학습자의 긍정적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강민정과 류재명도 교육적 환경책임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통해서 환경 정서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EBS 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이나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EBS는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거듭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환경 지식 위주의 환경교육 자료 제시를 통해서 수업 행태보다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을 함양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가한 연구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명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했으며 7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이다가 4명이었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에는 0명이 응답했다.

연구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15명은 환경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나와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었다, 나도 환경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만족도를 기록했다. 영상을 통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환경교육에 대해 알아본 점, EBS의 영상에서 등장하는 또래 친구들의 환경 문제 의식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같이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까닭을 쓴 내용을 살펴보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일반교과 수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대체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EBS 환경 콘텐츠가 제시되고 학생 활동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반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는 학습의 여러 단계에서 EBS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봄을 시사해 준다.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왜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EBS 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반대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현재 EBS 교육방송공사는 EBS 교육방송공사 강령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알맞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하등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안을 방송 4법과 함께 개정안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될 가능성도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막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EBS 교육방송공사에 역대 어느 정권이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방송공사가 공정하고 또 국민들께 교육방송공사의 강령에 따라 알맞은 방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계속 상정되어 있는 방송 4법은 방송장악에 활용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가한 연구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9명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다’고 했으며 7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흥미는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에 10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8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EBS의 교육방송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EBS 교육방송의 수능방송이라든지 환경방송이라든지 학생들이 즐겨 보는 만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EBS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명의 학생들이 수업 흥미도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영상에 나오는 활동을 교실에서 해 봄으로써 흥미있었다. 미술, 실과, 음악과 같은 여러 활동에서 만들기를 해 보면서 재미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서 흥미가 있었다. 친구와 함께 환경과제를 해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여 더욱 재미있었다’ 등으로 답했다.

셋째,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 10명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통이다’가 2명, ‘그렇지 않다’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EBS 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참여도 검사 결과이다.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의 참여도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17명의 학생들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였다’고 답하였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포트폴리오에 환경학습지를 모아 보니 열심히 참여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

EBS 교육방송에서 제안하는 환경실천 과제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어 사전 준비(스마트 태블릿, 학습지, 만들기 재료, 수세미 모종, 1인 1식물 모종 등 환경수업과 관련한 학습준비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환경수업 참여도가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EBS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은 학생들에게 기존 교과수업에 환경수업을 더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고, 환경문제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기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 활동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습활동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하고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의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삼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기대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을 기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학교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친환경행동에 참여,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지식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과 관련된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학습을 제안한다는 점과 실천에 참여할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길러졌다고 본다.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8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90%의 학생들이 수업을 흥미로웠다고 답했다. 또한 85%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생각하고 감정을 나누고 친환경행동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후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의 장점을 살린 다른 학년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EBS 교육방송의 경우 환경 콘텐츠를 계속 기획·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콘텐츠를 활용한 환경수업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광역시 S구 S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대상, 1개 학급 연구집단, 1개 학급 비교집단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을 실시했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했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선정하고 EBS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책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 및 중학년 수준에서도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6학년 학생들의 환경소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학교 성취기준과 연계되는 EBS 환경수업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EBS는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현재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경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환경 콘텐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환경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좋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콘텐츠를 초등학교 환경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가 계속해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장시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토론하는 과정에 과방위가 열리고 있고 과방위에서 조금 전에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저희 박충권 위원을 향해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표현을 과방위원장께서 저희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저기요’ 한 것도 문제이지만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개봉한 탈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라면 탈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극 중에서 이제훈 씨가 연기하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탈북하고 싶고 또 실패할 자유를 꿈꾸는 북한 청년이 대한민국 사회를 동경하면서 탈북을 꿈꾸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자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그 영화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박충권 위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과 또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탈북을 목숨을 걸고 한 위원에 대해서 조롱성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P광역시 S초등학교 6학년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감수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는 점과 EBS 교육방송 환경 콘텐츠에서 제안하는 환경 문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로 삼아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기대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을 기르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 학교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친환경 행동에 참여, 실천하면서 환경감수성이 길러졌다고 생각된다.

둘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초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이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환경과 관련된 시민적 행동, 교육적 행동, 경제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학습을 제안한다는 점과 실천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길러졌다고 판단된다.

셋째,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집단 20명의 학생들 중 80%의 학생들이 만족했으며 90% 학생들

이 수업이 흥미로웠다고 답했다. 또한 수업의 참여도를 묻는 질문에도 85%의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지식으로만 환경 문제를 접하고 끝내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행동에 변화를 주면서 환경 문제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기에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겠으며 거듭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계속 강조하지만 EBS는 교육전문방송입니다.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양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명드렸던 논문을 통해서 여러 번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서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 사장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도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E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장장 7시간을 통해서 과거 정권에서도 E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EBS 수능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교육방송으로서 역할할 것이 있다면 여야가 합을 맞추고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EBS 법안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KBS, MBC, EBS가 한 세트임을 보이기 위해 MBC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준만 교수가 쓴 'MBC의 흑역사,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MBC의 흑역사, 방송의 중립에는 좌우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서, 누구도 민주화를 독점할 수 없고 사회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화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선이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8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은 노조였지만 진보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민주화는 껍데기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방송의 고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방송 3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얼마나 당파적인 계산에서 기안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책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MBC의 6·25 전쟁, 혹 170일 파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한국 방송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MBC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루어진 파업을 말한다. 김도인은 극심한 이념 대립의 결과라는 점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깊은 상흔을 남긴 내전이라는 점도 비슷했다며 170일 파업을 MBC의 6·25 전쟁에 비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0일 파업은 MBC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 후유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파업 때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냈던 사람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서로 싸워댔으니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170일 파업 때 어느 편이었느냐에 따라 양쪽 진영에는 건널 수 없는 골이 파였다.

김도인은 누구인가? 2019년 10월에 출간된 ‘적폐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다 : 언론노조의 MBC 장악 기록’이라는 책의 저자다.

1986년 MBC의 라디오 PD로 입사해 2017년 2월 편성제작본부장이 되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 부역자, 언론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탄압해대는 바람에 1년을 채 못 버티고 2018년 1월 MBC를 퇴직해 그해 8월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방송인이다.

진보는 보수 쪽의 책을 읽지 않고 보수는 진보 쪽의 책을 읽지 않는다.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장면과 구분법을 믿지 않으며 가소롭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소통을 위해 기존 용어들을 쓰기로 하겠다. 글은 진보 쪽이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다. 김도인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상흔이 남아 있는 2012년, 2017년의 MBC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와 진보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은 많았지만 반대편의 시각에서 본 기록은 거의 없다.

맞다. 이게 그가 책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역시 그간 MBC 문제에 대해 언론노조와 진보학자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만 주로 접해 왔기에 이 책은 시각의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저자가 강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록하는 일에 충실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MBC의 6·25 전쟁에 대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MBC의 6·25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년 후인 2014년에 벌어진 한 풍경을 감상해 보자.

비민주노총 계열의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 비대위원장 오정환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MBC 보도국에서 한 남성 기자가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지나갔다. 남성 기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전화 끊어. 재수 없는 X 지나간다’.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2014년 무렵 MBC에서는 나서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모욕을 당한 당사자 역시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남성 기자는 기세등등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MBC 공채 기자였고 여성 기자는 노조의 파업기간 회사가 채용한 경력 기자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었다.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노조 측이 MBC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남성 기자는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했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단독 보도.

4월 15일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단독 보도를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보도였다. MBC는 채널A 법조팀 소속 기자 이동재가 금융사기죄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 이철을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제약사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은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 3만 명에게 7039억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저질러 1심까지 2년 6개월 추가된 상태였다.

MBC 보도에 따라 이동재는 이철에게 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며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이철은 지인 A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동재를 만나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재는 검찰총장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과 통화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수사에 협조하면 이철의 수사를 막거나 수사팀에 이철의 입장을 전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저녁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이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는 다만 MBC가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MBC의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채널A는 MBC가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보도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년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유시민은 2015년 1월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 행사에 등장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동재가 3년 후 월간조선 2023년 4월호에 기고한 토로, '검언유착, 공작에 맞선 어느 기자의 2년 여 소송기'라는 글을 참고하기로 하자.

이동재는 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비상장 무명 제약사 행사에 등장해 극찬했다. 행사 후 한 달간 신라젠의 장외 주가는 2배 넘게 상승했고 2년 후 코스닥에서 15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유시민이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던 임상이 실패해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수조 원대 투자손실을 떠안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시민이 극찬했던 바로 그해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민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이미 신라젠·VIK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는 예견됐었다.

이철 VIK 대표는 노사모 출신으로 유시민이 창당한 국민참여당의 의정부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 이철은 친노 인사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000만 원을 건네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대형 사기로 구속된 이철은 보석 중에도 또 사기 행각을 벌였고 내연녀 협박으로도 유죄가 확정됐다. 유시민은 신라젠 행사 외에도 VIK 사무실을 별도로 찾아가 모집책 상대로 강연까지 벌였다. 상식적인 기자들은 사기 집단의 편에 서는 대신 수조 원대 피해를 낳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의문을 가졌다.

MBC의 어용 방송은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 갔다. 5월 12일 MBC는 2시 뉴스 외전에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윤미향을 초대했다. 보수 언론의 모략극이라는 게 확고하냐, 전반적인 음모가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윤미향은 '미래통합당이 스피치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따라 보도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날 15분 분량 오후 뉴스를 짧게 편집해 ‘할머니와 소통 부족…… 의혹은 통합당과 보수 언론 모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 ‘조국 프레임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미향의 딸과 그 가족이 어떤 아픔이었을까, 엄마로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이 재차 전파를 탔다.

고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에게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에 대한 옹호 방송은 어떠했던가?

여권은 검찰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한만호 옥중 비망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비망록이 세상에 처음 나온 증거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한명숙 무죄를 주장했다. 비망록은 9년 전 수사팀이 처음 입수해 한만호의 위증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 역시 검찰 주장을 인정한 문건인데 이제 와서 비망록이 불법 수사의 징표로 둔갑한 것이다.

MBC는 당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 5월 14일 전 MBC 사장 최승호가 퇴임 직후 복귀한 매체인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하자 MBC는 이날 뉴스타파에서 비망록을 전해 받아 MBC가 공동 취재했다며 ‘433·332·333 외워서 진술…… 검찰의 강아지였다’, ‘빼앗긴 비망록…… 10년 만에 드러난 1200쪽’ 등 리포트를 두 꼭지에 걸쳐 내보냈다.

6월 10일 열린 80년 제작 거부 언론투쟁 40년 세미나에서 진보 언론학자이자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손석춘은 현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KBS와 MBC는 해직 기자나 언론노조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장을 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공정 언론을 위해 싸웠던 방송인들이 다시 사장으로 취임했다며 한국의 공영방송은 영원히 친정부 편향일 수밖에 없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파적 저널리즘이 한겨레·경향신문과 KBS·MBC, 공영방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시청률, 청취율, 구독률을 무기로 응집력 높은 그들의 저널리즘 이해나 정파적 언행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KBS·MBC처럼 역사적 반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손석춘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진영논리로 공공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언론운동이 민주당의 하위조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시민사회 일각의 주장은 정말 기우일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세명대학교 교수 정연우는 ‘손 교수의 주장은 언론개혁 대상이자 개혁운동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석춘은 ‘최근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불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는 그 부분을 지적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 7일 경제부총리겸기획부장관 홍남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BS·MBC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규방송을 끊고 이 발표를 10여 분 동안 생중계를 해 논란이 되었다. 발표를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하나 마나한 소리 하려고 뉴스

특보까지 내보내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시청자는 '뉴스 특보로 정규방송 중지시키고 발표할 내용이더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내용이고 공허한 메아리'라고도 했다. '일요일에 난데없는 특보, 선거 앞두고 쇼하는 것 아니길' 등의 반응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들이다.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여성의 날인 3월 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도 문제가 되었다. 이날 방송은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 민주당 후보 측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을 전했는데 이후 앵커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를 펴는 것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라고 기자에게 질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MBC의 민주당 지원사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라고 단정, 마치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5월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동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의 후배 동료인 채널A 기자 백승우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동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범한 30대 시민 기자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열 달이 다 돼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와 제 가족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견디는 게 쉽지 않다. 200일 넘게 좁은 방에서 강력범과 수감생활을 했다. 진실을 캐는 기자들의 보도를 보며 존경심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이날 MBC 사장 박성제는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 공공성 가치의 재구성과 구현'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했다. 그는 이 발표에서 '백신, 방역, 한반도 평화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똑같이 중계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가'라고 되물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시대정신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아 보는 적극적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일대일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사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판단 없는 기계적 중립 보도가 공영방송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운운하며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MBC 사장이나 기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게 적극적 공영방송이라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7월 19일 이동재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주요 발언들을 감상해 보자.

질문-당시 검찰 수사 과정은 어땠나?

답-답정너 조사라고 생각한다. 구속 이후 매일같이 불러 한동훈만 물어봤다. 나와 한 검사장과 비슷한 횟수로 연락하던 법조계 취재원은 족히 100명은 된다. 물론 친여 성향 검사들도 있다. 내 사건 수사기록이 1만 8000쪽이나 되더라. 민생 범죄를 수사해야 할 가장 우수한 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에 낭비됐다.

이 기자는 건국 이래 첫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답-한동훈 검사장 외에 송경호, 신봉수 차장 등도 이번 사건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가 영장 신청서에 첨부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인가? 황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대한민국에 누군들 구속을 못 하겠나 싶었다.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당시 차장검사였다.

질문-MBC는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하다. 시청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다. 그럴수록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MBC는 제목·내용에서 검언유착을 언급한 보도를 포털에서 검색해 보니 130건이 넘게 나오더라. MBC는 내 영장 청구서 내용을 깨알같이 보도하는 등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색해 보니 방송에서 최소 서른네 번 검언유착이 언급됐다. 해당 기자는 그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탔고 수상 소감에는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밝혔다.

질문-1심 재판부도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했다.

답-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 엑스로 불린 지 모 씨가 먼저 접촉해 오기 전까지 취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지 씨가 엄청난 취재 자료를 넘길 것처럼 접근하며 사실상 함정을 팠다. 지 씨가 먼저 '기자님도 유시민을 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특종 욕심에 낚인 것이다. 사기 전과자에게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MBC도 몰래카메라를 찍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 씨와 동행 취재를 벌였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7월 23일 이동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재는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동재는 7월 26일 최강욱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동재 측은 사과하면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 대표는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어디다가 감히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다며 'MBC조차 검언유착 프레임이 최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지 않았나. 더 이상 선처는 없다'고 했다.

MBC 주장에 국민은……

다시 하겠습니다.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MBC 사장 박성제는 2022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하게 여겨 왔던 MBC의 위상, 바로 공영이라는 정체성에 물음표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최근 다시 일고 있다'며 공영방송 MBC의 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성제는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수십 년간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천억 원을 공적자금으로 내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았던 방송이 바로 MBC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영방송 아닌가’라며 ‘민영방송이나 종편보다 훨씬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가 감내해 온 것은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를 모두 숙명처럼 가슴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성제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공영성의 목표가 아니라 기본이라며 ‘이제 시청자들은 다양한 소수 의견을 원하고 시비를 가리는 팩트 체크를 중요시하며 권력을 비판하는 잣대가 올바른지 따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MBC는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밝혔다.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진심으로 한 말일까, 아니면 그냥 듣기 좋자고 해 본 소리일까? 아무래도 후자였던 것 같다. 자신이 7개월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일대일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고 했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가?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로 폄하한다면, 그리고 MBC에 그런 판단과 평가를 내릴 권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건 권력의 언론장악 이상으로 심각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문제였다.

MBC가 보수 성향의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을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의 헛소리로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감시 결과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었다.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은 2022년 1월 첫째 주의 문제적 프로그램 및 진행자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그 진행자 김종배를 선정했다. 감시단은 진행자 김종배 씨의 주장 내용은 공영방송 진행자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 흠집 내기에 총집중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1월 3일 제작진은 유튜브에 프로그램 녹화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얼굴을 보여 주며 그 위에 ‘제가 김종인의 아바타입니까?’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윤석열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종배가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제가 김종인의 아바타입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음에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윤석열이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해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감시단은 1월 4일 김종배가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가 힘들 것이고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 사람은 핵심 관계자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오로지 자신의 추측에만 기대어 윤핵관이 있고 윤석열이 윤핵관을 찾을 것이라는 취지의 자의적 해석을 발설했는가 하면, 1월 6일에도 윤석열의 선대위 해체 결정을 독재정권 시절의 비상계엄령에 빗대면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결정은 김종인-이준석-윤석열 삼두 체제가 아니고 이제는 황제 체제로 가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비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보시는 국

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BC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가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 녹취를 했고 해당 녹취는 MBC에 전달된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김 씨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녹취라며 방송이 예정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김건희 여사 당시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는 다시 준동하는 여권과 일부 친여 방송의 괴벨스 공작이라는 논평을 통해 MBC의 친여 스피커 노릇을 비난했다. 그는 여권 세력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입에 담지 못할 루머를 퍼뜨리며 국민의 판단을 흐린 바가 있다며 '이제는 김 씨를 대상으로 7시간 통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 방식도 치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매체의 한 기자가 김 씨에게 접근해 6개월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고 한다며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문제인데 굳이 제보의 형식을 빌려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방송 전부터 여권 인사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자가 처음 접근한 지난해 7월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도 전이라며 공직자의 아내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여성을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삼다니 지나치게 야비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방송사도 문제다. 해당 방송사는 이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노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심각한 오보를 낸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치공작의 확성기 역할을 맡겠다는 건데 도대체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법원이 일부 내용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 진중권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M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녹음테이프가 있다.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라'라고 했다. 그는 그것도 전 국민이 공인이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은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의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 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50여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씨는 자기는

도와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며 취재윤리에 위배되고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진중권은 MBC를 겨냥해서도 공영방송인 MBC에서는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다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며 '이른바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굳이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정말 그게 제대로 된 후보인가'라고 했다.

1월 25일 국민의힘 의원 박성중은 공개 원내 대책회의에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MBC 뉴스데스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김건희 씨 녹취파일 보도에 열을 올렸다며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친여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서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는 일주일 동안 악의적 편집과 임의적 해석으로 무려 10개의 리포트를 총 31분 넘게 방송하며 윤석열 후보 측에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김건희 씨 녹취를 통해 논란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며 김건희 씨 관련으로 10개나 되는 리포트를 쏟아냈던 MBC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가족 욕설 관련으로 18일 당일 단 40초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뉴스데스크 방송 중 김건희 씨 녹취 관련은 31분,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욕설 관련은 40초, 거의 5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며 이 정도면 편파방송을 넘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불법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은 흠집 내기로 31분, 이재명 후보는 감싸기로 40초 방송하는 것이 균형된 공정방송인지 묻고 싶다며 MBC의 편향된 방송 내용과 분량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8일 SBS 8시뉴스는 '사모님 약 대리 수령 등 사적 심부름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다음 날인 1월 29일 TV조선 뉴스7은 '이재명 가족 심부름했다…… 허위사실'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김혜경의 공무원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1월 30일에는 SBS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1월 31일에는 채널A가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채널A는 다음 날인 2월 1일에도 보도를 이어 갔다. 반면 김건희 씨의 의혹 보도에 적극적이었던 MBC는 내내 침묵했다. 이에 MBC 제3노조는 2월 1일 성명을 통해 MBC가 김건희 녹취록을 집중 보도한 사실을 강조하며 MBC는 왜 김혜경 씨 의혹은 보도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날인 2월 2일 MBC 뉴스데스크가 김혜경 의혹을 의전 논란으로 표현하고 보도하자 제3노조는 기사를 쓴 김 모 기자는 도지사 부인이 공무원을 시종처럼 부린 게 의전이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의전 논란이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제3노조는 법인카드 유용은 갑질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전제하고 법인카드 유용은 회계 논란으로 부를 건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KBS 뉴스 9에서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보도한 날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계속 침묵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2월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김혜경이 자신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기자회견을

첫 리포트로 보도하면서 제목을 ‘김혜경 과잉 의전 사과, 공사 구분 못 했다. 선거 후에도 책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사 본문에서는 ‘과잉 의전 논란이 법인카드 유용과 갑질 의혹으로 확산되자 공개적 사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제3노조는 ‘제목에는 과잉 의전, 기사에는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가 바라보는 본질은 법인카드 유용과 갑질 의혹이었지만 제목은 엉뚱하게도 김혜경 과잉 의전 사과였다며 기사 내용과 제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기사는 기자가 쓰지만 제목은 보도국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정한다며 기자 스스로 의혹이 법인카드 유용으로 확산됐다고 써도 수뇌부의 시선은 여전히 과잉 의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유용해 소고기를 사 먹고 공무원에게 속옷 정리를 시키는 게 무슨 의전이냐며 MBC 보도국의 수뇌부는 언론인이 아니라 이재명 부부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1월 23일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는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MBC가 그 동안 했던 행태들을 보면 대한민국 언론 아니다라며 카타르 월드컵을 비유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 대항전에 나가는 축구 국가대표와 똑같다며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열심히 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라인에서 반칙을 범했다고 치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언론사가 상대쪽 국가에다가 우리 선수가 반칙했다고 까발리면 좋겠는가’라고 불편해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조금 거슬리는 비속어를 했다고 치자. 그것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굳이 미국의 백악관에다가 우리 대통령이 이런 비속어를 썼는데 너희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까발려 바쳐야 속이 시원하냐’고 따졌다.

그는 ‘그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정말 미국의 못된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걸 수습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며 ‘굳이 그 이야기를 미국 백악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MBC에 큰 실망을 했다’고 거듭 MBC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약 4년 5개월 전인 2018년 6월 13일 밤 이런 일이 있었다. 경기지사 당선이 확실해진 이재명이 각 방송사의 릴레이 인터뷰에 응했다. 스캔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이렇게 외쳤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야’.

급기야 MBC와의 인터뷰 때 앵커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면서 질문을 던지려 하자 이재명은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인이어 이어폰을 빼 던지면서 생방송 인터뷰를 돌연 중단했다.

11월 24일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이 인터뷰 중단 사건을 소환하면서 ‘이기주 기자의 난동에 가까운 항의와 삿대질, 말싸움에 대하여 MBC는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고 있다’며 ‘언론은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자에게 난처한 질문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2018년 6월 MBC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한없이 나약한

어조로 인터뷰를 구걸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TV조선 등 방송사들이 당선 소감과 함께 어김없이 여배우 스캔들 등 선거 막판 불거진 추문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재명 당선인은 매우 진노하여 엉뚱한 질문은 끊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기자들에게 ‘안 돼’, ‘취소야’ 등의 반말 표현을 썼고 대변인에게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지시도 했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그러나 MBC 기자는 엉뚱한 질문을 안 하겠다며 기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더 황당한 것은 이후에 ‘박성제 앵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돌변했던 이재명 당선인의 태도이다. 박성제 앵커의 부탁이라면 엉뚱한 질문을 안 할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믿고 인터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제 앵커는 이 후보가 곤란해할 엉뚱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앵커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폰을 뽑더니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중단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당시 언론들은 이 사건을 기자의 질문을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적인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왜 그때는 분노하지 않던 MBC가 지금은 분노하는가. 그 답은 MBC 보도의 편파성이다. 편파적 인물이 주도해 온 편파적 여론 호도가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을 불러왔고 이 사태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할 게 단지 그것뿐이었을까?

MBC는 10월 11일 TV를 통해 방영되었던 방송분에서 당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에는 5명이 “김명신이 박사 한 번에 땄다고 하니 비웃지요. 모여서 ‘말이 돼!’ 이러면서”라는 목소리와 함께 자막이 흘러나왔다. 자막 위에는 ‘당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다. 더욱이 5명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은 구도여서 전원이 인터뷰 대상자이면서 해당 증언에 의견을 모은 것처럼 보였다.

우측 상단에는 조그맣게 ‘음성 대독’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MBC가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한 영상 화면에는 ‘음성 대독’ 아래 ‘재연’ 표시가 추가되었다.

그게 전부였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MBC 제3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MBC가 김건희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관계자들의 대역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장면이 아니라 다섯 곳에 이르고 동원된 배우들이 최소 6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당 대역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도 변조되었다. MBC 제3노조는 ‘누가 봐도 제보자 본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역 재연 사실을 감췄다. 이는 시청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C 제3노조는 특히 한 장면에서 실수로 자막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의도적으로 대역 배우를 쓰고 그 사실을 감춘 것이어서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의도적 과장도 의심된다며 ‘테크노디자인대학 관계자를 어렵게 만났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제보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연출됐다. 한 사람에게 들었을 법한 내용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음성 변조한 대역 배우를 쓴 건 마치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고 포장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홍은 상상초월 MBC라는 칼럼에서 'PD수첩이 김건희 편에서 대역 고지를 안 한 것을 여당이 문제 삼는데 더 심각한 건 그게 아니다. 어렵게 만났다는 소개와 함께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 변조된 제보자가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대역이었다고 한다.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면 누구나 실제 인물이라 여긴다. 이를 응용한 게 모큐드라마다. 불륜 현장 급습 같은 장면 연출에 많이 사용된다. 시청자를 속일 의도가 아니라면 시사 프로가 대역을 쓰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할 이유가 별로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보자 목소리 녹음을 방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래픽 처리를 해서 자막으로 발언을 내보내고 진행자가 읽어 주면 된다. 2008년 광우병 편 제작자들이 그랬듯이 적개심이 하늘을 찌른 상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닿기 위해 골몰하는 제작진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만약 전임 정권 때 임명된 사장과 간부들이 아직 보직을 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를 다룬 방송에 이런 식의 마사지가 가해졌다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장과 제작 간부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을 것이다'.

11월 18일 윤석열은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MBC 기자가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뭐가 악의적이에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으나 윤석열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기정이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고 하자 MBC 기자는 '질문도 못하나'라며 맞섰다. '말꼬리 잡지 말라', '말조심하라', '군사정권이냐?', '보도를 잘하라'는 등 한동안 고성이 오갔는데 이게 큰 논란거리이자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열 가지로 이유를 적시하고 이게 악의적이라고 되받았다. 그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두 번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

세 번째,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다.

네 번째,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했지만 MBC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회신을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인가?

다섯 번째,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자 MBC는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았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여섯 번째, 공영방송 MBC는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 다른 언론사들도 가짜뉴스를 내보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영방송 MBC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덟 번째,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대역을 쓰고도 대역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MBC의 가짜뉴스는 끝이 없다. 광우병 괴담 조작방송을 시작으로 조국 수호 집회 '딱 보니 100만 명' 허위 보도에 이어 최근에도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느니,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느니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다.

열 번째,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공영방송으로서 성찰하기보다 뭐가 악의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11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사흘 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인터뷰에서 'MBC에서 뭐가 가짜뉴스고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었다'라며 '백악관 같은 데는 지명해서 한다.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가 가짜뉴스인가요, 뭘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난동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MBC를 겨냥해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어디 감히 우리를' 하는 왜곡된 우월감이 짙게 배어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 중심으로 MBC 기자를 참언론인으로 부르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부 지지자들은 MBC 기자를 응원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구독자 수를 늘려 주어야 한다며 서로 기자의 네이버 기자 페이지를 공유했다. 설전이 벌어진 18일 2800명대였던 MBC 기자의 구독자 수는 21일 오전 10시 기준 3만 9000명대를 기록해 약 14배가 뛰었다. 응원 수도 1977개에서 5만 6813개로 약 28배가 늘었다. 구독자 통계를 보면 여성이 62%, 남성이 38% 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구독자 나이대는 40대로 45%대였으며, 이어 50대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해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다'라며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무엇을 방송했길래 그런 걸까? MBC 스트레이트는 11월 20일 '참사는 엄청난 기회, 천공은 누구인가?' 편에서 5개월 전에 나온 천공의 발언 등을 전하며 천공의 윤석열 대통령 멘토 의혹을 보도했다.

천공은 6월 23일 유튜브 영상에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라는 질문에 '아,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장경태의 발언에 대통령실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공식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정 개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다고 연결 짓는 것은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6월 23일 유튜브 방송을 보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저급한 네거티브 발언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경태는 스트레이트에 감동을 먹은 나머지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퍼부은 걸까? 장경태만 탓할 일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감동한 시청자도 많았으니까 말이다. MBC의 스트레이트 예고 기사에는 1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MBC에 대한 격한 찬사 일변도였다. 스트레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때리기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 벗고 나설 만한 환호였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예.

○김용태 의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필리버스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든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에서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EBS 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일말의, 1%의 정치적 편향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BS 이 법안은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

(「잠시 스톱해요, 잠시 스톱!」 하는 의원 있음)

(「기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회의 진행이 어디 있어요? 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이런 회의 진행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사회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화장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본 의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MBC와 KBS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전부터 ‘MBC의 흑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MBC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가짜뉴스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KBS마저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전락한 건 딱한 일이었다. 1월 5일 유시민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내용이 검찰 확보 녹취록에 있다는 KBS 오보와 관련,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과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 A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MBC를 돕기 위해 벌인 일이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지만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내용을 곧이곧대로 다 믿었기에 저지른 오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A 씨 혐의에 관해 A 씨는 기자로서 약 2주 이상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성식 검사 발언에 배치되는 취재 자료와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데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는 사건 관련 녹취록—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신성식이 녹취록상 대화라고 언급하지 않은 신성식의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KBS 간부들에 대해서는 보도·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오병상은 '신성식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었을까? 정치적 맥락으로 보자면 정말 드라마입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는 조국 사태로 들끓던 정국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의 공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분신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유시민을 모함한다는 진보진영을 흥분하게 만드는 자극적 스토리입니다. 윤석열을 공격해서 조국을 수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오병상은 당시 윤석열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많았다며 이런 가짜뉴스들은 정치적으로 꽤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직후인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근소한 표차로 이긴 곳이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흥분한 촛불이 당락을 가른 곳이 적지 않을 겁니다.

당시 여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공격으로 총선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그 진상이 꽤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적으로는 비극이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만들어 낸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2월 7일 MBC 최대 주주 방문진은 정기 이사회 면접평가를 통해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한 13명 중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후보를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 3인은 18일 156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성제는 '맨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성명이 나온다. 이미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지만 더 심각한 압력이 들어오면 공개하고 기자들보다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기

자·PD들은 사장이 간섭만 안 하면 알아서 잘한다. 양심껏 취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들 편에 서라고 하겠다'고 했으며 'MBC 저널리즘위원회를 만들어 MBC 신뢰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이라는 생각은 프레임이다. 우리 뉴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어떤 정부든지 불만은 나온다'며 '중요한 건 진실이다. 진실 앞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안형준은 정책 발표에서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합니다. 어떤 조사는 신뢰도 1위지만 다른 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불신이 3위입니다. MBC 내부는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스케이트장 등으로 유배를 가는 일이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라며 박성제를 비판했다. 그는 '다른 방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리포트가 톱이었지만 우리는 열다섯 번째였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편집이었다는 오해를 살 만했다'며 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팩트체크119팀을 만들고 공정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매주 회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허태정은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보니 100만, 박성제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서초동 조국 옹호 집회 참여 인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박성제 후보가 보도국장 시절 그의 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었습니다'라며 박성제가 주도한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도 국익 부분과 알권리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팩트 체크를 세 번, 네 번 해서 듣고 확실할 때만 보도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들렸어, 그것만으로 보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MBC 공정성 점수를 50점 이하로 평가했고 박성제의 '딱 보니 100만' 발언은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평가단 투표 결과 안형준과 허태정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다. 박성제의 탈락은 이변으로 여겨졌는데 방문진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시민평가단이 그런 이변을 만들어 냈다. 시민평가단은 3명의 후보에게 17개의 공통 질문을 던져 답변을 듣고 난 뒤 1인당 2명의 후보를 적어 냈는데 박성제는 최종 후보 명단 2인에 들지 못한 것이다.

MBC 제3노조는 '출마 후보들마저 인정한 민주당 방송, 결국 박성제 탈락'이라는 성명을 통해 불행 중 다행으로 노골적인 친민주당 방송을 이어 가던 박성제 후보가 시민평가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나왔다며 그러나 안형준, 허태정 후보 또한 언론노조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2017년 파업 불참 기자들을 탄압하던 후보들이라고 주장했다.

3월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낙하산 앉히려고? KT 정관 만지작' 보도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KT 사장에 응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한 사람은 같은 이름의 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뉴스 시작에 앞서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틀린 내용을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 김 전 원내대표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공인을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내려면 동명이인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김성태 전 의원이 KT 사장에 지원했다는 팩트에 흥분한 나머지 어떤 김성태 전 의원인지에 대해 추가 팩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로 끝내서는 안 될 일이다.

왜 오보가 나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방송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오보를 낸 MBC 기자는 불과 몇 달 전 탈북 작가를 성폭행범으로 몬 허위 보도로 회사에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 전력이 있었지만 징계는커녕 버젓이 메인 뉴스에 다시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적 언론 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은 MBC 오보의 문제는 단순히 동명이인을 착각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MBC는 원내대표 출신 김성태 전 의원을 KT 사장 지원자로 보도하면서 사장에 지원했던 김성태 전 의원은 KT 사장에게 직접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며 그의 동영상과 당시 인터뷰까지 편집해 보도했다.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김성태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취재기자부터 최종 데스크까지 모두 놓치면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던 인사가 이제는 아예 청탁에 나섰던 회사의 사장에 공모했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4월 13일 MBC 인사위원회는 오보의 책임을 물어 데스크였던 김 모 부장에게 감봉 2개월, 홍 모 취재기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애초 취재기자가 작성한 원고는 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데스크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딸 KT 채용 청탁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는 MBC와 같은 큰 방송사에서 취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납득 못 할 일은 아니었다. MBC는 그간 내내 문재인·이재명 옹호와 윤석열 때리기를 위해 그런 식의 자세와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날 MBC 제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 중 야권 성향 인사가 여권 성향 인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편파적인 패널 섭외라고 주장했다. 친여당 성향 패널은 해당 기간 4명 출연했고 친야당 성향 패널은 37명이 출연했다는 것이다.

제3노조가 공정언론국민연대 모니터 결과를 참조해 공개한 대통령 방미 기간 MBC 표준FM 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진 자료를 보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우파 혹은 친여당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이 해당 기간 2명이었고 좌파 혹은 친야당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10명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우파 혹은 친여당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이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좌파 혹은 친야당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27명이 출연했다.

제3노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하고 지난달 27일 목요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차관이었던 최종건 연대 교수가 나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논란을 정리하는 편파방송을 했다며 지난달 28일에도 최종건 교수가 나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의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 통상정책관을 지낸 김형주 씨가 나와 설명해 역시 부적절한 편파방송의 우려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경우도 유사하다. '전 통일부장관이 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27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나왔고 '위기의 한러 관계 경제적 여파는'이라는 제목의 코너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박종수 씨가 출연했

다며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과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나와서 전문가라면서 설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편파적인 패널 섭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KBS, MBC 두 방송을 합하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야권 117 대 여권 15이다. 이 정도면 공영방송 간판을 단 정치 세력이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런 편파방송을 막으라고 존재하는 기관인데 두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방치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 정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종편에 대해선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면서 공공전파를 쓰는 KBS의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좌파 패널을 80회 넘게 출연시키고 보수인사는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을 정도다. 지금 공영방송은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편향이라고 간주해 배제하고 찍어 내는 내로남불식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고 비판했지만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반론은 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진보적 언론 전문 매체인 미디어스는 이런 비판의 근거인 보수성향 언론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가 자의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을 뿐 전면적인 검증이나 반론은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공영방송들의 친진보성향 방송은 보수성향 언론단체들만 모니터링했고 공영방송들의 친보수성향 방송은 진보성향 언론단체들만 모니터링을 했다. 이런 선택적 모니터링 자체가 언론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장은 있을망정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하지 않는 쪽에 비해 비교적 더 할 말이 많고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두 정당의 차이가 어떠하건 20여 년 전부터 내가 간절히 꿈꾸었던 건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였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방송사 사장만 뽑는 이른바 방송의회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두 거대 정당은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 진영에선 종편으로 인한 기울어진 방송 운동장 때문에 공영방송 장악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외로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권력과 정치가 손을 떼면 시장 논리에 따라 저절로 반반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걸까? 민주당 진영 내에 만만찮은 세력을 형성한 반기업 정서 또는 반자본주의 정서를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일까?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는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내가 내린 현실적인 결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정권이건 사실상 그간 여당 프리미엄으로 주어져 온 공영방송 장악을 스스로 포기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선 1년 전에 여야 타협이 가능한 이유는 여당으로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 야당으로선 대선 기간 중 방송보도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2017년 5월 9일 대선 전 앞서 말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집권 후 이 약속을 깨고 5년간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해 놓고선 대선에 패배하자 엉뚱한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건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여론 압박 공세를 펴면 국민의힘이 워낙 어리석은지라 그런 내로남불 꼼수에 넘어가 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다.

현재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3개 직능단체의 중립성 문제다.

방송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노조의 정치 성향도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직능단체와 더불어 언론노조가 친민주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에 가입한 다수 방송인들의 기본 인식은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방송장악에 있어서는 전과 집단이며 군사독재 시절부터 수많은 언론인을 감방에 보내고 온갖 탄압을 일삼았던 DNA를 가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언론노조는 이런 비판을 많이 해 왔지만 흥미로운 건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방송 평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어려운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 던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은 있었나, 없었나라는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걸 다 제쳐 놓고 이에 대한 백서부터 작성해 보자. 문재인 정권하의 공영방송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과오와 죄악을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언론노조가 자꾸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소환하는 건 입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을 대하는 중립적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방송인들의 아비투스가 어떤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어쩔 것인가?

앞서 보았듯이 문재인 정권 출범 때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저지르면서 앞장선 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들을 동원할 수 없거나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런 차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들고 나와 권력의 방송장악에 결사반대하는 공정성의 화신처럼 구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후안무치도 정도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고약하기까지도 하다. 이용마의 국민대표단 제도도 있고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도 있잖은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오직 대선 1년 전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자는 게 아니다. 여야 합의를 깬 것과, 그럼에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죄가 필요하다. 언론노조와 방송인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권 마지막 1년 내에 성사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공손한 자세로 국민의힘에 타협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모든 정의는 전세 낸 듯 큰소리를 뻥뻥 쳐 가면서 이를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MBC가 계속 정권과 맞짱 뜨는 공영방송으로 머무르겠다는 허황된 야욕을 버리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중립지대화 모델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내로남불,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언론노조가 자꾸 과거 민주화의 역사를 소환하는 것은 입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을 대하는 중립적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방송인들의 아비투스가……

길거리 불량배가 했어도 비난받을 행동은 2014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MBC는 내내 그런 갈등에 시달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2011년 12월 1일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개국했을 때 진보진영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이라는 독설을 퍼부었지만 종편은 발전하는 반면 MBC와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은 퇴보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명박 정권이 워낙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탓에 진보진영에서는 그런 저주받은 탄생 배경을 갖고 있는 종편을 적대시했지만 종편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의 탄생인들 가능했을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었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은 '청 안종범 수석, 500억 모금 개입 의혹' 리포트를 내보냄으로써 이제 곧 불거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었다. '미르재단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이 돈을 모았는데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이 미르재단에 돈을 냈는데 설립 두 달 만에 486억 원을 모았다'.

TV조선은 7월 27일 '안 수석 말고도 미르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막후 실력자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문화계 황태자로 급부상한 CF 감독 차은택'이라고 보도했으며, 8월 2일에는 '전경련이 중간에 나서 기업 돈을 모아 준 곳은 미르뿐만이 아니었다. K-스포츠 체육재단법인에도 380억 원 넘게 거둬 준 것으로 확인됐다'……

8월 3일 한겨레에 '최민희, 비판하던 종편에 왜 출연하냐고요? 극단적 편파 않고 바뀌고 있다 봤지요'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종편 저격수를 자처했던 최민희가 3개월 전인 5월부터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의 속코너 '맞짱'에 고정 출연한 것과 관련된 인터뷰였다.

가서 잘해도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민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런 극단론에 서서 생각하면 없어져야 할 게 너무 많지요. 제가 종편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제 가족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우리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SNS에서도 반발이 크지 않던데요. 변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20일 1면 기사에서 입소문으로 떠돌던 박근혜의 비선 실세 최순실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낸 한겨레의 특종 보도를 이끈 기자 김의겸은 TV조선 덕분에 특종이 가능하게 됐다고 감사하면서 TV조선도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활약에서 TV조선 뒤를 이은 종편은 JTBC였다. 2016년 9월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여론조사에서 JTBC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조사에서 KBS를 누르고 첫 1위를 기록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는 손석희가 75.8%의 압도적인 지목률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 관련한 반대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 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EBS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오늘의 EBS 1TV·2TV, EBS FM 라디오의 편성표를 읊어 드릴 텐데 EBS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함께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 이사회의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에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과 EBS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방송 3사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

다.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뤄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쉬어 가면서…… 제가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해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오히려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이사 중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세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세 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 직능단체를 꼭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에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 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 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 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 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가 ±9.9%, 20%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측 1명의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가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님들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만 보면요 EBS가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할 수 없고 마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EBS의 편성 프로그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읊어 드리는 이 EBS 편성 프로그램을 보시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BS의 방송채널은 지상파로 지식과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EBS1 TV, 창의융합교육을 담당하는 EBS2 TV 그리고 인문·문화·교양을 담당하는 EBS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오늘이 맞겠군요. EBS1 TV 오늘 편성을 보면, 이미 오전 새벽에 했을 겁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이었다고 합니다—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참고로 저는 EBS 세계테마기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저는 딩동댕 유치원을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딩동댕 유치원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불러 드렸던 프로그램 중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찾았다면 그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EBS1 TV의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아마 아이를 키

우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EBS 프로그램을 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그리고 유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유아 클래스e, 탑골스타 개청이, 최고의 요리비결, 극한직업, EBS 평생학교 1교시, 2교시도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친절한 주치의—혈관 건강이고, 2교시는 난생처음 드럼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이미 지났겠지요, 16시부터 시작했으니까—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마샤와 곰, 도레미 프렌즈 쇼츠,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찾지 못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읊어 드리는 오늘 EBS 편성표를 보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면 같이 함께 찾아 주십시오.

밤 12시에는—오늘밤 12시에 아마 할 겁니다—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와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뭐 EBS 초대석에 국민의힘 인사라고, 민주당 인사라고 달라서 부르겠습니까?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EBS2 TV의 오늘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영어 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요즘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아마 했을 겁니다. 최고의 수학교실 하고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글이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17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 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면 오이 물김치를 좋아하고 민주당 지지자면 두부구이를 좋아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EBS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EBS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고향민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의 한 명입니다.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클래스e, EBS 평생학교, 지식채널e, 생각의 열쇠 천 개의 키워드로 방송을 마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EBS 프로그램 중에 세계테마기행을 좋아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세계테마기행을 보면서 랜선 여행도 했고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렇다면 이 EBS의 세계테마기행을 보고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물론 세계테마기행이 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대통령제인 나라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각제인 나라에 가서도 설명하기도 하겠지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일자리와 그 나라의 국민들은 뭘 먹고사는지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계테마기행이 사회주의 국가를 가서 방영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EBS1 TV, 2TV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EBS FM 라디오 편성표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듣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읊어 주는 EBS FM 라디오를 들으시고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 주십시오.

새벽 5시부터 시작합니다.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뭐 일본어 한다고 친일이고 중국어 한다고 친중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EBS FM 라디오를 읊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EBS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근철의 영어 E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EBS 라디오를 들으며 영어 공부할 때 전혀, 정치적 편향성을 느낀 적은 1도 없습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죽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오후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와 함께 많은 것을 공감했는데 제가 오후에 EBS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도 공감하셨습니다. 지금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늘리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BS의 재정지원 확대, 그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넓히는 것이 EBS가 당면한 과제, 그것이 아마 여야 모두 말하는 EBS의 혁신 방향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PLUS1, 초등·중학생 대상 PLUS2,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 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펭수가 뭐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뭐 뽀로로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오늘 오전에 방청석에 마침 각 지역에서 본회의장을 방청 공개 신청한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이 편성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EBS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단 한 명도 안 계셨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온 교사, 학부모들이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 자이언트 펭수, 뽀로로에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EBS 좀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굳이 방송을 장악해서, 이사진을 확대해서 민주당이 E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BS는요 이전에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던 적은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교양과 문화와 교육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던 방송사입니다. 여기에 왜 구태여 시청자, 미디어 그런 단체들의 이사 수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민주당이 EBS마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EBS까지 끼워서 방송 3법을 개정해야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EBS까지 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와 함께 EBS 교육 프로그램 같이 보셨는데 정치적 편성 있는 프로그램 못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것 다 지난 정권에서 만든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번 정권에서 만든 것 중에, EBS 프로그램 중에 정치적 편향성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EBS 교육…… 해당 의원님께서는 EBS가, EBS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펭수요? 뽀로로요? 전혀 아닌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웃으실 겁니다.

(「EBS요」 하는 의원 있음)

EBS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프로그램 중에……

(「아니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EBS 교육방송 개정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EBS 말하고 있습니다.

EBS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 있습니까?

아, 해당 의원님께서는 펭수와 뽀로로가 민주당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로 알고 계신 겁니까? 안경을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해 보십시오.

EB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왜 바꿉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그러니까 EBS가 언제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된 적 있습니까, 의원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성도……」 하는 의원 있음)

방금 민주당……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다시 EBS 편성표를 읊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EBS 교육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 EBS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오늘 EBS1 TV의 편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왕초보 영어를 시작으로 클래스e, 오늘 내용은 생물학 여행입니다. 그다음은 많은 국민이 좋아하는 한국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아이들이 좋아하는 렙틸리언과 빅 블루,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은 1982년 3월부터 무려 42년 넘게 방송되는 전 국민의 EBS 유치원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문제가 됐더라면 42년 전부터 EBS 교육방송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EBS 딩동댕 유치원이 42년 동안 방송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됐던 적은 제 기억상으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아니, 지금 프로그램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게 편성권 아닙니까?

그다음이 한글용사 아이야,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원숭이 다섯 마리가 주인공인 도레미 프렌즈,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강남대학교 편,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EBS 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EBS 편성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제가 읊어 드리는 EB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있는 방송이 있다면 찾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클래스e 미술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

(장내 소란)

말씀하시지요, 저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인 4시부터 다시 아이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페파 피그……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유감스러우면 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샤와 곰……

(「무슨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하고 싶으시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십시오. 필리버스터의 규칙입니다.

(「얼른 끝낼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명탐정 피트 4, 드래곤 길들이기, EBS 뉴스,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고향민국, 오구오구 내 새끼, PD로그. 아, PD로그는 PD수첩 같은 것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각설이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토론하자고! 무슨 프로그램……」 하는 의원 있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신청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신청했습니다. 발언 좀 끝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면 24시간 종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저는 계속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게 토론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게 토론이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제멋대로 개정하니까 국회법 규정도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군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가족……

(「의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은 저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십시오. 똑같이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있잖아,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의원님입니다. 해당 의원님도 의원님이시지만 저도 의원님이고 지금은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서 제 발언 시간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된 발언을 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평가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간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게 발언하시고 다원주의가 많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그렇지」 하는 의원 있음)

(「윤석열한테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발끈하시지 마시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 한마디 하세요.

(「김건희한테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석열한테 말하고 김건희한테 말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재명 전 대표 비판하십니까?

○부의장 이학영 자,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무슨 비판을 했다고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예, 저는 할 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의원 저도 이재명 대표…… 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 비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것 저 못 봤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김용태 의원 계속해서 EBS 편성표 읊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EBS……

○부의장 이학영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상대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김용태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EBS 편성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

(「아니, 질문을 먼저……」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학영 그냥 들으세요.

○김용태 의원 가족 탄생의 비밀이 있고 EBS가 자랑하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편성됐습니다. 밤 12시에는 EBS 비즈니스 리뷰와 지식채널e 그리고 EBS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극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설명해 주십니다.

EBS2 TV의 오늘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BS2 TV는 공부 방송입니다. 새벽 6시 매일 10분 영어를 시작으로 EBSe 생활영어, 영어 스토리 타임, 왕초보 영어, 매일 10분 영어, 똑똑 문해력 박사 어휘 편, 속담과 관용어 편, 이야기 편이 계속 방송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은 아이들 방학이니까 여름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방송됩니다.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곰끼와 처음 수학,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 여러 편 방송됩니다. 그리고 2시에 최고의 수학교실 하고 공부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를 틀어 줍니다. 이어서 EBS가 자랑하는 뽀롱뽀롱 뽀로로, 핫도그랑 만들어 볼까요, 웃기는 처음 영어, 동그리섬의 버네사, 시몽 위험에 빠진 개구리들, 블록스, 빅 블루가 있고 5시에는 어른들을 위한 방송이 조금 편성됐습니다, 다문화 고부열전과 최고의 요리비결, 오늘은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EBS의 최고의 요리비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다가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록스와 위인극장, 명탐정 피트4, 한글용사 아이야, 시간을 달리는……

(「실망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실망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지구탐사 이야기.

의원님들, EBS 프로그램이 보시기 좀 그러시면 넷플릭스의 돌풍을 한번 보십시오. EBS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넷플릭스의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은 타락한 운동권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보면 돌풍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닮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라디오엔 문제가 없는지 EBS FM 라디오 편성표를 보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 야사시이 초급 일본어, 초급 중국어, 김대균 토익킹,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Start English, Power English,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 1부에서는 각 신문들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뉴욕타임즈 뉴스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윤고은의 EBS 북 카페……

(「정치를 폄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는 것 보니까, 민주당 특정 의원님들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 보니까 이 EBS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아이돌 한국어가 편성됐고 낮 시간에는 재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Easy writing, 귀가 트이는 영어, 입이 트이는 영어, 이브닝 스페셜, Start English, Easy English, Power English, 윤고은의 EBS 북 카페 그리고 밤의 라디오와 다시 음악방송들이 재방송됩니다.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방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EBS 교육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가 EBS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중파 외에 인터넷 채널들이 더 있습니다. 고교 대상 PLUS1, 초등·중학생 대상 PLUS2,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EBSe, 반디 외국어 전문 채널이 있는데 굳이 편성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들 수업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편성에는 없지만 이외에 EBS 대표 프로그램으로 다들 잘 아시는 펭수가 출연하는 자이언트 펭TV가 있고 글로벌 가족 일기, 명의, EBS 스페이스 공감, EBS 초대석,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오늘 읽는 고전, 이희경의 오천만의 생활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EBS의 자랑인 펭수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뽀로로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EBS가 민주당의 방송장악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EBS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EBS 방송강령 전문을 찾아봤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EBS 강령 전문을 같이 들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로 하여금 이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한다.

변모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교육은 취약해지고 학교교육마저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교육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학습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국민 각자로 하여금 문화 시민으로서 슬기와 자긍심을 가지게 하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 나가도록 선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이처럼 EBS는 교육 공영미디어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펭수는 시대를 아울러 웃음을 선사하는 희망 아이콘입니다. 세계테마기행과 한국기행은 한국의 무대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정제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EBS는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 공영 미디어입니다.

EBS 설립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BS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며 미래 교육의 교두보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이면서 유아·어린이·청소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친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EBS가 자신의 사명과 공적 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EBS에 종사하는 PD·작가·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성실히 맡은 임무들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방송 환경에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그리고 SBS와 기타 공중파와 종편, 보도종합채널 등 모든 매체들은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청취자 층이 갈리고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론 방송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EBS에 대해서만큼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호만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BS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EBS를 더 발전시키고 더 질 좋은 프로그램,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드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현재 EBS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EBS의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EBS

가 말하는 독립성은 민주당이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E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질 좋은 방송을 더 잘 만들기 위해 EBS에 TV 수신료를 더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EBS의 정치적 종속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EBS는 독립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 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 제공, 교육·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을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TV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 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 수신료를 꼽습니다.

EBS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민이 내는 2500원의 TV 수신료 중 EBS가 받는 현재 수신료는 고작 3%인 70원입니다. 한전이 받는 위탁징수 수수료 169원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EBS는 교육 전문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의 비중은 전체 재원의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EBS 교재를 팔아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의 편성 중에서 재방송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EBS의 독립성 강화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정쟁에 EBS를 끌어들일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TV 수신료에서 EBS가 받는 몫을 10% 정도로 과감히 올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그런 법안을 만드신다면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EBS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 그것은 애꿎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종속성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BS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공공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지역이나 성별 등의 안배 등 함께 숙의해서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숙의되지 않고 민주당에서 설정한 추천 단체 안으로 간다면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입법에 따른 영향평가 없이 섣부르게 이사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이사추천 단체와 배정 추천 인원수, 즉 이사 5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 4명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6명은 방송단체가 추천 그리고 3명은 교육 관련 단체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명, 이렇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기존 방식, 즉 정부와 국회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9명의 EBS 이사진보다 더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EBS 이사진 추천 자체에서 비례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방송이 국민의 평생교육 및 학생과 어린이의 교양·학습·자아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계의 이사추천 인원 3명이 방송단체의 이사추천 인원 6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교육·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EBS와 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교육부장관 추천 몫 역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몫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EBS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EBS는 교육 당국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영 교육방송의 위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방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면서 교육 당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 혁신 역시 EBS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 공급자와 시청자가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획기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의 부담 없이 EBS 등의 공적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업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직종들이 출연하고 인생 이모작·삼모작이 보편화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BS에 대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심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바일·인터넷·글로벌 OTT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방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방송 환경의 변화를 기술과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BS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 만들었으면 합니다.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과감히 인상하고 교육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시대에 맞게 EBS 방송자산이 지방의 교육자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EBS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그대로 시행돼 EBS에 정치 편향적인 이사진이 꾸려지고 100명의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던 EBS는 한 방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고 부족한 재원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께 교육의 가치와 희망을 주는 EBS만큼은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제안한 이유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

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EBS 방송 편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EBS 프로그램 중 지식채널e, 클래스e, 위대한 수업 등을 보며 새로운 분석과 시각을 얻고는 합니다. 지식채널e 프로그램의 경우 2005년부터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다소 편향된 내용으로 사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관점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보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 준다는 것보다 그 실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나 학생들에게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할 때 역시 그러한 관점과 해석이 연계되어야만 합니다. 관점을 빼고 해석만 전달하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전달하는 것은 월권이고 왜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교육을 할 때 관점과 해석이 같이 있음을 솔직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듯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매체가 사건을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듯,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양 측면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는 정치교육에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어떤 사실들을 선별하여 알려 줄 것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은 어쩌면 환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이런 관점도 저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러한 EBS 경영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경영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의 다양한 구성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이 법안 개정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행위가 국회 불신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아닐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위치에서 이렇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으로 지칭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의 가치는 퇴색된 것을 모자라 혐오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TV만 틀면 싸우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을 통해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정치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비쳐질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오인되고 중요성 또한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교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불신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가를 운영하거나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정치,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가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라면 이는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정치교육은 편향된 인식이 아닌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시민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화와 대화와 타협의 부재, 정치 체제의 불안정 등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가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정치인 지망생 그리고 지금의 현역 정치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양질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또한 정치교육의 역할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개개인이 정보를 분석해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교육은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미국·영국·스웨덴 등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회 교과에서 정치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나 정치교육이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주로 역사·사회·정치 등과 관련된 수업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참여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정당 및 정치재단, 독립적인 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정당은 각각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다양한 재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주로 특정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토론을 촉진하며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 정치 이슈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독교민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기독교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 이해와 개발 협력, 정치교육 등을 촉진합니다. 기독교사회민주당 한스 자이델 재단은 자유주의와 기독교 사회이념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자유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유럽 통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좌파당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민주사회를 지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과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주체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했기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정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가치를 실제로 체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인 7월 16일 독일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위기 감소, 기후위기 문제를 비롯해 교육과 교육방송에 관한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기도 하고 공감대를 느껴서인지 정해진 회의 시간을 넘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히 제시하는 토론의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의원들이 독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그들의 의견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AI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단 사실을 들었을 때는 존중의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들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새삼 체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에서는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 교육학자들이 치열한 토론 끝에 정립한 교육 원칙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계몽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주요한 교육 원칙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는 교실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논쟁적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학생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결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교사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진보적 성향의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등으로 구분된 정치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교사가 논쟁적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때 균형 있는 시선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도 방송 등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미 사회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적인 행위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을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실 사회에서의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교육원칙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동으로 보이텔스바흐 토론교육에 의한 공동체적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세대 간 이념 간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의미처럼 미래지향적 숙의형 토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교육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무제한토론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 원칙을 언급한 것은 미디어의 힘이 극대화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EBS가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강조하는 것처럼 EBS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화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동료·선후배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의 정치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EBS를 통해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고 2000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EBS가 출범했습니다.

교육방송이 없었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종종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고 국민교육헌장과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학교가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같이 교육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EBS가 지금처럼 본연의 정치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1990년 교육방송이 개국했다고 하니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EBS를 보며 공부하고 자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적 협의 없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간 EBS를 통해 정치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나마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국회 무제한토론으로 논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EBS의 교육정신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디 EBS만큼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몇몇 보고서와 김재원 박사의 연구논문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에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정보에 기반해서 정보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이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더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보다 관용적인 시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은 개개인이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편견을 감소하게 합니다. 특히 성별, 세대, 종교, 다문화 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회 핵심 가치인 포괄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포괄적이고 대의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관여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도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대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가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부응하도록 만듭니다.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과 이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실행됩니다. 정치는 권력과 통치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영역이고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육은 지식과 가치를 전달해 개인의 학습과 발전을 돕는 과정이고 개인의 인지, 사고, 도덕적 가치, 기술 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와 교육은 이론적 고찰이나 논의 이상으로 실제 행위와 상호작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정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치와 교육은 서로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공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에서 시민들이 활발한 참여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합니다.

정치교육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능력을 키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학교가 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홍보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치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교육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단지 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갖추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기술과 가치를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교육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 외부에서도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정치재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정치교육에 참여하면 그 범위와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치교육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가주도형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였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교육의 발전 과정에 기인합니다.

1960년대 이전의 정치교육은 한국 전체적인 국가 건설과 민주화 과정을 위한 국가주도의 동원형 국민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통제

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국가주도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정치적인 변동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국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정치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 이념 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교육은 역사적 맥락, 국가의 역할 강조, 정치적인 영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주도형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적 합의 부족이 교육의 일관성을 방해하고 이것이 교육체계와 정책의 지속성,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풍토는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정치 지형, 즉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는 사회·경제·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견해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권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이 그 진영의 사상적 또는 이념적 배경에 따라 이전 정책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정치교육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관성 없는 교육 방향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된다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유로 정치적 사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이는 학생들이 현재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배우거나 논의하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와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그들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자연스레 사회 현안에 대해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되며 이는 학교 내에서 공론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연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전문적인 기관 및 네트워크 부재에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교육은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치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부 정치와 사회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표면적인 개념과 지식 중심이며 실질적이고도 차별화된 정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수가 적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교육을 위한 기관들 사이에 협력도 부족해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정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사나 강사, 교육자에 대한 양성 과정이 부족하며 정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으로 정치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정치교육에서 정치 및 사회적 참여 관련 교육활동과 참여기회가 적은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청년·여성·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치와 사회 참여가 남성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정치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재로 인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활동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장벽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터넷이나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 참여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교육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청년·여성·이주민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및 참여기회가 제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정치교육 이외에도 현실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교육의 탈정치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교육과 교육의 정치화를 구분해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편향된 정치의식이 아닌 좌우, 진보와 보수, 과거와 미래 차원에서 균형된 관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좌를 이야기하더라도 스스로 좌의 관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적 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정치적인 이해와 참여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때문에 매일 일상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EBS를 시청하는 많은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곧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교육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치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편향된 정보 축적으로 정치를 혐오하거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반드시 같기를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기만을 요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리지 못한다. EBS가 정치교육을 통해 남들과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현행안, 개정안에서 교육계의 이사추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는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에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계에서 EBS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 2명의 이사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 대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총 3인의 추천권을 교육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 추천권을 현재 기준의 정치 성향으로 분석해 본다면 기존 안은 보수성향의 한국교총에서 1명의 추천권을 갖고 보수정권의 교육부장관 추천권 1명, 즉 2명의 보수성향의 이사를 교육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관련 단체를 2명의 추천권을 갖게 함으로써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의 추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9명,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8명인 상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이 진보성향이 될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았습니다. 결국 현재 보수성향 2명에서 2 대 1로 진보성향으로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개정안이 정치적 영향력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면 교육부장관의 이사추천권을 그대로 두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추가하는 것이 교육계의 EBS 이사추천권의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계 이사추천에서 정치적 성향이 2 대 2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학회나 방송 분야 직능단체의 추천권 역시 정치적 성향의 균형을 맞추려는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방안을 어느 한쪽의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교육계나 학회, 직능단체에서 진보 측 인사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선거 결과와 전국의 시도교육감협의회 선거의 결과가 같아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추천권을 모두 특정한 정치성향 측에서 행사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체 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배려이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규범이자 불문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에 규정을 두고 법 조문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는 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2018년에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란 책을 읽으면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선동적인 정치가에 의해 부식되어 가고 조금씩 변형되어 종국에는 독재체제로 퇴행하는 현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야가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 둘은 때로 서로를 강화한다. 정치인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제의 규범도 기꺼이 실천하려 든다. 또한 경쟁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정치인은 상대를 권력 경쟁에서 퇴출시키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제 규범의 실천은 스스로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선순환을 이루어 낸다.

그러나 상황은 얼마든지 반대로 흐를 수 있다. 상호 관용의 규범이 허물어질 때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그 결과 정치판에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이 사라진다.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도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치 집단이 서로 간 공존이 불

가능한 이념으로 분열될 때, 특히 구성원끼리 교류가 부족하고 고립이 심해질 때 정상적인 정당 경쟁이 사라지고 적대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상호 관용이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은 자제의 규범까지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는 유혹에 굴복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 상황이 이러한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방송을 구축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풀지 못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한다면 대립의 상황은 더욱 첨예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야 대립의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생존의 중요한 두 번째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 부르는 개념이다.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 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비록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자제는 민주주의보다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저는 비단 방송 4법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온 합의제 운영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87년 민주 헌법 체제 이후 여야 간 숱한 대립 속에서도 이어 온 원칙은 의사결정이나 상임위 구성에서 다수결이 아닌 여야 간 합의의 정치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합의의 정치가 단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는 법안들이 계속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정당 운영과 의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민주당이 87년 민주 헌법 체제의 합의제 관행을 깨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단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상대 당과 협상하는 일은 시간도 걸리고 양보를 하고 절충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더군다나 거대 야당으로서는 매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라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치워 버린 다수당은 의회를 장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장악한 후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행정부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검사들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판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기 일쑤입니다.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제의 규범이 무너질 때 권력 균형도 무너진다. 정당 간 혐오가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의 의지를 압도할 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

가장 먼저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 헌법적 강경

태도가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당은 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그들은 정부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고 투견이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을 깨고 의회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대치를 이어 가는 걸까요? 물론 정부 여당도 사법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제 관행을 깬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정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사법리스크라는 이유로 합의제 관행이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역대 87년 헌법체제 이후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체제 이후 합의제 관행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헌정사에 야당의 초유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우 특이한 이력과 대중에게 파고드는 선전선동의 능력과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사법리스크를 갖는 전 당 대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 3법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되어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항변의 메시지를 드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당도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87년 헌법체제 이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합의제 관행이 왜 깨졌을까에 제가 주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있었는데 왜 유독 지금 합의제 관행이 깨졌을까? 그건 헌정사에 초유의 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가는 곳마다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작심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김두관 후보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습니까?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 깨기 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 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 당원이 모두 개딸입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봉주 후보님, 김병주 후보님,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까?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저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 대표 김두관 후보의 글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역시 많은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심각한 사법리스크를 지니고 있는데 당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그 대안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나 민주당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당에 대한 비판 많이 하십시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바뀌겠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도 차단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가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획일적 사고에 빠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실상 올바른 진보가 가장 경멸해 마지 않는 전체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한국 정치에 등장한 팬덤정치 문화는 민주당에서 개딸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딸과 당 대표는 서로 짬짜미로 힘을 키우면서 당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팬덤 개딸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시원하다고 박수쳐 줍니다. 따라서 개딸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7년 민주헌법 체제의 오랜 관행인 여야 합의의 정치를 헌신짝처럼 차 버리길 원한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 서글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은 실상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좌파진영의 전유물로 만들고자 한 법이기 때문이며 이처럼 법의 취지를 오히려 거스르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 표결 전까지 오게 된 것은 87년 이후에 여야 간 합의제 전통이 깨져 나갔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뜨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김용태 의원의 기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저도 기대 많았는데……

의원님, 넷플릭스의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참고로 넷플릭스 돌풍은 타락한 운동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먹는지 드라마에서 잘 표현된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최근 인기가 되고 있는 드라마이고요. 여기 계신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넷플릭스 돌풍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돌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말이다'. 지금 민주당은 거짓말과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 돌풍을 의원님들, 꼭 보십시오.

(「돌풍 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선출된 대중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청사진 없이도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규범을 허무는 선동적 지도자와 위기를 느낀 기성 정치세력 사이에 고조되는 갈등의 결과로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붕괴의 과정은 대개 말로 시작된다. 대중선동가는 비판자를 적이나 체제 전복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라며 도발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비판자를 적이나 반역자라고 칭한다.

언론인들 또한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공격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물이 테러집단과 연관이 있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독재자는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들은 종종 대중선동가는 그저 말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중선동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말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그리고 불신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들의 적대적인 표현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곤 한다.

위협을 느낀 언론은 정부를 어떻게든 무력화하기 위해 자제와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다. 또한 야당은 공공의 선을 위해 탄핵이나 대규모 시위 혹은 쿠데타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정권을 허물어뜨릴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가족 소유의 기업과 군대는 명령에 따라 수직적으로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양보,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후퇴는 피할 수 없고 승리도 언제나 부분적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리고 비판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아웃사이더들에게, 특히 선동 경향이 강한 독재자들에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견디기 힘든 속박이다. 견제와 균형은 그들에게 멍에와 같다.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인내심 부족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설명이 제발 민주당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은 전 국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똘똘 뭉치면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문자를 돌리고 여론조사에 총집중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탄핵 청원을 주도합니다. 극단적 소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다수의 압박인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리더를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개딸들은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을 수시로 퇴장시키며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법사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다른 정치인도 그대로 하라고 주문하는데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험하게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불행하게도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길입니다. 팬덤, 중우정치, 미디어 편중 및 착시 전략, SNS 폭력, 1인 사당화와 절대화, 사법리스크 부정, 언론 공격, 포퓰리즘, 당의 국가 장악,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좌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더욱 정도를 지켰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EBS가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MBC와 다르게 EBS는 교육 전문 방송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EBS는 풍부한 교양 및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까지 EBS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전문 공영방송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발의하고 병합해 과방위에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병합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안 이유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에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EBS 한국교육방송은 어느 정권이든지 EBS 수능방송과 또 많은 국민들의 교양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방송국입니다. 이런 방송국에 제 기억상,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에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과 종속성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제 기억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신료나 제대로 받으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신료 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장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적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 따라 EBS의 이사회 규모를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학회에서 3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교육계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 온 EBS의 사장은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선 현행법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와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 EBS의 어떠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EBS의 이사진을 현재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그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방송 3사, MBC·KBS·EBS까지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그래서 EBS도 끼워 넣기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KBS, MBC, EBS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KBS와 MBC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나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BS랑은 다릅니다. 지난 21대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일 걸로 추정됩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에는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켜 언론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울뿐이긴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뒤흔들리는 것은 방송사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야당이 바꾸려는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

문화진흥회법은 KBS와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 나쁘게 만들어 공정한 방송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들 간에 끝없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와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수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정치적 극단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포퓰리즘과 극단적 선동에 매혹돼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보여 준 검사 탄핵과 방통위원장 탄핵, 나아가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잘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지금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KBS와 MBC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반드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 쪽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고 힘들지만 양자 간 타협을 통한 절충이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과 역사적 사례를 모두 무시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일방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 방식은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함께 KBS와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현행 9인 또는 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인의 이사진 중 16인을 미디어학회나 시청자위원회, 직능대표 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5명을 제외한 16명이 방송 분야에서 배출되면 오히려 방송 관계자 이익단체에 공영방송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직책에 있습니다. 정당성과 정통성도 오히려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분야가 과잉대표되는 격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방송사 이익단체와 이해관계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늘어난다면 법률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10개가 넘는 방송 분야 직능단체 중 이사진 6명을 추천하는 직능단체 3곳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 5명의 이사진을 추천하는데 직능단체 3곳이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하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는 국민들께서 뽑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과 정통성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 3개 단체가 방송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이 3개의 직능단체를 콕 집어서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직능단체의 구성원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결국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민주노총 출신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6명이나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각에서 KBS와 MBC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연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송을 독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도 겨우 3명을 추천합니다. 결국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노총 출신이 많은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 이사진이 전체의 과반에 가까운 이사진을 추천하고 여기에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방송 개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이 미비합니다.

KBS나 MBC, EBS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에서도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공영방송사인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사회 운영에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명을 다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법 제46조에는 KBS와 11명의 이사를 규정하고 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MBC 방문진 이사진과 EBS 이사진은 9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법안대로 21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회의는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끝없는 다툼만 남을 것입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보여 준 몰지각한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에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과다한 이사진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방송 적자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사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 지역별 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인원수가 산출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공영방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KBS와 MBC·EBS의 사장을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장추천위원회 100명을 구성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민주당 이사들이 장악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어떤 방식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방법은 선거를 통하거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나 국회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민주적 절차, 즉 직접적인 방식이든 간접적인 방식이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대표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대표성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여론조사도 표본수가 100인 조사는 없습니다. 표본수가 100인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9.9%, 20%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못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대표성을 지니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정치적 지향에 따른 인기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도 공영방송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100명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민주당 측 2명, 보수 쪽 1명이 추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가 3명의 추천자 중 자신들 성향의 사장을 선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 전임 정권이 임명한 공영방송의 사장과 경영진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방안은 결국 임기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권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방송 관련 법안 개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BS 방송이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단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에서든 EBS 교육방송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리고 시청자의 교양과 문화와 또 EBS 수능방송 등 가족 교양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해 온 방송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정권이든지 보수정권이든지 해 왔던 교육방송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교육방송공사를 장악하기 위함. 두 번째, KBS와 MBC의 방송법을

바꾸는 데 끼워 넣기로 방송 3사, EBS까지 넣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를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가평군 저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제 본회의장의 첫 발언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에 방송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더 큰 거짓말이다'.

지금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들이 우리의 언론환경을 보다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법안들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거짓말했고 지금은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송 4법에 대한 방송장악 음모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언론중재법을 막았습니다.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더라면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많은 국회 여야 출입기자분들께서, 언론인분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 언론을 탄압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뉴스에 대해서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그 법에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게 되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했더라면 우리 언론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법안은…… 언론중재법을 막았던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를 추천하거나 KBS, MBC를 추천하는데 정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상 정부 여당과 야당은 3 대 2의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구조가 공영방송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법을 포함한 언론 4법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 추천도 아닌 특정 단체와 특정 학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겠다라는 것인데 심지어 그 단체의 국민의 대표성과 국민의 안배, 지역 안배성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방송 4법과 관련된 이사추천안은 민주당 성향의 학회나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주당은 공정한 척하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공영방송의 민주당의 장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 법안이었더라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론 과방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방위원장도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보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문위원도 아니고 과방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마 청문위원들과 관련한 기관에서 판단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법인카드의 문제가 방통위원장의 결격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폭넓게 토론해 봐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의문은 이 지점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당시 기관장이었을 때—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인카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도 똑같은 비난과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입을 다물거나 김혜경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구형과 관련해서는 배 모 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썼던 것은 법인카드고, 이재명 전 대표가 썼던 카드는 무법카드입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대처를,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2대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필리버스터,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21대처럼 진영 간의 정치 대결은 하지 말자며 새로운 인물인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구 주민들께 제 첫 본회의장 발언을 무제한토론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른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을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아마 내일 08시 30분쯤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께서는 저와 같이 이 법안에,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재의결에 부쳐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폐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재의결에 따라서, 헌법과 국회법에는 의결정족수가 3분의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석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의회주의자인데 이 법안이 폐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의회주의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조롱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국민들께 조롱받을 짓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꿈꾸면서 관용과 톨레랑스를 배워 왔습니다. 적어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정말 여야가 교육방송공사의 미래와 교육방송공사의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 방송 4법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87년 헌법체제 이후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관용과 톨레랑스를 무시하고, 설득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통과됐다 부결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 4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나아가서는 13조 현금살포법 등을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왜 민주당은 이렇게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존중되어 왔던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에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또 결국엔 대통령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사법 딜레마·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오랫동안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존재해 왔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존재해 왔었는데 합의제 관행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대와 22대 전반기에 왜 이 87헌법체제의 관행이 깨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87헌법체제 이후에 무엇이 우리 헌정사에 다른 것일까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었고, 관행은 지켜져 왔었고……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정 사상 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87헌법체제의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민주당이었더라면 그런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서 다른 리더를 내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은 정말 많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개딸로부터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가의 학자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우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금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수로 위장한 소수의 팬덤정치 그리고 제멋대로 룰을 해석하는, 나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생각해서 제멋대로 룰을 바꾸고 공정한 운동장의 틀을 바꾸는 것, 절차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위기를 막고 또 관련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4법,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야의 많은 의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오후에, 점심 이후에 전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국회의 장, 국회 본회의장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 학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는 수십 년, 수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 환경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그리고 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탄핵 음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또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속으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추미애)

(21시46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이렇게 늦은 밤까지 국회를 지켜 주시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이종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자로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한 삼부는 국정농단의 저수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제가 2020년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해 2월 뉴스타파의 경찰 내사보고서에 관한 보도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어'라고 시인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입니다. 이후 같은 해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사건은 고발되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 등은 '윤석열 부인 의혹을 수사하라'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9월 25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조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해는 매우 거셌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4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손 떼라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으며 언론은 이때 총장의 비위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압적인 자세나 발언을 크게 부각하면서 영웅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됨으로써 검찰 사유화는 더욱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당시 반부패2부장이던 정 땡땡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사건의 배당을 거부했었고 전국의 윤석열 총장 사단의 검사들은 장관이 지휘권을 남발한다라는 등 그들의 내부망을 이용해 선동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실무자들은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상매매 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분석해 낸 심리 절차의 분석 자료나 한국거래소의 매매분석 등의 기초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그나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퇴임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조작을 시킨 도이치모터스의 대표 권오수, 주포 또는 선수라고 불리던 이정필 그리고 김기현 그리고 블랙펄인베스트의 처남으로서 동 회사의 감사였던 민태균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했고 수사한 데 이어서 2021년 8월 뉴스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권오수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의 종합의견서와 1심 판결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검찰이 조목조목 수사했던 종합의견서입니다. 이것이 1심 판결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1차 작전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건희 씨는 블랙펄 이종호에게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을 했고, 이종호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이 모 씨는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전화로 확인을 해서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었지요.

그리고 2010년 10월 28일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 블랙펄의 이종호의 처남인 민태균 감사가 10월 28일 13시 2분 7초에 김기현에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김건희 씨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 매매가 정확하게 그대로 체결됩니다.

또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이렇게 답합니다, '준비시킬게요'. 그러자 김기현이 22분 후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도하라 하셈'. 딱 7초 만에, 7초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판결문은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블랙펄의 민태균 감사, 이종호 대표 또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에게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 공범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한 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범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1심 판결에 따르면 블랙펄인베스트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서는 당시 토러스증권의 주식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서 관리하며 대표 이종호와 그의 처남 민태균 감사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결국 1차 작전 시기에 사용된 통정매매, 가장매매 392건은 모두 면소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 이후였지요. 그런데 2차 시기에 사용된 130건 중 102건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그중 무려 48건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은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한 것이 아니라 BW, 이른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신종 금융범죄도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데요. 산업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회사채와 250억 원어치 신주를 행사가액 5560원에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도 받았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추후 주가가 5560원 이상으로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받은 뒤 매매해서 차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BW 인수 바로 다음 날 신주인수권 150억 원 규모 269만 7000주를 KB증권에 판매를 했고 또 그날 권오수 전 회장은 7억 5000만 원으로 150억 원 규모의 BW를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권오수가 지불한 7억 5000만 원 중의 5억 원은 김건희 씨의 돈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산업은행은 남은 100억 원 규모 256만 9400주의 신주인수권까지 한양증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인 이승근 씨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250억 원 가치의 신주인수권이 하루아침에 12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그것도 돈을 빌린 채무자한테요. 그러니까 결국 250억 국책은행의 담보가 도로 채무자 측 수중으로 20분의 1의 터무니없는 헐값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낮도깨비 장난입니까?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신주인수권을 매입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51만 주를 1억 원에 구매해 1억 5637만 원에 43만 주를 판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은 5637만 원이었고 남은 7만 주가 2013년~2017년 주가조작 세력이 매도했던 때 같이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약 4억 원의 추가 이익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에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가가 내려가면 3개월마다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행사가액 역시 하향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건을 둘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액이 하향 조정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이 시기 계속 떨어지면서 2012년 12월 20일 행사가액은 최초 가액의 70%인 3892원까지 내려갔고 전환 가능한 주식 수 역시 449만 6400주에서 642만 3400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사이에 약 5629원에 판매되며 110억 원의 수익을 거둡니다. 결국 12억 원에 구매한 신주인수권이 110억 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 수법까지 동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검은 작전세력들은 국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 이 말은 그들 검은 작전세력이 사법리스크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호위무사로 윤 검사를 픽(pick)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습니다. 수사권을 다 가진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금융의 경찰이라 할 금감원을 신속히 장악한 것은 이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하이킥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가조작을 위해 필요했던 금융관계자, 법조관계자, 언론관계자 등의 카르텔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포식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든든한 방패막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언론, 대법원, 사법부 등 주가조작 세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그들은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일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전부를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이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이들의 거짓도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채 해병 사망 사고를 통해 블랙펄 이종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김건희로 연결된 주가조작 세력은 대통령을 움직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언론을 움직이고 주가를 움직여 삼부토건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해 유전은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는 1인 기업에 탐사 분석 의뢰를 하였고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인 가이아나 110억 배럴보다 훨씬 많은 140억 배럴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하는 뻥튀기 호재성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언론에 던진 이슈는 어떤 주식을 움직이고 누가 득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장관을 움직이고 별 3개를 쉽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펄 이종호를 변호하던 변호인은 공수처의 처장대행까지 하는 송창진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변호하던 심태민 검사는 공수처의 검사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의 담당 검사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 수사기관도 가지고 농락하는 이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4법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 편향인 언론환경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소설책도 써 보았고 이를 통해서 또는 방송에 나가 여러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 번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추미애가 옳았다 하시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늦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부터 줄탁동시해 주십시오. 줄탁동시해 주십시오. 한 분 계시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심 있는 의원들의 행동으로 정의가 그나마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양심선언, 옳은 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아부꾼이 득세를 합니다. 국민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판을 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도 위축되어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상식과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의지대로 순치되어서 복종하는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쉽게 인사를 통해서 그런 방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문 걸어 잠그고 문제가 많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EBS의 문제는 방금 전에 젊은 여당 국회의원이 몇 번씩 반복했던 말처럼 EBS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EBS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편성의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권력에 줄 선 아부꾼이 득세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방송의 중립성과 건강성,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몇천 원 초과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은 무려 342건에 8500여만 원의 법카를 유용했습니다. 긁고 또 긁고, 토요일, 일요일도 쉴 새 없이 긁어 대고 고급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귀신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빵을 사고 하는데도 검찰은 뭐 합니까?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누가 정치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은 인사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느 쪽이 정치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입니까, 법으로 고쳐 보고자 하는 야당이겠습니까?

요한 갈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경제·정치 구조가 불평등하면, 공정하지 않다면 구조적 폭력을 만드는 것이고 교묘하게 법률과 언

론을 이용해서 불평등을 감추고 조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폭력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를 가장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부패를 감추고 부패한 기회주의자를 중용하고 보상을 하고 아부꾼을 가까이 두고, 이를 고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 안 따라 한다고 방송사를 징계하고 출입처를 막고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겁박을 하는 이 문화적인 폭력 사태야말로 이 사회가 병이 들어도 한참 든 것입니다.

겨우 야당이 총선에서 민의를 받들어 국회 다수 의석이 돼서 이런 인사 전횡을 입법으로 막아 보자 하는 이 몸부림을 이들은 허무맹랑한 필리버스터로 훼방을 놓고 또 조롱하면서 대통령은 마치 아이들 공깃돌 만지듯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워낙 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의 양심에 따른 소신이 김건희 주가조작 세력들의 수법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관 송 씨는 금융수사 분야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서 친구 황 경위로부터 보고서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황 경위는 몇 년 전 시중에 풍문이 돌던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했던 담당 수사경찰이었습니다. 황 경위는 내사 종료된 그 자료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휴지통에 갈 뻔한 것을 친구가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에 참고하라고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 보던 경찰관 송 씨는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김건희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내역,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19년 7월에 취임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국회의원—지금은 국힘, 여당이 됐지요—들이 의문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이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경찰관 송 씨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라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2013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 자료라는 것을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자신이 직접 다룬 공무상 기밀도 아니었고 도청하거나 훔친, 불법으로 알게 된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사가 종결돼 공부 자료로 활용하려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 검찰총장이라면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정의감과 법감정에서 공익제보를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이 그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고 기어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경찰관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고 담담하게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2022년 4월 법원은 내사가 중지되어 있던 사안에 대해 새로이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일개 경찰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파장과 그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관 송 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중순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윤석열 검찰은 뭘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고발 사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이 지나서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20년 4월 3일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고발 사주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당시 있었던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가짜 뉴스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내용의 엉터리 고발장을 작성해서 윤석열의 지휘를 받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에서 손준성의 친구 검사였던 김웅으로, 또다시 김웅에게서 조성은 씨에게로 차례로 전달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등과 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의 장인수 기자, 주가조작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로 이들이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은 1년이 더 지나서 세상에 드러나 당시의 음흉한 계획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고발장 문건을 최초 전달한 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미래통합당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일단 먼저 기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손준성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고발 사주를 기획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모의와 기획일 것입니다. 뻔뻔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일을 기획할 정도로 윤석열 측이 당시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극구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라는 방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이후 4월 7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과 황희석은 김건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은 아무런 수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월에 교수 등 시민 4만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저는 2020년 10월 19일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사지휘는 캐비닛에 처박혀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노리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휘하의 반부패2부장이 윤석열의 처가가 관련된 수사를 못 맡겠다라고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직속 상관인 검사장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설설 기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물러난 이후 21년 6월 새로운 총장이 취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1년 7월에 금융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되었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가 겨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12월 3일 고발된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김기현 등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도 김건희와 김건희의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인사권자가 있는 청와대에 영장 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혀 움츠러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고 온갖 폼은 다 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권력은 바로 윤석열뿐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20년 10월 수사하라고 지휘한 주가조작 사건은 23년 10월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공범들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블랙펄인베스트 민태균 감사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일부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 씨의 계좌를 활용한 민태균 감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모녀 계좌이니만큼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이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범들의 1심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 지가 3년이나 됐는데 계좌 주인에게는 어찌 됐는지 왜 못 물어보는지? 법과 권력이 과연 누구에게는 염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하다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이 말은 공범의 주가조작 재판에 김건희 모녀 계좌가 이용됐다고 했음에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KBS의 홍사훈 기자가 방송에서 날린 멘트였습니다. 방송인이 보기에도 독재국가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김건희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다가 공범들의 법정에서 하나씩 건져 올려져 나왔습니다. 언론이 비록 잘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재판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집권 7개월 차였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 자진 귀국해 구속된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감사 민태균의 증인 신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한창 수사 중일 때는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 들어온 것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문자메시지로 김기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고 보냈고 증인은 '예, 준비시킬게요'라고 보낸 것 맞나요?", 민 감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11시 44분 문자로 김기현으로부터 '매도하라 하셈' 문자가 온 뒤 딱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정확하게 매도 주문 나왔고 증인 민태균 명의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지요?", 민 감사가 "예"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한 대상자는 누구지요?",

민 감사 “오래된 일이라 저것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블랙펄인베스트의 이 대표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하지요.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점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거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블랙펄의 이 대표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하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 감사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블랙펄 이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추궁합니다.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B인베스트 이 대표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한테 연락해서 권 회장이 김건희한테 연락하라 한 건가요? 블랙펄인베스트 이 대표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한 건가요?”, 민 감사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가 “그렇다면 블랙펄 이 대표,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김건희 이런 연락 구조라는 거지요?”, 다시 민 감사 “예,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검사는 다시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이건 법정 장면입니다. 공판검사가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주를 직접 매도하고도 공범 관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가조작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가 들어 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난 후 증권사 직원이 계좌 주인인 김건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BS 보도였는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됐다’라고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세력의 작전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공범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증권사에 녹음파일이 자동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김 여사의 통정거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음에도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겨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김 여사의 통정거래 녹취록이 있음을 시사할 정도로 검사들도 수사 봉쇄를 당한 것이 답답해서 법정에서나마 이렇게 폭로를 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공판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차례로 마치 검피아, 그러니까 검찰마피아 조직의 내부고발자들처럼 차례대로 폭로성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언론도 입을 꽉 다물고 이를 받아써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1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이렇게 SBS가 김 여사의 통정거래를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음을 단독 보도했을 뿐입니다. SBS도 태영건설 때문에 이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 공모 범행 행각의 흔적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0년 10월 19일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민태균 감사에게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만나고요. 3500원에 자전 10만 개 받을 테니 주식 수배해 달라고 시치미 떼고 던져 볼랍니다’. 여기서 자전거래란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으며 거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도이치모터스 종가 기준 2915원이었는데 3500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10만 주를 매수할 테니 도이치모터스 권 대표에게 10만 주를 내놓을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뒤인 10월 28일 민태균 이사는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작전세력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민태균 감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전달하고 김신명 여사가 실행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입니다.

작전세력이 9만 5000주 매수 주문을 내고 10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10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와서 주가는 3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흘 뒤 11월 1일의 거래가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 만큼 그 나흘 전인 10월 28일의 거래도 같은 대신증권 계좌였고 주문 방식도 똑같이 HTS가 아닌 영업점 단말을 통한 거래였으므로 김 여사가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며칠 후인 11월 4일에는 2차 작전세력의 핵심인 블랙펄인베스트가 김신명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장면 한번 볼까요.

검사, 2010년 11월 4일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시 30분에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증인이 토러스증권 김 지점장에게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 뺏었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블랙펄인베스트의 민태균 감사, ‘예, 문자메시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범들은 다른 고객이 끼어들어 자기들끼리의 작전이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객 주문이 뜸한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12시 8분 8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 모가 5만 주 매도 주문을 내자 45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6만 주 매수 주문을 해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시각 김 모 씨의 남편 백 모 씨 명의로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 28초 뒤 4만 주 매수 주문을 내서 모두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부의 9만 주를 포함해서 모두 10만 주를 사들였고 모두 HTS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민태균 이사는 ‘10만 주 받았음. 5만 주씩 뺏어 왔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부부에게 각 5만 주와 4만 주를 샀지만 모두 10만 주를 다 확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면입니다. 검사 이렇게 신문합니다. ‘증인 또는 블랙펄인베스트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5만 주씩 뺏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증인인 블랙펄 민태균 감사, 이렇게 답합니다. ‘문자메시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블랙펄에서 사용해 매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검사의 추궁에 증인은 뻔뻔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된 김건희에게

안 좋은 것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인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열린 12월 9일 공판에서 검사는 김건희 파일을 들고나오게 됩니다. 뻔뻔하게 부인만 하는 권오수 대표와 민태균 등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파일의 존재를 이미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 시절인 8개월 전 법정에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 방정식을 따른 언론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부부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 기록을 지금 되짚어 보니까 2021년 9월 7일에 검찰이 김건희 파일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하고 김건희 소환을 한 번도 못 해 보고 미적대다가 당선자 시절에 법정에서 최초 공개를 했고. 그런데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범들이 다 부인을 하는 거지요,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12월 9일에 공범들이 하도 부인하니까 공범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반박 자료로 김건희 파일을 꺼냈던 거지요.

윤석열 관련 소송에서는 대다수 언론이 법정 소식을 제대로 취재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법정이 마치 고립된 외딴섬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그 속에서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언론은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행과 가담이 이제 들춰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만 제대로 되었더라도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는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경쟁 후보로부터 1차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당하자 '주가조작 선수 이 모를 증권전문가로 알게 돼서 그에게 위탁관리시켰다가 손실이 나서 회수했고 그 후부터는 내 처가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반박했던 윤석열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인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억 나시지요?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도 2022년 2월 달에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그러나 김건희 엑셀파일이 있고 이종호와 민태균 블랙펄 측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에 드러난 이상 빼박인 것입니다.

블랙펄인베스트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의 인출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건희 계좌를 공범들이 운용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공범 재판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수사팀 일부 검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피했다가 1년 만에 나타난 블랙펄 민태균 감사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서 엑셀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사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프린트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커피와 프린트는 기억이 난다라고 덧붙였지만 검사는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커피 마시고 프린트한 건 기억나느냐?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느냐?' 이렇

게 말했지요.

1심 판결 한번 볼까요.

2023년 2월 9일 판결은 사실은 지연된 정의를 선고한 셈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판사의 판결문, '블랙펄인베스트 직원이 사용했던 PC에 저장되어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해당 계좌의 잔고 및 인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정황들을 종합하면 해당 계좌는 블랙펄 측에서 관리하며 민태균 이사 또는 피고인 이종호 대표가 직접 운용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계좌라고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 부인은 단순히 민간인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고 성역이 될 수가 없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중에는 여기저기 유행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두 모녀를 묘사한 패러디였습니다.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모녀의 물욕이 어떠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도이치모터스를 도이치모녀스로 살짝 바꿨습니다.

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부터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였고 회사 대표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계좌는 불법 통정거래·가장거래에 48건이나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빼고 남은 것 중에서만 48건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가 기소된 공범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검찰조사 한 번 받지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이 판결문에 모두 서른일곱 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어머니 최 씨에 대해서도 판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접거래도 있었고 공범을 통한 시세조종 계좌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스모킹 건을 쥐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장모인 그녀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한 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재판에서 검사는 김 여사의 어머니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로부터 직접 회사 내부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주식을 독자적으로 주문·거래 했다는 그간의 변명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은 2011년 6월 10일 장모 최 씨와 신한증권 직원 사이의 통화였습니다.

최 씨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두어 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아라 그랬어', 직원 '사모님,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최 씨 '오늘도 떨어졌어?', 직원 '아, 아침에 저랑 통화하실 때만 해도 지수 1%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는 해 보셨나요?', 최 씨 '아,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이렇게 최 씨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호재가 있더라도 두어 달 걸린다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알려 준 정보를 가지고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최 씨는 손실을 회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검사는 외국 바이어가 왔다는 최 씨의 정보가 사실인지에 관해 정보를 알려 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이어서 추궁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지요? 도이치모터스에 2011년 6월경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증인은 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 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 최 씨하고는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하는……', 검사 '통화를 자주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상황을 알려 준 것 같은데 어때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저쪽에는 제가 알려 줄 이유는 없는데, 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그때 검사는 녹취록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자주 통화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부인했던 권 회장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한증권 담당자 '아, 저 사모님, 신한투자 과장입니다', 최 씨 '응, 거기서 내 것 그냥 다 팔아. 싹 다 팔아', 신한증권 담당자 '네?', 최 씨 '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신한증권 담당자 '아, 큰일난대요?', 최 씨 '아,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고. 아, 그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 먹어라 하고 내버려둔대', 신한증권 담당자 '그럼 일단 4000원 선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볼게요. 사모님 전화 드릴게요'.

이 통화의 시점은 검사가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녹취록상으로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명백히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 것입니다.

검사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김건희 씨나 어머니 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 주었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1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검사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는 추궁에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공범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조사 제대로 안 합니까?

또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녀지간의 통정거래는 2010년 11월 3일 최 씨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후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던지고 딸이 받는 통정매매였던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최 씨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고 최 씨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나 거래된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도 모녀지간의 시세조종 통정매매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 역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수사받아야 하는데도 최 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사가 2022년 12월 9일 공판에서 민 모 이사를 신문하던 중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때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이 작성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B인베스트 민 모 이사 '대판 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도 엄청 흥분했고요. 김건희는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토러스증권 김 모 지점장 '듣던 대로 XX구먼'. 검사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여 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위 문자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블랙펄 민태균 감사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블랙펄 이종호 대표한테 들은…… 아이 참', 검사 '블랙펄 이 대표 말고는 없지요?', 민태균 감사 '예', 검사 '김이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좌주는 김건희 씨지요?', 민 감사 '예', 검사 '김건희 씨 미래에셋 계좌에서 주식이 팔려나간 상황일 텐데 김건희 씨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고 거기서 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개입을 해서 화를 내는 겁니까?', 민 감사 '김 씨가 자기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권 회장한테 항의를 강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제가 묻는 취지는 왜 권 회장한테 화를 내냐고요. 이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이 블랙펄 또는 토러스증권 김 지점장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권오수 회장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민 감사 '저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날 2011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토러스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1만 4000주가, 그 이틀 전인 1월 10일에도 9만 2000주가, 대량의 장외 매도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러스증권 김기현 지점장이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거래가 각각 종가 기준으로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약 두어 달 전에 7억 5000여만 원에 다량으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약 10억 9000여만 원에 팔았으므로 약 3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46%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판 화를 냈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수익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전세력의 작전 없이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고 계좌 관리를 맡겼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혹일 것입니다. 이것은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공판에 들어온 검사들 중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 씨 모녀에 대한 불리한 정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에 직접 전화로 주문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했던 검사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새해 인사발령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증인신문 했던 검사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해외 파견으로, 한 명은 수도권의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검사들이 주가조작 공범 사건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제 대통령 부인과 장모가 된 김 여사 모녀에게 감히 불리한 과거 범죄 사실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환도, 기소도 못 한 검사로서의 자괴감에서 법정에서나마 사실을 폭로했던 용기를 내 봤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검사들의 용기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진실의 단초를 남겨 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심 주가조작 공범 판결문이 공개되고 난 후 검사 출신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궤변,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한다', 정말 궤변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복현은 주가조작 증거도 없는데 공연히 수사를 착수했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이 오해를 사게 될까 봐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열심히 늘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속하려면 이렇게 궤변을 잘해야 되고 뻔뻔해야 되고 낯이 두꺼워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제가 윤석열의 처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를 내릴 당시의 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범의 주가조작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한 공개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핑계를 댔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해서 매우 뻔뻔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해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총장은 자기 측근이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검사장에게도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은 자신이 들었던 총장으로부터의 막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총장 가족 수사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성윤 검사는 얘기했습니다.

왜 특별검사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기소된 부분은 주가가 오르던 시기였던 2010년 9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8일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던 시기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이 들어가 수상한 거래 흐름이 포착되었고 범죄수익의 저수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없는 것입니다. 재판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했을 뿐인 것이지요.

주가가 내려갈 때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 씨가 신한증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것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해 놓았대' 그녀의 말대로 주가가 실제로 3900원가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녀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 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만 검찰은 보고 기소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통정매매, 가장매매만 보았으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실마리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거대한 범죄 은닉의 저수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외국 차를 사 와서 파는 딜러 회사일 뿐인데 어떻게 국책 과제도 아닌 자동차 판매사업 회사에게 그 회사의 자본금에 버금가는 막대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채 형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권만 따로 분리하여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사채를 제공한 다음날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 중에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돈을 빌린 도이치모터스의 권 대표에게 도로 7억 5000만 원에 매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적정가로는 30억 원 상당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회사 오너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다시 헐값으로 담보물을 넘기는 것입니다.

적정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 용어로는 이론가격라고 합니다. 권 대표는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7억 5000만 원 중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1년 후 신주인수권 51만 주를 김 여사에게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펄 민태균에게도 115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블랙펄 민태균은 이종호와 같다고 보아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51만 주의 적정가가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원에 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작전세력들이 신주인수권에 리픽싱이라고 흔히 말하는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해 주고 주가를 떨어트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한 다음 팔 때에는 막대한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작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보통 회사라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명목으로 산업은행의 돈을 뭉텅이로 빌리고 담보인수권인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도 도로 헐값에 다시 사들이고 하는 것이 작은 삼류회사 사장이었던 권오수

대표 독자적인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혹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조종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의 그 범죄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 또한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특검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여기에 저는 앙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먼지 한 톨까지도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라는 뻔뻔한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의 본체라고 짐작이 되는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수사도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공범들만 앞으로 다가올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전에 얼른 털어야 되기 때문에 황제 조사, 몰래 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경호처 부속건물 안가로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 속에 폭탄이 있을지 모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핸드폰도 반납시키고 신분증도 뺏긴 채로 검사들이 들어가서 수사 쇼만 벌이고 나왔는데 하는 핑계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제 지시를 이제 와서 왜 따릅니까? 그 당시에 따랐으면 진작 이 사건도 끝났을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망국의 사태는 안 벌어졌겠지요.

검찰 수사기록 목록으로 살펴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법무부장관으로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 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에 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경찰관, 양심과 정의감을 따른 경찰관 송 씨가 승진 시험 공부하다가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휴지통에 처박아 놓은 동료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공부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름이 낯익은 이름 김건희였고 그걸 찾아보니까 검찰총장으로 막 취임한 사람의 부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이게 엄청 큰 것이구나' 그때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보고 나서 정의감의 발로로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뉴스타파가 2월 17일,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고 아마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가 막 발발해서 초기 대응하느라고 아마 밀접 접촉 금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에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 보고서 보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인 4월 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사실들에 대해서 최강욱·황희석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고발 사건이 배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9월 16일 아까 형사1부가 난동을 부려요, 수사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는 검찰총장 눈치만 보는 것이지 직속 지휘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치는 하나도 안 보는 것이지요. 일선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접수가 됐고 사유화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사6부로 재배당이 됩니다, 9월에 가서. 무려 5개월이나 지체돼서 형사6부로 다시 재배당이 됩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다시 서명을 받아서 4만여 명이 '공소시효 임박하기 전에 똑바로 좀 수사하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달에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0월 19일 제가 이 수사가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한 전혀 미동

도 안 하겠다 싶어서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 다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부패2부장이 또 검찰총장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배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극상이 빈발하면서 수사는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패싱을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당시에 기억하시지요? 전국 검사 수백 명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남발이라고 하면서 연판장 돌리고 일대 소동을 벌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수사는 일각에서는 제대로 진도가 나갔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심리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됩니다.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징후가 보이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절차. 그걸 심리 절차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주식시장을 감시해 보고 이상 매매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심리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회신을 해 줬다는 것이지요.

2020년 11월 5일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심리 분석 결과 자료를 받아서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1월 5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에 대표에 대해서 1차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9일 매매 분석 의뢰한 것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2월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매매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1월 8일 이상 거래에 대한 2차 분석 결과서를 수사 보고로 보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 일선 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 놓고 난 후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인 1월 28일에 법무부장관이 바뀌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주포, 선수로 알려진 1차 주가조작의 주포 이정필에 대한 진술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는 잠잠해집니다.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4월에 가서 블랙펄 감사 민태균—이종호의 처남이지요—참고인 진술 조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뜸뜸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6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이건 아주 중요한데요—서울중앙지검의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남부에 있었던 금융·증권 범죄 전문 검사인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추가 배치됨으로써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7월에 한문혁과 박기태, 두 전문 검사가 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검사의 치열한 수사 덕분으로 이제 압수수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은 금감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여섯 곳이 넘는 증권사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증권사에 확보된 녹취자료 등도 당시에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들이 활약을 하고 한 달 반쯤 뒤인 8월 말에 가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건희 씨 소환 시기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됨,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씨 소환 가닥을 잡았다, 수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9월 7일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이때

아마 김건희 엑셀 파일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김건희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다라는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난 후에 11월쯤에 권오수 대표가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그러니까 아까 8월에 최초 보도가 나오고 12월 3일, 12월 3일은 권오수 대표를 구속 기소, 공범들을 구속 기소합니다. 그때까지도 김건희는 한 번도 제대로 소환도 조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김건희 유선상 출석 의사 타진, 그런데 김건희 불기소 가능성. 검찰은 최근 김 씨 측에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유선으로 출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김 씨 측은 자진해서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의 소환 통보도 온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한 열흘 뒤에 윤석열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안 나가겠다를 확고하게 밝힌 후에 '검찰이 1년 반 동안 계좌를 전부 열어 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검찰이 1년 반 동안 계좌를 전부 열어 봤습니다. 만약 제 아내의 시세조종 공범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선 때 기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3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를 기소했지만 그때까지도 김건희를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탈 털었다. 혐의가 있다면 기소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몽땅 관훈토론회에서 한 말, 그 후에 대선후보로서 한 말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12월 16일 자, 그러니까 공범들이 12월 3일 기소됐는데 거의 보름이 다 돼 가는 그 무렵에, 한 2주가 지났을 때 그때 김건희 계좌를 관리해 준 신한증권의 이동훈 지점장을 불러서 겨우 1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술조서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하의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이라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모든 검찰조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하였고 언론도 이에 힘을 보태며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윤석열의 처가 수사를 못 맡겠다며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사건 배당을 거부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사의 표명을 한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은 2020년 10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연루 의혹사건 검토를 맡겼으나 SK네트웍스 비자금 의혹 수사 때문에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그러한 검찰 조직 분위기 속에서도 주가조작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이상거래 심리분석 및 매매분석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하는 등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일단 수사의 첫발을 떼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면 그 누가 후임으로 온다 해도 수사를 더디게 할 수는 있어도 쉽게 덮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2021년 6월 6일 후임으로 취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장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21년 12월 3일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지금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권오수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해 놓은 행위에 대한 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고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2024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권오수를 포함하여 공범들을 구속 기소하고 언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자를 조사해 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은 권오수를 구속기소한 2021년 12월 3일까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매수 사실이 확인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소해 놓고 2주 정도 됐을 무렵 한 번 불러서 진술조서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권오수 등을 기소할 당시까지 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기를 한 강진구 기자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 등 김건희 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먼저 조사하고도 2021년 12월 3일 기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검이라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까 봐 의도적으로 신한증권 계좌 담당자들을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저는 일리 있는 수사 회피 수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검찰은 지금도 수사 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권오수 등이 무죄 또는 가벼운 형량이 나오길 기대하고 그 재판 결과를 이유로 영부인을 기소까지 하는 건 좀 그렇다면서 불기소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 선고문이 공개가 되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고발사주로 인해서 역고발을 당한 것이지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사주를 시도했으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뉴스타파의 보도가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 본문에 김건희 이름이 37회나 등장합니다.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판결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작전이 있었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사이에 보면 판결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 이정필의 진술, 김건희와 계좌관리인 사이의 통화 녹취, 신한투자증권 계좌관리인 이 모의 수사기관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 씨는 피고인 이정필에게 위 계좌에 관하여 신한투자증권에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위탁했고 피고인 이정필로부터 주문을 받은 신한투자증권 지점장 이 모가 김건희에게 별도로 전화 확인을 취하여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9일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행해졌다' 이런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또한 뉴스타파는 1월 26일 2차 작전세력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에 김건희 여사가 이를 충실히 이행한 듯한 정황도 보도했는데 이것도 판결문에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계좌 주인 김건희 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피고인 권오수의 지인이다'. 중략하고,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에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에 10만 주 매도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중략, "한편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 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초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초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된다". 중략, '거래일수나 회수가 많지는 않으나 해당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김건희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같은 가격에 매수하는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되고 민태균이 피고인 김기현에게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5만 주씩 뺏었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되고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9월 15일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보도한 김건희 파일의 존재와 그 의미 역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판결을 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차 작전 이후의 주가조작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의 행태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통정·가장 매매고 하나는 현실거래입니다. 이 가운데서 통정·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서로 짜고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를 올리거나 세력들 사이에 물량을 배분하거나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현실거래는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의도가 주가를 조종하는 데 있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거래 방법으로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정·가장 매매는 주가조작 세력끼리 사고판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현실거래보다는 적발 건수가 적고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면 통정·가장 매매는 522건에 불과한 반면 현실거래는 7282건에 이릅니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입니다.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은 면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입니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입니다. 그런데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인 것입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47%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손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하여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 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되었을 뿐'…… 중략, '큰손 투자자 혹은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손 씨 및 관련자들의 계좌 이용 거래를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살아남은 손 씨 및 관련자들의 통정 및 가장 매매는 0건입니다. 그러니까 손 씨의 경우는 현실거래 수법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모두 5개의 계좌로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순매수 액수는 40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1개는 1차 작전 시기에 이용했던 계좌이고 나머지 4개의 계좌 가운데 재판부는 3개의 계좌가 2차 작전 기간 중에 실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통정·가장 매매 가운데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것은 48건입니다.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진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당시 다른 우량주 종목에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당시 대부분의 투자가 도이치모터스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투자 양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한 결과 1억 9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75억 원어치나 매수했으나 이익을 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투자 결과 2011년 1월 말까지만 계산해도 10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역시 손 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이렇게 손 모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례를 들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최근에, 9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인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손 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전주 손 씨를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봤기 때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전주 손 씨가 방조 혐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소장 변경에 추가한 것입니다.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본 전주 손 씨와는 달리 막대한 이익을 본 김건희 씨, 오히려 특정 종목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소한 손 씨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손 씨처럼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괜히 손 씨 예를 들었다가 지금 함께 법리적으로 끌려가게 생겼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김 여사 측이 다급해서 안가로 검사를 소환하고 출장조사 쇼를 벌였다 하는 것이 제기되는 의문인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은 우연히도 승진 공부를 하자고 휴지통에 버려진 자료를 보게 된, 수사기록을 보게 된 어느 경찰관의 정의감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종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블랙펄의 대표 이종호.

주가조작을 하는 주포들, 선수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펄을 일으킨다. 진주를 일으킨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 곡선을 치를 때를 연상해 보면 진주가 커 나가듯이 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블랙펄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선수 같은, 어둠의 세계의 선수 같은 냄새가 풍기는 것이지요. 그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 검은 진주 블랙펄 이종호 대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아침인가요? 아, 오늘 아침이군요, 아직 4분 전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호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이종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시세조종, 기타 전체적인 주가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종호가 권오수 및 그 주변 지인들로부터 주가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거나 도이치모터스 관련 정보를 취득해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서 시세조종 행위를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포, 선수 이정필, 1차 주가조작 시기 이정필이었고 2차 주가조작 시기 김기현에 이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다' 1심 판사가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에게…… 김규현 변호사가 본 카톡 문자 기억하시는 것 있지요? '삼부 체크하고'.

여태까지 검은 세력들, 주가조작 세력들이 해 먹었던 방식은 고전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른바 M&A 방식, 기업 사냥 방식인데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피아, 검찰 마피아, 돈 냄새를 쫓아다니는 세력, 검찰 내의 세력들을 검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있는 데를 하이에나처럼 냄새 맡아서 쑤시고 들어가서 빨대 꽂아서 한탕 해 먹는 그들을 검피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피아 방식, 해 먹던 방식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범죄의 온상이 된 남부에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대신 금융조사1부·2부를 두어서 따로 수사를 맡겼습니다. 왜 해체했느냐? 범죄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관 변호사, 그 업계에서는 재벌 변호사…… 변호사도 재벌이 있습니다.

(7월29일 24시 경과)

재벌 변호사 박 땡땡 그리고 증권사 대표 유 땡땡 이들은 기업사냥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굴리고 만들었습니다. 돈을 빼먹은 겁니다.

저축은행 상상인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M&A를 통해서 기업사냥에 나섰습니다. 매집한 사냥감이 된 회사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흘려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 치우는 수법,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 치우고 먹튀 하는 걸 그들은 '엑시트(Exit)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 기업을 사냥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너진 기업으로는 유명한 도자기 회사 행남자기 이런 건실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이것을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부장검사가 누구였냐 하면 유명한,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국회의장 출신 기억 나시지요? 그분의 사위가 그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른바 스폰서 동창생 사건이라고 해서 동창생 하나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데요. 감옥에 가 있는 동창생 뒤를 봐주고,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무마시키려면 돈이 들겠지요. 무마시키는 비용을 박 땡땡 변호사가 돈을 대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땡땡 변호사의 주가조작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나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거지요. 코가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범죄 카르텔이니까 해체되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이후에 일어난 라임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당시의 여권이 연루돼 있어서 이를 회피하고자 제가, 수사 회피하고자 제가 일부러 해체한 것이다라는 허위 날조를 언론에 뿌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업사냥 방식으로 멀쩡한 기업을 만약에 어떤 저축은행에서 투자를 한다, 저축은행 돈이,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호재겠지요. 그러면 주가가 막 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업을 먹으려고 포식자로서 삼키는 과정인데요 잘 모르는 개미들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고점에서 팔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회사 자금을, 담보를 잡히고 또 은행 대출을 받고 횡령을 하고 부도를 내고 고사를 시켜요. 기업이 고사되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를 이 포식자들이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땡땡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해 봤자 무죄로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이 박 땡땡, 겨우 대주주로서 신고의무 불이행했다라는 그 껍데기 형식적인 판결만 받고 나머지 거의 무죄가 돼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가 돼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체도 일반인이 잘 모르는…… '아,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구나.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그냥 고전적인 기업사냥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금융기술이 붙었어요.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으로 이제 저축은행 정도가 아니고 시중은행, 더군다나 국책은행까지 끌어들여서 수백억 자기 자본력을 넘는 돈을 끌어다가 나중에는…… 저런 은행은 적당히 저리의 이자만 맞춰서 회계만 잘 처리해 놓으면 은행이 알아서 해결할 것 아닙니까. 신주인수를 가지고 어떻게 저수지로 돈을 빼먹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인 겁니다. 이런 신종 기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들이 해먹는 수법이 진화해 왔는지를 차이점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들어 본 이름일 겁니다. 라임 들어 보셨지요? 옵티머스 들어 보셨고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 체크하고'의 삼부까지, 이자 3부가 아니고요. 삼부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라임의 경우에는 그냥 작전세력들이, 자산운용사가…… 모태펀드가 이미 망했는데, 미국계 모태펀드인데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대중들을 속여 가지고 해 먹은 거예요. 그냥 작전세력이 해 먹은 겁니다. 이것은 빠져나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냥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모피아 출신이 뒤에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로, 로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관 출신 검사들이 나중에 법률 문제를 고액 수임료를 받고 방어를 해 주겠지요. 라임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수법으로 해먹었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옵티머스는 작전세력이라기보다는 모피아가 포식자인 겁니다. 제일 상위 포식자가 모피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통 관료들이 옵티머스를 들어먹은 거지요. 이때 검사 출신 전관들 검피아는 조력자였습니다. 모피아 포식자 아래 검피아 조력자가 이 옵티머스를 들어먹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도이치모터스는 작전세력이 붙었고 그리고 검피아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한 산업은행을 통한 신종 금융기법을 여기에 입혀서 많이 해 먹은 거지요.

그런데 '삼부 체크하고'에 나오는 삼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도이치모터스까지는 작전세력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요. 전주로 또는 주포나 선수를 고용해 가지고 대가를 주면서 말로 뛰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후를 봐주는 검피아가 조력자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신종 금융기술이 등장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또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해 먹는 것인데, 저는 '삼부 체크하고'를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종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에 가 있는데…… 이종호와 김규현의 관계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사였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컨트롤타워였다고 법원이 본 이종호를 구속 기소한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 밑에 일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규현을 영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종호가,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 박기태로부터 구속 수사당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심에서 빠져나간 이종호가 그 밑에 있었던 검사 이규현을 영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부를 결혼시켰다'. 보통 이 부부는,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라마다르네상스 회장이자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회장이 결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김건희 씨는 '스님 무정이 소개했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종호는 삼부의 전 회장 조남욱하고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종호에게 돌아가면 이종호는 김규현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으로 돈을 버냐? 언제 돈 버냐?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식으로, BW나 CB 같은 걸로 내가 너 돈 벌게 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부 체크하고'에서도 저는 도이치모터스가 해 먹었던 수법이 여기에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중에는 여사와의 관계를 비활성 상태로 두었다가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에 여사가 잘 수사도 안 받고 빠져나간 후에는 저는 이들 사이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의 휴대폰이 하루에도 두 번이나 바뀌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단위가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부 체크하고'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고 이들 포식자가 노리는 것이 기업사냥이 아니라 국가사냥이구나 하는 것에 저는 전율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규현 변호사를 공격함으로써 이것을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으로 제보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최초의 도이치모터스 공익제보자 경찰관 송 씨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하게도 증권범죄 전문 검사 한문혁·박기태 밑에서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해병대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종호가 눈여겨봤던 것이겠지요, 김규현을.

그리고 저는 앞서 '이들 부부를 우리가 결혼시켰다'라고, 주가조작 세력들로서 주가조작 하다가 들통나면 사법리스크를 해결해 줄 검사로 윤석열을 찍어서 영입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시켰던 것처럼 이때 영입한 것이 저는 김규현 변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말대로 나도 금 방석에 올라앉는 것 아니야? 이들과의 인연도 인연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송 씨가 정의와 양심에 따랐다고 하는 것처럼 해병대 선배 박정훈 대령의 법을 지키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그 노력을 지켜보다가 결국 돈보다 정의와 양심에 따른 김규현에 대해서 제보 조작이라고 공격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제 발언을 들어 보시고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 검찰이 손준성 검사를 시켜서 고발 사주 조작을 하고 김웅 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법정에 나가서 판사에게 혼찌검이 나면서도 그때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머리 나쁜 척하는 것처럼 역시 상대방에게 둘러대고 뒤집어씌우는 프레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훈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김규현 변호사의 양심과 정의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종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기업사냥을 넘어서서 국가사냥을 기획하고 있고 또 이 삼부를 통해서 앞서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쟁 특수까지 호재로 엮어서 주식을 뻥튀기하는,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건이 결혼 전 또는 대통령 되기 전 일로서 무관하다 하는 것에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수사가 되어야 하고 국가를 이들로부터 찾고 국가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문화적 폭력의 선두에 설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추적하는 언론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두 번 다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단결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주 비상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범죄를 배웠습니다. 배운 범죄 수법을 가지고 개인 이득을 취하고 국가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것, 흔히들 연성 쿠데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법치를 가장하고 법 기술을 부려서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권재민에 복무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의지대로 수렴되어서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권력자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탐욕적인 데 빠져서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도 망가지고 평화도 망가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세력을 등에 업은 한 부부에 의해서 국가권력이 난도질당하고 있고 끝도 없는 그들의 탐욕에 나라가 통째로 망가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그 기법대로 그 매개가 된 삼부를 통하여 국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다시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추미애 의원님, 밤늦게 큰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정성국)

(00시26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정성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늦게, 밤늦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박 6일 차 아주 힘들게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다른 당 의원님들이 토론할 때도 가급적 잘 앉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국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

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6년간 선생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2022년 6월에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라고 그러지요—교총 회장에 직선으로 당선이 되어서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가 회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에 한 번 낙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재도전을 해서 교총 회장이 되었는데 교총 회장이 되고 나서 이제 최대 교원단체장으로 지내다가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제가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찌 보면 당을 떠나서 다 저보다는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초선들이 계시지만 또 재선, 삼선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5박 6일 동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또 각자의 위치를 떠나서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6학년 1학기, 지금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좀 색다르지요? 야, 초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국회의원이 펼치니까…… 낮에만 하더라도 지금 저쪽에 학생들이 앉아서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밤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없고 그래도 저는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회의원님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그림 보시면…… 자꾸 넘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면 넘겨 주세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돼 있는 걸 한번 저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국회가 과연 지금 그런 모습인가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의장님께도 제가 같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의장님 계시는 복도에서 두 번이나 제가 시위를 주도했던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소리는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퇴하라'. 이 초선 의원이 의장님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고함을 치고 했던, 두 번이나 복도에서 제가 앞에서 시위를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돌이켜 보면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의장님께서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렇게 노력하셨는지를 저는 후배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는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4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어제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우리 따면서 제가 어젯밤 12시 이 시간 정도에 결승전이 있었는데 우리 양궁대표 여자 선수 3명이 중국 선수들을 마지막 세트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그런지 그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혹시나 금메달을 못 따나 싶어서 가슴을 졸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삶이 팍팍할 때 그 올림픽을 보면서 그 금메달의 감동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고 이런 이 무더운 여름에 안 좋은 일도 많지만 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우리 젊은 선수들의 노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올림픽 10연패라는 영광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증오를 주고……

정말 지금 책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요즘 너무 법대로, 법대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대로, 법대로. 여기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밑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든지 학급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만드는 일, 지역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모두 정치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정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니까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탰습니까? 안 보탰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읽어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저 정성국 생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왕이나 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관계없이—여기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법대로 해결하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까?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하면 다 된다는 말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례, 국회에서 왜 관례가 생겼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한데, 이 늦은 시간에. 정성국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잘 들어 봐 주고 계신데……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법대로만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겠어요? 법대로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의 규범, 관례나 이런 것들 또는 대화와 타협, 존중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국회법 몇 조, 가져와 보세요’ ‘국회법 몇 조, 뭐 틀렸습니까?’ ‘국회법 몇 조, 나는 위원장으로서 법대로 하겠다’……

오늘 이후에라도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책에 법대로 해결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동료 의원을 향한 조롱, 비방, 혐오, 특히 조롱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롱 섞인 말들 이것 친구끼리도 조롱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학생이 조롱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훈육하지 않습니까?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가서도 방송에 나가서도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이 모습을 희화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지금 우리 22대 국회 안에 퍼져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지낼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님이나 국민의힘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의 국회의원

으로서 절대 다 잘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 있습니다. 다만 국회 안에서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들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로 보면 우리도 45%를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그런 제도적 부분 때문에 192 대 108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가 나왔지만 사실 그 192 대 108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담은 것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렇다면 192대 108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한 30~35%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제도에 의해서 저희는 108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192석이라는 그 숫자의 놀음에서 절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없이 존중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대로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의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모습이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시고 중재를 하시는 노력을 해 오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 왔으면 의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제안을 하시고 고뇌하시고 내놓으신 제안이라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노란봉투법, 민생지원 특별법 올라와 있는데 방송 4법이라는 그 하나를 중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다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막말이나 이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우리 제자들이 자고 있겠지만 요즘은 다 저에게…… 부산에 저의 제자만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그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으로 꼭 이 모습을 본다는 말이지요.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정성국 선생님……’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제가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주의.

읽어 보겠습니다.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내용 중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잘 나타낸 말이다. ‘국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고……

○의장 우원식 정성국 의원님!

○정성국 의원 예.

○의장 우원식 토론 주제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정성국 의원 아니요. 뒤에 합니다, 의장님.

○의장 우원식 그래도 좀 맞춰서 해야지……

○정성국 의원 이게……

○의장 우원식 지금 민주주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국 의원 쭉 가다가 토론, EBS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하시면, 의장님……

○의장 우원식 가급적 이렇게 토론 주제에 맞춰서 하십시오.

○정성국 의원 그래도 좀 서론을 펼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 30분도 안 된 겁니다.

○의장 우원식 서론이 굉장히 길어서……

○정성국 의원 내용 안 좋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아니, 필리버스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장 우원식 토론 주제 안에서……

○정성국 의원 토론 주제 안에 들어가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니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장 우원식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거지 주제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정성국 의원 아니, 의장님 어제……

○의장 우원식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서 하십시오.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다 벗어나게 하는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교육하신 분이 교육 좀 하고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의원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는 의원 있음)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문제라고요? 죄송한데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국민에 의한’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며 ‘국민을 위한’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다. 즉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정 집단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고로, 특정 집단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특정 집단만 바라보니까 막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로남불이 나오는 것이지요. 조롱이 나오는 것이고요. 상대 의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것에 열광하는 특정 집단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가 보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교과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요 '모두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랑말 두 마리가 하나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검은 조랑말은 물을 먹고 싶었고 흰 조랑말은 풀을 먹고 싶었습니다. 욕구가 다릅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발견한 두 조랑말은 달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목에 매인 줄은 팽팽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조랑말은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거지요. 대화와 타협, 조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끝엔 어떻습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제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는 쪽에서 법률을, 법안을 합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재의요구해서 부결시키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조정하는 역할이 없으니까.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 당신들은 뭐 잘한 거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과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을 푸는 첫 단추는 우리 소수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한 번씩 반응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이 시간에 잠도 깨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렸습니다.

(「다음에 대통령님도 반응해 주시면 그게 정말 타협과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국회에서는 그러면 저희들하고 대화와 타협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화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법대로 하자고 그러셨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대통령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그럼 대통령님 앞에 가 가지고 민주당하고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한테 이 책에 잘못된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책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책을 꼭 대통령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강의는 잘하고 있다, 그렇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노종면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같이 풀어 갑시다, 앞으로.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조랑말 이야기처럼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사회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 관용과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보더라도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보면서 그랬거든요. 무조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부터 좀 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조롱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하고 친하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하시고 있는 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도 사람이 또 모르지요. 그렇지요? 주변에서 또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보더라도 가슴이 아픕니다. 다 국회의원으로 뽑혀 가지고 지역에서 대표로 그 험난한 선거를 뚫고 올라오신 분들, 어찌 보면 가문의 영광이고 또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도 있고 하신 분들인데 그 국민들이 다 보는 TV 앞에서 조롱당하고 마이크가 꺼지고 퇴장시킨다고 협박을 당하고…… 어찌 보면 정말 왕이 신하를 다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선을 넘는 그런 모습 보일 때 한 명의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모습 안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보와 타협, 관용과 비판적 태도. 그래서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다 하라는 말은 여기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4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많지 않습니다, 의장님. 초등학교 교과서가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48페이지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따져 본 후에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다. 여기 이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정합니다. 나왔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 온 것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가정하고’라는 말은 확실한 전제를 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전제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지요.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 지금 EBS 교육방송법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EBS 교육방송법은요 MBC하고 KBS 지배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개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교총 회장 출신이고 학교 선생님을 26년을 한 사람이 EBS를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EBS만큼은 이 논의에서 빼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하셨고 이랬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봤을 것 같아요. 뭔가 밀어붙이고 우리 표현으로 힘자랑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선을 지키는구나. 왜? EBS 방송법은 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정치적 편향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프로그램 저도 출력을 해 왔는데요 EBS TV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펭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죽 보면, 저 자주 봅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들어가는 것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EBS에서 정치기자들이라든지 패널들 불러 가지고 '강펀치' 이런 것처럼, '강적들' 이런 것처럼 하는 것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EBS 뉴스가 KBS 뉴스나 MBC 뉴스처럼 그런 방송을 합니까? EBS 뉴스 저도 인터뷰 많이 나가거든요. EBS 뉴스는요 딱 교육 문제 아니면요 거의 보도 안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리 의원님, EBS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지배구조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왜 EBS가 여기 끼어들어 갔을까…… 교육은 사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법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EBS가요 교육방송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공감하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것 별로 크게 이의 안 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BS 방송법이라도 바로 의결하지 마시고 이것 빼서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이 더 있을 겁니다.

EBS 방송법은요, 잘 몰라서 지금 EBS를 자꾸 그러시는데 EBS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EBS를, EBS 지배구조,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전혀 없는데 왜 MBS, KBS처럼 저렇게 생각하나? 같이 논의도 없이 끼워 넣어 갖고 저렇게 방송4법이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요.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칙 제가 다시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보면 예시가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끼리 토의를 하네요. 모둠별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모둠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여학생이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를 하자고 해요, 용돈을 모으자고. 그러니까 '찬성' '찬성' '찬성' 막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짝 뭐라냐면 '나는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은 어때?' 하니까 '4명 중에 3명이 지금 용돈 모으는 데 찬성했으니까 너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해'.

자,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아니, 다수결에서 돈을 모으면 좋다고 해서 모으지만 단돈 몇백 원

을 가져올 수 없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가 나는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에 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벗이 되어 드리겠다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싶다는데 '다수결에서 결정됐으니 따라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 교과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 원칙을 따를 때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다수결이 항상 옳다는 것,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이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192석이라는, 171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이지요. 그렇지요? 범야권 192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조건이 20석이지 않습니까? 왜 20석을 교섭단체로 인정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만약 20석이 넘는, 조국혁신당이 20석이 넘었다면 원내대표 3명이 만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하고 함께 3명이 지금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왜 20석밖에 안 되는데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줬을까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20석밖에 안 되지만 같이 대등하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수 있고 의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존중의 정신이고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108석이라는 의석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힘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지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가졌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때는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셨지만 나중에 결국은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법제사법위원장도 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이번에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법대로 하라는 것은 교과서에 없거든요. 타협과 대화, 존중 그게 바로…… 그래서 관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례가 계속 지켜졌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시더라도 최소한 숙의 과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광석화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49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을까?' 해 가지고,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소크라테스 이야기거든요.

제일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 볼게요.

‘따라서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정신으로만 돌아가더라도 우리 국회가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저부터, 300명 중의 1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 300명 중의 1명인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실은 고함도 치고 합니다,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먼저 고함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중에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러면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리를 크게 치는 것은 사실 저도 하는데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제가 죽 살펴보니까……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오늘 마지막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경이면 또 의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 앞으로 4년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같이 한번 마지막에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맞춰서 가 보자. 극단적인 정치를 좀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보자.

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이 뽑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잘못하면요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집니다.

지금 국민께서 선택하셨으니 비판은 하시되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학생들이 반장을 하나 뽑아도 그 반장이 잘 못 한다고 반장을 물러나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하면서 학급의 반장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그 반장 중에 영 마음에 안 드는 반장도 있어요. 학생들도 좀 뽑았을 때 막, 뽑을 때와 다르게 하는 것 보니까 반장답지 않고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너 반장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투표로 뽑았고 또 비난할 때는 비난하더라도 일단 내가 인정을 했으니 이 1년은 보장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5년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비판하시고 싸워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탄핵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넘어가서, 파워포인트를 60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세요.

국회가 나오니까, 교과서에 국회가 어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회는 어떻게 나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보이지요?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 정말 교과서 보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 이것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건데도 얼마나 설명이 잘 돼 있는지.

국회가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다른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다, 정확하지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화와 타협, 조정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있지만 항상 다수결이 옳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법을 만드는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게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우리 국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예산안의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내용들도 다 나와 있고요. 정부가 나라의 살림으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마련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나와 있지요, 옆에 보면? 또한 국회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한다. 이를 위해 매년 국정감사를 하여 공무원에게 나랏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정부가 잘못한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요구한다.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65쪽은 꼭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65쪽. 조금 넘어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우리 교과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65쪽 보이지요?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님들 다 배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지요?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를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이것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애들아, 우리 삼권분립 나라지?’, ‘예, 선생님 맞아요’, ‘뭐가 있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지? 그게 정부, 국회, 법원이야. 그렇지?’. 헌법재판소는 좀 다루기는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이제는 같이 하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인데 보면 왜 대통령이 늘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고 항상 대통령이 자주 나오고 뭔가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것같이 느껴질까, 왜 그렇지? 아니, 삼권분립이면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장님도 계시고 대법원장님도 계시는데 왜 대통령이 항상 보면 절대적으로 자주 나오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님에게 한 가지를 더 드렸어. 정부를 이끄는 책임자와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야,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가원수라는 단어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한번 헌법을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한다. 헌법에 국가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즉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지금 운영위원장이시지요?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첫인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통령을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하나인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다, 어떻게 보면 얼굴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즉 탄핵이라는 말을 남발한다든지 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 왜? 싫든 좋든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또 검증되지 않은 이런 비난들은 자제해 달라 이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무슨 일이 하나만 생기면 탄핵한다, 탄핵한다, 탄핵한다 이런 말을 하시니…… 도대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요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일이고 또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밥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제가 이것 볼 때……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니까 확실히 내용이 좀 많아지지요.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요즘 계속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지금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지도 않은 분에게, 벌써 업무를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시니…… 그리고 앞에 탄핵을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직무를 집행한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업무를.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요건도 약해요.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국정조사·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조사·감사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을 그렇게…… 아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고 수행한 기간도 없고 수행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 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은 말이 좀 탁 들어갔는데 이재명 전 대표 조사하던 검사들 네 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법사위 조사 예정인데 이것 하신 분들, 굉장히 역풍 많이 맞고 있었잖아요. 검사가 과하게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심증인 것이지 사실로 확인된 건 없잖아요. 없고.

또 지금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 네 분에 대한 탄핵을 할 때도 검사는 검사로서의 조사·검사를 한, 그 작위를 한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을 잘못이 있는 사람이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걸 자꾸 주장하시고 추진하실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또 자랑스러운 삼법체제, 사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법원에 가서 맡기면 되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재명 전 대표께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이렇게 왔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와 가지고 여기서 구속해야 된다고 막 하시고 했지만 불구속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저게 왜 불구속이야?' 하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불구속을 내렸어요. 판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 하면 위증교사만큼은 소명이 된다 할 때 '대한민국 역시 살아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사법은 살아 있다. 왜? 그렇게 체포동의안 했지만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사법체계 감사드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사법체계 감사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보수나 국민이 봤을 때는 왜 저게 구속이 안 되나 하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된다 할 때 또 그걸 하나 잡아요, '마지막 뭐가 남아 있구나'.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법, 우리는 삼권분립제도 아닙니까? 법원에 맡겨야 되는 부분을 입법부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라고. 그래서 지금도 책에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서에 법원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은 무슨 일을 할까' 나오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에 맞거든요.

법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할 일은 법원에 맡기자는 겁니다, 자신 있게. 지금 10월 되면 1심 나온다고 하는 게 2개인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결정 나면 우리 국민의힘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했나'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숙한 사법체계가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재판을 하는 곳이다'. 재판을 하는 곳에서 재판하면 되잖아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으면 재판에서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법원은 재판을 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한다'. 이 법원의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2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다 돼 갑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제가 드린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나 법원이 정치만 잘하면요 이 시스템이 결코 잘못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고 삶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우리는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72페이지의 5, ‘권력분립이란 무엇일까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3개가 분립돼 있단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73쪽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요. 국회, 정부, 법원 해 가지고 상호 견제하는 그림,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그렇지요? 또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견제하잖아요. 거부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짚고 이제 이 교과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통령, 돼 있지요.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를 교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교과서에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요, 노종면 의원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뉘앙스는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예?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법률이 권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행사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행사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법률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로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 출발이 어디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둘 다 잘못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 결론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도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도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리한 법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대통

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걸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우리는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 국민을 바라봐야 되겠지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데일리안 인터뷰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지금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활동하시는 게 어떤 소감이냐고 물어보길래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국회의장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을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하고 합의 한번 해 보자, 우리 의논해 보자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 달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수용해 볼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우리도 한번 이것은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맞지 않지만 많이 합의가 됐고 또 많이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시기보다는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런 역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 그런 숨쉴 구멍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저희 국민의힘의 일정 부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섞이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이것은…… 그때도 거부권이 올 수는 있지만 그 횟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좀 상생이 되는 것이고 또 국회가 좀 풀리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나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국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저도 아까 의원님 말씀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권이 무력화된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입법권이 무력화. 지금도 보십시오. 5박 6일 동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서로 잠 못 자 가시면서 앉아서 계시는데 대통령님이 거부권 한 번 딱 행사하면, 이것은 또 재의요구권 와서 부결되면 그냥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서로가 이제 한발씩 물러날 때가 되었다.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을 지금이라도 받아서 다 세우고 의결하시지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세워 주시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송법부터 한번 보십시오. 방송 4법이 폐기됐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실 우리 이것 의논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내일 부결시키시더라도 앞으로 또 줄줄이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도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채 상병 특검법도 또 올린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 살리시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도 보면,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도 그걸 또 사인으로 의결하겠다고 지금 도마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악순환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도 1명의 의원이지만, 노종면 의원님 1명의 의원이지만 저도 그 1명의 의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을 한번……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마음을 열 용의가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살려야지요.)

(「법을 다 통과시키면서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게 막 이렇게 안 하시고, 막 쏘아붙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좀, EBS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EBS 이 부분이, 사실 EBS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좀 떨어집니다. MBC, KBS에 비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도 EBS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는 꼭 한번 읽어 드리고 싶어요, 먼저. EBS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EBS의 법을, 지배구조를 바꾸기 전에 일단 EBS가 비상경영체제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것 교총 회장 할 때부터 EBS가 굉장히 재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사실 정말 이것 좀 국회에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자이기 때문에 오래 안 됐거든요.

차지호 의원님, 너무 집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70원 내고 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수신료 2500원 중에 EBS에 70원이 배당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신료 2500원 중에 70원이…… EBS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EB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교육의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좋은 정보나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백억의, 400억의 적자가 날 때까지 방치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너무 우리가 KBS, MBC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관심 가지고 있고 EBS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어요.

EBS의 심각한 적자에 따른 임금삭감 등을 둘러싼 경영진과 직원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걷는 수신료 2500원 중 70원만 받는 또 다른 공영방송

EBS의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바로잡아야 적자 늪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경영이 되니까 노조 쪽에서는 사장 퇴진하라 하고 사측에서는 단협을 해지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EBS 등에 따르면 EBS 노사는 막대한 적자에 따른 임금삭감과 비용절감에 대해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5% 삭감과 주 4.5일제 시행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노동요건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운영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계속되며 노조는 적자 책임을 물어 김유열 사장 퇴진운동을 벌였다. 이것도 뉴스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EBS 구성원 600명 중 500명이 한국언론노조 EBS 지부 소속인데 지난해 12월 투표에서 노조원 90.7%가 사장을 불신했다. 그러니까 사장을 불신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그거지요, 재정적자지요.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사장이 제대로 풀지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측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측은 지난 8일 사장 퇴진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노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은 충돌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충돌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몇백억, 400억이 넘는 재정적자 이것 지금 풀어야 됩니다.

전례 없는 갈등의 원인은 EBS의 심각한 적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 이사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KBS, MBC를 떠나서 EBS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거든요. 거기에 지금 9명 하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그게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정말 문제를 짚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것 문제를 짚어서 풀어 줘야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심 가져 주세요, 정말.

그리고 의원님, 사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교육이 백년대계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 교육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성과가 바로 잘 안 나타나니까 늘 뒷전이거든요.

당장 EBS 한번 보십시오.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EBS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EBS 학생들이, EBS에서 많이 활용하고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아야 우리가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971년생이니까 저도 80년대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지요. 법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학원 다닐 수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공부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바른 인간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러면 그 바탕은 교육인데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공영방송 EBS, EBS를 튼튼히 만들고 EBS의 품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있으면 자꾸 프로그램은 줄어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2년간 적자 439억 원을 둘러싼 이견인데요. EBS는 2022년 사상 최대인 256억 원, 지난해에는 183억 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439억 원의 적자에 대해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엄청난 적자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어떤 걸 제안하고 있냐면요 '70원 주는 구조를 바꿔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료 2500원 중에서 70원만 배정돼서, 그러니까 EBS는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되는, 적자의 근본 원인은 EBS의 기형적인 재원 구조에 있다. 교육 공영방송임에도 전체 재원 중 공적 재원은 30%뿐이다. EBS는 가구당 월 TV 수신료 2500원의 2.8%인 70원만 받는다. 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수수료 169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수신료 수익은 약 192억 원으로 전체 재정의 6%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는다. 결국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의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고요 EBS는 6%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차별이지요. 그렇지요? 수신료에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을 합한 공적 재원은 30% 정도로 나머지 70%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즉 EBS는 교재 판매와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이를 메워 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에는 자본잠식까지 우려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EBS의 공적 재원은 더욱 쪼그라든다.

오늘 이것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은 재원으로 EBS를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며 방관해 왔다. 수신료의 최소 15%는 EBS에 배정해야 하고, 교육방송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체 재원의 70~80%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EBS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지요?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EBS 품질의 질, 교육의 질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오늘 EBS에 대한 또 필리버스터가 나오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EBS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께서도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BS 주간편성표를 보면요, 저도 이것 준비해 놨는데 김용태…… 항상 먼저 하는 분이 좀 좋긴 좋아요. 먼저 하면은 뭐든지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음에 하는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준비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배정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도 못 들은 분이 계실 거니까, 아까 김용태 의원님 하실 때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EBS2 TV보다 1TV가 주니까 1TV를 저는 보겠습니다, 주간편성표.

주간편성표를 보면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는데 저도 여기 EBS 프로그램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것이 아마 이것은 숨은그림찾기가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왕초보 영어부터 하거든요. 왕초보 영어, 클래스e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기행은 좀 많이 아시잖아요. 세계테마기행 같은 건 유명합니다, 이런 것은. 금요일이 되면 세계테마기행 스페셜이 나오고요. 허풍선이 미술쇼라든지 뽀롱뽀롱 뽀로로 그다음에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명탐정 피트 4, 꼬마버스 타요,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딩동댕 유치원.

아니, 지금 계속 읽어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 EBS는요 교육 프로그램이 나름 잘 되어 있고요. 완전 현장 중심이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여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의 이것 잘 보시지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과 함께 많이 보는 게 명의인데 이 명의, 저는 진짜 자주 봅니다. 명의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이것 내가 빨리 건강검진 가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당장 내일부터 빨리 걸어야 되겠다, 지금 국회 와 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있는데 큰일났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필리버스터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간식을 많이 갖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지요? 맛있는 김밥하고 이런 것 막 들어오면요, 과일 들어오면 입이 유혹이 와 가지고 야금야금 먹다 보면 다음 날 1㎏ 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의 딱 보는 순간에 또 먹기 싫어지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한국기행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테마기행 이런 것, 극한직업 한 번씩 안 보십니까? 이 극한직업 보면서 뭐 느낍니까? '내가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참 보람 있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참치를 소주와 함께 친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치를 이렇게 잡아서, 그 험한 바다에 나가서 잡아 가지고 하는 그 현장들 다 보여 주잖아요.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내가 물론 돈을 내지만 내가 돈을 내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면 못 먹잖아요. 참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EBS를 보면요.

학교와 관련된 것들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또 보면. 여기 보다 보면 이것 채널 넘기면서 스쳐 지나갔던 건데 다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글로벌 특선 다큐스페셜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인간이 되자, 자이언트 펭, 자이언트 펭이지요? TV 해 가지고, 글로벌 가족 일기, 가족 일기지요.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요 이게 제가 보면서도 KBS·MBC에서 말하는, 우리 KBS·MBC는 우리가 하면은 방송개혁이고 상대가 하면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BS는 좀 따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걸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끼워넣기 돼 가지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듯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EBS 잘 보고 있는데 EBS가 무슨 큰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EBS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 보다가 혹시 저렇게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EBS에서 나오는, 특히 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이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수업에 이 위대한 수업을 보여 주는데 정말 이것은 선생님들이 많이 봅니다. 저도 매일 이게 카톡이 옵니다. EBS에서 저한테 매일 카톡을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교총 회장 하다가 국회로 왔는데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보내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다음에 EBS 초대석 같은 경우도……

EBS 뉴스 좀 보십니까? EBS 뉴스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저녁 시간대 6시 10분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분 합니다, EBS 뉴스는. 12시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하는데 그 하는 시간이 한 20분인데 그중에 보통 보면 저녁 시간대는 게스트 2명을 불러 가지고 10분간 인터뷰를 합니다. 낮에 있는 뉴스는 교육 뉴스들을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한국교총 회장 인터뷰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사노조연맹이라든지 전교조 위원장 부릅니다. 한국교총 회장은 아무래도 보수 교원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총 회장 인터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미리 불렀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르든지 부릅니다. 인터뷰를 초청합니다. 그만큼 뉴스의 인터뷰 하나 하는 것도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멘소리를 한 번씩 했지요. 어떻게 볼멘소리를 하냐 하면 ‘아니, 교총은 제일 교원단체, 최대 교원단체인데 최대 교원단체를 좀 더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농담 비슷하게 하지요. ‘시간 더 늘려 주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똑같이 10분. 그것 균형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총이 최대 교원단체인지 뭐가 최대 교원단체인지 국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아까 저는 EBS 주간편성표를 이렇게 죽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보면서 ‘아니, 참 이 자료 잘 가져오셨네’, 왜? 보면 다 이해를 하니까요.

사실 EBS는 이렇게 막 24시간 필리버스터할 정도까지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EBS가 그러면 이 정도라면……

제가 오늘 EBS에 자료를 좀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한번 알겠습니까? 2023년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보고서를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좀 보면서 EBS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EBS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제가 취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논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읽어 드리는 것보다 사실 어찌 보면 경영평가 결과를 읽어 드리는 게 훨씬 더 균형 잡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니까, 올해 2024년이니까 2023년 걸 살펴보면,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송 3법 관련 쟁점 및 문제점 현황이라든지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은 무엇이 문제인가’, 다 들고 왔습니다. 그

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EBS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사설 몇 개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안 읽어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듣기 싫더라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은.

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을 2023년 사업연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 대혁신 그리고 상생협력 강화라는 3대 경영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공영성 강화,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콘텐츠 대혁신, 그런데 콘텐츠 대혁신이 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겠다는데 재정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0억 이상 되는 적자 가지고 이런 거창한 목표 수립해도 이게 제대로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경영평가단은 위 목표에 대한 경영관리의 결과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죄송합니다.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았으며 EBS가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까지를 경영·방송·교육·기술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EBS는 아무래도 공적 책임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각 부문별 권고와 제언은 EBS의 공공성과 경영 개선을 우선으로 제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EBS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EBS 자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EBS가 스스로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는 콘텐츠 제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합리적 협력과 고통 분담 방안은 실종된 상태다.

노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할 공영방송 EBS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공공의 책무를 구현하는 데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회가 EBS를 도와야 될 때는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EBS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오늘 노종면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좀 감동입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어요. 질문해도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해 보세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EBS를 내버려두자는 말씀 동의하고요. 모든 방송사도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지난 4월 30일에 EBS에 사상 처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게 찍어 내리려는, EBS 이사를 찍어 내리려는……)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EBS 이사진 교체 시점이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과정에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이 지금 저희 야당에서 발의한, 제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하튼 왜 검찰이 가만히 있는 EBS를 그렇게 들쑤시고 정치화하는지, 말씀 들으면 맞는 말씀 같은데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EBS가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이 늘 있었어요. 제가 2008년도 YTN에 있을 때 낙하산 사장 논란이 있었는데 직전에 EBS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EBS도 그렇고 KBS, MBC 못지않게 (청취 불능) 두 달, 석 달 파업하고 낙하산……)

그런 건 있지요. 덜하다는 거지요, 제 말도.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방향이 어느 쪽이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탄압,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지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 조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보는 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서는, EBS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온 것도 EBS 이사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이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검찰 권한을,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압수수색하던 날 로비에 EBS에 견학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검찰이 지금 무도하다는 그런 것부터, 오만하다는 그런 것부터, 지금 검찰독재시대라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EBS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막중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미디어산업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균형예산과 예산의 투명성, 체계적인 조직 쇄신, 인사 혁신,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구현, 킬러 콘텐츠

집중 발굴 등을 통해 교육방송 EBS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경영평가단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경영평가 내용을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자체 평가를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지요? 나름 이렇게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BS는 ESG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주력하면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계의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 및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다.

제일 아마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슬림화 및 인력 조정 등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존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해서 조직 규모를 15% 축소했으며 정규직의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력 감축이 과도할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 및 갈등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17년부터 지속된 영업손실은 2023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1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지 개선 방안과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65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비용예산을 130억 원 감축하는 등 고강도의 비상경영을 실시해 재정구조를 다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EBS도 이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요.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진행된 노사 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향후 노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 간 경영정보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자칫 비상경영 상황에서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재정긴축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무관리의 정합성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사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EBS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작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문제가 리스크화 하는 경우 공식적인 위기 관리를 위한 논의 및 대책 수단이 없고 기관 차원의 제도적 견제와 책임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노출됐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사회 내에 ESG 경영 차원의 윤리강화특별소위원회 등의 감사제도와 연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통해 책임성 있는 자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권고와 제언.

비상경영하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일관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협력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멀티소싱 추진 등 수익원 다변화가 시급하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공사 내부의 심각한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 보상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 동기를 고취시키고 조직개편과 인력배치 및 평가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여 조직개편, 인력배치 및 채용 우선순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방송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1 TV 같은 경우에는요 EBS 평생학교와 다큐멘터리 K로 대표되는 공영성 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에서 개선 권고되었던 부분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채널의 특성화 전략인 사회통합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도 수행해 내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부문에서는 EBS의 2023년도 전체 예산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5%로 2022년도에 이어서 2년째 감소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EBS2 TV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EBS2 TV 잘 안 보시지요? EBS2 TV도, 우리가 보통 채널이 한 200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거기에 95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EBS 기자한테 물어봤거든요. EBS2는, 2TV가 많이 활용이 되느냐 했더니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대요, 이게. 우리가 KBS1, KBS2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EBS2에 대한 그런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EBS2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EBS2 TV의 재방 비율이, 재방 비율이라는 것은 재방송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 재방송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것도, KBS 2TV는 재방송 비율이 예전보다는 줄은 것 같은데 하여튼 2TV 하면 재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EBS2 TV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방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것도 여기 지금 경영평가 결과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안 보지요. 잘 안 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채널을 왜 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BS의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와 내부심의제도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해 EBS 주 시청자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내부평가에 반영했는데 신선한 시도로 정기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송 성과와 관련해 EBS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참신한 기획으로 신규 콘텐츠의 제작을 이어 나갔다. 특히 다큐멘터리 K라는 대형 기획물의 제작과 평생교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EBS 평생학교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EBS의 VOD와 AOD 이용률은 상승했는데 온라인·모바일 VOD 및 AOD 이용 정도를 목표 대비 산출한 결과 각각 135%, 241%의 성과를 달성했다. 멀티 플랫폼 시대에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형태와 이를 반영한 EBS의 맞춤형 콘텐츠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개선 권고와 제언은요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EBS의 모든 콘텐츠를 네트워킹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EBS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콘텐츠가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N스크린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EBS의 경우 채널공급 사업과 콘텐츠 판매, 제휴사업의 실적은 보이나 타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포맷 판매에 대한 기록이나 실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EBS의 콘텐츠 소재가 제한되어 있지만 유아와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EBS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포맷 판매 분야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능시험 시행 횟수 개선을 위시한 입시 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지방대학의 위기 등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 현안이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토론, 해설, 논평이 없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연중기획 등의 제작을 통해 교육방송만의 차별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방송 부문이었습니다, 방송 부문.

이번에는 교육 부문입니다. 평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EBS 수능연계 교재 및 강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 위해 집필 중인 연계 교재를 전면 점검하고 킬러문항 중심 고득점 모의고사 교재를 폐간했다.

우리 킬러문항 삭제 조치가 대통령님 그때, 그렇지요? 발표되고 나서 어쩌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그때 교총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가로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이 수능이라는 그런 거대한 대학입시 제도, 지금 30년간 운영돼 온 이 수능 제도가 꽉 잡고 있으니까 초중등 교육에서 특별히 이렇게 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을 바라보는 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창의교육이라든지 재능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그래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고 나니까 또 준킬러문항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험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유출하는 일들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교육 당국에서 엄벌 조치를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능으로…… 아무리 뭐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고 하지만 결국 수능을 제대로

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하면 일단 학종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리 교육에 있어 가지고……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좀 단기 처방식이 많거든요. 제가 있어 보니까, 교육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대통령이 5년인데 5년 같이하는 교육부장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2년, 그 2년 안에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처방식 교육 해법도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장기적 플랜이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 세워진 지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발하는 시기고 또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또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교육의 장기 플랜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제가 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킬러문항 없애자 하는 이런 의견 내기 위해서 국회에 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분야의 부분 쪽에 아무래도 킬러문항 이런 게 또 나오고 이러니까 저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교육 중심의 출제 분석을 잠재우기 위해 9월 모의평가, 11월 본수능에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가 협력해 EBS 대표 교사들이 출제 경향을 기자 브리핑하고 이를 생방송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유료 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한 이후 1만 5214명이던 이용자 수가 22만 7062명으로 15배 확대되었다. 이것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 서비스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에 한 7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이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 서비스가 돼 있던 것을 전면 무료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자 수 보십시오.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학생이 22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료 서비스 돈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EBS의 교육 콘텐츠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EBS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학습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온라인 보충 콘텐츠를 신규 제작했다. 교육 서비스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왜 자꾸 물 마시는가 생각했더니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이 늦은 시간에 집중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비극을 계기로 교권 회복 및 교육 주체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했고 EB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해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 플랜인 함께학교를 구축했다. 이 함께학교 구축하는 때 함께학교 출범식

에 제가 직접 교육부로 갔습니다. 가서 이주호 부총리님하고 그때 오신 분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학생, 학부모님들도 다 오시고 함께학교 서비스 제공하는 그 부분, 함께학교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지금 여기에 서이초 비극이 나오니까 조금은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나갔지요, 얼마 전에. 7월 18일이 서이초 1주년이라서 그때 우리 서이초 추모제 할 때 오신 분이 감사하게도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도 오시고 조정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님도 오시고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추모제에 다 같이 했는데……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 9월 4일 49재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7월 18일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49재가 9월 4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박광온 원내대표님이 그 당시 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윤재옥 원내대표님…… 그때 진짜 우리 다 많이 울었거든요. 이주호 부총리도 눈물을 흘리시고 저도 눈물을, 저 그때 추모사 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신규 교사가 그렇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 저도 지금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학교안전법 개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의원님께서 서이초 특별법 해서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한 법들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호응도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응 댓글이 1만 5000개 이상이 붙으면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교권 추락이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교권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육위 또는 복지위 같은 데서 교권 관련 법안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권을 자꾸 세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교사들이 무슨 권리를 더 가지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편하게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도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중간에서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고함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꾸 의장님께 제어해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막 고함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제지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야, 앉아라', 그렇지요? '자기 자리 앉아야 됩니다', '앉으세요', '앉아라', 그런데 학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즉 그 학생을 앉힐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이 없으면, 그 학생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어야지, 교권이 있어야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느냐, 교권 회복이라는 말이 교사만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교권 회복이라는 것은 교권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 계시거든요. '너무 자꾸 교권 교권 하면 예전처럼 막 체벌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닌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가르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실 이 서이초의 비극이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함께학교 지금 나온 걸 좀 설명드리면, 교육부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만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꾸 자료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당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왜 이걸 손 놓고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트에서 자꾸 들어가서 자료 찾고 상담받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 버렸느냐, 이런 비난이,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교육부 자체에서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협력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교육부가 지금 나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나름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BS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사 지원 콘텐츠, 학부모 교육 콘텐츠, 전문가 상담 서비스, 학생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 및 권고, 제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야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서 경영 부문 그다음에 방송 부문, 교육 부문. 지금은 교육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부문이 남아 있고요.

EBS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연계를 직접 연계로 바꾸고 연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사회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BS 연계율은 의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EBS가 수능에 연계율이 높아야 EBS 교재를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굳이 EBS 교재를 수능에 연계시킬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사교육에서 많이 배워 온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공교육 체계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EBS 교재 연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EBS 교재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응용력 기르고 이러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어떤, EBS 교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계율이 높을 때는 한 70%까지 갔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험을 치는,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EBS 연계율이 높으면 EBS 교재를 훨씬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EBS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매년 16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고 연간 해외 유학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이들을 하나의 국가 구성원으로 묶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EBS의 과제다.

EBS도 AI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AI 기술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EBS의 제작 노하우와 AI 기술을 활용, 저예산·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제언한다.

EBSe, 메타버스, 하이러닝, AI 서비스 확대,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 등을 활용한 미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력 격차 감소와 사교육비 경감 등의 교육적 이슈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선도하는 교육 서비스의 정착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나름 뭐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 기술 부문의 평가 결과 보겠습니다.

EBS의 공영성 강화 경영 목표에 대해서 기술 부문은 UHD 방송 시스템 고도화, 방송 제작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의 개선율 증진, ESG 경영에 따른 방송 장비 자원의 재배치 및 재활용 강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긴축 예산 속에서도 신규 장비 도입은 자제하고 노후 제작 시설의 개선 및 재배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을 자제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좋은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되는데.

UHD 방송이나 실감 미디어 서비스, ICT를 기반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등의 전환 노력을 통해 기존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부문은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본다.

차세대 IP 기반 파일 연계 시스템 구축, 재난 및 긴급 방송 시 송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설 도입과 정비 그리고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는 등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광고 시장은 기술 발전, 소비자 행동 변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전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의 통합과 관리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2022년 사업연도 경영평가단에서 EBS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일부 앱의 중복성을 해결하는 정도일 뿐 진정한 형태의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개선 권고가 있을까요? 볼까요?

앱 브랜드는 직관적으로 잘 설계되고 통합된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때 가치가 올라간다. 이용자 참여나 피드백 활동에 동기 부여나 상호 작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된 앱들의 기능을 중요한 소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 콘텐츠 플랫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차세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EBS는 예산상의 문제로—계속 나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신규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EBS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EBS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신규 기술직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중장기적인 심도 있는 교육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수 전문가 및 멀티 플레이어 그룹 육성 제도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IT 기반의 차세대 방송 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EBS는 상투적인 경영 목표가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직관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융합기술본부는 이에 적합한 차세대 방송 기술 모델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래 신기술 도입 및 적용, 중장기적 뉴미디어 방향, 미래 미디어 기술 철학, AI 리터러시 등을 계획 및 연구를 통해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EBS가…… 여하튼 제가 오늘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적자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한번 논의가 되고 EBS에 좀 단비와 같은 소식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교육방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문별 총평에서 경영 부문을 보면요, EBS는 지금 이사가 9명이시잖아요. 9명인데 21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한 분을 추천하고 교원단체에 추천 몫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총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한국교총 해서…… 교원단체는 한국교총이 최대 교원단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추천 몫이 있어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는 2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9명 중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EBS 이사를 추천할 때 교총 회장으로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기존에는 주로 보면 학교 현장에 계신 분을 추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초·중등학교, 학교 현장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학교 현장, 즉 초중등 현장에 직접 계셨던, 학생을 가르치고 했던 학교장 출신 분을 추천을 했는데 굉장히 아마 EBS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초중등 교원들이 지금 국회라든지 또는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이렇게 영입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백승아 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도 초등교사 출신이고 백승아 의원도 초등교사 출신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조국혁신당에도 강경숙 의원이 오셨지요.

국회에서도 당마다 교육 전문가를,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시 여기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또 지금 많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교총 회장직도 당연히 사임을 했겠지요. 백승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들이 이런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제한이 심하지요. 그러니까 교육감선거를 출마하고 싶어도 사표를 내야 됩니다. 이게 휴직이 아닙니다. 대학교수는 사표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학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학교 현장

을 제일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이 국회라든지 교육행정직의 이런 리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게 현장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바라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 정책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초등교사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것도 양당에 같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교육자들이,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모르고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아니, 업무야 뭐 직장마다 다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설명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안 겪어 놓으니까……

NEIS가 어렵다 그러면, 차세대 NEIS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이게 뭐가 힘들다는 것이지? 이것 매뉴얼 같은 것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차세대 NEIS를 접속해 보면 접속 장애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스템 불안정성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이걸 다 구분하고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뭐가 힘들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같이, 정성국 의원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 NEIS를 해 봤기 때문에 바로 알잖아요, 바로. 학교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걸 다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성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다 알고.

그것을 다 겪어서 아는 사람이 진단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바로 하고 그 진단을 바로 한 사람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장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이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보통 보면 한국교총 회장 하다가 이렇게 국회로 들어오고 이러면 회원들이 반대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회 가려고 교총 회장 했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결국은 목표가 정치인이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평교사 하다가 교총 회장 돼서 큰일을 할 줄 알았더니만 결국 국회로 가네'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훨씬 작았어요. 심지어 전교조에서도 비판을 안 했거든요. 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국회로 가서 실질적으로 교원들과 교육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교총 회장 사임하고 여기 영입 인재로 들어올 때 그리 큰 저항이 없었어요, 큰 저항이.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올리고,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올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법안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니까 우리 초등교사 십몇만 명이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정파를 떠나는 것이지요. 나는 교총이다, 뭐 교사노조연맹이다, 뭐 전교조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보면……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교육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좀 표현하면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교육위라서 그런지 일단 막말이 거의 없습니다. 조롱도 없고요. 물론 서로 좀 이렇게 실랑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다가 제가 운영위에 가서 한번 대통령실에서 왔을 때 회의를 했는데…… 아시지요? 운영위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교육위는 정말 달랐어요. 교육위는 위원님들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이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이든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충돌이 좀 덜하고 자극적인 발언이나 공격성 발언이 별로 없고 운영도 잘되고요.

이럴 때 또 위원장님 한번 제가 칭찬해 드려야지.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균형감 있게 하시면…… 워낙 지금 막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누구인지 아시지요?—계시기 때문에 정말 돋보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위만큼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위에서는 정말 학생만 바라보고 우리 교육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에서 부딪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래도 진보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쪽이고 또 보수교육감이든 교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교권과의 균형을 자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어찌 보면 의견 충돌이 있고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큰 어떤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서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쪽으로 잘 운영하면 그것도 충분히 조정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총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문별 총평.

아까 그 분야가 몇 개가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 부문이 제일 먼저 있었지요. 그렇지요? 경영 부문이 아무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나오니까 부문별 총평을 한번 살펴보고 가 보겠습니다.

2023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경영 부문은 교육방송공사로서 변화하는 사회·교육 환경 속에서 공사의 설립 취지와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 조직 및 인사 관리,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당해 연도 중점 평가사항 및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 등 6개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EBS 이사회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적 책무와 경영 효율화를 중점 평가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공사는 첫째, 적자구조 개선과 두 번째,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혁신 및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여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2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비상경영계획 수립과 실천, 디지털 혁신과 상생협력

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직구조의 슬림화와 사업 재구조화를 강력히 추진하며 동시에 ESG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등 사회적 가치 확대에도 주력했다.

경영 부문의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해서 이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 표를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평가는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과 PDCA 방식을 적용하여—이것은 무슨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DCA 방식이라는 게—성과와 실적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공사의 현황과 과제 수행에 대해 면밀하게 진행하였다.

1차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 전반과 각 부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인 경영 부문 평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서면평가를 작성하였다.

이후 2차 현장방문에서 경영부문 평가자료 작성 수행책임자와 실무책임자들로부터 미진한 부분의 보완 설명을 듣고 소명하는 절차를 통해 최종 평가를 완료하였다.

EBS는 공사가 처한 현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성 강화, 콘텐츠 대혁신, 상생협력 강화의 3대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 책무와 경영 효율화를 2023년도 중점 평가사항으로 선정하고 ESG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주력하면서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계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 및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선정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의 제언에 따라 수익 다각화를 위한 협력, 해외시장 개척 노력,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악화되는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이. 그렇지요?—조직 슬림화 및 인력조정 등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하여 조직규모를 15%로 축소하였으며 정규직의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표의 구성, 이것 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큰 평가항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평가항목에 이런 게 있네요.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경영의 제고 노력, 조직운영의 효율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요?

연구 및 정책기능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당해 연도 중점 사항의 노력 및 성과,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의 노력 및 성과, 이런 부분들로 지금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 구조 정상화와 수익 다각화를 위해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수익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과 내·외부 감사와 자금관리 세칙 개정 등을 통해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였다.

EBS는 재무상황 관리와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통해 경영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에 대한 사업 추진과 경과 상황을 정성과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무계획과 경영전략 간의 명확한 정합성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3년간의 예산 증감 전망을 분석하고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관리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경영진 및 현업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공사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부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고 조직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교육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공사의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ESG 경영 및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과 감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의 감사 활동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부서는 철저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여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성원 교육 및 청렴경영을 통해 조직 내부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감사를 통한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감사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BS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인력 조정 및 실무 강화를 통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일부 임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흡수·통합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전년 대비 43%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인력 감축은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력 감축이 과도할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 및 갈등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사는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채용, 블라인드 원칙, 외부평가자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평가제도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경영체제하에서 2023년도에는 채용을 미시행하였다. 본래 흑자경영체제의 전략과 적자경영 혹은 비상경영체제하의 전략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사의 성장잠재력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직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장기적인 재정관리와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노사 합의하에 장기적 청사진이 설계되고 노사가 상호 양보하여 상생 협력하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의 장기적 역량 강화에 의한 성과 향상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보상 제도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채용 우선순위 검토 등의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의 보상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보상 제도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및 평가 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기 발전전략 및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조직의 중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과 인력 효율화를 고려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사는 노사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노사 간의 경영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공사발전위원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고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절감을 노조에 제안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바 이는 노사 간 신뢰와 협력관계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 조정안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와 공사발전위원회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경영정보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공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의 거시적 사회환경 변화뿐 아니라 정부정책사업 축소와 자체 사업매출 감소 등의 내부적인 도전에 기인하여 재정적으로 2017년부터 지속된 영업손실은 2023년에는 더욱 악화되어 19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고강도의 비상경영을 실시하여 재정구조를 다소 개선하였다. 수지 개선 방안과 전방위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65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비용예산을 130억 원 감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23년의 이익구조는 이전 3년간의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악화된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트렌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외부감사와 자금관리 세칙 개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이러한 노력은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비상경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2023년의 결산에서는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비용 절감과 수익원 발굴 등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공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방송·교육·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공식적인 정례회의를 통해 이슈를 발굴·공유하며 비공식적인 SNS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사적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사내 학습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사의 미래전략 수립과 현업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영방송 정책 및 수신료 제도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공사의 정체성 강화와 미래전략 방향 탐색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배분 사실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외부와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상경영체제하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재정긴축으로 인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위축되고 중장기 사업계획과 재무관리의 정합성이

부족한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전사적인 주요 어젠다인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에 배치되는 이사회 내부의 부정적 사안이 언론과 사회적 주목을 받아 윤리적 기관으로서의 EBS의 위상이 흔들리고 리더십, 경영활동, 교육훈련 등에서의 직원만족도의 급격한 하락은 내부적인 도전 과제를 시사한다.

종합하면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비상경영체제하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및 지나친 재정긴축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이 감소되고 중장기 사업계획, 재무관리 및 경영전략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밑에 계신 직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앞으로 필리버스터 많이 안 하면 좋겠지요? 이 시간을 위해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국회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니까 제가…… 한 분씩 들어오니까 치료제가, 주사 맞는 것처럼 막 힘이 나네요.

2023년도에 채용이 전무하여 공사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직원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성과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보상제도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채용 우선순위 검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재정관리와 전략적 관점에서 정합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라 공사는 수입원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공적 재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직원만족도 제고를 개선 권고사항으로 받았다.

직원만족도 제고 이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직원만족도…… 어디든지 직원만족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직원만족도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공적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팀과 TF팀을 가동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했다. 하지만 직원만족도는 종합만족도에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도전적인 경영환경과 조직 내부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의 조직 인식 및 직원만족도가 작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경영진 리더십, 경영활동, 교육훈련 등의 항목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항목들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윤리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ESG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핵심 인사의 장기간에 걸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 외부 감사에서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내의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며 윤리의식의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

공사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경영진 및 현업 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에 주요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며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이사회 구성원의 윤리 문제가 리스크화하는 경우 관련하여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식적인 논의 채널이 없어 이사회 혹은 기관 차원의 제도적 견제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책임지는 거버넌스의 정립으로 내부적인 문제 해결과 교육방송공사로서의 브랜드 가치 회복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이사회 내부의 심층적인 토론이나 자정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기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슈를 정치화하려는 움직임마저 관찰된다. 절차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논란이 되는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인되거나 무시할 사안이 아니라 제도를 갖추어 적극적 예방과 자발적인 윤리의식의 고양으로 청렴경영, 윤리경영에 솔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내에 ESG 경영 차원의 윤리강화특별소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책임성 있는 자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로 조직의 윤리경영체제의 강화와 리더십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3년 경영 부문의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와 전략 간 정합성 확보.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기반하여 적자경영하의 로드맵과 흑자경영하의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고 재정계획과 전략을 일관성과 정합성 있게 통합하여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계속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아까 안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이것 할 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 하나만 언급하고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 EB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BS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로 인해서 비상경영 상태인데요.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사를 추천하는 몫이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 EBS가 400억 적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신료 2500원 중에 EBS에 배당되는 게 70원밖에 안 됩니다, 70원. 250원 중의 70원이 아닙니다. 2500원 중의 7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BS하고 비교해 볼게요.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는구나, 그런데 E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6%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형적으로 EBS가 재정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 모르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뉴스 나오더라도 스쳐 지나가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비상경영이 어떠니 저떠니 재정이 어떻고 관리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EBS 자체에서도 지금 재정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국회가 KBS, MBC 지배구조하고 다르게 EBS는 사실상 꼭 여기 방송법에 끼워서 지금 이렇게 의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저하고 김용태 의원이 같이 말한 것처럼 EBS 프로그램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EBS는 사실상 좀 벗어나 있어요. KBS나 MBC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EBS가 비상경영체제의, 400억 적자입니다, 400억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EBS 교육의 질의, 콘텐츠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설 보완이 안 되잖아요, 시설 보완이. 아까도 시설 그런 거 보니까 기존의 시설을 수리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BS에 주실 관심은, 거기 이사가 21명 안 돼도 EBS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없어요. EBS 장악한다고 해 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고 이런 것하고 별로 관계없습니다. 펭수가 웃고 있는데 그게 정권 재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오늘 EBS에 대해서는 앞에 하신 분들보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EBS가 같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특히 마지막 날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EBS가 비상경영 상태이고 몇백억, 400억 적자 상태고 2500원 수신료 중에 EBS에 배당되는 것은 70원밖에 안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EBS가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육자 출신이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EBS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 사교육받을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학원비 낼 돈 없는데 EBS 열심히 보면서 배우려는 학생도 있고 이런데 EBS 교육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EBS에 가지는 관심이 KBS, MBC 못지않게 우리가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또 교총 회장 출신이다 보니까 EBS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EBS 기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호소를 많이 했었어요, 힘들다고. 노사하고 회장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EBS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것, 지금 뭘 하다 중단…… 막 들어오시고 오늘 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새로 시작하면 좋은데…… 새로 또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중이라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눈빛이 반짝반짝하셔 가지고 저도 힘을 좀 얻겠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수익 다각화.

수익 다각화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EBS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체로 사업을 해 갖고 돈을 막 마련해야 됩니다. KBS처럼 50%나 재정부담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6%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공사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렇겠지요. 공영교육방송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체인지업하여 기관의 성장이 기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의 확장과 수익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EBS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 교육상품,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익 목표는 보수적으로 설정하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수익 다각화를 위해 지자체 협력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협력체 구축, 유튜브 등 타 플랫폼 멀티소싱을 추진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정부, 학계,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신료 배분율 조정과 공적 재원 증대 전략을 모색하되 신규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단기적 비용 절감과 함께 콘텐츠 제작, 교육서비스 사업, 플랫폼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하여 수익 구조를 변화시켜 비상경영체계 도입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이를 통해 개발된 역량을 조직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활용하여 방송, 교육, 정책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혁신성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은 전사적으로 공유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여야 한다.

윤리경영체제 강화도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아무래도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제고도 지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공사 내부의 심각한 도전과제를 시사한다. 따라서 직원 불만족의 주요 원인과 항목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원 관리와 복지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상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근무 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및 평가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와 절차를 구축하여 조직 개편, 인력 배치, 채용 우선순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방송 부문의 평가항목 보기 전에 우리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EBS 보실 때 그 프로그램들 중에 유명한 것 몇 개만 제가 들어 볼게요.

명의 다 보시잖아요. 명의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하고 같이 우리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건강에 대한 적신호, 보면서 한 번 더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체력단련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 보자 해 가지고 가서 확인은 했어요. 병원도 있고 이런 것 소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헬스 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못 가 봤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의원 생활이 두 달인데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 같은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방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테마기행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EBS 돌리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기행도 나오고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유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허풍선이 미술쇼, 뽀롱뽀롱 뽀로로, 듣기만 해도 아이들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꼬마버스 타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 편향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EBS를 더 많이 봤으면 봤지 안 보지 않은 사람인데 EBS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기울어 있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극한 직업 이것도 저는 한 번씩 보는데 극한 직업 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선호도는 있지만 귀천은 없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너희 뭐 하고 싶은지 손 들어 봐라’ 이럴 때 많이 드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것.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처럼 직업에 선호도는 있다,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직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선생님, 그 직업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귀천은 없다. 우리가 선호도는 있을지 몰라도 귀하고 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갈 때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보면 인사 더 잘하고, 급식실에서 반찬 가지고 올라오시는 급식실의 이모들께 더 인사 잘하고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선생님이 EBS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TV를 보니까’, 그것 수업의 소재가 되거든요. ‘극한 직업이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빠들 한 번씩 보면, 참치 좋아하지. 참치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 본 적 있지? 그러면 어른들 명절 때 가지고 오는 이것 참치 이렇게 썰려 나오는 이 과정까지 얼마나 험하게 바다에 나가서 잡고 하는지 그것을

보면 진짜 감탄의 마음이 나온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이 다,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쳐져서 이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모든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했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EBS의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정말 지금 말하는 MBC, KBS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약에 방송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EBS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법이 통과되겠지만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법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는 그런 국회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EBS2도 있는데 EBS2 같은 경우는 재방송률이 높아 가지고, 재방송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EBS1 TV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자꾸 비상경영, 무슨 재정건전성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송 부문에서 평가항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 두 번째, 아까는 경영 부문이고요 이것은 방송 부문입니다.

방송편성 목표의 적정성,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본방 및 재방 편성의 적정성, 그러니까 재방송을 막 밀어 넣고 하는 것도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안 좋게 되겠지요. 재방송 많이 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 방송운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 그다음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내부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또 시청자 서비스 관점에서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 방송 성과도 평가항목입니다. 그렇지요? 방송 성과.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고 시청률 그다음에 콘텐츠의 내부 관리 그다음에 교육뉴스부 운영의 활성화.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이런 것들이 EBS 방송부문 평가항목 지표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사마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EBS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공영성 강화, 콘텐츠 대혁신, 상생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경영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를 유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편성목표가 설정되었다.

먼저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부합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경영목표인 공영성 강화는 미래 한국을 위한 비전 제시와 커리큘럼 기반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라는 편성목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다큐멘터리 K와 같은 대형 기획으로 구현되어 공영성을 강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경영목표인 콘텐츠 대혁신은 대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유아 어린이 인지·인성 교육 콘텐츠 강화 그리고 멀티플랫폼형 지식 콘텐츠의 강화라는 편성목표를 통해 구현

하고자 하였다. 콘텐츠 대혁신은 결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플랫폼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수익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면에서 평가한다면 두 번째의 경영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조금 520여억 원이 삭감된 2022년도와 비슷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포맷과 참신한 소재의 콘텐츠가 생산됐지만 미디어 생태계의 불가역적 대세인 멀티플랫폼 환경에 대응한 포맷이나 콘텐츠 전략 개발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BS하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평소 때 가졌던 생각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드라마가 학생들 사회 수업, 역사 수업할 때 교과서는 딱딱한데 제가 감칠 나게 해 주는 역사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울려 가지고 일기장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역사 특강했던 것을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사건 중심으로만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인양요 뭐 이렇게 쫙 사건 중심이에요. 그리고 외우기 싫은 문화재 같은 것, 막 도자기 이름 나와 있고 그런 것 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하면 인물 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인물 소개. 그러니까 우리가 빗살무늬토기 가지고,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두 살의 어린 임금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그것 집에 가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저녁 먹으면서. 엄마 아빠, 오늘 선생님이 사육신 이야기해 줬는데 눈물이 났다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사육신 책을 삽니다, 서점에 가 가지고. 또는 도서관에 가서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독서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1997년의 용의 눈물 그다음에 2000년대에 있던 태조 왕건 그다음에 2005년 정도에 있었던 불멸의 이순신 그다음에 주몽, 대조영, 하여튼 100부작 이상 되는 드라마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요 길어 봐야 한 30부작이 가끔…… 지난번에 강감찬 나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귀주대첩. 그것 32부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이 없대요. KBS조차도 100부작, 200부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시청률이 허준 이런 것은 60% 이렇지 않습니까? 용의 눈물 47% 이러고 불멸의 이순신, 이런 시청률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전부 유튜브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그걸 만들 생각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각색되고 하는 것을 좀 알아요. 이 이야기는 상상된 것이다, 가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걸러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좀 재미를 더해 주면 학생들의 인성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열두 살 어린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집현전 학자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사육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진짜 충신으로서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해서 모든 사람이, 신숙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세조 편에 가 가지고 권력에 아첨하는데 그 어린 임금, 열두 살 어린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일으켰던—어찌 보면 혁명이지요—혁명이 한명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충신불사이군(忠臣不仕二君)이라는 말을 남기고 세조 앞에서 '나으리'라는, '전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으리'를 외치면서 끝까지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충절의 절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 주면요 학생들이 사회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회 시간을. 그러면서 사육신이 조선시대니까, 조선 초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초의 정치·사회·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그렇게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특히 선생님으로서 그런 수업 소재로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EBS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에게 수업 자료를 주실 때 뭡니까, 꼭 교과서를 따라가는 그런 콘텐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봐도 사육신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한글을 창제한 집현전이 있었다, 4군 6진을 개척했다 이런 것은 조선 전기에 나오지만 사육신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육신처럼 충신불사이군이라 해서 충과 효를 행동으로 보여 준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EBS가 해야 될 일은 교육콘텐츠의 질들이 높아지고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불멸의 이순신 하는데 그게 정치적 성향,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살 때 그때 우파·좌파가 있었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로 뭉쳤는데? 그 드라마를 만들면서 진영이 어디 있겠어요? 단종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그 사육신이 우파·좌파가 있습니까?

그래서 EBS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EBS까지 방송4법에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께, 학부모님들께 EBS가 뭐 잘못됐나 이런 인식을 그냥 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좋지가 않아요. 자꾸 막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니까 저런 법들 속에 EBS법이 왜 들어가 있나?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 밖에서는요.

그래서 조금 교육적 관점 또 우리 이런 걸 떠나서 EBS만큼은 좀 더 우리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EBS 지배구조 바꾼다 해 가지고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영향 없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운영 부문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리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부문에서는 EBS의 2023년도 전체 예산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5%로 2년째 감소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제작비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는 것은 콘텐츠 생산이 주업인 방송사로서는 콘텐츠의 질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EBS의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와 내부심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하여 EBS 주 시청자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내부평가에 반영했는데 신선한 시도로 정기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 선발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있을 때도 2030 청년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거든요. 2030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니까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일 때 한국교총 회원으로 있던 2030 청년위원회 선생님들이 며칠 전에 저희 국회를 찾았어요. 한 열몇 명이 찾아와 가지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한 10개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딱 제시를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 법안을 국회보다 더 잘했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 정말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다는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전해 주면서 '의원님, 이런 법안들을 정말 잘 발의하고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교육 현장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걸 뭘 느꼈느냐 하면요 2030들은 비판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2030 청년 대안·전략,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2030 청년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대선,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있고, 그렇지요? 저는 국회로 왔지만 그 당시에 맺었던 교육자들과 교육 현안들을 많이 논의하면서 또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경청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BS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한 적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추천한 적이 있는데 가신 분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잘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게 있답니다. 너무 정확하게 딱딱 짚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정확하게 현장을 바탕으로 딱딱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언을 잘해 주니까 프로그램이 좀 잘못됐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시는지 약간 부담스러워해 가지고 시청자위원으로 가신 분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이지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에 이렇게 의견을 주는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임원진과 제작진 등이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의 제언을 직접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EBS와 시청자위원회 간의 소통시스템은 선순환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평균 연령이 57.4세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수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KBS는 미래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이건 1020이네요. 10대·20대

입니다. 10대·20대 시청자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운영했는데 미래세대와의 교감 확대와 채널 관심도의 제고 등에 기여한 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현재는 매월 프로그램을 선정해 위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선정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토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발표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방송 성과와 관련해 EBS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프로그램은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참신한 기획으로 신규 콘텐츠 제작을 이어 나갔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등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EBS가 자랑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정말 좋습니다, 이건.

신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부문에서 다큐멘터리 K라는 대형 기획물의 제작과 편성 그리고 평생교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EBS 평생학교를 신설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이게 평일은 저녁 7시에서 11시고요. 주말은 저녁 6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시청률이 1.12%입니다. EBS가 한 2~3%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시청률이 10%만 돼도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세상으로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청률 40%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률이. EBS가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으로 야외활동도 늘어나고 코로나 기간에 급증한 OTT,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시청 패턴이 지속되면서 TV 시청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EBS의 VOD와 AOD 이용률은 상승했는데 각각 135%, 241%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OTT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EBS도 방송인데, 채널이 있는데 제 아들딸이 대학생인데 TV를 안 봅니다. 안 봅니다. TV는요 TV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채널 넘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데. 왜 안 보냐 물어보니까 TV 볼 이유가 없답니다, 진짜. 우리는 채널이 200개가 있어도, 200개 이렇게 눌러도 보고 싶은 것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1번부터 200번까지 다 눌러 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맨날 재방이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OTT 해 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찾아서 다 보니까 사실 볼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EBS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방송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도 들으셨지요? 영화 제작도 지금 영화 제작, 영화비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제가 요즘 영화를 안 보러 가 가지고…… 요즘 한 1만 5000원 할 것 같은데요? 영화 보러 가 가지고 둘이서 영화비 끊고 팝콘 좀 사고 이러면 5만 원, 한 번 영화 보러

가면 둘이 가도 기본 5만 원이니까 영화관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영화도 잘 안 만들고. 요즘은 50억 이하의 비용이 절감되는 영화만 만드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영화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것은 모든 게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2022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에서는 방송 부문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고, 둘째 본방송 편성비율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제작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 감소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디지털 플랫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먼저 EBS는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제작비의 확보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기에 확고한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밀한 전략을 세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BS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 연령별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맞춤식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였다. 또한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중학교 무슨 공짜로 제공하는, 교육부에서 중학생들한테 하여튼 플랫폼 그걸 공짜로 제공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료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중학 프리미엄. 중학 프리미엄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 중학 프리미엄이 유료서비스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 교육부장관 말 들어 볼 때, 그때 이야기할 때 연간 70만 원인가 이렇게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연간 7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5만~6만 원,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6만 원 정도는 공부하겠다는데 부모가 못 대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 아니냐? 이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하고 나니까 기존에는 1만 5214명이었어요, 이용자 수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늘었냐면요 22만 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15배. 그래서 유료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화한 것으로 인해서 1만 5000명이, 22만 7000명이 보니까 사교육비 경감에도 많이 기여하고. 그다음에 이 중학 프리미엄이라도 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성적 올리고 싶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까? 긴급대출 100만 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서류제출 같은 것 없이 과거의 신용실적에 관계없이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최근에도 가끔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이 큰돈이긴 한데,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100만 원이라면 어찌 보면 가족이나 친척한테도 좀 빌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100만 원 긴급대출이라는 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신청자가 넘쳐

나 가지고 추가 대출받아야 된다고 신청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더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연간 70만 원 정도 되는 중학 프리미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으면 이용자가 어떻게 15배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사실 EBS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EBS가 저한테 상품 줘야…… EBS가 지금 꽃다발 줘야 됩니다, 저한테. EBS 진짜 당장 와 가지고 정성국 의원님, 직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지금 얼싸안아야 돼요, 저를. EBS 대변인도 아니고. EBS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400억 적자입니다, 400억 적자. 그리고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가져가니까 KBS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일 EBS에서 고맙다고 연락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중학 프리미엄 무료서비스 제공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돈을 EBS가 다 댄 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부가 좀 어떻게 지원했거나 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EBS를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이런 정도의 교육 혜택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책임교육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책임교육이 그것 아닙니까? 책임교육을 위해서 지금 늘봄학교도 하는 거고 유보통합도 하는 거고 AI 디지털 혁신교육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교육 시장으로 가서 혜택을 보고 있고 하는 그것도 자기 능력이고 하는 것, 받고 싶은 교육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학생들이 EBS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또 나오는데요. EBS의 또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야 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해 연령별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여 맞춤식 콘텐츠를 제작·방송하였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면 실제로 유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KBS 1TV 주간편성표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유아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초등, 중등, 대학…… 대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성인, 정말 다양합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요.

또한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아·어린이들의 시청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최적화된 시청상황 제공을 위해 방송과 VOD의 연계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전략으로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기획단계부터 OSMU를 염두에 두고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EBS는 이런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유튜브 종합계획을 수립—유튜브 종합계획도 수립했다고 합니다—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하고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 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과 관련해서 EBS는 공영성 강화와 콘텐츠 대혁신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공영성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큐멘터리 K의 제작이 두드러진다. 다큐멘터리 K는 한국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언론의 기본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콘텐츠 대혁신을 위해서는 EBS 평생학교와 같은 신개념 교육 프로그램과 강신주의 장자수업과 같은 인구에 회자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EBS의 저력을 보여 주었다.

멀티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혁신도 시도되었는데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이 대표적인데 150만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EBS가 공동으로 기획, 방송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크로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반적으로 당해 연도 중점 추진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구체적이었고 성과는 가시적이었다.

EBS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더 무너지면 이제 좀 힘들지요. 힘들고, 지금 인적 체계도 계획도 세우고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노사관계가 또 좀 충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EBS의 이런 경영적자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말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언인데요. 방송 부문의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EBS가 해야 할 일들 중, EBS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BS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일곱 가지라고 하거든요. 볼까요?

첫째는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는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멀티 플랫폼 시대를 맞아 EBS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체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국내외 중요 포털 및 SNS와의 연계 서비스와 모바일 웹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 플랫폼 시대는 EBS와 같은 지상파 플랫폼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다양하고 수많은 플랫폼과의 경쟁은 시청자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OTT의 거센 공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EBS를 포함한 지상파 사업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명백한 위기이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네, 그렇지요? 요즘 KBS 정도 되는 공영방송도 대하 역사드라마를 옛날에는 200부작, 100부작 하던 것이 사라지고 30부작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내기에 급급하고 그다음에 요즘 퓨전사극 이런 것도 보면 20부작, 14부작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TV만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립습니다, 한번씩 보면.

요즘 케이블TV 보면 옛날에 지나갔던 드라마나 또는 역사드라마 같은 것 재방송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저는 또 보고 그러거든요, 한번씩 보면. 봤던 건데 그렇게 한번씩 아들이 보면 아빠 봤던 것 왜 똑같이, 불멸의 이순신 왜 또 보냐고 그러거든요, 다 아는 것 왜 또 보냐고. 그만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 EBS는 국내의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맞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교육 보완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EBS가 방송 채널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EBS의 모든 콘텐츠를 네트워킹화하여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EBS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는 EBS 메인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서비스되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BS PLAY를 통해서도 서비스 되고 있다.

앞으로는 EBS의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각종 지식정보 등 모든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N스크린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N스크린은 TV,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콘텐츠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말한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및 콘텐츠 서비스 분야는 모바일 중심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EBS의 미래 플랫폼 전략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다. 왜냐하면 EBS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 환경을 이용한 수익원 다각화가 수익 증대 전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현재 일부 영상 클립이나 학습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 재원 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을 담은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EBS는 국민을 위한 미래의 공공통합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EBS 자체에서 이렇게 벌써 평가를 하고 있네요.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립 목적을 봤을 때 지금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이런 부분은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 비율 줄이기. 재방송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EBS2 TV는 재방송이 80%라고 하니까 좀 심하지요, 그렇지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공적재원의 확보. EBS1 TV의 본방 제작 비율은 52.7%로 2022년의 53.3%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EBS2 TV는 본방 비율이 2022년에 13.6%에서 2023년은 18.2%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EBS2 TV의 재방 비율이 80%가 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공영방송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있던 EBS 일을 없앨 수는 없고, 그렇지요?

2022년도에 공적 재원인 교육보조금이 520여억 원이나 감소한 여파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제작비 삭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EBS의 본방과 재방 비율 문제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질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획·제작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EBS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뒤 사회적인 어젠다로 만들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해 EBS가 존재하기 위한 재원을 공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둘째, 포맷 판매와 해외 진출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이것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요.

콘텐츠의 판매와 유통을 통한 수익원 확장과 관련해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KBS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채널 판매와 콘텐츠 판매 외에 포맷 판매 실적을 늘려 오고 있다. MBC 복면가왕 아시지요? 복면가왕의 경우는 미국의 Fox 방송을 비롯해 전 세계 54개국에 포맷을 판매했다. 복면가왕의 미국판도 있는가 봐요. 미국판의 제작자인 크레이그 플레스티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케이팝, 음식 등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K-포맷 수출의 적기라고 말했다.

현재 EBS의 경우는 채널 공급 과잉과 콘텐츠 판매, 제휴사업의 실적은 보이나 타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포맷 판매에 대한 기록이나 실적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EBS의 경우 콘텐츠 소재가 제한되어 있지만 유아와 어린이 콘텐츠 분야에서 EBS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유아·어린이 콘텐츠를 포함해 얼마든지 포맷 판매 분야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는 EBS의 해외 진출에 대한 것이다.

현재 EBS가 겪고 있는 재정적 압박은 EBS의 거버넌스나 공적 재원 지원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EBS의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재원 확보 전략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EBS가 지속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KBS와 MBC, SBS와 같은 지상파 사업자들은 KBS와 같은 자회사를 통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사업 영역을 글로벌 공간으로 확대해 왔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EBS도 이미 프로그램 수출, 공동제작,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방송 모델 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타사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EBS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되어 온 다큐멘터리와 교육콘텐츠 영역에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당장은 큰 실적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이고 미래의 EBS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시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제언이 일곱 가지인데 한번 돌아보면 EBS가 해야 하는 일들 중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했고요. 두 번째는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송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가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서이초 사건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의 너무나 너무나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EBS에서도 교권 회복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고요.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년부터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 아시지요?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드디어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완전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음에 지역구에 가시면 학교를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방문하게 되시면 미리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와, 의원님 역시 다르시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됐지요?' 이러면서 먼저 말씀 딱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전문가시다'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3·4학년부터 시작하고요, 중학교·고등학교도 시작하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한 번에 다 들어오면 학교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연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사실 시스템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폰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쓰는 게 몇 개 안 돼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 안에 있는 기능을 막 정말 마음껏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생님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전문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교육 현장의 내년의 이슈가, 지금 말하는 3번의 교육 현장 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 내년에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될 것은 뭐냐면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장관님께서 가을쯤에 한번 현장에 가 보자 하시던데 선생님들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AI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니까 AI가 다 가르쳐 줄 것같이 느껴지지요? 챗GPT같이 그렇게 할 것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AI처럼, '똑닥'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래요.

그러면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우려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기기 만지고 학교 가 가지고 교과서까지 디지털화되어 버리면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책이라도 제대로 읽겠나' 이러면서. 그렇지요? '건강에도 안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합니다.

걱정할 만합니다. 할 만한데 이게 세계 최초 시도기 때문에 사실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되는 조건 중에 큰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노력이지요. 연수도 잘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학교에 안착이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역구에 있는 학교 가시면 다 메모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에 충분한 교육 현장의 이슈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늘봄학교 같은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연중기획 제작으로 교육방송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연중기획 제작 이것 참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EBS는 교육으로 특화된 교육 공영방송이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육인데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 답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프레임을 만들어 그 이슈를 다룬다. 하지만 문제가 장기화되고 구조화됐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다루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켜 있을 경우에는 아예 손대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 가야 할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등등이 모두 단발성으로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교육방송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나왔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못 봤는데—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역시 지방대학의 위기,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 현안이 나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나 토론, 해설, 논평 등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입시제도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교육 문제, 영원한 숙제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의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런데 딱 나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고 해설하고 논평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안 만드는 것 아시지요? 초등학교 1·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없습니다. 왜 안 만들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도 좀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늦추자는 거지요. 문해력이라든지 또는…… 애들이 안 쓰잖아요, 요즘. 종이에 글을 안 쓰는 세상이 됐거든요, 요즘. 쓰기를 잘 안 해, 쓰기를.

그러니까 1·2학년들이 지금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디지털화돼 버리면 종이 안 쓰지 않습니까, 공책에? 책에다가. 그러니까 1·2학년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할 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3학년, 4학년도 과목을 좀 확대 안 했으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는 과목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과목은 수학, 영어 이렇게 과목이 또 몇 개 한정돼 있습니다. 이 과목도 확대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올 때 학년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과목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구나'. 맞습니다. 맞는데,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과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교육부에 했습니다. 왜? 3·4학년도 아직까지…… 적어도 한 5·6학년 정도 돼야 좀 선생님 말도 통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도 손이 많이 갑니다. 선생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벌써부터 디지털교과서 다루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보다는 1·2학년처럼 전통적 교육방법을 좀 익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과목도 다른 5·6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과목이 확 확대되는 것을 저는 좀 원치 않습니다.

저 교육부장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진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알겠다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장관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아마 나중에 나오실 거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학년은 1·2학년에 가깝지요. 제가 4학년부터는 급식을 할 때 '야, 밥 떠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밥 떠라', '느그 밥 뜨자', 이제 좀 스스로 뜰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3학년 때까지, 1·2학년은 무조건 예전에는 막 퍼주는 식이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급식할 때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1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지금 방금 나온…… 세 번째 제안처럼 교육 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교육 뉴스를 통해 일부를 다루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문제를 노출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방송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방송의 설립 목적인 민주적인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이슈를 어젠다를 정하고 솔루션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면 한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면서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 지방대학 소멸위기 그리고 수능시험 시행 횟수의 개선과 같은 주제는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3대 개혁이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까지 들어왔는데 왜 성공해야 되냐면요 교육 개혁이 성공해야 저출생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자꾸 만나 보면, 그 젊은 세대 어머님들 만나 보면 아이를 낳고 나면 돌봄과 육아가 일단 딱 걸리거든요. 요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장인, 장모님이 애기 잘 안 키워 주잖아요, 요즘요. 딱 부딪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부터 사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면 학력 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하면서 의대 보내냐 마냐 이런 말 나오면서 급속도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부터, 또 대학에 보내더라도 그 등록금, 모든 그런……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부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올 수 없다, 즉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큰 문제로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저출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큰 것 중의 하나가 돌봄이지요. 늘봄, 돌봄 그다음에 육아, 사교육 문제, 입시 전쟁 또 좀 더 포함시키면 학교 폭력,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학교 폭력 터지면 막 무섭거든요. 와, 아이 태어났더마는 학교에서 저런 폭력이나 당하고 그러면 불안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EBS에서는, EBS가 특별기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특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특히 수능시험을 단 한 번 치르는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두 번 치른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지난번에 대학 시험 치를 때, 수능 치를 때, 정시 치를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꼭 배가 아픈 게 있었어요. 이놈이 희한하게 시험만 보면 딱 배가 아파 가지고. 그것 왜 그런데, 무슨 과민성 대장 뭐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제가 수능 치르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어떻게 아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아,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 가지고 와,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하여튼 배에다가 따뜻한 것 무슨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이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길래 실제로 '에이, 모르겠다. 그래,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가지고 실제로 수능 치르기 전날에 사와 가지고요 이거 나중에 시험 치르기 전에 배가 좀 아파 오면 한번 붙여 봐라 이랬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 수능을 한 번 치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능 한 번을 잘 치르지 않으면 1년을 죽을 고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저는 쌍둥이라서 도시락을 두 개를 쌌습니다. 딸하고 아들이 쌍둥이라서 수능을 둘이서 치러야 되니까 도시락을 두 개를 싸야 되는데 그 새벽에 도시락을 싸게 되면은, 도시락을 싸다가 소리가 나면 아이가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배우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딱 일어난 이유가 도시락 싸면서 음식을 쌀 때 보면 반찬하고 밥하고 이러다 보면 소리가 나면 아이가 자다 깨면은…… 아니, 지금 잠들어 가지고, 딱 수능 치러 가기 전에 중간에 깨지 않고 바로 잠을 푹 자다가 깨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혹시나 우리 도시락 싸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깨 가지고 한 한 시간 반을 그냥 깬 상태로 허비해 버리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 저 아빠 과잉이네’ 이런 생각 하시겠지요. 그런데 수능이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치르니까…… 그래 가지고 도시락 싸는 제 배우자 앞에 딱 앉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냥 보면서 이렇게 반찬 딱 하고 있으면 ‘소리 낮추세요. 소리 큽니다. 소리 낮추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배우자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썰면 소리가 나지 소리가 안 나냐면서.

그만큼 예민했던 이유는요 그 수능 한 번으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니까 집안이 비상입니다, 비상. 또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그날 배탈이라도 한번 나 보세요. 가슴 아픕니다, 부모로서.

우리 세대는 이게 지났다 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능 한 번 치르는 것 이것, 그날 아침 8시 10분까지 가 가지고 오후 5시 40분까지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내면서…… 이런 시험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바뀌려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것 누가 보도해 주겠습니까? EBS밖에 없어요. EBS가 중요합니다. 종편에서, 예를 들면 KBS가 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 단 1회의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의 기회를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SAT 많이 들어 보셨지요? ACT의 경우는 1년에 4회 정도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학생들은 각자의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그중 자신이 획득한 최고의 득점을 선택하여 대학 입학 자료로 사용한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시험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방과후 각종 스포츠 및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활동들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재능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하면서도 전인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교육 전문가와 교육방송의 제작진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통해 어젠다를 정하고 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방송이 타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하고 존재감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평가 보고서가 상당히 좋네요. 저도 대충은 봤지만 오늘 정말 자세하게 읽어 보니까……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확실하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이게 더.

그런데 갈수록 피곤하지 않고 더 힘이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끝까지 한번 가 볼까요? 곽규택 의원님, 8시 반까지 오늘 갈 겁니다. 김용태 의원 시간 기록은 못 깨지만 새벽에 8시간이면 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정말 이것 입시제도,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수년간의 노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합리적인 시험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방과후 각종 스포츠 및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활동들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재능 활동과 봉사 활동 등의 다양하면서도 전인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교육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교육 전문가와 교육방송의 제작진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이게 EBS만 이렇게 안 하고 KBS나 MBC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SBS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EBS는 보는 시청자들이 나름 아무래도 폭이 좀 좁지요.

그다음 교육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아까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일곱 가지 있었고요, 교육 부문을 제가 살펴봅니다.

2023년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교육 부문은 EBS가 법률적으로 주어진 과제인 학교교육 보완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EBS가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콘텐츠·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게 EBS의 역할입니다.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교육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학교교육 보완을 위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가는 EBS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정부 보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한 평가 대상 교육 서비스는 고교 강의, 영어 채널, 수학교육 등이었다.

둘째,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EBS가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는 첫째, 중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유료 서비스하던 중학 프리미엄을 2023년 7월 무료로 전환한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늘었다 했지요? 1만 5000명이던 수가 22만 7000명까지 늘었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1년에. 2023년 6월 말 이후 정책 과제로 등장한 공정 수능 및 사교육 카르텔 이슈에 대해 사교육 억제 특별대책단을 발족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점.

작년 6월이었지요, 대통령께서 그때 수능 킬러문항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수능의 평가나 모의고사 평가들에서 수능의 킬러 평가가 사라졌지요. 문제가 사라지면서 나름 지금은 그 취지는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전히…… 지금 킬러문항 사라진 것 분명하답니다. 분명한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킬러문항이 사교육에 또 큰 부담을 줬잖아요. 킬러문항 하나를 풀어내기 위한 사교육이 또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를 우리가 풍선효과라고 합니까? 이런 걸 누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면 100% 좋아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킬러문항을 없애서 공정 수능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제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정책 과제로 등장한 공정 수능 및 사교육 카르텔 이슈에 대해 아

까 이것 특별대책반 아시지요? 이번에, 지금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교육비, 문제은행 같은 것 막 팔고 또는 수능 문제 같은 것 이런 것 출제했던 분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단속하고 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요.

EBS가 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첫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전환 교육 서비스 TF를 운영하여 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한 점, 둘째 경기도교육청, KT와 협력하여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한 점, 셋째 AI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AI 펭톡이라는 게 있네요—AI 문항·강의 추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 점, 넷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하였다.

교육 부문 평가항목들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평가항목이 있냐 하면 교육서비스 목표의 적정성 그다음에 학교교육 보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게 제대로 됐느냐를 평가했다는 것이겠지요.

또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노력했느냐, 교육공동체 지원을 노력했느냐, 미래교육 지원을 노력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성과, 대외협력 제고 성과 같은 것들, 또 재원을 확보했느냐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의 제작 성과가 있었느냐 교육 플랫폼 운영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활용도 및 이용자 만족도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부문 평가항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3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이 좀 보입니다, 슬슬. 뒤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슬슬 마무리가 좀 되어 가네요.

2027년 100%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EBS는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기준 58.9%를 달성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쪽이지요. 방송제작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개선율 증진에서는 제작시스템 16종 67개를 교체함과 동시에 노후장비 유지보수를 통해 노후화율을 개선하였다. 아까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재정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를 잘 못 하고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재정이 튼튼해져야 되겠지요.

또한 EBS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개념화하는 전사적 노력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미래 차세대방송 기술모델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와 함께 지금 수행하고 있는 미래 신기술 도입 및 적용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뉴미디어 연구, 미래 미디어기술 철학, AI 리터러시 등의 연구가 정례적으로 논의되는 틀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또 보시면 EBS 안에서 인간이 되자!, 명의 같은 프로그램들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이런 프로그램 내의 불필요한 오브젝트 제거 등의 노력도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EBS 상생협력 강화 경영목표에 대해서 라디오 제작환경 개선을 통해서도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도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EBS 내용들을 죽 살펴보면 지금 EBS가 자체로 어떤 경영평가를 내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자신 있게 자료로 가져왔고요. 이걸 또 받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걸 같이 한번 또 많이 읽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EBS가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세 장 정도 남은 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경영평가보고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저도 화장실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4시간 하셨어요, 4시간」 하는 의원 있음)

여기까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4시간 정도 했습니까?

마지막 정리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선 권고사항인데, 이걸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어떤 것이 개선 권고사항에 들어 있는지를 제가 1개 정도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영 부문입니다. 부문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경영 부문이 있고 방송 부문이 있고 교육 부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 권고사항을 제가 몇 가지씩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영 부문에서는 재정이지요. 비상경영체제하에서도 기관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목표 및 전략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EBS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야 되겠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공사는 수익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의 확장과 수익 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과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R&D 연구팀을 활용하여 방송, 교육, 정책 이슈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혁신성을 도입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부문. 아까는 경영 부문이었고요.

방송은 이겁니다. 교육으로 특화된 공영방송인 EBS는 KBS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아까 이 내용 안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EBS가 전문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교육에 관련돼서. 가장 앞서가는 방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육 부문을 보면요, 교육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EBS는. 그래서 EBS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교재 및 강의 품질을 강화하여 사교육 대비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수능 연계 방식을 직접 연계로 전환해 가지고 연계율을 지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를 적극 설득해 달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교육 부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에 적극 대응해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온다는 것, 초등학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기술 부문은, 아까 기술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 횟수는 이게 필요한데 평균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연수 참여를 좀 독려해야 되는, 또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도 보면 부산시교육청 밑에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연수원이 보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연수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사실 저는 이번에 디지털교과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선생님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별로 그렇게 부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개별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수업을 해 줄 수 있으면 대단한, 선생님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수는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또 원래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은 교권이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업무가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처우도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원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불편한 건 아니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규로 임용되면, 교대를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되면 첫 월급은 거의 9급 공무원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저희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재정적인 그런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좀 박했지만 연금이 사실 있었거든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지금 벌써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개혁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그런 어떤, 든든했던 연금들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환경이 좀 더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학생들 대하기도 어렵고 학부모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수업도 해야 되고, 요즘 선생님들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또 상담능력도 있어야 되고 참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을 길러 내는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대우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수당이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장 수당 100% 이상 인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와’ 하지 않습니까? 부장 수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7만 원이 15만 원 되니까 8만 원이 오르니까 100% 인상 맞잖아요. 너무 늦게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7만 원 하던 걸 15만 원 받으면 8만 원 더 생긴 건데 그걸 100% 인상이라고 그렇게 하니 안 와닿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장을 맡으면 너무나 과한 업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대우라 해야 됩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서 가슴 아픈 이런……

선생님인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9.5%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 5월의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 한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다음에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19.5%만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7.5%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19.5%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만큼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동기 부여가 많이 약해졌고요. 또 교대생들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많아지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의원면직을 하는 선생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 정성국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젊은 선생님들 중에 의원면직, 즉 사표 내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훌륭한 좋은 분들이 많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저 화장실 한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학영 예, 다녀오십시오.

○정성국 의원 감사합니다.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주입해야 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나친 막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 쓴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EBS에 관련된 것에 집중했고 이제는 공영방송법이, 저희는 방송장악 4법이라고 사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사 구성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추천하는,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방송 관련 학계, 공영방송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종사자 단체에서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방송 유관자 집단의 추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차지하여 공영방송의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게 돼 있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 집단인 방송계에서 관리 감독자를 선발하게 되는 결과 방송 외부의 일반 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의 수립이 되었다. 이것은 한 편의 논문이니까 너무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너무 민감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종사자들에게만 방송의 관리 감독을 맡긴다는 것이 문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임.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계속 이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임.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책까지 보니까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책입니다. 2학년 사회 책입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소식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직무를 집행한 기간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특별히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찾기 힘든데 탄핵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그분은 사퇴를 해 버리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 신임 위원장 임명자, 그러니까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벌써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직무를 집행해야 돼요. 집행하면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참 모호한 경우들, 또는 직무를 수행한 기간도 거의 없어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탄핵을 해 버리고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 사례를 좀 만들어 보니까, 아까 여기 지금 논문을 읽으면서 드디어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걸쳐 가지고 탄핵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헌법 제65조 1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무집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절차라든지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대장동·백현동 수사라든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이런 위증교사 수사를 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 검사들은 사실 수사 개시가 돼 갖고 수사를 한,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이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요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을 때, 야당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보면 여론에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정치를 잘못하시면 나중에 2027년에 선거할 때 저희들은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국민이 부여한 5년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을 넘어서 근본을 흔드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26년 하면서 학급에서 반장선거를 매년 하고 전교어린이회장선거도 해 봤지만 학생들이 반장이나 전교어린이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라 소리 하는 일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그때 뽑아 가지고……

반장으로 뽑아서 반장을 만들어 놓은 그 반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지만 그 반장이라는 임기 1년을 부정하고 ‘너는 반장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그런 개념은 갖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다음에 학년 바뀌어 가지고…… 때로는 한 학기만 반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학기에 안 뽑아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 가지고 다른 반이 되면 다른 반에 있는 학생한테 ‘저 친구 내가 작년에 반장 뽑아 줬더만 진짜 아니더라’고 소문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반장 나가게 되면 낙선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 당당하게 선출하신 대통령을 정책을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맞지 않는 게 있다 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 심판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생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오늘 아침 8시 반 되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희 심판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 총선의 192석과 108석의 의미가 국민의 비율로 따졌을 때 만약 192 대 108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은 한 70%가 지지하고 국민의힘은 30% 지지한 게 아니거든요. 불과 해 봐도 한 5% 차이 아닙니까. 50 대 45 정도 되는 비율인데 소선거구제라는 그 제도하에서 192 대 108석이라는 게 나왔지만 그 50 대 45라는 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이고.

그러면 그 정도 지지를 받은 상대 당인 국민의힘이 협상의 대상조차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간 있었던 국회를 보면 국민의힘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와 심도 있게 타협과 대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꽉 막혀 버린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남아 있는 3년 10개월은 상생의 정치 또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2인 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탄핵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여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질서가 훼손되는 결과에 이른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과 방송 현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뒀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배경에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현재의 방송 환경이 있었습니다.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 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 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서 광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다매체·다채널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로 인한 지상파의 한계, 공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적 운영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 문제로 드러나는 공적 재원의 투입과 경영 악화의 재정구조 문제, 공영방송을 유지한다면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체제는 앙시앵 레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에 투자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제작과 송출 및 콘텐츠 판매를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

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상에 걸친 거버넌스가 논의가 중단되고 그동안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양도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은 종래의 거버넌스 논의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2022년 12월 내놓은 현재의 안이 아니라 박홍일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으로 수렴된 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이어 가야 합니다. 관리 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에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OTT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휩쓸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적 방향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적 부분의 구조 개선의 논리의 출발점이 방송정상화 개혁입니다.

입법행위가 행정을 장악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헌법질서 문란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의문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BS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경영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많은 것을 또 우리……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오늘 8시 반이 되면 표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이런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사실 사설을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신문 사설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읽는 것은 제 자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상대의 의견을 가진 당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동료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한 합의된 법안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래도 이것은 나와 있는 사설 몇 개 정도는 제가 한번 읽어 보고 싶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나중에 또…… 이것도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읽고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4법이 오늘 8시 반 정도에 통과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 합의가 안 된 법안들이 또 지금 국회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저희 당도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

같고요. 지금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이런 계속적인 반복을 걱정하고 계시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는 참 짜릿한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정치에서 국민들께 시원한 소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거부권 행사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의원 있음)

그 말씀도, 민주당에서 그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당부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3년 10개월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기싸움한다 하니까 이런 일도 있는 것…… 요즘은 또 허니문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고 이러면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개원식도 못 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교육자 출신의 영입 인재로 들어온 저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설을 하나, 두 개 정도 읽겠습니다.

매일경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추진에 방통위 수장 또 사퇴, 야 방송장악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켰다. 방통위가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은 물론이고 직무대행을 상대로 잇따라 탄핵안을 발의한 탓이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친민주당 성향의 방문진 이사가 교체되면 역시나 친민주당 성향의 MBC 경영진도 바뀔까 걱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지난해 말에는 이동관 위원장이, 이달 초에는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상인 직무대행마저 물러났다. 이로 인해 방통위에는 방통위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은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방송·정보기술·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무력화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조만간 선임될 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공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재개할 경우 탄핵으로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위원장은 최장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 인한 방통위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자진해 사퇴한 것인데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다. 공영방송 장악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억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과 KBS 이사는 국회에서 5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종사자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학회와 협회는 대체로 진보성향이 강하다. 결국 방송 3법도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꼼수다. 지금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다.

사설을 읽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하나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추미애 의원님 하실 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가셨는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때 나와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거 하시는 거니까요.

한국경제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물불 안 가리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 이 정도면 중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거나 입법 절차에 들어간 특검법들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특검의 취지는 뒷전이다. 정략을 앞세워 저인망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채 상병 특검법만 해도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을 또 강행 통과시켰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문제 투성이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강화된 법안 재발의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설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몫의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 4명 모두 야당이 임명하도록 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야당은 여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 대상으로 삼은 자녀 논문 대필 등은 대부분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수사 중에 있다. 야당은 두 특검도 모두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애초부터 공정성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씨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를 규명하겠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도 발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도 재추진한다.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유죄를 받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부인은 징역 4년이 확정된 마당에 조국 사건 특검도 꺼내 들 태세다. 이 정도면 특검 중독이라고도 할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탄핵 겁박을 하고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과 탄핵으로 날을 새는 정당들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저희 보수 언론이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읽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일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방독주 거야에 중도층 등 돌리는 건 당연하다.

저는 이것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은 늘 요동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당장 2년 후의 선거나 이런 것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이런 또 생각하면서 조금 과소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지금 지방선거 2년 남았고 대통령선거도 3년 남았지요. 아직 좀 보궐선거라든가 당장 지금 내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이 된다거나 이런 또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국회 권력을 민주당에 줬더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몇 달 동안 국회가 마비가 되고 특검과 탄핵을 난발하고 그다음에 합의가 되는 법안 같은 것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고 조롱이 난무하고 상대를 경멸하고, 의석을 좀 많이 줬더니, 의석을 이렇게 다수를 줬더니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또 이런 결과, 표 밀어주고 표를 몰아줘 가지고 주면 민주당이 또 입법 횡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행태를 할 건데 또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런 과거 소환만 되는 거지요. 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머나먼 일인데 '지금 잠깐 떨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지선이나 대선할 때 우리 시의원·구의원들을 지원 연설을 한다든지 대통령선거가 있거나 이래 되면 연설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그 구민들이나 시민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었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곡해해서 어찌 보면 정치를 마비시키고 국정을 대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92 대 108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사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식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심판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을 확실히 이루어 달라. 국민의 삶을…… 우리 이재명 전 대표님 그런 말 하셨잖아요,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잘 살피고 행정부가 못 하는 일을 견제 잘 하고 이런 국민의 뜻은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존재, 여당의 존재를 깡그리 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는 그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석은 192 대 108이지만 투표율을 보면 50 대 45 정도였기 때문에, 그 5%는 결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2022년 지선은 또 저희 국민의힘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우리 2022년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압승했거든요. 그러면 보수나 진보에서 말하는 그런 확고한 지지자들 외에 우리가 말하는 그 30% 정도 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집권 여당에 책임을 많이 물으신 거지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고 뭐 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국정을 책임진 당신들 책임 아니냐? 우리가 너무 먹고살기가 힘들다, 정권을 교체해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좀 더 깊이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주 한국갤럽을 비롯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올 들어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중반까지 치솟아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최대 10%p 이상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약진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의 횡포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 상당수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정쟁 탓에 빚어진 부끄러운 정치 현실이다. 알다시피 식물국회의 주된 책임은 거대 야당에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건 당연하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행태에 대한 국민적 경고로 읽힌다. 사실 민주당은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 성향의 국민 눈높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이재명 1인 체제가 굳어지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게 가장 큰 문제다. 당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 강요되는 건 정상적인 민주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 심하게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고 오로지 현 정권을 타격하기 위한 특검과 청문회를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오독해선 안 된다. 중도층 표를 더 많이 받은 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었다. 역대급 경기 불황과 여권 내부의 약점 덕이었다. 국민은 민주당에 정치를 파탄시킬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험난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의 걱정도 있었고 또 실망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쟁쟁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표가 나와 가지고 선거를 하니까 국민들, 당원들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국민적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지요? 너무 뻔한 경기는 안 보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것 보더라도 미국 NBA에 있는 농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곤 했는데 그 선수들이 나온 미국팀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더라도 TV를 잘 안 보려는 성향이 왜 생길까요? 100% 지니까. 100% 지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 우리가 브라질하고 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만약에 두 골을 먼저 잃어도 끝까지 봅니다. 왜 끝까지 봅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새벽에 하고 있어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참아 가면서 월드컵 축구를 봅니다. 아, 2 대 0으로 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한 골씩 넣으면 돼. 할 수 있어.

그런데 브라질하고 경기하면서 2 대 0이 돼 버리면요, 두 골 먼저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제법 많은 숫자가 TV 끄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수가 TV 끄고 들어가 자는 사람이 많아지지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실력 차가 많이 나는데 전반전에 두 골이나 잃었으니 후반전을 기약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밤새면서 잠 못 자면서 버텨 가지고 내일 직장 가서 근무하는 것 힘든데 이것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볼 필요 있냐 싶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이니까……

(「관련된 얘기만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90%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김두관 의원님, 우리 부울경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약간 좀, 아무리 상대 당에 있는 의원이시지만 그 어떤 결기와 두려움 없는 용기……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 욕 들어 가면서, 그 개딸들의 욕 들어 가면서 하겠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개딸들이 지배하는 당은 안 된다'. 또 이재명 전 대표께 물어보잖아요,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김두관 의원이 계셔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살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 당 의원이지만 칭찬할 건 해야 되잖아요. 김두관 의원님 저 새로 봤어요. 와, 저것 정말 쉽지 않은데 누가 덤빕니까,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나가 가지고 그 수많은 당원들 앞에서 항의받으면서, 전부 다 호위무사만 옆에 가득한데 거기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 다시 보이지요. 김두관 의원님이 후보라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보는 사람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63% 정도 받았다고 지금 압도적 지지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90%라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민주 정당은 다양성인데……

또 책에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민주주의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잘 만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 제가 아까 법만으로 된다고 책에 안 나와 있다 했지 않았어요? 법만으로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 몇 조에 있느냐고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분 계시지요.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양보와 타협, 관용 또 뭔지 압니까? 비판적 태도.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나와서 보실 분 보세요. 아까 파워포인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띄워 달라 하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양보와 타협, 관용, 비판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비판적 태도가 없으니까 90%가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여론조사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양보와 타협, 상대방과 서로 어떤 일을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서로 입장이 맞설 때—지금 우리 국회 상황 아닙니까?—양보와 타협으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풀어야 한다.

그다음 관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192석 가지고 있으니까 108석 가진 너희는 입 닫고 있어, 이런 태도는 정말로 잘못된 태도지요. 그렇지요?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때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비판적 태도로.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그것 비판적 태도가 있는 거지요.

사설 참 제목이 좋네요, ‘일방 독주 거야에 중도층 등 돌리는 건 당연하다’.

이것도 정성국이 이렇게 하면 지가 저런 말 한다고 하지만 사설이니까, 뭐 안 그렇습니까? 사설 쓴 거니까…… 나중에 또 사설 몇 개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법 통과시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하고 협의 없이 통과시킬 때는 조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여기 ‘퇴거 명령’ 이런 것 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아시지요? 정청래 의원. 어떻게 같이 나와서 다투고 있는데 우리 쪽을 향해서 퇴거 명령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통과시킨다 한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 또 더불어민주당도 힘 다 빠지겠지요? ‘우리 190석 가지고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한 번 행사해 버리니 끝나 버리네’, 이것도 허무하지요, 굉장히.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허무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년 10개월은 이런 일이 계속, 지금 주호영 부의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자, 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요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입니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가짜뉴스잖아요. 생태탕, 옛날에 김대업 사건이 제일 컸지요, 김대업 사건. 이회창 총재 있을 때 김대업 사건이 정말 그때 컸지요. 그 엄청난 대선 주자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회창 총재님 지금 돌아봐도 참 아까운 인재셨지요. 김영삼 정부에서 발탁되셔 가지고 국무총리로 대쪽 총리—처음에는 감사원장이었지요—하시면서 아들 2명의 병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이인제 대표 들어오는 바람에 막 분열되고 이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39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두 번째 선거 노무현 대통령하고 할 때는 이회창 대세론이라 해 가지고 거의 이긴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참 국민의 선택이…… 어찌 보면 아까운 인재를, 두 번이나 낙선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오더라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참…… 아들의 병역 문제만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됐지요. 그렇지요? 참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지도자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회창 총재도 김대업 사건의 희생양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늘 알잖아요. 생태탕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뭐 일만 있으면 벌어지는 이 가짜뉴스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발본색원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너무 비겁하잖아요.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예전에는 참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좀 계셨거든요. 어릴 적에 보면은, 그렇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더라도 김대중·김영삼, 우리 민주화의 최고의 두 분이셨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참 존경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대놓고 막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24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24조 이번에 체코 체결한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너무 기뻐 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 해 줘야 되는데……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비판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다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가짜뉴스의 생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현대인은 AI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1개의 망으로 80억 명 세계 인구가 커뮤니케이션을 영위하면서 서로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각기 다른 이념을 갖고 있어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풀이도 불가능하고 공존도 불가능하다. 분명 다양성의 세계이지만 세계 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그 세계 시스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조화를 찾고자 한다.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생산, 무역, 은행, 상법 등 갖가지 경제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 참여하는 개인은 탐욕, 정치적 이익, 부자가 되기 위한 동기와 자유를 갖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다. 방송법은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도 ①방송매체와 방송 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한다, ②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법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방송 영구 장악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이 계속 회자된다.

권력의 의지로 신기술은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만용을 부리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

로 기사를 쓰고 국경을 초월한 거대 기업은 언론시장을 교란한다. 세계 공영방송은 국내 공영방송이 담을 쌓고 몽니를 부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구를 놓고 보면 언론자유가 싹틀 수 없게 되어 있다.

방송법은 현기증이 날 만큼 길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봐도 합계 68조항이나 된다. 기본권이 이렇게 제약이 많다. 기본권일수록 간단하다. 아니면 통제가 심하다는 소리가 된다. 헌법 제21조 언론자유 조항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언론자유 조항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언론은 제4부로서 밖의 권력기구를 견제한다. 언론을 제4의 헌법기관이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그냥 둘 수가 없지요. 너무나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생활영역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금 국내의 현실은 4부까지 한 팩으로 체제의 권력기구로 작동한다.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체제 편에서 확증편향성의 가짜뉴스가 언제든 고개를 든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확증편향성?

개인 차원의 자유와 동기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제도를 굳건하게 형성시키지 못한다. 자유와 책임이 겉돌고 역할과 역할 기대가 함께하지 않고 기술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그 현실을 직시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건설한 대한민국은 그래서 특히 돋보인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 그리고 끈질긴 성향을 지녔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이 무지와 거짓의 늪에 빠져 들어가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중 선동과 선전술을 연마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인류가 오랫동안 비참하게 겪어 온 가난을 퇴치하고 풍요를 선사한 자본주의를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덧칠하고 대중을 선동한다. 그것은 물론 자원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 세상의 근원적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이다. 반값 아파트와 반값 등록금, 내는 돈보다 한결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연금, 1인당 25만 원의 돈을 나눠 주며 민생을 돌본다는 것 등은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를 내건 지난 정권의 뒤끝은 어떠한가. 국가안보는 실종됐고 나라 재정은 빚더미 위에 올라섰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 물가는 다락같이 올랐다. 세금 또한 가정 파괴 수준으로 올려 사람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반성과 성찰은 없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권토중래를 노리는 권력 싸움에만 집착한다. 이런 절박한 현실로 볼 때 공영방송이 전혀 질적 다양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민영의 역할이 전혀 다르다. 민영방송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나 공영방송은 질적인 다양성을 추구토록 한다. 여기에서 다양성은 원래 자유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사회는 가짜뉴스로 소란스럽다. 남승헌은 2022년 기준으로 가짜뉴스가 KCI 등재

논문으로 233건에 이른다라고 한다.

본 기고의 관심은 확증편향성의 문제, 가짜뉴스의 문제 등을 기술의 철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규정하고 공영방송, 한국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 운영이 이렇게 된 난맥상을 겪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공영방송의 난맥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이 확증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나팔수였던 공영방송은 물론 그 경향에 감금되어 있었다.

공영방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과 국가 정체성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옥상옥의 규제 기구로 자유주의 헌법정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질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여기서 확증편향성은 이미 믿고 있거나 선호하고 있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그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전시키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 확증편향성이 정말 좀 심각합니다. 이게 혹시 OTT 문화, 유튜브의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찾아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TV를 켜면 물론 MBC는 안 보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안 보는 건 안 본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KBS를 보면 옆으로라도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채널이, 가족이 4명이면 TV가 4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확증편향성은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있거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극우,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주 편향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보게 되고 그걸 보면 즐겁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하면서 확인하려고 하고……

이 확증편향성의 문제가 진짜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믿고 있거나 선호하고 있는 사실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그러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전시키는 메커니즘인 거다. 이 확증편향성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근 확증편향 사회는 소통의 장애가 되는 가짜뉴스 진원지로 작동한다. 그렇겠지요. 확증편향 사회니까 당연히 가짜뉴스 창궐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공표하면서 여론을 형성함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 혹은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확증편향성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오정보, 허위 조작 정보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 선거철이 되면 이것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걸 구별해 내는 능력 이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어떻게 이 중립성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는 학생들도 스스로 알아서 다 찾아보니까. 한 초등학생만 돼도 유튜브 다 보거든요.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또 좀 자극적이잖아요, 항상 내용이, 제목부터 딱.

언론자유에 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곡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언론자유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송법과 동일한 차원으로 공영방송 운영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것 우리가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유권의, 자유의 제한이지요? 그렇지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요. 우리 계엄선포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기본권이 꼼짝할 수 없게 감금되어 있다.

연방 수정헌법 1조를 중시하는 미국은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프라이버시, 현실적 악의, 위축 효과 등이 아니면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한다. 미국이 더 아마 허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언론자유를 좀 많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나라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만큼 선진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하고. 그렇지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언론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인데 왜 정부 기구가 이렇게 복잡하게 규제하는지 의심스럽다. 지도자가 확증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독일의 경우 전혀 다른 문화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1991년의 제6차 방송 결정 방송수신료와 광고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됨으로써 연방헌법재판소가 행동강령으로 방송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안 읽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 뉴스는 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르고 왔다. 그렇지요? 육하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세계화 개방된 상태에서 사이버 영상물로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 낮은 방송을 계속했다.

과거 취재 제작 관행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의 정확성과 공정성으로 사건 뉴스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등한시함으로써 자칫 사회주의 사회의 선전선동에 성행하는 확증편향적 가짜뉴스를 양산한 꼴이 되었다.

공영방송 위상이 흔들렸다. 공영방송 KBS는 전례 없는 편파 방송과 보도 참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게 KBS 노동조합 특별성명입니다, 2023년의. 스스로 그렇게 반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KBS 노동조합 특별성명에서 편파 방송과 보도 참사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등에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정파성을 지님으로써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어 왔다. 더욱이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 방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참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게 민노총과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KBS 보도국장을 3대 세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쏟아지자 KBS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아홉 번을 조사하고도 또한 지금까지 기자는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사실의 정확성과 공정성 잣대가 무너졌다.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그 권력의 여지가 더욱 거세진다. 시스템의 사고라면 조직적 생활에 익숙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확증편향적 좌익 이념이다. 자유주의 사상이 아니라 유물론적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책임의식의 검증을 벗어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역사에도 봐도 공영언론은 홍위병의 보도를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 많은 뉴스를 쏟아 내었지만 갈수록 탄핵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자 엉뚱한 돌파구를 찾아갔다. 잘 기획된 확증편향성의 발로였다. 거의 탄핵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중대한 국사를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게 의존해 결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스캔들이 피부에 와닿은 것이 입시비리, 태반주사, 흙수저, 옷, 가방처럼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활밀착형 뉴스가 쏟아지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이번 스캔들은 듣기만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핏대 올리게 하는 흡인력이 강했다라고 했다. 언론이 악의적 사생활 침해를 일삼은 것이다.

자신들의 정파에 따라 시민단체는 비판 수위를 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추적보도, 최순실 태블릿 PC 등은 언론의 선전·선동 자체였다. 이때는 다 아시니까…… 세월호 7시간 추적보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지요. 그렇지요? 특별하게 또 나온 것도 없습니다, 추적보도는 많았지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낯 뜨거운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지요?

가짜뉴스의 효과가 또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짜뉴스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생산 안 하지요. 생산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으니까 생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확증편향성, 가짜뉴스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I 초연결사회에서 이런 보도는 국가 생존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사기에 딱 알맞다. 그런 수준의 기사라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월등하다. 최첨단 인터넷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이보다 더한 오보를 계속 남발하여 세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는 기술의 의미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은 노출시키는 모드이다. 거짓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끌어내리거나 그 숨은 의미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 기술의 어원적으로 보면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행위를 위한 것이나 장인의 숙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예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로 생산을 이끌어 낸다.

방송의 경우 다른 매체보다 그 매체의 특성, 즉 음향과 영상이 결합해서 나오는 특수한 영향력, 즉 대중 선동력, 영향의 광범성 그리고 영향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영

향력으로 공영방송이 정보전달 매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확증편향성을 강조하는 선전·선동 기구가 된다. 대통령을 세우고 바꾸고 한다. 그때 현대과학은 경험, 즉 자기 경험세계를 증폭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은 점점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영방송은 특수한 경험의 부분으로 빠지게 된다. 그 안에 매몰되면서 즉각적 환경에 무조건 반응함으로써 개방성을 잃게 된다. 정보전달의 편향성이 심해지고 공적 기능은 상실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잃는다. 정치공학 사회가 도래한다.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을 마음대로 선택을 한다. 기술 합리성이 작동하나 가치 합리성이 결한다. 기술이 임의적 권력기구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윤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풀이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술적 과학적으로 풀이하자.

노무현 정부 때 편향성 문제가 노골화되었다.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거세했다.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혼미하게 된 것이다. 구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추어 사회, 즉 결국 원시 공산사회로 가는 길의 보폭을 넓힌다. 수집과 채취, 즉 폭력과 테러는 일상사가 된다.

노 대통령에게—노무현 대통령입니다—그렇게 기존 세력을 적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탈권위주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외통수적 성격을 달리 보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는 자기도취성과 편협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확대 저돌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통치 심리 유형에 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적이면서도 독선과 아집의 권위적 리더십이 혼재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리더십을 구사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는 확증편향성에 쉽게 노출되었다. 언론까지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탄핵 이후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 후 색깔이 다른 언론인과 만남 자체를 꺼렸다. 강동순 KBS 감사가 2006년 4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KBS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 감사는 맨 먼저 편파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KBS 9시 뉴스에서 19건의 편파성 기사가 나갔고 KBS는 탄핵안 가결 이후 15일간 중계차를 동원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생중계로 내보냈다.

이때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지요. 그래서 사실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석을, 그때 열린우리당이었지요, 152석인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과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은 120석 정도 차지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한 거였지요. 천막 농성, 천막 당사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탄핵이 성립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편파성 기사들이 막 쏟아졌지요. 탄핵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편성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 후 뉴스의 정보전달 가치를 잃게 된다. 가짜뉴스가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정보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만큼 왜곡된 정보로 사회 갈등 비용이 많이 들었다. 국가 통합은 갈수록 난항이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정했다. 이는 전형적인 확증편향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언론노조가 나서서 문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적이지 아니한 공영방송 임직원들을 정권부역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인신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문 정부를 지지하거나 협조적인 언론노조 출신 등의 인사들로 하여금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문 정부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장악한 방송을 이른바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에 동원하였다.

한편 문재인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여, 그에 따른 해외 도피, 김정숙 여사 절친 손혜원의 회사 부동산 비리 의혹 등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나 치매설, 음주설 등 국가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근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우파 유튜브TV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고발까지 했다. 내로남불 현상이 노골화되었다. 팬덤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감정 이입으로 같은 팬과 사랑을 나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돼 나온 건 2018년 2월 1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다.

당시 블랙하우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추천수가 매크로 조작을 통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두 달 후 한겨레는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라고 했다. 정치권력과 경공모·드루킹과 합세하여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까지 합세하여 여론을 좌지우지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아시지요? 채널A 이동재 기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밝혀졌지요.

이 뉴스라는 게, 뉴스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편향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내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십성 시사 토론을 중심으로 질적 다양성의 해외 프로그램 경쟁력은 전혀 보유하지 못했고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분석 수준 등을 지키지 못했다. 인간의 관심사 속에 가치규범과 믿음 등 문화적 가치가 매몰되었다. 더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 고의 침몰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등 보도는 후일 검찰 조사에서 전부 오보로 판명이 났다. 악의적 사생활 침해, 옐로저널리즘의 전형이었다.

지금 공영방송에 가짜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해결책이 뭘까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네요.

밖에 해는 떴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 가짜뉴스의 역할 그리고 그 해결책, 그 해결책입니다.

독일의 경우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왔다. 매체마다 중심을 잡은 프랑스 공영방송은 신뢰를 앞세워 질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국내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 등에

서 노출되는 기본권 보호가 존재하지만 그 헌법 조항들만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제도와 절차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 양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 감시를 통한 정부 비판의 경우도 그냥 비판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비판 등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인터넷 기술로 대통령이 되었다. 인터넷 기자로 정치를 계속하였지만 확증편향성으로 가짜뉴스 진원지로 간주되었다.

자신들이 뿌린 가짜뉴스 씨앗을 규제로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기구는 많으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제도로서 행위규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행동규범이 더욱 구체적이다. 그들은 선전·선동 그리고 진지전 구축을 위해 구체적 행동강령은 정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민주노총에 맡겨 놓은 꼴이 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은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치위원회라 하며 정치위원회는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라고 했다.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북한식 확증편향성 가짜뉴스를 쏟아 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거덜이 난다. 그 원리로 지금까지 가짜뉴스가 범람했다. 초연결사회의 서로 각각 다른 이념의 성찬으로 사회 및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더욱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권력에의 의지를 수용하면 사회는 황폐화의 길을 걷는다.

시스템 사고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인과관계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막스 베버 등 독일 문화론자 해석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는 문화적 존재로 개인은 독특한 구체적 현실, 개별적 경우와 그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그 현실의 의미를 파내는 직업은 가짜뉴스를 더욱 정확하게 걸러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은 사실·의견의 구분 없이 의견으로 우선 지르고 봤다. 선전·선동의 여론 주도는 가능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AI 분석 툴로 기초과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정확, 공정, 객관의 팩트에 연구는 빅데이터로 널리 이용한다. 공영방송 사건 처리의 전형이다.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주장을 하기보다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한다.

그렇지요.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말하는 개인의 덕목보다 잘 듣는 습관, 분석하는 습관, 의미를 파내는 습관 등이 필요하다.

사건 내용을 문화로까지 승화시킨다. 공영방송일수록 이러한 덕목이 필수적이고 그때에만 기본권을 지키고 가치를 구현하는 경쟁력, 생명력을 갖춘 방송이 된다.

원래 인간을 서사적 존재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나 자신의 이해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곧 내 삶이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서사를 통해 개인 수준의 서사뿐 아니라 제도화 측면에서 서사를 논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확실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EBS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 바뀌셔 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EBS법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그 시간 정도 지났네요.

EBS, 아까 김용태 의원님도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김용태 의원님 다음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EBS가 지배구조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EBS는 KBS, MBC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치적 성향을 담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하다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26년을 복무를 했고요. EBS는 제가 선생님으로서 너무나 자주 접하던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EBS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방송 4법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EBS를 여기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한번 되묻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못 들은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EBS 주간 편성표를 한번 보시면요 EBS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뭐 아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EBS가. 지금 이제 시작했겠네요. 그렇지요?

제일 먼저 왕초보 영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클래스e 그다음에 한국기행, 그다음에 오전 한 8시 정도가 되면 세계테마기행을 합니다. 보내 줍니다. 그다음에 월요일·화요일 미스테리아, 수요일·목요일 같은 경우는 허풍선이 미술쇼라든지 이렇게 요일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하프와 친구들,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이것 어떤 느낌인지 오시지요? 어린이 교육방송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꼬마버스 타요, 명탐정 피트, 뽀롱뽀롱 뽀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치적 그런 성향을 띤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딩동댕 유치원, 최고다! 호기심딱지, 처음 타요 씽씽씽, 안전초코 핫초코, 곰끼와 처음 수학, 엄마 까투리, 미리 가 본 대학, 자이언트 펭TV, 인간이 되자!,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EBS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BS 괜찮아요. 정말 볼 만합니다.

그리고 EBS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EBS가 사실 교육에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입시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다 선점해 가는 게 EBS의 역할인데 그 교육 안에서 우리가 편히 말하는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교총 회장 하면서, 한국교총 회장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주로 상대한 곳이 전교조 또는 교사노조연맹입니다. 교사노조연맹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잖아요, 백승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인권 같은, 학생인권조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법. 이 정도 안에서는, 이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해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교육 문제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크게 충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도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지금 EBS는 이렇게 이 경영 구조 뭡니까, 우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EBS의 재정 적자 문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거의 관심이 없고 이사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 그 부분의 법이 통과하면 EBS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한번은 또 언급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2024년 2월 28일 기사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국민입니다—70원 내고 보는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 비상 경영 EBS에 무슨 일이?’ 이게 이 기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70원 낸다는 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신료가 얼마입니까? 2500원이지요? TV 수신료 2500원이지 않습니까? 그 TV 수신료 2500원 중에 EBS가 가져가는 돈이 70원입니다.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좀 작네’, 그러면…… 물론 EBS가 경영을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경영에서 좀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일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EBS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는 KBS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큰 게 KBS는요 수신료 수익이 KBS 전체 재정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KBS에 돈이 있는 것은 50%가 수신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KBS를 뒷받침하고 버팀목으로 있는 것은 수신료지요. 그런데 EBS는 EBS의 재정 중에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입니다,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가 50%를 차지하고, 재정에서. EBS는 6%를 차지하는구나. 너무 불균형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은 재정이 이렇게 작고,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이런 돈을 좀 써야 되는데 한번 좀 써 보자 해 가지고 쓰고 이러다가 또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적자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적자가 생긴다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400억이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까 EBS의…… 의원님들, 새벽에 안 계셨던 의원님들은 못 들으셨지만 제가

아까 여기 E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아까 같이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재정건전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지금 EBS가 재정건전성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토론드리는 이 안에서 EBS에 대한 관심을, 지금 어떤 지배구조하에서 이사 수, 뭐 어떻게 선임하고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EBS의 비상경영 체제는 적자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돈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좀 좋은 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EBS를 통해서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료화되어 있던 것을 무료화해 가지고 조금 형편이 어렵다거나 EBS에 의지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려면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EBS가 한계가 부딪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재정 자체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봐 주시면, 직접 한번 EBS의 편성표를 봐 보시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아, 여기는 KBS·MBC처럼 이렇게 정치 편향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그냥 교육적으로 잘 돼 있구나, 문제가 크게 없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EBS가 재정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기보다는 우리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BS에 의지하는 학생들이 또 왜 많을 수밖에 없냐 하면요, 수능에서 연계율이 50%가 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EBS 그 교재를 또 많이 보게 되거든요. EBS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어떤 교육 채널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렇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찌 보면 2시간도 채 안 남은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쭉 들어오시겠네요, 한 분씩. 또 8시 반이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열심히 투표하실 거고 저희는 또 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 나가는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따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10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가져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화면으로 좀 띄워 드렸습니다. 저금 저희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 중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을 먼저 만들 때 저희들하고 좀 합의되는 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노력조차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민생지원 특별법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올리시면서 저희하고 제대로 한번 협의라도 하셨습니까? 그것도 21대에서 폐기된 건데 새로 국회가 시작해서 법안을 만드셨으면 그래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국민의 45% 이상이 지지한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협의를 하다 보면 또 국민의힘도 양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조금은 원만한……

(「그게 지금 거부권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왜 그러면 거기서 법을 만드실 때 저희하고는 소통도 안 하십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대체토론 할 때 상임위 안 들어오신 분들이?」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상임위 들어가서 저희들 의견이 존중됩니까, 지금?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조롱이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국민의힘은 방송법안을 낸 적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라 내지 마라가 아니라 협의를 할 자세조차……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준 적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이것을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지요.

(「아니, 법안도 안 내놓고 비난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내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부의장 이학영 진정하십시오.

(「아니, 국민의힘 방송 4법 안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성국 의원 저희가 안을 가지고만 의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 당이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도 의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안을 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모든 법을 준 것만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궁색해요, 궁색해」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막판 되니까 또 이제 약간 좀 그런 기운이 도네요.

(「아니, 22대 국회에서 방송법안 국민의힘이 언제 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제가 냈다고 했습니까?

(「법안 한 번을 안 내고 대화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안 한 말을 가지고 저한테 그리 말씀하십니까?

(「논리도 없고 말이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논리, 말이 됩니다, 지금.

(「EBS 감사보고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EBS 감사보고서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지금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사설.

(「그것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 지금 이제 자유의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설을 좀 읽고 싶습니다. 사설이니까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당이 법을 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타 당에서 법을 내더라도 저희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걸 가지고 지적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먼저 읽으면 또 조선일보부터 읽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이런 것 다 여러 개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상인 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탄핵 대상이 안 된다고 해도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늦출 수 있다는 음흉한 계산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 후 자진 사퇴했는데 이 직무대행도 사퇴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이 부위원장도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는 나중 일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탄핵이다. 탄핵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상 큰 흠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을 대행하는 것밖에는 아무 죄가 없다. 단지 방통위를 0인 체제로 만들기 위한 흉악한 꼼수의 덫에 걸린 것일 뿐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방통위를 아예 민주당 소속으로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MBC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굿판을 너무 자주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은 2명이나 탄핵 몰이로 자진 사퇴시켰다.

이번에는 방통위 이 직무대행 탄핵을 들고나왔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면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탄핵 남발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혹독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고 소

비도 되살리자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날만 새면 특검, 청문회, 탄핵에 목숨을 걸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추잡한 싸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의 재의결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한동훈 특검법까지 상정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싸우겠다는 것이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탄핵은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를 읽어 보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 앞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직무집행을 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임명도 안 된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읽어 봐도 해석이 되지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아직 직무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임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돼 갖고 사인 한 번 못 해 본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이 직무집행을 안 했으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좀 있었다 이런 것, 이것 장관들이나 누구 청문회 할 때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경중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고 임명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랬기 때문에 직무집행도 하지 못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사람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핵 굿판 남발'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이 기관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요. 그런데 이분도 특별히 이렇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니까, 왜 그만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해야지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와야 방통위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면 '솔직히'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즘은 특검, 탄핵, 청문회 이런 말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사설들이 이런 사설들이 좀 많습니다. 탄핵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는 사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에 대한 사설도, 이것은 중앙일보에서 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해 가지고 '쏟아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사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대로 철저히 명비어천가 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20일 제주와 인천, 21일 강원과 대구·경북 등 네 번의 지역 순회 경선을 치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독주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당 대표를 거론하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 보려 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벌써 남은 대표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란 말이 나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최고위원 경선까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레이스로 변질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죄다 강성 친명계로 채워질 때부터 예견됐던 그대로다.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전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과시하는 데 전력하는 모습이다.

주말 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죄다 '이재명의 입을 지도부에 보내 달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 동진정책의 상징이 되겠다'.

더 이상 안 읽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부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종전 40%에서 56%로 올렸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판을 깔았다. 그 결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주말 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인사다.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 '발목지뢰 밟은 사람들에게 목발 경품을 주자'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후보는 공천을 받은 뒤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발언 직후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민주당은 '정 후보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천 취소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과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적 인물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 1, 2위를 달리고 있다. 도덕성 시비로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인사가 몇 달 뒤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입하는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최고위원이 되면 망언은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 더는 유권자 눈치는 안 보겠다는 것일까. 민주당 전대도 서서히 뜯어보면 요지경이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를 너무 잘 가져왔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아까는 파워포인트로 다 보여 드렸는데 지금은 또 켜라 하기 그러니까 제가 뭐……

(책을 들어 보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과서입니다, 이것. 제가 선생님일 때 학생을 가르쳤던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세 가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양보와 타협. 상대방과 서로 어떤 일을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서로 입장이 맞설 때 양보와 타협으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갈등을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을 많이 받은 것도 인정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석이라는 것이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국회가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양보와 타협입니다. 입장이 맞지 않을 때는 조정하며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법대로' 운운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용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이다. 사람

들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실천하고 살기 참 어렵다. 그렇지요? 참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국회에,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도, 상임위 결정하는 것도 일사천리로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제일 잘한 말 그거지요, '법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 교과서 보니까, 오늘 아까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전부 그런 말이 지금 교과서에 다 나와 있지요?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적 태도.

이것도 정말……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아까 말씀드렸잖아요—김두관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제가 타당 후보이시지만 정말 참 대단하시다…… 저런 정도에 둘러싸이면 입 하나 뻥끗하기 어려운 게 보통 사람 마음인데 거기서 '개딸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지율이 90%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냐'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비판적 태도, 정말 김두관 의원이 보여 주신 거지요. 저는 타 당 후보지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딱 보면 비판적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전당대회인데 여기서 그대로 대표후보라는 김두관 후보는 그나마 그래도…… 보십시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분이 민주당을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0%라는 비율을 내신 민주당 지지자들은 80%대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총합계율은 87, 88 이런 식으로 나와서 '9' 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민수 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 반대토론했으면 됐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생각을 해 보세요.)

한민수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막는 토론도 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겁니다. 어제 동료 의원 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아니, 한민수 의원님, 어제 동료 의원님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들으셨지요?

(○한민수 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수준이 훨씬 높지요?

(○한민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제……)

수준이 훨씬 높지요, 제가. 아이고, 아시면서 그러노. 누가 봐도 아는데, 초등학생도 알겠다.

(「잘한다. 계속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욕한 의원하고 저를 비교해요? 얼마나 제가 젠틀하게 합니까, 지금?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소수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것도 안 들어 주고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민수 의원 의석에서 — 잘 들었어요.)

계속 듣고 계세요.

그다음, 또 읽어 보겠습니다.

사설 읽겠습니다.

조선일보도 읽어야지. 조선일보 읽으면 막 싫어하던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너무 다 보이지요. 그렇지요?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이번 국회는 이상하게 없었던 일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관례였던 것이 다 무너지는 이것을 왜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21대 국회도 민주당이 180석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22대는 모든 게 새롭게 다 정립되고요. 관례가 전부 다 무너지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다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바라볼 때 당을 다 떠나서 참 괴롭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부위원장 사퇴했지요.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소추 전 자진 사

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방송통신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점들이 나온 그런 부분들은 차차 확인하더라도 헌법에는 분명히 탄핵을 딱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65조 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딱 첫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그러면 일단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돼요. 이진숙 위원장 지금 임명됐습니까? 아직 임명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 임명도 안 됐으니까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헌법을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헌법인데, 헌법이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뇌 구조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사람을 모욕 주고. 오늘 박충권 의원에게 했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꺼내면 너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것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듣기 좋은 건 아니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 탄핵 명분용 아닌가', 정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조건 잘하는 것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대통령을, 나중에 대통령이 정말 잘 못하시면 27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명분들을 쌓아 가면서, 부당한 명분을 쌓아 가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가지고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 상식에 기반한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이 탄핵 명분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번에 보십시오. 저희 국민의힘하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 매섭게 심판하시잖아요. 저희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 고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저희 정부 여당이 정치를 잘 못하면요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 심판을 국민들께 맡겨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부권 유도 법안 강행, 탄핵 명분용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즉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단독 처리하고' 이 말이 제가 말씀한 우리 민주사회에 참 안 맞지요. 그렇지요?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일단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분명한 정책 효과와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또 단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번에 무산됐지요?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에 나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에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찬성 여론이 높은 법안도 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우선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등 21대 국회 때보다 강화된 내용까지 담겼다. 입법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9일 여당의 극렬한 저항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민생을 막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요건과 무관한 국민청원을 앞세워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이 전체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무리한 대통령 탄핵 시도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이런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요, 대통령님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라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저희도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섭게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이런 게 먹사니즘인가?', 최근에 나온 사설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게 여론이라는 거지요, 결론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문제로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다.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서로 부딪히는 게 당장 민생의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비치는 것들이어서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15일 탄핵 청문회 증인인 대통령실 인사들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께서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19일과 26일 청문회가 야당만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탄핵 청문회는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지만 애초부터 오염수 투기 방조, 전쟁 위기 고조 등과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청문회를 추진해 수십 명의 증인을 부르고 여야 대립을 초래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이 특검법안을 상설특검법 사안으로 지정해 거부권을 우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자추천위가 3명의 당연직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아예 배제하자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국회 규칙까지 고쳐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을 앉히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끄집어낸 발상이 놀랍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정치가 할 것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라며 연임 출마 선언을 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겠다는 당이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무리수로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건 무슨 영문인가. 민주당은 속히 이런 소모적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진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세력이라면 결코 이렇게 정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100%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라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나, 선거는 2년 후 3년 후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 그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개원 초기의 이런 수많은 일들은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26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저희 부산진구갑 시의원·구의원들을 위해서 찬조연설도 하게 되고 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후보를 위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채찍질하시면서 국회 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에 많이 몰아주셨는데 그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때 국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면요, 그것 다 기억을 합니다. 다시 그런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 할 때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 분위기가 당장 무슨 쓸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지요. 항상 여론 관리를 잘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국민들께 실망을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개원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개원식조차 못하고…… 여당만 잘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과방위원장 결국 가져갔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떤 상식을 넘어서서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선출직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흔들고 이런 식으로 뭐가 자꾸 진행되면 이것이 어느 한 명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 사설들이 1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고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칭찬하는 또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사설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 국회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의장님, 한 세 시간 정도 해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의장 우원식 고맙습니다.

○정성국 의원 목이 가네요.

벌써 날이 새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의원님들이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의결이, 표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EBS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 드렸고 또 방송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덟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드렸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26년간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나는 잘했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가 더 잘되길 바라고 또 대한민국이 더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회가 거기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교과서를 준비할 거란 생각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저 위에 앉아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는 장면에서 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학생들에게 박수를 저희들에게 유도하셔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어른들과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사고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학생들이 국회에 와서 대한민국의 소중함 또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을 또 배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6학년 담임 선생님을 다섯 번을 했던 정성국 의원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못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애착을 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같이 공감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온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하면 또 국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 화면 두 컷 한번 넘겨 주십시오. 넘기면 38페이지 쪽으로 나옵니다.

책 예쁘지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책 참 예쁘지요? 그렇지요?

두 컷을 넘겨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돼 있는 줄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 학생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학급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만드는 일, 지역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등이 모두 정치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도 정치지요. 그러면 오늘 제가 요 중간에 있는 '정치는'이라는 것, 세 번째 있는 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가 뭐가 부족한지 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방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든지 또는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두 달 동안 있었던 꽉 막힌 국회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면서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막 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39쪽으로 넘어가면…… 화면이 잘 나와 있어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행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의미지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을 여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수결의 원리도 여기 나옵니다, 책에. 최후의 수단은 다수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면 저희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결권을 무력화한다든지 무시하거나 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오늘 8시 반에도 통과되는 것 저희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서로가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마주선 적 있느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범을 보이려고 한 적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라는 게 관례라는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해 버리면 메말라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참 좋지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 동료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저 같은 경우도 부산진갑의 17만 명의 구민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3만의 교원들이 저를 선택해서 한국교총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직위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불필요하게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고 또 그것을 제지하는 분도 없고 제지하는 어른도 없고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40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40페이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링컨 대통령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 보면 국민이 주권인 정치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정치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의 국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저는 언제 한번 깨달은 적 있냐면요 예전에 그…… 우리 의원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배가 다 저보다 최소한, 큰 차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때 2004년인가 2005년에 KBS 드라마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명량대첩으로 12척의 배로 왜적 133척을 물리칠 때 그 해설자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설자가. 드라마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요 이 명량대첩의 승리는 이순신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있어 지켜 낸 승리라고 했거든요. 정말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할 때 국민을 바라보는 것과 일부의 그런 어떤 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정도 되면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제가 정치를 배워 가야 되는 초선이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재밌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단 그대로 넣어 봤습니다.

이 제목, 이것 그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조랑말 두 마리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조랑말은 물을 먹고 싶고 흰 조랑말은 풀을 먹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 서로 양보나 대화나 타협 없이 막 가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두 조랑말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풀 한 포기도 먹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지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조랑말 이야기처럼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각자의 생각과 이익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 관용과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성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의 조랑말이 우리 두 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각자의 갈 길만 가려고 하는 모습. 저희만 잘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계속 반복되지만 국회 안에서의 이 상황만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쉴 공간을 주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게 대통령실까지 연결되면 또 더불어민주당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넘어가는 것도 나중의 문제고 일단 지금은 우리 국회 안에서만큼은 분명히 다수당의 권한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좀 너무 또 과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3년 10개월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로 그 옆에 나와 있는 학생들 그림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법대로 하라는 것 안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 법대로 하라는 것. 내가 법대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양보와 타협, 참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관용, 너무 듣기 좋습니다. 비판적 태도. 그런데 제가 여기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 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눈빛이 훨씬 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는 거지요. 초등학생이 보는 교과서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 못 하지요. 왜?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생이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과서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5박 6일을 마치면서,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끝을 내야 한다는 특명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 정도 됐으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선생님, 교육자로서 국회로 왔으면 그래도 좀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지 아닙니까, 동료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좀 더 관용과 양보와 타협이 다시 살아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하는 의원 있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부터요 의원님, 아까 새벽 1시 정도부터 했는데 지금 그 말씀 제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안 다시는 걸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원내대표인 것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으로서 또 영입 인재로서 또 나름의 위치가 있고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만큼 또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관계 또 국회 안에서의 관계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기서 저도 고함을 꽥꽥 지르고 하지만 먼저 잘 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전투력 발휘하는 게 또 초선의 모습이고 그렇게 귀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또 뒤로 가면……

저도 학교를 떠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48쪽 한번 보시면, 이제 시간도 많이 안 남았네요. 48쪽 보시면 다수결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웬만한 건 다 가르칩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가르치더라고요. 탄핵은 중학교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좀 세서 그런지.

중학교 교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있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여러 의견을 따져 본 후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말이. 하지만 언제나 양보와 타협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국회도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가 중요하지요.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입니다. '전제하고'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인데도 단어 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써 놨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다른 데 보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에라는 말은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 아시겠지만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소수의 의견이 더 맞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기는 하지만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20석만 가지면 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거든요. 아니, 20석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20석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적잖아요. 171석의 더불어민주당하고 보면 20석은 약하지요.

그런데 20석을 가지고 있어도 교섭단체로 인정해서 원내대표끼리 같이 만나게 되고 의장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타협과 대화, 존중의 정치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20석의 교섭단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통과됩니다. 필리버스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발전된다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좀, 저도 자꾸 이게 막 떠오르는 게 '몇 조 가져오세요. 법대로 뭐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교육자로서 너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선배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수결 원칙의 위험성인데요. '봉사활동을 가자' 하니까 전부 돈을 모으자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회복지회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으로 봉사활동 하면 안 될까?' 하니까 한 명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네 명 중에 세 명이 돈 모으는 걸로 찬성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 그림이 저희에게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수결로 돈을 모으자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명의 소수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참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데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학생을 충분히 배려해서 '좋아, 그러면 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 더 애를 많이 쓰고 이 모은 걸 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선물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스토리가 있으시고 대단하신 의원님들께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여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영광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할 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어른들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모범을 보이는 모습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수결의 의견은 항상 옳을까에서 소크라테스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다음 그림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설명까지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소수였지만 소크라테스의 그 논리가 맞았다는 거지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의 의견이라는 것은 옳다는 가정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171석의 원내대표와 함께 당당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초등학생들이 삼권분립을 배웁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배우고요, 우리 국회를 배웁니다. 배우고, 대통령을 배우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62쪽에 나와 있는데 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제가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예산을 심사한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해서 나라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걸 요구한다 이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국회가 나오고 대통령, 정부가 나오고 법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순서를 보면? 그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회가. 그리고 그다음 보면 또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좀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65쪽 여기……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저희 국회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우리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첫인사로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회시간에 삼권분립을 가르쳤다. 그럴 때 대통령, 국회 그다음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가르칠 때 한 축으로 대통령이 계시고 또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님이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하나씩, 3개 중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으로, 왜 대통령이 항상 먼저 나오고 항상 이렇게 언론에도 자주 비치고 항상 외국의 대표를 접견할 때도 대통령이 하지? 왜 국회의장님이 안 하시고 대통령님이 할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책에서 설명한 거지요. 첫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돼 있습니다. 국가원수지요. 하나의 권한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국가 서열 2위가 되시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또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존중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운영위원회 할 때.

그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대통령이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걸 다시 보면서, 그다음에 또 법원이 나오겠지요. 이건 다 아시니까…… 그리고 72페이지를 가면 권력분립이라는 게 탁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참 단어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분립이라는 것.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된 법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너무 짧고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기도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라 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간 상호견제 사례'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해 가지고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국회 입법권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법을 인정해서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과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5 대 5로 해 달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주셨을 때 또 더불어민주당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한 법들을 충분히 저는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또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성국 의원의 생각으로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잘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필리버스터 시간대도 원래는 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시는 바람에 순서가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오늘 새벽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마무리를 하게 되는, 8시 반 정도에 끝이 나니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게 돼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오늘도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한마디라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탄핵. 이것 탄핵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나오지 않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탄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중학교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나올 때 언급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전제가 있더라고요—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요, 일단.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싶겠지요, 마음에 안 드시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따져 보면 그분은 아직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과거의 이런 지적받을 수 있는 행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자체를 아예 업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것 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안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탄핵을 거론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탄핵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결국 그 의도라는 게 이런 것 아닐까 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명을 탄핵한다 했을 때, 지금은 그때 그 상황하고는 약간은 좀 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사들이 검사공화국이다 해 가지고, 검사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검사라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한테 검사로서의 직무를, 자기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을 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상

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탄핵 부분도 지금 더 숙고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해서 국민들께 실망도 드리고 또 우리 당원들께도 좀 걱정을 드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느낀 것은, 물론 한동훈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2차 결선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관심과 흥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찌 보면 또 민주주의고 이게 또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는, 또 당원이라는 어떤 자긍심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도 이 사설을 아까 많이 읽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을 저희들이 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는 김두관 의원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90% 이상 나오는 그 득표가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아까 이 책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과 어떤 특정 집단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주먹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저도 받아들일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잘 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제 마음을, 제 의견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만 마이크를 내리면서 선을 넘는 행동 하신 것도 사실이고 서로가 다 그런 게 있고 또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선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면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마음은 제 입장에서도 서운하고, 저는 우리 국회가 잘되고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또 그래야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EBS 방송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필리버스터 종료 되는 시간에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다 경청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EBS 경영평가보고서입니다. 왜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교육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사 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EBS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늦게 앉아 계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EBS에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MBC나 KBS 지배구조를 바꾸고 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초보영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EBS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대부분 다…… 저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BS의 지배구조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EBS가 지금…… 저는 이 사실을,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몇백억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EBS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을 걱정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한번 EBS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학 프리미엄인가 하는 것을 무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유료화였기 때문에 7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돈이 있어서 수강하는 학생이 1만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중학 프리미엄이라는 그 자체가 1년에 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수강자가 한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것이 이걸 무료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했더니 그 수강자가 22만 명으로, 1만 5000명이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EBS에서 제공해 주는 무료, 좀 수준 높은 무료 프로그램이겠지요, 유료화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받던 것이라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나름 질 좋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 돈을 내고 보지 못하는 학생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는 사교육을 절감하고 책임 교육과 이런 공적 책임의 역할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EBS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EBS의 구조를 보면 지금 EBS 구조의 약 400억 가까운 적자가 나 있고 이게 지금 경영진의 잘못인지 아니면 노조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면서 계속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고 또 계속 지금 이게 적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무료화시키고 주고 싶더라도 모든 게 재정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고 어찌 보면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회가 더 보듬어야 될 학생들을 못 챙기는 경우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수신료 2500원 중에서 EBS가 차지하는 게 70원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KBS는 그 재정의 50%를 수신료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50%를 커버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KBS는. 그런데 EBS는 같은

공영방송인데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4%는 자체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결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EBS가 계속 적채 구조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EBS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더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EBS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EBS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큰데 이렇게 EBS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EBS에 대해 경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EBS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교육 방송으로서 EBS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읽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서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한번 읽어서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료 서비스이던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화한 이후에 1만 5214명이던 이용자 수가 22만 7062명으로 15배 확대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BS도 자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1만 5000명밖에 안 되던 수가 무료화함으로써 22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EBS는 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그런 어려움이 타개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비극을 계기로 교권회복 및 교육주체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했고 EB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력해서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구축했다.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나고 이번에 7월 18일 추모제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님도 오시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님까지 오시고 여러 국회의원들 오셔 가지고 같이 추모제를 했었습니다. 저도 한 교육자로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 드리고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교육부가 그동안 학교나 학부모와 어떤 소통을 해 왔느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접 소통 플랫폼을 만든 것이 함께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에 많이 나왔던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커뮤니티는 그대로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커뮤니티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이 삼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EBS는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수능 연계를, 지금은 간접 연계지요. 우리 의원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BS에 있는 교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EBS 교재로 공부한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 연계율이 지금 직접 연계가 아니고 간접 연계인 상황이고 연계율도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EBS 교재를 보더라도 내가 이 교재를 봐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연계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EBS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는 또 경영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공영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대혁신……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9시경이 되면 종료가 된다 하니……

의원님, 저는 어제 12시 반부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떠들려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9시 정도 돼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들어 주세요.

(「복습하세요, 복습」 하는 의원 있음)

예, 복습.

아무래도 지금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BS가 실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적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EBS 당신들은 자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기존의 67개의 조직을 57개로 통합해서 조직 규모를 15%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최적화된 활용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EBS가 1TV가 있고 2TV가 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TV는 혹시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2TV가 지금 재방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재방송의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BS도 KBS2 같은 경우는 1보다는 재방률이 좀 높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개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지금 제언하고 있는 부분이 수능시험 시행 횟수 개선을 위한 입시 제도와 사교육 문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런 교육 현안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EB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앉아 계셨던 의원님들과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올해, 내년에 제일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 드디어 우리 교실이 좀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실제로 학교로 들어와서 내년에 초등학교 3·4학년에 벌써 시작이 되고요. 중고등학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년도 확대되고 과목도 확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교육위에서도 실제로 교육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학생들이 지금도 너무 디지털 쪽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에 가서도 AI 디지털교과서라 해 가지고 서책을 보지 않고,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책을 보지 않고 디지털로 막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적용하는 대상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지금 계획을 너무 확고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이걸 변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특히 이번에 가을에 선생님들도 교육을 또 연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EBS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 또 실제로 어떻게 교실에서 AI 교과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또 보여 줘야 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문제는요 EBS에서는 이걸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시행횟수 개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수능을 두 번 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바뀌었는데요.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수능시험을 연 1회로 하는 이 확고한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교육이 많이 좀 수능만을 바라보는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EBS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은 여러 가지지요. 미국의 예를 들던데 1년에 네 번 정도를 시험을 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입학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점이 안 좋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시험을 한 번 준비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시험장을 확보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딱 한 번만의 시험으로 자기의 실력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지요. 부담이고, 또 그 학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시험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이 수능을 과연 이렇게 지금처럼 한 번만 이렇게 치고 자기 학교가 결정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EBS는 지금 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이 결국 가지는 최고의 책무는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1TV 같은 것 제가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교양 프로그램들도 좀 많습니다. 많고, 보면 재미있고 좋기는 한데 이게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1TV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성이 있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없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어떤 정도의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EBS가 가지는 공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좀 가져 봅니다.

그리고 EBS는 또 이런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EBS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적자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옆에 도움만 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스스로도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의 다각화에 대해서도 EBS는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요. 공영 교육방송—EBS지요—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공영 교육방송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체인지업하여 기관의 성장이 기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모델의 확장 또 수익 창출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특히 EBS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이트하게 되다 보면 직원만족도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 부분에서 방송 부문을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 부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일단 방송 부문에서 평가항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어떤 걸로 방송을 평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일단 첫째는 편성 목표의 적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의 내부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또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확인하고요. 또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쟁력이 없는 프로그램을 계속 살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콘텐츠를 내부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성 비율의 적정성에서 가장 중요 항목 중에 하나는 본방 및 재방, 재방송 비율을 편성의 적절성 해 가지고 재방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BS에서 운영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제작비 투자 비율이 60.5%에서 2년 연속 계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EBS는 자체 내부 평가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년 모니터 요원 3명을 선발해 가지고 EBS 주 시청자 층인 청소년의 시선이 담긴 모니터링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부 평가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는 시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있을 때 2030 청년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국회로 오니까 청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조직에서 어찌 보면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의견을 줄 수 있는 이런 세대들, 특히 EBS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EBS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꼭 E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EBS가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은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EBS는 이 안에 시청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와 고객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위원도 한 분을 이렇게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EBS로 가서 편성하는 PD하고 다 같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명의라는 게 있다 치면 명의를 보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빽빽하게 적어 가면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서 바로 또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시청자님들 직접 모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임원진과 제작진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EBS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EBS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EBS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지금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청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TV 시청률 이런 것은 많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한 드라마 같은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모래시계 이런 것은 시청률이 거의 70%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지고 10%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은,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EBS의 전체 시청률을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2023년 EBS의 전체 주 시청시간대 시청률은, 주 시청시간대는 평일은 19시에서 23시고요. 주말은 18시에서 23시입니다. 이 시청률이 한 3%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12%라고 나오네요, 1.12%.

그 말은 아무리 지금 OTT, 유튜브 등이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교육공영방송이 이렇게 1.12%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EBS 시청을, 프로그램 수준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EBS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EBS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30분 늘어나니까 30분이 한 3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표결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원식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정성국 의원 의장님, 몇 분 남았습니까?

○의장 우원식 15분.

○정성국 의원 그렇습니까?

○의장 우원식 아니, 13분.

○정성국 의원 의장님 말씀은 13분 남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에게 종료해라…… 의장님께서 제가 마무리 발언할 기회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우원식 예, 충분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정성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EBS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서 디지털 통합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OT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언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EBS는 국내의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향후에도 교육공영방송으로 공교육 보호하는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역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EBS가 방송 채널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EBS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 또 막 이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재원 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EBS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교육 경감의 효과를 일으켰고 또 공교육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실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자체가 EBS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공적 기능을 EBS가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이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일단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EBS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EBS의 국어강사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무슨 한샘인가 하는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한샘」 하는 의원 있음)

서한샘이었습니까, 의원님?

그분이 그때 혹시 EBS TV에 나와서 특강했던 기억 안 나시는가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87년인가 9년인가 그럴 땐데 EBS에서 명강사가 나와 가지고 수업을 해 주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랬습니다. 자습을 빨리 끝내고, 그때 제가 10시까지 강제 자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망가면 선생님한테 야단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학생들을 8시에 귀가를 시켰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EBS 방송을 보면서 거기서 명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어쩌면 학교 수업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많

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EBS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학교 교육의 보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료화가 되는 게 많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무료화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든지 다른 사설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보다, 콘텐츠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 평생교육이지요. 국민 평생교육도 EBS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가 정말 이념에 어떤 성향이 편향된다든지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 국회에서도 모두가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BS의 이 가치들을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또 EBS의 큰 역할 중의 하나는 교육현장의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연중기획 제작 등으로 교육방송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고 스스로 제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EBS는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연중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디지털교과서가 과연 학교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사항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나오듯이 입시제도 그리고 사교육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의 위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라이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즈 추진하고 있고 글로컬대학, 우리 부산의 경우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도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하지요. 글로컬대학으로 확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대통령도 손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입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굉장히 고차원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킬러문항 제거가 작년 이맘때쯤, 작년 6월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킬러문항을 제거하자 돼서, 물론 그때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입시를 바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즉흥적인 이런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물론 비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기 때문에 킬러문항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제거를 했고 지금은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는 수능과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 보니까 분명히 킬러문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풀고 싶은 과제가 하나 있지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바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일단 두려움부터 생기는 게 요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우리 장모님께서 키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물어보니까 외조모, 외조부께서도 잘 안 키워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연령대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돌잔치를 하기도 전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하는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또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사교육비가 발생하고 또 중학교를 가게 되면 입시전쟁을 치러야 되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그때는 인생의 가장 치열한 삶을 사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또 대학을 가도 이제는 취업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출생의 문제를 과연 교육 문제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수당 올려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교육 문제와 입시 문제 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빨리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EBS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 아까는 제가 영역을 봤을 때 EBS는 경영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것은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평가를 할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 보완,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충실하냐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의 제작 성과가 어땠느냐? 교육 콘텐츠가 부실하다거나 또는 사기업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모자라면 어떤 공교육 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 제작 성과가 큰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사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EBS 관련 부분과 방송법 개정 관련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오늘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국민의힘은 또 앉아 있다가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에는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국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한번 요청드리면서……

의장님, 이제 시간 돼서 마쳐야 될까요?

○의장 우원식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성국 의원 더 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더 하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의장 우원식 아니, 뭐 충분히 하시고 싶을 때까지……

○정성국 의원 또 시간을 더 주시네요. 저는 아까 끝내야 될 줄 알았는데……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단하에서 — 9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9시까지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선생님 되면……

◯의장 우원식 마지막 토론자니까요. 지금 이제 시간을 넘어서는 건데 여당에서 9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잘 경청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정성국 의원 의원님, 그 대신 여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사설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젠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으로 26년간 복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적응력은 좀 뛰어나 가지고……

정을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 가지고.

◯의장 우원식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밤을 꼬박 새워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토론 취지에 잘 맞춰서 토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좋은 토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경청해 주는 것이 국회의 품위입니다.

우리 밤새워서 고생하신 정성국 의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박수 소리가 더 크면 안 되는데, 좀 더 크게 쳐 주세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수)

아무래도 숫자가 2배다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민감한 부분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까 했던 이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조금 앞에 뺐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들으신 분은 다시 들어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가르치려고 했던 과목이 사실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EBS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아쉬운 게 KBS라든지 MBC 또는 SBS 같은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표현하는 수많은 어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드라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제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 저는 사실 1997년에 유동근 씨가 연기했던 태종 이방원이랑, 용의 눈물하고 그다음에 태조 왕건이라든지 또는 불멸의 이순신 이런 역사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학생들을 수업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보시면 사회책이나 역사책을 보면 전부 다 사건 중심으로 역사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니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건의 시대순 형태의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드라마를 실제로 보고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에게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고 이러면서 이게 인성교육 부분까지 넘어가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역사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니까 KBS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예전에 2005년에 있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그때 제작비가 350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15년 전이니까—20년 전이네요—그 당시 때 3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해서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최고의 드라마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과 좀 배치되는 상상 속에 만들어 낸 것들은 선생님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 안의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했을 때 정말 학생들이 변하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그냥 딱딱합니다. 그냥 임진왜란 해 가지고 그냥 무슨 대첩이 있었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난중일기를 하나 이렇게 소개한다든지 셋째 아들 면이 왜군에게,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심정을 난중일기에 담은 걸 읽어 주면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감동과 인성교육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1년에 고작 해 봐야 KBS에서도 지난번에 강감찬 30부작 정도 나온 게 그게 전부고 다른 방송국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에서……

사실은 EBS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EBS도 세계테마여행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우리 역사를 상기하고 학생들이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배워 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놀이, EBS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는 사실 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EBS가 지금 400억 가까이 적자가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 열 번 정도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공영 교육방송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또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우리 국회가,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올 때 기자들에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어떤 비전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바라보면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면서 사실상 장기 플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장관이라 해도 2년 정도면 임기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장기적 플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설립된 지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출발하는 시점이고 해서 사실 교육의 장기 플랜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걸 밝혔냐 하면 지금은 의정생활 초기이고 아직까지 국회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은 못 했지만 우리 국회가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1994년 수능체제 이후로 고착돼 온 이 입시제도와 사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대적 플랜을 한번 구상한다면 그 구상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 큰 희망을 드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 교육자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데 정말 30년 된 수능을 계속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또 지금 이 치열한 입시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이 맞느냐 또 창의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이런 교육들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그리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국회로 와서 거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돋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또 교육전문가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플랜을 드릴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를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 내는 그런 최고의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침해로 최근에 한 사이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서, 저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교권 회복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권이 바로 세워져야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시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학교 현장의 떨어져 있는 사기,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늘 기사화가 됐는데 초임 교사들 중에서도 의원면직을 하는 교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 중에서 지금 학교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왜 특히 교대가 그런 일이 많으냐 그러는데 초등이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한 숫자보다 초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초등은 유치원에서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이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있었던, 교육을 했을 때 비극적인 일들은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많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었지만 이 법안들이 학교 현장에 선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큰 저항이라든지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 이런 기회가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재료가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진짜로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원식 정성국 의원님 토론은 5박 6일간의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이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 더 긴 시간을 토론한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아마 정성국 의원님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도 길이 기억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젯밤 0시 25분부터 밤새워 8시간 20분 동안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08시46분)

○의장 우원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 손명수 의원, 임미애 의원, 조계원 의원, 박은정 의원, 이해민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08시48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09시0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9표 중 가 188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0948)

(09시14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입니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그 절차조차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습니다.

삼권분립·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힙니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무제한토론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은 방송 4법이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4주의 숙려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여당은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장의 출신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화와 타협이 존립할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립은 몰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나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입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새겨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라는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습니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삼권분립된 대한민국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30일 09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강경숙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웅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보윤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병도 한지아 한창민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9인)

강경숙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출석 의원(29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7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189인)

강경숙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청가 의원(1인)

천하람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정명호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심우정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위원장직무대행) 조성은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김기표 김남근 박범계 박희승 백혜련 주철현 허 영	더불어민주당	2024. 7. 9.
	곽규택 박준태 유상범 조배숙 주진우	국민의힘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체육관광	박정하	국민의힘	2024. 7.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 7. 9.
	박성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희용	국민의힘	
정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2024. 7. 17.
	강민국	국민의힘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김소희	서범수	국민의힘	2024. 7. 9.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이상 3건 7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2)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2)
이상 4건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1)
이상 2건 7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9)
이상 3건 7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4.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이상 2건 7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4.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이상 3건 7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8)
이상 4건 7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7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3)

이상 3건 7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3)

이상 2건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7)

이상 5건 7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이상 4건 7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2)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 7. 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5)

이상 7건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4. 7. 5.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2024. 7. 5.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4. 7. 5.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이상 3건 7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4)

이상 4건 7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이상 2건 7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7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이상 4건 7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7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1)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2024. 7. 5.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3)

이상 6건 7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7)

이상 3건 7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5.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7)
이상 10건 7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7)
이상 2건 7월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2024. 7. 5.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0142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2024. 7. 5.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0142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2024. 7. 5.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01426)
이상 3건 7월 8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7)
이상 3건 7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이상 2건 7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4)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8. 대통령 제출)

이상 9건 7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이상 6건 7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7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8. 대통령 제출)

이상 3건 7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7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이상 3건 7월 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2024. 7. 8.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이상 6건 7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6)

이상 3건 7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회의소법안

(2024. 7. 8.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이상 2건 7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이상 4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7)
이상 4건 7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6)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8. 대통령 제출)
이상 12건 7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이상 4건 7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이상 2건 7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8)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이상 8건 7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6)
이상 3건 7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이상 4건 7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5)

이상 2건 7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2024. 7.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7월 10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이상 4건 7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7)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이상 5건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이상 2건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 7. 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2)
이상 4건 7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9)
이상 2건 7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이상 4건 7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9)

이상 7건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9)

이상 6건 7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이상 3건 7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이상 3건 7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7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0)

이상 3건 7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6)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이상 9건 7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5)
이상 2건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이상 8건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이상 2건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3)

이상 3건 7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3)

7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5)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7)

이상 6건 7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9)

7월 11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5)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0)

이상 2건 7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이상 2건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1)

이상 6건 7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5)

이상 5건 7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8)

7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6)

7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2)
이상 7건 7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3)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이상 3건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이상 6건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이상 3건 7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2)

이상 3건 7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6)

이상 3건 7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9)

이상 7건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2)
이상 4건 7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7)
이상 3건 7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이상 3건 7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7)
이상 2건 7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5)
이상 3건 7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0)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7)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1)
이상 15건 7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9)
이상 2건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이상 12건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7)

이상 6건 7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이상 9건 7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교통정책기본법안

(2024. 7.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이상 5건 7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7월 1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3)

이상 2건 7월 1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2)

이상 5건 7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이상 3건 7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이상 6건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이상 3건 7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이상 2건 7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2)

7월 1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0)

이상 6건 7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6)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이상 4건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이상 6건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6)
이상 4건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6)
7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4)
이상 8건 7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이상 2건 7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5)
이상 4건 7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이상 2건 7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7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3)

이상 4건 7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이상 3건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2024. 7. 16. 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2024. 7. 16. 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이상 2건 7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8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7)

이상 10건 7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77)

이상 2건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이상 4건 7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6)

이상 2건 7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5)

이상 5건 7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9)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0)

이상 3건 7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4)

이상 4건 7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1)

이상 6건 7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8)
이상 5건 7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이상 3건 7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이상 3건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이상 3건 7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6)

이상 14건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0)

이상 6건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2)
이상 10건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 7.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이상 6건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1)

이상 8건 7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9)

이상 3건 7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17.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이상 5건 7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7월 1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1)

7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9)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18.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2)

이상 6건 7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3)
이상 9건 7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8)
이상 7건 7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5)

이상 5건 7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이상 2건 7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7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5)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이상 13건 7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이상 4건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024. 7. 1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이상 6건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이상 4건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9)
이상 5건 7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9)
이상 10건 7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4)
이상 4건 7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이상 3건 7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2)
7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9)
이상 4건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6)
이상 3건 7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이상 5건 7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3)

이상 5건 7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이상 2건 7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6)

7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지방의회법안

(2024. 7. 19.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8)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19. 대통령 제출)

이상 9건 7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이상 9건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이상 5건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간호법안
(2024. 7. 19.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이상 6건 7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0)
이상 6건 7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4)
이상 7건 7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이상 3건 7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22.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이상 6건 7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0)

이상 9건 7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2)
이상 11건 7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이상 2건 7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이상 2건 7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방안전기본법안
(2024. 7. 22.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8)
이상 2건 7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7)
이상 10건 7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3)
이상 2건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이상 12건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이상 4건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3)

이상 8건 7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3)

이상 4건 7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6)

이상 6건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2)

7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6)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50)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이상 8건 7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2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이상 4건 7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이상 3건 7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23.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0)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2)

이상 3건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이상 3건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9)

7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3)

7월 2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

이상 2건 7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4)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0)

이상 4건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이상 10건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59)

이상 2건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1)

7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2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8)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3)

이상 6건 7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7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9)

이상 6건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7)
이상 5건 7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이상 2건 7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0)
이상 3건 7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24. 대통령 제출)
이상 4건 7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이상 2건 7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2)
이상 3건 7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6)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이상 6건 7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이상 2건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4)
이상 5건 7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9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5)

이상 8건 7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6)

이상 7건 7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이상 2건 7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2024. 7. 8. 주진우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1508)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

(2024. 7. 9. 박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15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6)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2024. 7. 25.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2024. 7. 25. 의장 제의)(의안번호 220223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2024. 7. 25. 김현 의원 제출)(의안번호 2202240)

○**의안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1)

(원안대로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1.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64)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2.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7월 18일 정부에 송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024. 7. 8.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7월 24일 정부에 송부

○의안 철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2)

7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4)

7월 15일 발의자 철회 요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1)

7월 1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6)

이상 2건 7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9)
이상 3건 7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1)
7월 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

(2024. 7. 4. 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7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2024. 7. 5. 이창민으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4)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

(2024. 7. 5. 윤인구 외 19인으로부터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7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2024. 7. 6. 김민정 외 58,3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6)
7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2024. 7. 10. 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7)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7. 18. 김민준 외 50,34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8)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2024. 7. 22. 고영주 외 50,5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0)
7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4. 7. 23. 강태윤으로부터 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7. 24. 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7. 22. 오상종 외 53,07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9)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요구서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

(2024. 7. 9. 대통령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관련 질문서

(2024. 7. 9. 정을호 의원 제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관련 질문서

(2024. 7. 10. 정을호 의원 제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취 관련 질문서

(2024. 7. 15. 정을호 의원 제출)

자체 핵무장 등 관련 질문서

(2024. 7. 15. 임종득 의원 제출)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공개내용 관련 질문서

(2024. 7. 16. 정을호 의원 제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질문서

(2024. 7. 19. 임종득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비공개)

(2024. 7. 22.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4년도 시행계획

(2024. 6. 7. 정부 제출)

6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송부

2023년도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상황 보고서

(2024. 5. 30. 법조윤리협의회 제출)

6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2023 정부광고 집행결과 보고(비공개)

(2024. 6. 10. 정부 제출)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23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24. 6. 25.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2024. 6. 2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출)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

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현황 보고서

(2024. 6. 26. 정부 제출)

6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중앙행정기관 규제사무목록

(2024. 6. 28.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 보고

(2024. 6. 28. 정부 제출)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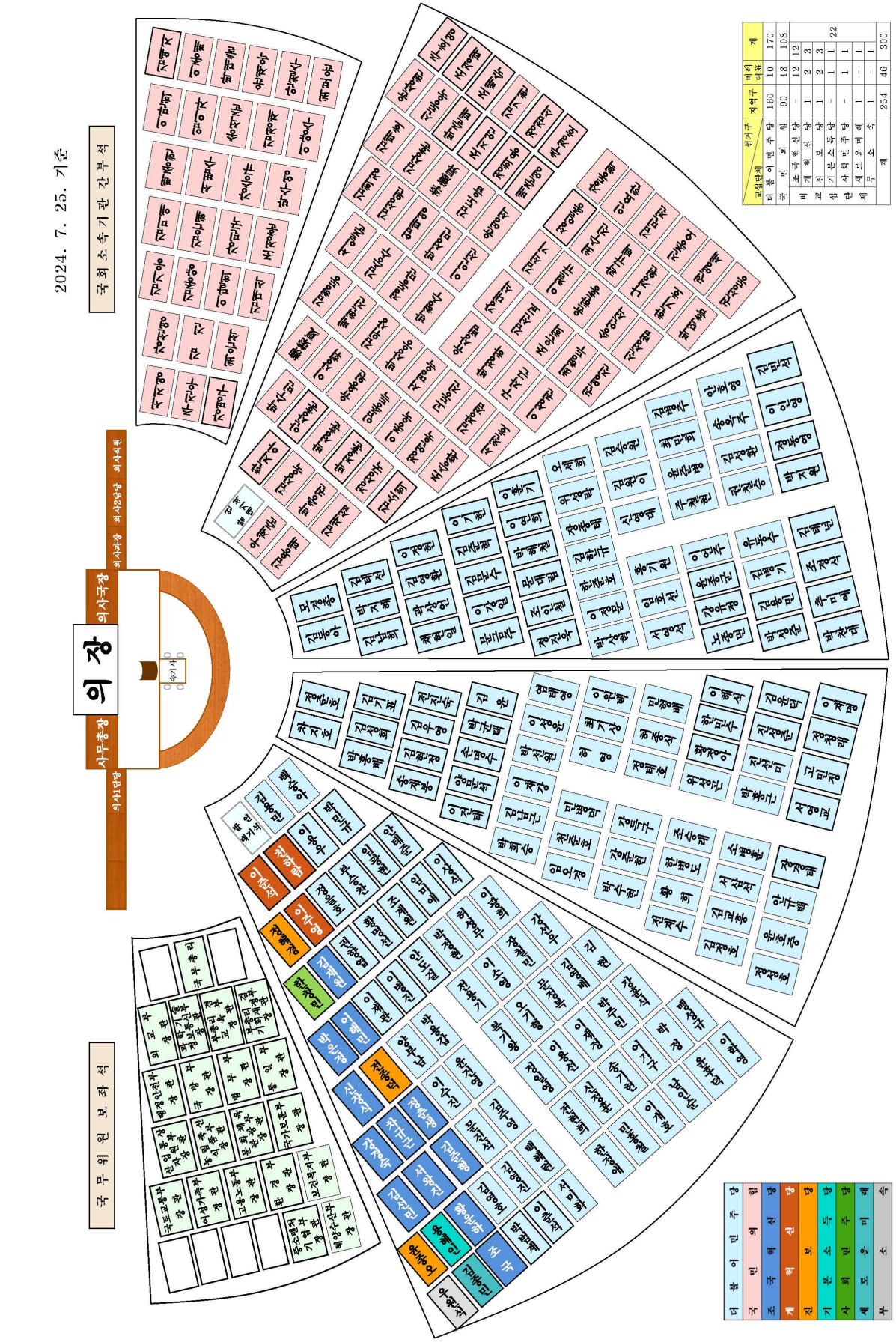
2024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4. 6. 28. 정부 제출)

7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4. 7. 25. 기준
국회소속기관 간부석
국무위원 보좌석
의 장
사무총장
의사국장
의사과장
의사담당
의사과원
의사담당
속기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녹색정의당
무소속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계
160
90
-
1
1
-
-
-
-
10
18
12
2
3
1
-
-
-
-
170
108
12
3
1
1
1
-
-
22
254
46
300